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사회학박사 학위논문

서울올림픽과  
1980년대의 사회정치

2018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 회 학 과

박 해 남

# 서울올림픽과 1980년대의 사회정치

지도교수 박명규

이 논문을 사회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1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해남

박해남의 사회학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8년 1월

위원장 정근식 (인)

부위원장 김홍중 (인)

위원 정준영 (인)

위원 김백영 (인)

위원 박명규 (인)

본 박사학위논문은 일본국제교류기금 ( The Japan Foundation ) 의  
일본연구펠로십을 통한 지원에 힘입어 작성되었습니다.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문초록]

## 서울올림픽과 1980년대의 사회정치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 해 남

이 연구는 1988년에 개최된 서울올림픽의 유치와 준비, 개최에 이르는 과정에서 국가가 사회구성원들의 습속을 개조하고 도시경관을 대대적으로 개조하려 했던 사실에 주목한다. 그리고 서울올림픽이 1980년대 국가의 사회정치 수단으로 활용되었음을 주장한다. 급속한 경제발전과 국제적인 지위의 향상을 추구하던 한국 국가가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맞닥뜨린 사회 내부의 적대와 습속의 급변 등의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사회질서와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과정으로 서울올림픽의 준비와 개최과정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국가의 올림픽 개최 동기와 사회정치와의 관련성, 올림픽의 계획과정에서 드러나는 사회정치 계획, 올림픽 준비과정에서 있었던 다양한 습속개조와 도시개조의 실천,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과 국가의 재대응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부 및 조직위원회의 공문서와 백서, 공식보고서 등을 대상으로 삼아 정책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와 조직위원회, 관련단체의 홍보자료와 저항적 시민사회의 성명서 및 팸플릿을 대상으로 그 담론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이 연구는 올림픽의 유치 이유와 개최의 효과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왔던 기존연구가 분석하지 않은 올림픽의 준비과정을 상세히 밝히고자 한다. 또한 경제발전을 우선시한 것으로 여겨져 온 국가가 1980년대 들어서는 올림픽을 매개로 사회질서와 통합의 문제에 본격적으로 개입하였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분석의 결과를 기술한 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문의 2장은 1988년 하계올림픽의 유치가 논의되고 개최가 결정되는 과정이 발전국가의 위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60-70년대의 국가는 급속한 경제발전과 국제적 지위향상을 중요시했으며, 이를 위해 사회를 동원하고자 하였던 발전국가였다. 발전국가가 사회를 동원하기 위해 주안점을 둔 것은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습속을 개조하는 것이었다. 경제발전 및 권위주의 정치에 적합한, 탈정치화되고 생산적인 습속을 갖춘 주체들을 다수화시키는 것이 이들의 전략이었던 것이다.

발전국가에게 스포츠 및 스포츠 메가이벤트의 개최는 국제사회 내에서 한국을 알리고 그 위상을 상승시킬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졌다. 이에 따라 국가는 1960년대부터 아시안게임 유치 논의를 시작했고, 1970년 아시안게임은 개최권을 얻었다가 반납한 바 있다. 그리고 1970년대부터는 잠실 개발과 함께 스포츠 메가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는 대규모 스포츠시설을 만들어나갔다.

1988년에 열리는 제24회 하계 올림픽의 유치는 1979-80년에 걸쳐 권위주의 정부 내 소수의 권력자들이 논의하고 결정한 것이었다. 올림픽 유치의 구상은 박종규가 1978년 말 시작하여 소수 관료들의 논의 끝에 1979년 9월 박정희가 수락하여 결정된 것이었다. 이후 박정희의 죽음과 함께 논의는 중단되었고, 1980년 여름 전두환과 신군부의 등장 이후 논의가 재개되어 그해 11월 전두환의 지시로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유치를 신청하는 과정으로 이어졌다.

올림픽의 유치 논의는 1981년 봄까지도 막대한 개최비용으로 인해 공전하였으나, 아시안게임의 유치에 대한 일본과의 협의 불발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었다. 하지만, 미리 마련된 스포츠시설, 체육엘리트-관료-재벌로 이뤄진 추진 엘리트 집단의 적극적 유치 활동, 개발도상국 올림픽 개최론, 아디다스 회장과의 이면계약 등으로 일본의 나고야를 제치고 개최권을 얻게 된다. 2개월 뒤에는 아시안게임도 개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발전국가의 위기가 존재했다. 발전국가는 미국과의 관계 악화로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될 위기에 처해있었고, 79년과 80년도에 있었던 도시봉기는 발전국가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불만을 드러냈다. 그래서, 유치 논의 과정에서 올림픽은 사회통합에 필요한 것으로 규정되었다. 올림픽의 유치 과정에서 국가는 쿠데타로 인한 사회적 불안정을 문제시하는 국제사회의 시선을 감지했고, 이를 해결할 것을 그들에게 약속하였다. 올림픽의 개최는 사회질서와 사회의 통합을 국제사회에 보여줄 과제를 국가에게 부여하게 된 것이다.

3장은 올림픽에 대한 기획이 사회정치의 기획과 맞물려 있음을 보여준다.

1980년에 권력을 잡은 군인들은 1979-80년의 봉기를 사회구성원들의 무질서한 습속과 1기 발전국가의 사회통합 실패에 기인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러한 상황 판단에 따라 국가는 사회 구성원들의 습속에 보다 깊숙이 개입하기 위해 관제캠페인의 규모와 활동을 더욱 키웠고, 자율화 및 복지정책을 확대해 나갔다. 전자를 통해 사회질서를, 후자를 통해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사회정치를 본격화한 것이다.

발전국가 일본이 개최한 1964년의 도쿄올림픽은 서울올림픽의 가장 중요한 참조 모델이었다.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이미지 개선과 사회통합을 목표로 개최된 이 올림픽은,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목표로 도시민들의 습속을 개조하기 위한 캠페인 및 대대적인 도시 경관의 개조 작업과 더불어 준비되었다. 이를 통해 과거 전쟁을 일으킨 국가에서 경제강국이자 기술강국으로 일본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가 가는데 성공했으며, 아시아 내에서도 다시 한번 입지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발전국가 한국 역시 도쿄올림픽처럼 국제사회 내 지위 향상과 사회질서 및 사회통합을 목표로 했고, 그 준비과정을 참조하여 올림픽 준비과정에서의 습속개조와 도시개조를 중요한 준비사항으로 보았다.

국가는 발전론 및 문명화론과 결합된 사회정치 담론을 유통시켰다. 먼저 국가는 서울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사회 구성원들의 습속이 바뀔 것이며, 사회구성원들이 습속을 성공적으로 개조할 경우 사회통합 역시 이뤄질 것이라 선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의 변화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얻고 지위가 상승할 것이라 장담했다. 이를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국가는 국제사회를 서구 선진국으로 번

역했다. 그래서, 서구인들의 시선을 기준으로 하여 문명적·문화적 습속을 지닐 것을 사회구성원들에게 강조했다. 대대적인 도시개조의 목표 역시 서구인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경관을 창출하는데 있었다.

제 4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서울올림픽 준비과정에서 습속개조와 도시개조를 통해 사회정치가 수행되는 양상을 분석하였다

국가는 올림픽을 앞세워 도시와 사회로부터 빈곤의 경관을 배제하고 무질서한 습속을 처벌하였다. 식민지기부터 사회적 타자였던 부랑인들을 ‘복지시설’에 지속적으로 감금하였고, 무허가주택지에 대한 재개발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도시빈민들로 하여금 서울 내에서 터전을 잃게 만들었다. 공공장소에서의 무질서한 습속은 올림픽을 방해하는 범죄로 규정하면서 감시와 처벌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도시노점상 역시 여기에 포함되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저항적 시민사회가 성장하자 국가는 사회안정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이들의 시위와 집단행동을 차단하고자 하였다.

사회 구성원들의 습속 개조에는 내무부와 법무부, 서울시 등의 국가기구만이 아니라, 범민족올림픽추진위원회, 새마을운동, 사회정화운동에 이르는 관계캠페인 조직까지 동원되었다. 이들은 교육과 선전을 통하여 엄청난 양의 담론을 생산하였고, 서구인들의 시선을 대리하여 시민들의 습속을 감시하기까지 하였다. 한편으로 여가수단 및 사회통합 수단으로 스포츠 이벤트를 대폭 확대하였고, 소비공간을 늘려 풍요를 체화한 중산층 습속이 사회에 확산되도록 장려하였다.

도시경관의 개조는 국제사회에 한국의 경제자본과 문화자본을 과시하고 그들로부터 인정을 얻기 위한 목적이 상당 부분 고려되는 가운데 수행되었다. 1960~70년대 특정 지역을 선택하여 전략적으로 산업경관을 조성했던 발전국가는, 1980년대 들어 올림픽을 위해 서울 일부 지역을 선택하여 전략적으로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획득 할만한 경관을 조성하였다. 도심재개발을 통한 서울 도심의 고층화와 도시설계를 통한 강남지역 경관의 관리, 한강개발, 올림픽공원과 아시아공원 및 선수촌 등의 경기 관련시설, 국립현대미술관과 독립기념관 같은 대형문화시설이 이러한 목적에 활용되었다. 올림픽의 폐회식을 포함한 각종 문화이벤트 역시 한국이 가진 경제자본과 문화자본을 보여주는데 중점을 두었다.

요컨대, 올림픽의 사회정치를 통해 국가는 사회의 기층구성원들이 서구인의 눈에 띄지 않도록 도시와 사회부터 배제했고, 다수 구성원들에 대하여는 올림픽에 맞춰 습속을 개조하고자 하였으며, 서구인들로부터의 인정을 위하여 특정한 지역을 선정하여 경관을 개조하였다. 선별적 원리에 기초한 사회정치를 수행한 것이다.

제 5장에서는 올림픽의 사회정치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과 이에 대한 국가의 재 대응, 그리고 사회정치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1980년대 중반 이후 형성된 탈냉전 국면과 저항적 시민사회의 성장은 올림픽의 사회정치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1984년의 88올림픽 개최지 변경론 이후 국가는 사회주의 국가와의 스포츠외교에 적극 나섰고, 이를 통해 사회주의국가들의 올림픽 참가가 이뤄지자 올림픽을 ‘평화 이벤트’로 재정의하였다. 국내적으로는 저항적 시민사회가 활성화되어 개헌을 통한 민주화에 성공하였다. 이들은 또한 민족이 구성원이 사회적 권리의 주체임을 주장하면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포섭을 국가에 요구하였다.

저항적 시민사회의 민족구성원에 대한 사회적 권리의 요구와 사회적 포섭의 요구는 국가의 사회정치에 대한 대응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사회 기층구성원에 대한 배제를 강력히 비판하고 생존권을 국가가 보장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남북공동올림픽을 통해 민족구성원 전체를 대표하는 올림픽 행사를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중산층 사회구성원들은 올림픽에 대해 조금 다른 태도를 지녔었다. 이들은 올림픽의 성공과 이를 통한 국제적 지위의 향상을 환영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의 주역으로 국가가 아닌 메달리스트들과 전문가집단에 주목했다. 국제사회로부터의 주어질 인정을 소비하면서도 그 인정을 향유할 주체를 국가가 아니라 특정 사회구성원들로 상정한 것이었다.

올림픽 이후 국가는 이러한 시민사회의 주장에 대하여 반응을 보였다. 저항적 시민사회의 활성화 이후 국가는 사회질서와 통합에서 사회안정으로 강조점을 바꿨다. 이를 위해 저항적 시민사회의 제안을 도시민민을 대상으로 한 임대아파트의 공급 등 부조를 공급했다. 하지만 저항적 시민사회의 의견처럼 도시민민들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여 만들어진 정책은 아니었다. 그러한 한편으로 중산층 사회구성원들을 포섭하기 위해 올림픽을 앞두고 조성했던 과시적 공간, 즉 인정경관을 복제·확산시켰다. 그러자 중산층 사회구성원들은 발전서사와 문명화라는 올림픽의 사회정치 담론과 구매한 인정경관을 조합하여 스스로를 한국사회의 발전과 문명화, 사회질서를 대표하는 이들로 정체화하였다. 그리고 사회 기층구성원들을 발전과 문명의 타자로 인식하며 차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올림픽의 사회정치는 사회구성원들의 습속 전반을 인정하지 않은 국가가 습속개조와 도시개조를 통해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질서와 통합을 창출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개조된 도시경관을 소비하는 방식으로 올림픽의 사회정치가 목표로 한 질서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은 중산층 사회구성원들을 창출했다. 하지만, 이 중산층 사회구성원들은 사회 기층의 구성원들을 발전과 문명의 타자로 여기며 인정하지 않고 차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올림픽의 사회정치는 사회질서의 창출에는 일정하게 성공하였는지는 몰라도, 사회구성원 간의 통합에는 실패한 것이다.

**주요어** : 올림픽, 서울올림픽, 1988년 올림픽, 아시안게임, 1986년 아시안게임, 1964년 도쿄올림픽, 발전국가, 제5공화국, 1980년대, 사회정치, 사회문제, 도시문제, 사회적인 것, 습속개조, 도시개조, 사회개조

**학 번** : 2007-30044



# 목 차

## 제 1 장 서 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2. 기존연구 검토.....	3
1) 서울올림픽 연구 .....	3
2) 1980년대 사회변동 및 도시변화 연구 .....	5
3) 메가이벤트 및 올림픽 연구 .....	7
3. 이론적 관점.....	11
1) 사회정치 .....	11
2) 사회정치적 일반적 과정 .....	16
3) 사회정치 모멘트로서의 서울올림픽 .....	21
4. 분석을 위한 가설과 질문, 방법, 자료 .....	25
1) 분석을 위한 가설과 질문 .....	25
2) 분석방법 .....	28
3) 분석자료 .....	29

## 제 2 장 발전국가의 위기와 올림픽 유치

제 1 절 1960~70년대 발전국가와 사회 .....	32
1. 발전주의 국가의 행위 기조 .....	32
1) 경제발전과 국제적 지위향상 .....	32
2) 사회의 동원 .....	33
2. 발전국가의 사회 동원 전략 .....	35
1) 문제의 집합화, 해결의 개별화 .....	35
2) 탈정치적·비서구적 습속의 강조 .....	38

3) 사회구성원의 분할: 배제와 규율, 포섭의 공존 .....	41
4) 시민사회의 비판과 ‘민족적인 것’의 길항 .....	45
<b>제 2 절 1960~70년대 발전국가와 스포츠 .....</b>	<b>47</b>
1. 스포츠와 국제·국내사회 .....	47
1) 국제적 지위향상 수단으로서의 스포츠 .....	47
1) 국내 사회정치 담론장으로서의 스포츠 .....	50
2. 발전국가의 국제 스포츠 이벤트 준비 .....	52
1) 1966년 아시안게임의 유치와 포기 .....	52
2) 1970년대 잠실개발과 잠실운동장 .....	54
<b>제 3 절 발전국가의 위기와 올림픽 구상 .....</b>	<b>57</b>
1. 발전국가의 위기와 올림픽 유치 논의 .....	57
1) 1978-80년 발전주의 정치의 위기 .....	57
2) 제 24회 하계올림픽 유치 논의 .....	59
3) 발전국가의 위기를 반영한 올림픽 유치 논의 .....	64
2. 1988년 하계올림픽 유치와 개최 결정 .....	67
1) 관료간 대립과 유치의 중단·재개 .....	67
2) 추진엘리트의 형성과 올림픽 개최 결정 .....	69
3) 아시안게임의 유치 .....	74
4) 올림픽 유치와 발전주의 정치의 변용 .....	76

### 제 3 장 올림픽의 사회정치 기획

<b>제 1 절 1980년대 사회정치의 본격화 .....</b>	<b>81</b>
1. 사회질서를 위한 개입 강화 .....	81
1) 신군부의 등장과 사회질서의 문제화 .....	81
2) 습속개조 기구의 확대·강화 .....	84
2.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변화 .....	87

1) 경제성장에서 사회질서·통합으로 .....	87
2) 자율화: 도시적 습속의 용인 .....	90
3) 복지 담론의 전면화 .....	92
4) 선별적 사회정치의 지속 .....	95
<b>제 2 절 참조모델로서의 1964 도쿄올림픽 .....</b>	<b>97</b>
1. 1964 년 도쿄올림픽과 발전국가 일본의 사회정치 .....	97
1) 1964 도쿄올림픽의 목표 .....	97
2) 시민사회의 동원과 습속 및 도시개조 .....	100
3) 내셔널 아이덴티티의 재구성 .....	104
2. 발전국가 한국의 도쿄올림픽 참조 .....	107
1) 도쿄올림픽 담론: 발전국가의 올림픽 성공사례 .....	107
2) 서울올림픽 기획에서의 도쿄올림픽 활용 .....	109
<b>제 3 절 올림픽 기획과 사회정치의 결합 .....</b>	<b>111</b>
1. 올림픽 거버넌스 조직: 국가의 기획과 시민사회의 동원 .....	111
1) 정권엘리트의 기획 독점 .....	112
2) 재벌의 동원 .....	117
3) 관제 시민사회의 동원 .....	119
2. 올림픽과 사회정치의 결합 .....	123
1) 올림픽 마스터플랜 .....	123
2) 올림픽의 목표와 사회정치 .....	127
<b>제 4 절 올림픽의 사회정치의 목표와 방법 .....</b>	<b>130</b>
1. 목표: 문(명)화의 과시 .....	132
1) 민족적인 것의 국제화.....	132
2) 문명화된 습속 - 질서와 청결 - 의 강조.....	135
2. 방법: 타자를 기준으로 한 사회 구성원의 선별 .....	138
1) 시선의 주체, 평가의 주체: '선진국'.....	139
2) 사회구성원의 선별: 배제, 규율, 과시.....	141

## 제 4 장 올림픽의 사회정치 실천

<b>제 1 절 빈곤의 배제와 무질서의 처벌</b> .....	143
1. 부도덕과 무질서의 범죄화와 배제 .....	143
1) 사회적 타자의 배제 .....	143
2) 불량주택재개발과 도시빈민의 배제 .....	146
3) 무질서의 범죄화와 처벌 .....	149
2. 저항적 시민사회의 비판 억압 .....	151
1) 사회질서에서 사회안정으로의 문제 변화 .....	151
2) 저항적 시민사회의 억압 .....	154
<b>제 2 절 습속의 규율과 개조</b> .....	157
1. 질서와 청결을 위한 습속 규율 .....	157
1) 국가기구의 습속 개입 .....	157
2) 범민족올림픽추진위원회 .....	159
3) 새마을운동과 사회정화운동 .....	163
4) 도시미화와 시선의 훈련 .....	166
2. 중산층 습속의 장려 .....	168
1) 스포츠의 일상화 .....	168
2) 소비문화의 활성화 .....	172
<b>제 3 절 인정경관의 조성</b> .....	175
1. 발전주의 도시성과 올림픽 도시 .....	175
1) 발전주의 도시성의 지속과 변형 .....	175
2) 올림픽 준비와 1980 년대의 도시개조 .....	178
2. 경제발전의 경관화 .....	181
1) 도심재개발 .....	181

2) 도시설계와 강남의 변화 .....	183
3) 한강종합개발.....	190
4) 올림픽 마라톤과 발전경관의 전시.....	192
3. 올림픽 상징경관의 조성 .....	193
1) 올림픽 공원과 아시아공원 .....	193
2) 아시아선수촌 및 올림픽 선수촌 .....	198
4. 문화자본의 경관화와 올림픽 이벤트.....	201
1) 올림픽과 문화시설 .....	201
2) 올림픽 문화이벤트 .....	203

## 제 5 장 시민사회의 대응과 올림픽의 사회정치적 결과

<b>제 1 절 국내외적 상황변화 .....</b>	<b>212</b>
1. 탈냉전 국면의 형성 .....	212
1) 1980년대 신냉전과 올림픽 보이콧 .....	212
2) 1988년 올림픽 개최지 변경론의 등장과 IOC의 대응 .....	214
3) 남북체육회담 .....	216
4) 사회주의 국가와의 스포츠외교와 탈냉전 국면 형성 .....	218
5) 평화이벤트를 통한 올림픽 재규정 .....	222
2. 저항적 시민사회의 성장과 민주화 .....	225
1) 1980년대 중반 이후의 민주화.....	226
2) 민주화 운동과 올림픽 .....	227
3) 저항적 시민사회의 민족주의와 사회정치 .....	229
<b>제 2 절 시민사회의 인정과 포섭 요구.....</b>	<b>232</b>
1. 저항적 시민사회의 전면적 민족 포섭 요구 .....	232
1) 민족구성원 배제에 대한 비판 .....	232
2) 외국인의 문제화 .....	237
3) 민족 미술의 포섭 요구.....	238

4) 남북 공동올림픽 개최 주장 .....	242
2. 중산층 시민사회의 문화적 인정 전유 .....	247
1) 1987년 이후의 시민사회 분화 .....	247
2) 중산층의 문화적 인정 전유 .....	248
<b>제 3 절 ‘사회안정’을 위한 조절적 대응과 그 결과 .....</b>	<b>253</b>
1. 조절적 민족 교류 .....	253
1) 시민사회의 민족 교류 요구 .....	253
2) 평양세계청년학생축전 .....	255
3) 조절적 민족 교류와 스포츠 .....	258
2. 최소 부조의 공급 .....	261
1) 빈민운동의 활성화 .....	261
2) 최소 부조의 공급 .....	265
3. 인정과 부조의 분리와 사회적 차별 .....	268
1) 인정 경관의 복제·확산 .....	268
2) 올림픽과 올림픽 사회정치 담론의 접합과 중산층 정체성 .....	271
3) 인정 받는 자의 부조 받는 자 차별 .....	274

## 제 6 장 결 론

1. 논문의 요약 .....	277
2. 연구의 함의 .....	280
1) 올림픽 연구에의 함의 .....	280
2) 사회정치 연구에의 함의 .....	283
<b>참고문헌 .....</b>	<b>286</b>
<b>Abstract .....</b>	<b>329</b>

## 표 목차

[표 1] 득표전망.....	71
[표 2] 사회정화위원회 국고지원.....	84
[표 3] 1970년대 말~80년대 초 새마을운동 중점시책 변화 .....	88
[표 4]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조직위원장.....	113
[표 5] 서울올림픽 직접사업 수입 및 지출계획 .....	124
[표 6]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 수입 및 지출.....	126
[표 7] 서울시 불량주택재개발 우선사업 대상구역.....	148
[표 8] 1986·1988 대회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 .....	151
[표 9] 서울시 시민참여운동 실천사항 .....	159
[표 10] 범민족올림픽추진위 서울시회 주요사업(1982.3 ~1985.3).....	160
[표 11] 1985~86 범민족올림픽추진중앙협의회 활동.....	160
[표 12] 1985~86년 올림픽 표어·슬로건·전단 내용 .....	161
[표 13] 올림픽 새마을 운동 국민정신 개혁 실천사항 .....	164
[표 14] 서울올림픽대비 정부 도시개조 사업 내역.....	180
[표 15] 서울올림픽문화예술축전 행사내역.....	209
[표 16] 아시안게임 및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이 서술한 우승 기여 주체 .....	250
[표 17] 1986-1988년 여성 및 교양지 올림픽 보도 분류 .....	252

## 그림 목차

[그림 1] 1958년에 계획되었던 국민종합운동장 모형 .....	53
[그림 2] 1966년 도시계획 모형과 김현옥 .....	55
[그림 3] 서울올림픽 유치설명자료에 기록된 관계자의 메모 .....	72
[그림 4] 88올림픽 서울유치교섭단 귀국보고 중 박종규의 활동에 관한 메모 .....	73
[그림 5] 서울올림픽 준비조직 .....	112
[그림 6] 정부의 서울올림픽 기구 설치 시안 .....	116
[그림 7] 재벌기업주들의 스포츠단체장 겸직과 찬조 .....	118
[그림 8] 도심재개발 및 주택개발사업 현황도 .....	148
[그림 9] 서울올림픽 준비 스티커 도안 .....	162
[그림 10] 서울시의 유통시설 설치계획 .....	174
[그림 11] ‘재벌타운분포도’ .....	182
[그림 12] 도심재개발사업 구역 .....	183
[그림 13] 1970년과 1974년의 잠실지구 설계도 .....	186
[그림 14] 잠실지역 주거지 평형규제 설계안 .....	187
[그림 15] 서울올림픽 마라톤 경기 중계화면 .....	193
[그림 16] 올림픽공원 설계 .....	197
[그림 17] 아시아선수촌 및 아시아공원 당선작 .....	199
[그림 18] 선수촌·기자촌 아파트 조감도 .....	200
[그림 19]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 팸플렛 삽화 .....	234
[그림 20] 1988년 여름 대학생 집회의 올림픽 마크 화형 .....	234
[그림 21]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팸플렛 삽화 .....	235
[그림 22] 여성신문 삽화 ‘오랑캐의 잔치’ .....	241
[그림 23] 불교사회단체들의 올림픽 공동개최론 팸플렛 .....	244
[그림 24] 공동올림픽을 주장하는 대학생들의 플래카드 .....	245
[그림 25] 한양대학생들의 올림픽 반대집회 .....	245
[그림 26] 1989년 세계청년학생축전 기록영화 속 평양의 모습 .....	257
[그림 27] 도시빈민의 올림픽 행사 .....	263
[그림 28] 1988년 8월 1일 노점상생존권을 위한 집회 .....	264
[그림 29] 사당동 철거민들의 임대주택 요구 집회 .....	264



# 제 1 장 서론

##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9세기 말 시작되어 20세기 내내 (주로 서구) 산업국가의 번영을 보여주는 역할을 해왔던 메가 스포츠 이벤트인 올림픽은 현재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막대한 개최 비용, 대규모 공사로 인한 환경파괴, 도시개조로 인한 집값 상승과 빈민층에 대한 사회적 배제 등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2022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나섰던 뮌헨, 니스, 오슬로, 스톡홀름, 그리고 2024년 하계 올림픽 개최의사를 보였던 베를린, 함부르크, 보스턴, 로마 등 주요 서구 도시들이 올림픽 개최 투표도 전에 이를 철회했다.

2018년 한국 평창, 2020년 일본 동경, 2022년 중국 북경, 앞으로 열릴 세 번의 올림픽의 개최지는 모두 동아시아다. 이러한 이례적 사태에는 올림픽에 부정적인 서구와 달리 이 지역 사람들이 올림픽 개최에 대해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개최지 결정 직전이었던 2011년 조사 결과 평창올림픽에 대한 지지율은 93%에 이르렀고, 2020년 도쿄올림픽에 대한 지지율 역시 77%에 달했다(東京2020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招致委員会, 2013년 3월 26일). 보통의 서구 도시들이 70% 이하임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동아시아에서 올림픽이 상당한 지지를 얻었을 수 있었던 데에는 올림픽과 이를 전후한 시기에 대한 긍정적인 기억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서울 올림픽의 경우, 한 신문이 수행한 “한국의 위대한 업적”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1998년과 2008년 두 번 모두 2위에 올랐다. 얼마 전 방영된 드라마 『응답하라 1988』는 1988년의 공간을 사회적 통합이 마을의 일상에서 구현되었던 시기로 당시를 묘사하고 있다.<sup>1</sup> 뒤에서 살펴볼 서울올림픽에 대한 학계의 평가와는 별개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가 대중들 사이에는 자리를 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서울올림픽에 대한 기억은 1988년 9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 2주간 진행되었던 서울올림픽이라는 스포츠 행사에 의해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좁게는

---

<sup>1</sup> 『응답하라 1988』은 케이블TV프로그램 역대 시청률 1위를 기록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얻었고,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1988년 서울 도봉구 쌍문동을 배경으로 한 이 드라마는 당시 상황을 비교적 치밀하게 고증하기 위해 수백명을 인터뷰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전반적으로 당시기를 경제적인 발전과 더불어 사회적 갈등 보다는 공동체적 감성이 지배적이었던 ‘유토피아’로 그리고 있다. 이에 대한 논의로는 천정환(2016), 김소연(2016), 김영찬(2016) 참조.

## 2 서울올림픽과 1980년대의 사회정치

서울올림픽을 전후하여, 넓게는 1980년대 내내 진행되었던 많은 사회적 변화들이 올림픽이라는 이름으로 상징화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서울올림픽은 이른바 ‘3저 호황’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고도성장의 참조점인 동시에, 당시에 발생한 다양한 사회적 변화들에 대한 (긍정적인) 집합적 기억을 함축하고 있는 ‘기억의 장(lieu de memoir)’으로 역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sup>2</sup> 서울올림픽은 1980년대에 관한 역사사회학적 연구에 있어 불가결한 연구대상이다.

그런데, 1980년대에 존재한 한국 사회의 변화들 중 어떤 것들은 서울올림픽을 준비하고 개최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의식적으로 추진한 프로젝트들과 관련을 맺고 있다. 올림픽은 도심지, 불량주택지구, 한강, 강남과 잠실 등 수도 서울의 경관을 대대적으로 바꾸는 계기였다. 도로변과 공한지에 꽃을 심고 도로를 청소하는데 수많은 시민들을 동원하기도 했다. 성화봉송코스와 관광지를 위주로 서울 바깥 역시 상당 부분 개조되었다. 더불어, 국가는 시민들의 습속을 개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다. 공공장소에서의 질서에서 언어생활에 이르기까지 일상의 습속 전반을 개조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된 것이다. 1981년 가을부터 약 7년간 올림픽을 앞세워 한국 사회를 개조하고자 했던 국가의 다양한 프로젝트들은 1980년대에 관한 역사사회학적 연구들이 반드시 검토해보아야 할 대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올림픽이 갖는 사회통합적 기능, 올림픽의 역사가 보여주는 도시개조의 긴밀한 관련성, 그리고 습속개조 프로젝트와 연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서울올림픽이 1980년대 국가에게 매우 중요한 사회정치(social politics) 수단이었다고 주장한다.<sup>3</sup> 다시 말해, 올림픽은 1960년대부터 본격화된 산업화와 도시화 가운데 생겨난 여러 사회문제(social question)를 해결하고 사회통합과 사회질서를 확보하고

<sup>2</sup> 이는 도쿄올림픽에 관한 몇몇 연구에서 차용하였다. 石坂 (2009)는 도쿄올림픽에 대하여 당시에는 다소 분명하게 인식되지 않았던 경제적 고도성장이 회고적으로 재구성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고도성장 시대의 참조점’으로 정의한다. 또한 Tagsold (2004)는 도쿄올림픽이 일본 역사에 있어 ‘기억의 장(lieu de memoire)’으로 기능한다고 말한다.

<sup>3</sup> 이 글은 매우 다양하게 쓰이는 ‘사회’ 개념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사용한다. 첫째, ‘사회’개라는 개념은 사회정화운동, 사회질서, 사회개조 등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대중(노동계급)의 습속, 특히 도덕 및 위생 등과 관련된 습속을 함의한다. 르플레 등의 초기 사회학자들에서 시작하여 사회정화운동을 펼친 군사정권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개념활용법이 발견된다. 둘째, ‘시민사회’는 고유의 성향과 의견을 가지고 이를 개진하여 공론장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집합을 일컫는다. 간단히 말하면 사회를 집합적 습속의 공간으로, 시민사회를 집합적 의견의 공간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역사적 맥락을 갖는다.

루소가 구상한 사회는 이성을 가진 시민-주권자가 공적 사안에 대해 가진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합의를 이루면 정부가 대의(representation)하는 사회였고, 이것이 혁명 당시 프랑스의 공화국 모델이었다. 하지만, 근대자본주의 하에서 사회에는 의견(opinion)의 다양성만 아니라, 사회 내 수많은 불평등에 기초한 도덕과 습속 차이도 존재한다. 이 습속의 차이는 의견의 합의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고, 그래서 공화국 프랑스의 지속을 위해 등장한 것이 습속의 합의를 위한 장치들이 등장했는데, 그것이 사회개혁, 사회복지, 사회학 등 ‘사회적인 것’들이었다(동졸로, 2005). 프랑스 혁명 이후 공화국 모델의 전세계적 확산, 그리고 서구 산업국가들의 복지국가의 동시성을 생각할 때, 이는 일국적이라기 보다는 서구사회에서는 어느정도 보편성을 갖는 논의라 여겨진다.

자 하는 1980년대 국가의 정치수단으로 활용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이 정치 과정은 국가의 일방적인 개조 작업으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다. 시민사회가 보였던 반응 역시 이에 포함된다.

서울올림픽이 1980년대 국가의 사회정치 수단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된다. 올림픽을 앞세워 국가가 그토록 대대적인 도시개조와 습속개조를 추구해 나간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 질문들로 이어진다. 서울올림픽은 개최는 누가 어떤 목적에서 기획했는가? 국가는 올림픽이라는 무대를 통해 무엇을 연출하고자 하였는가? 국가의 도시개조와 습속개조 프로젝트는 어떻게 수행되었는가? 이렇게 올림픽을 매개로 한 국가의 개조 프로젝트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응은 무엇이었는가? 이러한 프로젝트는 어떠한 결과를 남겼는가? 이 연구는 위와 같은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올림픽이라는 행사의 유치 국면이나 스포츠이벤트 개최 국면에만 초점을 두지 않는다. 준비 국면에서 존재했던 습속개조와 도시개조 과정 및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응에 보다 주목하고, 이를 통해 1980년대 국가의 사회정치 과정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올림픽을 매개로 1980년대 사회정치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그리고 그것은 어떤 유산을 남겼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나아가,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을 우선시한 것으로 여겨져 온 발전국가가 1980년대 들어서는 올림픽을 매개로 ‘사회발전’을 추구했다는 점을 드러내고자 한다.

## 2. 기존연구 검토

### 1) 서울올림픽 연구

그렇다면 올림픽 연구에서만 아니라 1980년대의 사회변화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도 불가결하게 다뤄야 할 대상이라 할 수 있는 서울올림픽을 매개로 한 사회정치 과정은 어떻게 해석되어 왔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올림픽을 매개로 7년 간 이뤄진 개조 프로젝트에 주목한 연구들은 찾아보기가 어려우며, 올림픽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응에 대한 연구 역시 얼마 되지 않는다. 기존 연구들은 올림픽 유치 구상이 이뤄지던 1980-1981년에 주목하면서 정권이 왜 올림픽을 개최하고자 했는지 그 의도에 초점을 맞추거나, 1987-88년에 주목하면서 올림픽이 가져다 준 효과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올림픽의 개최 의도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제시하는 이론은 1980년대 중반 시민사회로부터 제기되어 현재까지 통용되고 있는 이른바 ‘탈정치화’ 및 ‘우민화’론이다. 이러한 입장을 채택한 연구자들은 서울올림픽과 아시안게임, 그리고 프로스포츠

#### 4 서울올림픽과 1980년대의 사회정치

등을 독재정권의 대(對)시민사회 전략으로 본다. 스포츠 정책은 영화 및 성산업과 한 묶음이 되어 이른바 '3S(Sport, Screen, Sex)'정책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한겨레』나 『월간 말』 등의 언론과 고광현(1988a) 등의 비판적 필자로부터 시작되었고, 강준만(2003b), 강지웅(2006), 정해구(2011) 등이 서술한 역사서를 통해서도 반복되고 있으며, Thomas(2011), Davis(2011)등의 영어권 저작에서도 소개되고 있다.

이러한 판단을 내린 연구자들이 주목한 시간대는 1980년~81년의 유치국면이었다. 이들에게 5공 정권은 1980년 당시 민주화를 원했던 시민사회의 요구를 무력으로 억압하고 권력을 차지한 이들이었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발전을 막고, 정권에 적대적인 여론을 최소화시켜 독재정치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었다. 이 당시 정부가 발전시킨 대중문화산업 중에서도 특히 스포츠는 부당하게 권력을 잡은 정권의 시민사회 억압 및 독재정치 수단이었다는 것이 이들의 판단이었다.

서울올림픽의 의도보다 효과를 관심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은 1988년 언저리의 시간대에 주목한다. Taylor(1988)와 Mannheim(1990), Larson and Park (1993), Black and Bezanson(2004), 그리고 Mangan, Ok and Park(2011) 등은 서울올림픽이 한국 정치의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점을 주장하며, 김병로(2014)나 박경호·옥광·박장규(2011), 신종대(2013) 등의 연구는 올림픽을 계기로 한 사회주의권 국가들과의 관계 변화를 다루고 있다. 이윤근·김명수(1990)와 Choi and Heo (2013) 등은 올림픽이 경제성장의 촉매제가 되었다고 본다. 한국개발연구원(1989), 임태성(1993) 등의 저작은 서울올림픽이 한국 사회에 다방면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음을 주장하며 설문조사를 통해 이를 검증하고 있다.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서울올림픽이 '발전'의 계기가 되었음을 주장하는 연구들이 존재하는데, Cho and Bairner(2011)는 서울올림픽이 외국문화의 유입의 계기인 동시에 전통문화의 발전 계기였다고 보며, 강신표(1997)는 올림픽이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재발견하고 재창조하는 계기였다고 주장한다. 이 외에도 무용, 미용 등에서도 서울올림픽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주장이 체출되어 있다(김은정·임태성 1999, 이기봉 2002).

이렇게 의도를 중심으로 1980~81년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들과 효과를 중심으로 1988년에 주목하는 연구들 사이에서 1982~87년에 존재했던 준비국면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소수의 연구가 올림픽을 매개로 한 도시개조 과정이 대규모의 재개발로 인해 철거민을 양산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김정남(2005)는 올림픽을 매개로 한 도시빈민운동과 통일운동을 다루는 과정에서 올림픽으로 인한 재개발과 철거민의 양산 문제를 소개하였고, Greene(2003)은 서울올림픽과 대규모의 도시재개발에 상당한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Davis(2007, 2010)는 서울올림픽으로 인해 최대 70만명에 이르는 수많은 이들이 강제철거에 의해 터전을 잃고 이주해야 했음을 주장하고 있다. 재개발과 철거에 치우친 연구들이 다수를 차지하다 보니, 1982~1987년 사이 서울올림픽을 매개로 이뤄진 우리 사회의 변화와 도시변화를 포괄적으로 파악하기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물론 연구의 공백을 메운 중요한 연구들이 존재하기는 한다. 정준영(2007)의 연구는 독재정권이 올림픽을 활용한 측면을 강조한다거나 올림픽으로 인한 정치적 민주화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1987년에 급진화된 한국 사회의 민주화가 올림픽의 성공에 미친 영향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주제면이나 접근법에 있어 참신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 제출된 김백영(2017)의 연구는 올림픽을 매개로 한 재개발과 철거민의 발생이라는 주제가 아닌 강남 개발이라는 새로운 주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연구의 공백을 메운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하지만 이상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1982년부터 87년사이에 올림픽을 매개로 이뤄진 다양한 도시변화와 사회변화에 대한 연구의 공백은 아직도 크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상기의 연구들은 서울올림픽의 개최 동기와 개최 효과 등에 대한 다양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지만, 7년에 이르는 준비과정에 대하여는 밝혀주는 바가 아직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도시개조에 관한 연구들은 중요한 공백을 메워주고 있지만, 무엇을 이유로 그러한 개조과정이 일어났는지 그 성격을 해명하는 데는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즉, 습속개조와 도시개조를 모두 포괄하면서 올림픽을 매개로 국가가 수행한 사회정치 프로젝트의 면모를 제대로 밝히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습속개조에 관하여는 박해남(2016)의 연구가 일부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회정치의 두 측면, 국가의 사회개조와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응 모두를 탐구한 연구는 아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국가의 사회개조 프로젝트에 비해 시민사회의 반응을 파악한 연구 역시 찾아보기가 어렵다. 두 편 정도가 존재하는데, 박경호·옥광(2016)의 경우 1980년대 존재했던 서울올림픽 비판론들을 일부 정리하면서 이러한 주장이 일종의 ‘성장통’이었다면서 올림픽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에 서서 비판적 의견들을 소화한다. 반면에, 유혜진·천혜정(2014)은 서울올림픽박물관에 재현된 기억 방식이 올림픽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만 근거하고 있음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위와 같은 기존 연구의 공백을 감안한다면, 서울올림픽을 매개로 한 사회개조 과정에 대한 포괄적 파악도,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응에 대한 분석도 아직은 연구 과제로 남아있다고 판단된다.

## 2) 1980년대 사회변동 및 도시변화 연구

그렇다면, 서울올림픽을 다룬 연구가 아닌 1980년대의 사회변동 및 도시변화연구들의 경우는 어떨까? 1980년대 사회정치의 성격을 해명하고 있을까? 이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1980년대 사회변동에 대한 연구들에 있어 가장 중요한 테마로 다뤄져 온 것은 정치체제의 민주화다. 1980년대를 개괄하는 대중서들만 보더라도 민주화 운동은 시대를 설명하는 키워드로 활용되고 있다(정해구 2011, 강준만 2003a). 다수의 연구들이 ‘87년체제’라는 이름으로 1987년 민주화 과정의 부산물로 만들어진 헌법과 정치

## 6 서울올림픽과 1980년대의 사회정치

질서가 여전히 한국 정치의 기본적 틀을 구성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현재의 사회를 규정하는 영향력을 둘러싼 논쟁을 진행해왔다(윤상철 2005, 김종업 2005, 2010, 박상훈 2006, 손호철 2009, 정일준 2010, 박해광 2010).

민주화 과정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들은 계급을 상당히 자주 언급한다. 하지만, 여기서 계급을 다루는 방식은 사회문제의 등장과 해결이라는 사회정치와는 거리가 멀다. 주로 국가와 분리된 시민사회의 (독자적) 성장을 설명하고,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의 힘관계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계급 문제를 다루고 있다. 성경룡(1993)은 시민사회의 성장에 기초하여 야당과 운동세력이 형성한 도전연합에 대해 군사정권이 이전과 같은 물리적 수단을 활용하지 못하면서 민주화가 진행되었다고 파악한다. 윤상철(1997)은 직선제 개헌을 매개로 한 정치사회 내 야당과 시민사회 내 중간계급의 연합을 통해 정치질서의 변동을 설명하고, 이 둘의 분리를 통해 이후의 질서 변동을 설명한다. 조희연(1998)의 경우 발전동원체제를 앞세운 국가와 민중운동 사이의 각축에서 80년대 중반 이후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의 점진적이고 타협적인 민주주의 이행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1980년대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뿐 아니라 국가-자본 사이에서 자본의 권력이 커지는 방향으로 변화했다는 것이 윤상우(2005)와 김윤태(2012)의 주장이다.

1980년대 중산층의 성장 역시 중요한 연구 주제를 이룬다. 그런데, 이들 연구들의 특징은 중산층의 사고방식과 정체성, 에토스 등의 특징을 독자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가정하면서 분석하고 있다. 1980년 중반부터 중산층 정치의식의 진보적 성격에 주목한 한상진(1987), 한완상·권태환·홍두승(1987) 등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중산층의 육성은 1960년대 후반 이후 국가의 중요한 사회정치 전략 중 하나였다. 국가는 사회문제의 등장을 목도하면서 중산층 육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통합을 구현하려 하였기 때문이다(김재원 2015). 하지만 자산형성을 통한 중산층의 전략적 육성을 통해 국가의 사회정치 전략을 보여주는 김도균(2013a)의 연구가 예외적일 뿐, 위 연구들은 그러한 사회정치를 간과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에는 문화연구 차원에서 1980년대 저항적 지식인들이 가졌던 집단적 에토스, 정체성, 이념 등을 다룬 연구들이 제출되고 있다. 김홍중(2009)은 정치적 민주화를 주도한 이들의 집단적 에토스를 분석하여 이를 ‘진정성’으로 명명하였고, 이희영·정철희·신진욱(2007)도 386세대의 정체성과 도덕감정, 집회에서의 의례 등을 통해 민주화 운동에 접근하고 있다. 1980년대 저항적 이념에 대한 연구 역시 독자적 발전과정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1980년 5월 광주를 한국의 민족주의에 있어서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이수인(2008)은 1980년 5월 광주가 한국 민족주의와 반미, 북한에 대한 재인식과 새롭게 결부되는 과정을 분석했고, 정근식(2007)은 5월 광주에서 시민들이 활용한 상징들을 분석하여 ‘시민적 공화주의’라는 이념을 추출해낸다. 이 외에도 1980년대 학생운동에서 나타나는 민족주의를 분석한 김동성(1989)과 이병철·박양수(1990)의 연구가 존재한다. 이들 연구들 역시 국가의 사회정치에 대한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이들의 사상을 다루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김원 외(2017)의 연구가 예외적으로 1980년대 국가의 노동정책과 이에 대하여 노동

운동 진영이 보인 대응으로 사회변혁에 관한 아이디어들을 다루고 있을 뿐이다.

1980년대 도시변화에 관한 연구들은 주제 자체로 사회정치와 무관하지 않다. 1980년대 도시 연구들이 초점을 맞춘 것은 독재정권이 빈민을 도시로부터 배제하는 양상이었다. 그래서인지, 앞서 언급한 올림픽 연구와 마찬가지로 도시빈민들의 삶과 이들 주거지역에 대한 재개발과정에 대한 연구가 특히 중요한 연구대상이었다(홍기용 1986, 장세훈 1988, 한상진 1989, 조은·조옥라 1992, 윤일성 2001). 이들 연구가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자본의 축적을 위해 민중을 억압하는 국가였다. 다시 말해, 1980년대 도시개발과 재개발은 자본가들의 자본축적을 위해 도시공간을 재편하는 과정이었고, 국가는 이 과정에서 자본의 충실한 대변자였으며, 빈민과 민중층은 상당한 피해를 감내해야 했던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권태환·윤일성·장세훈 2006, 287). 하지만 이들의 연구는 1980년대 도시변화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닌 불량주택(무허가주거지)재개발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시 국가가 올림픽을 매개로 해서 수행했던 한강개발, 도심재개발, 강남지역 경관관리 등 다양한 도시변화의 양상을 포괄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해볼 때, 1980년대의 사회정치 과정 즉, 국가가 사회문제의 해결과 사회질서 및 통합을 구축하려는 시도 등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1980년대의 국가가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했던 과정을 분석한 연구도 매우 드물고, 이에 관한 시민사회의 반응에 대한 연구 역시 매우 드물다. 두 과정을 포괄적으로 파악한 연구는 더더욱 찾아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의 도시변화에 대한 연구들 역시 주제가 제한적이며, 그와 더불어 진행된 시민들의 일상적 습속을 바꾸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들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1980년대 사회정치에 대한 연구 자체가 적은 실정인 것이다. 이러한 연구 상황을 감안한다면, 서울올림픽 연구는 아니더라도 올림픽을 매개로 한 1980년대 국가의 사회개조 작업 및 그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응을 파악할 시각을 줄 수 있는 연구를 찾아보기란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다.

### 3) 메가이벤트 및 올림픽 연구

그렇다면, 올림픽연구를 포함한 메가이벤트 연구들의 상황은 어떨까? 메가이벤트를 매개로 도시를 바꾸고 시민들의 습속을 바꾸려는 노력들은 어떻게 분석되어 왔는가?

올림픽과 더불어 메가이벤트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박람회와 관련한 연구들의 경우, 박람회의 개최가 사회통합의 문제의식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과 박람회가 습속개조의 장치로 활용된다는 점을 밝힌 연구들이 존재한다. 이들 연구는 박람회가 세계의 진보를 보여주고 내셔널리즘을 고양시켜 자본가와 국가에 대한 중산층의 충성도를 높이고(Rydell 1984, 1993), 자본주의적 세계관을 심어주며(Greenhalgh 1988, 105), 다른 관객의 피관찰자가 되는 상호감시의 메커니즘을 통해 대중의 습속질서를

## 8 서울올림픽과 1980년대의 사회정치

창출하는 계기를 마련하며(Bennett 1995), 사물에 대한 관찰과 분류를 중심으로 한 근대적 시선을 갖는 법을 익히게 하는 규율훈육의 장소가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요시미 2004). 박람회와 사회정치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을 비교적 면밀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와 달리 올림픽의 경우에는 사회정치 수단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연구가 매우 제한적이다. 올림픽에 관한 연구들이 주목하는 것은 독재정권의 선전, 2차대전 이후의 냉전 전략, 신자유주의 도시화 등의 양상이다.

20세기 초중반의 올림픽에 대하여는 그 정치적 성격을 다룬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과 1934년의 이탈리아 월드컵에 대한 연구가 대표적이다. 스포츠 국가대항전은 선수들을 민족의 대표자로 재현하게 되는데(정준영 2009, 84-94), 이러한 속성을 파시스트 정권이 이용했다고 보는 연구들이 존재한다. 이 연구들은 이탈리아 파시스트 정권이 1934년 월드컵 대표팀을 통해 정권이 장려하는 건강한 신체와 협동정신을 선전하고자 개최했다는 점과(Gordon and London 2006, 45), 이를 통해 대중의 습속이 바뀌길 바랐다는 점에 주목한다(Cavallaro 2014). 1936년 베를린 올림픽 역시 나치 정권이 독일인 신체의 우수성을 국제사회에 선전하는 무대였던 것으로 그 성격이 규정되고 있다(Byrne 1987, Krüger 2003).

195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 사이의 올림픽에 대하여는 주로 국제정치적 차원에서 의의와 효과를 묻는 연구들이 눈에 띈다. 1950~60년대 올림픽을 냉전기 미국의 국제정치 도구로 해석하는 Rider(2016)의 연구나, 스포츠 이벤트를 통한 미소간 대결에 주목하는 Redihan(2017), 1980년대 신냉전과 올림픽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Sarantakes(2010)과 D'Agati(2013) 등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또 1960년~70년대 초의 올림픽을 통해 과거 2차대전을 일으킨 추축국들이 국제사회로 복귀함을 알림과 더불어 전쟁국가 이미지를 벗고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해갔음을 밝히는 연구들 또한 존재한다. 1960년 로마올림픽에 대해서는 Panagiotopoulou(2013)의 연구가, 1964년 도쿄올림픽에서는 Droubie(2011), Traganou(2016) 등의 연구가, 1972년 뮌헨 올림픽에 대해서는 Schiller and Young(2010)의 연구가 이러한 점을 밝히고 있다. 그런 점에서 1980년대까지의 올림픽에 대한 연구들은 이를 매개로 한 도시개조나 습속개조에 대하여 큰 관심을 기울이지는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개최된 올림픽에 대하여서는 올림픽을 매개로 한 도시개조 과정을 밝히고 그 성격을 규정하는 연구들이 제출되기 시작했다. 이들 연구들은 올림픽과 도시개조가 매우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주면서, 신자유주의 도시화 전략으로 이것이 규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선구적 연구로는 1970년대 이후 산업적 성장의 중지, 중산층 부의 성장 및 생활양식의 변화에 맞춘 새로운 도시정책의 수단이 메가이벤트임을 간파한 Häussermann und Siebel(1993)의 연구와, 탈산업화 국면에서 올림픽이 도시를 '생산하는 곳'에서 '소비하는 곳'으로 재구성하면서 신자유주의 도시화를 추진하는 과정과 결부되어 있음을 밝힌 Harvey(1996, 337-339; 2001,



406.)의 연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향 위에서 올림픽은 2차대전 이후 점진적으로 중요한 도시정책 수단이 되어 온 경향을 가졌음을 밝힌 Essex and Chalkley (1998, 187)와 Andranovich et al(2001)의 연구, 도시 엘리트계급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음을 밝힌 Schimmel의 연구(2002, 261) 등이 제출되었다.<sup>4</sup>

최근 들어서는 거시적 측면에서 신자유주의 도시화 과정으로의 성격규정을 넘어 올림픽 개최가 지역사회와 당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시적으로 탐구하는 연구들 역시 제출되고 있다. 올림픽을 계기로 이뤄지는 신자유주의적 도시공간으로의 전환이 빈곤층들에게 미치는 영향 및 이들의 반응에 대하여 탐구한 Kennelly and Watt(2011)의 연구, 2012년 런던 올림픽의 중요 목적 중 하나인 Newham지역 재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올림픽 준비과정이 이 지역사회를 어떻게 재구성하는지 보여주고 있는 Lindsay(2014)의 연구, 도시개조와 배제의 문제를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는 Lenskeyj(2002)와 Broudehoux(2007)의 연구 등이 대표적이다.

올림픽을 통한 도시변화를 기준으로 올림픽대회 들을 분류하면서 그 성격을 규정하는 연구들도 등장했다. 일본의 도시사회학자 마치무라(町村)는 미국의 1인당 GDP를 1로 놓고 봤을 때, 2할 정도에 수준에서 올림픽을 치른 대회로 로마, 도쿄, 멕시코시티, 모스크바, 서울, 아테네, 베이징을 들고, 6할의 경우로 뮌헨, 바르셀로나, 시드니 등을 분류하면서 경제적 위상에 따라 올림픽의 도시전략을 분류하며, 그 중 2할형 국가는 경제성장의 이륙단계에 수도에서 개최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본다(2007, 5-8). 올림픽이 도시변화의 기폭제(catalyst)임을 주장한 Essex and Chalkey는 도시변화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그룹(1896, 1900, 1904, 1968, 1984), 스포츠시설에 집중한 그룹(1908, 1912, 1932, 1936, 1952, 1956, 1996), 대회가 도시의 건조환경을 변화시킨 그룹(1960, 1964, 1972, 1976, 1988, 1992) 등으로 나누면서 서울의 경우 거대한 도시변화가 올림픽과 맞물린 사례의 대표로 본다(1998, 192-201). 이는 Liao and Pitts(2006)에서도 마찬가지다. Short 또한 이 분류법을 따르지만, 오히려 1988년 이후 올림픽들에서 도시변화는 더욱 크게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있다(2012, 107-108). Gold and Gold는 상기의 연구들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분류를 하고 있다. 1896-1906년을 탄생기, 1936년까지는 스타디움 등의 관련시설 변화, 1956년까지는 개최도시의 광고효과에 대한 주목이 이뤄진 시기, 1976년까지는 도시개조와 연관된 ‘기폭제(catalyst)’역할을 올림픽이 수행하기 시작한 시기, 1980-84년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의 두 대회 등으로 정의된다. 서울올림픽부터 96 애틀랜타 올림픽까지는 도시재개발 및 상업화와의 관련성이 높은 대회에 속한다(2011, 17-55).

올림픽 연구들은 올림픽을 매개로 이뤄진 여러 개조 작업, 특히 습속 개조 작업에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고, 그럼으로써 올림픽이 사회정치 수단으로서의 성격 또한 체계적으로 규명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파시스트 월드컵이나 나치 올림픽,

<sup>4</sup> 아울러, Gruneau(1984)과 Preuss(2004) 및 Whitson and Horne(2006) 등은 이러한 전략이 갖는 경제적 이득과 손실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추축국의 이미지 재구축에 대한 연구들은 습속과 관련된 선전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습속의 개조는 재현(representation)이나 프로파간다만이 아닌, 일상을 파고드는 담론과 실천의 네트워크를 통해 작동하므로 프로파간다에 대한 언급만으로는 습속의 개조과정에 대한 분석이 되기에 미흡하다.

연구의 부재는 올림픽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된 20세기 후반부터 서구 국가들에서 시민들의 습속을 인위적으로 개조하려는 노력이 많지 않았다는 점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1964 도쿄올림픽과 1988 서울올림픽, 2008 베이징올림픽은 경제성장 국면에서 생겨난 사회문제들과 도시문제들을 관제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습속을 개조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노력과 더불어 준비되어 갔다. 그래서 이들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는 올림픽을 위한 별도의 관제캠페인이 있었을 뿐 아니라, 일본의 ‘신생활운동(新生活運動)’, 한국의 ‘사회정화운동’과 ‘새마을운동’, 중국의 ‘조화사회(和諧社會)’ 등 당대의 중요한 관제캠페인과 올림픽이 매우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었다. 또한 탈산업화 국면에서의 도시개조 전략을 활용했던 서구의 올림픽과 달리 동아시아올림픽은 산업화와 더불어 거대한 규모의 도시개조 작업을 수행했다는 특징을 공유한다.

이들 국가들이 올림픽을 계기로 수행한 대규모의 사회개조 프로젝트에 대하여 기존 연구들은 주로 그 동기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국가가 지닌 근대성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욕구에 기초하여 개최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Black and Peacock(2011)의 연구가 대표적으로, 아시아지역에서 있었던 메가이벤트들을 묶어 발전주의적 특성을 갖는 메가이벤트로 규정하고, 아시아 국가들이 국제사회에서 그 근대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의도 하에서 상기의 메가이벤트들을 개최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Collins(2011)와 Horne and Manzenriter(2012)의 연구 역시 위와 비슷하다. 이들은 국제무대로의 진입에 대한 욕구와 근대성의 증명이 아시아에서 열린 세번의 하계올림픽(64 도쿄올림픽, 88 서울올림픽, 08 베이징올림픽)에 공통된 점이라고 지적한다. Muroi (2008)와 Yu and Liu(2013)는 세 대회 사이에 깊은 영향 관계가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상기의 연구들은 국제사회에 자신들의 근대성을 증명한다고 하는 동기는 해명했는지 몰라도, 그러한 의도에 기초하여 준비국면에서 수행되었던 개조 작업들을 통합적으로 해명하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응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동아시아 올림픽을 매개로 하여 진행되었던 습속개조의 양상에 주목하는 연구는 매우 드물다. 1964년에 관하여서는 Igarashi(2000, 143-163)의 연구가, 2008년에 관하여서는 Broudehoux(2012)의 연구가 있다. 그리고 2002년 월드컵에 대하여 Choi(2004)의 연구가 존재하는 정도다. 아직은 매우 미흡한 수준인 것이다. 이들은 올림픽을 앞세운 국가의 습속개조 프로젝트만을 주목하고 있으며, 시민사회의 반응까지는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가 대상으로 하는 서울올림픽에 관하여서는 습속개조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도시개조에 관한 연구는 습속개조에 관한 연구보다 다양하다. 1964년 도쿄올림픽

의 경우, 올림픽을 앞두고 수행되었던 도쿄 도시개조를 내셔널리즘의 변형과 완성이라는 맥락에서 파악한 Tagsold(2010), 요시미 순야(吉見 2015), 김은혜(2016) 등의 연구가 있다. 베이징 올림픽의 경우에는 그 준비과정에서 기층 사회구성원에게 주어진 차별과 배제의 양상을 파악한 Shin(2012), Shin and Li(2013), Broudehoux(2007) 등의 연구가 있다. 하지만 이들 연구들 역시 사회개조라는 시각에서 습속개조와 도시개조를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국가와 지방정부 등 추진엘리트의 개조 프로젝트 수행과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응을 포괄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는 도시개조 작업을 통해 환기되는 새로운 내셔널리즘은 시민들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차별과 배제의 문제에 있어 서구에서 개최되는 올림픽들의 그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을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판단된다. 그리고 이러한 약점이 동아시아 올림픽의 사회정치가 갖는 고유성을 자세히 밝히지 못하도록 하는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판단된다.

지금까지의 연구상황을 살펴볼 때, 서울올림픽과 1980년대 한국사회 변동에 관한 연구, 그리고 올림픽 일반에 관한 연구를 다 합치더라도 서울올림픽에서 현저하게 드러난 국가의 습속개조와 도시개조의 과정과 그 성격을 포괄적으로 또 면밀하게 분석한 연구들을 찾아보기는 어려우며, 이에 기초하여 올림픽이 갖는 사회정치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검토한 연구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 3. 이론적 배경

올림픽을 매개로 한 사회정치를 분석한 기존 연구가 부재한 상태에서는, 사회정치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적 검토를 경유하여 분석을 위한 시각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 선택이라 여겨진다. 그래서 여기서는 먼저 사회정치란 무엇인지를 알아본다. 이어서 사회정치 과정은 어떻게 분석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서울올림픽의 사회정치를 분석함에 있어 어떤 변수가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 1) 사회정치

사회정치는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가의 정치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Hayes 1913).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자본주의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등장한 범죄와 질병 등의 병리적 현상들, 시장과 임노동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빈곤층의 발생, 농촌의 사회적 후진성 등 사회문제들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이라고 할 수 있다(Flanagan 2007, 119; Rodgers 1998, 3). 사회정치를 통해 국가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서 질서와 통합을 창출하고자 한다. 사회질서와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것이다.

서구 사회들의 자본주의 이행과 산업화 과정은 다수의 노동자 및 민중계급으로 하여금 대중적 빈곤(pauperism)이라 불리는 집단적 빈곤 상태에 빠지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들의 생활공간인 도시는 질병과 범죄 등으로 대표되는 병리 현상으로 얼룩지게 되었다. 사회문제(영: social question, 프: question sociale, 독: soziale Frage)는 이러한 사태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1830년대 프랑스와 1840년대 독일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다나카 2014, 75; Kaufmann 2003, 14; 24). 앞서도 보았듯이, 사회문제는 민중계급의 빈곤, 생활에서 발견되는 범죄와 질병의 만연, 급속의 급격한 변화와 분화, 계급간 갈등 등의 현상을 포괄한다(나인호 2000, 669).

19세기 중반과 후반, 서구 학술파에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주체가 누구인가를 둘러싸고 여러 견해들이 경쟁하고 있었다.<sup>5</sup> 19세기 말 영국에는 이러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 행정당국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이들이 있었다(Rae 1890, 436; Hayes 1913, 3). 이들은 전통적으로 이뤄져 온 교회 중심의 자선 또는 구빈과 대중적 빈곤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구별하였고, 후자를 설명하기 위해 ‘사회정치’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했다.<sup>6</sup> 대표적으로 영국의 거대 산업도시 버밍엄의 시장으로 사회문제에 대한 지방행정기구의 광범위한 개입을 이끌었으며, 나아가 이를 국가스케일로 확대하려 했던 조셉 챔벌레인(Joseph Chamberlain)이 이 사회정치 개념을 활용한 이였다(Greenleaf 1983, 225-6).

사회정치라는 개념은 영국에서 나왔지만, 사회문제에의 해결을 위한 국가의 개입과 이를 둘러싼 정치행위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서구 산업국가 어디를 보아도 존재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1880년대 중후반 독일에서는 사회문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사회보험의 형태로 제도화되면서 사회정책이라는 개념이 뿌리를 내렸다(Kaufmann 2003, 7-8). 프랑스의 경우 보편적 사회입법은 늦었지만, 20세기 초입에 주택, 금융, 교육 등의 분야에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관들이 민간 영역의 주도로 만들어지는 동시에 사회복지에 대한 컨센서스가 형성된다(Elwitt 1986; Horne 2002). 미국의 경우 주요 도시에서 활동하는 민간의 지식인과 활동가 집단이 중심이 되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활발하게 전개했다(中野 2015). 이 같은 국제적 컨센서스의 형성은 2차대전 이후 서구에서 ‘복지국가’들이 공통적으로 만들어지는

<sup>5</sup> 다나카(2014)는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에 이르는 시기 프랑스 사회정치의 토론에 참여한 여러 세력들이 저마다 사회 문제의 해결 주체를 서로 다르게 상정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치경제학은 사회문제에 대한 인위적 개입을 배제할 것을 주장했고, 사회경제학은 사회 구성원간 협동과 유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연대주의는 법적 보호장치를 통한 국가의 개입을 주장했다. 같은 시기 독일에서도 국왕과 노동조합, 시민 등 문제의 해결 주체를 놓고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했다. 이에 관하여는 박근갑(2008) 참조.

<sup>6</sup> Williams(1950, 411)에 따르면 기독교회의 구빈과 사회정치는 크게 세가지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첫째, 전자는 기독교정신에 입각하는 반면 후자의 동기는 정의(justice)에 입각한다. 둘째, 전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개인들을 고려대상에 놓지만 후자는 인구 전체를 고려하고, 대중적 빈곤이라는 현상 자체를 없애려 한다. 셋째, 전자는 치유적 성격을 가져 이미 빈곤에 빠진 자를 도와주지만, 후자는 예방적 방법을 선호하며 대중들의 빈곤상태의 지속과 성장을 막고자 한다.

밀거름이 되었다. 복지국가에 대한 선구적 연구자인 마셜(2014)이 공민권에서 사회권에 이르는 과정을 보편적인 역사적·단계적 과정으로 설정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러한 초국가성이 배경에 있다.

사회정치는 제도화된 복지 혹은 복지국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2차대전 이전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제출된 해결책과 그러한 해결책을 정당화하는 논리들은 매우 다양했다. 2차대전 이후 제도적 복지가 서구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우위를 점하기까지는 몇 번의 도약이 필요했다. 제도적 복지를 지칭할 때 주로 쓰이는 사회복지나 사회정책 등의 개념이 아닌 사회정치라는 개념을 쓴 이유는 여기에 있다. 사회정치라는 개념이 다양한 형태의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통합의 노력들을 확인하는데 더 유리하다 여겨졌기 때문이다.

사회정치 개념이 갖는 장점은 포괄성에 있다.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회질서와 통합을 추구하는 국가의 활동을 지칭하는 개념들은 여럿 있다. 예를 들어 오페(Klaus Offe)는 이러한 권력의 움직임을 사회통제(social control)라 불렀고(1984, 147-161), 푸코(Michel Foucault)는 규율(discipline)이라 불렀다. 그런데, 이러한 개념들은 권력의 일방향적인 작용을 함의할 때가 많다. 스타인메츠(Steinmetz)는 오페나 푸코의 개념이 별다른 저항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권력이 일방적으로 작용한다는 함의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비판한 바 있다(Steinmetz 1993, 3). 이 연구는 Steinmetz의 문제의식에 동의한다. 하지만 그가 활용했던 조절(regulation)이라는 개념보다는 사회정치라는 개념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사회정치는 국가가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과정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 시민사회가 반응하는 과정, 이 둘 사이의 대립과 협력, 경쟁 등의 정치적 과정을 시야에 넣게 해준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Heclo 1974, 2-3).

연구의 대상이 올림픽임을 감안했을 때, 이 연구가 눈여겨보는 사회정치 방식은 습속개조와 도시개조다. 이는 복지국가가 본격화되기 이전인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서구사회에서 활발하게 실천된 사회정치 방식이었다(Topalov 1999). 이를 주도한 이들은 중산층 지식인과 실천가들이었는데, 이들은 사회 구성원들의 개별적인 습속을 중심으로 사회문제를 파악하고, 이들의 자발적 노력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이들이었다. 파리의 사회박물관(Musée social), 런던의 토인비 홀(Toynbee Hall), 시카고의 헐하우스(Hull house) 등이 대표적으로, 이들 기관은 당시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했던 사적 소유권의 철폐를 통한 문제해결에 반대했고, 자유방임주의자들이 고수해왔던 사회문제에의 불개입 원칙에도 반대했다. 그래서 이들은 대체로 사회주의와 자유방임주의 사이에 위치한 중간 입장에서 서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von Bruch 1985, 61). 이들이 중요시한 것은 사회 구성원들의 개별적인 습속개조, 노동과 위생에 관한 지식의 향상, 사회 구성원 사이의 자발적 협동과 상호부조 조직 결성 등이었다. 이를 통해 노동력을 상실하게 하는 리스크(risk)에 대처한다면 빈곤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들이 만든 기관 사이에는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책을 둘러싼 지식 및 실천의 교류 네트워크가 존재했다(Henlock 1987; Rodgers 1998; Schäfer 2000).

습속개조는 중산층 사회개혁가들이 가장 중시했던 사회문제 해결책 중 하나였다.<sup>7</sup> 이들은 산업화와 도시화 가운데 형성된 습속의 급변이 노동계급을 포함한 대중 사이에 만연한 질병과 범죄라는 병리적 형태로 나타났다고 보았고, 이것이 빈곤을 유발하는 리스크라고 보았다. 따라서, 기층 사회구성원들의 습속을 개조하여 도덕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곧 노동계급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사회문제들에 대비(*prévoyance*) 시키는 것이라고 보았다(Elwitt 1986, 217-259). 습속 개조를 ‘사회적 향상(*social uprifting*)’이라 부른 것 또한 습속의 개조가 이들의 사회정치에 있어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박진빈 2006, 14).

사회개혁가들은 사회 기층 구성원들의 습속을 개조하기 위한 방법을 궁리했을 뿐 아니라, 습속에 대한 관찰과 이에 대한 지식을 축적을 중요시했다. 예를 들어, 19세기 중반 프랑스 사회학의 발달에 기여했던 프레데릭 르플레(Frédéric le Play)나 케틀레(Adolphe Quételet)의 학문 활동은 모두 습속의 관찰을 목표로 하는 것이었다. 르플레의 경우 사회문제의 원인이 습속의 무질서에 있다고 보았다.<sup>8</sup> 그래서 그는 『유럽의 노동자들』에서 생활습관과 노동, 위생, 가족형태 등을 관찰하고 기록하여 노동자들의 습속에 대한 지식을 얻고자 했다(다나카 2014, 75-81; 106-111). 그의 후계자들이 만든 파리의 사회박물관(Musée social)은 협동조합 같은 노동계급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상호부조단체에 연구와 더불어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를 핵심 활동으로 하고 있었다(민유기 2004, 237). 시카고 헐하우스의 소유주이자 제인 아담스(Jane Adams)의 후원자였던 헬렌 컬버(Helen Culver)가 시카고대학의 사회학자들인과의 윌리엄 토마스와의 쓰나니에츠키에게 10년동안 폴란드 농민연구를 맡긴 것도 같은 이유에서 였다(코저 2016, 750).

그렇다고 이들이 습속 만을 강조한 것은 아니었다. 헐하우스의 경우 직업 소개, 직업교육, 아동 교육 등 실질적으로 물질적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쳤고(박진빈 2006, 48-58), 프랑스에서는 저축금고나 공제조합을 통해 물질적 상황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 주기도 하였다(다나카 2014, 117). 런던의 토인비홀과 인민궁전(People's palest), 함부르크의 국민의 집(Volksheim)의 경우, 건전한 여가를 향유하게 할 방법을 제공하고, 중산층과 노동자 계층의 공동주거를 통해 계급 간 유대감을 증진시키는 것도 주요 활동으로 삼았었다(Lees 2002, 255-286; Grolle 2012).

<sup>7</sup> 단, 독일의 경우 ‘사회개혁(Sozialreform)’이 습속개조 보다는 사회정책과 강한 연계성을 가진다. 1872년 이후 독일 사회개조에 큰 영향을 미친 사회정책학회(Verein für Sozialpolitik)는 물론, 20세기 들어 중요한 역할을 한 사회개혁협회(Gesellschaft für Soziale Reform) 역시 노동보호나 노사중재 등과 관련한 입법을 중심 활동으로 삼았다(von Bruch 1985, 65). 하지만, 유럽과 북미 사이의 네트워크와 활동을 고려하자면 역시 습속개조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할 수 있다.

<sup>8</sup> 르플레를 비롯하여 그와 유사한 관점을 가진 이들은 모랄(*morale*)이란 개념을 사용했다. 이 개념은 개인들이 갖는 일상적 생활규범을 의미하는 도덕보다 더 넓은 범주로, 사람들의 행동이나 생활태도를 규정하는 집합적 정신을 가리킨다(다나카 2014, 77). 하지만 여기서는 ‘습속’이라는 개념을 활용하고자 한다.

도시개조 역시 중요한 사회정치 방식 중 하나였다. 20세기 초 도시계획가들은 도시개조를 통해 사회통합과 사회질서를 도시라는 물리적 공간에 구축해보고자 했다. 대표적인 인물이 미국의 도시계획가 다니엘 번햄(Daniel Burnham)으로, 그는 1893년 시카고박람회장을 설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미화운동(city beautiful movement)’를 시작한 인물이었다. 그가 이 운동을 통해 목표로 한 것은 “시각적이고 미적인 조화를 도시에 조성하여 조화로운 사회질서의 출현을 위한 물리적 필요조건을 만드는 것”이었다(홀 2009, 242-251). 그리고 그의 시카고 도시계획 과정에는 시카고 헐하우스의 대표였던 제인 아담스의 영향력이 존재했다(Smith 2006, 7 Metzger 2009). 같은 시기 영국에서 활약한 에베네저 하워드(Ebenezer Howard)는 전원도시운동(garden city movement)을 통해 이상적 사회공간을 도시에서 구현하고자 했다. 그는 사회학자 스펜서, 크로포트킨, 그리고 페이버언 협회의 영향을 받았고, 물리적 구조나 설계보다는 자신의 도시가 초래할 사회적 유대의 증진 등 사회적 과정을 중시했다. 그래서 자신이 설계한 도시를 사회적 도시(social city)라 불렀다. 이 사업을 물려받은 이들은 토인비 홀과 관련된 이들이었다(홀 2009, 124-146). 영국의 이 전원도시 운동은 프랑스나 독일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프랑스에 이를 도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들은 파리의 사회박물관이었다(Stone 1985, 105; Topalov 1998, 21-29). 이 시기 도시계획가들의 사상과 활동은 습속개조의 네트워크와 긴밀한 관계가 있었던 것이다. 이 외에도 미국의 클라런스 페리(Clarence Perry)는 사회학자 찰스 쿨리(Charles Cooley)의 이론을 받아들여 1차집단을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이자 계층적 유대의 공간으로 근린 주구(neighborhood unit)를 설계했다(日端 2008, 230-248).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장치로 도시의 물리적 공간을 활용하려는 시도는 민족주의를 통해서도 이뤄졌다. 홉스봄(Eric Hobsbawm)의 명저 『만들어진 전통(The Invention of Tradition)』은 민족주의를 고취시키는 대중적 의례와 기념 및 상징물들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사이에 발명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이유가 통치 세력 및 정체(polity)에 대한 대중의 충성을 확보하고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홉스봄 2004, 497-504). 의례와 기념 및 상징물들을 통해 사회 내의 다양한 차이를 상쇄시킬 공통의 정체성의 기반으로 민족을 강조하여 사회통합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민족주의적 사회통합 전략에 있어 도시공간은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 홉스봄이 전통이 발명되었다고 말한 시기는 유럽 국가들의 수도가 새로이 탈바꿈하던 시기이기도 했다(Therbon 2002, 45). 유럽의 수도들이 내셔널 아이덴티티의 형성 및 강화, 사회통합을 위한 장치가 되게끔 한 것이 이 시기의 도시개조였던 것이다. 대표적으로, 1853년부터 1870년까지 파리시장 오스만이 주도한 대대적 개조의 결과 생겨난 대로에는 제3공화국 시기 민족사를 대표하는 인물들의 동상이 들어섰다. 도시개조가 민족이라는 집합적 정체성을 형성시켜줄 ‘기억의 장소(lieu de memoir)’를 조성하는 과정이었던 것이다(하그로브 2010, 403-409). 1850년대 말 시작된 비엔나 환상형 대로 조성사업인 링슈트라쎄(Ringstrasse) 사업은 근대적 입헌군주제 정치를

수행할 입법 및 행정부 건물 신축과 더불어(쇼르스케 2014, 93), 영웅광장(Heldenplatz) 등 민족사적 영웅들을 기리는 공간들의 조성을 핵심적 사업으로 했다(Therbon 202, 44). 로마는 1870년 이후 새로이 통일 이탈리아의 수도가 되었고, 이에 따라 민족정체성이 도시공간에 구현되어야 했다. 그래서 새로운 이탈리아 정부는 ‘이탈리아적’ 건축을 새로이 규정하고 이를 새로운 행정과 사법 건물에 구현함으로써 교황의 공간을 황제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고자 했다(Atkinson, Cosgrove, and Notaro 1999). 미국 워싱턴DC의 경우, 국회의사당에서 워싱턴 기념비, 링컨기념관, 앨링턴 기념비로 이어지는 기념비적 공간인 몰(the mall) 역시 19세기 말에 만들어졌다. 그 목적은 물론 네이션의 위대함에 걸맞는 수도를 만들어 애국주의를 고취하고 내셔널 아이덴티티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이었다(Sonne 2003, 50-88). 런던에서는 1901년 빅토리아 여왕의 장례를 계기로 빅토리아 메모리얼과 애드리털티 아치(Admiralty Arch), 트라팔가 광장으로 이어지는 도심 공간이 만들어졌다. 이 장소의 기능 중 하나는 내셔널 히스토리를 재현하는 것이었다(Smith 1999), 베를린 역시 19세기 말에 근대적 입헌정치의 수행과 기념비들의 공간이 되어 대중을 네이션으로 집합화시키려는 시도가 이뤄졌다(Nipperdey 1976).

## 2) 사회정치의 일반적 과정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회정치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으로 구성되는가? 카우프만(Kaufmann 2003, 29)은 사회정치가 복지제도의 등장 외에도 매우 다양한 과정으로 구성된다고 본다.<sup>9</sup> 즉, 복지국가는 일종의 제도적 결과로, 사회정치를 구체적으로 따져 볼 경우 사회문제의 존재, 문제에 대한 사회문화적 정의(definition), 이를 둘러싼 정치적 길항, 해결을 위한 수단의 선택, 그 결과의 발생 등의 과정으로 구성된다고 본 것이다. 이와 유사한 주장을 전개한 토폴로프(Topalov 1999, 39-40) 역시, 사회정치가 여러 단계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그는 19세기 말 20세기초 습속개조와 도시개조에 종사한 지식인들이 보여준 사회정치의 수행과정에, 해결해야 할 문제영역의 정의, 문제의 원인 확정을 위해 관찰해야 할 대상의 설정, 문제의 원인 특정, 해결책의 도출과 실천 등이 공통적으로 등장한다고 본다.

이들의 주장을 종합해 본다면, 사회정치란 먼저 사회문제의 등장과 그에 관한 인식, 그 원인의 정의와 해결책을 둘러싼 토론과 해결책의 도출, 그리고 해결책의 실천과 결과가 형성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하여,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의 확산은 규범적 개념의 등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제의 원인 정의 및 해결책의 도출과정에서 사회 내 구성원에 대한 분류 및 범주화의 경향이 존재함을 알

<sup>9</sup> Sozialpolitik이라는 개념은 social policy로 영역되고, 사회정책으로 한역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19세기 말 이 개념은 사회문제에 대한 응답, 사회적 갈등의 정치적 중재, 국가의 개입을 통한 사회질서의 창출 등을 의미했다(Lessenich 2014, 179-182), 정책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이 개념은 사회정치로 번역될 수 있다고 본다.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사회문제의 등장과 이에 대한 인식의 확산 과정은 규범적 개념(normative concept)의 등장과 확산을 통해 드러난다. 규범적 개념이란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을 추구하는 주체들이, 위기 감각을 표현하기 위해 그리고 지향하는 해결책을 표현하기 위해 활용하는 개념이었다. 19세기 서구 사회에서 등장한 규범적 개념은 ‘사회적인 것(the social)’이었다(나인호 2000, 676; 다나카 2014; 신명훈 2014, 44-52; 中野 201536-60). 1830년대 프랑스에서 사회문제의 인식은 “사회가 분분해지고, 이전의 사회적 유대가 해체되고, 사회적인 것이 분해되었다”는 인식의 대대적 확산 과정에 다름 아니었다(Rosanvallon 1985, 75). 문제의 해결을 모색하는 이들 또한 ‘사회적(social)’이라는 접두어를 통해 자신들이 지향하는 바를 드러냈다. 사회학, 사회위생학, 사회가톨릭, 사회복음주의, 사회평화협회, 사회정책학회, 사회민주당 등, 학문과 사상은 물론, 시민 결사, 정치협회, 정당 등, 19세기 중반 이후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인 것을 말하는 이들이 등장했다. 다만 같은 개념을 쓰는 주체들이 가진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책의 스펙트럼은 넓다(Raphael 1996).

규범적 개념의 등장은 새로운 범주와 분류의 등장으로 이어진다. 규범적 개념이 문제의 발생원인과 해결책을 파악하는 새로운 틀의 기초를 마련해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적인 것’의 등장은 ‘사회’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세계와 인간을 분류하는 체계와 범주가 새로이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Procacci 1993, 15; Steinmetz 1993, 57).<sup>10</sup> 이 새로운 범주와 분류를 통해 지식인들은 사회문제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해결책을 파악하게 된다. 이를 테면, 사회문제의 등장 속에서 사회라는 공간은 격차와 갈등, 지배와 피지배가 존재하는 공간으로 여겨지게 되고, 사회 구성원들이 가진 다양한 소질과 습속들이 분류되고 범주화되는 가운데 원인이 진단되며, 사회 구성원들의 유대 혹은 연대 같은 개념과 더불어 해결책이 모색되는 식이다.

19세기 당시 사회가 습속개조에 종사한 지식인과 활동가들의 경우 사회구성원들의 습속을 분류의 기준으로 삼았다. 이를 통해 사회문제의 원인을 찾으려 했다. 19세기 말 런던 거주민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빈곤지도를 작성하여 유명세를 얻은 찰스 부스(Charles Booth)는 런던의 빈민이 30%에 달한다고 보았고, 그 중에는 인정할만한 2/3의 인정할만한 빈민(poor-but-respectable)과 1/3의 인정할 수 없는 빈민(disrespectable poor)이 있다고 보았다(Gibson-brydon 2016, 6-9). 이때 부스는 ‘인정할 수 없는 빈민’들을 ‘범죄자 혹은 놈쟁이(loafter)’라는 이름을 붙여 분류했다. 제인 아담스가 활동했던 시카고 지역의 습속개조 활동가들 역시 습속의 도덕성을 기

<sup>10</sup> 분류 및 범주화는 지식이 권력과 결합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18세기에 동물학과 식물학을 시작으로 등장했던 연구 대상에 대한 합리적 분류 및 범주화라는 인식론적 기반은, 19세기 들어 인간에게 적용되었고, 범죄자와 환자에 대한 관찰과 분류는 규율하는 권력의 중요한 지적 도구가 되었음은 잘 알려져 있다(푸코 2012, 191-218; 2016, 222-234). 따라서, 빈민에 대한 조사와 이들의 분류 및 범주화는 이들의 습속을 규율하려는 권력이 수행하는 지적 활동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준으로 존중할만한 빈민(worthy poor)과 그렇지 않은 빈민(unworthy poor)을 구별했다(Stebner 1997, 60). 이렇게 빈민들을 가른 이유는 빈곤에 대한 자기책임 여부와 관련이 있다. 똑같이 빈곤하더라도 습속의 타락으로 인해 빈곤에 빠진 이들과 질병과 사고 등의 불운으로 노동 불능 상태에 빠진 사람들은 서로 다르다고 본 것이다. 전자는 빈곤이 자기책임이라고 생각했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자기책임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 이들의 견해였다(Ruswick 2013, 7).

분류와 원인 진단 이후에 따라오는 것은 해결책의 제시와 실천이었고, 습속을 중요시한 지식인들은 당연히 노동계급과 빈민 등 기층 사회구성원들의 습속 개조를 해결책으로 여겼다. 이들이 목표로 삼은 것은 기층 사회구성원들의 습속이 문화적 인정(respectability)을 얻을만한 그것이 되게 만드는 것이었다.<sup>11</sup> 이 개념은 빅토리아 시대 영국 중산층이 자신들의 문화적 우월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활용한 것으로, 자신들의 근면하다 평가되는 습속을 하층계급의 게으르다 여겨지는 습속 (때로는 귀족의 방탕한 습속)과 구별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구별짓기의 수단이 아니었다. 인정할만한 습속이 개인에게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할 뿐 아니라, 민족단위에서는 ‘자결권’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 당대의 사고였다(하영준 2011, 7-8). 한마디로 이는 중산층의 습속을 중심에 놓고 다른 습속들을 주변화시키는 가운데, 이를 다양한 권리 분배의 기준으로 삼는 지적 관행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습속개조의 실천 과정은 의도와 다른 결과를 불러왔다. 문화적 인정이라는 기본 설정은 중산층의 습속을 중심에 두고 다른 습속을 주변화시키면서 사회 구성원들의 습속에 위계를 도입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습속의 분류와 이에 기초한 해결책의 제시가 사회 구성원들을 새로이 분할하는 효과를 가졌던 점이다. 습속을 기준으로 한 문화적 인정은 배제와 포섭의 경계가 보다 뚜렷해지는 효과를 낳았다.<sup>12</sup> 예를 들어, 르플레학파가 주도한 1889년 만국박람회와 함께 열린 회의에서,

<sup>11</sup> Respectability는 고결함, 체통, 체면, 위신 등으로도 번역된다. 하지만 여기서는 습속개조에서 중산층의 습속의 중심성과 그들에 의한 노동계급의 습속개조 과정에서 노동계급의 습속을 평가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문화적 인정으로 번역하고자 한다. 그리고 하층계급이 의식적으로 중간계급의 습속을 받아들여 자신의 권리와 지위를 신장시키려 하는 행위를 ‘위신의 정치(politics of respectability)’라고 부른다(최재인 2007, 303). 그런데, 이 위신은 중산층과 하층계급 사이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제국과 식민지, 백인과 흑인 등 다양한 집단들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당연히 이 개념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적용될 수 있다(Mosse 1982).

<sup>12</sup> 잠시 배제와 포섭을 정의하고 넘어가자면 다음과 같다.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란 단순한 경제적인 빈곤이 아니라 최소의 부조를 얻을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노동시장에 접근할 권리도 인정받지 못하며, 사회적 네트워크로부터도 멀어지는 등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다양한 권리들이 박탈되는 상태를 말한다(Kronauer 2010, 11). 반면에 포섭(social inclusion) 개념은 경제적으로 열위에 있는 이들의 부조를 얻을 권리 등의 사회적 인정,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 접근할 수 있는 자원의 확충, 역량 강화 등을 가리킨다(Kaufmann 2012, 163-4).

이 개념은 서구에서도 최근 들어 사용되었지만, 그 개념에 해당하는 사례들은 역사적으로

참가자들은 빈민에 대한 부조 문제를 논의했다. 이 때 제출된 주장은, 건강하지 못한 빈민 및 일시적으로 직업을 잃은 빈민은 금전적 도움이나 일자리를 주선하되, 건강하면서도 직업을 계속 갖지 않고 구걸 등으로 연명하는 이들은 구금하거나 강제노동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Topalov 1999, 19). 습속의 분류와 개조의 실천과정은 ‘노동불능 빈민’과 ‘건강 빈민’이라는 새로운 범주를 만들어 냈고, 후자의 경우 경제적 부조나 사회 구성원으로서 노동시장에의 접근권은 물론 사회적 네트워크마저도 박탈하는 사회적 배제 조치의 대상이 된 것이다. 습속개조는 이런 방식으로 사회 내에 새로운 분할을 기입할 수 있는 것이었다.

도시 계획 역시 배제라는 결과로 이어지곤 했다. 도시의 미관과 도덕,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려 했던 시도가 역으로 철거민들을 발생시키고 빈민들을 사회로부터 배제하는 결과로 이어진 사례는 적지 않다. 오스망의 도시개조는 슬럼의 철거와 더불의 도시의 노동계급 구성원들을 시 외곽으로 내보내는 결과를 가져왔다(Caygill 1998, 146; Ayers 2004, 14-15). 비엔나의 링슈트라쎬 개조 또한 노동자들을 도시 중심부에서 도시 외곽으로 이전시켰다(田口 2008, 75-77). 다니엘 번햄의 시카고 도시계획은 빈민을 내쫓고 귀족도시를 만들려는 계획이라는 비판에 직면했으며, 시카고에 이어 추진한 클리블랜드 도시미화 사업 역시 100에이커에 달하는 슬럼에 거주하는 이들에 대책없이 쫓겨나는 결과를 가져왔다(홀 2009, 245-251). 도시개조가 사회의 기층구성원들이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여러 자원에의 접근권이나 사회적 네트워크를 박탈하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민족주의를 활용한 통합 방식은 민족을 근거로 범주를 만들어 안과 밖을 나누며, 경계의 바깥에는 차별이나 배제를, 경계의 안에는 규율·훈육을 가하게 된다(中野 2015, 5-13). 독일 나치 정부가 ‘민족공동체(Volksgemeinschaft)’의 건설을 목표로 민족복지회(Volkswohlfahrt)와 독일민족월동구호단(Winterhilfswerk des deutschen Volkes) 등을 통해 수행했던 사회정치는 대표적인 사례다. 나치가 규정한 ‘민족’은 국민국가 독일의 모든 사회구성원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유전적으로 우수하다 상정되는 건강한 사람들이었다. 장애인을 비롯한 노동불능자는 ‘민족’의 범주에 들지 못했고, 민족복지회의 제도적 안전망 공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신명훈 2015). 내셔널리즘에 기초한 문화적 인정(respectability)이 정상(normal)과 비정상(abnormal)을 가르고 비정상을 사회로부터 배제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Mosse 1982).

이러한 결과는 사회정치를 둘러싼 길항을 만들어 낸다. 즉, 다른 방식의 사회문제 인식과 해결책을 주장하는 그룹이 등장하고, 습속이나 도시를 개조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 이들과의 사이에서 일종의 길항관계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사회정치를 둘러싼 세력들 사이의 길항 과정은 규범적 개념의 해석을 둘러싼 길항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다. 즉, 사회적인 것의 의미를 둘러싼 경쟁관계가 형성되는

---

오랫동안 찾아볼 수 있다. 이 개념을 중세 이후의 역사에 폭넓게 적용한 사례로 Raphael eds.(2009) 참조.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습속을 개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지식인들과 사유 재산을 철폐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식인들 사이에, 사회적인 것을 연대 원리에 기초하여 해석하면서 복지제도의 발달에 사상적 기초를 마련한 지식인들이 존재한다.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Émile Durkheim), 정치가 레옹 부르주아(Léon Bourgeois), 법학자 레옹 뒤귀(Leon Duguit) 등이 대표적이었다(다나카 2014, 193-211, 동즐로 2005, 68-92). 이들에게 사회적인 것이란 “시장의 파괴적 효과로부터 인간 삶의 기초를 이루는 공통 조건을 보장받기 위해” 만든 “복지국가의 가치이자 원리로 기능했던 현실-담론의 복합적 구성물”로 정의된다(김홍중 2013, 2).

사회적인 것이라는 규범적 개념에 대한 다른 해석은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들에 대한 분류와 범주를 달리 구성하게 만들었다. 연대주의자들은 시장원리에 기초한 사회 내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고 적대감이 팽배한 현실에서도 사회를 격차나 적대의 공간으로 인식하지 않았다(Procacci 1993, 24). 뒤르켐은 분업이라는 개념을 적대의 원천이 아니라 상호의존의 원천으로 재구성하였다(동즐로 2005, 96-103). 통합과 연대라는 빈부 간에 발생한 격차가 과연 어디까지 정당한 것인가라는 질문과(Leisering 2013, 2), 사회구성원들이 수용 가능한 불평등의 범위에 대한 토론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Butterwegge 2006, 11). 습속개조를 해결책을 내세운 지식인과 달리 연대를 내세운 이들은 습속의 인정 가능성(respectability)보다는 사회 내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보다 강조하는 경향이 있으며(Lessenich 2008, 30-31), 구성원들에 대한 생존배려(Daseinvorsorge)를 공권력이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주장했다(Reulecke 1997; 市野川容孝 外 2007).

사회 구성원에 대한 분류 및 범주화하는 달라짐은 곧 사회문제의 책임 소재가 달라짐을 의미한다. 그래서, 연대를 주장하는 이들은 습속의 개조를 중시했던 이들이 습속의 분류 및 범주화를 통해 수행하려 했던 책임의 특정 문제에 반대했다. 이들은 리스크를 실업, 질병, 노령화, 산업재해 등으로 대별하였고, 책임소재를 개인에게 묻는 대신 일정한 확률로 사회 내의 누군가는 리스크에 맞닥뜨리게 된다는 불운의 문제로 접근했다(다나카 2014-193-225).

사회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정의는 해결책 역시 다르게 만든다. 리스크가 일정한 확률로 사회 내의 누군가가 맞닥뜨리는 것이 되자, 리스크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졌다. 대신, 사회가 보험의 공동체(société assurantielle)가 되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가 새로운 해결책을 뒷받침했다. 여기에 자본과 노동자 사이의 평화, 재분배의 문제의식 등이 더해졌다. 그 결과로 만들어진 실천은 노사공동납부와 수혜액과 납부액이 비례하지 않는 사회보험제도였다(Ewald 1985, 16; Rosanvallon 1995, 15-75; Schmidt 2012, 7). 이러한 실천의 결과는 소유를 통한 안전보장에서 소유와 사회권에 기초한 안전보장으로의 변화였고(Hatzfeld 1975),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임노동자에게 안전의 보장이 제공되는 임노동사회(société salariale)였다(Castel 1995).

물론 사회보험을 축으로 한 복지국가 시스템의 확산은 사회적인 것을 둘러싼 여러

세력들 간 토론의 결과로만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 전쟁의 준비와 결과는 복지국가의 발달과 확산에 중요한 계기를 이루었다(Procacci 2013; 高岡 2011).<sup>13</sup> 그러나, 전쟁이라는 계기만이 국민 모두를 문화적으로 인정하고 제도적 안전망을 공급받을 권리의 주체로 상정하게 만든 것은 아니었다. 넓은 범위의 사회 구성원들에게 문화적 인정과 제도적 안전망을 공급할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위와 같은 토론의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요컨대, 사회정치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구성된다. 사회문제의 등장과 그에 관한 인식이 확산되고(규범적 개념의 등장), 사회 구성원에 대한 분류 및 범주화를 통한 원인 정의(definition) 과정이 있었으며, 이에 기초하여 해결책이 마련되고 실천이 등장한다. 실천의 결과는 사회적 것을 둘러싼 길항관계에 존재하는 다른 세력에 의해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이들은 규범적 개념에 관한 자신들의 해석에 기초하여 사회구성원을 새로이 범주화하고 원인 역시 새롭게 정의한다. 그리고 이에 기초한 해결책의 제시와 실천이 이어진다.

### 3) 사회정치 모멘트로서의 서울올림픽

올림픽은, 그 중에서도 서울올림픽은 위와 같은 사회정치 과정이 압축적으로 전개되는 모멘트가 될 수 있다. 올림픽을 만든 쿠베르탱의 지적 배경에서 연원하는 올림픽의 기본 성격, 한국의 국가가 가진 이데올로기적 지향, 한국의 국가-시민사회 관계 상 특징, 올림픽이 고조시킬 민족주의가 한국 사회정치에서 차지하는 역할 등의 요소들은, 서울올림픽을 사회정치의 모멘트로 만들 개연성을 높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은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한 사회정치의 고유성을 형성시켜준다.

첫째, 개최도시마다 정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올림픽은 기본적으로 개최도시와 사회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질서를 보여주어야 할 동기를 제공한다. 올림픽이 시각매체와 결합한 뒤 전세계가 청중이 되었다는 이유도 존재하지만, 개최 장소가 질서 있고 통합된 사회를 재현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룰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는 근대 올림픽의 창시자 쿠베르탱의 지적 배경과 그의 스포츠 철학인 ‘올림픽즘

<sup>13</sup> 예를 들어, 1차대전 이후의 급진적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진 독일 바이마르 헌법은 노동계급 전체에 대한 기본적 사회권을 인정했다(Lessenich 2014). 프랑스에서 복지제도의 의무화를 반대하던 사회주의자들과 습속을 중시한 지식인들은 1차대전 이후 전쟁미망인과 상이군인의 존재 앞에서 복지의 의무화를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섰다(다나카 2014, 225-6). 2차대전 역시 마찬가지여서, 2차대전 중 작성된 베버리지 보고서는 안전망 제공을 국가의 의무로 만들어야 함을 주장하였고, 전후에는 ‘사회권’이 국민의 기본권이 되었다.

발리바르는 이렇게 2차대전 이후 사회권에 기초하여 제도적 안전망이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공급되는 국가를 ‘국민사회국가’라 부른다. 왜냐하면 “국민에 소속되어야 사회적 권리들을 향유하고”, 국민 주권에 대한 긍정 위에서 사회적 권리를 인정”하기 때문이다(발리바르 2011, 136). 그는 이렇게 시민권을 기초로 하여 사회적 권리를 나누는 전략이 정상적(normal) 사회 구성원과 그 바깥을 나눈다는 점에서 나치 시기의 그것과 연속성을 가진다고 본다.

(olympism)'이 19세기 말의 사회정치와 관련성을 갖고 있었다는 데서부터 연원한다.

근대 올림픽의 창시자이자 IOC(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의 창시자인 쿠베르탱(Pierre de Coubertin)은 당대 세계의 습속개조 네트워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던 인물이다. 그는 르플레 학파의 일원으로, 르플레가 만든 사회경제학회(Société de l'économie sociale)와 사회평화협회(Union de la paix social)에 각각 1883년과 1886년에 가입했으며, 학회의 기관지 『사회개조(La réforme sociale)』에 글을 기고 하기도 했다(MacAloon 2008, 44-133). 영국과 미국의 습속 개조 기관인 토인비홀(Toynbee Hall)과 헐하우스(Hull House)를 1885년과 1903년에 방문하면서 이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한 인물이기도 했다(Krieger, 2014). 또한, 영국의 엘리트 스포츠 철학인 아마추어리즘에 큰 영향을 받아, 스포츠를 도덕심과 건강한 신체, 그리고 규율에 대한 복종 등을 가르치는 습속개조의 도구로 바라봤다(정준영 2009, 78-82). IOC의 철학인 아마추어리즘 강조와 평화주의에는 습속개조의 네트워크 한가운데 있던 쿠베르탱의 지적 배경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Chatziefstathiou & Henry 2012, 25-27).

당대의 만국박람회 역시 그에게 영향을 미쳤다. 쿠베르탱의 동료들인 르플레학파는 프랑스만 아니라 전세계 습속개조 및 도시개조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었고, 파리 만국박람회장을 사회문제 해결책의 제시 공간으로 삼은 이들이었다.<sup>14</sup> 이들은 1889년 파리 만국박람회의 '사회경제학관(Pavillion de l'économie sociale)'을 통해 각국이 사회정치 성과를 전시하는 공간을 만들었고(Rogers, 2002: 255), 이를 토대로 '사회박물관'을 만들어 서구 지식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sup>15</sup> 쿠베르탱 역시 올림픽 경기장을 각종 사회문제가 해결된 이상적 공간으로 만들려 했다(MacAloon 2008, 154-156). IOC가 올림픽 개최지에 고급스러운 시설들을 요구하고 여하한 형태의 정치적 분쟁도 허용하지 않으려 하는 것은 그러한 쿠베르탱의 철학에 기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역사성은 지속되고 있다. 현재도 올림픽을 개최하는 도시들은 올림픽 시설만 아니라 도시 전체를 꾸며 개최도시와 국가의 문화적 및 경제적 번영,

<sup>14</sup> 1893년 시카고박람회의 경우 이상적 사회를 재현하는 공간으로 박람회장이 활용되었음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시카고 박람회장은 '백색도시(White City)'라 불렸다. 이는 이상적인 도시와 사회를 구현한 박람회장을 보여줌으로써 현실의 시카고, 즉 '흑색도시'와 그곳의 시민들의 습속을 개조하는 동시에 도시개조에 대한 의지를 고무시키려는 목적에서 설계된 것이었다(Burg 1976). 쿠베르탱 역시 이 박람회에 참가하였다(Lucas 1993).

<sup>15</sup> 르플레학파는 사회경제학관의 전시에서 영감을 얻어 영구적인 습속 및 도시관련 지식의 축적과 순환을 목표로 하는 기관으로 사회박물관을 1894년 만들었다. 이것은 하나의 모델이 되어, 스위스 취리히, 이탈리아 밀라노, 미국 하버드대학, 스페인 바르셀로나,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등에도 동명의 기관이 존재했다(Kloosterman eds., 2012, 402-7). 오스트리아 비엔나에도 이를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고(van der Linden and van Voss 2002, 26), 프랑크푸르트에도 사회박물관(Soziale Museum)이라는 이름의 기관이 있었다(Sachße, 1986, 87-88). 기타 사회정치 네트워크에 대하여는 다음을 참조. Topalov(1999), Reinders(1982), Stebner(1997), Weiner(1994), Lees (2002)

그리고 평화적 상태를 전세계에 보여주고자 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한국 국가의 이데올로기적 지향은 서울올림픽을 다른 올림픽보다 사회정치와 긴밀히 결부시킬 수 있다. 1960-80년대 한국의 정권엘리트와 관료기구 등 국가 부문을 구성하는 집단이 가진 이데올로기적 지향은 민족주의에 기초한 발전주의였다(Woo-Cumings 1999, 1). 민족주의 이데올로기가 국가의 지위 상승과 국제사회에서의 인정에 대한 욕망과 강력히 결부되어 있는 것이다.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민족주의는 19세기 말 서구와의 조우 속에서 생존의 위기 감각과 더불어 만들어진 것이었고(김홍중 2016, 286-7), 이는 빠른 발전을 통해 국제사회 내에서 지위를 재구성하려는 야망으로 이어졌다(Black and Peacock 2004, 2272-3).<sup>16</sup> 이러한 민족주의는 1960년대부터 서구에 대한 학습에 기초하여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방법론과 결합했고(Amsden 1989, 5), 경제발전과 산업화가 목표로 하는 지점은 국제사회 내에서 정체성을 재구축하려 하는 것이었다. 산업화와 근대화를 달성한 국가로서 말이다.

스포츠는 네이션의 고유성(distinctiveness)을 인식시키고 국제사회로부터 고유의 정체성을 인정받는 장이었다(Bairner 2001). 특히, 한국 지식인들에게 올림픽은 신체가 근대화되고 문명화된 정도를 확인하는 장으로 여겨졌다(변성호 2013; 천정환 2005). 나아가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올림픽은 각 국가의 근대성을 전세계에 보여주고 서구로부터 인정을 획득함에 있어 중요한 기회로 여겨져 왔다(Black and Peacock, 2011; Collins, 2011; Horne and Manzenriter, 2012). 그리고 올림픽을 통해서 드러날 근대성이란 다른 무엇보다도 올림픽을 계기로 미디어를 통해 보여지는 도시의 경관들과 내한한 (서구 출신의) 외국인 들에게 보여지는 도시인들의 습속이 될 것이다. 서울올림픽이 서울을 비롯한 한국의 도시경관과 도시인들의 습속을 개조하는 계기로 활용될 여지는 충분한 것이다.

셋째, 한국의 국가-시민사회 구성과 이것이 사회정치에 미치는 영향 역시 서울올림픽을 사회정치의 모멘트가 되게 한다. 올림픽이 사회정치의 동기를 마련하지만, 문제의 인식과 해결책에 관한 노력을 수행할 주체가 없으면 사회정치는 원활히 수행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성격상 이런 문제에 매우 능동적인 행위를 보여 왔다.

한국의 국가는 ‘강력하고도 유능하며 집합적 응집력을 가진 관료제’에 기초하고 있으며, 국가는 시장 및 시민사회와 분리되지 않으면서도 자율성을 지니는 ‘배태된 자율성(embedded autonomy)’을 지니고 있다 평가된다. 국가는 전략을 수립하고, 기업은 국가와 독특한 파트너십을 맺가운데 국가의 전략을 수행하며(윤상우 2005, 46-49; 김윤태 2012, 11), 사회는 동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조희연 2010). 사회정치 역시 예외가 아니다 1960-80년대 국가는 산업화 과정에서 맞닥뜨린 사회문제에

<sup>16</sup> 이는 일본 역시 마찬가지로, 19세기에 형성된 일본 내셔널리즘은 일본을 서구 문명세계의 구성원으로 만들고자 하는 욕망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모리 2002, 32-35).

대처하기 위한 대규모 관제 시민사회를 동원한 역사를 갖고 있다. 경제성장을 최우선한 정책으로 인해 제도적 복지 시스템을 통한 대처가 저발달하는 대신(淺井 2012, 윤상우 2008), 국가가 직접 관제캠페인을 조직하여 사회를 관리(social management)하는 것이다(Garon 1998). 새마을운동과 사회정화운동은 바로 그러한 용도에 활용되었다.

이렇게 국가의 구상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사회를 동원하고 이를 위해 관제캠페인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 올림픽을 계기로 한 사회정치는 매우 개연성이 높아진다. 시민사회 내의 이니셔티브가 없더라도 국가가 올림픽을 계기로 관제캠페인을 통해 사회질서와 통합을 창출하고 유지하기 위한 사회정치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Black(2007)과 Shin(2010)의 연구는 발전국가들이 올림픽을 매개로 국가가 비전을 내세우고,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동의를 확보함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올림픽이 민족주의를 고조시킨다는 사실은 별다른 증명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그런 민족주의가 한국에서는 사회정치의 규범적 개념으로 활용되어왔다. 한국에서 사회문제의 인식과 해결책의 모색 과정에서 매우 빈번하게 활용되었던 개념이었던 것이다. 한국의 민족주의 담론은 두 개의 흐름으로 나뉘어 사용되어 왔는데, 박명규(2008)는 이를 ‘국민적인 것’과 ‘민족적인 것’으로 분류했다.<sup>17</sup>

‘국민적인 것’은 국가가 사회를 동원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할 때 활용되는 경향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는 경제 성장을 통해 민족의 생존, 체제 경쟁, 민주주의 등 다양한 과제들이 해결될 것이라 설명하면서 민족의 이름으로 경제성장 우선 정책을 뒷받침해왔다. 그리고 국민 정체성 외에 다른 정체성의 성장, 이를테면 계급의식 같은 것들의 발달을 막음으로써 국가의 사회 동원과 사회 통합에 유리하도록 활용하였다(조희연 2001, 79-80).

반면에 ‘민족적인 것’은 남한과 북한을 모두 범주에 넣으며, 저항적 민족주의와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1960-80년대 당시 저항적 시민사회는 ‘민족적인 것’을 활용하여 발전국가를 비판하는 논리를 내세운 바 있다(조희연 2003, 63-65). 그렇다면 올림픽은 ‘국민적인 것’에 관한 담론을 내세워 사회통합과 질서를 창출하려는 국가와, ‘민족적인 것’을 내세워 이에 반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저항적 시민사회 사이의 길항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올림픽은 사회정치의 모멘트가 된다는 것이다. 박해남(2016, 365-367)은 사회통합이 서울올림픽의 중요한 기획 동기 중 하나였음을 보여준 바 있다.

이상의 네 가지는 서울올림픽이 사회정치의 모멘트가 되게 하는 요소들과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한 사회정치의 고유성을 형성할 수 있는 요소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

<sup>17</sup> 김동춘(2007)은 한국에서 ‘민족’개념이 인간의 기본권 확보를 위한 상징적 결합체이자 붕괴된 공동체의 복원을 위한 사회적 응집체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한다. 서구의 ‘사회적인 것’ 역시 개인의 보호와 사회적 응집에 관한 것임을 고려한다면, 한국의 민족주의는 ‘사회적인 것’의 기능적 대체물로 볼 수 있다.



래서 서울올림픽의 사회정치는 다음과 같이 전개됨을 가정할 수 있다. 올림픽의 기획을 즈음하여 국가는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이것이 규범적 개념(‘국민적인 것’)을 통해 담론화 되며, 올림픽에 맞춰 도시와 사회의 질서와 통합을 연출하기 위한 문제의 원인 정의와 구성원의 범주화 등이 이뤄지고, 이에 기초한 해결책이 실천되는 과정이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의 사회정치 실천 과정은 ‘민족적인 것’이라는 규범적 개념을 내세운 저항적 시민사회에 의해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이들은 규범적 개념에 관한 자신들의 해석에 기초하여 사회구성원을 새로이 범주화하고 원인 역시 새롭게 정의하여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다.

#### 4. 분석을 위한 가설과 질문, 방법, 자료

##### 1) 분석을 위한 가설과 질문

올림픽을 비롯한 메가이벤트들은 다양한 행위자들이 관여하고,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준비 기간을 가지며 효과 역시 장기적이고 광범위하다. 올림픽의 경우 대회 개최 기간은 불과 2주 정도지만, 유치와 준비는 최소 7년이 소요되며, 구상과 사후 처리를 합하면 10년 이상이 올림픽에 투입된다(Roche 2000, 230; Horne 2012, 41). 올림픽에 관련되는 공간도 다층적이다. 올림픽과 관계된 공간은 스포츠와 레저시설만 아니라, 주택과 레크레이션 시설, 노동과 교통시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기 때문이다(Preuss 2004, 72). 관련된 행위자도 마찬가지다. 참가 선수와 임원, 관중만이 아니라, 지역행위자(지방자치체와 시민, 지역 기업 등)과 국내행위자(정부, 국내 미디어, 체육계, 국민 전체 및 기업 등), 나아가 국제적 행위자(국제스포츠기구, 미디어, 스폰서, 시청자)까지 관련 행위자가 된다.

이토록 복잡한 올림픽이지만, 1990년대 이후 메가이벤트들이 보여주는 일정한 경향에 힘입어 Roche(2000) 같은 이들은 메가이벤트 개최과정과 그 효과를 신자유주의 도시정치 과정으로 분석할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들었다. 그에 따르면 메가이벤트는 배경, 기획, 준비, 공연, 단기적 결과, 장기적 영향 이라는 단계로 나뉘볼 수 있다. 올림픽의 경우, 개최도시들은 산업의 쇠퇴와 도시경제구조 전환의 필요성이라는 배경을 공유했다. 올림픽은 글로벌시티로의 도약과 글로벌 자본 및 관광객의 유치라는 장기적 영향을 염두에 두고 기획되며, 준비기간을 통해서는 맞춰 글로벌 자본과 글로벌 엘리트 노동력, 그리고 관광객들을 위한 주거지와 소비공간이 조성된다. 올림픽 이벤트를 통해 국제사회에 그 경관을 보여준다(공연). 이러한 행사는 단기적으로는 도시를 홍보하는 결과를 낳고, 장기적으로는 도시 사회 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sup>18</sup>

<sup>18</sup> 이는 19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국면에서의 올림픽을 염두에 둔 이론이었다. 그래서 이 과

이런 신자유주의 올림픽에 참가하는 행위자는 도시엘리트, 체육문화엘리트, 시민사회, 대중, 국제적 청중 등으로 나뉜다. 도시엘리트들(관료 및 비즈니스 리더)들은 문체적 상황을 인지하고, 타개책의 일환으로 올림픽을 유치하며(Short 2013, 114-116), 기획 및 준비에서의 결정을 거의 독점하고, 대중들을 설득하고 동원한다(Hiller 2000, 440). 체육문화엘리트는 공연 단계에서의 경기 및 문화행사에 관여한다. 시민사회와 대중은 이에 대하여 일련의 반응을 보인다. 시민사회는 기획단계에서 결과 단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표명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며, 대중들의 경우 연출된 이벤트를 소비/선택적 소비 등의 반응을 보인다. 국제적 청중은 다른 행위자들에게 중요한 고려대상이 되는 동시에, 미디어를 통해 올림픽을 소비한다.

이 글은 신자유주의 도시정치를 위한 메가이벤트의 분석 프레임에 앞 페이지에서 가설적으로 제시한 서울올림픽의 사회정치 과정을 반영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서울올림픽의 사회정치 과정을 가설적으로 정의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을 위한 질문을 정리하여 보고자 한다.

서울올림픽의 배경을 이루는 것은 신자유주의 도시화 필요성이 아니라 발전국가의 국제적 지위향상 욕구에 기초한 급속한 산업화와 사회문제의 발생이다. 이러한 배경위에서 국가는 올림픽을 기획하고, 이를 사회질서와 통합을 창출할 계기로 삼는다. 국가는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시민들의 습속을 개조하고 도시 경관을 개조하며, 이 과정에서 사회문제의 원인 정의와 사회구성원에 대한 범주화가 진행된다. 그러한 준비과정의 끝에 올림픽은 개최되는데, 단기적으로는 국제사회에 근대화되고 서구화된 한국을 전시하며, 장기적으로는 서울을 비롯한 도시 사회의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참가하는 행위자와 이들의 행위 역시 서구의 올림픽과는 다르게 가정될 필요가 있다. 재벌과 가깝고 시민사회의 발전을 억압해온 국가가 주도한 올림픽이기 때문이다. 서울올림픽에 참가하는 행위자들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가정된다.

발전국가 한국에서 개최된 서울올림픽은 정권엘리트와 관료엘리트로 구성된 국가가 주도했다. 정권엘리트와 관료엘리트는 문체적 상황을 인지하고, 타개책의 일환으로 올림픽을 유치하며, 기획 및 준비에서의 결정을 거의 독점하고, 대중들을 설득하고 동원했다. 그리고 발전국가답게 기획과 준비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재벌과 협력관계를 맺고 실천을 담당케 하며, 준비과정에서 관제 시민사회를 동원하여 습속개조를 수행하고 도시개조에 협력케한다. 물론 이 과정은 한국의 근대화와 서구화를 경관화

---

정은 구체적으로 따라서, 올림픽 이전에 계획된 프로젝트들이라도 올림픽에 맞춰 변형되거나 그에 맞춰 새로이 의미를 획득하게 된 사업들은 ‘올림픽을 위한’ 것들이 되며 국면적으로 올림픽의 기획과 결과의 하나로 간주된다. 일례로, 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 개최장소는 4군데로, 이들은 저소득층 지역이자 쇠락산업 지역이었다. 그런데 이들 지역에 대한 재개발 프로그램들은 올림픽 이전에 제시된 상태였지만, 본격적 개발은 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올림픽이 아니었으면 훨씬 오래 걸리거나 취소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올림픽 관련 장소로 볼 수 있는 것이다(Chalkley and Essex 1999; Marshall 2000, Coaffee 2011).

하기 위해 특정 사회구성원에 대한 사회적 배제라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를 비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저항적 시민사회다. 이들은 뒤늦게 1980년대 중반 이후 활성화되는 관계로 준비단계 막바지와 공연단계에서 올림픽의 사회정치를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이는 올림픽의 사회정치를 둘러싼 길항국면을 만들어낸다.

이 국면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행위자는 올림픽을 선택적으로 소비하는 (중산층) 대중이다. 이 길항국면에서 국가는 저항적 시민사회의 요구와 대중의 선호를 반영하면서 올림픽 사회정치의 결과를 인식하고 사회정치의 방향을 수정한다. 새로운 사회정치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가설적으로 정리한 서울올림픽의 사회정치 과정은 다음과 같이 네 단계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특정 사회적 상황을 배경으로 한 서울올림픽의 유치, 사회문제의 해결과 사회질서 및 통합의 창출을 위한 올림픽 사회정치 기획, 관제시민사회를 동원하여 수행되는 사회구성원의 습속 개조와 도시 개조, 올림픽의 사회정치에 대한 저항적 시민사회 및 대중의 반응과 국가의 재대응. 이를 네 단계에 대하여 분석을 위한 질문들을 작성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올림픽은 왜 유치되었는가? 구체적인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국가는 어떤 특성을 가졌으며, 이들은 사회를 어떻게 관리해왔는가? 이들에게 스포츠는 어떤 수단이었는가? 올림픽의 유치는 언제 어떻게 논의되었는가? 이 과정에서 국내 사회문제는 어떤 양상으로 드러났는가? 올림픽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개최가 결정되었는가?

둘째, 올림픽의 사회정치는 어떻게 기획되었는가?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올림픽 유치 당시 국가는 어떤 사회정치적 동기를 가지고 있었으며, 어떠한 형태의 사회정치를 전개하려 했는가? 올림픽 기획단계에서 참조한 올림픽은 무엇인가?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는 어떠한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었는가? 국가는 올림픽 준비와 사회 정치를 어떻게 결부시켰으며, 올림픽을 통해 어떠한 형태로 사회를 개조하려 했는가?

셋째, 올림픽 준비과정에서 사회정치는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구체적인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국가는 사회구성원들의 습속을 어떻게 개조하려 하였는가? 이를 위해 동원한 것은 어떤 기관이었는가? 사회구성원들의 습속개조를 위한 기본적인 접근법은 무엇이었으며, 접근방식은 큰 틀에서 몇가지로 구성되었는가? 국가는 개최지 서울의 도시공간을 어떻게 개조하고자 했는가? 도시공간의 개조에 있어 기본 원칙은 무엇이었으며, 이를 위해 선택된 주요 개조 대상지는 어디였는가? 도시개조가 목표로 하는 바는 무엇이었는가?

넷째, 올림픽과 이를 앞세운 사회정치에 대하여 시민사회와 대중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구체적인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올림픽을 둘러싸고 어떠한 국내외적 환경

의 변화가 찾아왔는가? 이는 시민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사회정치에 관한 시민사회의 기본적 입장은 무엇이었는가? 올림픽에 대하여 (중산층) 대중과 (저항적) 시민사회는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이에 대하여 발전국가는 어떻게 재대응하였는가? 이러한 일련의 사회정치 과정은 어떠한 결과를 남겼는가?

## 2) 분석 방법

이 논문이 활용하고 있는 분석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첫번째는 정책분석이다. Weimar and Yining(2017, 343)에 의하면 정책분석은 크게 두가지 범주로 나뉠 수 있다. 첫번째는 세 단계로 이뤄진 문제분석(problem analysis)군으로, 1. 문제의 이해, 2. 목표 설정, 3. 해결방법 선택으로 이뤄진다. 두번째는 다섯단계로 이뤄진 해결책 분석(solution analysis) 군으로, 1. 목표의 영향 범주 설정, 2. 정책 대안 구체화, 3. 대안의 영향 예측, 4. 대안의 영향 평가, 5. 최종 평가 및 제언으로 이뤄진다. 문제분석과 해결책분석이 시간적 및 논리적으로 반드시 선후관계를 이루는 것은 아니고, 상호 소통과정 속에 존재한다. 하지만, 이 글은 서술의 명료성을 기하기 위해 두 분석군이 선후관계를 지닌다 가정하 뒤 정책을 다섯 단계로 나눠보고자 한다. 1. 문제의 이해, 2. 목표 설정, 3. 정책 선택, 4. 정책 수행, 5. 정책의 결과와 영향이 그것이다.

이 글의 전반적 흐름을 정책분석과 연관을 지어보면 1. 올림픽의 개최 구상과 유치를 통해서 문제의 이해와 목표설정 과정을 살펴보고, 2. 올림픽 사회정치의 구상과 실천을 통해서 정책의 선택과 수행과정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올림픽 개최와 결과를 통해서 정책의 결과와 영향을 살펴본다. 물론 정책분석은 이 글 전반을 관통하는 방법론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추진엘리트의 의사결정 및 수행과정을 서술하는 과정에도 마찬가지로 활용된다. 예를 들어, 사회정치와 도시개조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 추진엘리트들의 상황(문제)이해, 목표설정, 정책선택, 정책수행, 결과와 영향 등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담론분석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정책분석에 비하여 주변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이유는 이렇다. 서구권 연구에서 가정하는 담론연구와 문화연구는 기본적으로 특정 주체의 창조적 언어행위 보다는 담론이라는 이름으로 구조화된 조건들 하에서의 발화상황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런 발화 상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율성을 획득한 시민사회와 풍부한 발화자에 의해서 형성된 공론의 장, 그러한 발화의 축적 가운데 형성된 언어의 구조화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권위주의적 성격을 지닌 국가는 이러한 공론장이나 자율성을 획득한 시민사회가 존재하지 못하도록 억압해왔다. 조희연은 국가가 “강력한 통제적 발전국가-고속성장하는 시장-억압된 시민사회”의 구도를 만들었다고 본다. 1980년대 중반에 이 같은 구도는 “강력하나 과거와 같은 통제력을 상실한 국가-거대화된 시장-저항적으로 활성화된 시민사회”로 변한다(조희연 2002, 312-4). 기본적으로 이 논문이

다루는 1980년대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발언권이 억압된 상태였고, 시민사회 내 다양한 발화는 어려웠던 것이다.

그렇지만 국가는 그 특성상 전략적으로 담론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독재국가라 하더라도 약탈국가와 다른 발전국가로서의 특성을 지니기에 설정한 목표에 시민들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sup>19</sup> 이를 위해서는 강압이나 경제적 인센티브만 아니라 동원을 위한 이데올로기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민족주의가 그것이었다. 민족주의는 강력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이데올로기로 쓰였고, 비록 소수지만 저항적인 시민사회의 발화자들 역시 공유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이기도 하다(홍석률 2002; 권보드레·천정환 2012, 306-328). 그리고 개화기로부터 시작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조건 위에서 제한적이거나 담론의 활용은 가능하다. 시민들에게 익숙한 언어를 통해 발전국가가 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 무언가를 설득하고자 할 때 담론이 활용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는 국가가 올림픽의 사회정치 과정에서 시민과 대중을 ‘계몽’하고 또 설득하고자 할 때 발화하는 담론들과, 또 이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담론을 분석하고자 한다. 앞서 말한 사회문제의 인식, 사회문제의 원인 규정, 사회구성원의 범주화 등을 둘러싸고 국가와 시민사회가 생산한 담론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발전국가의 사회정치라는 특성에 주목하면서 사회정치 담론과 발전론 혹은 문명화론이 접합되는 부분에 주목하고자 한다. 국가의 국제적 지위향상 등의 발전 담론, 습속이나 도시경관과 관련한 문명화론 등을 확인함으로써 발전국가 한국에서 이뤄진 사회정치의 특성이 부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3) 분석자료

이를 위해 필요한 자료들은 주로 올림픽과 관련한 자료들로 크게 세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 ① 1차 자료 -

이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역시 정권엘리트와 관료들로 구성되는 국가다. 그리고 올림픽을 준비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참여한 재벌과 관제시민사회 등의 추진엘리트집단이다. 따라서 이들이 올림픽의 준비, 개최, 공연 단계에 대한 제반의 사결정 과정을 보여주는 문서들이 가장 핵심을 이루고, 그 다음으로 추진엘리트가

<sup>19</sup> Peter Evans는 시민사회로부터 공물을 거두어들인데 치중할 뿐 목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국가를 약탈국가(predatory state)로 정의하고, 반면에 국가가 발전목표를 구체화하고 실행에 옮기는 국가를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로 정의한다. 이 틀에서 1950년대 이슬람 정부를 약탈국가, 60년대 이후를 발전국가로 분류한다(구현우·우양호 2012, 245).

사회정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행한 홍보문서들이 중요하다. 물론, 이러한 국가의 사회정치에 대하여 저항적 시민사회의 대응을 보여주는 문서들 역시 중요성을 지닌다. 이상의 자료들이 정책분석과 담론분석의 일차적 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기록원 소장 공문서, 공식보고서 및 백서, 그리고, 저항적 시민사회가 만들어낸 팸플렛과 자료들이다.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있다.

A. 국가기록원 소장 공문서

국무총리행정조정실, 외무부, 안전기획부, 문교부, 체육부 내무부, 보건사회부, 조직위원회 공문, 각 부처 주요업무계획 등.

B. 추진엘리트 발간 보고서 및 백서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공식보고서』, 『서울올림픽대회 서울특별시 백서』, 『서울올림픽사』, 『사회정화운동사』, 『새마을운동』,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국민참여운동백서』, 서울특별시 올림픽시설 및 도시설계 프로젝트 보고서, 『후기 산업시대의 세계공동체 : 서울 올림픽 국제 학술회의』, 『서울 올림픽평화대회종합 보고서』, 『문화예술축전자료집 = 1988 Seoul Olympic arts festival』, 『서울올림픽 개폐회식 대본』, 『서울올림픽과 세계 : 88 서울 올림픽토론회 보고서』 등.

C. 사회정치 홍보자료

『88서울올림픽』, 『화합과 전진의 제전』, 『인류에 평화를 민족에 영광을』, 『서울올림픽 이것만은 알아둡시다』, 『올림픽서울』, 『올림픽뉴스』, 『올림픽소식』, 『올림픽광장』 등.

D. 저항적 시민사회 자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아카이브 소장 팸플렛, 『당신들의 축제 : 88올림픽과 독재정권』, 『올림픽 이후의 정국 전망』, 『스포츠와 정치』, 『올림픽과 조국통일운동, 평양축전 자료모음』 등.

② 2차 자료

1차 자료를 보충하는 자료로, 이 연구는 올림픽의 기획과 준비, 공연 등에 참여한 인사들이 남긴 회고록과 수기 등을 활용한다. 아울러, 중산층의 생활세계를 파악하기 위해 이들에 인기를 끌었던 1980년대의 베스트셀러 및 중산층의 생활세계를 보여주는 소설들을 활용한다.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A. 추진엘리트 회고록 및 증언

최만립, 『도전은 끝나지 않았다』, 전상진, 『서울 올림픽 성공스토리』, 『세계는서울로 - 나의서울 올림픽 9년』, 정주영, 『회고록- 이땅에 태어나서』, 김운용, 『위대한 올림픽』, 전두환, 『전두환 회고록』, 노태우, 『노태우회고록』, 서울특별시, 『임자! 올림픽 한번 해 보지! - 서울특별시 구술사료집』 등.

## B. 서울올림픽 참가자 수기집

『성화봉을 드높이: 서울올림픽에 붙이는 183인의 글모음』, 『서울올림픽 우리들의 이야기』, 『서울올림픽 자원봉사자 수기- 남겨진 이야기들』 등.

## C. 중산층 관련 문헌

이시형, 『배짱으로 삽시다』, 『자신있게 사는 여성』, 김우중, 『세계는 넓고 할일은 많다』, 박영한, 『우리는 중산층』, 윤홍길, 『말로만 중산층』 등.

## ③ 3차 자료

1차와 2차 자료를 보충하는 자료로, 각종 언론 매체를 활용한다. 신문자료로는 『동아일보』, 『경향신문』, 『중앙일보』, 『매일경제』, 『한국일보』, 등을, 잡지로는 『아파트생활』, 『현대주택』, 『샘이 깊은 물』 『월간 말』 등을 활용한다.

## ④ 기타 -

이 글은 서울올림픽의 배경 단계에서 발전국가의 중요 학습대상 올림픽으로 도쿄 올림픽에 대해 간단히 분석한다. 이를 위해 정책분석의 대상으로 삼을 1차 자료로는 『제18회 올림픽경기대회 공식보고서(十八回オリンピック競技大会公式報告書)』, 『제18회 올림픽경기대회 도쿄도 보고서(第18回オリンピック競技大会東京都報告書)』, 『올림픽동경대회 경찰기록(オリンピック東京大会の警察記録)』, 『올림픽준비국 사업개요(オリンピック準備局事業概要)』, 『건설 진행중의 올림픽 관련가로(建設進む 올림픽関連街路: TOKYO 1964)』 등이 있다. 『마을과 생활(町と生活)』, 『도쿄올림픽시보(東京都オリンピック時報)』, 『도쿄올림픽(東京オリンピック)』 등을 담론분석 대상으로 활용한다. 도쿄도가 발행한 『도쿄백년사(東京百年史)』, 『하수도 도쿄(下水道東京)』 등의 자료도 2차 자료로 활용한다.

## 제 2 장 발전국가의 위기와 올림픽 유치

### 제 1절 1960~70년대 발전국가와 사회

#### 1. 발전주의 국가의 행위 기초

##### 1) 경제발전과 국제적 지위향상

1장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한국의 발전국가는 국제사회 속에서의 지위향상을 의식적으로 추구하며, 민족주의는 국제사회로부터의 인정과 지위를 추구하는 형태로 발현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민족주의는 19세기 말 서구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위기’의식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이 민족주의가 스스로의 취약함에 대한 감각과 결부되어 있으며 그 반대급부로 빠른 발전을 통해 지위를 재구성하려는 야망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Black and Peacock 2004, 2272-3).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국가에게 산업화와 경제발전은 서구와의 관계의 재구성인 동시에 내셔널 아이덴티티의 재구축과도 관련이 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조금 독특하다. 서구라는 타자를 상정하여 이와 다른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방식과 서구라는 대타자를 모방하는 가운데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방식이 공존하기 때문이다(Low 1999, 33). 국가의 발전 전략이 가지는 학습의존 근대성이라는 특징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다(Amsden 1989, 5). 다시 말해, 한국의 국가는 서구에 대한 모방과 학습에 기초하여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달성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국제사회 내 지위를 향상시키고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1960~70년대의 경우 한가지 요소가 더해진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를 가른 냉전의 최전선에서 존재하면서 냉전의 한 편(반공블록)에 완전하게 속했다는 점이다. 정일준(2009, 245-6)은 이를 ‘분단발전국가’ 개념으로 설명한다. 총량적 경제성장을 통해 지위를 상승시키고자 하지만, 그 중에서도 냉전적 대결구도 하에서의 (특히 북한과의 대결에서의) 승리를 매우 중요시하고, 이를 통해 반공블록의 모범이 되고자 하는 것이 분단발전국가의 국제사회 내 행위전략이다. 냉전의 최전선에서 북한과의 대결에서 승리함으로써 미국을 비롯한 자유주의 진영으로부터의 인정(지위향상)을 획득하고자 하는 것이다.

1960~70년대 사이 국가가 갖는 국제적 지위향상 및 경제발전에 대한 욕망은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접근법도 독특하게 만들었다. 사회 구성원들을 발전에 필요한 자원으로 상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사회통합을 추구하고 시민사회 내 갈등의



중재하는 것은 1960~70년대 국가의 역할이 아니었다. 이 시기 국가는 발전을 기획하고 여기에 시민사회를 동원하고자 하였다(조희연 2003, 59).

이러한 경제발전과 국제적 지위향상에 사회구성원들을 동원하기 위해, 국가는 발전주의와 민족주의를 중요한 이데올로기로 활용한다. 당시 한국이 조우하고 있는 문제를 민족의 생존 문제 등으로 표현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한 민족주의를 통해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차이보다는 다른 국가와의 차이를 부각시키고, 경제적 발전 역시 총량을 강조했으며, 다수 인구의 빈곤과 민주주의의 탄압 등 다양한 문제들을 바라보는 틀 역시도 국가 단위의 문제로 재구성했다. 해결책 역시 개화기 내셔널리즘부터 사용해왔던 '부국강병'같은 개념을 사용하여 표현했다. 이러한 논리의 귀결은 국가 단위에서의 경제적 성장과 체제경쟁 승리, 그리고 국제적 지위향상이 다른 여하한 문제들도 함께 해결할 수 있다는 실득 논리였다. 이러한 담론들을 통해 국가는 발전이라는 목표에 사회구성원들을 동원하고자 하였다(조희연 2001, 79-80).

요컨대, 급속한 경제발전을 통한 국제사회 내 지위향상의 추구. 그리고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활용한 발전 목표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동원, 이것이 1960~70년대 국가가 가진 기본적 행위의 전략이었다.

## 2) 사회의 동원

한국의 산업화와 근대화는 식민지로의 전략과 해방, 분단 등 다양한 사건들과 더불어 등장했다. 그렇기에 사회문제들이 매우 극적인 형태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이 그러했다. 해방과 한국전쟁으로 인한 인구이동 과정에서 상당 수의 인구가 도시로 유입되면서 1945년 90만명 정도였던 서울 인구는 10년 뒤 157만 5천명으로 급속히 증가한 상태였다. 여기에 1950년대 이후 지속된 농촌의 빈곤과 60년대 초반부터의 경제성장 과정은 서울의 인구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렸다. 1960년 244만명이던 서울 인구는 10년 뒤 550만에 가까울 정도로 증가했고, 20년 뒤인 1980년에는 836만 5천명 수준이 되어 버렸다(서울특별시 2010, 4). 국내 2차 산업 고용의 약 45%와 서비스업 고용의 약 70%를 차지할 정도로 큰 인력시장이었기에 서울의 인구는 그토록 빠르게 팽창했던 것이다.

이런 도시인구의 증가 가운데 도시문제 역시 매우 현저하게 드러났다. 해방 이후 서울로 향하는 이들 중 서울에 특별한 터전이 없는 이들은 2차대전 당시 만들어진 소개공지, 하천변, 산기슭 등 주로 유희 국공유지에 무허가 정착촌을 형성했다. 1966년 당시 조사 결과 127만명 정도가 총 13만 6천동의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고 있었다(한상진 1992, 68). 당시 서울 인구가 380만명이었음을 고려한다면 서울 인구의 1/3이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집 마저도 없이 떠도는 이들 역시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1961년부터 서울시가 운영한 불량인 수용시설인 시립 갱생원이 '세계 최대 규모'라 일컬어지는 것을 보면 말이다(김수현 2010년 8월 27일).

이러한 사회문제와 도시문제를 조우한 국가는 어떻게 이에 대처했는가? 일단 지적 할 점은 당시 서구 국가들과는 매우 달랐다. 2차대전 이후 글로벌 거버넌스를 담당하는 기구들은 1940년대 내내 반복적으로 ‘사회권’을 기본적 인권으로 천명하였다. 1941년 대서양 헌장은 ‘사회적 안전의 보장’을, 1944년 세계노동기구(ILO)의 목적에 관한 필라델피아선언은 모든 인간의 “자신의 물질적 복지와 정신적 발전을 추구할 권리”를, 1948년 UN의 세계인권선언은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 제반의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인간의 기본권으로 승인하였다(Kaufmann 2015, 52). 20세기 들어 사회권이 기본권이 되었다는 마셜의 주장은 이와 같은 정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Marshall 1950, 46). 나아가 UN은 1950년대 후반부터 사회개발 아젠다를 제기하면서 이러한 논의를 제3세계로 확산시키고자 하였다(백승욱·이지원 2015, 355).

이와 달리, 1960~70년대 국가의 사회정치는 서구 국가들이나 국제기구가 표방했던 기본권의 보장이라는 목표 위에서 수행된 것이 아니었다. 발전국가는 시민사회의 대변자 혹은 중재자로 존재하면서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 일반과 다른 성격을 갖는다. 발전국가는 시민사회의 대변과 갈등 중재가 아닌 시민사회를 ‘위로부터’ 지도하고 규율한다. 이러한 국가의 역할 설정은 박정희를 비롯한 권력자들이 사회를 개조하겠다고 생산한 담론들에서부터 드러난다. 이들은 습속개조에 기초한 사회정치를 구상하고 이를 담론화하여 선전했다.

1기 발전국가를 구성한 박정희 정권은 쿠데타와 직후부터 대중의 습속에 개입하여 이를 바꿔내려는 시도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박정희가 이끄는 군정은 혁명공약 총 6개 조항 중 제 3조에서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 도의와 민족정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청신한 기풍을 진작할 것”을 공약했다. 당시 사회구성원들의 습속에 문제가 상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개조할 것을 목표로 내세운 것이다.

실제로 군인들은 매우 빠르게 사회구성원들의 습속을 개조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들어갔다. 이들은 쿠데타 일주일 뒤인 1961년 5월 24일부터 국가재건최고회의 산하기구로 ‘재건국민운동’ 조직을 시작했다. 이로부터 약 보름 뒤인 6월 12일에는 법률로 “재건국민운동에 관한 법률(제 622호)”을 공포했고, 260만명의 회원을 가입시킨 조직을 7월 20일에 출범시켰다(전재호 2010, 53). 1950년대부터 존재했던 민간 사회운동세력의 아이디어를 관제캠페인으로 만든 이 운동은(허은 2003, 29), “국민혁명을 목표로 하는 인간개조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1. 승공민주 이념, 2. 내핍생활, 3. 근면정신 고무, 4. 생산 및 건설의식 증진, 5. 국민도의 양양, 6. 정서관념 순화, 7. 국민체위 향상이라는 7개 항목을 실천방안으로 내걸었다(한국군사혁명사편찬위원회 1963, 1704). 그리고 몇 달 뒤에는 자신들이 “사회의 생활혁명”을 일으켜 “한국의 사회구조와 생활양식을 근본적으로 변혁”시키고 있음을 자부했다(민주한국 혁명청사편찬위원회 1962, 110).

여기서 우리는 이 관제캠페인의 목표가 습속을 개조하는 것임과 이를 경제 발전에

동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국민도회의의 향상’과 ‘정서관념의 순화’ 등을 통해 습속을 개조할 것임을 목표로 삼음과 동시에, ‘근면정신의 고무’, ‘생산 및 건설의식의 증진’이라는 목표를 통해 개조의 지향점이 경제 발전에 있음을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발전국가의 습속 개조 전략은 경제발전을 위한 사회 동원의 전략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sup>20</sup>

## 2. 발전국가의 사회 동원 전략

### 1) 문제의 집합화, 해결의 개별화

발전국가의 엘리트들은 당시 사회가 혼란하고 무질서하다고 생각했고, 이것이 당대 사회가 조우하고 있는 경제적 빈곤의 원인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사회문제의 원인을 사회 구성원들의 습속에 귀인시키면서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이 습속을 집합화시켰다. 일례로, 쿠데타 직후 박정희는 제2공화국을 “책임감을 상실한 가짜 자유가 방종과 혼란과 무질서와 파괴를 조장”한 사회적 무질서의 시기로 규정했고, 그 원인을 우리나라의 인구 대부분이 역사적으로 지녀온 “자각 없이 다른 사람에 끌려가는 사대주의적 습성”에서 찾았다(박정희 1961(2005), 27).

이런 국가에게 ‘사회’란 집합적 차원에서 대중의 습속이 존재하는 공간이자, 공권력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개입해야 할 객체이자 대상으로 여겨졌다. 사회를 ‘정화’의 대상으로 본 것은 그 논리적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이상록 2006, 339-351).<sup>21</sup> 이들에게 사회문제란 개인과 국가 사이에서 양자를 중재하는 존재자로서의 사회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social question)가 아니라, 대중의 습속의 집합인 사회라는 공간을 정화하게 위해 제거되어야 할 문제(social problem)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문제의 해결책으로 국가는 경제발전에 필요한 습속을 제시했고, 개별 사회 구성원들이 새로운 습속을 몸에 지닐 것을 요구했다. 습속이 개조된 개인을 늘린다면 사회 역시 개조된다는 것이 이들의 발상이었다. 정권이 원하는 습속은 국가가 주도하는 경

<sup>20</sup> 보날(Louis Bonaled)과 메스트르(Joseph de Maistre), 생시몽(Henri de Saint-Simon)부터 콩트(August Comte), 르플레(Frédéric le Play), 케틀레(Adolphe Quételet), 뒤르켐(Emile Durkheim)에 이르는 사회사상가들과 사회학자들의 공통점은 습속(moral)이 사회를 이루는 핵심적 요소라고 본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본다면, 습속의 개조는 사회의 개조로, 습속의 동원은 사회의 동원으로 충분히 바뀌 쓸 수 있다 판단된다. 여기에는 사회 내부의 대립 혹은 모순에 의해 사회문제가 성립한 것이 아니라, 사회 그 자체가 본래 문제적인 것으로 보는 일본 사회과학의 ‘사회’ 관념의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이시다 2003, 75).

<sup>21</sup> 여기에는 사회 내부의 대립 혹은 모순에 의해 사회문제가 성립한 것이 아니라, 사회 그 자체가 본래 문제적인 것으로 보는 일본 사회과학의 ‘사회’ 관념의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이시다 2003, 75). ‘평랑’이라는 개념 역시 마찬가지로, 20세기 초반 일본에서 미(美)·건강·위생 등을 표현하는 개념으로 도시 및 사회와 쌍을 이루어 활용되었다(友常, 미상)

제발전에 동원이 가능한 생산성, 근면성, 이윤개념 등을 골자로 했다.

문제의 해결을 개별화하는 아이디어는 1960년대 후반부터의 사회개발 논의에서 잘 드러난다. 1960년대 UN에서 사회개발 논의가 확대되면서 한국 정부 내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었다(백승욱·이지원 2015, 353-355). 그 결과 1968년 『사회개발 기본구상』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사회보장에 대한 투자를 강조했던 UN의 주장과 달리 한국에서의 ‘사회개발’ 논의는 (정부가 강권하는) 새로운 의식과 행동을 정착시키기 위한 ‘정신개조’와 ‘사회 규율확립’에 관한 논의가 되었다(허은 2010, 218-222). 이듬해 나온 『사회개발 장기전망』 역시 ‘경제발전에 부합할 수 있는 정신자세의 확보를 중기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허은 2010, 225), 1974년 발간된 『사회개발 - 부분별전망안』 역시 사회개발의 역할을 ‘국민총화’에 두고 ‘사회기풍의 순화를 통한 정신기반의 확립’을 통해 이를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허은 2010, 232-234). 그리고 국가가 정신개발 추진 기구를 만들어 민간사회단체들을 교화하고 국민들의 가치관을 확립하는 것이 그 실천 방안이었다(백승욱·이지원 2015, 375)

1970년대를 대표하는 관제캠페인이었던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국가는 개인들이 가져야 할 습속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국가는 농촌이 빈곤한 문제의 원인이 농민들의 습속에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각종 사업은 마을 단위에서 이뤄지도록 하면서도 담론적으로는 ‘자력갱생’ 및 ‘자조(self-help)’의 원칙에 따라 개별적 차원에서 습속을 개조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조했다(이용기 2012, 76-78). 이런 발전국가가 상정한 의식 개조란 ‘잘사는 것’ 혹은 ‘빈곤으로부터의 해방’에 대한 의지로 정의될 수 있다(내무부 1980, 64-69). 발전국가는 의식 개조를 통해 근대화 와 풍요에 대한 지향성을 갖고 경제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습속을 가질 것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요구했고(허은 2010, 220), 생산성, 근면성, 이윤개념 등을 습속화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일례로, 새마을운동에 참여한 이들의 수기를 보면 농민들을 근대적 시간 및 이윤 개념을 내면화한 자본주의적 개인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있었음이 드러난다(최인이 2011, 123-134).

문제해결을 개별화시킨 것은 발전국가가 상정한 특유의 습속관념에서 발현하는 논리적 전개였다. 습속에 관한 중요한 이론가인 부르디외는 ‘아비투스(Habitus)’개념을 통해 구조적·무의식적 차원과 개인의 실천이라는 두 차원을 모두 포착하고자 했다(정선기 2011, 161-165). 하지만 발전국가는 습속을 집합적 수준에서 파악하면서도 이를 구조나 무의식으로부터 분리시켰다. 얼마든지 의식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으로 본 것이다. “바른 생각과 바른 바른 말을 행동화 하고 생화화하며 습관화하여 인격화될 때 우리의 운명이 개선된다”는 어느 새마을운동 관련 책자의 표현이 바로 이 주의주의(voluntaristic)적 습속관을 보여준다(김보현 2014, 557). 박정희 역시 정신의 근대화를 통해 사회윤리를 확립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강정인 2012, 47). 발전국가는 ‘의식’과 ‘정신’이 습속의 하부구조를 이룬다고 보았고, 이에 대한 개조를 통해 습속이 바뀔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습속관념의 차이는 사회통합 관념의 차이를 부른다. 발전국가의 사회통합은 사회

내 서로 다른 집단의 구성원 사이에 경제적 및 문화적 차이가 있음을 이해하고 그 차이가 심각한 위계관계로 비화되지 않도록 통합하는 방식이 아니었다. 따라서 직업적 차이에 기초하여 계급간 연대의식을 고양한다거나 재분배적 요소를 가미하여 사회보장을 통해 노동계급과 빈민층을 사회로 포섭하는 전략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즉, 사회 구성원 다수에게 문화적 인정과 제도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회를 통합하려 하지 않은 것이다.

발전국가는 개념에 있어서도 ‘통합’보다는 ‘단합’, ‘단결’, ‘협동’, ‘총화’ 같은 개념을 주로 사용하였다. 이는 서구의 사회정치처럼 사회 구성원 사이의 격차를 기초로 이를 시정하려는 움직임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습속의 동일성을 확산시키려는 발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발전국가의 주문에 맞춰 ‘의식’ 혹은 ‘정신’을 개조하고 그에 따라 습속을 개조하며, 발전국가가 정한 문화적 인정의 테두리 내에 드는 습속을 가진 인구를 다수화함으로써 생겨나는 습속의 동일성에 기초한 사회통합을 발전국가의 사회정치는 상정했던 것이다. ‘너와 나의 구별이 없는 운명 공동체’의 ‘일치단결’이 발전국가의 사회통합 이상이었다(김보현 2014, 561). 일례로, 박정희는 다음 인용문을 통해 발전국가의 ‘협동’ 개념이 서구의 ‘통합’과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고 있다.

“일찍이 우리의 선인들은 정치를 부와 명예 같은 사회적 가치를 나누는 분배의 과정이 아니라, 협동의 노력에 의해 개인과 국가의 힘과 부를 생산하는 창조의 과정으로 보았고, 오랫동안 참되고 성실한 도의의 정치를 숭상하는 전통을 길러 왔다. 특히 우리 선조들은 ... 주위의 오해를 받게 될 때에는 목숨을 버려서라도 자기의 결백을 밝히는 고귀한 윤리를 실천해왔다. 우리가 이러한 정치의 목적과 도의를 되새겨 나갈 때 우리는 정치의 시장화를 막고 신뢰와 공감의 유대에 입각한 보다 깨끗하고 보다 생산적인 민주사회의 기반을 넓혀 나갈 수 있을 것이다(박정희 1978, 77-78).”

요컨대, 분배를 둘러싼 사회 내 갈등을 인정하고 이를 중재하는 것이 것이 서구 사회정치였다면, 손해를 입더라도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스스로와 자신의 지역공동체, 나아가 ‘민족’ 공동체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동하는 주체를 만들어 내는 것이 발전국가의 사회정치였다.<sup>22</sup> 1968년의 국민교육헌장을 통해서도 이것이 잘 드러난다. 산업화에 따른 사회적 적대와 계급 갈등을 넘어서고자 하는 의도 하에 만들어진 이 헌장은, ‘민족중흥’에 기여할 주체로 사회구성원이 스스로를 호명할 것을 지

<sup>22</sup> 이는 농촌새마을운동뿐 아니라 공장새마을운동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발전국가는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새마을운동의 슬로건을 농촌과 공장 모두에 활용하였다. 그러면서 노사 ‘협동’을 강조하는데, 협동이란 기업이 노동자를 가족처럼 여겨 복지를 향상시키고, 노동자는 기업은 자기 집같이 여기면서 열심히 일하는 ‘가족’의 유비를 활용한다(김동노 2010, 34-5). 여기서도 노-사 간 이해관계의 차이가 인정하는 대신, 이를 넘어서는 주체성의 형성을 통한 문제해결이 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하고 있다(황병주 2005, 137-143). 민족이라는 이름의 공동체 안에서 보장받아야 할 몫 보다, 민족이라는 존재에 대해 기여해야 할 몫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 2) 탈정치적·비서구적 습속의 강조

앞의 인용문에서도 나타나지만, 박정희는 사회통합 아이디어의 근거를 전통에서 찾았다. 이와 더불어, 1960년대 당시 습속의 개조를 위해 부정적으로 접근했던 ‘민족’ 개념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꾼다. 정권의 필요에 따라 문화적으로 인정 가능한 범주를 설정하면서 ‘국민적인 것’에 관한 개념을 활용했던 것이다.

1960년대 당시 정권은 ‘민족’ 개념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으로 접근했다. 사회 구성원들의 습속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그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 박정희는 사회구성원들의 습속을 인종화시켰다. 그는 경제력을 중심으로 선진국과 후진국을 나누는 1950년대 후반 발전주의 이론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한국 사회가 빈곤하고 후진적이라고 판단했다(김종태 2015, 115-122). 그리고 “후진 민족들은 ‘게으르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면서 습속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았다(박정희 1962(2005), 63). 박정희가 생각하는 한국 ‘민족’의 습속이 가진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다. 사대주의와 자주정신의 결여, 게으름과 불로소득관념, 개척정신의 결여, 기업심의 부족, 악성적이기주의, 명예관념의 결여, 건전한 비판정신의 결여 등 다양했다(박정희 1962(2005), 62-73).

이에 더하여, ‘민족’ 개념을 통해 인종화된 습속을 역사화 시킨다. 각주 10에서도 설명되듯이 일제 식민권력은 노동하지 않는 식민지 조선인들의 습속을 양반이 지배한 조선사회의 역사에서 찾았다. 박정희의 판단 역시 이와 동일했다. “되도록 일하지 않고 손에 흙을 묻히지 않는 불로소득의 양반 경제 관념이 무사 안일주의를 길러 내어 게으른 민족성을 이룩했다”는 그의 말은, 현재적으로 문제화되어 있는 습속들이 ‘민족’의 역사 속에서 형성되었다고 보고 있음을 드러내 준다(박정희 1962(2005) 101). 이렇게 문제 많은 습속을 ‘깨끗이 청산하고 건전한 국민도(國民道)를 확립’하여 ‘사회를 재건’하겠다는 것이 그의 야심이었다(최연식 2007, 47). 발전국가는 습속 개조의 의의를 부각시키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의 습속을 문화적으로 무시하는 데서 출발한 것이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묘사되던 ‘민족’ 개념에 대한 접근법은 긍정적인 뉘앙스를 띄게 되고, 정권이 인정할만한 주체상을 호명하기 위해 동원되기 시작한다. 민족의 습속에 대한 재평가도 이뤄진다. 1962년도 당시 ‘자립성과 주체성’이 결여되었다는 평가는 1971년 들어 독창적이고 고유한 민족문화를 만들어 냈다는 평가로 바뀌었고, ‘나태, 안일, 무사주의’가 습속의 하부구조인 ‘정신’에 존재한다 했던 평가는 ‘창조, 협동, 애국’이 ‘홍익인간과 화랑도의 정신’이라는 평가로 바뀌었으며, ‘악의 창고 같은 역사는 차라리 불살라’ 버리는 게 좋다는 주장은 ‘문화활동의 전통을 더욱 발휘시켜야’ 한다는 주장으로 바뀌었다(황병주 2005, 163). 이제 ‘국민적인 것’에 대한 담론들은 발전

국가가 허용한 문화적 인정의 범주를 보여주게 된다.

그런데, 이는 문제를 집합화하고 해결을 개별화했던 범주의 변화를 동반한 것이 아니었다. 즉, 문제를 내재한 집합이었던 ‘민족’의 구성원 전반을 문화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화한 것이 아니었다. 이는 기념비적 공간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전형적으로 드러난다. 유럽 여러 국가들은 19세기 말 당시 사회 갈등을 배경으로 국민통합을 위해 다양한 기념비적 공간을 만든 바 있다(홉스봄 2004, 497-504). 그런데 1960~70년대 국가는 전통 그 자체, 민족 그 자체에 대한 기억 혹은 기념보다는 영웅화된 역사인물에 대한 기억과 기념에 집중했다. 1966년부터 10년간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된 현충사의 성역화를 비롯, 광화문 이순신 동상 건립, 덕수궁 세종 동상 건립, 세종대왕기념관 건립, 1972년 경주종합개발계획 수립, 73년 경주 화랑교육원 건립, 1974년 충무수련원 건립, 1976년 사임당교육원 건립 등의 작업이 이어졌다(최연식, 2007, 64-65; 최광승 2014; 김수진 2008). 영웅적 개인들에 대한 강조를 통해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일치단결’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했던 것이다(홍석률 2002, 193). 이런 식으로 ‘민족 영웅’들을 알리고 이들에 대한 기념사업을 통해 민족주의적 주체 생산을 시도한 것이 박정희의 역사 활용 방법이었다. 반면에, 민족을 구성하는 이들 전반을 기념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에 관한 기념공간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1966년 박정희는 ‘민족주체의식과 맑고 명량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민족문화센터”의 건립을 제안했고(최연식 2007, 62), 1974년에는 ‘민족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문화공보부를 통해 재추진한 바 있다(『매일경제』 1974년 10월 2일, 7). 하지만, ‘민족’ 그 자체를 상찬하는 이 공간은 결국 만들어지지 못했다. 사회 통합을 위해 구성원들을 사회 구성원들을 모두 포괄하는 작업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민족’에 대한 강조는 권위주의적 발전국가가 시민사회의 ‘의사’를 통제하기 위해 활용된 측면 역시 강하다. 대통령의 임기를 늘려갈수록 박정희는 ‘민주주의’에 수식어를 붙여 ‘민족적 민주주의’라든가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썼다(강정인 2012, 65). 즉, 민주주의라고 하는 서구적 가치와 자신의 권위주의 통치가 충돌하자 수식어를 붙이면서 이 둘을 개념적으로 화해시킨 새로운 개념을 만들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이 두 개념은 동등하지 않았다. 박정희에게 ‘민족’은 ‘민주주의’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가치였다. “자주와 자립의 민족의식을 가진 후에 올바른 민주주의를 가질 수 있다”는 발언이 이를 드러내주고 있다. 이에 더하여, 군사적 성격을 띤 ‘민족 영웅’에 대한 강조와 유교식 충효사상의 보급을 통해 발전국가는 체제와 ‘영도자’에 충성하는 주체를 만들고자 했음은 잘 알려져 있다(전재호 2000; 90-107; 김동노 2010, 327-331).

‘민족’에 대한 강조는 또한 습속통제를 위해서도 활용되었다.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생겨나는 습속의 급변에 대하여 박정희는 매우 비판적이었다. 그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정신의 불안과 사회의 긴장’을 만들어 냈고, ‘퇴폐풍조’와 ‘사회적 혼란’이 등장하고 있음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다(황병주 2011, 158). 1970년대 들어 국가는 사회정화 작업의 일환으로 대중문화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미니스커트와 장발에 대

한 단속이 대표적인 사례다(이상록 2006). 이 때 도시에서 유행하는 서구 대중문화는 퇴폐적 습속의 상징처럼 여겨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60년대 초반해도 농촌의 후진성과 무지를 비판했던 박정희는(황병주 2016, 325-6), 농촌을 새롭게 평가하기 시작한다.

“지금 농촌에서 새마을 운동이 새바람처럼 거세게 불고 있는 데도 도시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중략) 도시에 있는 젊은이들이, 농민들이 지금 땀 흘리며 일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무슨 고고춤을 추고 술을 먹고 얼굴이 벌거니해서 고성방가를 하니 이런 행위가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말에도 서울 근교에 나가 보니까 산 위에서 떠드는데 올라가 보지는 못했지만 학생인지, 하여튼 젊은 사람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이런 것을 단속하라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잘 살아 보기 위해서 농민들이 새벽부터 밤 새카말 때까지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일하고 있고, 특히 도시의 처녀같은 한창 멋내고, 몸 가꾸고, 땀시 부릴만한 그런 나이의 학교 갓나온 시골 처녀들이 샴을 들고, 곡괭이 들고, 머리에 돌을 이고, 내 고장을 한번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 보려고 열의를 올리고 있는데, 그 옆에 도시에서 온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어디 대한 민국 국민이 아닌지 어디 족속인지 모르지만, 부락 사람들의 열의와 새마을 운동에 찬물을 끼얹는 그러한 행동만이라도 안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왜 조용하게 놀지 못하고 그런 짓들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박정희 1972년 5월 18일).”

1970년대 들어 박정희는 도시를 퇴폐한 습속이 대중문화의 형태로 나타나는 공간으로, 농촌을 생산성과 근면성 등 정권이 원하는 바 습속을 개조한 주체들의 공간으로 판단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그런 농촌의 습속은 ‘국민적인 것’이었다. 박정희는 이러한 농촌의 습속을 전통에 기반한 ‘민족 고유의 것’으로 보았다. 농촌에서 새마을운동이 성공한 것은 “우리 민족이 오랜 역사를 통해 간직해온 전통의 슬기는 농민들에게 가장 순수하게 보존되어 있었고, 그것이 새마을운동을 통해 오늘에 재현”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는 해석했다. 1970년대의 박정희에게 농촌이란 생산적이고 근면한 습속의 공간이자 ‘국민적인’ 공간이었고, 그들의 습속은 “우리 겨레가 일찍부터 깨닫고 실천해 온” 것이었다(박정희 1978, 97-98).

이런 인식 위에서 국가는 서구적 습속이 자리잡는 중요한 통로인 대중문화를 통제함으로써 도시인들의 습속을 통제하고자 했다. 1975년 6월에는 ‘건전한 국민생활과 사회기풍 확립’을 위해 가요 공연에 대한 심의를 대폭 강화하였고(『경향신문』 1975년 6월 5일, 7면), 12월에는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을 명분으로 라디오 방송국들로 하여금 ‘퇴폐한’ 외국 팝음악을 방송하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들어선 것은 민요, 가곡, 군가 등의 ‘건전가요’였다(『경향신문』 1975년 12월 9일, 8면). 도시적=서구적 습속의 퇴폐성을 대신하여 민족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1970년대의 ‘민족’에 대한 강조는 사회 구성원 전반에 대한 문화적



인정의 기초를 마련한 것이 아니었다.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문제를 해결할 필요성과, 권위주의 정치의 강화를 위해, 그리고 새마을운동의 성공에 힘입어 농촌 지역 구성원들의 습속을 강조하기 위해 내놓은 것이었다. 이는 발전국가가 문화적으로 인정할만한 주체를 무엇으로 설정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권위주의에 순응적인 동시에 경제성장에 활용 가능한 습속을 지닌 이들이었다. 민족이라는 개념은 그 구성원 전반을 통합하는 도구가 아니라, 국가가 인정할만한 습속을 가진 주체를 정의하는 도구 쪽에 가까웠던 것이다.

### 3) 사회구성원의 분할 - 사회적 배제와 규율, 그리고 포섭의 공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가는 ‘국민적인 것’을 사회 구성원 전반의 통합 도구가 아니라 국가가 인정할만한 주체를 정의하는 도구로 활용했다. 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사회 구성원들을 선별하는 도구로 활용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국민적인 것’의 선별적 원리는 담론 차원에 그친 것이 아니었다. 문화적 인정의 테두리를 좁혀 놓았듯 제도적인 안전망 역시 선별적 원리에 기초하여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사회 구성원 간 새로운 격차의 등장을 승인했다. 심한 경우 국가 스스로가 문화적으로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사회로부터 배제하는 구성원도 있었다. 그렇다면, 위에서 언급해왔던 담론들과 새마을운동 등의 관계캠페인 같은 사회에 대한 규율과 더불어 사회적 배제 및 포섭 장치가 존재하는 것이 1960~70년대 사회정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사회에 대한 규율은 앞에서 언급한 바, 국가의 사회정치에 의한 격차의 탄생과 사회적 배제 및 포섭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자본주의적 의식과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습속을 강조한 개조 전략은 새로운 격차의 등장을 승인했다. 새마을운동은 주로 농촌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으며, 농가의 소득 향상을 추진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고 인구의 도시유입을 막으려 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농촌 마을 사이에 발생하는 격차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박정희 새마을 운동 과정에서 농촌 부락 사이에 빈부격차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았으며, 그 차이는 주민이 부지런하고 협동심이 강한지 아니면 게으르고 단결이 안되는지 여부에 따라 생겨나는 것으로 해석했다(황병주 2011, 171). 그리고 새마을 운동을 통해 ‘경쟁의 기운’이 확산되어야 이 운동이 성공한다고 보았다(김보현 2014, 566). 칼 폴라니는 ‘사회적인 것’이 경쟁을 위주로 한 시장과 다른 호혜성이나 연대의 논리를 가진 것으로 설명한다(안정옥, 2013; 진희선·송재룡 2013). 그리고 2차 대전 이후 서구의 사회정치는 이 원리에 기초하여 사회의 통합을 추구해왔다. 이와 달리 발전국가의 사회정치는 협동과 경쟁이 함께 강조된다. 그렇기에 협동은 매우 강한 개별성을 띄는 것이다.

구성원들 사이에 발생하는 격차를 넘어설 수 있는 통합의 원리는 부재했다. 새마을 운동 과정에서 ‘자조’와 ‘근면’에 ‘협동’같은 개념을 더한다거나, ‘단합’같은 집합적 가치를 강조하는 개념을 활용하기는 했다. 하지만 이들 개념은 어디까지나 개별화된 문제해결 원리에 기초한 것이었다. 새마을 운동은 ‘자조·자립(self-help)’ 정신

으로 자신과 가족을, ‘협동’ 정신으로 마을과 고장을 발전시킬 것을 주문했다(김보현 2014, 564). 여기서 ‘협동’은 ‘자조’와 ‘자립’의 확장에 다름 없었다. 협동 역시 구성원의 자발성에 기초하여 만들어지는 주의주의적(voluntaristic) 원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황병주 2005, 150). 이 과정에서 연대의식 같은 것이 전혀 발휘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새마을 운동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은 평균 1,700평에 이르는 땅을 마을에 기부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김동노 2010, 339). 그러나 이는 마을이라는 지역 내에 국한되었다. 게다가 전통적 공동체정신을 강조하기는 했지만, 공동체 내의 ‘불행한 자(les misérable)’를 연대 책임지던 공동체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하지 않았다. 개인단위의 주의주의가 마을 단위로 확장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국가는 사회 구성원의 다수를 포괄할 수 있는 문화적 인정의 테두리를 만들지 않았고, 제도적 안전망 역시 선별적으로 공급했다. 게다가 어떤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문화적 및 물리적으로 배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1961년도에 정권을 잡은 군인들 역시 사회의 타자로 여겨져 오던 이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조치부터 시작했다.<sup>23</sup> 이 때 군인들은 “깡패와 소매치기, 부랑아” 사회의 타자들을 ‘일소’한다는 표현을 활용했으며(김아람 2011, .348-349), 이를 통해 ‘사회를 명랑화’했다고 홍보했다(공보부 1962, 136), ‘사회를 오염시키는 오염원 또는 감염원으로 사회의 타자들을 인식했던 것이다(김근배 2010). 일종의 청소라고 할 수 있는 이 조치 한 편에는 ‘재건’이라는 조치가 있었다(이소영 2016, 35-38). 1961년 단속된 부랑인들과 윤락여성 등을 대상으로 합동결혼식을 통해 정상가족을 구성하는 모습을 연출하는가 하면(김아람, 2015), 이들 중 일부를 ‘개척단’이나 ‘국토건설단’이라는 이름으로 서산 지역 간척사업에 투입한다(박홍근 2015. 239). 념마주이 역시 근로재건대라는 이름으로 경찰의 관리하게 들어가게 된다(정수남 2015, 16-7). 국가

<sup>23</sup> 한국 근대의 사회정치에 있어 상당히 오랜 지속성을 지닌 전략 중 하나는 식민지기부터 시작된 사회적 타자에 대한 배제였다. 식민권력은 당시의 사회문제를 인종주의적 사고에 기초하여 파악하였고, 문제의 원인들이라 여겨지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도시공간 및 사회공간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대처하였다. 식민권력은 초기부터 노동하지 않는 이들을 ‘부랑인’으로 범주화하면서 이들을 단속했다(한귀영 1997). 그리고 이 문제를 역사적으로는 ‘무위도식’하는 양반들이 지배한 조선 사회의 습속에서 기인하고(유선영 2011), 현재적으로는 도덕관념이 박약한 ‘선전적 불량분자’들에게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았다(정혜정 2007, 204-5). 즉, 식민지 조선에 등장하는 사회문제는 식민지 대중 일반의 습속에서 발현하는 문제이고, 그 습속은 이를 오염시키는 특정인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런 인식 위에서 식민권력은 부랑인들을 사회 및 도시로부터 격리하고 배제하는 조치를 체계화해간다. 1910년대 단속과 일시적 구금에 기초했던 부랑자 정책은 1920년대부터 ‘감화원’이라는 이름의 격리시설 설립과 장기적 구금 및 노동훈육 정책으로 변한다. 주목할만한 점은 그 격리의 상징적 격리를 넘어 물리적인 격리로까지 나아갔다는 점이다. 박애원, 영흥학원, 선감학원 등의 감화원과 한센인 수용시설 소록도 등, 식민권력이 만든 사회적 타자의 수용시설은 모두 섬에 있었다(소현숙 2007, 135). 그리고 선감도, 고하도(영흥학원)와 소록도 등의 수용은 해방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이승만 정부는 당시 사회문제로 비화된 혼혈아동들을 해외 입양이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이정은 2013, 155-156). 이 역시 문제적인 사회 구성원들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는 사회의 타자들을 도시공간에서는 배제하면서도 합동결혼식 등의 이벤트를 통해 사회공간 내에서는 정상화(normalization)의 사례로 가시화되게 만드는 전략을 활용했다.

발전국가의 제도적 안전망은 전반적으로 저발전 상태였고, 공급 대상이 선별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양재진 2008, 333).<sup>24</sup> 발전국가는 노동력을 상실시키고 빈곤을 유발할 수 있는 실업, 노령, 질병 등의 리스크에 대한 안전망(=사회보험)을 대기업 종사자 및 공무원·교사 들에게 우선 제공했다(김순양 2014, 231). 경제발전에 필요한 이들의 이탈을 막고자 하는 목적과 국가의 비용 지출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접합된 결과였다. 1961~63년 사이, 발전국가의 등장과 더불어 ‘생활보호법’, ‘군사원호법’, ‘재해구호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 ‘공무원연금법’ 등의 사회보험 및 부조 제도들이 도입되었다(양재진 2008, 336). 하지만 이 제도들은 경제발전의 보조수단으로 활용된 측면이 강했다(권혁주 2007, 77). 1964년 산재보험 도입은 숙련 노동력의 손실을 막기 위한 의도 하에 광업과 제조업 내 5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었고(심상용 2010, 14-15), 72년 국민연금 논의는 내자동원을 위해 KDI가 내놓은 아이디어였다. 의도야 어찌되었든 처음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면서 비교적 보편성을 갖췄으나, 실제 시행은 1988년에 가서야 이뤄졌다(김순양 2014, 215). 77년 도입된 의료보험의 재정관리권은 재벌(전국경제인연합회)에게 주어졌고(정무권 2007, 288), 시행 대상은 500인 이상 사업장부터였다(김순양 2014, 221-2). 이렇게 고숙련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 안전망의 선별적 제공은 사회 구성원 사이에 역진적 분배효과를 낳게 되었다(김진욱 2004). 사회정치가 문화적 인정과 제도적 안전망을 제공한다고 했을 때, 제도적 안전망은 재분배와 결합되어 있다. 하지만, 앞서 박정희의 협동 담론이 가리키듯 발전국가는 제도적 안전망에서 재분배적 성격을 떼어냈던 것이다.<sup>25</sup>

이렇게 재분배에 대한 의지가 없다 보니 빈곤 상태에 놓여있거나 리스크에 취약한

<sup>24</sup> 발전국가 이전 식민지기에도 포섭적 전략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치료인력이 거의 없이 단속을 중심으로 전염병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던 위생경찰제도도 그 사례거니와(정근식 2011), 1919년 일본 내무성 사회과에 조응하여 2년 뒤 총독부 내무국에 설치된 사회문제 담당기구인 사회과 역시 그러했다(김정미 2009). 일본의 내무성 사회과(와 그 후신 후생성)와 마찬가지로 방면위원 제도를 운영했지만 일본과 달리 빈민에 대한 부조는 거의 제공하지 않았던 것이다. 1938년 전쟁국면에서 일본은 내무성 사회국을 후생성으로 승격·독립시켰고, ‘군사부조법’, ‘모자보호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보험법’ 등 다양한 사회부조 및 사회보험 정책을 실시했다. 하지만 이들 제도 중 식민지 조선에 적용된 법은 하나도 없었다(박세훈 2002). 1944년 3월 1일 총독부가 ‘조선구호령’이라는 이름의 구빈제도를 만들고 노약자나 미성년자, 병자, 임산부, 장애인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부조를 실시하기로 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채 해방을 맞았다(정우열·손능수 2008, 212).

<sup>25</sup> 사회부조제도는 물론이고, 사회보험제도도 기본적으로는 안전망의 제공과 더불어 재분배적 성격을 갖는다. 사회보험료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기본적으로 절반씩 부담하여 노-사간의 연대를 표현하며, 의료보험의 경우 소득에 기초하여 납부하되 질병에 근거하여 급여를 수급함으로써 재분배효과를 만들어낸다.

사람들에 대한 부조 및 안전망의 제공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1960년대 초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실업문제였지만 정작 실업보험은 도입되지 않았다(우명숙 2007, 174-5). 의료보험은 임의가입으로 강제성이 없었으며, 생활보호 역시 일부를 건설사업에 동원하고 미국의 잉여농산물을 일부 분배해주는 정도에 그쳤다(양재진 2008, 337). 빈곤자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사회 구성원들은 개별적으로 안전망을 만들어야 했다. 1970년대 민간보험의 성장이 이를 보여준다(정무용 2017, 315-323). 국가는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본의 조성 등을 이유로 저축 등 개인의 자산형성을 장려하였는데(김도균 2013b, 105-108), 이 역시 개별적 차원에서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었다.

도시 공간에 표현된 사회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역시 분할적이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의 경우 무허가정착지를 비롯하여 거주민들이 겪고 주택문제가 중요한 이슈였다. 발전국가는 앞서 소개한 서울의 무허가 정착지 주민들이 무질서한 개인생활로 ‘사회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고(김아람 2013, 70), 1967년도에 약 50%를 교외이주, 40%를 양성화, 10%에 대해서는 시민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보려 하였다(서울특별시 1967, 5-9). 하지만 교외이주 대상지였던 광주대단지엔 변변한 인프라도 일자리도 없는 상태에서 입주가 시작되어 거대 천막촌과 실업자촌이 되었고, 뒤늦게 투입된 개발비용을 영세한 입주자들에게 전가하여 결국 붕괴를 부르고 말았다(장세훈 1998, 240-244; 김원 2008). 시민아파트 역시 고비용으로 인해 입주권을 가진 무허가지 정착지 주민의 80%가 입주권을 중산층 이상에게 전매하는 상황이었다(김아람 2013, 66). 1970년대에도 도심부 무허가 건물의 철거를 계속 추진하여, 시외곽으로의 집단 이주, 시영아파트 입주, 자조적 재개발 등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었다(김아람 2013, 72-74).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회투자를 최소화하려는 발전국가의 기조로 인해 저소득층은 새로운 주거지에 정착할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다. 새로이 조성된 주거지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중산층들의 거주지가 되었다(장세훈 1998, 260). 결국, 저소득층은 점차로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면서도 주거의 질은 개선할 수 없었다. 반면에, AID 차관의 주택용자 활용, 주택은행 설립, 아파트 건립 등의 정책적 배려가 만든 효과는 중산층(급여생활자)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공급하는 것이었다(김재원 2016).<sup>26</sup>

발전국가의 분할적 사회정치는 국토 공간에서도 표현된다. 발전국가는 산업화를 위해 가용 자원을 특정 공간에 선택적으로 투자했기 때문이다(신현방 2016, 6-7). 남동임해공업지역이 이 선택적 투자의 공간으로 많이 활용되었다. 그러면서 지역간 불균형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는데, 발전국가는 민족담론을 앞세워 그 불균등성이 대중의 시야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한편 국토공간을 균질한 것처럼 표상했다(박배균 2012; 97-99). 특정 지역의 ‘발전’이 국내 모든 지역의 발전에 다름 없는 것처럼 선전했던 것이다. 여기서 민족주의는 사실을 호도한다는 의미에서의 ‘이데올로기’로 활

<sup>26</sup> 1960년대 후반부터 중산층을 사회를 안정시키는 매개체로 보고 이들을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담론이 등장했으며, 이 범주에 해당하는 이들은 안정적인 봉급생활을 하는 고소득 및 고소득 노동인력이었다(김재원 2016, 327-8).

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1960~70년대의 사회정치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이 시기의 사회정치는 경제발전에 필요한 주체를 생산하기 위해 개별 주체들의 습속을 개조하고 이들을 다수화시켜 사회 역시 바꾸는 전략을 기본적 방침으로 했다. 하지만 그 실천의 과정에서는 사회 구성원 다수에 대한 규율만 아니라 사회적 배제와 포섭을 더함으로써 사회정치가 사회 내부의 격차를 새롭게 만들어 내고 또 사회를 분할하는 방식이었다.

#### 4) 시민사회의 비판과 ‘민족적인 것’의 길항

국가의 사회정치에 대한 반발은 1960년대 중반 이후 지속되었다. 시민사회를 억압한 권위주의적인 국가의 성격상 시민사회, 특히 국가에 비판적인 시민사회가 제 목소리를 내기란 어려웠기는 하지만 말이다.<sup>27</sup> 특히, 산업화와 더불어 생성되는 시민사회 내 갈등 해결을 위해 대화하해야 할 중요한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억압과 통제로 일관했다. 국가는 기업만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노동조합을 배제하면서 ‘노동 없는 발전연합’을 형성했었다(김순양 2015, 25). 이런 상황에서 국가의 사회정치에 지속적으로 대응할만한 사회 세력은 형성되기 어려웠다. 물론 ‘아래로부터’의 반응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도시 하층민들의 경우 1970년 광주대단지 사건이나 1979년의 부마항쟁 등을 통해 간헐적인 도시봉기의 형태로 자신들의 불만을 제기했다(김원 2006). 발전국가 역시 1972년과 1978년 선거를 앞두고 복지제도의 확대를 공약하는 방식으로 아래로부터 전해져 오는 비판에 대응하겠다는 제스처를 취하기는 했다(전광희 1999, 김호기, 1999).

다만, ‘민족’이라는 개념은 ‘민주주의’ 개념과 더불어 제한적이거나 담론 투쟁의 공

<sup>27</sup> 물론 시민사회가 모두 발전국가의 사회정치에 반대만 한 것은 아니다. 발전국가의 사회정치에 있어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는 새마을운동의 경우 국가에 의한 동원만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성이 폭넓게 발견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윤충로 2011).

사회적 타자에 대한 격리 역시 시민사회에서 주장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1950년대부터 부랑아들을 도시와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가만이 아닌 시민사회에도 존재했다. 다음 기사가 이를 보여준다.

“꼬마거리들은 그야말로 서울 도심지대의 암적 존재로서 조속한 구제책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다. 그러나 병든 사회풍조의 약점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특히 여인들에게 화려한 거리를 공포의 거리로 만들고 있는 이 꼬마 거리들을 퇴치(경향신문 1958. 2. 19)”

1960년대에도 마찬가지였다. 『청맥』의 한 필자는 청소년의 선도는 “사회환경 전체의 순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리면서 ‘음악감상실’이나 ‘불량만화’ 등 도시민들의 습속을 퇴폐하게 만드는 장소들을 제거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권순영 1964, 113). 요컨대, 발전국가가 도시민들의 습속을 통제·개조하기 전부터 대중의 습속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요청한 이들이 시민사회에는 존재했다.

간을 열었다. 이 개념은 발전국가가 사회 구성원들을 동원하고 또 규율하고자 할 때 활용하는 규범적 개념으로만 활용된 것이 아니었다. 이에 대한 비판을 수행하는 지식인들도 국가의 사회정치를 비판하는 준거를 마련해주는 규범적 개념으로 '민족'을 활용했었다. '민족적인 것'을 둘러싼 길항, 혹은 발전국가가 내세우는 '국민적인 것'과 시민사회가 내세우는 '민족적인 것' 사이의 길항이 존재했던 것이다.

4.19의 한 축을 담당했던 대학생과 교수 등의 지식인 집단은 민족주의적 언어를 통해 이승만 정권을 비판했고(강정인 외 2009, 221-2), 이후 민족주의를 이념적 기초로 한 사회운동 단체들을 결성했다(여현덕 1998, 211-4). 그리고 이 기반 위에서 발전국가가 표방한 '민족주의'와 담론적으로 대결한 지식인들이 등장했다. 1961년 4월 19일 서울대학교 학생회가 '반외세, 반매관, 반봉건의 민족혁명'을 학생운동의 슬로건으로 내걸었고, 서울지역의 여러 대학 학생들은 1964년 한일회담 이후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이라는 행사를 통해 발전국가가 '반민족적'이라는 비판을 시작했다(오제연 2007). 이후에도 저항적 시민사회는 지속적으로 '반민족적'이라는 수사를 통해 발전국가를 비판했다.

몇몇 지식인들은 보다 구체적으로 '민족적인 것'의 내용을 채워갔다. 박희범 같은 지식인은 '내포적 공업화'라는 명제를 박정희와 공유했지만, 경제적 지위향상이나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외자도입이 확대될 경우 경제발전이 경제적 예측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홍석률 2002, 183-5). 이 민족주의적 경제론은 기본적으로 '민족'을 기준으로 내/외를 나누는 담론이지만, 한편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균형 문제, 그리고 중산층 문제 같은 사회정치에 관한 것이기도 했다.

1960년대 중반 박희범, 신용하 등이 주장한 민족주의적 경제론은 사회 내 여러 구성원들의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한 방법론으로 제출된 것이었다. 중산층은 한국의 근대화에는 물론 사회적 갈등의 극복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견해는 1960년대 중반 당시 발전국가와 지식인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던 것이었다(홍석률 2002, 187). 하지만 육성 방법론에 대해선 이견이 있었다. 어떤 이들은 대기업을 위주로 '선성장 후분배'를 주장한 반면에, 신용하나 박희범 같은 이들은 중산층의 중소기업의 성장이 중요하다고 보았다(홍석률 1999, 230-1). 민족주의 경제론을 주장한 이들 역시 신용하와 박희범 등이었다. 해외종속적인 경제는 대기업 친화적이라는 이유에서였고(신용하 1966, 63), 내포적 공업화는 대기업만 아니라 중소기업에까지 연쇄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박희범 1966, 7-10). 이들의 이론 속에서 '민족적인 것'은 사회 구성원에 대한 기본적인 인정에 기초하고 있다. 사회적 격차를 줄이고 사회적 균형 및 분배를 촉진하여 다수의 구성원이 포섭되는 형태의 경제시스템을 '민족적'이라고 인정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1970년대에 큰 영향력이 있었던 박현채가 주장한 '민족경제론' 역시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격차에 관한 문제의식과 관련이 있다. 그는 한국의 종속적 경제 시스템이 경제성장의 성과를 끌고루 확산시키지 못하고 사회적 불균형을 확대하며, 매관자본은 성장하나 중소기업이 몰락하고, 상대적 격차는 더 커지게 만들었다고

진단했다(김보현 2015, 143). 그리고, 1971년 대선후보 김대중과 합작하여 만든 『대중경제론』을 통해 균형발전과 산업민주주의, 복지국가에 대한 지향하는 경제체제를 구상하여 발표하기도 했다(김보현 2015, 137). 박헌채에게 있어서도 ‘민족’이라는 개념은 사회적 균형과 분배, 그리고 구성원들의 폭넓은 포섭에 대한 지향성을 표현하는 개념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을 통해 볼 때, 발전국가의 사회정치에 있어서 ‘민족적인 것(the national)’은 모종의 규범성을 함의하면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규범적 개념(normative concept, normativ Begriff)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1장에서 우리는 ‘사회적인 것(the social)’이 서구 사회정치에 있어서 핵심을 이루는 규범적 개념이 되었음을 확인한 바 있다. 발전국가의 사회정치에서는 ‘민족적인 것(the national)’이 사회적인 것(the social)’의 기능적 대체물 노릇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정치 과정에서 국가와 저항적 지식인들은 ‘민족’이라는 규범적 개념을 둘러싸고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국가는 자신이 추동하는 빠른 경제성장과 산업의 고도화, 그리고 권위주의적 정치에 동원 가능한 주체들을 만들기 위한 방편으로 ‘민족적인 것’에 대한 담론을 만들었다. 이는 정치적으로 권위주의 국가에 충성하고, 서구적이지 않으며, 재분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사회공동체의 부의 향상에 적극 기여하는 습속을 가진 주체들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를 비판하는 이들도 동일한 개념을 활용했다. 사회 내 격차의 시정과 균형, 그리고 분배 등에 대한 지향성을 ‘민족적’이라는 형용사와 함께 제안했기 때문이다.

## 제 2절 1960~70년대 발전국가와 스포츠

### 1. 스포츠와 국제·국내 사회

#### 1) 국제적 지위향상 수단으로서의 스포츠

‘발전국가’라 일컬어지는 박정희 정부에게 스포츠는 국제사회 내에서 인정을 획득하는 수단이었다. 이른바 ‘국위 선양’을 중요한 스포츠 정책 중 하나로 설정했던 것이다. 이미 언급된 바 있듯이 북한과의 대결에서 승리하여 ‘우월성’을 드러내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했다. 그랬기에 남북대결은 ‘총탄 없는 전쟁’이라 여겨졌고, 체육관계자들은 선수들에게 “북괴만은 꼭 이겨달라”고 할 정도로 강한 대결의식을 내비쳤다(권오륜 2004, 391-3). 그리고 세계적 스포츠 이벤트에서 북한보다 앞선 순위를 거둔 선수의 신체는 곧 북한보다 남한 정권이 우수함을 보여주는 지표처럼 여겨졌다

(이강우 1997, 89-91).

꼭 북한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반공주의는 스포츠에 질게 투사되어 있었다. 그래서 1967년 체코의 프라하에서 열린 세계여자농구대회에서 유고슬라비아를 꺾고 우승을 차지한 여자농구 대표팀을 환영하는 자리에서 박정희는 “공산지역에 들어가서 신장해가는 우리의 국위를 선양하고, 공산국가대표를 눌러 이긴 승리의 기개는 우리를 무한히 고무시킨 쾌거”라며 그 의미를 냉전과 결부시키고 있다(박정희, 1967년 5월 7일).

나아가, 세계적 스포츠이벤트에서의 우수한 성적은 곧 국제 사회에서 남한의 지위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여겨졌다. 대통령 박정희는 다음과 같이 스포츠를 국제사회 내 지위 경쟁의 수단으로 보고 있다.

“오늘의 국제사회는 국력의 우열을 겨루는 경기장이며, 또 이 같은 국력 경쟁에 있어 스포츠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입니다. (중략) 스포츠의 광장이 국력을 겨루는 불꽃튀기는 경쟁의 마당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박정희 1976년 10월 12일).”

국제사회에서의 지위 경쟁과 스포츠를 명확하게 연결시킨 이 담론이 행해진 곳은 전국체육대회 개최식이었다. 국제적 스포츠 이벤트와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국내적 스포츠이벤트였던 것이다. 이곳에서 조차 이토록 국제사회에서의 지위 향상을 말했다는 것은, 정권이 스포츠와 국제사회로부터의 인정 사이의 관계를 얼마나 긴밀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다.

이를 뒷받침할 엘리트스포츠 지원체계가 만들어지는 것은 당연했다. 본디 박정희 정부의 체육정책은 1962년도에 만들어진 ‘체력은 국력’이라는 슬로건과 국민체육진흥법을 통해 전국민의 체위 향상을 목표로 했었다(정영환·이호근·신현규 2009, 69-70). 하지만 이를 구체화시킬 정책이란 체력장 제도를 만들고 재건축제와 국민체조를 만드는 정도였다. 반면에,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엘리트스포츠 선수 성적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은 매우 구체적이고 효과적이었다. 민족을 단위로 한 사고를 매우 중시한 국가이기에, 민족을 대표하는 엘리트스포츠에 대한 투자에의 의지는 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에 대한 투자에의 요구를 넘어설 수 있었다.

한국 엘리트스포츠의 발전은 경제의 발전과 매우 닮아있다. 서구 세계가 상정한 경제발전은 기업가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그런 기업가들의 활동이 전체적으로 경제를 성장시킬 것이라 믿는 것이다. 그러나 발전국가인 박정희 정부는 이와 달랐다. 국가가 경제성장 목표를 비롯한 경제발전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이에 동참할 파트너 기업을 선정한다. 이들에 대한 금융지원과 규율, 그리고 수출의 장려라는 방식을 통해 그 성장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다(양재진 2012). 특히 한국은 소련에서 활용된 바 있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까지 활용하는 등 계획경제의 요소와 시장경제의 요소를 혼합한 독특한 경제시스템을 만들었다. 스포츠 영역



도 이와 마찬가지로였다. 서구사회가 상정하는 민간영역의 자율적인 스포츠와 전혀 다른 시스템을 만들어 낸 것이다. 박정희 정부는 서구처럼 스포츠를 민간에 맡기지 않았다. 그렇다고 공산주의 국가들처럼 아예 국가영역으로 끌어들이고 민간 영역을 소거한 것도 아니었다.<sup>28</sup> 목표할당, 지원, 규율, 그리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스포츠에 개입하는 것이 박정희 정부의 방식이었다.<sup>29</sup> 스포츠인들도 이런 한국 스포츠의 길이 공산주의와 서구 사이에 존재하는 제3의 길임을 인식한 듯 하다. 대한체육회장 김택수의 다음 발언이 이를 잘 드러내준다.

“스파르타식 선수양성의 제도를 채택하는 공산제국의 국가 관리주의와 폭넓고 다양한 선진 제국의 순수한 아마추어리즘의 틈바구니에서 비장한 각오 밑에 오랜 시일 피나는 노력을 계속하지 않고서는 결코 세계 제패라는 기적은 일어날 수 없다는 엄연한 현실을 똑바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이강우 1994, 119).”<sup>30</sup>

국가의 본격적 스포츠 개입은 1966년에 만들어진 태릉선수촌을 그 시작점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은 165명, 참가규모 5위의 대규모 선수단을 이끌고 참가했음에도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에 그쳤고, 이로 인해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 때 임원으로 다녀온 민관식의 아이디어로 1966년 태릉선수촌이 건립되었다(김명권 2013).

1968년부터 국가는 올림픽에서 우수선수가 될 엘리트선수의 육성에 맞춘 체육정책을 본격적으로 발전시켜 나갔다. 1968년에는 대한체육회와 올림픽위원회, 그리고 학교체육회를 통합했다. 물론 그 초점은 올림픽에 있었다. 1970년에는 국무총리와 문교·내무·국방·보사·무임소장관, 중정부장, 국회의원, 대한체육회 정·부회장, IOC위원

<sup>28</sup> 소련과 동독의 경우 국가 체육문화 및 스포츠장관(State Secretariat on Physical Culture and Sport)이 각종 스포츠클럽과 스포츠과학, 선수촌, 대표팀, 선수양성 학교 등을 전부 관장한다. 그리고 우수 선수들은 신체검사를 통해 일찍이 발탁되어 스포츠학교에서 전문 선수로 길러진다. 그리고 선수 시절에는 주로 군에 소속되어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는다. 사회주의 스포츠시스템에 관하여는 Riodan(1991, 64-101) 참조.

<sup>29</sup> 이는 올림픽에 출전하는 아마추어 스포츠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었다. 권투선수 김기수의 경우, 당시 대통령 박정희와 대한중석 사장 박태준은 권투 세계챔피언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선수를 물색하던 중 유망주 김기수를 찾아내 세계챔피언을 목표로 설정해주었고, ‘권일체육관’이라는 체육관을 집 근처에 만들어 연습에 전념하게 해주었다. 김기수는 대통령과 박태준이 지켜보는 앞에서 1966년 첫 한국인 세계챔피언이 되었고, 권일체육관은 그의 소유가 되었다(이대환, 2014년 10월 22일)

<sup>30</sup> 이강우(1994, 119)에서 재인용. 이강우는 1973년 제 53회 대회 개회사로 표기하고 있으나, 1973년은 54회 대회이며, 54회대회 자료집에 수록된 김택수 회장의 개회사에는 해당 구절이 존재하지 않는다(대한체육회 1973, 30). 53회 대회 자료집에는 개회사가 수록되어 있지 않은데, 신문기사들은 김택수 회장이 세계 정상급 실력의 연마를 골자로 한 개회사가 53회 대회에서 있었다고 전한다(『동아일보』 1972년 10월 6일, 1면). 이로 미루어볼 때, 해당 인용문은 1972년 제 53회 개회사로 추측된다.

등이 참석하는 국민체육심의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리고 20억 이상의 모금을 통한 우수선수 발굴과 장학금 지급, 해외파견 등을 결의했다. 이듬해에는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스포츠 이벤트 개최, 1백명 이상 고용 기업의 운동부 설치 의무, 국가 및 지자체, 그리고 국영기업체의 메달리스트 고용 의무 등을 명문화했다(설정덕·김재우 2011). 나아가 1970년대 초반에는 전국 주요 도시에 체육중학교와 체육고등학교를 설치했고, 1976년에는 한국체육대학도 설치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1974년에 만들어진 메달리스트에 대한 연금제도였다. 올림픽 금, 은, 동메달리스트에게 각각 60, 30, 20만원이라는 거액의 연금이 주어지는 방안이 마련되었던 것이다(이중원 2005. 49-50). 올림픽에서 메달을 수상한 이들은 평생 안정적인 삶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 정도로 국가는 스포츠를 통한 국제적 지위향상을 중시했다고 볼 수 있다.

## 2) 국내 사회정치 담론장으로서의 스포츠

그렇다면, 국내 사회에 대하여 스포츠는 어떠한 역할을 했을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군인들은 정권을 잡은 지 얼마 안되어 ‘체력은 국력’이라는 슬로건과 재건체조 등을 널리 알렸다. 그리고 담론의 수준에서 스포츠는 발전국가가 원하는 이상적 주체를 형성하는 수단으로 자리 매김되었다. 다음 연설이 이를 잘 보여준다.

오늘날의 체육은 다만 국민의 체위와 체력의 향상에만 그쳐서는 안 되며, 실로 유능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격함양이라는 중대한 사명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 외로 직면해 있는 민족적 대과업 수행의 과정에서 우리는 이 체육발전을 통해서 조국이 요청하는 이상적 인간상의 양성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조국의 근대화 와 풍요한 복지사회건설이라는 우리의 대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것은 실로 우리 국민의 정신과 체력이 얼마나 건전하고 강건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박정희 1966년 10월 10일).”

단체와 집합과 긴밀하게 결부된 스포츠 고유의 특성으로 인해, 발전국가는 개별인간의 습속을 넘어 개인의 사이에 존재하는 공간, 개인들의 함으로 존재하는 공간, 또는 개인들의 함까지 넘어선 선형적 자리에 공간으로서의 사회의 재조직과 스포츠 담론을 결부시키기도 하였다. 간단히 말해, 정권에게 있어 스포츠는 사회질서의 형성과 사회 통합에 관한 담론을 발신하는 공간이기도 했던 것이다. 아래 인용문이 이를 잘 드러내준다.

우리는 구경만 하는 체육이 아니라, 길러 주고 스스로 참여하는 체육이 되도록 노력함으로써 국민체육의 생활화를 기하고, 규칙을 준수하는 스포츠 정신의 함양을 통해 사회기강을 확립하고 국민이 서로 협동·단결하는 기풍을 진작해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체육 진흥을 통해서 국력을 증강하고 청신한 사회 기강과 기풍을 일으켜 나간다면, 그것은 곧 남북 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박정희, 1972년 10월 6일)

그러나 스포츠를 통해 사회를 개조해야겠다는 담론과 달리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물질적·제도적 뒷받침은 없었다. 스포츠를 통한 사회의 개조는 1920-30년대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정권과 독일 나치 정권에 의해 시도된 바 있다. 이들은 이상적인 남성상, 국민상, 노동자상을 선전하기 위해 축구를 활용했을 뿐만 아니라(Martin 2004; Kunster 2009), ‘국립여가단(Opera Nazionale Dopolavoro)’과 ‘기쁨을 통한 힘(Kraft durch Freude)’이라는 국가적 여가 공급 조직도 만들었다. 이를 통해 보통의 노동계급 구성원들도 여가에 자동차를 구매하여 주말이면 양질의 휴가를 보내면서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했다.<sup>31</sup> 여가선용, 즉 ‘합리적 여가(rational recreation)’는 19세기 말부터 노동력의 원활한 재생산에 있어 중요한 도구였고 이것이 습속의 개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었음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Bailey 1978). 그랬기에 이탈리아 파시스트와 독일 나치는 이를 직접 조직하여 제공했던 것이다.

반면에, 박정희 정부는 담론에 있어서만 무솔리니와 히틀러 못지않게 새로운 인간상을 주문하고, 새로운 사회의 건설을 촉구했을 뿐이다.<sup>32</sup> 이들은 조직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여가를 공급한 바가 없다. 공장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레크레이션을 보급한 것은 했지만, 건전가요 보급 정도에 머무르는 매우 제한적인 것이었다. 국가는 여가보다는 오히려 밤샘근로와 연장근로 등 끊임없는 노동을 강조했고, 매우 제한적으로만 주어졌던 여가시간은 노동자들이 하위문화가 그대로 지속되었다(김영선 2009, 19; 정승국 2005). 프로스포츠도 없었기에, 스포츠를 선전수단으로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sup>31</sup> 2차대전 이후 전세계에서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던 폭스바겐(Volkswagen)의 자동차 모델 비틀(Beetle)은 처음 개발 당시 노동자들의 여가를 위해 제작되었고, 그 판매를 ‘기쁨을 통한 힘’이 담당했다(도상윤 2015). 기타 국립여가단(Opera Nazionale Dopolavoro)과 기쁨을 통한 힘(Kraft durch Freude)에 대하여는 Liebscher(1998)와 Baranowski(2001) 참조.

<sup>32</sup> 1962년 9월 17일 아직 정식으로 대통령에 취임하지 않은 박정희 정부는 국민체육 진흥법을 제정한다. 이 법은 엘리트체육만 아니라 전국민의 생활체육에 기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한데(김종희 1999), 체육의 날 설정, 지방 체육 진흥, 학교 및 직장체육 진흥, 직장운동부 설치, 선수 보호 및 육성, 체육용구 생산 장려 등을 내용으로 한다(이학래·김종희 1999, 30-31).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1960년대에 이른바 ‘사회체육’에 큰 발전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 태릉선수촌의 설치와 1970년대 우수선수 연금제도 도입, 1970년대 중반의 기업의 스포츠 참여 등 엘리트스포츠의 영역에서는 그 변화가 눈에 띄었다(황병주 2002, 김지영·하용용 2014). 반면에, 재건체조(1961년)와 국민체조(1977년)로 이어지는 체조의 보급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체력장 제도 같은 것들을 제외하면(전윤수·주동진 2005, 18), 국민 일반이 체력을 기르고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하긴 어렵다.

유럽의 그것과는 비교되기 어렵다.

## 2. 발전국가의 국제 스포츠 이벤트 준비<sup>33</sup>

### 1) 1966년 아시안게임의 유치와 포기

1988년 서울올림픽의 개최 논의가 1979년 어간에 시작되고, 1981년 9월 30일 바덴바덴에서 열린 IOC총회에서 결정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이 글에서도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다. 하지만 그에 앞서 먼저는 발전국가가 꿈꿔온 ‘올림픽 드림’의 역사, 즉 세계 최대규모의 행사를 염두에 두고 크고 작은 국내적 및 국제적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하고 이를 위한 공간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올림픽의 유치와 개최는 7년에서 10년 정도의 시간 속에서 이뤄진다. 하지만 소수의 국가에게 주어지는 세계적 차원의 메가 이벤트는 그 전부터 축적되어 온 스포츠 및 도시의 다양한 준비에 기초하지 않을 수 없다. 서구의 근대를 따라잡으려는 발전주의적 욕망이 강한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올림픽은 더더욱 오랜 기간의 ‘꿈’에 기초하여 개최가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베이징올림픽은 2008년이지만, 언젠가 중국에서 올림픽을 유치하겠다는 중국 엘리트들의 ‘올림픽드림’은 1907년 청 왕조의 멸망 무렵부터 시작되었다(Xu 2009, 232). 그러므로 여기서는 해방 이후 한국의 국제적 스포츠 이벤트의 구상과 준비 과정을 지역적 스포츠이벤트와 경기장 건설을 중심으로 개괄하고 이것이 서울올림픽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간단히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지역적 스포츠이벤트인 아시안게임에 대해 알아보자. 한국에서는 1950년대 후반부터 아시안게임 개최에 대한 아이디어가 등장했다. 1958년 제 3회 아시안게임이 도쿄에서 열린 후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제 4회 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우리 민족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비롯하여 우리 한국이 극동의 일각에서 공산침략을 막는 데 얼마나 과감히 싸우고 있는가를 아세아 여러 사람들에게 눈으로 보임으로써 한국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경향신문』 1958년 5월 27일, 1면). 동년 6월 13일, 문교부는 서울 성동구 광장동 일대에 제 5회(1966년) 아시안게임 및 장기적으로는 올림픽을 염두에 두고 [그림 1]과 같은 국민종합대경기장 건설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동아일보』 1958년 6월 13일, 3면). 이 계획은 1962년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종합경기장 설치안’을 통과시키면서 드디어 실현되는 듯했으나 뚜렷한 진전이 없었고(『동아일보』 1962년 3월 15일, 3), 1963년부터 논

---

<sup>33</sup> 이에 관하여서는 김백영(2017)의 연구가 관련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 연구의 설명에 기초하면서도 관련 자료들을 추가하여 설명에 구체성을 더하는 방향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의는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그림 1] 1958년에 계획되었던 국민종합운동장 모형  
(출처 : 『동아일보』 1959년 1월 1일, 11)

아시안게임 개최론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은 1964년도부터다. 1964년 1월 27일 새로이 대한체육회장에 취임한 민관식은 제 6회 아시안게임을 유치할 것과 이에 필요한 종합운동장을 짓겠다는 약속을 발표했다(동아일보 1964년 1월 28일, 8). 이후 논의는 계속되었으나, 경기장 건설이나 유치활동 조직의 구성 등의 준비작업은 1966년 초까지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동아일보 1966년 1월 6일, 8). 뒤늦은 7월 19일 대한올림픽위원회 내에 유치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고(동아일보 1966년 7월 20일, 4), 메인 스타디움은 서울운동장을 10만명 규모로 확장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경향신문 1966년 7월 28일, 4). 8월부터는 약 한달간 유치활동이 시작되었다. 아시아경기연맹(AGF)회원국에 서한을 보내고(동아일보 1966년 7월 28일, 8), 손기정과 월터 정 등 체육계인사들이 각국을 방문한 것이다(경향신문 1966년 8월 12일, 4). 당시 함께 입후보한 국가는 실론(스리랑카) 밖에 없는 상태여서(경향신문 1966년 9

월 12일, 6), 손기정이 제6회 아시안게임을 위해 출국하기 전부터 ‘거의 확정적’이라 할 정도였다(『경향신문』 1966년 11월 21일, 8). 결국 12월 15일 열린 총회에서 실론이 입후보를 포기하여 서울은 만장일치로 제 6회 대회 개최국이 되었다(동아일보 1966년 12월 15일, 1).

그런데, 구체적인 개최 계획은 제시되지 않은 상태로 시간이 흘러가던 7월 13일, 박대통령은 대한올림픽위원회장 장기영에게 개최 포기를 지시한다. “제 2차 경제개발계획에 모든 자원을 총집결시켜야 할 시기에 아시아경기대회의 준비를 위해 막대한 자원을 할애할 수 없으니 이를 포기하도록 하라”고 했다는 것이다(경향신문 1967년 7월 14일, 1). 비용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유치 이전부터 있었다. 대한체육회에서는 개최경비로 60억 가량 소요될 것이라 했으나, 대한올림픽위원회에서는 7억 5천 정도로 개최가 가능하다면서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동아일보 1966년 12월 5일, 4). 하지만 실제로 7억 5천만원으로는 대회 개최가 불가능했다. 경기장도 턱없이 부족할뿐더러 호텔과 연습장 등의 기타 인프라 역시 부족한 상태였다(손정목 2003b, 199). 게다가 이 뒤에는 체육계 간 갈등이 존재했다. 아시안게임 유치과정에서 대한체육회와 올림픽위원회 사이에 반목이 생겼고, 아시안게임 유치는 민관식이 이끄는 대한체육회가 아닌 장기영이 이끄는 대한올림픽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성사시킨 일이었다(김경훈 2000a, 122-3). 그렇기에 대한체육회와 올림픽위원회 사이에 예상 소요비용의 차가 그토록 컸던 것이다.

결국 1968년 5월 1일 아시아경기연맹 총회에서 대한올림픽위원회 장기영은 대회를 반납하고, 직전대회 개최도시인 방콕에 다시 한번 개최를 부탁했다. 이를 위해 예상 적자의 상당수를 부담하기로 약속하고 이를 성사시켰다. 1970년 방콕 아시안게임의 실제 적자는 41만달러였고, 그 중 25만달러를 한국이 부담했다(손정목 2003b, 200-1).

## 2) 1970년대 잠실개발과 잠실운동장

지역적 스포츠이벤트에 관한 논의가 한참이던 1966년, 서울시는 올림픽을 염두에 두고 공간을 준비할 계획을 세웠다. 1966년 4월 서울시장에 취임한 ‘불도저 시장’ 김현옥의 지휘로 마련된 서울도시계획에 올림픽에 활용할 경기장 건설 부지가 계획된 것이었다. 그는 연세대에서 도시계획을 가르치던 차일석을 부시장으로 삼아 4개월의 작업 끝에 도시계획안을 마련했고, 시청 앞에 전시장을 만들어 이를 전시한다(김서령, 2006년 4월). 그 계획을 실감하도록 만든 모형도에는 [그림 2]처럼 한강 남동쪽에 올림픽을 염두에 둔 경기장이 존재했다. 서울에 올림픽을 개최할 장소를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에 종합경기장부지를 한강 남동쪽에 설정했다는 것이 당시 도시계획 종합계획계장 최상철의 증언이었다(김상운, 2016년 7월 20일). 1966년 말 발간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구체적으로 천호지구 거여동 일대에 80만평 규모로 경기장 계획을 수립했다고 보고되고 있다(서울특별시 1966, 282). 이에 맞춰 처음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었던 잠실지구는 올림픽 경기장 계획으로 인해 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으로 그 용도가 변화된다(서울특별시 1966, 324). 특이한 점은, 1970년 아시안게임은 동대문운동장을 개축하기로 결정한 상태였기에, 이 작업과 아시안게임 사이의 관계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림 2] 1966년 도시계획 모형과 김현옥.  
(출처 : 서울역사박물관 특별전 『불도저시장 김현옥』, 2016년 6월 필자 촬영)

한강 이남에 스포츠경기장 시설이 구체화된 것은 1970년 김수근이 사장으로 있던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 의해 설계된 ‘잠실지구종합개발계획’과 더불어였다. 이 때, 한강과 탄천이 합류하는 지점 남동쪽(부리도)에 종합경기장 및 체육대학 설립 계획이 만들어진다(김진희 2011, 131-2). 이 계획은 재검토의 과정을 거쳐 1974년 ‘잠실지구종합개발기본계획’이라는 이름의 도시계획안으로 재탄생했지만,<sup>34</sup> 스포츠 종합경기장 시설의 입지는 변함이 없었다(서울특별시 1974, 75).

서울시와 국가의 잠실종합운동장 계획은 1975년부터 시작된다.<sup>35</sup> 서울시장 구자춘

<sup>34</sup> 잠실지구종합개발계획의 재검토 배경은 올림픽과 무관하지 않다. 이는 제 4장에서 다룰 것이다.

<sup>35</sup> 다만 잠실학생체육관은 1972년부터 시작된 상태였다. 서울시교육위원회는 학생들을 위한

은 1975년 3월 건축가 김수근에게 ‘잠실종합운동장 신축공사기본계획’을 의뢰하여 10월 15일에 계획안을 수령한다. 이 계획안 비밀에 부쳐지다가 1976년 9월 22일 발표된다(손정목 2003b, 247). 이때 계획된 경기장은 10만명을 수용하는 아시아최대 규모의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 야구경기장, 제 1, 제 2 실내체육관, 정구장, 프레스 센터 등이었다. 82년 아시안게임 유치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경향신문』 1976년 9월 23일, 1), 계획된 일정은 1981년까지였다(“잠실종합대운동장건설계획”, 1976년 10월 5일)

하지만 실제 일정은 이와 달랐다. 국제 스포츠 이벤트의 개최에 맞춰 설계도 변경되고 일정 역시 변경된 것이다. 1976년 12월, 김수근이 “조국근대화와 국민총화”를 상징하기 위해 계단식 지붕으로 설계한 1만 5천석 규모의 잠실실내체육관이 착공된다(동아일보 1976년 11월 20일, 8). 이는 당초설계와 달리 2개를 하나로 줄이고 규모는 대폭 확대된 것이었다. 아마도, 1974년 7월에 결정된 바 있는(중앙일보 1974년 7월 12일 6면) 1979년 4월의 세계여자농구대회 개최를 위해 농구협회에서 건의한 내용을 수용하여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동아일보 1976년 8월 21일, 8). 실제로 1979년 4월 18일 잠실실내체육관에 준공되었고(동아일보 1976년 4월 18일, 6), 대회는 29일부터 시작되었다. 경기장 건설과 국제 스포츠이벤트의 개최는 야구로 이어졌다. 1977년 말 야구협회는 국제야구연맹 총회에서 1982년의 세계야구선수권대회를 제안했는데(경향신문 1977년 12월 10일, 8면), 1979년 10월 경기장 미비로 개최권 반납설이 나돌자(동아일보 1979년 10월 8일, 8), 서울시는 12월에 계획을 발표하고(경향신문 1979년 11월 17일, 8), 1980년 4월에 야구장을 착공하였다(동아일보 1980년 8월 20일, 6). 준공은 7월 15일 이뤄졌으며(경향신문 1982년 7월 16일, 1), 야구대회는 9월 4일에 개막했다(매일경제 1982년 9월 4일, 12).

실내수영장은 1977년 12월 20일 착공되어(동아일보 1977년 12월 20일, 6), 1980년 12월 20일에 준공되었다(경향신문 1980년 12월 20일, 8). 국제스포츠 이벤트와 관계없이 계획된 일정대로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같은 날 착공되었던 주경기장의 개장은 1984년 9월 29일이었다(경향신문 1984년 9월 29일, 1). 스탠드 위에 설치하려던 지붕을 예산문제로 없앴다가 다시 올림픽의 개최에 맞춰 설치하는 등 설계 변경이 여러 차례 이뤄진 결과였다(동아일보 1983년 5월 18일, 8).

마지막으로 언급할 것은 훗날 올림픽공원이 되는 국립종합경기장부지다. 1968년 2월 초, 건설부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둔촌동 일대 260만 평방미터를 국립종합경기장을 부지로 결정하고(매일경제 1968년 2월 28일, 5), 4월 11일 건설부 고시 제 212호로 공식화하였다(서울특별시 1990, 419). 하지만 이후 10년간 이곳은 구체적 계획의 진행도 철회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었다. 그러던 중 1979년 5월 8일 건설부 고시 150호로 국립경기장부지로 확정되었고, 가을에는 구획정리(동아일보 1979년 12월 4일, 8)와 미관지구 지정(경향신문 1979년 10월 26일, 8) 등 구체적인

---

체육관을 1972년 11월 30일에 착공하여 1977년 4월 20일 개관하였다(손정목 2003b, 244).



계획이 수립되었다.

이상을 통해 볼 때, 한국의 ‘올림픽 드림’은 195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다. 국제적 스포츠이벤트인 아시안게임 개최에 대한 요구와 이를 위한 경기장의 건설의 구상이 이 때부터 시작되었으니 말이다. 비록 취소되긴 했지만 이는 1970년 아시안게임의 유치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는 다시 1970년대 잠실지구의 개발과 경기장의 건설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경기장들은 1970년대 말 80년대 초의 국제 스포츠 이벤트의 개최로 이어졌다. 한국의 ‘올림픽 드림’과 그를 구체화하기 위한 준비작업은 20년 이상의 논의, 10년 이상의 실천 가운데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 제 3절 발전국가의 위기와 올림픽 구상

#### 1. 발전국가의 위기와 올림픽 유치 논의

위와 같이 1960~70년대의 사회정치는 사회 내의 격차를 시정하고 사회 구성원들에게 최저한의 삶을 보장하는 것을 사회정치의 본연으로 삼지 않았다. 오히려 경제 발전에 필요한 주체를 생산하고자 사회 내부에 새로운 격차를 만들어내고 사회 구성원들을 분할했다. 이러한 국가의 사회정치에 대한 반발이 있음은 당연했다. 그리고 이러한 반발 가운데 20년 가까이 지속된 권위주의적인 발전국가는 종말을 고하게 된다. 이 상황에서 서울올림픽에 대한 논의가 등장한다.

##### 1) 1979-80년의 발전주의 정치의 위기

앞서 언급한 시민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사회 내 격차를 생산하고 사회 구성원들을 분할하며 시민사회의 의견을 억압해온 국가의 통치기조는 지속되었다. 그러다가 결국 1979년 들어 위기를 맞게 된다. 경제 위기를 배경으로 사회적 불만이 대규모로 표출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불만의 표출의 배경에는 박정희 정권과 지배블록의 정치 기조였던 반공주의와 권위주의 모두에 위기가 찾아왔다는 사정이 자리한다.

대외적으로는 1979년 카터 행정부와 박정희 정권 사이에 존재한 갈등으로 반공주의에 위기가 찾아왔다. 지미 카터는 중국과의 수교 추진 과정에서 동북아 안보 관리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갖게 되었다. 데탕트 분위기를 한반도까지 확산시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취임 이후 계속 미군 철수를 논했고, 구체적 철군 일정을 지시

할 정도로 논의를 진행하였다(마상윤·박원곤 2009, 127-8). 박정희 정부는 1977년부터 한미정상회담을 추진했지만 1979년에 가서야 겨우 실현될 정도로 남한에 대한 태도는 차가운 편이었다(박원곤 2007, 26-27). 반면에 북한과의 협상에는 상대적으로 적극적이어서, 박정희 정부에 남북미 3자회담을 제안한 바 있다(홍석률 2016, 37-40).<sup>36</sup> 이런 카터행정부의 행동은 냉전의 최전선에서 공산주의와의 대결, 특히 북한과의 대결 승리를 국제사회 내 자신의 역할로 자임했던 ‘분단발전국가’ 한국의 지배블록에게 정체성 위기로 다가왔다.

카터 행정부는 반공과 발전을 내세워 지배블록이 국내사회에 대하여 고수해왔던 권위주의 통치기조에 대하여도 직접적으로 비판을 해왔다. 카터는 대통령 선거 시절부터 이른바 ‘도덕외교’를 주장하면서 동맹국들의 민주화와 인권을 중시할 것을 천명한 바 있고,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이를 외교의 핵심 기조로 삼았다(박원곤 2009, 215-216). 박정희 스스로도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를 닉슨 시절부터 이어져온 한미 간 갈등 중에서 가장 큰 부담으로 인식할 정도였다(마상윤·박원곤 2009, 127).

1978년부터 야당과 시민사회 등은 쌓아두었던 불만과 비판을 표출하기 시작했다. 78년의 동일방직사건과 함평 고구마수매사건, 안동교구 가톨릭농민회사건이 연달아 일어났고, 78년 12월 총선에서 야당은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다. 1979년 6월 30일 열린 정상회담은 주한미군 철수 논의의 철회와 남북미 삼자회담의 수용 등으로 적당한 선에서 대외문제를 타협했다. 하지만 국내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드러났다. 스케줄까지 바뀌가면서 정부를 강력히 비판하고 있던 신민당 김영삼 총재와 면담시간을 가진 것이다(박원곤 2007, 47). 이후에도 카터행정부는 문부식 주간 체포, YH사건, 김영삼의원 제명 등의 사건이 있을 때마다 대사 소환, 친서 전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입했다(박원곤 2009, 219-222).

‘반공’의 위기, ‘권위’의 위기는 결국 사회정치에 대한 불만을 대규모로 표현화시키는 데에 이르렀다. 경제성장을 우선순위로 삼고 이에 필요한 주체 생산에 복무하며 사회 내 격차를 스스로 생산했던 것이 국가의 사회정치였다. 문화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배제된 이들의 불만이 없을 리 없다. 하지만 국가는 권위주의에 기반하여 시민사회의 비판을 무시하고 사회 기층의 불만은 억압했다. 물론 1970년대 이후 양보적 조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70년부터 전태일의 분신, 광주대단지사건, 노동쟁의 빈발 등 등 국가의 사회정치에 대한 반발이 일어났고, 도시산업선교회와 학생사회개발단 등 독자적으로 사회문제에 대응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민사회 내에서 등장했다. 정부 역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972년 유신을 단행하면서 제도

<sup>36</sup> 스포츠영역에서 보자면 1979년 평양에서 열린 4월 25일부터 5월 6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제 35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미국은 선수단을 파견했다. 1978년 가을 서울에서 열린 세계사격 선수권대회에는 공산권 국가들이 불참했던 사실과 비교한다면 미국의 태도가 전향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대회를 앞두고 남북한은 체육회담을 통해 단일팀 구성 및 참가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결렬되었고, 한국팀은 제네바공항에 가서 선수단이 대기하는 등의 참가의지를 보였음에도 입국이 불가능했다. 이에 관하여는 국토통일원남북대화사무국(1982, 164-169) 및 조현철(2006, 70-71) 참조.

적 안전망의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다(전광희 1999, 165, 180). 하지만 앞서 본 것처럼 1970년대 초반에는 실질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고, 1970년대 중후반의 산재보험이나 의료보험 개선은 고학력과 고숙련의 노동자들에게만 제도적 안전망을 공급하여 격차를 확대시키는 것이었다. 1978년 선거에서의 복지확대 공언 역시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결국, 발전국가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던 경제성장에마저 빨간 불이 들어오자 아래로부터 비판과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박정희 정부가 자랑하던 경제성장은 1978년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1977년부터 도입된 부가가치세로 인해 인플레이션은 심각해졌고, 1979년엔 18.3%라는 기록적인 숫자를 나타냈다(이완범 2005, 27). 게다가, 중화학공업화 과정에서 기업집단들의 과잉투자로 인해 79년 4월 경제안정화 조치가 내려졌고(최상오 2008, 116),<sup>37</sup> 부실기업에 대한 제재가 시작되었다. 사회 구성원들의 불만은 쌓여갔다. 부산과 마산은 1979년에 찾아온 경제위기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지역들이었다. 특히 부산의 경우 부도율이 전국의 2.4배를 기록했고, 서울 대비로는 3배였다. 1970년대 후반 정부의 섬유산업 대출 축소로 마산의 섬유공장들에도 위기가 닥쳤다. 그런 가운데 9월 김영삼 총재의 대통령 비판(뉴욕타임즈와의) 기자회견을 빌미로 정권은 김영삼을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했고, 10월 중순 부산과 마산에서의 시위로 귀결되었다(이완범 2005, 26-33).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시작된 대학생들의 시위는 금세 일반 시민, 특히 도시 하층민들의 봉기로 이어졌다(김원 2006, 426-7).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을 둘러싼 권력자들의 다툼 끝에 박정희는 사망하고 만다.

1980년 역시 위기는 계속되었다. 전두환과 신군부는 박정희의 군 후배들이었고, 발전국가의 계승자들이었다. 이들은 정권을 잡자마자 앞선 정부 이상으로 사회질서와 통합을 강조했다. 사회정화라는 개념을 내세워 사회를 개조하겠다는 야심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정해구 2011, 78-86). 하지만, 이들은 처음부터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폭력으로 진압하고 나서야 정치권력을 잡은 이들이었다. 정당성이 없는 정권의 '질서'와 '통합'에 대한 요구는 설득력을 결여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사회를 질서와 통합을 위한 추가적 수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 2) 제24회 하계올림픽 유치 논의<sup>38</sup>

<sup>37</sup> 이 경제위기는 1980년까지 지속되다가 이듬해부터 IMF, 세계은행, 그리고 일본정부의 40억 달러 차관 등이 제공되면서 넘어갈 수 있었다(박영대 2013).

<sup>38</sup> 1979-80년 사이 올림픽 유치에 관하여 현재 접근이 가능한 공식 기록물은 국가기록원에 소장된 1979년 9월 22일과 24일, 25일 발행된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안이 전부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서울특별시에서 편찬한 『올림픽 백서(1990)』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편찬한 『서울올림픽사(김경훈 2000)』를 기초로 하고, 올림픽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최만립(2010), 김운용(1990), 박세직(1990), 정상천(2013), 손정목(2003-3) 등이 발간한 자료와 비교·대조하여 그 과정을 기술하였다. 자료들 사이에는 숫자나 일정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동아일보』 등 신문자료와의 검토를 통해 그 정/오를 판단하였고, 이것

1988년 제 24회 하계올림픽 유치에 관한 논의는 1979년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논의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1년 전인 1978년 가을에 있었다. 한때 정권의 2인자로 불리던 박종규는 1974년 8월 15일 영부인 시해사건으로 해임된 이후 1970년부터 재임 중이던 사격협회장에 몰두하고 있었다. 1978년 9월 14일에서 10월 5일까지 열린 세계사격선수권대회는, 비록 종목별 세계선수권이었지만 동대문운동장에서 대규모의 개최식이 열리고 기념우표와 주화까지 발행될 정도로 국내적으로는 상당한 관심을 모은 이벤트였다(박재구·곽형기 2010, 102-103). 한국이 주최하는 첫 세계 스포츠이벤트였기 때문이다.

1978년 가을의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이후 박종규는 곧장 올림픽 유치를 구상한 것으로 보인다. 1979년 2월 25일 대한체육회장 겸 KOC위원장이 된 그는 3월 23일 새로이 부회장 3인 - 장지량, 조상호, 김세원 - 을 선임했다(『동아일보』 1979년 3월 23일, 8면). 흥미로운 점은 이 세 명 모두가 그간 스포츠와는 전혀 관계가 없었던 전직 외교관들이라는 점이다. 취임한지 불과 한 달도 안되어 선임한 인사들이 모두 전직외교관이라는 점은 스포츠와 외교의 접점에 존재하는 무언가를 박종규가 스스로의 과업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방증한다.<sup>39</sup>

1988년 올림픽의 개최 가능성을 검토하는 작업은 1979년 초부터 이뤄졌다. 박종규는 상근이사 주관중과 세 명의 전문위원에게 실무작업을 맡겼고, 이들은 3월 16일에 제 24회 올림픽의 서울 유치 가능성을 검토한 보고서를 문교부에 제출했다. 4월 3일에는 서울시에도 올림픽 유치에 관한 자료협조를 요청했다(최만립 2010, 20-21). 요컨대, 제 24회 유치 건의안은 3월 중에 대한체육회로부터 정부(문교부)에 전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체육청소년부 1992, 479). 박종규의 취임과 거의 동시에 작업이 일사천리로 이뤄졌다는 것은 박종규의 올림픽 구상이 그보다 앞서서 시작되었음을 말해준다.

5월 무렵에는 1988년 올림픽 개최를 신청하겠다는 움직임이 보다 전면화된다.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정상천의 증언에 의하면, 세계여자농구선수권대회 결승전이 있던 1979년 5월 13일 저녁, 정관계 및 재계, 체육계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박종규의 올림픽 유치 설명과 박정희의 추진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 이로써 24회 하계올림픽 서울 유치가 공론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그의 증언이다(정상천 2013, 19-20).

6월 초부터 박종규는 1988년 하계 올림픽과 1986년 아시안게임의 서울 개최를 언론에 공표하기 시작했다(『동아일보』 1979년 6월 6일, 1면). 1979년 6월 24일부터

---

마져 어려울 경우 복수의 자료에 공통으로 나오는 내용을 기술하는 방식으로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손정목의 경우 올림픽 유치과정에 관여하지는 않았는데, 이동 서울시 시정연구관으로부터 청취한 증언에 기초하여 관련 역사를 서술하였다(손정목 2003c, 33).

<sup>39</sup> 『동아일보』의 해당 기사는 전임자인 김택수 회장이 역점에 둔 것은 국내 선수들의 국제무대 성적향상이라고 전하고 있다. 김택수와 박종규 사이에는 분명한 방향성의 차이가 존재한다.

30일까지 푸에르토리코에서 있었던 ANOC(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sup>40</sup> 창립총회에 참가하는 한국 대표단(박종규, 조상호 등)의 활동은 올림픽 유치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소개되고 있으며(『경향신문』 1979년 6월 26일, 8면), 박종규 회장의 귀국 메시지 역시 올림픽 유치에 관한 것이었다(『경향신문』 1979년 7월 10일, 8면). 하지만 이 시기까지는 대한체육회가 강력히 추진하는 수준이었고, 아직 정부 내에서 공식적 검토가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고 전해진다(김경훈 2000a, 25).

1979년 8월부터는 논의의 무대가 정부로 이전된다. 대한체육회로부터 3월 16일에 자료를 넘겨받은 문교부는 대한체육회 전문위원들에게 보충자료를 요구·취합하였고, 이를 토대로 체육국장 박성규가 『올림픽 유치건의안』을 작성하여 8월 3일 국민체육진흥심의회에 이를 제출한다. 그 내용은 크게 ① 한국의 경제 발전과 국력의 과시라는 올림픽의 목적, ② 서울시민들의 평균소득이 68년 당시 멕시코나 64년 당시 도쿄보다 낮다는 경제적 능력 평가, ③ 88올림픽으로 남북통일을 촉진할 수 있다는 효과, ④ 현재 입후보 도시 7개(런던, 브뤼셀, 상파울루, 시드니, 나고야, 알제, 베이징), ⑤ 직접경비 약 2,500억원 등을 골자로 하는 것이었다(김경훈 2000a, 32-34; 최만립 2010, 23). 위 자료를 기초로 8월 22일 국민체육진흥위원회 소위원회가 개최되었고, 경제기획원장관 신현확, 문교부장관 박찬현, 외무부장관 박동진, 대한체육회장 박종규, 정상천 서울시장, 윤일균 중앙정보부 차장이 개최에 찬성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최만립 2010, 27-28; 서울특별시 1990, 279-280; 손정목 2003b, 253).

1979년 9월에는 정부 내에서 공식적 의결이 이뤄진다. 9월 3일에는 내각의 서면 결의가 있었으며, 19일에는 국무총리 최규하, 경제기획원장 신현확, 문교부장관 박찬현, 대한체육회장 박종규, IOC위원 김택수, 서울시장 정상천, KOC부위원장 김운용이 국민체육진흥심의회를 열고 올림픽 유치를 결의하였다. 9월 21일 청와대에서 박정희는 88올림픽과 86아시안게임 유치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이 재가한 사항이므로 더 이상의 의결과정은 필요가 없었다. 24일에 열렸던 제 71차 차관회의와 25일 열린 제 70차 국무회의에서는 이 사항이 보고되는 것으로 모든 의결과정이 끝났다(“제71회 차관회의 의사일정 및 의안배부”, 1979년 9월 24일, “국무회의 의사일정 및 의안배부(제 70회)”, 1979년 9월 25일).

1979년 10월 8일 서울시장 정상천은 올림픽 유치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한다. IOC가 주최하는 올림픽은 개최도시가 주관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도권이 없었던 서울시장이지만 발표만큼은 그가 해야 했던 것이다. 정상천 시장은 올림픽에 필요한 경기장 시설(잠실종합경기장), 교통시설(지하철 2, 3,

<sup>40</sup> ANOC(Association of National Olympic Committees)는 1968년 멕시코에서 127개 NOC 중 78개 NOC가 찬성하면서 만들어진 단체다. IOC가 국가올림픽위원회(NOC)들과 일방적 관계를 맺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TV중계 수익 분배의 불공정, IOC의 일방적 규칙 제정 및 경기종목 제한 등이 그 중에서도 컸다. 또한 서구가 중심이 된 IOC위원 배분 구조로 인해 상대적으로 IOC 내에서 발언권이 적은 공산권 및 제3세계가 자신들의 영향력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를 내포한 조직이기도 했다(윤득현 2009, 138-139).

4호선, 김포공항 제2청사), 숙박시설(선수촌 및 20만명 규모 숙박시설), 레저시설(서울대공원 및 기타 공원)이 88년 이전에 모두 갖춰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겠다고 발표했다(서울특별시 1990, 281-2). 그 자리에는 대한체육회장 박종규, IOC위원 김택수, 전경련회장 정주영, 무역협회장 박충훈, 상공회의소장 김영선이 동석했다. 이 행사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체육계와 재계 모두가 관여하는 행사가 될 것임을 암시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의사소통 과정을 보면 일견 상세한 검토의 과정을 거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현지조사 한번 제대로 수행되지 않은 보고서들을 토대로 6개월도 채 걸리지 않아 이뤄진 이 결정을 상세한 검토를 거쳤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제대로 된 검토작업이 결여된 채 정권의 실세 박종규의 강력한 추진 및 권력자 박정희의 찬성에 의해 이뤄진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김경훈 2000a, 56). 10월 26일 박정희의 죽음과 함께 올림픽에 대한 논의가 중단된 것 역시 그간의 결정과정이 권력자들 사이에서의 논의와 결단에 의존한 것임을 방증해주고 있다.

올림픽 논의는 권력자의 죽음과 함께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다. 1980년 1월 19일 최규하 대통령 권한 대행은 올림픽 유치를 포기하겠다고 발표했다(고광현 1988a, 95).<sup>41</sup> 서울시 또한 올림픽 관련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다(동아일보 1980년 2월 6일, 7면). 그 해 5월 신군부가 등장하기까지 대한체육회장직에 머무르던 박종규가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의 유치에 관해 발언한 기록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비록 정상천은 서울시에서 올림픽을 계속 추진했다고 하지만(정상천 2013, 26), 대한체육회나 정부의 움직임으로 보서는 일단은 중단된 상태로 보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전두환의 등장은 올림픽과 관련된 고위 관료들의 교체로 이어졌다. 박정희의 죽음으로 권력에 공백이 발생하자 전두환과 '신군부'는 이른바 12.12 군사반란을 시작으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밟기 시작한다. 그리고 1980년 5월 17일의 전국 비상계엄령 선포와 5월 18일부터 24일까지 광주에서의 학살을 거치고 나서는 사실상 정권을 손에 넣은 집단이 되었다. 이에 따라 1979년 올림픽 유치와 관련을 맺었던 고위 공무원들도 일선에서 물러나게 된다. 이를 주도했던 인물인 박종규는 5월 중순부터 사실상 정치활동이 정지되었고, 6월 17일에는 공식적으로 김종필과 함께 권력형 부정축재자로 지목되었으며(『경향신문』 1980년 6월 18일자 1), 7월 14일에는 대한체육회장을 사임했다. 후임엔 몇 달 전부터 회장 직무를 대리해오던 조상호가 임명되었다. 문교부 장관 박찬현은 79년 12월에 이미 사임한 상태였고, 후임이었던 김옥길은 80년 5월 24일 이규호로 대체되었다(『동아일보』 1980년 5월 24일, 1면). 전두환의 대통령 취임과 맞물려 박영수가 정상천을 대신하여 서울시장이 되었

<sup>41</sup> 하지만, 해당 내용을 뒷받침할 기사나 출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보다 1주일 앞서서는 모스크바 올림픽 기간 중에 열리는 아시아경기연맹(Asian Games Federation, AGF) 총회에 86 아시안게임 개최를 신청한다는 기사가 등장한바 있는데(동아일보 1980년 1월 12일, 8면; 1980년 6월 20일, 8면), 이를 고려하면 공식적으로 아시안게임은 놔두고 올림픽만 철회했을 가능성도 있다.

다(『경향신문』 1980년 9월 2일, 1면).

고위관료들과 달리 실무 관료 차원에서는 인적 변화가 적어서, 올림픽 유치와 관한 논의는 1980년 9월부터 재개될 수 있었다. 조상호는 대한체육회장에 취임한 이후 올림픽 유치 논의를 재개했다. 이를 위해 대한체육회 내에서 올림픽과 관련한 실무를 담당했던 김세원 부회장, 주관중 상임이사, 전문위원 김예식, 이태근, 이원웅을 유임시켰고, 7월 15일부터는 모스크바 IOC총회에 참석하였으며<sup>42</sup>, 9월초엔 영어에 능통한 재미사업가 최만립을 명예총무로 영입하였다(김경훈 2000a, 66). 그는 IOC에 문의하여 11월 30일이 개최후보 신청 데드라인임을 확인했다(최만립 2010, 40).

하지만, 유치 논의를 둘러싼 상황은 박종규 회장 당시와 매우 달랐다. 조상호와 신군부의 관계는 박종규와 신군부의 그것과 판이하게 달랐기 때문이다. 조상호가 박종규처럼 자신의 위세를 앞에서 올림픽 유치를 밀어 부칠 수 있을 리 만무했고, 가능성과 타당성이 전제가 되어야만 추진할 수 있는 입장이었다. 그 역시 내심으로는 올림픽 개최를 신청함으로써 아시안게임 개최를 실현하는 정도를 생각했다 전해진다(김경훈 2000a, 64-66).

가능성과 타당성에 대한 검토에 기초한 결정과정이 필요한 상황인 이상, 1979년과 다르게 대한체육회 내부에서부터 의견을 모을 수밖에 없었다. 9월 29일 소위원회가 열렸고, 대한체육회 임원 조상호, 최만립, 김종렬, 주용준, 김성집, 김용모, 선우양국, 조동재, 박철빈이 참석했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전문위원들이 작성한 『1988년 제 24회 올림픽 유치의 사회·경제적 타당성』이라는 문건을 기초로 올림픽 개최 후보지 신청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회의의 목적이었다. 하지만 회의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학자출신 임원들은 찬성을 경기인 출신 임원들은 반대하는 분위기였다.

그 다음 회의는 11월 6일 대한체육회 확대상임위원회였다. 이 회의를 계기로 『올림픽 유치의 득과 실』이라는 문서가 작성되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올림픽 유치가 가져올 이득은 ① 국가의 대외이미지 고양, ② 86년 아시안게임 유치에 도움, ③ 탈락해도 후보국 명예 획득, ④ 신청서 작성 등 신청 자체로도 경험 축적, ⑤ 타국에 유치양보권 활용 가능, ⑥ 1지역에서의 올림픽 영구개최 논의 중이므로 마지막 기회일지 모름. 신청 자체로 의의 존재, 이상 6가지였다. 손실은 ① 신청 이후 소극적 태도를 보일 경우 국제 스포츠사회에서 신망 실추, ② 적극적으로 추진할 경우 경제 및 사회정책 측면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어려움, ③ 한국의 분단, 국제종합경기대회 개최경험 무, 재정능력 부족 등의 상황에서 신청 자체로 국제스포츠사회로부터 불신 초래, 이상 3가지 였다(서울특별시 1990, 283).

하지만 마지막까지도 유치신청에 대한 의견은 모아지지 않았다. 물론, 대한체육회는 찬반양론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개최를 신청하기로 했고, 문교부 체육국장 박성

<sup>42</sup> 이때 스페인의 전직 외교관인 사마란치가 IOC위원장이 되었는데, 조상호 역시 외교관 출신이어서 급세 가까워졌다고 한다. 이것이 후일 올림픽 유치에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최만립 2010, 36).

규와 장관 이규호도 이에 찬성했다(김경훈 2000a, 74). 하지만 서울시의 의견은 달랐다. 서울시는 11월 27일 올림픽 대회를 유치할 수 없다는 공문을 대한체육회와 문교부에 보냈다. 손정목이 기록한 증언에 의하면, 1979년 10월 8일 올림픽 유치계획 기자회견문을 작성했던 서울시 시정연구원 이동은 신입시장이었던 박영수에게 유치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고, 개최를 하더라도 서울과 지방의 빈부격차 증가라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지속적으로 반대의견을 피력했다고 한다. 그리고 공문에서는 경제 및 재정적 여건 상 올림픽에 필요한 제반 시설을 구비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올림픽 유치를 반대했다(손정목 2003c, 13, 15-17).

결국 결정은 이전 정권 시기와 마찬가지로 권력자의 결단에 의해 이뤄졌다. 11월 28일 문교부장관은 대한체육회의 찬성 공문과 서울시의 반대 공문을 모두 취합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때가 신임대통령에게 하는 첫 올림픽 관련 보고였다. 그런데, 전두환은 이러한 논의를 처음 접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유치신청서 제출을 지시했다. “전임 대통령이 결심한 사안을 특별한 이유 없이 변경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역사적인 사업을 추진해보지도 않고 처음부터 물러나서는 안된다”고 말하면서 말이다(서울특별시 1990, 283).

신청기간은 1980년 11월 30일에서 이틀 늦은 12월 2일, 대한체육회는 IOC의 모니크 베를리우 사무총장 앞으로 서한을 보내 유치의사가 있음을 알렸고, 이튿날 공문을 보냈다. 그럼으로써 약 2년간에 걸친 올림픽 유치관련 논의는 일단락 되었다. 이 때, 서울과 더불어 IOC측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 도시는 일본의 나고야, 호주의 멜버른, 그리스의 아테네였다(김경훈 2000a, 78).

### 3) 발전국가의 위기를 반영한 올림픽 유치 논의

위와 같은 사회정치의 위기상황은 올림픽 유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여러 담론들에 반영되어 있다. 올림픽을 왜 유치해야 하는지, 그 효과는 무엇인지 등을 논하는 과정에 1979-80년의 위기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1979년 8월과 9월의 올림픽 유치에 관한 논의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1979년 8월 22일 국민체육심의회 소위원회 당시 참석자들은 올림픽을 개최해야 할 이유로 크게 세 가지를 들었다. 국민의 총화(사회의 선진화)<sup>43</sup>, 공산권 국가들과의 교류,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우위 확보가 그것이었다(최만립 2010, 27-28; 서울특별시 1990, 279-280; 손정목 2003b, 253). 1979년 9월 21일 박정희가 올림픽 유치를 재가할 당시 올림픽을 유치하는 목적이 5가지가 제시되었는데, 이 역시 8월의 논의와 비슷했다. 그것은, ① 한국의 경제발전과 국력과시, ② 한국체육의 국제적 지위 향상, ③ 스포츠를 통한 세계 각국과의 우호 증진, ④ 공산권 및 비

<sup>43</sup> 후일 대통령이 된 노태우는 회고록에서 ‘사회의 선진화’로 이를 표기하고 있다(노태우 2011, 269).



동맹국가와의 외교관계 수립 여건 조성, ⑤ 국제적 체육행사를 통해 국민 일체감 제고였다(박세직 1990, 41).

이는 1979년 8월과 9월 단계에서 정권이 조우하고 있던 공산권과의 교류는 정권이 미국 카터 행정부와 의 갈등 속에서 얻게 된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 위험, 국내사회 기층으로부터의 저항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외적으로 위기를 맞은 박정희 정부의 관료들에게 올림픽은 국제사회 수준에서의 정부가 처한 고립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장치였다.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박정희 정부는 1978년부터 공산권과의 관계 개선을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한 바 있다(외무부 1990, 45).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의 위험성을 벗어나기 위한 조치였다. 스포츠 측면에서도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에 대한 한국의 강력한 참여의지가 1978년 여름 헝가리 외교부에 이미 포착되었다(“북한의 올림픽 준비와 대한민국 참가” 1978년 4월 6일). 그리고 1980년 초 카터 대통령으로부터 모스크바 올림픽 보이콧 요청이 왔을 때, 한국 정부의 기조는 미국에 즉답을 피하면서 동향을 살폈고(“모스크바 올림픽 불참문제” 1980년 1월 29일), 선수들은 불참시켰지만 7명의 심판과 조상호와 김택수 등 IOC회의에 참석할 체육계 인사들은 파견했다(“모스크바 올림픽, 회견대표단 파견문제” 1980년 7월). 미국 대사가 항의하고 참가자들의 국내소환을 요청하자, 외무부는 “KOC는 비정부기구이기에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낮은 답변과 함께 미국 정부의 요청을 거절했다(“면담요록” 1980년 7월 18일).

올림픽은 또한 박정희 정부가 국내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조우했던 위기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다. 1979년와 1980년 내내 대한체육회에서 올림픽 유치에 관한 핵심 실무인력으로 종사했던 김예식의 증언이 대표적이다. 그는 1978년 가을부터 불거져 나온 사회 구성원들의 불만의 목소리를 다스리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다. 그는 1978년 무렵 박종규가 박정희에게 유치를 권할 당시 민심을 달래고 정국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고 말했을 것으로 추측했다(김예식, 2011년 6월 25일).

실제로 사회정치에 대한 불만은 함평고구마사건과 안동가톨릭농민회 사건 등을 통해 1978년부터 가시화되었다. 비록 일선 지방행정기구 및 농협의 잘못된 행정에 일차적 책임이 있지만, 도시지역과 다르게 새마을운동이 성공하고 있다 평가되던 농촌에서 이 같은 ‘저항’의 움직임이 등장하는 것 자체가 박정희 정부의 사회정치에 균열이 존재함을 드러내는 장면이었다. 1979-80년 당시 서울시 관료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 정황을 재구성한 손정목도 이와 비슷한 증언을 하고 있다. 그는 올림픽이 “정치문제에 쏠리고 있는 국민의 관심을 스포츠 쪽으로 돌리기 위한 방안”이자(손정목 2003b, 252-3), “민심돌리기”였다고 보고 있다(손정목 2003c, 9).

전두환의 집권 이후 올림픽에 관한 결정과정에서도 올림픽은 사회정치의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책으로 규정된다. 앞서 우리는 전두환이 1979년부터 이뤄진 올림픽에 관한 논의를 접한바도 없는 상태로 올림픽 유치를 신청할 것을 지시했음을 보았다.

이렇게 단호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전부터 올림픽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1980년 8월, 전두환과 신군부 주요인사들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라는 틀을 벗어나 정권을 정악하는 막바지 단계에 이르는 상태였다. 그런 만큼 향후 정치를 어떤 방식으로 전개해나가야 할지를 두고 고민하던 시기였다. 이때, 삼성그룹 이병철의 주선으로 이들은 세지마 류조(瀬島 龍三) 이토추상사 대표 및 고토 노보루(五島 昇) 도큐그룹 회장과 만났다. 이들은 일본 자민당의 브레인, 정계의 흑막이라 불리고 있었고, 서울 지하철 1호선 공사에도 관여하는 등 한국의 정계와도 다양한 연줄을 가진 이들이었다. 이들은 1964년 도쿄올림픽이 가져다 준 효과를 설명한 뒤 ‘국민의사 집결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올림픽 개최가 필요하다고 제언한 것으로 전해진다(瀬島, 1995: 420-3).<sup>44</sup> 이 내용은 전두환의 자서전과 정확히 일치한다. 전두환은 자신이 올림픽 유치 아이디어를 갖게 된 계기가 세지마 및 고토와의 만남이었다고 증언한다. 이들이 “사회분위기를 일신하고 국민의 힘과 지혜를 모으려면” 올림픽 대회를 유치하는 게 좋을 것이라 제언했다는 것이다(전두환 2017, 331-2).

결국, 1979-80년의 사회정치 위기는 올림픽에 관한 논의가 있을 때마다 중요한 배경을 이루고 있다. 올림픽을 해야 할 이유 혹은 올림픽의 효과로 반복해서 말해지는 것이 사회통합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제적 스포츠 이벤트의 개최는 1960년대부터 계속해서 시도되어 왔던 것이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1979-80년 당시 올림픽 유치 논의가 올림픽의 목적이나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1979-80년 당시에 국가가 조우했던 사회정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올림픽을 유치했다고는 볼 수 없다. 하지만, 사회정치가 위기를 맞았던 정황은 논의 과정에 영향을 미쳤고, 이후 올림픽이 국가가 국내 사회를 상대로 질서와 통합을 추구하는 데 활용될 가능성은 매우 큰 것이었다.

올림픽 유치 논의에는 ‘경제발전’과 ‘국력의 과시’라든가 ‘대북한 우위 홍보’ 같은 이야기 또한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당시 상황은 경제발전의 과시라든가 대북한 우위를 선전할 만한 여건이 아니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발전국가가 위기를 맞았던 것이 당시였기 때문이다.

<sup>44</sup> 1981년 말 일본정부와 자민당은 세지마로 하여금 1981년 한일 간의 40억달러 경제지원금 협상의 교섭창구 역할을 맡겼다. 1980년 전두환 정부와 교류로 인해 가장 가까운 인물로 꼽혔기 때문이다(오구라 2015, 175-176).

이 외에도 이전 정권부터 친분이 있던 박종규가 10월 중에 전두환을 개인적으로 만나 올림픽 유치를 부탁했다는 증언이 존재하는데, 단수의 저작에 등장하므로 추가검증이 필요하다(김경훈 2000, 76).

## 2. 1988년 하계올림픽 유치와 개최 결정<sup>45</sup>

### 1) 관료 간 대립과 유치의 중단·재개

새로운 권력자 전두환이 명령으로 올림픽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기는 했지만,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올림픽 유치 신청을 철회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이후로도 약 6개월간의 논란이 정부 부처들 사이에 존재했다. 올림픽 유치에 대하여 경제기획원장, 서울시장, 국무총리 등은 부정적이었고, 문교부장관, 대한체육회장, 안기부장, 외무부장관 등은 긍정적이었다. 이는 예견된 것이기도 했다. 당시 금액으로도 수 조원이 들어가며 국가기구의 역량이 총동원되고 재벌, 심지어는 시민사회까지 동원되어 치를 수밖에 없는 행사를 다각적인 조사 없이 대한체육회와 문교부가 중심이 되어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대한체육회가 발행한 저작 스스로도 1979-80년 사이의 논의 및 결정 과정에 대하여 “올림픽 유치를 위한 추진 과정이 얼마나 주먹구구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라며 그 과정을 비판적으로 회고하고 있다(김경훈 2000a, 97).

갈등이 본격화 된 것은 1980년 12월 15일 IOC로부터 온 질문서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는 과정부터였다. 질문서는 총 151페이지에 걸쳐 경기종목, 문화예술행사, 개최 일정, 경기 시설, 부족시설 건설 계획, 준비상황, 대회운영 조직, 대회참가와 관련한 법률 정비, 선수촌 위치와 시설, 주요 국제행사 개최실적 등에 대한 면밀한 서면조사를 목표로 한 것이었다. 이에 대한 답은 1981년 2월 28일까지 영어와 불어로 제출해야 했고, 서울시의 지원 확인서와 대통령의 개최 보증서가 첨부되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된 것은 IOC 및 IF(종목별 경기연맹)의 요구에 맞는 시설의 건립을 약속하는 것이었다. 1979년 10월 정상천 시장의 발표 당시 언급했던 경기장 시설(잠실종합경기장), 교통시설(지하철 2, 3, 4호선), 숙박시설(선수촌 및 20만명 규모 숙박시설), 레저시설(서울대공원 및 기타 공원) 등은 IOC가 원하는 경기시설 및 도시 인프라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서울시는 경기 종목만 하더라도 22개 종목(근대5종 제외) 중 절반에 이르는 양궁, 카누(조정), 사이클, 승마, 펜싱, 체조, 하키, 수영, 역도, 요트 종목의 경기장, 프레스센터와 방송센터, 선수촌과 기자촌 등의 신설을 약속했다(서울특별시 1990, 286-290). 그리고 부랴부랴 1960년대 후반부터 건설부가 지정했던 강동구 둔촌동에 경기장들을 새로 짓고 또 조정, 승마, 요트 경기장을 새로이 만들 계획을 황급하게 세웠다. 이 과정에서 추산된 개최비

<sup>45</sup> 해당 시기 유치논의 및 활동에 대하여는 상당량의 공문서가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고, 김경훈(2000), 서울특별시(1990), 김명섭·양준섭(2014)는 이에 기초하여 당시 있었던 논의와 활동 과정을 매우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국가기록원 및 해당 저서를 중심 자료로 삼고, 이 과정에 관여했던 최만립(2010), 김운용(1990), 박세직(1990), 정상천(2013), 손정목(2003-3), 전상진(2011, 2013), 노태우(2011), 전두환(2017), 정주영(1998), 조중훈(1996) 등의 자료를 참조하였다.

용은 그간 공언되어 왔던 2500억을 2배 이상 상회하는 6900억에 이르렀다.

답변서는 2월 24일에 완성되었고 인편으로 IOC에 전달되었다. 특기할만한 점은, 이 시점에서 정식으로 IOC에 답변서 제출을 마친 도시는 나고야와 서울 둘 뿐이라는 점이다(김경훈).<sup>46</sup> 1964년부터 이어진 고비용 구조와 1976년과 1980년에 이어진 보이콧이 유치 후보도시들로 하여금 올림픽의 경제적 및 상징적 가치에 대해 의구심을 갖도록 만든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문서를 작성하는 도중에도 유치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은 계속되었다. 1981년 2월 문교부가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과 국무총리, 대통령 등이 회람한 문서에 따르면 1988년 올림픽은 유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이었고, 86 아시안게임의 경우 ‘가능성은 있으나 낙관불허’로 표기되었다(“국제경기대회 한국유치추진현황보고” 1980년 2월, 5).

필요한 모든 서류 및 보증금을 제출하고 나서도 유치활동을 계속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은 그치지 않았다. 예상보다 2배를 훌쩍 넘긴 직접개최비용(6900억원, 4월 16일 약 6100억원)과 서울시에서 2조 5천억(4월 16일 약 1조 9500억원)으로 계산한 관련 인프라시설 비용도 문제였고, 나고야에 비하면 한참이나 뒤쳐진 유치활동, 그리고 공산권 국가들의 존재로 인한 낮은 당선 가능성 등이 문제였다(“제 24회 올림픽대회 유치대책” 1981년 3월 18일, 15). 유치 활동 지속 여부를 두고 국무총리, 안기부장, 경제기획원장, 외무부장관, 문교부장관, 문공부장관, 서울시장, 대한체육회장, IOC위원 등 관계기관장이 모두 모인 회의가 1981년 4월 중순부터 한 달 사이에 차례 열렸다. 회의 때마다 논의의 방향은 크게 뒤바뀌었다.

4월 16일 회의에서는 부정론(경제기획원장, 서울시장, IOC위원, 국무총리)과 긍정론(문교부장관, 대한체육회장, 안기부장, 외무부장관) 사이에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끝났다(“제24회 올림픽 유치대책회담결과 1차”, 1981년 4월 16일). 4월 27일 회의 역시 같은 구성원이 참석했다. 이 때는 늘어난 개최비용으로 인하여 대통령마저 부정적이라는 국무총리의 발언과, 올림픽 유치에 실패할 경우 86년 아시안게임마저 불가능할지 모른다는 국무총리실의 보고서가 논의에 큰 영향을 미쳤다. 결론은 IOC에는 일단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과의 협상을 통해 86 아시안게임 개최 지원을 획득하고 대신 올림픽 유치를 포기하는 것이었다(“제24회 올림픽 유치대책회의 결과 2차”, 1981년 4월 27일). 이에 따라, 특사 자격으로 대한체육회 김집 위원이 키요카와 IOC위원을 만났으나 일본 측은 한국의 아시안 개최 지원 요구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았다(김경훈 2000a, 131).

결국 5월 16일, 국무총리 공관에 모인 총리와 부총리, 문교부와 문공부 장관, 서울시장과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대한체육회장과 IOC위원 등은 “적절한 명분 없이 올림픽 신청을 또 포기할 경우 국제 스포츠계에서 치명적인 국위손상 및 국민 사기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이 예상되므로 일단 81년 9월 IOC 총회 개최 전까

<sup>46</sup> 이 당시 서울이 제출한 답변서는 나고야 측의 답변서보다 3배에 이르는 분량이었다 전해진다(김경훈 2000, 88)

지 올림픽 유치활동을 계속 추진”하기로 결정했다(“제24회 올림픽유치 대책회의의 결과 3차”, 1981년 5월 16일). 올림픽의 유치는 이처럼 우발적인 사태의 연속선상에서 최종 결정된 것이었다.

다만, 올림픽의 유치 추진 결정이 완전히 무모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비록 한국이 냉전구도하에서 수행해왔던 역할로 인하여 공산권 국가들의 반대가 예상 되었지만, 아직 선진국은 아니었기에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존재했다(“제24회 올림픽유치활동 추진계획보고”, 1981년 4월, 46).

경기 및 기반시설 역시 나고야보다 나왔다. 1978년도부터 올림픽 개최 활동을 시작한 나고야였지만, 서울과 달리 경기장이나 올림픽 관련 인프라가 부족했다. 반면에 이미 보았듯이 서울에는 1970년대부터 시작한 잠실경기장 공사가 이미 상당부분 진척되어 있는 상태였다. 도시 설계 당시부터 올림픽 개최를 염두에 둔 잠실지구였으므로 도로여건 등의 경기장 주변 인프라 역시 나고야보다 나왔다. 호텔 등의 도시 전체 시설에서도 서울이 나고야보다는 나은 형편이었다. 이는 1981년 3월 31일~4월 3일의 ANOC 대표단, 4월 6~8일 IOC 조사단, 6월 9~11일 ISF회장이 올림픽 경기시설을 둘러보고 공통적으로 말한 사항이었다. 올림픽 ‘유치’의 준비는 나고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늦었지만, 올림픽 ‘개최’의 준비는 상대적으로 빨랐던 것이 당시 서울이 가진 강점이었다.

## 2) 추진엘리트의 형성과 올림픽 개최 결정

올림픽 유치활동 추진이 결정된 지 3일 뒤인 1981년 5월 19일 정부는 본격적인 유치활동을 위해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국가안전기획부, 경제기획원, 외무부, 문교부, 문화공보부, 서울특별시, 대한체육회, IOC위원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로 올림픽유치대책위원회를 만들었다(“올림픽유치대책실무위원회안건”, 1981년 5월 19일, 1). IOC는 올림픽 유치 및 개최의 기본 주체를 도시로 설정하고 있지만(IOC 2015, 72-3), 서울시가 아닌 행정부가 계속해서 유치활동의 주체가 된 것이다. 반면에 대외적 활동에 대비해서는 ‘1988 서울올림픽 준비위원회’라는 조직을 새로이 만들었다(“올림픽유치대책실무위원회안건”, 1981년 5월 19일, 7). 올림픽 유치활동이 국민적 활동이라는 점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지만(김경훈 2000a, 156), 실은 올림픽은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는 올림픽 현장을 염두에 둔 조치라 할 수 있다(서울특별시 1990, 298). 5월 21일 문교부 체육국장의 제안을 받은 정주영은 이를 수락했고, 3일 뒤엔 문교부장관과 유학성 안기부장이 현대의 정주영, 대우의 김우중, 한진의 조중훈, 동아의 최원석을 만나면서 일부 재벌의 참여가 시작되었다. 나중에는 한양의 배종렬, 재미교포 기업가 더글라스 리 등 외국과의 무역에 관여하고 있는 이들을 추가로 참여시켰다. 이윽고 27일에는 공식대표 6명(서울시장, 대한체육회장, 정주영 유치준비위원장, 이원경 대한체육회 상임고문, 유창순 무역협회장, 이원홍 KBS사장)을 포함하여 체육계 대표 4명, 재계대표 7명, 실무자 58명, 보도진 16명, 여성지원팀 15명을 구성했다(“IOC총회 파견대표 인선”, 1981년 5월 27일)..

이 과정에서 우리는 지배블록이 모두 올림픽에 관여하게 되었음을 본다. 정권담당 엘리트(신군부)와 엘리트관료집단에 이어 재벌이라는 새로운 엘리트집단이 올림픽에 관여하면서 발전국가 지배블록의 거의 전원이 올림픽 추진엘리트 블록을 형성한 것이다. 단순히 민간이 올림픽을 주도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올림픽이라는 거대 행사는 유치단계에서부터 그랬지만 국가기구가 독자적으로 수행하기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기존에 해두었던 준비도 거의 없는 상태였던 데다가 국민들로부터도 적극적인 지지를 받기 어려운 것이 발전국가의 올림픽 수행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동원할 수 있는 것은 발전국가의 오랜 파트너였던 재벌이었다. 유치 이후 개최 준비과정을 염두에 둔다면 재벌의 참여는 더더욱 필요한 것이었다(김경훈 2000a, 158-9). 이러면서 지배블록은 올림픽 추진 엘리트 집단이 되었다.

1980년 6월부터 8월 사이의 유치작업을 주도한 것은 역시 엘리트관료들이었다.<sup>47</sup> 그 중에서도 외무부와 대한체육회가 이 기간 동안의 유치활동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외무부는 5월 25일 공문으로 재외공관들에게 해당 지역 IOC위원들과 접촉하여 한국 지원 여부를 확인할 것을 명령했다(“88년 올림픽 서울 유치교섭”, 1981년 5월 25일). 재외공관들은 이를 수행하면서 IOC위원들의 발언을 다시 유치준비위원회에 전달했다. 약 한 달 뒤 그 결과를 취합한 문서를 보면 1981년 6월 26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접촉대상 64명 중 34명을 만났고, 그 중 지지자 8명, 의사불투명 9명이었다(“올림픽 유치교섭 현황”, 1981년 7월 1일). 일주일 뒤 집계에서는 지지 27명에 호의적 고려 6명으로 보고되었다(“올림픽 유치교섭”, 1981년 7월 4일).

1981년 7월에는 체육계 인사들이 각종 국제스포츠 회의에 참여하여 유치활동을 전개했다. 전상진 대한체육회 부회장은 7월 6-14일 미주지역 NOC총회에 참석하여 사마란치 IOC위원장과 바스케즈 라냐 ANOC회장을 만났으며, 조상호 대한체육회장과 전상진 부회장, 최만립 총무는 7월 30일~8월 1일 ANOC총회에 참석하여 프리젠테이션을 수행했다. 이어서 김운용은 미주 및 유럽 15지역 IOC위원들과 접촉을 가졌다. 이러한 활동 끝에 8월 10일 파악된 지지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그리고 10일 뒤 외무부는 개최지지 16명에 호의적 반응 12명으로 그 수를 증가시켰다(“88년 올림픽유치 특별대책반 제1차 회의자료” 1981년 8월 22일, 2).

<sup>47</sup> 3월 18일 회의에서는 올림픽 유치활동 재정으로 약 7억 7천3백만원을 책정했다(“제24회 올림픽대회 유치대책”, 1981년 3월 18일, 9). 6월 29일 문교부가 발행한 공문에서는 모자라는 금액은 정주영 준비위원장이 지원할 것이라 표기하고 있다(“제24회 올림픽 및 제1회 아세아 경기대회 유치활동 계획”, 1981년 6월 29일). 또 바덴바덴에서의 유치활동비 중 기 예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족분 234,412천원 중 156,426천원도 민간준비위원, 즉 재벌기업주들이 담당했다(“88올림픽 유치종합대책”, 1981년 9월 11일).

[표 1] 득표전망  
(출처 : “국제경기 유치 대책회의 결과 시달 (통보)”, 1981년 8월 10일)

	지지	회의적	반대	미정	부족표
문교부	21	18	16	28	21
체육회	18	20	14	31	24
외무부	11	14	15	43	31

여전히 IOC위원 총 83명 중 절반인 42명에는 모자란 수였지만, 1978년 10월부터 올림픽 유치를 시작하여 1979-80년 사이에 IOC위원 거의 전원을 초청하고 간담회를 가졌던 나고야에 비하면(김경훈 2000a, 137), 서울의 득표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다. 게다가 이 무렵 나고야의 올림픽 유치에 변수가 하나 생겼다. 나고야 시민단체의 올림픽 반대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일부 IOC위원들에게 시민들의 올림픽 반대 염서가 전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올림픽 유치교섭”, 1981년 8월 22일).

9월부터는 정권의 2인자 노태우 정무장관이 개입하기 시작했다.<sup>48</sup> 신군부의 2인자였던 그는 9월 3일 전두환에게 관련 상황을 보고했고, “88올림픽은 여하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유치”하라는 지시를 얻었다(“88올림픽 유치종합대책, 1981년 9월 11일). 이튿날인 9월 4일부터 “올림픽 유치 비상대책회의”라는 이름을 내걸고 정부 내 관련부처장들을 모아 회의를 주재하기 시작했다. 경제관료들은 마지막까지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신군부의 핵심인사가 대통령의 지시를 앞세우자 반대의견은 피력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김경훈 2000a, 235; 노태우 2011, 271). 물론 마지막까지 서울시장과 연구관은 올림픽에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바덴바덴에서 재정지출을 아끼는 바람에 체육관료들과 마찰을 빚은 바도 있지만, 여러 통로를 통해 정부 최고 위층의 뜻은 거의 그대로 관철되었다(이방원 1989, 81-83).

9월 5일엔 IOC 위원들이 소재하고 있는 해외 공관에 “정부는 88년 올림픽을 기필코 유치할 계획인 바, 귀하는 귀지의 IOC 위원이 바덴바덴 총회 출발 전에 재접촉. 아국 유치 지지를 확약받도록 교섭하고 결과 보고 바람”이라는 내용의 단문을 모두 보냈다(“88 올림픽 유치”, 1981년 9월 2일). 또 체육계 인물들인 조상호, 전상진, 최만립, 김운용 등이 각기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등을 돌면서 IOC위원들을 만난 뒤 독일 바덴바덴으로 향하는 일정을 잡았고, 올림픽에 그토록 회의적이었던 남덕우 국무총리까지도 북유럽 국가들을 순방하면서 IOC위원들을 만나기로 했다(“88년 올림픽 유치교섭 세부계획”, 1981년 8월 26일). 정주영 등의 기업인들 역시 9월 중순부터 IOC위원들을 만났다(정주영 1998, 274).

마지막으로 바덴바덴에는 올림픽 유치와 관련하여 도움이 될 만한 인물들이 총 동

<sup>48</sup> 김운용(2008년 10월 27일)과 전두환(2017, 339)은 1981년 초 노태우가 정무장관에 임명되면서 유치활동에 뛰어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하지만 1차자료 상에는 확인된 바가 없고, 본인 역시 9월부터 활동에 뛰어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다(노태우 2011, 271).

원되었다. 정해진 대표단과 수행원 외에도 월터 정, 김세원 전 KOC부위원장, 손기정 등 국제 체육계와 관련이 있는 인물까지 총동원했다(“IOC총회대책” 1981년 9월 2일, 27-30, 46-48). 심지어는 정계에서 물러난 박종규까지 국제스포츠계에 알려진 인물이라는 이유로 비밀리에 바덴바덴으로 보냈다. 이들은 9월 20일 도착하는 즉시 담당 국가의 IOC위원들을 만나면서 서울 개최에 재한 지지를 호소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활동 가운데 올림픽의 서울 개최를 지지하는 IOC위원들의 수도 늘어났다. 9월 6일 파악된 서울 지지 IOC위원 수는 31명(지지 21, 호의 10)명으로 증가한 상태였다(“88올림픽 유치 종합대책”, 1981년 9월 11일). 9월 18일에는 지지 27명, 호의 6명으로 증가했다(“올림픽 유치활동 추진상황 보고”, 1981년 9월 18일), 9월 24일에는 지지 26명, 호의 13명으로 거의 과반에 근접한 것으로 파악되었다(“올림픽 유치대표단 보고 제 3보”, 1981년 9월 24일). 9월 27일에는 지지 31명, 호의 16명으로 과반을 넘겼다(“올림픽 유치 활동 상황 제 6보”, 1981년 9월 28일). 마지막으로 9월 30일에 실시한 최종점검에서는 호의 없이 지지, 중립, 반대, 불참을 조사했는데, 그 결과는 지지 32, 중립 21, 반대 28, 불참 1 이었다(“올림픽 유치활동 상황 보고 제 10보”, 1981년 9월 30일).

IOC 회원국의 연합회 명단 명단

- 가. IAAF : Nebiols (시리아) 황근
- 나. FISA : Keller (스위스)
- 다. IHF : Høegberg (노르웨이)
- 라. NOC 총재 멕시코의 Mario Alegria Vaquero Ruiz  
 명단: 조문·NOC 및 체육계장관 - 평양가을.  
 Mexico 대표단: Pedro Ramirez Vazquez  
 (현 제정 장관)  
DR. Eusebio May

- 마 Adidas 회장 : 조문
- Danler 회장 : 김영우 회장

[그림 3] 서울올림픽 유치설명자료에 기록된 관계자의 메모  
 (출처 : “IOC 총회대책”, 1981년 9월 2일)



2. 籌款交涉活動

○ 代表團이 9月20日 現地に到着即時 作戰班 交涉班, 張報班, 支援班으로 業務를 分掌함

一 交涉班은 KOC 常相路 委員長, KOC 全相振 副委員長, 崔萬九 總務外 金養龍 總裁 가 指導, IOC 委員別 交涉對象을 定하여 求 能功功 展開

一 서울市長, 鄭周永 委員長은 全体的으로 接觸 하였으며. 特히 脆弱委員은 重點的으로 接觸함

一 劉嘉順, 李光榮, 張盛煥, 崔重勳, 崔元碩, 姜錫烈, 金守中等 家業系 人士들이 側面支援

一 朴錫老 前會長의 側面支援 (Addidas 會長, 麥시코 NOC 委員長) 0126

[그림 4] 88올림픽 서울유치교섭단 귀국보고 중 박종규의 활동에 관한 메모 (출처: "88 올림픽 서울유치교섭단 귀국 보고", 일자 미상)

제 84차 IOC총회는 9월 29일부터 열렸다. 9월 29일에는 개최 신청도시의 프리젠테이션이 있었고,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서술) 30일에는 투표가 있었다. 투표 결과는 52대 27, 개최지 서울 당선이었다(서울특별시 1990, 303, 308).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상했던 지지표 수치를 훌쩍 웃도는 것이었다.

이렇게 많은 득표를 하게 된 데에는 한가지 변수가 있었다. 비밀리에 바덴바덴에 동행한 전직대한체육회장 박종규가 IOC 위원들을 좌우하는 거물급 인사들을 만난 것이었다. [그림 3]은 당시 관계자가 공문에 남긴 메모인데, 아래에 별도로 세계적 스포츠 용구 브랜드인 아디다스의 사장 다슬러(Horst Dasler)의 이름이 표기되어 있다. 다슬러는 1950년대부터 선수들에게 아디다스 스포츠 용구 사용을 대가로 후원금을 제공하면서 세계 스포츠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에 즈음해서는 IOC의 아마추어 규정을 어기고 공공연히 선수들을 후원했다(스미트 2008, 96-104). 1970년대부터는 각국 스포츠협회와 IOC위원들, IAAF,

FIFA같은 거대스포츠 단체에 대하여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사마란치 IOC위원장부터가 다슬러 후원에 힘입어 위원장이 된 사람이었다(심슨&제닝스 1992, 118-119).

9월 24-5일 두 번에 걸쳐 박종규, 조상호, 정주영을 만난 다슬러는 44표 득표를 장담할 정도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했고, 거래의 댓가로 미주지역 올림픽 방송 중계권 및 올림픽 후원사 선정권을 요구했다(이방원 1989, 30-33). 다슬러의 역할은 대한체육회와 서울시가 발간한 자료에서도 인정하는 바이며(서울특별시 1990, 308), 그 역할이 박종규에게 있었음은 [그림 4]의 하단과 같이 유치단이 육필로 작성한 보고서에 존재하는 “박종규 전 회장의 측면지원(아디다스 회장, 멕시코 NOC 위원장)”이라는 표기로 증명된다(“88 올림픽 서울유치교섭단 귀국 보고”, 일자 미상).

### 3) 아시안게임 유치

86 아시안게임은 서울올림픽과 한 묶음이다. 1988년 올림픽 유치와 동시에 기획되었기 때문이다. 3장 2절 첫머리에서도 밝혔듯 1970년대 중반 잠실운동장 건립 당시에는 1982년 아시안게임이 목표가 되었고, 1977년 지하철 2호선을 계획할 당시에도 성수부터 구로까지의 강남구간은 1982년 아시안게임과 동시에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한 바 있다(경향신문 1977년 10월 6일, 1). 하지만 이듬해 초, IOC위원 김택수는 1986년 아시안게임 유치를 언급했고(경향신문 1978년 1월 6일, 18면), 그 해 말 아시안게임은 인도의 뉴델리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되었다(경향신문 1978년 12월 21일, 8).

아시안게임 개최 논의가 등장한 것은 1979년 8월 문교부 체육국장이 작성한 문서 『88년 제 24회 올림픽대회 유치계획의 사회경제적 실현가능성』에서였다. 이 때 구체적 제안으로 한국이 종합적 국제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해본 경험이 없는 점을 고려, 86년 제 10회 아시안게임을 치를 것을 제안했다(김경훈 2000a, 36). 이 제안은 8월 22일 국민체육진흥심의회 소위원회, 9월 19일 본회에서 계속해서 채택되었고(체육부 1987, 89), 서울시장 정상천이 올림픽 유치를 발표할 때에도 1986년 아시안게임의 병행추진을 함께 발표했다(서울특별시 1990, 283).

88 서울올림픽과 비교할 때 86 아시안게임 개최 논의는 비교적 부침을 덜 겪고 진행되었다. 박정희 사망부터 신군부의 집권 사이에 서울올림픽과 달리 개최 논의가 계속되었고 개최신청도 이뤄졌기 때문이다. 1980년 4월 24일이 신청마감임을 확인한 대한체육회는, 1980년 3월 25일부터 유치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대한체육회와 문교부를 거친 유치신청안은 4월 4일 관련부처(중앙정보부, 경제기획원, 교통부, 체신부, 서울특별시) 국과장급회의를 통과했고, 4월 14일과 15일에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제10회 아시아경기대회 한국유치계획”, 1980년 4월 10일), 4월 21일에는 대통령 최규하의 재가를 얻어, 신청서는 4월 24일에 AGF측에 전달되었다(체육부 1987, 90). 이후에도 아시안게임은 1981년 말 개최 결정이 있기까지 한

번도 철회되거나 논의가 후퇴한 적이 없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이런 확고한 결정과 달리 AGF의 개최지 결정은 1년 넘게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공전을 하게 된다. 이는 분단상황 및 국제사회 속에서 한국이 수행했던 냉전적 역할과 관계가 있다. AGF는 IOC처럼 서구 자본주의 국가가 헤게모니를 쥔 스포츠기구가 아니었다. 중동과 공산주의 국가들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고, 그로 인해 한국에 우호적인 조직이 아니었다. 1986년 아시안게임 개최도시는 1980년 모스크바올림픽 개최기간 중 열리는 AGF 총회에서 결정하기로 되어 있어, 대한체육회 부회장이었던 조상호 및 김택수 IOC위원이 5월부터 서면을 통한 유치 작업에 나섰다. 다수의 아시아 국가들이 모스크바올림픽에 불참하면서 총회는 12월 4-5일로 연기되었다. 그런 가운데, 시한을 넘겼음에도 유치신청을 받아준 AGF측의 결정에 따라 9월 8일엔 이라크가, 11월 15일엔 북한이 유치를 신청했다. 한국에서는 10월 말 11월 초 조상호 체육회장과 최만립 명예총무가 여러 국가들을 순방하며 유치활동을 하여 과반이 넘는 16표(총 31표 중)의 지지를 확보해 두었으나, 총회는 투표를 미루고 현지조사를 먼저 실시한 뒤 차후 표결을 하기로 결정했다. 중동국가들과 사회주의국가들이 이를 지지한 것으로 전해진다(체육부 1987, 92-97).<sup>49</sup>

1981년에 접어들면서 아시안게임 유치 논의는 올림픽 유치 논의에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된다. 1981년 2월 16일에 열린 회의에서는 올림픽과 달리 아시안게임 유치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였고, 그래서 올림픽과 달리 ‘대회 유치가 기필코 실현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 명시되어 있다(“국제경기대회 한국유치 추진현황 보고”, 1981년 2월 16일, 6). 같은 해 4월 16일 회의 석상에서 유치에 반대의견을 피력하던 서울시장도 ‘아세아경기는 치를 자신이 있다’고 말하면서 아시안게임 유치를 주장했다(“제24회 올림픽 유치대책회의결과 제1차”, 1981년 4월 16일).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비용이었는데, 올림픽이 적게는 2500억, 많게는 6000억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된 데 비하여, 아시안게임은 750억 정도의 비용만 들여도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이다(“국제경기대회 한국유치 추진현황 보고”, 1981년 2월 16일, 3). 그리고 4월 27일 회의에서 내려진 결론도 나고야 측에 서울의 유치 포기를 대가로 아시안게임 유치에 관한 지지를 획득하는 것이었다. 이 협상이 결렬된 이후 정부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모두를 유치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한 조직은 올림픽 유치 조직과 매우 유사했지만, 완전히 중첩되는 것은 아니었고, 몸집이 좀 더 작았다. 올림픽과 달리 다양한 정부부처의 적극적인 개입은 눈에 덜 띄는 편이었다. 1981년부터의 유치활동은 조상호 대한체육회장과 전상진, 최만립 등의 임원들, IOC위원 김택수 등이었다. 이들은 서면 요청과 국제회의의 참석(국제복싱연맹, ANOC 총회 등)하여 아시아지역 체육관계자들을 만나 설득 작업을 수행했다(“ANOC 총회 보고서”, 1981년 8월). 그 와중에 3월로 예정되었던 AGF조사단의 현장조사는 10월로 연기되었다. 자동적으로 9월 바덴바덴 IOC총회와

<sup>49</sup> 단, 이것은 유치에 있어서 오히려 다행이라는 분석이 있다. 만약 북한이 이라크를 지지하면서 신청을 철회했을 경우 이라크의 승리가 자명했다는 것이다(체육부 1987, 98).

더불어 열리기로 한 AGF총회 또한 11월로 연기되었다(체육부 1987, 99).

남북대결이 되어버린 아시안게임은 반드시 유치해야 하는 것이었다(“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유치대책회의결과”, 1981년 8월 10일). 하지만 상황은 낙관할 순 없었다. 당국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그 때까지의 개최지 결정이 미뤄지는 이유도 공산권 및 아랍에 의한 것이었고, 이들의 의지에 따라 서울 개최는 불가능해질 가능성도 매우 큰 상태였다. 8월 10일을 기준으로 한국, 북한, 이라크가 모두 입후보 상태를 유지하면 한국과 이라크 중 하나, 한국과 북한이 남으면 한국 우세, 한국과 이라크가 남으면 이라크 우세 라는 것이 당국의 분석이었다. 이에 대한 대책 역시 올림픽과 비슷했다. 중동과 관련이 있는 기업가들인 쌍용의 김석원, 현대의 정주영, 대우의 김우중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제10회 아세아경기대회 추진계획(안)”, 1981년 8월 10일).

올림픽 개최 결정 후 약 2달이 걸린 아시안게임의 개최 역시 또하나의 총력전이였다. 올림픽 유치 이후 중동지역의 지지를 생각하여 한국 정부는 이라크의 개최 지지도 검토한 바 있으나(“아시안게임 관계회의”, 1981년 10월 28일), 이라크가 개최 신청을 철회했음을 10월 19일 내한한 AGF조사단으로부터 듣게 된 것이다(체육부 1987, 104). 남북간의 아시안게임 개최를 둘러싼 경쟁 구도가 만들어졌고, 예상은 남한 13대 북한 12의 박빙이었다(“아시안게임 관계회의”, 1981년 10월 28일). 여기서 이길 경우 “비동맹권 및 국제사회에서의 지위 향상과 대북한 우위”라는 효과가, 패할 경우 “대북 우위감 손상 및 대북 외교전 불리”라는 결과를 낼 것으로 당국은 내다봤다. 따라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는 다시 한번 발전국가의 파트너인 재벌집단을 동원했다. 공식교섭단은 대한체육회의 조상호, 최만립, 김세원이 맡았지만, 비공식 교섭단 의 경우, 현대의 정주영과 이명박, 동아의 최원석, 쌍용의 김석원, 대우의 김우중과 김덕중, 삼성의 이건희, 한양의 배종렬, 남방개발의 최규일, 진흥기업 박영준, 정부개발 김용모, 한국건설 김희근 등 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사업을 벌이는 기업가들이 다수를 차지했다(“제 10회 Asian Game 유치종합대책”, 1981년 11월 16일). 이후 예상 득표는 14대 9(11월 6일). 11월 중순에는 16 대 10으로 기울어져 갔다(“Asian Games 유치교섭방향협의자료”, 1981년 11월).

개최 결정과정은 다소 싱거웠다. 11월 24일 무렵부터 북한이 AGF회장에 개최 신청을 철회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온 것이다(“AGF대표단 보고 2~4보”, 1981년 11월 25일). 결국, 11월 26일에 열린 총회는 서울이 단독 후보지가 되었음을 밝히고 박수로 개최를 결정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AGF 대표단 보고”, 1981년 11월 27일).

#### 4) 올림픽 유치와 발전주의 정치의 변용

전두환은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국민적 자신감과 일체감이 형성되고 당면한 경제사회적 위기를 극복할 것이며, 올림픽을 통해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것이라 내

다보았다고 말했다(전두환 2017, 338). 결국 올림픽 유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논의에 참여한 자들이 염두에 둔 효과란 발전국가의 국제사회 내 지위상승과 국내사회에 대한 사회정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후 1981년의 올림픽 유치를 둘러싼 논란, 유치 활동, 프리젠테이션, 전시 등 전 과정에서 한국의 올림픽 추진 엘리트블록은 발전주의에 기초하여 사고하고, 인정을 욕망하면서 서울을 홍보했으며, 발전주의에 기초한 담론을 구사했다.

1981년 상반기에 전개된 논의들은 발전국가 한국의 관료들이 발전주의 이데올로기 및 국제사회에서 내 인정욕구에 기초하여 사태를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2월 회의의 자료는 올림픽은 유치가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유치활동 자체로 국력을 과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국제경기대회 한국유치추진현황 보고”, 1981년 2월 16일). 4월 16일 회의에서 찬성하는 측의 기본적 입장은 이제 와서 철회하면 국가의 위신에 손상이 초래된다는 것이었고, 한국은 개발도상국이므로 후진국이나 다른 개도국으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제24회 올림픽유치에 따른 문제점 검토”, 1981년 4월 16일, 4-5). 올림픽 유치의 전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부정적 전망의 주 요인은 북한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들의 반대 및 국제사회에서의 낮은 지위였고(“제 24회 올림픽 유치대책” 1981년 6월, 5), 긍정적 전망의 요인은 앞서도 말했던 것처럼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었다. IOC위원 교섭 시에는 서울이 근대화된 국제도시임을 강조하라는 지침이 존재했으며(“88년 올림픽 서울유치교섭”, 1981년 7월 7일). 유학성은 재벌회장들에게 국제사회 내 한국의 ‘대외 이미지 개선’을 이유로 참여를 부탁했다(김경훈 2000a, 160).

IOC총회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전시와 조상호 대한체육회장의 프리젠테이션 역시 한국의 발전을 강조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1981년 6월에 마련된 전시장 계획안에 따르면, 서울올림픽 전시장은 크게 3 섹션으로 나뉘어 있었다. 첫번째 섹션에서는 한국의 전통문화유산과 자연환경, 한국 역사 등을 보여주고, 두번째 섹션에서는 한국의 발전상(경제, 사회 등), 국제행사 개최(미스 유니버스 등), 한국의 국제적 지위, 국제경기 개최 실적, 스포츠의 대중화, 서울시의 인프라, 그리고 88년에 예상되는 서울의 모습 등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설계 되었으며, 세번째 섹션은 올림픽의 비전과 올림픽 관련시설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구성되었다(“올림픽한국전시관개설 계획 보고”, 1981년 6월 27일). 특히 제 2 섹션이 잘 보여주듯이 올림픽 전시장의 구성에서도 한국과 서울의 발전상을 보여주고, 지속적인 발전을 약속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IOC위원들과의 교섭 시에 활용했던 ‘설명 기본자료’ 및 9월 29일 대한체육회의 공식 프리젠테이션 역시 서울의 발전상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한다. ‘설명기본자료’는 계획의 엄밀성, 경기시설 구비, 국제 스포츠 이벤트 개최 경험, 교통 및 숙박, 방송, 의료 등 도시 인프라 등에서 서울이 나고야보다 앞서 있음을 먼저 제시하고, 이어서 올림픽을 선진국에서만 아닌 개발도상국에서 개최할 필요가 있음을 호소하도록 지도하고 있다(“IOC 총회대책”, 1981년 9월 2일). 이 설명기본자료의 내용은 9월 29일 프리젠테이션에 그대로 이어졌다. 서울시장의 프리젠테이션 연설은 서울의 발전

상, 국제대회 경험, 경기시설, 방송시설, 출입국 자유화, 의료시설, 외국어 인력 확보, 문화시설, 경제성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발도상국 최초의 올림픽 개최, 이상 총 10가지를 서울에서 올림픽을 개최해야 할 이유로 설명했다(서울특별시 1990, 304-306). 이어진 영상 “Seoul the Capital City of Korea for XXIV Olympiad 1988”은 같은 해 6월부터 8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만든 약 17분의 영상인데, 이 역시 내용은 서울의 발전상부터 시작하고 있다(“영화제작지서”, 1981년 8월 10일). 올림픽 유치를 위해 우선적으로 배려한 사항은 IOC위원들을 대상으로 발전국가 한국에 대한 인정을 먼저 얻어내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올림픽 유치를 위해 발신된 담론들은 발전국가 한국이 쌓아 온 성과에 기초하여 개최의 타당성을 호소하는데 그치지 않았다. 발전국가는 국제사회에서도 여러 모로 신뢰를 얻지 못한 상태였고, 국내사회에 대하여 억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이 문제를 개선할 것을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첫째, 질의응답시간에 가장 많이 문답이 오고 간 시설 및 도시 인프라에 관한 문제였다. 이에 대하여 조상호 대한체육회장과 이원경 고문은 IOC가 요구하는 국제적 수준의 모든 시설을 완비할 것과 각국 선수단에게 저렴한 비용에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88올림픽 서울 유치 교섭단 활동 결과 보고”, 1981년 10월 1일, 184-188). 둘째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지녀왔던 분단국 및 반공국가 정체성과 거리를 두어야 했다. 이전처럼 북한 및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대결자세를 가지고는 올림픽을 유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설명 기본자료’도, 박영수 시장의 프리젠테이션도 모두 그간의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스포츠 교류를 홍보했고, 문호개방을 약속했다.<sup>50</sup> 셋째로, 국제사회에 대하여 사회의 안정을 약속했다. 설명기본자료는 한국이 “5공화국 출범 이후 정치적 및 사회적 안정을 기하였다”고 말하고 있으며, 유치교섭단은 “5공화국 출범 이후의 정치, 경제, 사회적 안정”이 승리의 첫번째 요인이라 했다(“88 올림픽 서울유치교섭단 귀국 보고”, 일자 미상).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그저 큰 규모의 사건이 없었을 뿐이다(김경훈 2000a, 18). 그런 점에서 ‘사회적 안정’은 올림픽을 앞둔 추진 엘리트들의 약속으로 읽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러한 과제는 개최 결정 이후 해외 언론의 반응에도 나타난다. 한국 올림픽 개최에 대하여 국내의 정치적 불안정과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가 문제시되었기 때문이다(“88올림픽 서울 유치 교섭단 활동 결과 보고”, 1981년 10월 1일, 215-219).

아시안게임 유치과정에서 활용된 담론 역시 올림픽과 거의 같았다. 관료들은 먼저 기존 발전국가의 성과를 도시 인프라와 관련지어 강조했다. 1980년 12월 AGF총회 당시 처음부터 서울은 올림픽과 마찬가지로 경기시설 준비, 도시 인프라, 국제대회 경험 등을 강조했다(“1986년 제10회 아시안게임유치보고서”, 1981년 12월). 바덴바덴에 설치했던 전시장을 뉴텔리로 가져와 다시한번 전시하면서 서울의 발전을

<sup>50</sup> 설명자료에는 또한 상대방의 질문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북한과의 교류 및 긴장완화 노력, 보안 강화 등의 대책을 설명하라는 주문이 존재한다(김경훈 2000, 302).

자랑하는 방식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올림픽 전시관 뉴델리 전시”, 1981년 11월 28일). 이어서 등장한 것은 과거 분단발전국가의 정체성 탈피라는 과제를 수행해나갈 것을 약속하는 것이었다. 조상호 대한체육회장은 개최 결정 후 기자회견 자리에서 “모든 회원국을 초청할 것”을 약속하였고(“86아시안게임아국개최관련특이동향보고”, 1981년 11월 27일). 이들이 제출한 보고서 역시 공산권 및 비동맹권과의 관계 개선(특히 중국)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아시안게임 유치를 의미 짓고 있다(“86아시안게임유치결과보고”, 1981년 12월 4일).

다시 올림픽으로 돌아가서, 올림픽 유치작업의 성공 요인은 무엇이었을까?<sup>51</sup> 유치교섭단이 전한 바에 따르면, 서울의 사전 준비(경기시설 등)가 나왔다는 분석이 주요했다(“88올림픽 서울 유치 교섭단 활동 결과 보고”, 1981년 10월 1일, 221). 또 하나는 1981년 여름부터는 신군부-관료-재벌이라는 지배블록 전체가 올림픽추진엘리트가 되어 총력전을 기울였다는 점이다(“88서울올림픽유치결과보고, 1981년 10월 6일). 마지막으로 주목할 점은 개발도상국에서의 올림픽 개최라는 명분을 내세운 점이다. 이는 투표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대략적으로 서울 지지는 아시아 12표중 9표, 미주 18표 중 14표, 유럽 26표중 15표, 중동 및 아프리카 15표중 13표, 공산국가 11표중 1표로 추측되고 있다(“88올림픽 서울 유치 교섭단 활동 결과 보고”, 1981년 10월 1일, 22-23). 비율로 따지자면 아시아, 미주, 중동 및 아프리카의 지지율이 높은 편이었다. 미주 역시 대다수가 중남미 표였다. 유치교섭단 역시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및 아세아 개도국의 압도적 지지”를 승리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88서울올림픽유치결과보고”, 1981년 10월 6일).

올림픽은 발전국가의 지배블록에게 과제를 부여해주었다고 볼 수 있다. 올림픽 개최를 위해선 1970-70년대 발전국가가 취했던 세가지 정치기조에 대하여 일정한 변화가 필요해졌던 것이다. 첫째, ‘발전’의 지속 및 그 성과를 경관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개발도상국의 개최라는 명분을 통해 개최지로 당선된 만큼, 올림픽과 발전 - 경제성장과 국제적 지위 향상 - 사이의 긴밀한 결합관계를 전 세계를 상대로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둘째, ‘반공’으로부터의 일정한 전환이었다.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 보이콧 및 공산주의 국가들의 한국 개최 반대 의지는, 한국이 이전처럼 ‘반공’ 및 ‘분단’의 정체성을 유지해서는 제대로 된 올림픽 개최가 불가능함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이제 공산주의 국가들의 참가보장을 위해서는 반공주의 기조에 대한 약간의 수정이 필요했다. 셋째, 국내사회에 대한 사회정치의 필요성이었다. 독재와 학살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의 목소리가 분명해진 상태에서, 엘리트들은 이른바 ‘사회의 안

<sup>51</sup> 서울올림픽 유치 과정에 개입한 이들은 자신을 포함한 권력자들의 결심이 올림픽 유치를 가능케 한 것처럼 서술하는 경향이 있다(각주 23 참조).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결코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 올림픽 개최를 명령했다던 전두환도 적자가 심할 것이란 전망에 개최를 취소했었고, 거의 전원이 올림픽 개최를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주요 개최도시후보가 모두 철회하고 나고야와 서울만 남았다는 점, 모스크바올림픽의 보이콧으로 인하여 정치와 관련된 주제를 피했던 IOC총회의 분위기(“88서울올림픽 유치경과보고”, 1981년 10월 14일), 등 여러 외부 요인이 서울의 올림픽 유치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정', 즉 사회통합과 질서를 국제사회에 보여주어야 할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사실 위 세가지 문제들은 정권이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 특히 두번째 및 세번째 과제의 경우, 발전국가의 지배블록이 분단과 권위주의를 서로 맞물리게 함으로써 빚어진 것이었다. 분단을 내세워 권위주의를 정당화하고, 그 권위주의를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분단을 필요로 하는 상황을 지속시켰기 때문이다. 그랬기에 1970년대 데탕트 국면에 한국은 적응하지 못했고, 시민들로부터의 지지도 얻지 못했다. 이로 인해 제1기 권위주의 정권이 사라졌음에도 재등장한 군부는 학살까지 저지르면서 권위주의 정권을 연장시켰다. 이는 국내사회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결함으로 여겨졌다. 이에 따라 올림픽 추진엘리트들은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의 유치를 즈음하여 그에 대한 일련의 대책을 약속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지배블록은 발전은 계속 추진하되, 냉전 정체성으로부터 방향을 약간 선회하고 국내 사회의 질서와 통합이라는 과제를 수행해야 했다.



## 제 3 장 올림픽의 사회정치 기획

앞 장 맨 마지막 부분에서 다룬 바와 같이, 올림픽의 논의와 유치과정은 발전국가에게 사회질서에 관한 필요성을 증대시켰다. 여기에 두 요소가 또한 영향을 미쳤다. 첫째, 1980년대 들어 본격화된 발전국가는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문제를 맞닥뜨리고 사회질서와 사회통합을 본격적으로 추구했다. 둘째, 올림픽을 매개로 사회정치를 수행하고 이를 계기로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킨 참조 사례로 1964년 도쿄올림픽이 존재했다. 이 두 요소들의 영향 하에서 서울올림픽은 1980년대 발전국가의 사회정치 수단으로 기획된다.

### 제 1절 1980년대 사회정치의 본격화

1980년 9월부터 공식적으로 정치권력을 접수한 신군부는 사회문제와 그에 대한 대처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1980년 10월부터 사회정화운동이라는 거대 관제운동을 시작하고, 1980년 12월 5일에는 ‘사회보호법’을 만들었으며(동아일보 1980년 12월 5일, 1), 1981년 1월부터는 사회교육법 제정에 들어가 1983년에 마무리했다(매일경제, 1981년 1월 21일, 1). 그 해 11월에는 사회정화위원회의 부설로 ‘현대사회연구소’를 만들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들은 당대 한국사회가 여러 산업사회 병리현상 즉, 사회문제에 직면했다고 파악했다. 그래서 이들은 어느 정권보다도 ‘사회’라는 개념을 많이 활용했다. 우리에게 1980년대는 ‘사회과학의 시대’, 혹은 ‘사회과학의 전성기’로 알려져 있다(김원 2012년 6월 15일). 그러나 이는 시민사회의 비판적 지식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었다. 국가에게도 1980년대는 ‘사회의 시대’였고, 사회정치 시대였다.

#### 1. 사회질서를 위한 개입 강화

##### 1) 신군부의 등장과 사회질서의 문제화

1961년도에 쿠데타를 일으킨 군인들이 정권을 잡자마자 사회를 개조하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한국 사회 구성원 전반의 습속을 문제시했다는 점은 이미 언급되었다.

이들은 당시 한국 사회가 처한 빈곤 등의 문제를 ‘사회화’했던 것이다. 1980년도에 정권을 잡은 군인들도 마찬가지였다. 이들 역시 20년 가까이 이어져온 외형적 성장 위주의 정책과 이를 위한 분할적 사회정치가 만들어낸 사회문제들을 사회 구성원 전반의 습속 탓으로 돌렸다. 자신들의 부당한 정권 장악 과정에서 저지른 잘못 역시 피해자들의 잘못된 습속의 탓으로 돌렸다.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문제를 ‘사회화’한 것이다.

1979년 10월과 1980년 5월, 사회구성원들의 저항에 당면했던 권력자들은 인식과 대처방법에 있어서 유사성을 보인다. 자신들에 대한 반대 시위를 사회적 타자들이 주도하는 무질서한 집단행동으로 파악하고 이를 강력하게 진압하도록 한 것이다. 부마항쟁 당시 박정희에게 올라간 경찰당국의 보고는 이 시위를 ‘깡패’, ‘뜰마니’, ‘식당 뽀이’ 같은 사회의 하층인 또는 타자들의 무질서한 집단행동으로 폄훼했다(김하기 2004, 112). 이 보고 이후 박정희가 킬링필드까지 언급하며 강력한 진압을 주문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한홍구 2010, 32). 1980년 5월 광주에서 유혈 학살극을 벌인 전두환 역시 그랬다. 2017년에 출간한 자서전에서 “대학생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고, 대부분 일용직 노동자나 구두닦이, 녀마주이, 식당 종업원, 부랑자 차림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면서 사회적 타자들의 무질서한 집단행동으로 이를 폄훼했다(전두환 2017a, 401).<sup>52</sup> 이에 대한 유혈진압은 익히 알려진 바다.

그런데, 부당한 권력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와 움직임을 무질서한 집단행동으로 폄훼한 전두환의 발언은 개인의 회고 차원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미 1980년 5월 당시에도 정치권력을 장악한 이들은 그와 같은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1980년 5월 29일에 상영된 『대한뉴스』는 “안정만이 살 길”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서울의 봄’과 ‘광주 민중항쟁’을 다룬다. 이 국영 홍보매체는 다음과 같이 당시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노사간의 분규 학생들의 소요 등으로 사회는 안정을 잃고 있습니다. 교내에서 시위를 계속하던 학생들이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중략) 날이 갈수록 데모는 과열해지고 급기야 이렇게 거리로 나와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때에, 온 국민이 한 덩어리가 되어 나라살림을 걱정해도 난국을 이겨나가기 힘든 이 시국에, 이렇게 혼란을 빚어서야 되겠습니까? (중략) 5월 18일 자정을 기해서 전국 일원에 비상계엄을 확대 선포하고 전국 대학에 휴교령을 내렸으며, 내각을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계엄사령관은 18일 1시를 기해 포고령 제 18호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도 광주에서는 이날 또 참으로 엄청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학생들의 데모로 시작된 시위는 난동으로 변하고, 급기야 인구 80만의 광주시는 치안부재의 도시가 되었습니다(대한뉴스, 1980년 5월 29일).

<sup>52</sup> 실제로 그런 이들이 다수 참가했는지에 대한 사항과는 별개로, 사회의 타자를 항쟁의 주역으로 만들어 자신의 책임을 경감시키려는 전략으로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에는 정권만 아니라 언론 및 지식인들 다수가 도시 하층민들을 타자화하고 있었기 때문이다(김원 2006, 444-445).

1주일 뒤에 상영된 뉴스에서는 “활기 되찾은 광주”라는 표제를 달았고, 다음과 같은 나레이션을 통해 광주가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요가 가신 광주시, 이제 광주시는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지난 6월 1일 대한뉴스는 광주시의 하루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아침 일찍이 학생들이 나와 골목을 청소하고 있었으며, 거리에는 출근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분주했습니다. 한동안 휴교했던 국민학교 중학교도 문이 활짝 열려있었습니다. 모든 관공서는 정상근무에 들어갔고, 도청에 마련된 비상복구대책위원회는 피해 상황 조사와 복구대책 마련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불에 탄 건물은 철거되고, 파괴된 건물과 시설이 수리되고 있습니다. 보도블럭도 다시 깔고 거리를 아름답게 가꾸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에서 보다 빠른 치유를 바라는 광주시민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광주 공단의 공장들도 정상 조업이 이뤄지고 있었으며, 휴일에도 전 근로자들이 출근해서 그간에 밀린 생산량을 만회하기 위해 3교대 근무까지 하고 있었습니다(대한뉴스, 1980년 6월 3일).

이처럼 1980년의 권력집단은 80년 5월의 민주화운동을 무질서로 폄훼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진압을 ‘질서의 회복’ 또는 ‘정상의 회복’으로 규정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는 이후 정치권력을 완전히 접수한 이들 집단이 ‘질서’를 내세워 사회 구성원의 습속을 개조하고자 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1980년에 정권을 잡은 군인들이 1961년의 군인들과 유사한 점은 이것만이 아니다. ‘신군부’도 부터 1961년 당시 군인들이 쿠데타 직후 수행했던 것처럼 사회적 타자를 도시 및 사회로부터 배제하는 조치를 정권 접수 이전에 시작했다. 1980년 8월 4일 “사회악 일소 조치”를 발표하고 범죄자를 포함한 온갖 사회적 타자들, 심지어는 무고한 이들까지 검거하여 삼청교육대를 운영하기 시작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때 발표된 글 또한 1961년의 군부가 활용했던 개념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 오염원으로 여겨지는 사회적 타자를 ‘일소’하여 사회의 ‘명랑화’를 추구한다는 것이 이들의 선전이였다.

“그 동안 우리사회의 저변에서 선량한 국민을 괴롭혀 온 폭력·사기·불륜·마약사범 등 각종 사회적 독소를 뿌리뽑아 밝고 명랑하고 정의로운 새시대·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각종 불량배를 위시한 제반 사회악 일소를 위해 「사회악일소 특별조치」를 단행하게 되었습니다(중앙일보, 1980년 8월 4일, 6).”

이 조치에 따라 총 6만 755명이 검거되었다. 그 중 4만 347명이 이른바 ‘삼청순화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강압적인 체벌과 노역에 시달려야 했다. 사회적 타자들을 사

회로부터 분리한 뒤 가혹한 인권 침해와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이 ‘교육과정’ 도중 및 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만 해도 339명, 장애를 얻은 부상자는 2천 7백명에 달할 정도였다(강준만 2003a, 238-249).

## 2) 습속개조 기구의 확대·강화

1961년도의 군인들이 사회적 타자를 도시로부터 격리한 이후 ‘재건국민운동’이라는 사회정치 기구를 만들었듯, 1980년의 군인들도 사회적 타자를 격리한 이후 ‘사회정화운동’이라는 사회정치 기구를 만들었다. 앞서 언급했던 사회악 일소조치로부터 5일 뒤, 실질적으로 정권을 장악한 상태였던 신군부가 이끄는 정부는 경기도를 시작으로 사회정화운동이라는 새로운 관제캠페인 조직을 만들기 시작한다.

스스로는 시민사회의 자발적 움직임이라 하지만 이 조직은 새롭게 만들어질 정부가 발표할 각종 슬로건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이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통해 새로운 조직의 출발을 알렸다. 1. 모든 사회악을 하루 속히 제거하고 명량한 사회를 건설하는 데 앞장선다, 2. 근면성실하며 정직한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참된 복지사회를 실현한다, 3. 새 시대 새 사회 건설의 역군이 되어 국가 보위를 더욱 공고히 한다(사회정화위원회 1988, 19). 이들 구호 중 몇몇 개념들, 예를 들어 ‘명량한 사회’, ‘복지사회’, 그리고 ‘국가보위’는 사실 1980년 봄부터 국보위와 정부가 강조하던 내용이었다. 사회정화위원회는 1980년 8월부터 전국적인 자발적 조직이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이를 관제조직으로 볼 근거는 충분하다.

[표 2] 사회정화위원회 국고지원  
(출처: 사회정화위원회 1988, 40)

연도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계
금액(백만원)	2,274	3,289	3,520	4,116	5,771	6,114	7,307	32,441
국비	746	1,151	1,239	1,705	1,859	2,022	2,162	10,884
지방비	1,528	2,138	2,281	2,411	3,912	4,142	5,145	21,557

사회정화위원회 조직은 1980년 가을부터 본격화된다. 1980년 10월 28일, 이 조직은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만들어졌다. 이 과정에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조직을 지역, 직장, 학교로 나누고 수백만의 회원을 의무 가입시킬 정도로 비대화 시켰다. 지역단위에서는 리와 통 수준에서 20인의 위원을, 직장 단위에서는 100인 마다 20인의 위원을, 학교에서는 재적학생의 1/3이상 및 교직원 20인, 학부모 20인의 위원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했다. 그렇게 인원을 비대화시킨 결과 총 550만여명의 창설 초기의 회원이 되었다(사회정화위원회 1988, 26). 정부 스스로도 이런 비대한 조직에 문제를 느꼈는지 1981년 말부터 조직을 줄이기 시작했다. 예산은 국비 및 지방비를 기본으로 회비나 성금을 추가하는 방식이었는데, 매년 지원된 국

고는 [표 2]와 같다.

이 조직은 재건국민운동이나 새마을운동과 마찬가지로 사회 구성원들의 습속을 개조함으로써 사회를 개조하고 사회 질서와 통합을 추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당시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정의사회 구현”을 큰 목표로 삼았고, 이를 위한 중요 덕목으로 “정직, 질서, 창조”를 중요한 이념으로 설정한 뒤 이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이는 정부가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습속을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여 설정한 것이었다. 첫째, 이들은 한국사회 곳곳에 불신풍조가 만연한 상태라고 파악했다(현대사회연구소 1981, 29). 그래서 정직이라는 덕목을 강조하여 ‘신뢰하는 사회’를 만들 것을 목표로 삼았다. 둘째, 이들은 앞서 본 것처럼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습속이 무질서하다고 생각하여 질서가 지켜지는 ‘조화로운 사회’를 목표로 삼았다. 여기서 특기할 만한 것은 이 질서라는 것이 단순히 공공장소에서 교통질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 내에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자각하고, 이에 맞는 습속을 갖고 실천하는 것을 상정했다는 점이다(현대사회연구소 1981, 35). 국가가 사회구성원에게 부여하는 역할의 충실을 기대하는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랬기에 질서를 통해 이들은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한 것이다. 셋째, 국가는 위 두 개념을 사회발전에 필요한 이념들이라 규정하는 가운데(현대사회연구소 1981, 44), 이것들이 위로부터의 지시가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자발성에 기초하여 실천되기를 원했다. ‘진보하는 사회’라는 개념은 이러한 자발성에 대한 기대의 표현이었다. 결국 이것은 정직과 질서라는 개념으로 사회질서를 확보하고, 창조라는 개념으로 개별 주체들의 자발성을 동원하여 ‘단합’이라는 형태의 사회통합을 이루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방법론을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1960~70년대와 비슷했다. 개별 주체의 습속을 개조하는 것이 중요한 방법이었던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잘못된 사고와 관습을 바꾸고, 미풍양속을 고양하며, 새로운 가치관을 함양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정의사회’ 및 ‘복지사회’ 등을 구현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방법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의식개혁’이다(사회정화위원회 1988, 62). 앞선 시기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의식’ 또는 ‘정신’이 습속의 하부구조로 상정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국민정신의 쇄신’을 통해 ‘새로운 규범질서를 수립’하며(현대사회연구소 1981, 27), ‘새로운 가치관과 생활태도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의식 또는 정신이 바뀌면 새로운 규범질서 및 생활태도가 형성된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의식개혁’을 위한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관계캠페인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사회정화위원회의 구성원들이 문제적 습속을 보이는 이들을 현장에서 지도한다거나, 세미나와 강연회, 결의대회, 웅변대회 같은 행사를 개최한다거나, 홍보매체를 제작한다거나 하는 방법 등이 그것이다(사회정화위원회 1988, 62-63). 이러한 방식으로 사회정화위원회는 거리 및 교통질서, 행사에서의 질서, 상거래 질서 등을 생활화 할 것을 주문했고, 부당한 청탁을 배격할 것을 요구했으며, 허례허식을 추방하고, 의식을 개혁하며, 건전한 가정을 가꿀 것 등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주문했다(사회정화위원회 1988, 97-

150).

둘째, 재건국민운동이나 새마을운동과 달리 사회정화위원회는 정부기구였다. 그래서, 앞선 시기의 조직들과 달리 훨씬 많은 권한을 갖고 있었다. 사회정화위원회에게는 정부 부처간 업무를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다. 게다가, 검찰과 경찰이 갖는 사정기능까지 갖고 있었다(『한겨레신문』 1988년 6월 3일, 1). 즉, 자신들의 활동에 내무부와 법무부 등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부 부처들을 참여시킬 수 있었고, 나아가 스스로 단속권이라는 강제 수단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권한을 활용하여 이들은 ‘공직사회 정화’라는 이름으로 비위 공직자들을 적발하여 징계 조치를 했고, 나아가 ‘일반사회 정화’라는 이름으로 불량배 단속, 퇴폐영업을 하는 업소들을 ‘사회윤리 위반사범’이라는 이름으로 단속했으며, 분양이나 취업 사기범에 대해서는 ‘국민생활 침해사범’이라는 이름을 붙여 처벌했다. 1980년 10월 이후 1985년 10월까지 5년간 비위공직자 37,624명, 폭력배와 불량배 1,176,304명 등 그 규모는 실로 방대했다(중앙일보 1985년 11월 27일, 3).

이 사회정화위원회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위상을 물려받았지만, 새마을운동을 대체한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새마을운동을 없앤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로 개조하여 존속시키면서 사회정화운동과 나란히 사회정치의 기관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전두환 대통령부터가 취임사에서 “새마을운동과 연계시켜 사회정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하면서(동아일보, 1980년 9월 1일, 3), 새마을운동과 사회정화운동을 병존시킬 것임을 예고했다. 예고대로 그 해 12월 1일, ‘새마을운동중앙본부’와 산하단체로 구성되는 민간조직으로 새마을운동이 변모했다(윤충로 2016, 202-205).

하지만, 새마을운동을 민간조직으로 보기는 어렵다. 새마을운동은 대통령의 친동생 전정환이 1980년 12월 22일부터 1985년 2월까지 사무총장을 지냈고, 국가로부터 총 397억원(국비 108억원, 지방비 159억원, 성금 130억원)에 이르는 기금을 받았다(윤충로 2016, 209). 7년간 320여억원의 국고지원을 받았던 사회정화운동보다도 더 많은 지원을 받은 것이다. 게다가 중앙부처인 내무부는 새마을운동의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념 및 방향을 지도하는 역할을 자임했다. 그렇다면 중요한 활동 내용에 있어서는 정부가 관리하는 조직이라고 보는 편이 나올 것이다(내무부 1982, 43). 새마을운동의 내용 역시 사회정화운동과 중첩되었다. 새마을운동은 1980년부터 “정신적 의식구조 및 행동양식의 변화에 역점을 두는 사업을 우선”하기로 함으로써(내무부 1981), 사회정화운동과 역할을 분담한다기 보다는 동일하게 습속을 개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사회구성원들의 습속에 광범위하게 개입하여 이를 개조하려 했던 정권의 구상을 실천하는 도구였다고 볼 수 있다.

이리하여, 1980년대 발전국가가 수행하는 사회정치를 위한 관제 캠페인 기구는 이전시기보다 훨씬 더 규모가 확대되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이 장의 마지막 절에서 우리는 범민족올림픽추진위원회라는,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 전반의 습속에 개입하는 관제캠페인 조직을 하나 더 보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습속 개조를 중심으로 한 규율적 사회정치의 규모는 이전 시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

도로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2.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변화

### 1) 경제성장에서 사회 질서·통합으로

1980년대에는 사회정치에 있어 매우 중요한 방향전환이 이뤄졌다. 그것은 도시사회와 산업사회를 배경으로 발생하는 여러 병리적 현상에 대한 관심이었고, 경제발전보다는 사회질서와 통합을 강조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었다.

1960~70년대와 1980년대의 사회정치가 강조하는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1960년대~70년대에는 국가가 사회 구성원 전반의 빈곤을 문제시하면서 경제발전에 필요한 습속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은 농촌지역의 빈곤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반면에 1980년대의 새마을운동은 도시지역에서의 활동이 이전보다 중요해졌고, 사회정화운동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생겨난 여러 사회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사회정화위원회는 1960~70년대의 사회정치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60~70년대는 역시 물량적 성장이 주류를 이룸으로써 정신문화와 사회윤리가 크게 퇴락하는 시기였다. 엄밀히 말하자면 60년대 이후 형성된 ‘자주·자립의식’이나 ‘하면된다’라는 자신감 역시 물질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정신적 가치였던 것이지만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질서의식이나 사회정의 및 국민 화합을 뒷받침할 만한 윤리적·도덕적 가치는 되지 못하였던 것이다(현대사회연구소 1982, 185).”

이에 따라 사회정치 기구가 강조하는 내용이 변하게 된다. 예를 들어, 새마을 운동은 농촌 지역의 빈곤을 문제시했다. 농촌지역의 빈곤이 경제적인 발전만 아니라 사회의 발전마저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 1970년대 국가의 판단이었고, 이 문제의 해결이 새마을운동의 중요 목표였다. 새마을운동은 문제적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다수 국민인 농촌인이 생산에 집착하지 못하기 때문에 식량과 원료생산물의 대외 의존도가 높아지고 그 결과 농촌은 농촌대로 빈곤의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을 저해하고 있었던 것이다(내무부 1980, 52).

이와 달리, 사회정화위원회는 앞서 본 것처럼 사회질서와 사회통합 문제에 중점을 두었다. 1960~70년대 근대화의 추진 과정이 경제발전에 치우친 나머지 사회질서가

혼란해졌고, 이것이 1980년 초에 현저하게 드러났다는 것이 이들이 생각한 문제적 상황이었다. 다음 인용문이 이를 보여준다.

“물질위주의 근대화로 인하여 전통적 사회윤리가 붕괴되고 새로운 사회윤리가 확립되지 못하므로써 황금만능의 사조가 판을 치며, 기강이 무너지고 불신이 팽배하며 무질서 하고 혼탁한 사회를 이루고 말았다. 다시 말하면 국가발전이 너무도 경제 제일주의적인 발전이념에 지배되었고 그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규범질서를 확립하려는 노력이 뒤따르지 못하였다. (중략) 80년 봄의 국가적 위기와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혼란된 가치관을 새롭게 하고 사회 전반에 물들어 있는 만성적인 부조리를 과감히 제거하고 살기 좋은 새사회 건설을 위하여 국민의 도덕적 윤리기반을 공고히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이다(현대사회연구소 1981, 4-6).”

이에 따라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과 1980년대의 사회정화운동 사이에는 대상과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했다. 농촌의 빈곤이라는 문제에 기초한 새마을운동은 정신계발, 소득증대, 환경개선이라는 주요 목표 중에서도 농가의 소득증대를 가장 중요시 했다(이용기 2012, 74). 반면에 사회정화위원회는 거리 및 교통질서, 행락질서, 상거래 질서 등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한 사회질서의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었다.

[표 3] 1970년대 말~80년대 초 새마을운동 중점시책 변화  
(출처 : 내무부 1981)

연도	1978	1979
중점시책	농촌주택개량의 확대 농가소득증대의 가속화 3대질서운동의 전개 공장새마을운동의 본격화 새마을정신의 생활화	새마을 복지기반의 확충 새마을 소득증대의 촉진 도시새마을운동의 심화 공장새마을운동의 확산 새마을국민교육의 강화
연도	1980	1981
중점시책	농촌복지환경의 향상 농촌소득기반의 확충 도시새마을운동의 심화 공장새마을운동의 확대 새마을국민교육의 확대	새마을운동조직의 활성화 새마을국민교육의 강화 새마을복지기반의 확충 도시새마을운동의 활성화 공장새마을운동의 내실화
연도	1982	1983
중점시책	고소득 복지농어촌의 건설 도시새마을운동의 활성화 공장새마을운동의 본격화 새마을운동의 민간주도화 새마을 교육홍보의 강화	농어촌 균형발전의 기반확충 도시새마을운동의 활성화 새마을 국민교육의 확대강화 새마을운동 민간조직의 활성화 올림픽새마을운동의 본격화



	올림픽대비 새마을운동 추진 새마을유아원의 발전적 운영	새마을운동의 국제화
--	----------------------------------	------------

새마을운동 그 자체도 1970년대와 1980년대 사이에 차이를 보인다. 명목적으로 1970년대 새마을운동은 ‘농촌의 근대화를 목표로 시작’하여 도시, 공장, 직장으로 확대된 것으로 표현된다(내무부 1981, 115). 하지만, 앞서 본 것처럼 농촌지역에서 새마을운동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던 것과 달리 도시부의 새마을운동은 그다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이용기 2012, 75, 82). 그래서 1980년대 들어 국가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을 농촌의 소득 증대를 위주로 한 사업으로 정의했다. 그리고 1980년대 새마을운동의 주 활동 공간을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시키고자 하였고, 강조점 또한 소득 증대보다는 ‘정신개조’와 ‘의식개혁’을 위주로 했다(윤충로 2016, 201-203). 이에 따라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 사이 새마을운동의 ‘중점 시책’의 내용이 변화했다. [표 3]이 보여주듯이 1970년대 후반에 두 개씩 존재하던 농촌새마을운동 관련 중점 시책들은 1980년대 들어 1개로 줄어들었다. 대신 도시새마을, 공장새마을, 그리고 올림픽 새마을운동이 보다 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뿐 아니다. 1960~70년대와 1980년대를 가로질러 ‘의식’과 ‘정신’이라는 개념이 지시하는 대상 역시 달라졌다. 1960-70년대, ‘의식’이란 개념은 경제발전을 위주로 한 근대화への 지향성을 함의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의식을 개혁한다고 하는 것은 ‘잘 사는 것’에 대한 욕망을 갖고, ‘빈곤으로부터의 해방’에 대한 의지를 갖는 것으로 풀이된다(내무부 1980, 64-69). 생산성, 근면성, 이윤개념 등이 습속화되는 상태가 바로 의식개혁의 결과로 상정되었다. 하지만 1980년대 들어 국가가 상정한 ‘의식’은 대중들의 습속의 질서-무질서와 관련되어 있었다. 그래서 1980년대 사회정화운동이 생각한 의식개혁운동은 “거리질서를 비롯한 각종 사회질서의 확립, 청탁풍조의 배격, 허례허식의 추방” 등을 골자로 하는 것이었다(전두환 1981년 11월 30일). 1980년대의 국가에게 의식의 개혁은 습속의 질서 확립을 통한 사회질서의 확립이었다.

이들은 사회 통합 또한 ‘의식개혁’을 통해 이루고자 했다. 그런데 그 내용 또한 1970년대와 다르다. 1970년대 사회정치는 개별주체의 습속 개조와 습속을 개조한 주체들의 ‘협동’ 내지 ‘단합’ 즉, 습속의 통일성에 기초한 사회통합을 상정했다. 1980년대의 사회통합은 이와 달랐다. 위에서 전두환은 ‘허례허식의 추방’을 의식개혁의 내용 중 하나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1980년대 사회정치가 갖는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먼저 이들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생겨난 사회적 격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을 인정하고 이것이 1979년부터의 사회정치 위기를 만들어낸 것으로 파악했다.

“경제성장 과정을 따라 미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급히 상승하는 것은 일반적인 추세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뚜렷해져 빈부의 격차가 나타나자, 대다수의 국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되었다. (중략) 이것은 한껏 부풀

었던 기대가 깨어지면서 사회적 불만이 높아져 혁명적 상황으로 몰고 간다는 뜻이다. 70년대 말의 비등하던 사회적 불만 고조가 다른 아닌 ‘기대와 좌절의 혁명’적 상황이 빚어낸 것으로 보아 무방하다(현대사회연구소 182, 183).”

여기서 발전국가의 한국의 사회정치가 갖는 특징 중 하나가 드러난다. 복지국가란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기본적 사회권의 보장 및 제도적 재분배 정책을 수행한다. 하지만, 1980년대 국가는 소비와 관련된 습속에 대한 통제를 통해 격차 문제에 대응하려 했다.

대표적인 것이 과외금지였다. 신군부는 아직 국보위의 형태를 취하고 있던 1980년 7월 30일 ‘사회정화’ 차원에서 과외 교습행위를 전면 금지시킨다. 이 때 국보위는 “과열 과외로 인한 사회 계층간 위화감을 해소하면서 범국민적 단합을 촉진시키고자” 한다는 것을 그 이유로 설명했다(『경향신문』 1980년 7월 30일, 3). 이러한 과외금지 조치 위반을 단속하는 일이 사회정화위원회의 활동 중 하나였다. 호화로운 결혼식과 호화로운 분묘를 조성하는 행위 역시 사회정화위원회가 단속권을 행사하는 영역 중 하나였다. 이유는 이러한 행위가 ‘계층간 위화감 조성행위’라는 것이었다.

## 2) 자율화: 도시적 습속의 용인

1980년대의 사회정치가 앞선 시기와 다른 또 한가지는 이른바 ‘자율화’ 정책들을 통하여 도시적 습속을 용인한 점이다.

앞서 우리는 1970년대 발전국가가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등장한 도시적이고 서구화된 습속에 대한 반감을 가졌음을 보았다. 1970년대 박정희와 국가는 농촌지역 새마을운동의 성공을 배경으로 농촌적이고 전통적인 습속을 ‘민족적인 것’으로 강조하면서 도시민들의 습속을 통제했음을 본 바 있다. 반면에 1980년대의 국가는 이른바 ‘개방화’와 ‘자율화’를 내세우면서 다른 접근방식을 보여주었다(동아일보 1988년 2월 9일, 3). 가장 먼저는 1970년대 도시적 습속에 대한 통제를 상징했던 ‘장발 단속’을 대통령 취임 1주일 만에 중지시켰다(『동아일보』 1980년 9월 6일, 7).

통행금지 문제는 올림픽 개최에 따라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었다. 미군정 포고령 1호에 따라 1945년 9월부터 36년간 계속되던 이 제도는, 올림픽 유치활동의 진행 가운데서도 해제가 검토되었다(김경훈 1999a, 206). 그리고 올림픽 개최가 확정되자마자 발전국가의 관료들 사이에서 해제 논의가 시작되었다(『경향신문』 1981년 10월 1일, 1; 『동아일보』 1981년 10월 28일, 1). 11월부터는 야간통행금지 해제를 위한 작업이 국회에서 시작(『경향신문』 1981년 11월 20일, 3), 12월 15일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어, 1982년 1월 6일 0시를 기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면 시행되었다(남애리, 미상a). 하지만 통행금지를 해제하고 나서도 다음과 같이 습속의 질서를 지속해서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이제 값진 자유를 소중하게 받아들여 방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도 중요하지만 의식의 선진화가 이루어져야만 진정한 선진조국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자율은 질서와 책임이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타율에 의해서만 살아온 사람에게는 오히려 자율이 벽찰 때도 있지만 스스로의 판단에 의한 책임 있는 행동이야말로 민주시민으로서의 본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88올림픽과 86아시안 게임을 주최하는 국민이 됩니다. 온 국민이 민주시민의 긍지를 가지고 선진조국을 창조해 가는 참모습을 세계인들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하겠습니다(“야간통행금지해제후 국민들의 달라진 의식과 생활 및 사회변화” 1983).”

교복자율화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 제도는 1981년 12월 문교부의 제안에 의해 1982년 결정되고 1983년 시행되었다(“중·고교학생 교복 및 두발제도 개선(안)”, 1981년 12월). 하지만 시행한지 얼마 안되어 문화공보부는 교복자율화로 일부 학생들이 사치스러운 복장으로 하고 또 탈선행위를 저지른다면서 이를 교정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시작했다(“고교생 교복자율화에 따른 청소년 건전의식 계도대책” 1983년 2월 4일).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홍보영상물은 다음과 같이 ‘자율과 책임’을 강조한다.

“선진조국 창조에 새로운 역사를 펼치면서 우리는 통제와 타율의 사회에서 개방과 자율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은 가장 성숙이 활발하고 감수성이 예민합니다. 학생들이 획일적인 교복을 입음으로써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끼며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바람직스럽지 못한 길로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중략) 말하자면 교복 자율화의 뜻은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학교가 되는 계기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가 평생교육 체제를 갖자는 것입니다. (중략) 이제 학생들은 교복을 입음으로써 사회적 특수층으로 대접받거나 통제의 대상으로 됐던 지난 날의 관습에서 벗어나 민주 시민의 책임있는 한 사람으로 훌륭하게 자라도록 해야겠습니다. (중략) 또한 모든 기성인들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어버이와 스승의 입장에서 보살피주며 해로운 환경에서 이들을 보호하는 데 힘을 써주어야 합니다(“교복자율화 - 자율과 책임”. 1983년)

위 인용문이 말하는 것처럼 1980년대의 국가는 교복이 탈선을 부추길 수 있음을 고려하여 교복자율화를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자율화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사회구성원들의 습속에 대한 문화적 인정에서 기초한 제도 변형으로 볼 수는 없다. 사회구성원들의 습속에 대해서는 앞선 시기와 마찬가지로 개입하고 개조하고자 했다. 문화적으로 사회구성원들을 폭넓게 인정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런 한편으로, 도시화의 진행에 따라 생겨나는 자발적 조직들을 가시화시키고 관

리하고자 하는 노력 역시 보인다. 먼저 2기 발전국가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이 “정치지도자의 정치적 권력과 지원”에 의존했다고 평가하면서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자발적 국민운동으로 전환”시키겠다는 방침을 발표한다(내무부 1981, 114). 이에 따라 12월 1일, ‘새마을운동중앙본부’와 산하단체로 구성되는 민간조직으로 새마을운동이 변모했다(윤충로 2016, 202-205). 여전히 국가의 통제력 하에 있었기에 민간운동이라기보다는 ‘반민반관’에 가까운 단체가 되었지만(윤충로 2017, 211), 그럼에도 외형상 민간조직이 된 관계로 민간에서의 자발적 조직을 포괄할 수 있는 있는 능력은 커졌다.

대표적인 것이 도시의 스포츠모임을 새마을운동으로 포섭한 사례였다. 축구의 경우 1970년대부터 새마을운동과 연계되어 있기는 했다(황병주 2002, 161). 하지만 1980년대 들어 스포츠 모임에 대한 포섭이 본격화된다. 1981년 12월 23일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산하에 조기축구와 배드민턴 동호회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새마을체육회’는 사이클, 등산, 농구, 배구, 탁구 등 각종 조기스포츠회를 포괄했다. 그리고 이 단체들의 목표를 “국민 체력의 향상, 자주정신 함양, 국민 화합, 정직·성실·근면을 통한 정의사회 구현”으로 설정케 하였고, 지역단위에서의 새마을교육이나 도시미화 사업에도 동원하였다(『새마을스포츠』 1982년 3월호, 41; 44-51).

### 3) 복지 담론의 전면화

복지국가에 관한 담론이 확대되었다는 것 역시 1980년대의 사회정치가 갖는 특징이다. 일례로, 전두환은 신군부의 발전국가 권력 장악이 진행되던 1980년 6월부터 ‘민주복지사회’라는 말로 자신들의 이상적 사회상을 명명하여, 이후 중요한 고비마다 이를 활용한다. 광주민중항쟁 직후라 할 수 있는 1980년 6월 5일부터 ‘모든 혼란요인과 사회적 병폐를 깨끗이 시정’ 하여 “여하한 내외의 도전이나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정의와 인정미 넘치는 풍요한 민주복지사회”를 만들겠다는 말을 했고(전두환 1980년 6월 5일), 국보위 상임위원장이 아닌 대통령이 될 의지를 선언한 1980년 8월에는 꽤 전향적인 발언을 한다. 그는 자신과 신군부가 만들고자 하는 국가가 ‘민주복지국가’라면서 민주주의의 토착화, 복지사회, 정의사회의 구현 등을 그 구체상으로 제시했다.<sup>53</sup> 그 중에서도 두번째 복지사회에 대한 발언은 발전국가의 사회정치 방향을 대폭 수정하겠다는 매우 전향적인 발언이었다.

“우리는 본격적인 복지시책을 펴 진정한 복지국가를 건설해야겠다는 것입니다. 80

<sup>53</sup> 신군부가 주도해 1980년 말에 만든 ‘민주정의당’의 경우에도 “민주, 복지, 정의사회의 구현”을 발기문에서 밝히고 있는데(『동아일보』 1980년 11월 28일, 1), 이 아이디어는 영국의 복지국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 페이비언 소사이어터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이종찬의 아이디어였다고 전해진다(이종찬 2013, 195-200).

년대에 들어와서도 자주국방, 자립경제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지속적 성장을 계속 추구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양적인 성장의 그늘에 국민생활의 질적인 향상이 언제까지나 밀려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의료보험의 전면실시, 노후부양, 실업보험 등 본격적인 복지시책이 80년대에는 시행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사회에서는 개발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다 같이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성장의 열매가 일부 층에 편재하고 상당의 국민이 성장의 그늘 속에 방치될 때 국민간의 일체감은 조성될 수 없으며, 그러한 사회는 사회복지가 구현된 건전한 사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체제의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도 국민 모두가 개발 혜택을 고루 누려 상호신뢰가 생기고 계층간에 위화감이 존재하지 않는 진정한 국민통합의 사회를 이룩해야 합니다 (전두환 1980년 8월 11일).”

이는 1980년 9월 1일 대통령 취임식 자리에서 있었던 전두환의 연설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된다.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복지국가는 첫째 우리 정치풍토에 맞는 민주주의를 이 땅에 토착화하고, 둘째 진정한 복지사회를 이룩하며, 셋째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고, 넷째 교육혁신과 문화창달로 국민정신을 개조하려는 것입니다(중앙일보, 1980년 9월 1일, 1)

이 외에도 전두환이 ‘민주복지사회’의 건설을 내세운 연설은 총 602개의 공식연설 중 69회에 달했다.<sup>54</sup> 총 연설의 1할이 넘는 정도로 반복해서 ‘민주복지사회’의 건설을 언표한 것이다.

1960년대부터 지속되어 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이름을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으로 바꾼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발전국가는 ‘복지’와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명분 하에 그간 활용되지 않던 ‘사회’개념을 경제개발계획에 추가하여 ‘경제사회발전 계획’으로 이름을 바꾸었다(경향신문 1981년 8월 24일, 3).<sup>55</sup>

1979년부터 진행된 제 5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 입안 과정에서 발전국가는 1차~4차의 경제정책이 “사회개발 소홀과 사회안전장치의 미흡”이라는 문제와 더불어 “대도시의 과밀화와 토지이용의 비효율성”이라는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sup>56</sup> 사회문제에 대하여서는 주택 등 국민생활의 기본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sup>54</sup> 대통령기록관홈페이지 전두환 연설 검색 결과 <http://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 dex.jsp> (검색일 2017. 11. 30)

<sup>55</sup> 이를 제안한 사람은 김재익으로 알려진다(지주형 2011, 115).

<sup>56</sup> 경제기획원이 1980년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제5차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 작성지침(안)요약”에 의하면 1~4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은 양적확대와 물량중심의 경제운용, 인플레이 구조의 만성화, 물가와 임금의 상승과 경쟁력의 약화로 인한 수출신장세의 둔화와 경영지출

소홀했고, 높은 인플레이와 지가로 인해 노동자들의 자산형성에 미흡했으며, 노사협조 체제의 미비, (노사) 상호신뢰 기반의 불충실, 소득분배의 불균형 확대와 상대적인 빈곤감의 팽배 등의 문제도 낳았다는 것이 기본적인 진단이었다. 도시문제에 있어서도 인구와 산업시설의 대도시 밀집 및 토지투기의 성행과 생산성 저해라는 문제를 낳았다고 보고 있다(“제5차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 작성지침(안)요약”, 1980년, 10-12). 이에 따라 1980년 가을부터 시작된 부문계획의 작성단계에서 사회분야 실무 작업반이 대폭 확충되어, 26개중 11개가 사회분야 실무작업반으로 구성되었다.<sup>57</sup>

이러한 작업에 기초하여 1981년 8월 발표된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은 총 5개 중 2개를 사회관련 항목에 할애하고 있다.<sup>58</sup> 이 두 항목을 통해 발전국가는 사회 내 격차의 시정과 제도적 안전망의 공급, 사회통합(협조적 사회기틀), 그리고 도시 주거문제 등에 대하여 일련의 개선의지를 가졌음을 선전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분배 개선과 빈곤 완화’를 위해 장학기회 확대와 빈곤 아동영양 개선, 사회부조금액 증액, 영세민 생업자금 대부, 직업훈련 강화 등을 계획했다. 둘째, ‘사회보장의 확대’를 위해 연금제도 실시, 의료보험제 및 산업재해보험 대상자 확대<sup>59</sup> 등을 계획했다. 셋째, ‘협조적 사회기틀의 확립’을 위해서는 노사협회의 확대, 노사협조 풍토조성을 위한 교육 강화, 노사분쟁 조정을 위한 임의중재재판제·노사조정관제 도입 등을 통해 협조적 노사관계를 만드는 것과, 적정임금보장, 산업안전 강화, 영세사업장 보호, 기업내 복지시설 확대, 노동자 임대아파트 15개소, 노동자 종합복지시설 40개소, 산업체부설학교 확대, 노동자재산형성촉진, 퇴직연금제 개선 등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복지를 확대할 것을 계획했다. 넷째, 도시 및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서, 영세민 집단주거지 환경개선(집단지주 지양, 거주지 개량 유도), 국민주택 건설확대,<sup>60</sup> 민간주택 건설 촉진, 주택가격 안정화, 임대주택 공급촉진, 서울과 부산에의 인구집중 완화를 위한 금융세제상 조치 및 대도시 부적격 공업 이전,

---

적자폭 확대, 경제력의 집중 및 중소기업의 상대적 낙후, 경제의 복잡다양화에 따른 정부주도 하 경제운용의 한계, 사회개발소홀과 사회안전장치의 미흡, 대도시의 과밀화와 토지이용의 비효율성, 이상 총 7가지였다(“제5차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 작성지침(안)요약”, 1980년, 5-12)

<sup>57</sup> 구체적으로는 인구, 교육, 고용 및 인력개발, 환경보전, 노사관계, 사회개발종합, 소득분배, 주거 및 도시, 보건 및 의료, 사회보장 및 절대빈곤, 이상 총 11개다. (출처 국가기록원, “기록으로 보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http://theme.archives.go.kr/next/economicDevelopment/fifth.do> 검색일 2017. 11. 30)

<sup>58</sup> 제5차 경제사회발전계획은 1. 성장지속을 위한 경제안정기반의 정착과 능률의 향상, 2. 국제수지의 건실한 관리와 경제안전의 확보, 3. 비교우위산업구조로의 전환, 4. 국토의 균형개발과 환경보전, 5. 사회개발의 확대, 이상 총 5 항목이다(“제5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1982~1986)”, 1981년 8월)

<sup>59</sup> 80년 당시 9,113천명인 의료보험의 수혜 대상자를 86년 23,837천명으로 확대하고, 80년 3,753천명이었던 산업재해보험 대상자를 86년 6,880천명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수치였다(“제5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1982~1986)”, 1981년 8월, 93)

<sup>60</sup> 1981년 10월, 정부는 10년간 5백만호의 주택을 서민용으로 공급할 것을 공언했고, 이 중 86년까지는 2백만 호를 공약했다(『경향신문』 1980년 10월 2일, 1). 이것이 수정·축소되어 1981년 8월 5개년 계획에서는 146만호가 계획되었다.

대전·대구·광주 등의 도시성장 촉진 등의 정책을 계획했다.

현재 평가로는 사회 구성원 다수에게 제도적 안전망을 보급한 것이 아닌 형식적인 담론이라 여겨지고(김윤태 2012, 206), 재분배의 원리는 상대적으로 찾기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1981년 3월 노동청을 승격시켜 노동부를 만드는 등(경향신문 1981년 3월 14일, 3), 1980년대의 국가는 산업사회가 당면하는 여러 사회문제에 대처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 그리고 제도적 안전망의 공급 확대를 포함하여 사회정치에서 방향으로의 전환은 그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음이 확인된다.

#### 4) 선별적 사회정치의 지속

위와 같이 1980년대 사회정치가 자율화 정책이나 복지국가담론 같은 포섭적인 측면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실제 정책이 실천되는 과정을 보면, 이전시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선별적 원리 하에서 사회정치가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문화적인 인정의 범주는 여전히 좁은 편이었다. 1960년대 당시 박정희는 한국인들의 습속 전반을 문제시 하면서 이를 부정적인 역사적 유산으로 보았다. 1970년대에는 정권이 원하는 형태의 습속을 가진 역사적 인물들을 부각시켰다. 하지만 1980년대 들어 국가는 인종화되고 역사화된 습속들이 과거에는 긍정적인 요소들이었으나, 현대 사회에 와서 부정적 요소로 변했다고 본다. 산업사회로의 전환이라는 맥락을 중시하면서 부정적 측면이 다시 강조되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사회정화위원회는 조선시대 유교의 영향으로 권위주의가 국민들의 의식 속에 존재하며, 이는 “현대 산업사회의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을 저해하고 사회적 일체감의 조성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본다(현대사회연구소 1981, 19). 또 유교의 영향이 가족중심주의를 만들었고, 이는 “개인으로서의 확고한 국가관에 입각하여 공적 질서를 유지”하는데 방해가 되었고,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개인이 민주 시민이 아닌 이기적 개인으로 전락”되게 만들었다고 본다(현대사회연구소 1981, 20-22). 또, 한국 사회 구성원들은 주인의식이 결여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봉천체제에서 피식민 생활권으로 넘겨졌고 외국의 힘에 의해 해방돼 시민사회로 급전됨으로써 시민으로서의 훈련을 쌓지 못한 채 타율적으로 시민사회를 맞게 되었기 때문”이라면서 부정적 습속의 연원을 역사화 하고 있다(현대사회연구소 1982, 297).

물론 이들이 사회구성원들의 습속 및 그 역사적 기원을 전부 부정적으로만 본 것은 아니었다. 긍정적이라 판단한 것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그러한 긍정적 요소를 습속개조의 방편으로 활용했다. 그래서 사회구성원들의 습속 들 중 ‘부각시켜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으로 선별하는 가운데 긍정적 요소들을 배치하였다. 예를 들어, 사회정화위원회는 『2000년대를 향한 한국인상』이라는 이름의 저작물을 통해 정권이 원하는 인간상과 사회상을 소묘했다. 사회정화위원회의 월간지 이름도 『2000년』으로 바꿀 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 저작은,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의

식개혁을 통해 지녀야 할 중요한 3가지 중 하나로 질서·협동의식을 꼽고 있다. 전인적·도덕적 인간, 이상의 네 영역에 걸쳐 한국사회 구성원들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준법정신과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시 하는 정신, 상부상조의 정신, 조직내에서의 협력 등을 ‘부각시켜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이들 요소 중에서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한국 사회 구성원들에게 익숙한 것은 상부상조의 정신 하나며, 나머지는 사회 구성원들이 현대사회에 맞춰 새롭게 갖춰야 할 요소로 설명된다. 이와 다르게 ‘버려야 할’ 요소들인 이기주의, 편법주의, 연고주의, 불신풜조는 대부분 역사적으로 형성된 한국사회 구성원들의 습속이었다. 이기주의는 ‘식민주의와 해방 후의 혼란, 6·25동란 등’을 통해 싹뚫고, 연고주의는 ‘이웃사촌적인 농촌경제의 생활양식’이 ‘근대에 이르러 합리적인 인간관계로 발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연고주의의 형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불신풜조 역시 ‘농경사회에서 급격히 산업사회로 전환되면서 그에 필요한 경제윤리가 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현대사회연구소 1982, 250-272). 이렇게 한국사회 구성원들의 습속 중 소수의 미덕을 제외하고는 모두 ‘버려야 할’ 부정적인 유산으로 비쳐졌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가 문화적으로 인정할만한 사회 구성원의 범주에 들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도적 안전망의 공급은 확대되었다고 하지만, 선별적 포섭이라는 성격은 그대로였다. 대기업 노동자와 고숙련 인력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부의 재분배가 아니라 오히려 부의 편중을 확대하는 경향 역시 마찬가지였다. 제도적 안전망을 전향적으로 확대공급하기 보다는 산재보험과 의료보험의 적용범위를 확대시키는 정책을 취했기 때문이다(정무권 2007, 289) 의료보험은 1980년, 81년, 83년 세번에 걸쳐 300인 이상, 100인 이상, 16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고, 산재보험의 경우 1960년대부터 이어진 확대기조를 조금 더 확장하여 83년도에 10인 이상 사업장까지로 확장했다(심상용 2010, 15). 1984년도에는 기업복지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이는 권장사항이었다. 그리고 대기업 중심이었다. 30인 이상 사업장은 작업복지급과 재형저축 실시, 50인 이상 사업장은 이에 더하여 식당과 휴게실, 목욕실 시설, 100인 이상 사업장은 이에 더하여 체육시설, 도서실, 의무실, 장학제도, 300인 이상 사업장은 이에 더하여 구판장, 공제조합, 통근 편의제도, 1000인 이상 사업장은 여기에 주택조합과 종업원지주제를 더할 것을 권장했기 때문이다(양재진 2008, 339).

1986년부터 1988년 사이 민주화를 기반으로 제도적 안전망이 대거 확대되어 공급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보편적’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 86년 5인 이상 사업장 산재보험 실시, 1987년의 최저임금제 실시, 88년 1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연금제도 실시,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 실시 등이 있기는 했다. 하지만 1988년 전국민의료보험 실시 당시 농어민의료보험이 기업의료보험보다 훨씬 낮은 보장성을 지녀 논란이 되었을 때(조영재 2008, 84-5), 발전국가는 이를 통합하여 보편적 성격을 가질 새로운 법안의 통과를 막았다(양재진 2008, 340). 제도적 안전망의 공급에 있어 여전히 대기업과 고숙련 인력에 친화적이고 선별적이었던 것이다.

도시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 과정 역시 마찬가지로 분할적이었다. 1970년대 도심



재개발 과정에서 빈민들은 도시 외곽으로 밀려났다. 그런데 1980년대가 되자 도시 확장과 중산층의 포섭을 위한 주택의 대량공급 방침이 정해지면서 이 외곽지대들이 개발 대상지가 되었다. 도시빈민들이 이에 대하여 강력하게 저항하자 대책으로 등장한 것은 가옥이나 토지 소유주를 건설사가 개발이익을 공유하고 발전국가는 제3자가 되는 ‘합동재개발’ 방식 이었다. 하지만, 이익을 최대화해야 하는 기업과 지주들의 개발이익을 위해 중대형 아파트건설 건설이 일반적인 방식이 되면서 서민 가옥주들은 개발이익에서 소외되었고, 세입자들은 대책없이 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이 발생했다(장세훈 1998, 265-282). 임대아파트는 적게는 1년에서 길게는 5년 안에 분양을 받아야 하는, 변형된 분양주택에 다름 없었기에 대책이 되지 못했다(이영환 1996, 30). 그러는 사이 국민주택기금의 80%는 중상류층에게 흘러들어갔다(권태준 1988, 20).

심지어 서울시는 1980년대 들어 빈곤층의 구성원들을 지방으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활용했다. 1983년 서울시는 ‘지방 영세민’의 전입 제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한편, 82년부터 서울의 ‘영세민’을 지방으로 이주시키기 위한 정책을 활용한다. 이에 따라 82년 358가구, 83년 1,134가구, 84년 1,137가구, 85년 1,178가구, 86년 709가구의 영세민이 지방으로 이주했다.

요컨대 국가는 사회 구성원들의 습속을 부정적으로 판단하면서 문화적인 인정의 테두리를 확장하지 않았으며, 제도적 안전망의 공급망은 중산층을 중심으로 확장하는 한편으로 빈곤층이 도시로부터 물리적으로 배제되게끔 하는 정책을 수행했다. 문화적인 인정마저 없는 상태에서 이 시기 빈곤층은 문화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배제되는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다.

## 제 2절 참조모델로서의 1964 도쿄올림픽

### 1. 1964년 도쿄올림픽과 발전국가 일본의 사회정치

#### 1) 1964 도쿄올림픽의 목표<sup>61</sup>

<sup>61</sup> 도쿄는 일찍이 ‘황기 2600년’을 기념하는 이벤트로 1940년 올림픽을 개최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1930년부터 1940년 올림픽 개최를 준비, 1936년 베를린 올림픽과 동시에 열린 IOC 총회에서 개최권을 얻어냈다. 하지만 중일전쟁 및 일본의 국제연맹 탈퇴로 1938년 7월 개최권을 반납하여 헬싱키로 개최권이 넘어갔다가 2차대전으로 대회가 열리지 못했다. 이렇게 열린 예정이었다가 취소된 1940년 도쿄올림픽을 ‘환상(幻)의 도쿄올림픽’이라 부른다(坂上·高岡

1964년 도쿄올림픽 유치를 기획한 것은 내무관료 출신의 도쿄도지사 야스이 세이치로(安井誠一郎)였다.<sup>62</sup>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체결 11일 후인 1952년 5월 9일, 그는 일본체육협회장이었던 아즈마 류타로(東龍太郎) 등과의 협의를 거친 뒤 올림픽을 도쿄에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내무관료와 스포츠계 인사에 의해 올림픽이 구상된 것이다. 유치 이후에도 내무관료와 스포츠인의 결합 구도는 지속된다.<sup>63</sup> 1959년 4월 말 도쿄도지사 선거에서 자민당은 일본체육회장 아즈마 류타로를 도지사 후보로 내세웠고, 당선 뒤 내각관방 부장관이었던 내무관료 스즈키 슌이치(鈴木俊一)가 부지사 직을 맡았다(片木 2010, 98-104).<sup>64</sup> 하지만, 올림픽의 유치와 준비가 내무관료를 수장으로 하는 도쿄도와 스포츠계에 의해서만 이뤄졌다고는 볼 수 없다. 하지만, 1957년 ‘스포츠 진흥심의회’가 내각에 설치되면서는 국가가 스포츠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매우 깊숙이 관여하게 된다. 올림픽의 유치와 개최 준비를 위한 ‘거국일치’적 협력체제가 만들어진 것이다(尾崎 2002, 191-2). 이를 토대로 1959년 5월 말 뮌헨에서 열린 IOC총회에서 도쿄는 18회 하계 올림픽 개최권을 얻게 된다(片木 2010, 98-104).

그렇다면 올림픽은 어떤 목적에서 유치된 것이었을까? 올림픽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목적에 대한 공식적 답론은 이렇다.

“평화를 회복하고 국제무대에 복귀한 일본의 본 모습, 실로 평화를 회구하고 있는 일본의 소박한 모습을 어떻게 하면 세계인에게 이해시킬 것인가? 자칫 희망을 잃기 쉬운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밝은 서광을 비춰줄 수 있을까, 이에 대해 고심한 결과 올림픽 대회를 도쿄에 유치하여 개최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 (東京都 1965, 4)”

1959년 5월 27일 도쿄올림픽이 개최된 후 도지사가 발표한 성명 역시 마찬가지로 “일본의 국제적 지위를 높이고, 올림픽정신으로 청소년에게 희망을 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毎日新聞』 1959년 5월 27일, 1). 그렇다면 도쿄올림픽은 두가지를 목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

2009; 橋本 2014).

<sup>62</sup> 1931년부터 우가키 총독의 비서관으로 있다가 1936년 경기도지사를 짧게 역임한 경력이 있다.

<sup>63</sup> 하지만 내무관료의 스포츠에 대한 관여는 1920년대부터 지속되어 온 것이다. 내무성은 1910년대 말 쌀파동을 기점으로 하여 1920년에 사회국을 설치하는 등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을 담당하는 부처였다. 1920년대 들어 내무성은 ‘사상의 건전화’와 ‘애국심의 향상’을 위한 스포츠의 역할에 주목하였고(坂上 1998, 93-100), 1924년부터 메이지신궁경기대회 개최를 주도하였다(坂上 2000, 29-44). 1930년 당시 올림픽 개최를 구상한 도쿄시장 나가타 히데지로(永田秀次郎)도 마찬가지로 내무관료로, 일찍이 공산주의 사상의 유입과 관동대지진으로 인한 사회불안을 국민통합의 위기로 파악하고 1926년부터 ‘건국제’라는 이벤트 개최를 주도했던 인물이었다(古川 1998, 62-64).

<sup>64</sup> 그는 1967년 오사카만국박람회를 준비하기 위한 일본만국박람회협회 사무총장에 취임했고, 1979년 도쿄도지사에 취임하여 1995년까지 오랜 기간 도쿄도지사를 역임한다.

첫번째는 국제 사회 내 내셔널 아이덴티티를 변신시키는 것이다. 즉, 추축국에서 평화국가로의 이미지 전환을 비롯하여 일본의 국제적 지위를 상승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청소년 대책이다. 발전국가 일본은 이미 1940년대 말부터 ‘평화적 국가’와 ‘문화적 국가’를 새로운 아이덴티티에 관한 담론으로 발신하고 있었다(觀行 2002, 183). 그리고 이 담론을 스포츠에도 활용, 1946년 제1회 국민체육대회(메이지신궁경기대회의 후신)부터 문부성은 이 대회가 "국민체육의 진흥과 국민 사기의 양양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서 평화적이고 문화적 국가 건설에 기여"한다고 선전했다(尾崎 2002, 171).

둘째, 청소년 대책의 경우, 사실상 청소년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정치에 다름 없었다. 1940년에도 담론적으로는 청소년을 말했지만 실제로는 부락을 비롯한 사회적 타자들을 도시에서 배제했듯이 말이다. 도쿄도는 패전 이후 사회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며 올림픽이 사회문제에 대한 대책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는 질서도 없었다. 도덕도 없었다. 물론 경제도 문화도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있는 것은 인간이 산다고 하는 탐욕스럽기만 한 본능뿐이었다. 특히 도쿄는 힘들었다. 많은 이들이 살던 집을 잃고, 직업을 잃고,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흩어지고, 자칫하면 희망마저 잃기 쉬웠다. 살인, 강도, 절도 등의 범죄는 속출하고, 소비물가는 이미 쉬쉬하는 가운데 붓물 터지듯 했고, 이른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은 모든 것이 하층의 생활을 강요받았다. 사람들은 전쟁지도자를 원망하고, 당시의 위정자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일단 입을 열면 무책임한 자유를 퍼뜨렸다(東京都 1965, 4).

이렇게 빈곤하고 무질서한 것으로 표상되는 전후의 사회상황을 타개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프로젝트로도 도쿄올림픽이 활용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두 목표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국제사회에서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발전국가 일본은 외국인으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도시경관을 창출하기 원했다. 예를 들어 올림픽 직후 총리 자리에 오르는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올림픽 담당장관은 1964년 초에 다음과 말한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올림픽 대회로서 도쿄대회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많은 외국인이 일본에 올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기회에 부흥된 새로운 일본의 참 모습을 전세계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전세계에 어떠한 인상을 줄 것인가는 곧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에 대한 평가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아름다운 국토와 선조의 유산의 혜택을 입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구민 한사람 한사람이 따뜻한 마음으로 외국인을 맞는다면, 그들의 가슴에 ‘일본은 좋은 나라다’, ‘일본인은 훌륭하다’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東京都オリンピック準備局a, 1964, 2).”

발전국가가 상정한 올림픽을 통해서 ‘외국인’으로부터 받을 인정이란, 물리적 경관만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습속까지를 포괄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습속개조와 도시개조를 위주로 한 사회정치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를 위해 발전국가는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올림픽을 매개로 한 습속개조 및 도시개조 담론을 대규모로 발신했고, 다수의 관제 캠페인 조직을 활용하여 시민들을 동원하여 습속의 개조와 도시의 미화에 활용했다. 경찰당국과 위생당국 역시 각종 범죄와 비위생적 공간을 감시하고 단속하는 방법으로 사회정치의 일부가 되었다.

## 2) 시민사회의 동원과 습속 및 도시개조

1964 도쿄올림픽이 유치된 후 도쿄도의회와 도쿄도 내에는 올림픽도쿄대회 준비협의회, 도쿄소방천 올림픽 대책본부, 올림픽도쿄대회 경시청준비위원회 등 다양한 협의기관이 설치되었다. 이들 중 올림픽 준비를 위한 홍보와 기획, 시설 등을 담당하는 실무부서는 도쿄도 올림픽 준비국이었다(オリンピック東京大会組織委員会 1966, 46).

1960년부터 도쿄도 올림픽 준비국은 올림픽 준비사업만 아니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캠페인을 수행했다. 1961년에 TV방송 184회, 매주 1회 이상의 라디오 방송은 물론, 『마을과 생활』이라는 도내 자치회 대상 월간지와 『도쿄올림픽 시보』라는 격주간 홍보지를 각기 5천부와 1만부씩 인쇄하여 배포했다. 내용은 ‘공덕심’으로 약칭되는 공중도덕 및 공공질서, 올림픽 공사 진행상황, 올림픽 관련 지식 및 국제사회 지식 등을 주로 다루고 있다. 이 외에도 『올림픽 입문』, 『올림픽 이야기』, 『도쿄를 밝고, 즐겁고, 청결하게』, 『도쿄올림픽을 위하여』 등 1960에서 64년까지 발행한 캠페인용 인쇄물만해도 매년 수십만부에 달한다(동경도 1965, 76-78). 뿐만 아니라 홍보영화 상영회, 순회 전시회도 연간 수십차례 열리는 등(東京都オリンピック準備局 1962, 50-58; 1963, 62-71; 1964, 80-85), 도쿄인들은 올림픽과 관련한 담론의 홍수 속에서 일상을 보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올림픽 담론이 시민들에게 강조한 것은 무엇인가? ‘공덕심’ 개념으로 표현되는 문명화된 습속이었다. 위생적이고 질서 있는 습속에 대한 강조였는데, 이를 ‘문명화’라 칭한 것은 습속개조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가상의 서구인의 시선이 기준점을 이루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국인’으로 추상화 하면서도 실상 그 내용은 ‘서구’임을 드러내는 대목이 여럿 보인다.

대표적인 것이 1961년 봄 4개월간 방송된 라디오 프로그램 『푸른 눈·슬쩍·뜨끔(青い目・ちらりちくり)』이라는 제목의 라디오 방송은 “재일외국인 또는 방일 외국인 이 느끼는 일본, 그리고 도쿄의 인상”에 관한 대담형식의 프로그램이었다. 서구인의 시선으로 일본인들의 습속을 점검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일본 학생들을 데리고 미국 수학여행을 다녀온 미국인 교사를 데려다가 미국과 일본의 공중도덕을 비교하

는 식이었다(東京都オリンピック準備局b, 1961, 13-15). 이어서 4개월간 방송된 『도쿄채점』, 그 후 4개월간 계속된 『외국인에 강해집시다』 모두 마찬가지였다. 서구의 시선에 도쿄라는 도시와 도쿄 시민들의 습속을 비추어 평가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sup>65</sup> 도시 역시 마찬가지였다. 난립한 옥외 광고물을 단속함에 앞서 도쿄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3년 후로 다가온 도쿄대회에는 선수임원을 포함 다수 외국인 관객의 방일이 예상된다. 하지만 개최도시로서의 명예를 잃어질 수도 도쿄의 외관은 어떠한가? 철도 연선, 도로변에 늘어선 불량광고물이 도쿄를 방문하는 외국인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 이번에 도에서는 수도 도쿄의 품위와 수도미의 향상을 위해 종래 실시되어오던 옥외광고물 단속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東京都オリンピック準備局a, 1961, 4)”

이에 따라 도쿄도는 많은 이들이 모이는 대형 공원, 경기장과 도로사이클 코스, 하네다 공항, 신칸센 노선, 수도고속도로, 모노레일, 마라톤 코스 등 외국인 관광객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간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부착을 금지했다(東京都 1965, 144).

도시의 외관이 달라져야 했지만, 또한 도시인들의 습속이 달라져야 했다. 이를 위해서는 담론만으로 충분치 않았다. 이를 위한 거대한 관제캠페인은 물론, 자치체의 각종 단속조치가 뒤따라야 했다. 이를 통해 도시민들의 습속과 도시의 경관을 개조하고자 했던 것이다. 대표적인 관제캠페인으로 신생활운동과 올림픽국민운동이 있다.

신생활운동은 1940년대 후반부터 조직된 관제캠페인이었다. 1947년 정권을 잡은 사회당과 가타야마 테츠(片山哲) 내각은 전후 일본 사회에 “국민의 생활고와 불안이 점점 심해지고, 도의는 사라지고 사상은 동요하여, 그 결과 사회질서는 혼란하고 국민협동체의 기반에마저 무서운 균열이 생기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내각은 6월 20일 각의 결정으로 ‘신일본재건 국민운동 요령’을 작성하여 ‘근로의 욕의 고양’, ‘우애협동의 발휘’, ‘자립정신의 발양’, ‘사회정의의 실현’, ‘합리적·민주적 생활습관의 확립’, ‘예술, 종교, 스포츠의 중시’, ‘평화운동의 추진’ 등을 통해 문제에 대응해보려 하였다(松田 2012, 33-34). 하지만 이는 일부지역에서만 조직되었다. 1950년 야마구치 현 ‘농어촌신생활운동’과 51년 이바라키현의 ‘생활과학화운동’ 등이

<sup>65</sup> 그리고 이는 19세기 말부터 이어져온 ‘탈아입구(脫亞入歐)’라는 프로젝트를 무의식적으로 계승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아시아를 벗어나 유럽에 속하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낸 이 개념은, 서구세계를 문명화된 세계로 동양을 야만적 세계로 이분화시키는 가운데 일본은 아시아에 있지만 서구와 같은 문명세계의 일원이 되겠다는 의지를 함축한 것이었다(한영혜 1998, 316). 2차대전을 일으키면서는 ‘근대초극론’같은 이데올로기를 통해 유럽중심주의를 비판한 바도 있지만, 패전 이후엔 다시금 ‘탈아입구’라는 원점으로 회귀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랬다.

신생활운동이 전국적인 조직으로 변한 것은 1955년부터였다. 1955년 보수합동체제의 형성 후 하토야마 이치로(鳩山一朗) 내각은 지방의 민간운동을 총괄할 본부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신생활운동협회(新生活運動協會)였다. 초당적 조직이라고는 했지만 자민당과 사회당 우파가 주로 참여하였고, 가족계획, 저축장려(생활합리화), 보건 위생 향상, 인습타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애국심 향상 등을 그 주요 운동내용으로 하였다.

이 캠페인이 관제라 볼 수 있는 것은, 이를 문부성 사회교육국이 실질적으로 통제했기 때문이다. 1945년에 부활한 문부성 사회교육국은 1920년대와 마찬가지로 ‘성인 교육’이 아니라 시민들의 문화와 도덕에 관한 계몽적 활동을 위주로 하는 기관이었다. 이를 위해선 지역의 청년 및 여성단체들을 동원했다. 비록 1949년 법안에서 국가나 지방 정부의 사회교육에 대한 직접적 관여를 금지했지만, 재정지원을 매개로 발전국가는 민간단체를 컨트롤 할 수 있었고, 1959년 키시 노부스케(岸信介) 내각이 만든 법안은 발전국가가 자문기관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실제적으로 사회단체를 통제할 수 있게 만들었다(Garon 1997, 157-161).

신생활운동 도쿄도지회가 탄생하는 과정을 보더라도 발전국가에 의한 통제는 명확하다. 1956년 말 도쿄도 교육위원회 사회교육과는 도청 내 관련 부처들을 모아 ‘신생활운동사무연락회’를 만들고, 이에 기초하여 이듬해 초 관련 민간단체들을 모아 도쿄도 신생활운동협의회를 결성했다. 사무국도 도 교육청 사회교육과에 자리했다. 그런데, 도쿄 올림픽의 개최를 결정을 기점으로 이 단체는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도쿄 내 23개 단체가 56개로 단체로 확대되고, 도쿄도가 주는 사업위탁금도 1959년에서 60년 사이에 4배로 증가한다. 그리고 도지사 아즈마 류타로를 협의회장에 취임시킨다(東京都新生活運動協會 1962, 11-13). 그리고 조직이 갑자기 확대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1959년 5월, 올림픽을 도쿄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되었다. 이는 아시아에서 개최된 적이 없는 세계적인 행사이며, 또한 패전으로 의욕을 상실한 일본이 우리들의 손으로 민주국으로 다시 태어나고, 평화를 바라며 세계의 사람들과 굳게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을 확실히 보여줄 절호의 기회임이 분명했다. 하지만 유래 예의의 국가로 일컬어지는 우리 국민은 공중도덕에 대하여는 놀라울 정도로 무관심하여, 세계 각국에서 수만의 선수와 관광객이 모일 경우 이대로는 문화강국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었다(東京都新生活運動協會 1962, 12).”

일본인들의 공중도덕이 부족하기 때문에 습속을 바꾸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 자신들의 활동의 주안이 올림픽을 매개로 한 습속개조에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올림픽이 다가오면서 발전국가는 여기에 또 하나의 관제캠페인을 더했다. 1963년 6월 22일 총리부와 문부성이 공동발의로 ‘올림픽 국민운동’을 만든 것이다. 이 캠페인은 도쿄올림픽의 의의를 알리고 전국민의 협력을 구하기 위한 캠페인인 동시에, 국민의 손으로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것이었다. 이 캠페인은 ‘올림픽 이해운동’, ‘국제이해운동’, ‘공중도덕고양운동’, ‘상업도덕고양운동’, ‘국토미화운동’, ‘건강증진운동’의 7개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고, 47개 도도부현마다 추진 조직을 만들어 전국적인 규모의 관제캠페인이 되었다. 규모도 상당해서 연말까지 이뤄진 결성작업 가운데 도쿄도에서만 180개 단체가 참가할 정도였다. 물론, 이를 주도한 것은 정부와 도쿄도였다(東京都 1965, 83).

7개 부분으로 나뉘어 있긴 하지만 핵심은 습속 개조였다. 올림픽 국민운동을 ‘지도’한 문부성은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서, “스포츠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이는 것, “일본인으로서의 자각과 긍지를 갖고 국제이해와 친선의 마음”을 기르는 것, “개최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회상호연대관계를 인식시켜 서로 돕고 친절한 언행을 습관화하도록 하고 단결심, 공덕심”을 배양하는 것, “국민 각자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개최국에 부합되는 생활태도, 사회환경조성을 촉진”하는 것 등을 달성하려 하였다(정무장관실 1981, 153). 결국은 사회 구성원들의 습속개조, 사회 질서, 사회 통합, 국민 통합 등이 올림픽 국민운동의 목표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단체들은 다양한 캠페인을 벌이는 동시에 발전국가에 의한 도시경관의 미화작업에 대대적으로 동원되었다. 도쿄도 신생활운동은 1961년부터 쓰레기 이용 운동, 청소활동, 꽃심기 운동, 도쿄 주요 거점에 화단 만들기, 각종 올림픽 성공을 위한 집회 개최 등에 신생활운동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東京都新生活運動協會 1973, 15-18). 여기에 도쿄도는 ‘수도미화운동’이라는 새로운 관제캠페인을 만들었다. 이는 1962년 초 도지사의 발의로 “도쿄에 질서와 조화를 소생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진 캠페인, ‘공덕심 고양’, ‘환경 정화’, ‘수도미화’ 등을 목표로 내걸었다. 그리고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수도미화추진본부’와 민간단체를 포괄하는 ‘수도미화추진협의회’, ‘수도미화 협력원’ 등의 기구를 두어 도쿄도의 뜻에 따라 민간단체가 동원되는 구조를 만들었다(東京都 1965, 151-153). 이 운동은 1962년 12월부터 매월 10일을 ‘수도미화day’로 부르면서 주민들을 동원한 대대적인 도쿄 청소작업에 나섰다(『とうきょう広報』 1963년 12월 호, 10-14), 이 외에도 각종 공공질서와 공중도덕 캠페인을 수행해나갔다. 천만명의 참가를 목표로 했던 이 운동은 실제로는 160만명이 참가하였는데, 그 숫자로만도 대단한 동원력을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Igarashi 2012, 148).

올림픽을 통해서 도쿄는 ‘쓰레기 없는’, ‘냄새나지 않는’, 그리고 ‘풍기가 문란한지 않은’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다(石渡 2004, 157). 그리고 이를 위한 활동에 인쇄물 등을 통한 캠페인과 도시 미화에의 동원이라는 수단만 활용된 것은 아니었다. 경찰당국과 위생당국의 단속작업이 또 하나의 수단으로 존재했다. 이들은 비위생과 부도덕의 경관을 도쿄에서 몰아내는 것을 목표로 했다. 도시의 미화인 동시에 사회의 정화(social purification)를 추구했던 것이다. 경찰당국은 ‘환경정화’라는 이름으로

1962년부터 변화가에 대한 단속에 들어갔다. 도로교통법, 경범죄법, 풍속영업등 단속법, 물가통제법, 담배전매법, 총포도검류소지단속법 등 다양한 법령을 활용하여, ‘암표상’, ‘날품팔이’, ‘강매’, ‘폭력카바레’ 등으로 명명된 다양한 ‘가두 범죄자’들을 단속하기 시작했고, 매춘방지법을 이용하여 ‘풍속사범’들도 잡아들이기 시작했다. 또한 유흥가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각 경찰서마다 조도계를 배포해 다방 같은 업소들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조도를 유지하여 탈선의 장이 되지 못하게 막고자 했으며, 1963년부터 ‘청소년을 지키는 운동’을 실시, 청소년들의 탈선을 막고자 했다(警視庁 1964, 140-142). 도쿄도 위생당국 또한 이와 비슷한 조치를 취하여, 터키탕 영업을 올림픽 기간 일시 중지시키고, 요식업, 숙박업, 유흥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는 혈액검사를 실시하기도 했다(Igarashi 2012, 149-155).

요컨대, 도쿄올림픽은 전후 국제사회에서 정체성을 변화시키기 위한 프로젝트였다. 그래서 ‘평화’나 ‘민주주의’같은 구호도 내걸었지만, 그 준비과정을 보았을 때 더욱 눈에 띄는 것은 ‘문화국가 일본’ 즉, 문명화된 도시와 사회의 경관을 창출하기 위한 습속개조 프로젝트였던 것이다.

### 3) 내셔널 아이덴티티의 재구성

도쿄올림픽의 준비 과정에서 국내외의 눈에 선명하게 들어온 것은 시민들의 습속의 변화 보다는 물리적 경관의 변화였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들은 국내외에 일본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형성할 수 있는 소재로 활용되었다. 올림픽 스케줄에 맞춘 경관의 개조와 다양한 이벤트들은 추측국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경제적이고 기술적인 근대화를 달성한 아시아 국가라는 이미지를 만드는 데 일조했다.

먼저 올림픽 개최에 필요한 경기장과 선수촌 등의 시설의 경우, 앞서 언급한 것처럼 1940년 당시 계획한 메이지신궁외원(明治神宮外苑), 요요기(代々木), 고마자와(駒沢) 등에 국립경기장과 요요기실내경기장, 고마자와 운동공원 등의 시설이 들어섰다. 이 때, 선수촌과 경기장의 입지를 두고 논란이 오갔다. 왜냐하면 선수촌이나 운동시설이 들어설만한 토지는 과거 연병장으로 쓰였던 장소들이고, 그 장소들은 패전 후 미군이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메이지신궁 남동쪽에 터했던 요요기 연병장은 1947년부터 미군숙소가 되어 워싱턴하이츠라 불리고 있었다. 1950년대 이후 하나둘씩 과거 군시설 부지 및 미군 부지가 공원 혹은 운동장으로 전환되는 가운데(吉見 2015, 24-26), 1961년 워싱턴하이츠에 국립종합체육관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최종 결정 되었다. 건축가 김수근의 롤모델이라고도 일컬어지는 단계 겐조(丹下健三)가 설계한 국립종합체육관은 메이지신궁과의 조화 속에서 메이지기 근대화와 전후복구를 연결시키는 의미를 띤 상징이 되었고(Tagsold 2010, 296), 이러한 일련의 작업은 군사적 공간을 ‘전후형 내셔널리즘’으로 변화시키는 작업이었다(김은혜 2016, 239-242). 올림픽 관련 상징물들 역시 전쟁 당시의 내셔널리즘의 상징을 ‘전후형 내셔널리즘’의 상징으로 변화시켰다. 일본국기인 ‘히노마루’, ‘천황’, 그리고 군대(자위대)가 그것이다. 올림픽을 앞두고 분위기를 고조시킨 성화봉송 길에서 많은 시민



들이 일본 국기를 흔들었고, 천황은 올림픽 개회선서를 담당했다(Tagsgold 2009, 2). 그리고 자위대는 질서유지 요원과 개회식 브라스밴드 등을 담당함으로써 이미지를 일신했다(Droubie 2011, 2314). 과거 전쟁에 활용되던 상징적 존재들이 이미지를 변신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올림픽이었던 것이다.

경기장 이외의 경관개조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 중 하나는 수도고속도로였다. 전후 400만이 채 안되던 인구는 1960년에 800만까지 도달할 정도로 급속하게 증가했고, 이에따라 도시권이 빠르게 팽창했으며, 자동차 대수 또한 1950년 이후 급속하게 증가했다. 이러한 문제의 발생 속에서 1956년 수도권정비법이 만들어지고, 2년 뒤엔 제1차 수도권 기본계획이 만들어졌다. 이 계획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것 중 하나가 수도고속도로였던 것이다. 수도고속도로 계획이 세워지기는 했지만 문제는 시간이었다. 1959년 6월 중순, 올림픽 유치 약 20일 후 수도고속도로 공단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때부터 공사는 급피치를 올렸고, 수용문제로 시간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로와 하천 위를 지나는 방향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런 공사를 통해 올림픽 경기장과 주요시설을 잇는 도로 5개 32km가 올림픽에 맞춰 개통되었다. 이외에도 환상7호선과 방사4호선 등 경기장과 주요시설을 잇는 대로들이 만들어져갔다(石坂 2009, 163-170). 이 고가도로들은 당시국내외적으로 ‘미래도시의 경관’으로 여겨졌다. 새로이 들어서는 고층빌딩의 풍경과 고가도로의 풍경은 당시 “꿈의 근대도시”라 불린 바 있다(Smith 2014, 132). 타르코프스키 감독의 1972년 SF영화 『솔라리스』에서는 도쿄의 고가도로가 미래도시의 형상으로 등장했다. 마치무라(町村 1994, 59-60)가 말하듯, 올림픽을 매개로 한 도시개조는 메이지 이후 도시개조의 총결산이자 ‘모던 도쿄’의 완성했던 것이다.

여기에 올림픽을 앞두고는 군사적 맥락이 소거된 경제성장과 기술발전 등을 전세계에 보여주기 위한 부대적 이벤트들이 동시에 있었다. 대표적 사례가 세계최초의 고속철도라 불리는 신칸센이다. 1955년 국철(国鉄)총재에 취임한 소고 신지(十河信二)가 추진한 이 사업은 1959년 공사에 들어가 올림픽이 열리기 10일 전인 1964년 10월 1일 개업했다. 그 과정에서 반대여론도 상당했고, 예산은 당초 1725억엔에서 3800억엔으로 늘어나<sup>66</sup>, 소고 신지 스스로가 완공 이전에 사임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에 맞춰 공기를 단축한 끝에 올림픽이라는 축제에 하나의 장치로 기능하게 된 것이다(石坂 2009, 167-168).<sup>67</sup> 여기에 세계 최초의 정지궤도 위성인 신

<sup>66</sup>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발표한 올림픽 관련사업 중 신칸센 공사는 가장 많은 금액이 투여된 사업으로, 도로건설 1750억엔과 지하철건설 19000억엔을 훨씬 상회하였다(『第18回オリンピック競技大会公式報告書』, 73).

<sup>67</sup> 이 또한 태평양전쟁기와의 일단의 연속성을 지닌다. 1940년에 이른바 ‘탄환열차(彈丸列車)’ 계획이 입안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는 최고시속 150km로 도쿄를 출발하여 오사카와 시모세키를 들르고, 해저터널을 경유하여 부산과 경성, 봉천으로 북상하다 좌회전하여 북경에 이르는 ‘제국의 철도’ 계획으로, 1954년 개통을 목표로 하는 것이었다. 계획은 1943년 전황악화에 따라 중단되었지만, 이때 국가에 의해 매수되었던 땅이 있었기에 불과 5년 만에 신칸센 개통이 가능했던 것이다(指南役 2009, 156-7).

콤(Syncom) 3호 위성을 통해 전세계 동시중계가 처음으로 가능해지면서, 올림픽은 이른바 ‘과학의 제전(科学の祭典)’으로 불리기까지 하였다.

여기에 전후복구를 상징할 만한 장치가 또 하나 있다. 사카이 요시노리(坂井義則), 1964년 8월 10일에 선정된 올림픽 성화 최종주자였다. 그는 ‘전후복구’를 상징하는 신체로(Igarashi 2012, 153-155),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은 ‘그의 균형잡힌 몸과 가늘고 긴 다리는 성화주자로 적합하다’며 그의 신체를 칭송했다(『朝日新聞』 1964년 8월 10일). 그가 올림픽 성화주자로 선정된 것은 그의 신체가 운동으로 잘 만들어졌기 - 실은 서구화의 함의를 갖는 - 때문만은 아니었다. 1945년 8월 6일,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진 그날 그는 히로시마현 미요시(三次)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의 신체는 전쟁의 폐허에서 다시 서구화로 나아가는 일본이라는 네이션의 내러티브를 체화한 인물이었다.<sup>68</sup>

요컨대, 패전의 흔적이 사라진 도시, 군사기술과 관계 없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 근대화된 도시풍경, 전후복구를 상징하는 젊은 운동선수, 도쿄올림픽은 이 모든 장치들이 결합한 이벤트였다. 이런 장치들의 결합 속에서 올림픽은 패전국가의 이미지에서 경제강국의 이미지, 서구화(=문명화)된 네이션으로서의 이미지를 획득하게 되었다.<sup>69</sup>

국내적으로 이러한 내셔널 아이덴티티는 소비를 부추겼다. 하네다공항 확장, 신칸센의 개통, 호텔의 증가 이러한 요소들은 모두 도시 중산층에게 레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조건들을 제공한다. 여기에 도쿄의 근대화된 도시경관들, 그리고 일본의 새로운 사회상에 대한 담론들이 유통되면서 소비문화가 확산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즉, 문화적으로 올림픽이 소비되면서 물질적인 풍요를 현실화하려는 분위기가 확산되었다는 것이다(Smith 2014, 130-134).<sup>70</sup>

<sup>68</sup> 반면에 여성은 동양의 도덕을 상징했다. 발전국가는 서구를 타락의 상징으로 표상하면서 서구 남성의 성적 유혹으로부터 도쿄의 여성들을 지키고자 했다. 도쿄도 민생국 여성부는 교육용 필름을 만들고, 팸플릿 7만5천부를 만들었고, 약 130번의 강좌를 통해 올림픽이 가져올 도쿄인들의 성적 타락문제에 대처하고자 했다. 젊은 여성들에게 남성들, 특히 백인 남성을 함부로 따라가지 말 것을, ‘no’라고 말할 것을 교육시킨 것이다(Igarashi 2012, 149).

<sup>69</sup> 도쿄 올림픽이 일본의 내셔널 아이덴티티를 바꿨다는 것은 Droubie(2009), Smith(2014), Igarashi(2012), Tagsold(2010) 등 여러 연구에 의해 주장되고 있다. 네 연구 모두 전후 복구와 고도성장 위에서의 소비사회를 중심으로 재구축된 일본의 아이덴티티가 재현된 무대로 올림픽을 규정하고 있다.

<sup>70</sup> 그러나 이런 분위기는 일본 전체는 물론 도쿄 내에서도 격차를 보였다. 어찌 보면 올림픽은 도쿄의 계층화에도 관련성을 가진다. 이 외에도 고마자와 경기장, 하네다공항, 요요기경기장과 국립경기장이 도쿄 23구 내 서쪽에 위치한 관계로 서쪽에 위치한 지역들은 상당한 인프라 개선이 있었다. 사회적으로 볼 때, 1960년대에는 경제구조의 고도화 속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던 화이트칼라 남성노동자와 전업주부로 살아가게 된 여성이 본격적으로 등장했다(杉野勇·米村千代 2000, 182-3), 근대적 생활양식을 상징하는 단지(団地)주택 역시 도쿄의 23구 서쪽에 위치한 여서 도시들에 광범위하게 분포했다. 게다가 롯봉기(六本木)나 아카사카(赤坂),

그리고 이러한 내셔널 아이덴티티는 아시아에서 일본의 입지를 새롭게 만들어 주었다. 이미 1960년대 초 미국은 일본을 자본주의 세계에서 개발도상국의 성공모델로 활용할 계획이 있었다. 특히 아시아에 대해서 그랬다(Smith 2014, 123-4). 방콕, 마닐라, 홍콩, 대만을 들린 성화도 아시아에서 일본의 입지를 확인시켜주는 계기였다(Droubie 201, 2313). 올림픽은 일본이 자본주의 세계의 일원일 뿐 아니라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러한 자신감에 힘입어 일본 외무성은 국제문화교류국을 설치하고 더욱 더 국제사회와의 문화적 교류를 늘려나갔다(Smith 2014, 130). 국제사회에서도 경제적 성공을 중심으로 하여 지위를 상승시키는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다.

## 2. 발전국가 한국의 도쿄올림픽 참조

우리는 제 2장에서 한국의 아시안게임 개최가 처음 논의 된 것이 1958년 도쿄 아시안게임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보았다. 일본의 메가이벤트 개최가 한국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지리적 인접성만 아니라 발전국가라는 특성을 공유한 일본은 여러 모로 한국에 영향을 미쳤는데, 올림픽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자본주의 국가로선 드물게 국가가 국가대표 스포츠 선수의 체육시설을 일찍부터 운영했다.<sup>71</sup> 1966년에 만들어진 태릉선수촌이 그것인데, 이는 1964년 도쿄올림픽 당시 대한체육회장이었던 민관식이 일본에 가서 스포츠과학의 발전상을 보고 구상하여 실천한 것이었다(허진석 2010, 161). 직접 태릉의 모델이 된 선수촌을 가진 것은 아니었지만, 선수강화 시스템을 만들었다. 1959년 5월 ‘스포츠기술연구회’를 문부성의 후원으로 발족하고, 1960년 일본체육협회와 일본올림픽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도쿄올림픽선수강화대책본부’를 만들고 ‘선수강화 5개년 계획’에 대한 백서를 작성했으며, 중앙에서의 구상을 통한 체계적인 선수육성 시스템을 통해 금메달 20개를 획득하고 미국과 소련에 이어 종합 3위를 차지한바 있다(권 2011, 450-451).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도쿄올림픽은 1988년 서울올림픽의 유치과정 및 기획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참조점 역할을 했다.

### 1) 도쿄올림픽 담론: 발전국가 올림픽 성공사례

도쿄올림픽은 1988년 서울올림픽의 유치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

시부야 근처의 (미)군용지들이 반환되면서 이들 다운타운에 미국적 문화와의 접점, 세련됨의 이미지가 형성된다(吉見 2015, 21).

<sup>71</sup> 미국의 국가대표 훈련센터는 1976년 만들어졌고, 일본은 2001년이였다(허진석 2010, 144-147).

참조되었다. 시작은 1979년부터였다. 1979년 초 대한체육회장에 취임한 박종규가 올림픽 유치안을 준비하여 문교부에 이를 정식으로 건의할 때부터 그랬다. 대한체육회가 서울의 올림픽 유치 타당성을 주장할때 내세운 근거 중 하나가 1964년 당시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과 비교해 79년 당시 한국이 더 많으며, 서울의 경우 3,000달러에 이른다는 점이었다(최만립 2010, 23). 이런 대한체육회의 구상에 찬성하면서 대한체육회와 정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한 것은 문교부 체육국장 박성규였다. 그는 1979년 7월 멕시코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마친 뒤 도쿄에 들러 도쿄올림픽의 효과에 대하여 조사를 수행한 뒤 적극적인 협력으로 태도를 바꾸었다고 전해진다(김경훈 1999a, 31). 제 2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1980년 세지마와 고토는 전두환을 만난 자리에서 1964년 도쿄올림픽이 초래한 사회통합 효과 및 국제적 지위 향상 같은 효과를 설명해주고 올림픽을 개최를 권유한 바도 있다(전두환 2017b, 332-3).<sup>72</sup> 마지막으로 박성규 문교부 체육국장이 1981년 2월 일본 문부성의 초청으로 방일했을 당시 야나카와 문부성체육국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일본은 동경올림픽을 치름으로써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올림픽이라는 세계적인 행사를 치름으로써 일본은 자신감을 회복했다. 지금 일본은 또 한번의 위기를 맞고 있다. 다시 충진을 시키고 활력을 주기 위해서는 올림픽을 다시 한 번 치를 필요가 있다(김경훈 1999a, 135).”

1979년부터 1980년까지 1988년 올림픽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도쿄올림픽은 일본의 국제적 지위향상을 성공시킨 사례이자 사회통합을 가능케 했던 성공사례로 발전 국가의 권력 엘리트 및 관료들에게 알려졌던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국제적인 지위향상의 계기로 도쿄올림픽을 파악한 것은 발전 국가의 관료들만이 아니었다. 많은 언론에서도 도쿄올림픽은 중요한 참조사례였다. 1981년 9월 31일 이후 각 언론들은 수십개 이상의 기사를 통해 1964년 도쿄올림픽을 성공적 올림픽의 사례로 들었고, 이러한 성공을 서울올림픽을 통해 재현해야 한다는 논조의 글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정부에 매우 우호적이었던 경향신문이 그러했다. 다음이 몇 가지 사례다.

<sup>72</sup> 세지마와 고토의 전두환과의 만남은 일본정부가 신군부를 측면에서 지원하는 일련의 과정 중 하나였다는 평가가 존재한다. ‘박정희 없는 박정희체제’를 활용하여 한국 상황을 안정시키고 이로써 동북아시아 안보상황을 안정시켜 안보상의 위협요소를 제거하고자 했다는 것이다(박선원 2002). 그래서 전두환도 세지마와 고토가 이 자리에서 올림픽을 권유하면서 “한반도의 안전이 일본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한국의 올림픽 유치를 적극 돕겠다”고 발언했다고 구술한다(전두환 2017b, 332).

“인류의 대제전인 올림픽은 그 위대한 마력 때문에 최소의 투자, 최대의 수확’을 올린 선례를 얼마든지 남겼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일본. 일본은 64년 동경올림픽을 계기로 이른 바 ‘광란의 성장기’라고 표현되는 공전의 호황을 누렸다. 일본은 올림픽 투자가 그대로 성장으로 연결되는 경제적 상승효과를 나타내 제조업, 건설업, 전자산업, 서비스업 등이 눈부신 성장을 이룩했고, 일본의 국민생활패턴에도 큰 변혁을 일으켜 ‘대중소비시대’의 막을 여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경향신문』 1981년 11월 12일, 3).”

“올림픽 확정 후 주가급등, 일본 증시 58년부터 오름세 6년 피크(『매일경제』 1981년 10월 5일,6)”, 동경 유치맨 1년간 주가 오름세(『동아일보』 1981년 10월 5일, 5)“ 등 10월 한 달만 해도 각 신문마다 수십개의 기사를 통해 올림픽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었다고 일컬어지는 도쿄올림픽의 경제적 효과를 올림픽 성패여부의 중요한 참조점으로 삼고 있었다.

## 2) 서울올림픽 기획에서의 도쿄올림픽 활용

발전국가는 올림픽 개최 결정 이후 1964년 도쿄올림픽을 보다 체계적으로 활용한다. 먼저, 올림픽에 관한 목표를 세우고 담론을 만들어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도쿄올림픽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1981년 문화공보부가 발간한 『88서울올림픽』과 85년에 조직위원회가 발간한 『인류에 평화를 민족에 영광을』 등의 공식 홍보 자료만 보더라도 1964년 도쿄올림픽을 매우 중요한 참조 사례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85년 자료의 경우 아예 한 절을 할애하여 도쿄올림픽이 어떻게 치러졌는지 설명하고 있을 정도다(1985, 53-55).

발전국가는 올림픽이 한국을 선진국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선전했다. 그리고 그 예는 1964년 도쿄 올림픽이었다.

서울올림픽대회는 한마디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를 확신할 수 있는 근거로써 현대 일본의 발전 단계에서 동경올림픽이 어떻게 기여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겠지만 오늘의 일본은 세계정상의 경제대국으로 성장시킨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64년의 동경 올림픽이었습니다. 동경올림픽 개최 이전인 60년대까지 일본은 전후복구에는 어느 정도 성공했습니다. 일본인이 근대화 이후 축적해온 과학기술 수준, 국민의 노력, 미국의 원조 등이 전후 일본의 점진적 발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경제규모, 산업기술, 문화수준에서는 아직도 서구 선진국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동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는 일본의 모든 분야를 서구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압도하는 경제 대국으로 성장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 1985, 53).

1964년 도쿄올림픽이 일본을 선진국으로 만들어 주었다고 평가하는 가운데, 올림픽 자체는 경제 규모, 산업기술, 문화수준을 끌어올린 이벤트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발전국가의 관료들은 도쿄올림픽을 통해 경제적 성장만 아니라, 국제사회로부터 문화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들은 이러한 문화적 인정이 ‘민족적인 것’을 보여줌으로써 가능했다고 덧붙인다.

최근 대회만 보더라도 동경올림픽이 동양적인 예의와 섬세성을 보여주는 대회였다면, 멕시코는 아즈텍 문명을 들고 나왔고, 뮌헨은 독일인의 과학성 치밀성을, 몬트리올은 세계최단의 과학문명을 집결시켰다는 평을 들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성공한 사례의 하나로 꼽히는 1964년 동경대회는 시설도 시설이지만 일본적인 것을 선보임으로써 그 같은 칭찬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문화공보부 1981, 30).

여기서 말하는 일본적인 것이란 ‘예의와 섬세성’일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 올림픽이라는 행사 부대행사(문화행사)를 통해서 일본의 전통예술 및 문화를 전 세계로부터 인정받는 데 성공했다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인들이 보여준 습속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았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 발전국가는 “동경올림픽이 끝난 후 일본인들의 친절성이 한때 세계의 화제가 된 적이 있으며 그만큼 세계 속에 일본의 인상이 좋게 심어졌다”고 평가한 바 있다(문화공보부 1981, 43). 물론 이러한 습속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발전국가적 사회통합 방식인 ‘단합’을 통해서 이뤄진 것이었다.

올림픽과 국가발전의 모범적인 사례는 가까운 이웃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일본은 1964년 동경올림픽을 개최하면서 패전 국민으로서의 열등의식을 말끔히 씻고 민족적 자부심을 되찾아 국민 모두가 단합하여 올림픽을 무난히 치름은 물론 경제대국으로의 도약을 성취했던 것이다(문화공보부 1981, 18).

물론 단합 그 자체가 좋은 습속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다. 발전국가가 강조했던 것은 관계캠페인을 통한 습속개조와 도시개조 프로젝트에의 적극적인 참여였다. 일본 국민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올림픽이라는 사회정치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64년에 동경올림픽 개최 당시 일본인들은 지역별, 단체별로 올림픽이해운동협의회, 국제이해운동협의회라든가 공중도덕고양협의회를 비롯, 상업도덕, 교통도덕고양 또는 국토미화운동협의회, 건강증진운동협의회등 수많은 올림픽 관계 국민운동단체를 결성하고 문화국민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범국민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전국적으로 올림픽 붐을 자연스럽게 조성했습니다(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1985, 68).

요컨대, 발전국가는 도쿄올림픽이 다른 무엇보다도 일본을 선진국으로 만든 대회였고, 이는 일본이 국제사회로부터 문화적으로 인정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 인정은 올림픽을 계기로 일본인들의 좋은 습속이 드러났기 때문이며, 이는 발전국가 일본이 주도하는 관계캠페인 방식의 사회정치 프로젝트에 사회 구성원들이 ‘단합’하여 참여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발전국가의 1964 도쿄올림픽 참조는 담론에만 그치지도 않았다. 발전국가의 관료들은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 도쿄올림픽을 지속적으로 참조했다. 이를 위해 도쿄올림픽 이후 나온 각종 보고서와 백서들이 서울올림픽 준비 초기에 한국어로 번역되어 담당 부처에 지급되었다. 1981년도에 정부장관실은 문부성이 1965년도에 발행한 『올림픽동경대회와 정부기관등의 협력』을 번역했고, 각 부처들에게 서울올림픽을 부처 수준에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 작성을 요청하면서 이를 배포했다. 서울시 역시 1965년도에 도쿄도가 발행한 『동경올림픽대회 동경도보고서』를 발췌번역하여 담당부처 직원들에게 배포했다. 대한체육회는 『동경올림픽선수강화대책본부 보고서』를 번역하여 배포했다.

제 1장에서 우리는 발전국가가 갖는 특징 중 하나로 ‘학습에 기반한 근대화’를 꼽은 바 있다. 도쿄올림픽과 서울올림픽이 바로 그런 관계에 해당한다. 도쿄올림픽은 서울올림픽에 있어서 학습 대상이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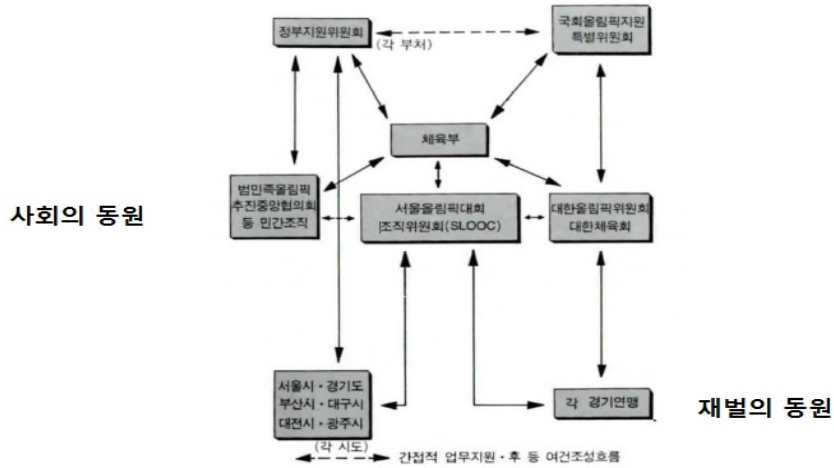
### 제 3절 올림픽 기획과 사회정치의 결합

지금까지 본 것처럼, 사회정치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깊이 개입하려는 정부, 그리고 발전국가 올림픽 참조모델로서의 1964 도쿄올림픽 등의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국가는 올림픽을 어떻게 치를지 기획하고, 준비과정에 대한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었다. 그리고 사회정치를 위한 담론을 생산한다.

#### 1. 올림픽 거버넌스 조직 : 국가의 기획과 시민사회의 동원

서울올림픽 백서(1990, 315)는 [그림 5]와 같이 서울올림픽 준비조직을 도표화하

였다. 이 그림에 등장하는 행위자들을 재해석하면 바로 올림픽 추진엘리트집단이 모두 포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 서울올림픽 준비조직  
(출처 : 서울특별시 1990, 315)

### 1) 정권 엘리트의 기획 독점

올림픽의 기획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한 것은 체육부와 조직위원회였다. 그리고 정부, 그 중에서도 신군부 인사들이 이곳의 핵심 요직을 장악했다. 1981년 11월 조직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전직 외교관이었던 김용식이 조직위원장 직을 수행했지만, 이듬해 1982년 3월 체육부가 만들어지면서 정권의 2인자 노태우가 체육부장관이 되었고, 체육부는 조직위원회를 감독하는 기관이 되었다. 1983년 7월부터 노태우가 서울올림픽 조직위원장이 되고, 1986년에 이 자리를 신군부 출신 박세직에게 물려줌으로써 상당기간 신군부 출신이 올림픽 관련 기구의 핵심에 자리했다.<sup>73</sup> 한편 노태우는 1984년 10월부터 1985년 4월까지 대한체육회장을 겸임했고, 박세직은 1986년 3월부터 체육부장관과 서울올림픽 조직위원장을 겸했다. 서울올림픽과 관련한 핵심 직책들을 겸임하면서 그 영향력을 지속했던 것이다. 아래 표가 이를 보여준다.

<sup>73</sup> 1980년 전두환의 뒤를 이어 보안사령관이 된 것이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노태우였고, 노태우의 뒤를 이어 수도방위사령관이 된 것이 박세직이었다.



[표 4]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조직위원장

서울올림픽 조직위원장	김용식 (1981.11~1983.7)		노태우 (1983.7~1986.5)	박세직 (1986.5~ 1988)
아시안게임 조직위원장	조상호 (1982.4~ 1982.7)	정주영 (1982.7~ 1984.10)	노태우 (1984.10~ 1986.5)	

정부는 1981년 10월부터 올림픽 관련조직인 조직위원회, 정부 준비위원회, 범국민적 자문기구의 조직에 들어갔다(동아일보, 1981년 10월 3일, 3). 이 중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것은 조직위원회였다. 정부는 IOC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 때문에 민간 법인의 형식을 취하면서도 실상은 정부가 조직위를 통제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sup>74</sup> 이는 10월 31일 작성된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 및 지원위원회 설치안"을 통해 드러나는데, 조직위원회 위원장(전직 외교관 김용식), 부위원장, 사무총장 등 주요 임원은 정부가 사전에 정해둔 상태였다. 뿐만 아니라, 체육계, 서울시, 국회, 정부, 각계대표(외교, 경제, 학계, 문예, 언론, 노동, 여성, 관광 총 12명)를 포괄한 총 29명의 조직위원을 정부는 내정했다.<sup>75</sup> 이들 중 다수는, '각계'를 망라했다는 명분과 달리 정부와 매우 가까운 이들일 수밖에 없었다. 조직위원들은 개별 인사로 임명된 것이 아니라 공기업이나 관변단체 임원자격으로 임명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각 정당 원내총무, 서울시 교육감, 대학스포츠위원회장, 상공회의소장, 무역협회장, 신문협

<sup>74</sup> 올림픽헌장 제 35조에 의하면 IOC는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 도시가 있는 국가의 올림픽 위원회에 올림픽 대회 조직을 위임하며, 올림픽위원회는 올림픽대회 조직 업무를 위해 설립해야 한다("IOC Charter 2015", 75). 조직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한 사항은 IOC헌장과 일치해야 하며, IOC헌장에 없는 것은 IOC의 승인이 필요했다("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 및 지원위원회 설치안", 1981년 10월 31일).

<sup>75</sup> 정부는 조직위원회를 9명의 체육계인사, 서울시장, 4명의 국회인사, 4명의 정부인사, 12명의 각계 대표로 위원을 선임하여 범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구상했다("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 및 지원위원회 설치안", 1981년 10월 31일). 이러한구상 위에서 정부가 내정한 조직위원 후보자는 다음과 같다. 체육계 8명(IOC위원 김택수, KOC위원장 조상호, 부위원장 김집, 상임자문 이원경, 사격연맹회장 박종규, 탁구협회장 최원석, 태권도연맹총재 김운용, 원로체육인 손기정), 서울시장 박영수, 국회대표 4명(문공위원장 한병채, 민정당 이종찬, 민한당 고재청, 국민당 이동진), 정부대표 3명(국방장관 주영복, 문교장관 이규호, 정무2장관 노태우), 외교 적십자사 총재 김용식, 경제 2명(전경련회장 정주영, 대한상의 회장 정수창), 학계(대학스포츠회장 장충식), 문예(예총회장 신영균), 언론 3명(신문협회장 문태갑, 방송협회장 이원홍, 연합통신사장 김성진), 노동(한노총위원장 정한주), 여성(이대총장 정의숙), 관광 2명(국제관광공사장 하대돈, KAL 사장 조중훈). (출처 :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 및 지원위원회 설치안", 1981년 10월 31일).

조직위원회 발기인 총회는 11월 2일 열렸다. 10월 31일 조직위원으로 내정되었던 후보자 29명은 전원 발기인 자격을 얻었고, 그 중 26명이 참석했다. 전경련회장 정주영의 사회로 진행된 회의는 10월 31일 대통령이 재가한 안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 참가자들은 적십자사 총재 김용식이 출장관계로 불출석했음에도 만장일치로 조직위원장에 선출하였고, 마찬가지로 만장일치로 전두환을 조직위 명예총재로 추대했다. 29명의 내정자 모두가 조직위원이 되었고, 4명의 부위원장, 10명의 집행위원까지 모두 10월 31일의 결정이 그대로 반영되었다("재단법인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발기인 총회 및 위원회 회의록", 1981년 11월 2일).

회장, 예총회장, 연합통신사 사장, 한국노총 위원장, 관광공사 사장도 당연직 조직위원이었다(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 1989, 81-82). 나아가, 조직위원회 내 핵심 의결기구인 집행위원회도 발전국가의 관료들로 채웠다. 집행위원회는 총회에의 안건상정, 긴급사항 결정, 조직위 위원회 규정 개정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조직으로, 조직위원장, IOC위원, KOC위원장, KOC상임자문, 서울시장, 전경련 회장, 국회 문공위원장, 문교부장관, 정무제2장관, 방송협회장(“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 및 지원위원회 설치안”, 1981년 10월 31일)등, 체육계 인사를 제외하고는 전원 여당정치인 및 관료들로 구성되었다.

조직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 올림픽대회의 조직운영과 재원조달 및 집행, ② 올림픽 대회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③ 경기시설 및 관련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④ IOC 및 ISF, NOC 및 KOC와의 연락, 아시아대회조직위원회 업무지원, ⑤ 정부, 주최도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⑥ 대회기간 중 문화예술행사계획의 수립. 이상 총 6가지다(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1989, 81). 다른 말로 풀어보자면, Preuss(2004, 72)가 말한 1차 시설, 즉 경기와 관련된 기본시설(경기장, 선수촌, 프레스센터)의 준비와 운영, 그리고 Roche(2000)가 말한 공연단체 즉, 개폐회식, 문화축전 각종 경기를 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위해 조직위는 설립 당시에 기본재산 외에도 국가와 지자체의 보조금, 기부 및 찬조금, 사업수익 및 기타 소득 등을 통해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다. 조직위원회는 11월 25일 문교부 허가 제 87호로 설립인가를 받았고, 이튿날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등기번호 1916호로 설립등기를 마쳤으며, 12월 10일 IOC에 정식 통고하였고, 16일 IOC로부터 확인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통보 받아 구성작업을 완료하였다(서울특별시 1990, 317).<sup>76</sup>

<sup>76</sup> 정부는 1982년 1월 말부터 4월 사이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를 만들었다. 아시안게임 조직위는 올림픽 조직위와 상당 수가 중첩되어 있었고 또 구조가 유사했다. 총 33명의 조직위원을 체육계, 국회, 행정부, 경제계, 언론계, 학계 및 기타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중 25명이 올림픽 조직위원을 겸했다. 이들 모두 정부가 내정한 이들이었고, 위원장 역시 정부방첩대로 대한체육회장 조상호가 피선되었다. 이 사항은 4월 20일 대한체육회에서 결정되었고, 3일 뒤부터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는 활동에 들어갔다. 이런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는 점차로 올림픽 조직위원회와 조직을 통합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정부는 우선 조직위원회와의 업무중복을 고려하여 1982년 12월 12일에 두 사무처를 통합하기로 하였다. 다만, 조직위원 및 집행위원 등의 의결기구는 별도로 존속시키기로 했다. 조직위원장 역시 1984년까지는 따로 존재했으나, 1984년 10월 초부터는 겸임하게 되었다(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1987, 50-56).

아시안게임 조직위원은 다음과 같다, (올림픽 조직위원 겸임자는 굵은 글씨) 체육계 10명(KOC회장 조상호, 부회장 김종렬, 부회장 김우중, 상임자문 이원경, 사격연맹회장 박종규, 태권도연맹총재 김운용, 원로체육인 손기정, 태릉선수촌장 김성집), 국회대표 6명(문공위원장 한병채, 민정당 이종찬, 민한당 고재청, 국민당 이동진, 국회올림픽 지원위원장 이세기, 지원위 부위원장 김집), 정부대표 5명(국방장관 주영복, 문교장관 이규호, 정무2장관 노태우, 내무장관 서정화, 서울시장 박영수), 경제계 5명(전경련회장 정주영, 대한상의 회장 정수창, 무역협회장, 국제관광공사장 하대돈, KAL 사장 조중훈), 언론 3명(신문협회장 문태갑, 언론 방송협회장 이원홍, 연합통신사장 김성진), 학계 및 기타(한노총위원장 정한주, 서울대총장 권이혁, 새마을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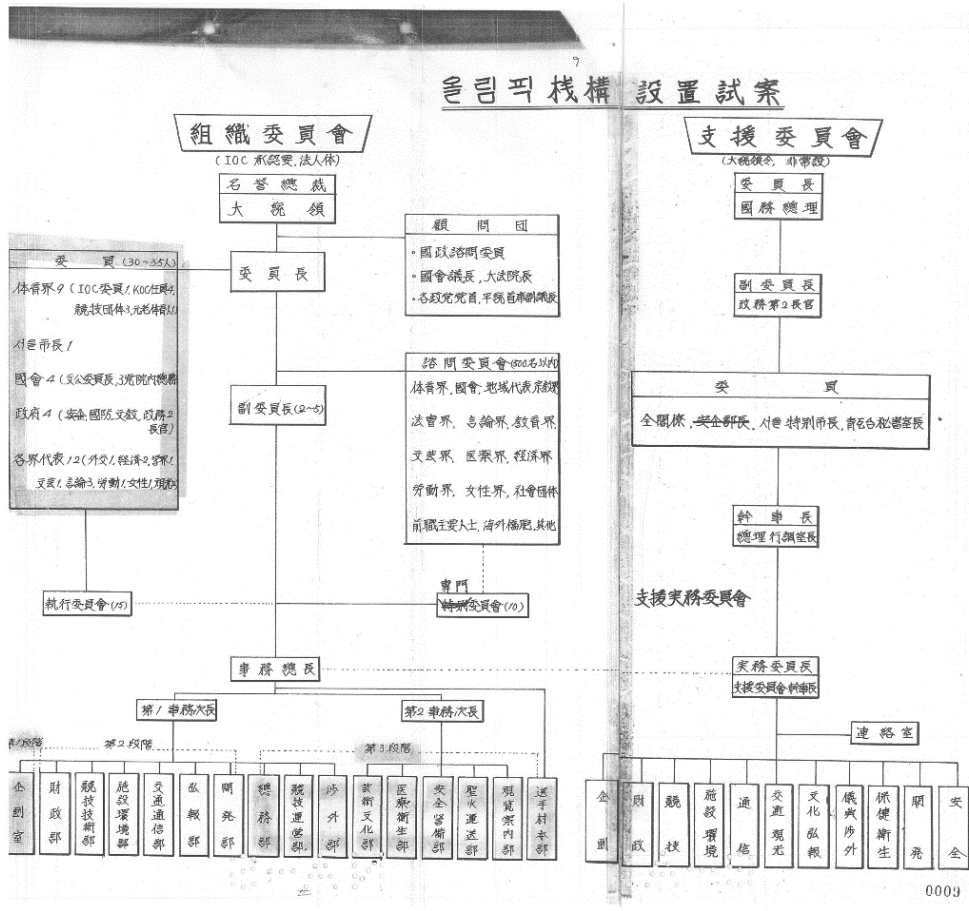
국가는 또한 1982년 봄 체육부를 만들어 조직위원회를 감독하게 했다. 이 부서는 1982년 2월부터 정권의 2인자였던 노태우의 정무 제2장관실이 추진하여 3월 20일에 신설된 부서로, 초대장관에 노태우였다. 체육부는 체육진흥국과 체육과학국, 그리고 국제체육국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중 교육과학국은 올림픽 대비 선수양성을 전담하는 부서였고, 국제체육국은 정부 내 올림픽 지원업무 총괄, 조직위 운영 지도 및 감독, 요원양성 및 해외파견 등의 업무를 맡았다(서울특별시 1990, 337). 같은 날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지원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에 문교부장관에 대한 예결산 보고를 규정은 체육부 장관에 대한 예결산 보고로 바뀌었고, 조직위원회의 광고관련 사업권 역시 체육부 장관의 허가를 얻도록 바꾸었다(관보 제 9330호, 47-48; “88서울올림픽·86 아시아경기대회 준비상황”, 1982년 4월, 81). 조직위원회 정관 역시 개정되어 11조, 12조, 31조에서 체육부 장관이 조직위원회 업무를 감독하도록 하였다.

국가기구는 지원위원회를 만들어 조직위원회를 지원해주는 역할도 함께 맡았다.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 및 지원위원회 설치안”에 따르면 조직위원회 더불어 올림픽 개최관련 결정에 있어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정부 내 서울올림픽 지원위원회였고, 양자(조직위 사무총장과 지원위원회 실무위원장) 사이에는 긴밀한 연락을 주고받게 되어있었다. 이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기구로 국무총리가 위원장, 정무 제2장관이 부위원장을 맡으며, 국무위원 전원과 서울시장,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장이 위원의 자격을 가진다. 그리고 서울올림픽 관계 주요 정책의 총괄과 조정, 올림픽 주요사업의 선정 및 타당성 검토, 조직위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주 활동 내용으로 삼았다(“서울올림픽대회지원위원회 규정안”, 1981년 11월 19일)..

이어서 국회는 12월 14일 김집 등 59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지원법안(법률 제 3535호)을 18일 통과시켰다. 총 18개조로 구성된 동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 등이 재단법인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에 자금과 재산을 출원하고 보조하며, 외국의 자금 차입, 면세, 복권 및 주화발행 사업권 등 조직위원회가 수행할 1차시설 및 공연에 필요한 재원의 마련에 관한 법적 근거를 부여한 것이었다. 아울러, 각급 행정기관으로부터의 공무원 파견, 자료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정부에 대하여는 예결산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그리고 IOC의 방침에 맞춰 국내 올림픽 휘장과 마스코트, 명칭 등에 대한 사용권을 조직위원회가 독점하도록 하였다. 해당 법률은 12월 31일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정식 발효되었다(관보 제 9028호, 314-316). 이와 별도로 국회는 1981년 12월 초부터 민정당 16명, 민한당 9명, 국민당 3명, 의정동우회 2명 총 30명으로 구성된 ‘국회 올림픽지원 특별위원회’의 결성을 논의(동아일보, 1981년 12월 3일, 3), 12월 17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경향신문, 1981년 12월 17일, 1).

---

회장 진경환, 연세대 교수 한양순) (출처 : “제10회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설치안”, 1982년 1월 27일).



[그림 6] 정부의 서울올림픽 기구 설치 시안  
(출처 :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 및 지원위원회 설치안", 1981년 10월 31일)

발전국가는 국무총리실의 이름으로 1981년 10월 29일 모든 부처 및 지자체에 대하여 "서울올림픽 준비 지원 계획안"을 만들어 연내 보고할 것을 명령하였고<sup>77</sup>, 이에 따라 11월 중순부터 1982년 1월 초 사이에 올림픽 지원 계획들이 보고된다. 이는 1982년부터 초 각 부처들의 주요 업무계획 내 올림픽 준비계획으로 이어졌다. 체육부가 정리한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경제기획원은 투자사업 연차별 계획 및 조정, 올림픽 물가조절, 올림픽 관련사업 출자, 외무부는 남북한 스포츠회담, 공산권 및 비

<sup>77</sup> 이때 정부는 참고자료로 '올림픽 동경대회와 정부 기관 등의 협력'이라는 자료를 동시에 배포한다("88서울올림픽 준비 지원계획안제출", 1981년 11월 12일). 발전국이 일본이 개최했던 64년 올림픽을 한국 정부가 상당부분 참조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동맹국가의 대회참가유도, 해외동포 참가 유도, 내무부는 치안대책, 국민의식 개혁, 올림픽 새마을운동, 범민족올림픽추진위원회, 재무부는 자금, 자산, 세제 지원 및 선수준 편의 제공,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 국방부는 경계강화 및 행사지원, 문교부는 학교체육강화 및 외래어 통일 표기, 체육부는 정부내 추진 계획 종합 조정 및 우수선수 양성, 농수산부는 올림픽 식품개발 및 위생 개선, 상공부는 전략 수출상품(스포츠용품, 관광기념품) 개발, 동력자원부는 경기장 전원 확보 및 가스 안전 강화, 건설부는 서울시와의 협조 하에 수도권 정비계획을 포함한 도시인프라 확충, 보건사회부는 선수 및 관광객 위생관리, 위생시설 개선, 노동부는 직장체육 강화, 우수선수 채용, 교통부는 운송체제 개선, 올림픽 관광개발, 체신부는 중계시설 증설, 통신시설 국제수준화, 문화공부는 국민 위화감 해결 및 대회 홍보, 총무처는 행사지원, 과학기술처는 경기운영 과학기술 개발, 국토통일원은 대북대책 수립, 법제처는 올림픽 관계 법령 자료 제공, 안기부는 대회 경비 등이었다(“88서울올림픽·86 아시아경기대회 준비상황”, 1982년 4월, 31-42). 이와 같이 정권은 올림픽을 관료 기구 전체를 동원하여 준비하는 행사로 만들었던 것이다.

개최도시인 서울시 역시 내부에 올림픽 준비를 위한 특별 조직을 만들었다. 1981년 10월 23일 서울시는 기획관리실장 하에 기획, 홍보, 시설, 동시정비, 조경녹화의 5팀 20여 명으로 구성된 올림픽 준비기획단을 설치하였다. 준비기획단은 올림픽 추진계획의 수립, 종합상황실 운영, 올림픽 개최도시 참고자료 발간, 범시민운동 기구 구성 등을 시작으로 활동에 들어갔다. 이렇게 하여 1983년 초 준비사업을 총 84개로 정하였다. 이후 서울시의 올림픽 준비 조직은 두번에 걸쳐 팽창하게 된다. 먼저 1983년 3월 22일 대통령령 11107호로 올림픽 준비기획단은 올림픽 기획단이라는 이름을 새로이 갖게 된다. 이 조직은 기획단장 하 기획, 시설, 지도의 3담당관, 휘하 8계 40명의 직원을 갖추면서 이전 조직보다 약 두배의 인원을 갖게 되었다. 이들은 먼저 84개 사업을 60개로 조정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시설 13개, 환경 20개, 보건 위생 5개, 교통관광 15개, 국민의식 2개, 문화올림픽 5개였다. 올림픽이 다가옴에 따라 1984년 12월 31일 서울시의 올림픽 준비조직은 다시 한번 확대된다. 대통령령 11160호로 올림픽 준비단이라는 이름을 가진 조직으로 올림픽 기획단을 확대개편한 것이다. 이 조직은 부시장급 단장 하에 기획단 하 4명의 담당관, 건설관 하 3명의 담당관, 총 134명의 정원을 갖춘 거대조직이 되었다(서울특별시 1990, 339-344).

## 2) 재벌의 동원

서울올림픽은 재벌이 스포츠에 개입하는 계기였다. 일찍이 1981년 10월 21일 “기업별로 금메달 책임제”라는 기사를 통해 주요 재벌기업들이 서울올림픽을 위하여 스포츠에 개입할 것이라는 기사가 나왔다(『매일경제』 1981년 10월 21일, 12). 이는 현실이 되었다. 1982년 2월부터 문교부는 부패한 체육협회를 조사한다는 명목 하에 조사에 들어갔고(『경향신문』 1982년 2월 16일, 9), 이 틈에 공석이 된 회장자리를

재벌기업주들이 차지하게 되었다. 탁구의 최원석(동아), 축구의 최순영(신동아) 등 올림픽 유치 이전부터 스포츠단체의 장을 지내고 있던 이들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1970년대만 해도 대부분의 단체장은 정치인들이었고, 1980년 신군부가 ‘자율정화’란 이름으로 이들을 물러나게 했을 때 이 자리를 채운 것은 주로 해당종목과 관계가 깊은 중소기업인들이었다(『경향신문』 1980년 10월 2일, 8). 하지만 올림픽 유치 이후 방향이 급선회하여 재벌기업주들로 하여금 스포츠 단체의 장을 맡게 하였다. 레슬링 이진희, 복싱 김승연, 수영 이명박, 탁구 최원석(동아), 육상 장익룡(진로), 배구 김중원(한일합섬), 유도 배종렬(한양), 농구 서성환(태평양), 테니스 김덕영(국제), 양궁 정몽준(현대) 등 1983년 3월 초 시점에 이르러서는 총 35개 단체장 중 30개가 재벌기업주들의 차지가 되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는 서울올림픽 유치 시기부터 활약했던 정주영이 있었다. 그는 1982년 7월 12일 대한체육회장직에 선임되어 1984년 10월까지 활동했다(동아일보, 1982년 7월 12일, 1).

82년도 회장단 창조랭킹 10위				83년도 회장단 창조랭킹 10위 (예정)					
순위	단체	회장	회장 직위	창조금액	순위	단체	회장	회장 직위	창조금액
①	탁구	崔元碩	동아그룹 회장	7억 5천 8백만	①	축구	崔淳永	신동아그룹회장	14억
②	축구	崔淳永	신동아그룹 "	4억 4천만	②	탁구	崔元碩	동아그룹 "	7억 4천만
③	복싱	金昇淵	한국화약 "	4억 1천 3백만	③	사격	朴鐘圭	세계연맹부회장	5억 2천만
④	레슬링	李健熙	삼성그룹부회장	3억 1천 5백만	④	육상	張翼龍	진로대표	4억 6천 7백만
⑤	육상	張翼龍	진로대표	2억 5천 7백만	⑤	복싱	金昇淵	한국화약 회장	4억 5천 5백만
⑥	배구	趙錫來	효성그룹 회장	2억 5천 1백만	⑥	배구	趙錫來	효성그룹 "	4억 3천 9백만
⑦	농구	李東燦	코오롱그룹 "	2억 2천 1백만	⑦	유도	裴鍾烈	한양그룹 "	3억 1천만
⑧	핸드볼	金宗河	고려합섬 대표	1억 8천 7백만	⑧	농구	徐成煥	태평양그룹 "	2억 9천 1백만
⑨	수영	李明博	현대건설 "	1억 8천만	⑨	레슬링	李健熙	삼성그룹부회장	2억 8천 9백만
⑩	유도	裴鍾烈	한양그룹 회장	1억 7천 7백만	⑩	수영	李明博	현대건설 대표	2억 7천만

[그림 7] 재벌기업주들의 스포츠단체장 겸직과 창조  
(출처 : 『경향신문』 1983년 1월 29일자. 9)

이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해당 종목에 대하여 전례없는 ‘투자’를 하고 그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었다(『동아일보』 1982년 12월 21일, 8). ‘투자’에 대한 요구가 매우 노골적이었는지, 1982년 7월 대한체육회장에 취임한 정주영은 2개월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나를 돈만 내는 봉으로 안다”는 말을 던지기도 하였다(『동아일보』 1982년 9월 29일, 9). 하지만 이들이 체육계에 새로운 자금줄이 된 것만은 분명했다. 기업주들은 1982년부터 스포츠계 1년 총 예산 약 150억의 절반 정도를 창조하기 시작(『경향신문』 1982년 3월 6일, 9). 이듬해 비중을 2/3로 올랐다(『경향신문』 1983년 1월 29일자. 9). 정주영 회장의 경우 LA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 6명 전원에게 3천만원의 상금을 보내는 등(『동아일보』 1984년 8월 13일, 1), 그 지출은 상당했다. 이렇게 시작된 재벌기업의 종목 담당 체제는 1988년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서울올림픽 당시 정식종목이었던 23개 종목협회의 협회장 전원이 재벌 및

공기업의 임원이었다.<sup>78</sup>

요컨대 서울올림픽은 정권이 핵심 구상 기능을 맡고 관료기구와 재벌이 추진 엘리트를 구성하며, 관료기구를 통해 사회를 동원하여 준비된 행사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 3) 관제 시민사회의 동원

발전국가는 올림픽을 위해 시민사회를 동원하고자 했다. 몇 개의 정부부처가 이를 맡았고, 별도로 거대한 관제캠페인 조직을 만들었다.

서울올림픽과 관련한 정부 내 협의기구인 서울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는 1981년 말 열린 회의에서 1982년의 주요업무를 ‘녹화사업’과 ‘국민의식 및 교육수준 향상을 통한 선진국민상 구현’으로 설정하였다(“서울올림픽대회준비추진상황”, 1982년 1월 11일, 15). 같은 달 정부 지원위원회는 부문별 지원계획지침을 만들면서 문화홍보분야 지원 사업의 내용으로 “선진 시민의식의 확립”을 들었고, 구체적으로는 “질서의식의 정착, 상거래 질서 확립, 예의·친절·협동정신”을 목표로 세웠다(“서울올림픽대회 부문별지원계획지침(안)”, 1981년 1월, 13).

1982년 2월 2일 지원위원회의 준비계획 속에서 정부는 올림픽을 통한 사회정치 계획을 보다 구체화시켰다. 이 계획 속에서 내무부는 문교부, 문공부, 상공부와 의 협조 속에서 “국민의식 개혁운동 전개”를 통해 “주인정신, 공동체의식, 질서, 예의, 친절, 상거래 질서 등”을 고양하고자 했고, “반상화, 캠페인 등을 통한 자발적 국민운동의 전개”를 통해 이를 달성하고자 했다. 문화공보부 역시, 내무부와 공조하면서 국민들에게 올림픽이 ‘흑자대회’가 될 것이며, 또 ‘경제활성화 등 도약의 계기’가 될 것임을 홍보하고, 이를 위한 기록영화나 책자를 제작하는 것을 그 준비업무로 설정하였다. 보건사회부의 경우 ‘결연대책’을 중요 준비 사항으로 꼽았다. (“88서울올림픽대회·86아시아경기대회 준비계획”, 1982년 2월 2일).

이상과 같은 국가기구의 시민사회 동원에 더하여 관제캠페인을 통한 대규모의 동원 역시 존재했다. 발전국가는 사회정화위원회와 새마을운동이라는 관제캠페인 조직을 갖고 있었지만, 여기에 올림픽을 명분으로 또 하나를 추가한다. 범민족올림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다. 기존의 관제캠페인 조직에 이를 더하여 발전국가는 올림

<sup>78</sup>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역도 박건배(해태그룹), 테니스 조중건(대한항공), 사이클 민경주(기아자동차), 사격 이우재(한국통신), 탁구 최원석(동아그룹), 양궁 정몽구(현대그룹), 승마 이건영(한국마사회), 유도 박용성(두산그룹), 카누 문박(럭키금성), 농구 김상하(삼양사), 하키 정태수(한보그룹), 레슬링 이건희(삼성그룹), 육상 박정기(한국전력), 축구 김우중(대우그룹), 조정 허신구(럭키금성), 수영 이명박(현대그룹), 핸드볼 김종하(고합그룹), 복싱 김승연(한화그룹), 배구 김중배(한일합섬), 체조 고준식(포항제철), 펜싱 조내벽(라이프그룹), 요트 이석희(대우그룹), 근대5종 권영각(주택공사).

픽을 매개로 한 사회정치를 위해 시민사회를 동원해나갔다.

이 조직에 대한 구상은 올림픽 유치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1981년 10월 2일 안기부는 조직위원회 및 정부 준비위원회에 대한 자문역할을 할 기구를 국민 가계각층 및 여야정치인, 직능대표 등으로 구성하여 국민화합을 유도해야 한다는 제언을 한 바 있다(“88년 서울올림픽 부문별 사업추진방향”, 1981년 10월 2일). 이튿날 총리 주제로 열린 관계자 회의에서도 조직위원회 및 정부 준비위원회와 더불어 빠른 시일 내에 출범시킬 조직으로 범국민적 자문기구가 꼽혔다(동아일보, 1981년 10월 3일, 3). 그만큼 시민사회의 동원은 매우 중요한 과제 중 하나였다.

조직작업은 1982년 들어 구체화된다. 노신영 외무장관과 서정화 내무장관은 정부 지원위원회에 “서울올림픽대회 후원회 결성방안”을 제출하고 조직의 목적과 조직 방식, 주요 활동 등을 제안한다. 주요 목적은 “1986 아시아경기대회 및 1988 서울올림픽 대회의 성공적인 수행과 범민족적인 참여를 통한 민족단합의 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었다고, 국내의 경우 시도별로 150인 내외(서울 300인, 부산 200인), 시군구별 50인 내외(50만 이상 100인)로 구성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올림픽에 대비한 ‘주민정신 계도’, ‘올림픽 주요사업의 교육·홍보’, ‘지역별 정비·미화운동’ 등의 활동을 이들에게 맡기고자 하였다. 올림픽을 명분으로 전국민을 동원하여 습속과 도시를 개조하고자 했던 것이다. 해외동포 후원회의 경우 현지 공관장이 교민회를 활용하여 조직하며, 교포사회의 단합 및 모국과의 일체감 조성, 통역 등 지원, 올림픽 현지 홍보 등의 활동을 이들에게 맡기고자 하였다(“서울올림픽대회 후원회 결성방안”, 1982년 1월).<sup>79</sup>

<sup>79</sup> 재일 민단은 1982년 3월부터 3개월간의 작업을 거쳐 신한은행의 창립자 이희건을 회장으로 하는 올림픽 후원회를 6월에 발족했다. 이들은 1988년까지 총 5244억6천만원을 모금했고, 별도로 재일민단 부인회가 총 16억 4천만원을 모금하여 이를 전달했다. 이들의 후원이 해외 교포 후원금의 절대다수를 차지했는데, “못살고 미개한 민족이라고 팔시받으며 살아온 재일동포”들이 올림픽을 통한 한국의 국제적 지위향상에 대한 감격이 그 동기를 이루었다고 설명한다. 서구중심주의적 문명론 내지 인종주의에 기초한 사고를 보이고 있는데, 그 때문인지 부인회의 후원금액은 국내 주요관광지의 화장실 14개의 개조에 사용되었다. 재래식이 주를 이루었던 당시의 화장실을 “올림픽 때 한국을 찾을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보여주기 부끄러운 시설”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나머지 500억은 올림픽 공원의 체조, 수영, 테니스 경기장과 조직위원회 건물, 그리고 미사리 조정경기장 및 장충체육관 보수비용으로 활용되었다(재일동포모국공적조사위원회 2008, 44-61)

국가기록원에 소장되어 있는 경남 진양군(“진양군 범국민 올림픽추진위원회 규정”, 1981년 2월 26일), 양산군(“범민족올림픽 추진 양산군 위원회 규정 제정 공포 건의”, 1982년 3월 3일), 경북 울주군(“울주군 범민족 올림픽 추진위원회 규정 제정”, 1982년 7월 20일), 경기 평택군(“서울올림픽대회범민족추진평택군위원회규정”, 1982년 3월 6일), 인천군(“서울올림픽대회범민족추진이천군위원회규정”, 1982년 4월 12일), 충남 천안시(“범민족올림픽추진 천안시위원회 규정 제정 발령”, 1982년 3월), 전남 완도군(“범민족 올림픽 추진 완도군 위원회 규정 공포”, 1982년 3월 23일), 전남 해남군(“서울올림픽대회 범민족올림픽추진 해남군 위원회 규정”, 1982년 2월 24일)의 규정이 모두 동일하다는 사실을 토대로 유추한 것이다.



이 무렵부터 ‘후원회’는 올림픽의 후원에 더하여 사회정치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된다. 핵심 사업이 ‘주민정신 계도’라는 점이 이를 보여준다. 이종찬 민정당 원내총무 또한 “국민의식 개혁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TV등을 통한 올림픽 대비 질서 캠페인은 소극적인 감”이 있으므로 후원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서울올림픽 준비계획 정당협조 조찬회 결과보고”, 1982년 1월 29일). 그에 앞서 서울 시도 국민의식구조 개혁을 위하여 국민운동본부와 같은 민간운동 본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후원회 명칭을 발전적으로 개칭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 바 있다(“조직위원회 주최 올림픽 관계관 오찬록 보고”, 1981년 1월 13일). 후원회는 이제 기존의 사회정화위원회나 새마을운동과 유사성을 지니게 된 또 하나의 사회정치 조직으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다.

명칭은 1982년 2월 초 정해진다. 1982년 2월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준비계획보고 석상에서 전두환은 “외국적을 취득한 자를 포함하는 모든 해외동포는 물론, 북한 동포도 이에 적극 참여케 하는 취지 하에서 그 명칭을 ‘범민족 올림픽 추진위원회’로 할 것”을 지시했다(“올림픽 및 아시아경기대회 준비계획 보고”, 1982년 2월 2일). 이에 기초하여 1982년 2월 5일 정부지원실무위원회에서는 ‘서울올림픽 범민족추진위원회’ 또는 ‘범민족올림픽추진위원회’ 중 하나로 이름을 정하기로 했고, 서울올림픽대회 해외동포 후원회라는 이름으로 해외동포 후원조직을 별도로 만들기로 했다(“서울올림픽대회 제2차지원실무위원회 개최결과”, 1982년 2월 25일).

전국단위 조직은 2월 중순부터 시작되었다. 2월 10일 내무부는 청와대에 “올림픽을 치르기 위한 순수 민간지원조직”으로 추진위원회를 13개 시도에 걸쳐 3월 초까지 만들기로 결정한다(매일경제, 1982년 2월 10일, 1). 이에 따라 1982년 2월 15일부터 20일까지 시도별로 발기인 총회가 열렸고, 3월 19일부터 4월 6일 사이에 창립총회가 개최되었다(서울특별시 1990, 350). 서울의 경우 2월 20일 발기인 총회를 가졌고, 3월 19일 4,568명을 회원으로 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했다(서울특별시 1990, 353).

해외동포 후원회는 1982년 6월 11일 재일동포 올림픽 후원회를 시작으로 총 1986년 2월 21일 호주후원회까지 총 53개 지역 68개 후원회가 조직되었는데, 이는 1987년 말 47개국 57개 공관 67개 후원회로 재편되었다(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1989a, 236). 이들의 보조금은 서울올림픽에 적지 않은 보탬이 되었다. 정확한 집계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약 578억원 정도가 해외동포의 후원금으로 추산되고 있다(김철수 2017년 2월 1일. 그 중 재일동포의 후원금이 약 541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추진위원회는 지역별 민간단체의 형식을 취하였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민간을 동원하는 기구였다. 지방행정기구로 하여금 추진위원회를 육성하도록 했기 때문이다(“86·88올림픽준비지원계획”, 1982년 6월 24일). 각 지역 위원회 규정을 보더라도 이는

잘 드러난다. 행정단위 및 인구에 따른 인원 차이는 있지만, 이를 제외한 모든 지역별 위원회 규정은 동일하다. 인구에 따라 인원을 달리하는 것 자체도 정부의 지침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모든 지역위원회는 정부가 전달한 규정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올림픽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정부는 중앙조직을 만들고 조직을 확대한다. “전국민의 자율참여와 시민의식의 개선, 그리고 손님맞이 환경개선작업이 하나의 구심점 아래 보다 강력하게 추진되지 않고는 86·88 양 대회의 성공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85년 3월 2일 “범민족올림픽추진중앙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를 만들었고, 지도·감독을 중앙부처인 내무부에 일임했으며, 예산은 조직위원회에서 내는 것으로 했다(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1989b, 32). 그리고 1986년 8월부터는 15개 시도(광역행정기구 및 이북5도), 243개 시군구협의회로 조직을 확대했다. 1987년에는 청·장년회원 16만여명을 추가 가입시키고, 1988년 행정구역 개편과 더불어 시군구협의회를 255개로 확대하면서 회원은 총 26만명까지 늘게 된다(범민족올림픽추진중앙협의회, 1988, 27-30).

추진위원회의 목적과 주요사업을 규정한 총칙을 보더라도 이 조직이 정권의 사회정치의 한 수단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활동의 목적과 주요 활동을 규정한 총칙의 제 1조와 4조는 지역 공통으로 다음과 같이 작성되어 있다

제 1조 (목적) 86 아시안 경기 및 88 올림픽대회의 성공적 수행을 대비하고 전국(도·시)민의 총력지원과 참여를 통하여 민족대화합의 계기를 조성하며 선진문화의식 함양과 체육진흥 기반 확립으로 국위를 선양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략)

제 4조 (사업) 위원회는 올림픽에 대비한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올림픽에 대비한 선진문화의식 함양 및 계도, 2. 올림픽에 관련된 주요사업의 교육 및 홍보, 3. 지역별 환경정비 및 미화운동, 4. 지역단위 국민체육 진흥, 5. 기타 올림픽 준비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서울올림픽대회 범민족올림픽추진 해남군 위원회 규정”, 1982년 2월 24일).

올림픽에 대비한 습속개조, 올림픽 홍보, 도시개조에의 동원, 스포츠 확산 등이 주요 사업내용이었다. 1964년 도쿄올림픽 당시 올림픽 이해, 국제이해, 공중도덕, 상업도덕, 국토미화, 건강증진 등을 부문으로 했던 ‘올림픽 국민운동’과 유사성을 지닌다. 그리고 1980년대 발전국가의 사회정치와 매우 깊은 연관성을 지닌다.

이 조직은 또한 산업사회적 특성에 기초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예외적으로 직업에 기초하여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파악하고, 직업단체들을 동원함으로써 ‘사회’를 동원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추진위원회 총원에 있어서는 직능대표성

이 강조되고 있다. 지역별 위원회의 발기인 및 추진위원 명단을 보면 1981년 서울 올림픽 조직위원회 결성 당시와 마찬가지로 참여자들을 직능별로 구분하여 직능대표라는 상징성을 부여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발기인은 총 16명이었는데(매일경제 1982년 2월 20일),<sup>80</sup> 이들은 종교계, 교육계, 언론계, 실업계, 체육계의 직능별 대표자로 상징성을 가지는 이들이었다. 경기도 고양군이 경기도에 추진위원 현황을 보고하면서 평통자문위원, 새마을조직 대표, 사회정화위원, 반공·안보단체, 체육계, 교육계, 종교계, 언론계 등 직능으로 나눈 양식에 맞춰 인원을 기입하여 보고하고 있음을 본다면, 추진위원도 마찬가지였으리라 추측된다(“범민족올림픽추진위원회 구성 및 활동상황 제출”, 1983년 4월 2일). 우리는 앞서 추진위원회의 중요 목표 중 하나가 ‘민족의 대화합’ 즉 사회통합임을 보았다. 그렇다면 추진위원회는 구성원 층위에 있어서의 직능대표성을 통해 사회를 재현하고, 그럼으로써 추진위원회가 사회통합의 상징으로 기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2. 올림픽과 사회정치의 결합

### 1) 올림픽 마스터플랜

올림픽과 관련한 종합계획은 보통 조직위원회가 담당한다. 하지만, 서울올림픽의 경우 이를 주관한 것은 체육부였다(“88서울올림픽대회·86아시아경기대회 종합계획수립방안”, 1982년 4월). 체육부는 1982년 3월 창설 이후, 4-5월 동안 정부 부처들로부터 사부문별 계획을 취합하여 6-7월 사이 시안 작성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친 뒤 8월 11일에 “86아시아·88올림픽대회 종합계획”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발표했다(“올림픽 마스터플랜 발표계획”, 1981년 8월 10일).

다음으로, 체육부는 올림픽을 통해 국제사회 속에서 지위를 높이는 동시에 탈냉전적 정체성을 국제사회 내에서 형성하고, 국내적으로는 올림픽을 계기로 사회질서와 통합을 이뤄갈 것을 목표로 삼았다. 종합계획이 말하는 올림픽의 효과는 다음과 같았다. “우리 민족의 평화애호의지 전세계에 인식”,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 재정립 승화”, “우리 국민의 질서의식 확립”, “우리 국민의 화합·단결 심화”, “우리 국가의 국제적 지위 향상”, “우리 국가의 스포츠 선진국으로 부상”. 이상 6가지다.

대회 일정과 규모는 다음과 같이 추계되었다. 아시안게임은 1986년 10월 3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되며, 34개국에서 9,300명의 대회관계자가 참가하고 24개 종목 총

<sup>80</sup> KNCC회장 강원용, 천주교 서울대교구 총대리 경갑용, 고려대 총장 김상협, 조계종 총무원장 김법진, 외국어대 총장 김동선, 연합통신 사장 김성진, 대한체육회 부회장 김종렬, 신문협회장 문태갑, 한국관광협회장 오세중,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유기정, 한국방송협회장 이원홍, 대한건설협회장 이재준, 새마을운동중앙본부사무총장 전경환,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정수창, 이화여대 총장 정의숙, 한진그룹 회장 조중훈

270개의 메달을 두고 경기가 치러진다. 예상되는 관광객은 약 15만명이다. 올림픽은 1988년 9월 20일부터 10월 5일까지(변동가능) 151개 회원국에서 약 28,000명의 대회관계자가 참가하고 23개종목 223개의 메달을 두고 경기가 치러진다. 예상되는 관광객은 약 35만명이었다.

1980-81년 유치 논의 당시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비용문제의 경우 6천억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 1981년 2월 IOC에 답변서를 보내는 과정에서 계산한 쪽에 가까워진다. 1981년 초반해도 올림픽 유치 계획을 취소할 정도로 중요한 변수였던 비용이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것은 다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볼 만하다. 첫째, 앞서도 본 것처럼 1981년 9월 단계에서 권경엘리트인 신군부의 핵심인 노태우가 올림픽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점이다. 김재익 등 경제관료들의 주장이 힘을 얻고 있던 1980년대 초라고는 하지만 노태우는 그런 경제관료들이 반대발언조차 허용하지 않을 정도의 권력을 갖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 논리보다는 올림픽의 성공 자체가 훨씬 더 중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둘째, 1981년 이후 냉전블록의 동맹들과의 관계개선 국면에서 경제위기 탈출을 위한 자금지원이 있었다. IMF는 70년대 내내 매년 약 2천만 달러 정도의 차관을 제공해왔으나, 1980년과 1981년도에 평년의 약 30배에 이르는 6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했다. 세계은행 역시 마찬가지로 전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차관을 1980년대 초에 제공했다. 일본에게는 1982년 초 약 100억달러의 차관을 요청한 상태였다(박영대 2013, 90-99). 이렇게 동맹국들로부터의 지원의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비용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파악했을 가능성도 높다.

그래서 1981년 12월 조직위원회가 발표했던 것처럼 4개 경기장을 신설하는 게 아니라 2월 IOC에 답변서를 제출할 당시처럼 10개 경기장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책정한 총합계획의 수입 및 지출계획은 [표 5]와 같다.

[표 5] 서울올림픽 직접사업 수입 및 지출계획  
(출처 : “86아시아·88올림픽대회 총합계획”, 28)

수 입		지 출	
사 업 명	금액(억원)	사 업 명	금액(억원)
합 계	6,110	합 계	6,110
1. TV방송중계료	3,340	1. 행사 사업	1,167
2. 기념주화	932.5	대회운영	(720)
3. 올림픽복권	600	주관방송기구운영	(447)
4. 표장사용권료	430	2. 시설 사업	2,795
5. 입장권	224	경기장시설	(2,074)
6. 기념품	35.5	주관방송시설	(393)
7. 기념우표	20	기타	(328)
8. 광고	50	3. 환경사업	371
9. 유료책자	28	통신장비 + 기타	(224 + 147)

10. 부담금	50	4. 개발사업(수익사업비)	55
11. 기부금품	320	5. 공통사업	1,118
12. 건물매각	30	기관운영 + 기타	(982 + 136)
13. 아시아조직위	50	6. 예비비	604

1983년 3월 초 정부 내 올림픽 관련 정책의 조정 기능은 체육부에서 다시 국무총리실로 이관되고, 이들은 마스터플랜을 수정한다. 1983년 3월부터 각 부처에 계획을 수정 및 보완해줄 것을 요청(“86아시아88올림픽대회 총합계획”의 수정 보완제출, 1983년 3월 12일), 수합한 계획들을 토대로 경제기획원과 협의하였다. 경제기획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총합계획을 수정하고자 함이 아니었다. 반대로, 올림픽 계획에 맞춰 1981년도에 만들어졌던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을 역으로 수정하는 작업을 거친 것이다(“5차계획수정작성시 올림픽 총합계획 반영”, 1983년 9월 7일). 이 역시 국가기구 내에서 올림픽이 갖는 위상, 올림픽을 주도한 신군부 인사들이 갖는 위상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러한 작업 끝에 1983년 12월, 서울올림픽 기본계획이 ‘종합시행계획’이라는 이름으로 확정된다(“86아시아·88올림픽대회 종합시행계획”(이하 종합계획), 1983년 12월).

새로운 기본계획은 5가지 목표를 내세웠다. ① 인류화합의 대제전으로 세계평화에 기여, ② 86, 88 대회를 선진도약의 전기로 활용, ③ 한국적 정취의 최대 발현, ④ 적자없는 대회로 국민부담 최소화, ⑤ 과급효과의 극대화가 그것이다. 이 역시 올림픽을 통한 탈냉전 정체성 획득, 국제적 지위 향상과 관련되어 있다. ③ 한국적 정취의 최대발현 중 첫번째 세부 방침이 ‘친절, 예의, 질서의 국민상 정착’인 것을 감안한다면 사회정치와도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종합계획, 3). 세부 방침이라고 해서 중요성이 덜한 것은 아니다. 대회 준비에 있어서 정부가 내세운 기본 원칙 중 하나는 “미국, 독일 캐나다 등 선진 수준으로 시설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는 막대한 투자가 소요되므로 우리의 분수에 맞도록 투자하고 다소 부족한 점은 인정, 친절, 질서 등으로 보완”하는 것이었다. 시설과 대조적으로 국민의식은 “선진국민의 교양수준으로 정착” 시키는 것이 정부가 올림픽에 대해 부여한 목표였다(종합계획, 5). 시설투자가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미흡함을 만회하는 수단으로 정부가 선택한 것이 ‘선진국 수준의 국민의식’이었던 것이다. 대중의 습속을 규율하고 동원하려는 시도, 즉 사회정치 역시 매우 중요시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경기장은 1982년에 계획된 10개에서 다소 줄어든 8개를 신축하기로 했고, 관련시설은 총 5개를 신축하기로 했다. 8개의 신축경기장은 국립경기장 5개(사이클, 수영, 펜싱, 체조, 역도), 과천승마장, 부산 요트경기장, 미사리 조정경기장이었다.<sup>81</sup> 새롭게

<sup>81</sup> 경기는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다. 올림픽 공원(체조경기장, 역도경기장, 사이클경기장, 수영경기장, 펜싱경기장), 서울종합운동장(대운동장, 실내체육관, 학생체육관, 수영장), 태릉선수촌(사격경기장, 양궁경기장, 근대5종), 미사리(조정경기장), 장충체육관(농구), 수원실내체육관 및 성균관대 체육관(핸드볼 경기장), 효창운동장 및 성남운동장(하키 경기장), 유도대학 체육관(유도 경기장), 국군체육부대 체육관(레슬링 경기장), 한양대 체육관(배구경기장), 수

만들어지는 5개의 관련시설은 올림픽선수촌(기자촌), 아시아선수촌 및 공원, 올림픽회관(조직위원회 건물), 프레스센터, 방송회관이었다. 이들에 대하여는 건설비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는데, 그 방법은 사후 활용이었다. 올림픽 선수촌, 아시아선수촌은 대회 후 민간에 분양하고, 올림픽회관, 프레스센터, 방송회관은 대회 후 각각 대한체육회, 한국전력, KBS가 사옥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결정한 것이다(종합계획, 42-47). 특히 선수촌과 기자촌의 경우 분양대금에 기부금을 최대한 추가납부해야 분양에 당첨되는 ‘프리미엄부 선매제(기부금 낙찰제)’를 통해 비용을 최대한으로 보전하고자 했다(“아시아선수촌·국립경기장 추진방안회의결과보고”, 1983년 2월 5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은 아래 [표 6]과 같이 증가했다.

[표 6]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 수입 및 지출  
(출처 : 종합계획, 14)

수입		지출	
항목	금액 (억원)	항목	금액 (억원)
계	7,477	계	7,477
TV방영권	3,838	행사	2,690
기념주화	915	시설	2,510
회장사업	478	보건·위생	29
올림픽복권	959	교통	201
선수촌·기자촌 분양	568	통신	378
기타	719	개발	193
		문화·홍보	663
		잉여금	813

수정된 마스터플랜은 올림픽에 필요한 2차시설, 즉 대회와 직접적 관계는 없지만 대회에 필요한 시설들과 기타 준비사업에 필요한 예산들도 밝히고 있다. 환경관련 사업(가로정비, 불량지구 정비, 미관저해물 정비, 철도변 정비, 녹화사업, 조형사업, 공원조성, 한강종합개발)에 3,119억원, 보건위생 사업(특별방역, 선수 및 임원 보건 관리, 관광객 보건관리, 약물검사, 식품접객업소 개선, 공중변소 시설 개선, 성병근절)에 406억원, 공해분야(대기환경 기준 유지), 교통(대회운송, 국제공항 확충, 운행체제 개편, 도로 개선) 관광(관광여건 조성, 관광자원 및 코스 개발, 국립공원 정비, 숙박 시설 확보, 관광쇼핑품 개발) 사업에 3,990억원 등, 총 1조 811억원의 예산이 올림

영만 요트경기장, 서울대 체육관(탁구 경기장), 경희대 테니스 코트, 축구는 서울종합운동장, 동대문운동장, 대전공설운동장, 광주 무등경기장, 대구 시민운동장을 사용하기로 했다. 마라톤 및 경보, 도로사이클은 경기도에서 잠실 일대로 이동했다(종합계획, 40-41). 이 같은 행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진행 및 안내 요원은 86 아시안 게임 56,462명, 88 올림픽 133,343명으로 추계되었다(종합계획, 110).

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간접비용으로 추계되었다(종합계획, 16; 49-98).

## 2) 올림픽의 목표와 사회정치

앞서 우리는 1982년과 83년의 마스터플랜에서 국가는 올림픽을 통해 국제적 지위를 높이고 사회질서와 사회통합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웠음을 보았다. 이러한 목표는 ‘미사여구’에 지나는 것이 아니었다. 올림픽과 결합된 사회정치 담론은 올림픽을 준비하는 내내 유통되었다. 정책적 체계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문화공보부와 조직위원회는 홍보책자들을 통해 계속적으로 올림픽을 습속과 도시개조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는 국가의 의도를 사회 구성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렸다.

1981년 10월에 문화공보부가 제작한 책 『88 서울올림픽은』 전반부를 “올림픽의 개최 의의와 우리의 과제”라는 이름으로 묶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1988년 올림픽의 개최로 인해 예상되는 효과들을 먼저 나열하고, 그를 위해 시민들이 수행해야 할 과제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서술되었다(문화공보부 1981, 1).<sup>82</sup> 하지만 예상되는 국민들이 특정 과제를 수행해야 발생하는 효과라면, 그것은 효과가 아니라 ‘목표’일 것이다. 책이 설명하고 있는 올림픽의 목표는 크게 다음 여덟 가지다. ① 국제적 지위 향상, ② 한반도 긴장 완화, ③ 미수교국가들과의 관계개선, ④ 국민적 단합 성취, ⑤ 선진국 경제로 진입, ⑥ 국민의식의 선진화, ⑦ 경기부양, ⑧ 서울 개발이 그것이다(문화공보부 1981, 11-29). 앞서 제시되었던 올림픽을 계기로 설정했던 목표와 연동시켜 재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⑤, ⑦, ⑧이 발전의 지속에 해당되고, ②와 ③은 국제적 지위 재구성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④와 ⑥은 사회정치와 관련

<sup>82</sup> 올림픽 유치 결정 이후 올림픽의 의의와 과제는 외무부와 안기부가 정리한 바 있다. 외무부가 작성한 “88 올림픽 서울 유치 교섭단 활동 결과보고”는 다음과 같이 올림픽 개최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6개 분야에 걸쳐 정리하고 있다. ① 외교 : 아국의 국제적 지위 강화, 비동맹국가와의 유대 강화, 미수교국과의 교류확대, ② 남북관계 : 한반도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에 기여, 남북관계에서 주도적 위치로 부상, ③ 경제 : 대외 공신력 제고, 경기부양 및 경제성장에 활력소, 선진국 대열, ④ 사회 : 국민적 단합과 역량의 집결, 새로운 의욕 집결, ⑤ 문화 : 전통문화의 소개와 문화민족의 긍지 과시, ⑥ 스포츠 : 스포츠 발전의 계기 및 국민의 체력 증강 등이 그것이다(“88올림픽 서울 유치 교섭단 활동 결과보고, 1981년 10월 1일, 29-30).

국가안전기획부는 “88년 서울올림픽 부문별 사업추진 방향”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올림픽의 장기대책으로 안기부는 크게 6가지를 들었다. ① 남북관계 : 남북단일팀 구성, ② 대공산권 관계 : 공산권국가의 참가 유도, ③ 정치분야 : 정권업적 홍보, ④ 경제분야 : 공산권 및 미수교국 교역증진, 올림픽 경제대책(자금조달 및 인플레이방지), 서울 도심재개발 재검토 및 도시새마을운동 활성화, ⑤ 사회문화분야 : 자율적 사회질서 확립, 사회정화, 문화생활의식 조성, 전통문화 육성, ⑥ 치안분야 : 사회질서 저해사범 소탕, 올림픽 통금해제를 전후한 사회질서 확립, 테러대책 등이 그것이다(“88 서울올림픽 부문별 사업추진방향”, 1981년 10월 2일). 이 둘을 종합하여 본다면 발전국가가 설정한 올림픽의 목표에 있어 사회질서와 사회통합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된다.

추진엘리트들은 “세계시민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대중과 시민사회를 상대로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과제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 할 수 있다. ① 사회발전에의 적극적 참여정신, 영예와 긍지를 중시하는 정신, 합리성과 근면성에 바탕하여 자기 천직에 충실하는 정신, 정직과 책임에 투철한 정신, 그리고 공공질서를 존중하는 정신 등 ‘선진적 시민의식의 확립’, ② 긍정적인 자세로 참여하여 우리의 단합된 힘과 슬기로 바람직한 사회를 이룩해 나가는 것, ③ 바가지 요금 없애기, 경찰제, 질 높은 상품 만들고 팔기, 공공시설 아끼고 청소하기, 차례지키기, 교통질서 지키기 등 ‘책임·질서 의식의 실천’, ④ ‘가정에서부터 친절과 예의를 가르치고 생활화’ 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기본적인 외국어를 익히고 각국의 풍속을 배워, 외국인들로 하여금 한국인들에게 보다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이르는 ‘친절·예의 바른 국민성 함양’(문화공보부 1981, 37-44). 질서있고 교양있는 습속과 발전주의적 사회통합(단합), 이것이 발전국가가 사회 구성원들에게 제시한 습속개조의 과제였다.

1982년 8월 체육부가 마련한 “서울올림픽 종합계획” 역시 서울올림픽을 통한 사회질서와 통합이라는 목표를 다시한번 확인해주고 있다. 종합계획은 그 목표를 6가지로 설정했는데, ① 우리민족의 평화애호의지 전세계인에 인식, ②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 재정립 승화, ③ 우리 국민의 질서의식 확립, ④ 우리 국민의 화합·단결 심화, ⑤ 우리 국가의 국제적 지위 향상, ⑥ 우리 국가의 스포츠 선진국으로 부상 이 그것이다. 사회질서 및 통합을 빼먹지 않고 있는 것이다(“86아시아·88올림픽대회 종합계획”, 1982년 8월).

1984년도에 조직위원회가 발간한 선전문에서도 매우 올림픽의 목표와 시민의 과제를 거의 유사했다. 자료는 시민들이 ‘의식개혁’에 적극 참여하여 ‘선진국 수준의 질서의식’을 함양하고, ‘문화적 소양’을 가지며, ‘인정미 넘치는 예의와 친절성’을 갖춰, “전통과 현대가 독창성있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한국, 평화를 사랑하고 주체성 있는 일등 문화국민”의 모습을 세계에 보여줄 것을 올림픽의 과제로 삼고 있다(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1984, 72-73). 1981년의 담론과 거의 유사할 뿐 아니라 도쿄올림픽 담론과도 닮아 있다.

1985년도 조직위원회 홍보자료 역시 마찬가지다. 자료는 올림픽이 “국민의 자신감과 긍지가 높아지고 협력과 참여의 토양이 다져짐으로써 국민화합”의 기회가 되고, 올림픽을 계기로 “부정적 사회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지고, “국민의식의 선진화에 따라 친절, 예의, 질서의 행동양식이 생활화”할 것이라고 말한다. 사회통합과 사회질서가 역시 올림픽의 사회정치가 설정한 중요 목표로 제시되고 있다(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1985, 57-59). 마지막으로 1988년 자료 역시 이상의 내용과 연속성을 보인다.

올림픽 개최의 사회적 문화적 효과 역시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된다. 올림픽 개최



를 통한 자발적인 질서의식의 함양, 애국심과 협동심의 고취 등은 국민에게 자신감을 주고 미래에 대한 밝은 희망을 주어 정치 경제발전에 필요한 사회적 안정을 이룩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중략) 환경미화 정비 등 사회적으로 정돈되고 청결한 미관을 이룩해 나가 크게는 국토의 미화로 이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중략) 결과적으로 서울올림픽의 개최는 경제발전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국제 사회에서 우리의 경제적 지위에 알맞는 수준으로 국제 정치적 지위를 향상시키며 국민의식 수준을 높임으로써 우리 경제 사회의 선진화를 앞당기게 될 것이다(고두현 1988, 64).

이상을 종합해 볼 때, 국제사회로부터의 문화적 인정획득과 지위 향상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하여 사회 구성원들의 습속과 도시 경관을 개조하며, 이 과정에서 사회질서와 사회통합을 확보하고자 했다. 습속개조와 도시개조, 사회질서와 사회통합, 문화적 인정과 지위향상. 발전국가가 이와 같은 사회정치의 선순환 구조를 상징한 것이다.

1984년도에 개최가 결정된 장애인올림픽 역시 마찬가지로 개최의 목표가 사회정치과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었다.<sup>83</sup> 국제척수장애자경기연맹은 올림픽 개최국에서 패럴림픽을 개최한다는 국제스토크맨드빌연맹(ISMGF) 헌장 9조에 근거하여, 동 단체는 1982년 7월 한국 정부에 제 8회 패럴림픽의 개최를 요청하였다. 논의 시작 당시

<sup>83</sup> 현재는 패럴림픽(palympic)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장애자올림픽’의 역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차대전 이후 영국의 의사루트비히 구트만(Ludwig Guttman)에 의해 만들어졌다. 상이군인의 재활치료에 스포츠가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구트만은 자신이 속한 스톡맨드빌(Stoke Mandeville) 병원의 이름을 따 ‘스톡맨드빌 게임’이라는 이름의 척수장애 상이군인(휠체어) 체육대회를 1948년부터 1959년까지 열었다. 그는 올림픽을 염두에 두고 1948년 런던올림픽 개막일에 맞춰 대회를 열었고, 1952년 대회부터는 영국만 아니라 네덜란드를 참가시키면서 국제대회로 만들었고, 국제척수장애자경기연맹(International Stoke Mandeville Games Federation)을 창립하게 된다. 1956년 ‘올림픽’과의 연계를 생각한 구트만은 세계재향군인회(World Veteran Federation)의 도움으로 1960년 로마에서 대회를 열 수 있었고, 64년도에도 도쿄에서 개최할 수 있었다. 하지만 IOC는 ‘올림픽’ 명칭사용을 거부했고, 사용장소도 올림픽 경기장소와 달랐다. 1968년에는 멕시코시티의 거부로 개최장소가 텔아비브에서 열렸고, 1972년대회부터는 개최국 내 다른 도시에서 열리는 방식이 취해졌다. 1980년에는 자국에 장애인이 없다는 이유로 소련이 개최를 거부하여 네덜란드에서 치러지기도 했다(Brittain 2016, 20-32; Doll-tepper 1999, 177-190).

그 와중에도 패럴림픽은 꾸준히 확대되었다. 1960년대 이후 절단 및 기타장애인경기연맹(ISOD), 뇌성마비인경기연맹(CP-ISRA), 시각장애인경기연맹(IBSA), 정신장애인경기연맹(INAS-FMH), 청각장애인경기연맹(CISS)가 등이 만들어지고 76년부터 이들을 포괄하는 대회가 열리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1960년대 수백명에 불과하던 출전자는 1970년대 1500명 내외, 1980년대는 2500명 내외로 확대되었다. 같은 76년부터 IOC는 올림픽 명칭 사용권을 허락했고, 1982년에는 이들 단체 사이의 협의체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도 만들어졌다(Thomas & Smith 2008, 116-134). 한국은 1965년부터 ISMGF에 가입하고 68년 패럴림픽부터 탁구와 양궁 두 종목에 참가하였다(“88국제신체장애자올림픽 서울개최문제”, 1983년 4월 21일).

체육부와 원호처는 패럴림픽 유치를 반대했다. 장애인 체육·숙식·위락시설 모두가 부족하고, 장애인체육도 제대로 보급이 되어있지 않는데다 재활의료에 관한 전문가도 부족하며, 올림픽 대회운영과의 혼선을 일으키고 경비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였다. 반대로 외무부는 올림픽 개최국의 패럴림픽 개최라는 관례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국제적 이미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개최를 찬성했다 (“88국제신체장애자올림픽 서울개최문제”, 1983년 4월 21일).

논의는 83년 여름부터 개최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6월 11일 확대회의에서는 다수의 부서가 찬성 의견을 냈고(“장애자올림픽대책회의결과보고”, 1983년 6월 13일),<sup>84</sup> 8월 31일과 1984년 1월 14일에도 “인도주의 중시라는 정책 홍보, 행사능력 과시를 통한 국위선양, 박애정신 고취로 국민의식 선진화 촉진, 장애인 복지증진의 획기적 계기” 등의 긍정적 측면이 “국민부담(개최경비 60억 포함 465억원)을 가중한다”는 부정적 측면보다 많은 것으로 판단, 개최 쪽으로 결론이 났다(“88장애자올림픽개최검토보고(보사부)”, 1983년 8월 31일; “88장애자올림픽개최검토보고”, 1984년 1월 14일). 1984년 1월 20일 대통령의 결재가 있었고, ICC측에 통지를 통해 개최지로 결정된다(“88장애자올림픽 아국개최 결정 보고”, 1984년 1월 25일).<sup>85</sup>

이상을 놓고 본다면 패럴림픽 역시 올림픽과 마찬가지로 발전주의적이다. 발전국가가 올림픽을 두고 설정한 목표와 패럴림픽을 두고 설정한 목표는 상당히 유사하다. ‘국위선양’과 ‘국민의식 선진화’가 패럴림픽에서도 중요한 효과로 언급되고 있으니 말이다. 이는 조직위가 이른바 ‘개최효과’를 설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개최효과는 ① 선진복지국가로서의 국제적 지위 향상, ② 장애인 사기 앙양 및 국민 화합 촉진, ③ 장애인 스포츠의 발전, ④ 장애인 복지수준 현대화, 이상 네가지다 (“서울장애자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설립계획”, 1984년 6월). 이 중 위 두 가지는 1981년 문화공보부가 발간한 자료에 나오는 ‘국제적 지위 향상’ 및 ‘국민단합’과 일치한다. 서울올림픽이 국제적 지위향상의 한편으로 사회정치를 통해 질서와 통합을 목표로 한 것이듯, 패럴림픽도 국제적 지위향상과 사회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 제 4절 올림픽의 사회정치의 목표와 방법

위와 같이 담론이 일관성을 보이는 것은 체계적인 계획작업이 있었기 때문이다. 올림픽의 사회정치를 구상한 것은 5공 정권의 ‘괴벨스’라고도 불렸던 허문도였다. 도쿄올림픽을 매개로 한 습속개조와 도시개조 작업이 한참이었던 1960년대 초 도쿄대

<sup>84</sup>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경제기획원, 외무부, 내무부, 체육부, 보사부, 원호처, 서울시의 국장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sup>85</sup> 1983년 초 호주 정부가 88년 패럴림픽 개최를 희망했으나(“1988년 장애인 올림픽”, 1983년 1월 10일), 우선권이 한국에 있으므로 통보를 통해 한국 개최가 확정되었다.

대학원 사회학과에 재학하고 있었던 그는, 발전국가 초기의 언론 및 문화정책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sup>86</sup> 1981년 10월 당시 청와대 정부비서관으로 있으면서 그는 “올림픽88 계기 국민의식개혁 캠페인 계획”을 입안한다. 이 계획이 설정한 목표는 다음과 같았다(“올림픽'88계기국민의식개혁캠페인계획”, 1981년 10월).

1. 흥룡기 국민의 적극적, 긍정적 참여, 창조정신 확산.
  - 온 국민의 역량을 결집(국민통합)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나라 - 올림픽 성취(국가 건설)
  - 패배, 자조, 뒤뜰린 의식 극복,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참여하는 바람직한 사회를 함께 이룩해가는 창조정신 고조화
2. 주체성을 바탕으로 선진문화국민으로의 의식개혁
  - 오랜 역사 속에서 독창적 문화를 꽃피워온 민족적 긍지- 주체성 위에
  - 선진산업사회, 문화국민으로 가는 장애요인을 반성, 개방, 합리, 협동정신을 고양
3. 국민 모두가 국민의식, 풍조, 사회를 개혁하는 실천주체로서의 주인의식 확립

한 마디로, 올림픽을 계기로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질서있는 습속을 만들고 발전국가적 방식으로 사회통합을 이룸으로써 사회를 개조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강조한 것은 역시 도시공간에서의 행위질서였다. 질서의식(교통질서, 차례 지키기), 환경의식(오물버리지 말기, 마을 미화, 자연보호), 책임의식(바가지요금 없애기, 상품의 질 제고, 신용거래), 민주시민 품성(친절, 인사, 유머, 협동), 국제화시대의 덕성(외국인에게 친절, 세일즈맨의식 생활화, 외국어 배우기), 주체의식(전통문화에 대한 자신과 긍지, 사대의식 지양) 등 주로 도시 생활에 해당하는 습속들이 개조의 대상이었다. 물론 그러한 습속의 하부구조인 ‘의식’의 개조를 통해 습속을 개조하는 방식이었다(“올림픽'88계기국민의식개혁캠페인계획”, 1981년 10월).

그렇기에 올림픽의 사회정치는 1980년대 사회정치의 중핵에 위치한다. 올림픽의 목표와 과제에 관한 담론들을 보면 ‘선진적 시민의식’ 등 발전국가가 사회 구성원의 습속을 개조할 때 활용하는 개념들이 똑같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용 차원에서는 ‘공공질서의 존중’이라는 이름으로 1980년대 발전국가가 중점적 개조대상으로 삼았던 도시적 행위 질서가 강조되고 있고, 또한 ‘단합’이라는 이름으로 발전국가적 사회통합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올림픽 개최 결정부터 약 한달 뒤 생겨난 조직위원회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모든 국민의 지혜를 모아 친절하고 정

<sup>86</sup> 허문도는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던 1960년대 초 도쿄대 사회학과 대학원에 재학중이었고, 그는 도쿄올림픽을 매개로 하여 발전국가 일본의 사회정치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관찰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전두환 대통령 시기에는 청와대 공보수석, 문화공보부 장관 등을 역임하였는데, 나치 선전장관 괴벨스가 모델이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주은우 2014, 73).

다운 국민정신을 과시, 일등 문화국민임을 세계에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국민의식의 개혁을 선결과제로 정하였다”고 말한다(서울특별시 1990, 317). 올림픽 조직위원회 역시 발전국가의 사회정치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더 확대해서 볼 경우, 조직위원회, 범민족올림픽추진위원회 등이 발신하는 올림픽을 매개로 한 사회정치 담론들과, 사회정화위원회, 올림픽새마을운동, 서울시 등 발전국가의 사회정치를 수행하는 기관들이 발신하는 담론들은 그 양이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내용상 일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1981년 문화공보부 자료에서 강조한 ‘국민의식 개혁’은 1982년 조직위원회의 월간물 『올림픽 소식』에 거의 그대로 반영되어 있고(『올림픽 소식』 1982년 9월호, 16-19), 이는 다시 1984년 서울시교육위원회의 『올림픽 교육자료』에 들어가 있다(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1984, 238). 앞 절에서 ‘상거래 질서’, ‘거리 질서’, ‘경기장 질서’ 등은 사회정화위원회와 올림픽새마을 운동이 공히 강조하는 내용이었는데, 이는 『올림픽 서울』에도 다시 등장한다(『올림픽서울』 1985년 10월호, 23). 여러 자료들이 거의 비슷한 담론을 반복해서 발신하고 있다. 이러한 유사성에 비춰볼 때, 올림픽의 사회정치는 1980년대 사회정치 프로젝트에 있어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1. 목표: 문(명)화의 과시

### 1) 민족적인 것의 국제화

올림픽을 위해 국가는 ‘민족적인 것’을 재구성했다. 먼저 1970년대의 ‘민족적인 것’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1970년대 당시 국가는 자신들이 강조하고자 하는 습속을 체화한 것으로 상정되는 역사적 인물을 부각시키는 한편 농촌에서의 새마을운동 성공에 주목하면서 농촌적 습속을 부각시켰다. 구체적인 내용은 정권에 대한 충성과 생산성, 근면성 등이었는데, 이를 역사화시켜 ‘민족적인 것’으로 표상한 것이 1970년대의 정부였다.

1980년대 들어 정부는 ‘민족적인 것’ 그 자체를 매우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는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전통문화와 예술을 강조한 점에서도 드러난다. 전두환은 취임사에서 “우리의 전통적 문화유산을 보존, 계승, 발전시키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고(전두환 1980년 9월 1일), 같은 해 헌법을 개정하면서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를 제 8조에 넣었다(『경향신문』 1980년 10월 8일, 3).

1970년대도 그랬지만, 1980년대 들어서도 올림픽이라는 변수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국내 사회정치를 위해 ‘민족적인 것’이 재발명되는 방식으로 활용되었다. 홉스봄의 저서가 말하는 것처럼 전통을 발명(Invention of Tradition)하여, 자신들이 강조하고자 하는 습속을 역사화시킨 것이다. 예를 들어 전두환은 한국인이 ‘유구한 역사’ 속

에서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며, “굳게 단결하고 서로 돕는 기풍”을 가지고 있다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전두환, 1981년 10월 3일; 1982년 8월 27일; 1983년 3월 1일). 사회통합이 ‘민족의 전통적 습속’이라고 명명함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에게 이를 습속화할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탄생과정에서 정당성을 결여한 데다 경제발전 같은 미래적 공약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나온 전략이었다. 탄생과정에서 정당성을 결여한 정부가 현재적으로 사회질서나 통합을 강조하기에는 정당성이 떨어진다. 반면에 이전 정부의 사회정치 실패를 전면에 내세워 집권한 마당에 다시 한번 경제발전을 통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미래적 약속을 동원하기도 어렵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가질 수 있는 선택지는 자신들이 원하는 요소들을 역사화시키는 것이었다. ‘국풍 81’이라는 행사는 이렇게 ‘민족적인 것’을 사회정치에 활용한 대표적 사례였다.<sup>87</sup>

그런데, 올림픽이 결정된 이후 이 ‘민족적인 것’이 강조되는 맥락이 바뀐다. 즉, 단순히 국내 사회와만 관련된 무엇이 아니라, 올림픽을 통해 전세계에 보여주어야 할 무엇이 되는 것이다. 올림픽을 통해 ‘민족’은 타자로 상징되는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sup>87</sup> 국풍81은 1981년 5월 말에 있었던 거대 규모의 민속문화예술행사였다. 이 행사는 민영방송 TBC가 1979년 개최한 바 있는 ‘전국대학생축제경연대회’를 변형시켜 민속극, 민속춤 등의 공연을 거대 규모의 축제로 키운 것이었다. 이는 1970년대 후반 이후 대학에 유행하고 있는 민속극 및 민속춤 서클들을 체제내화 하고, 전통문화를 내세워 사회통합의 이벤트를 만들어보려고 했던 정부비서관 허문도가 주도하고 KBS사장 이원홍이 협력하여 마련된 행사였다(김지연 2014, 27-8).

언론에 정통한 관료가 주도하는 행사이므로 신문들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여 이 행사를 홍보했는데, 이들은 전통문화와 사회통합을 적극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내용은 대학생들을 위주로 한 ‘민속극, 민속춤’ 등의 공연이지만, 정부는 언론들을 시켜 사회통합의 스펙타클로 이를 규정했던 것이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국풍81일 계기로 우리의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일체감을 다지는 보다 차원 높은 국민적 통합기풍이 양성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경향신문』 1981년 5월 28일, 3).”

“‘국풍81’. ‘새 역사를 창조하는 것은 청년의 힘이다’라는 대형 간판이 말해주듯 이 행사는 젊음의 힘을 범국민 화합의 원동력으로 전용하기 위한 거대한 모임이다(『동아일보』 1981년 5월 28일, 1).”

그런데 신문들은 이러한 스펙타클을 통해 연출하고자 하는 통합의 분위기를 전통과 연결시킨다. 즉, 전통적 습속을 ‘사회통합’과 매우 친밀한 어떤 것으로 규정하는 가운데, 이것을 복원하는 계기로 ‘국풍 81’을 위치시키는 것이다. 『조선일보』의 경우, “하나의 너른 공간을 민족적 에토스로 점화”시키는 행사로 ‘국풍 81’을 정의하였고, 이어서 이 거대행사를 통해 연출하고자 하는 사회통합의 스펙타클이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근대화와 산업화, 그리고 서세동점의 한 세기를 겪는 가운데” 사라진 전통을 되찾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조선일보』 1981년 5월 28일, 3). 앞서 우리는 전두환이 여러 차례 “굳게 단결하고 서로 돕는 기풍”이 있다는 발언을 했음을 보았다. 이러한 발언과 ‘국풍 81’은 무관하지 않다.

올림픽이라는 요소를 반영해 정부가 1983년 말에 발표한 ‘경제사회발전5개년 수정계획 문화예술부문계획은’이 이를 보여준다. 문화부문 계획의 목표는 크게 세가지였는데, 첫째는 문화시설의 확충이었고, 둘째는, “전통문화 유산의 개발과 창작 여건의 개선으로 문화의 주체성을 확립하여 가치관의 혼란을 막고 건전한 사회발전의 기초를 마련”한다는 것이었으며, 셋째는 “86·88계임을 계기로 민족문화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선양”하는 것이었다(구광모 1998, 4). 이제 국내적 사회정치에의 활용뿐만 아니라, 올림픽을 통해 국제사회에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 문화정책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된 것이다.

전통예술과 같은 것들은 이제 보여주어야 할 무언가가 되었다. 올림픽 개최회식을 비롯한 각종 문화이벤트를 통해 전세계 청중들에게 과시되어야 할 무엇이었기 때문이다. 1981년 당시 문화공보부가 발간한 자료에서부터 이것이 드러난다. 정부는 올림픽을 “우리 민족이 독자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문화민족임을 세계에 보여 주는 절호의 기회”로 규정했다(문화공보부 1981, 34). 당시 정부는 1964년 도쿄올림픽과 더불어 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을 서울올림픽이 참조해야 할 모델로 삼았다. 이유는 멕시코시티 올림픽이 “다른 대회보다 경비도 적게 들이고 운영도 영성했으나”, “올림픽을 통해 잉카문명의 신비를 과시함으로써 세계인의 마음 속에 깊은 인상을 남겨 주는데 성공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문화공보부 1981, 33). 부르디외의 표현을 빌려 이를 재해석하자면, 정부는 올림픽이라는 무대를 한국이 가진 문화자본이 상당함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여겼다. 당연히 올림픽에서의 문화자본의 전시는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획득하고 지위를 높이는 방식으로 상정되었다. 더구나, 다른 국가들처럼 첨단 과학기술을 보여주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자기 판단은, 전통문화예술의 전시를 보다 중요시 여기도록 만들었다.

올림픽과 사회정치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민족적인 것’으로 명명된 ‘질서’와 ‘예의’ 등의 습속 역시 국제사회와의 관계 속에 놓이게 되었다. 올림픽을 통해 사회 구성원들의 습속을 동원하고자 했던 이들은 한국인을 ‘문화민족’으로 정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질서’, ‘친절’, ‘예의’ 같은 습속들이 ‘문화민족’으로서의 한국인의 특질이라고 보았다. 이는 이중적으로 ‘민족적인 것’을 상정한다. 상기의 습속들이 한편으로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민족적인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고 과시되는 것으로 상정되면서 또한 ‘민족적인 것’이 된다. 그래서 사회정화위원회는 한국인들을 ‘문화민족’으로 정의한 뒤, “아무리 문화민족임을 외쳐도 시민정신, 질서의식이 없다면 세계인의 눈에는 낙후된 국민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면서 ‘질서’, ‘청결’, ‘친절’ 등 ‘시민의식’을 통해서 ‘문화민족’임을 증명할 것을 주문한다(사회정화위원회 1986, 121). 이처럼 민족적인 것은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그 특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인용구들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친절과 예의는 (중략) 우리 국민의 문화민족임을 참가자들에게 실제로 행동 속에서 보여줄 수 있는 자산이다. 국민 각자는 문화민족이라는 긍지와 더불어 ‘민간외교

관'이라는 사명감을 지니고 친절과 예의를 생활화해 나가야 한다(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1984, 240)."

“질서가 필요 없는 사회라면 원시 미개시대에나 존재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우리는 문화민족이며 높은 문화수준을 갖고 있다. 질서를 지키지 않아 후진국으로 오해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질서를 잘 지켜야, 우리의 문화전통 소개에 그들이 귀 기울여 줄 것이다”(『올림픽서울』 1985년 10월호, 23)

이처럼 발전국가가 사회통합과 질서를 위한 규범적 개념으로 사용해진 ‘민족적인 것’은 올림픽을 매개로 하여 국제사회와 연결되게 되었다. 이것이 1980년대 올림픽을 매개로 한 사회정치가 그 이전과 다른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다.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민족적인 것이 재정의되는 것이다. 하지만, ‘민족적인 것’은 단순히 타자와의 차이를 상정하지 않는다. 타자로부터의 인정이 차이보다 중요했다. 올림픽을 통해서 세계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습속과 문화예술이 ‘민족적인 것’으로 상정되는 것이다.

## 2) 문명화된 습속 - 질서와 청결 - 의 강조

올림픽을 매개로 민족적인 것이 국제사회로부터의 인정이라는 함의를 갖게 되면서, 문화적 인정의 범주도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변하게 된다. 올림픽 추진엘리트들이 제시한 인정의 범주 역시 과거와 마찬가지로 ‘시민의식’ 개념을 통해 드러나는데, 이를 구성하는 내용은 과거와 달리 질서, 친절, 청결, 예의 등 문명적인 습속이 되었다.<sup>88</sup>

오늘날 ‘시민의식’이라는 표현은 매우 자주 활용되는 표현이다. 그리고 이것이 가리키는 대상은 독특성을 보여준다. 박명규의 연구에 의하면 현대 한국에서 ‘시민’ 개념은 정치적 주체성과 관련이 있다. ‘시민’이라는 개념은 1970년대 이후 부당한 지배에 대한 저항하는 주체로부터 출발하여, 점진적 개혁을 이끄는 중산층 주체, 공적 영역 및 정치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체 등을 가리키는 방식으로 변모해왔다(박명규 2009, 236-251).

반면에, ‘시민의식’이라는 개념은 습속 또는 행위가 ‘문명적’인지 혹은 ‘문화적’인지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활용되어 왔다.<sup>89</sup> 다중이 모이는 공간에서 드러나는 행동 또는

<sup>88</sup> 여기서 말하는 ‘문명’이란 노르베르트 엘리아스가 『문명화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예의, 매너 등의 습속들과 서울올림픽을 통해 중요시되고 있는 습속들이 유사한데서 착안한 것이다.

<sup>89</sup> 청결과 질서 등을 ‘문명화’라는 개념과 결부시킨 것은, 개화기~식민지기에 이르는 시기 도시공간이나 사람들의 습속에 위생과 청결도 등을 제고하는 것을 ‘문명화’의 지표로 받아들인 바 있다는 사실에서 착안한 것이다. 이에 관하여는 박명규·김백영(2009)과 김백영(2009), 조형근(2009), 김수진(2009) 등을 참조. 식민지기 위생에 대한 식민권력의 적극적인 개입에 대해서는 정근식(2011) 참조.

습속의 질서와 청결 등을 지시하는 개념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일례로, 2016년 말 촛불집회를 둘러싸고 한 언론은 “대규모 촛불집회에서는 평화시위 정착의 가능성을 보여줬고 자발적으로 쓰레기 청소로 나서는 등 성숙한 시민의식도 빛났다.”라고 표현한 바 있다(JTBC 2016년 11월 13일). ‘쓰레기 청소’가 시민의식의 참조점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올림픽을 매개로 한 사회정치는 앞서 보았던 것처럼 ‘시민의식’이라는 개념이 ‘질서’와 ‘청결’ 등의 습속과 결합하는 계기였다. 앞서도 말했듯이 재건국민운동이나 사회개발 논의, 새마을운동 등에서 속에서 박정희 정부가 사용한 ‘의식’, ‘정신’, ‘가치관’ 등의 개념은 새마을운동 당시 ‘의식’은 ‘잘살고자 하는 의지’,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에의 의지를 지칭하는 개념이었다(내무부 1980, 64-69). 시민들의 습속을 개조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위생이나 청결, 질서에 대한 강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발전국가가 개조의 대상으로 상정했던 ‘의식’이나 ‘정신’ 개념이 이들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올림픽을 매개로 시민의식은 어떻게 재정의 되었는가? 기본적으로 1980년대 시민의식 개념은 탈정치화 되어있었다. 예를 들자면 “사회발전에 적극적·긍정적으로 참여하는 정신, 명예와 긍지를 중시하는 정신, 합리성과 근면성의 바탕 하에 자기 직업에 충실하는 정신, 정직과 책임에 투철한 정신, 그리고 공공질서를 존중하는 정신” 등으로 ‘시민의식’을 정의하는 방식이다(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1984, 238). 나아가 전두환은 “규칙과 질서를 지키는 자세, 자기 자신의 책임아래 이루어진 결과에 승복하는 태도”를 ‘민주시민의 기본윤리’로 정의함으로써 순응적 주체성으로 시민개념을 정의하고자 하였다(『경향신문』 1982년 10월 14일, 1). 저항과 참여를 키워드로 하는 시민사회의 시민개념을 180도 뒤집어 사용하고자 했던 것이다.

올림픽을 계기로는 시민의식, 시민정신이 문명화된 습속과 결부되기에 이른다. 사회정화위원회의 교육교재 중 한 코너는 이른바 ‘선진국’이라는 스위스와 미국의 시민정신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제네바 같은 거리에서 버스 승차권을 사는 법이나 사용법을 몰라 당황하는 경우, 불어 억양의 영어로 이것을 친절하게 설명하여 주는 머리가 하얗게 센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손쉽게 만나게 된다. 이들의 태도에는 자기의 도시를 찾아온 관광객에 대한 친절 외에도 자기네 도시 시설물이 손상 당하지 않게 보호하려는 시민정신이 깃들여 있다 (중략) 로스앤젤레스 시민 모두가 교통정리나 안내, 거리청소를 자발적으로 했다. 경기장 주변 잔디밭에 각국 선수단과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종이컵이며 이곳 저곳 흩어져 있는 신문지 조각을 줍는 이름없는 시민들의 얼굴에서 선진사회, 민주시민의 한 단면을 읽을 수 있었다(사회정화위원회 1986, 96; 119).

이상의 인용문에서 외국 손님에 대한 친절, 공공 시설물 보호, 공공장소 청결 등, ‘문명적’이라 부를 수 있는 습속이 발전국가가 올림픽의 사회정치 과정에서 정의했던



시민정신이었음이 드러난다. 범민족올림픽추진위원회역시 “질서, 청결, 친절, 예의”가 민주시민의 기본덕목이자, 함양해야 할 선진문화시민의식이라고 정의함으로써 문명론에 기초한 시민의식개념을 활용하고 있다(범민족올림픽추진중앙협의회 1988, 31).

그렇다면, 문명화된 습속이라는 기준에서 볼 때, 정부는 한국사회 구성원들의 습속이 문화적으로 인정할만하다고 보았을까? 전두환 정부가 문화민족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질서’와 ‘예의’ 등의 습속이 한국 사회구성원들 사이에서 역사적으로 형성되어있다고 판단했다는 사실을 보면 그럴 것도 같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문화민족 개념은 국가가 원하는 습속을 체화해야 할 당위를 만들기 위한 전략적 역사화였다. 그래서 인정할 만한 습속은 산업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상실되었다고 보고 있다.

우리는 70년대 이후 성장위주의 정책에 따른 고도산업사회로의 급격한 추이에 따라 물질적인 풍요는 가져왔으나 국민의식 수준은 이에 따르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새치기, 바가지요금, 차도 무단횡단 등 공동 사회생활에 있어서 무질서로 인한 많은 문제점이 초래하게 되었으며, 특히 86·88 양 대회의 서울 개최가 확정되어 세계인의 이목이 우리를 주시하게 됨에 따라 질서의식의 함양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체육부 1987, 45)

이러한 상태를 보다 명료하게 설명하기 위해, 국가는 선진국/후진국의 구분도식을 도입한다. 그리고 과거발전이론에 기초하여 고도화된 산업구조나 경제적인 부를 기준으로 정의되던 ‘선진국’ 개념을(김종태 2013), 시민들의 의식과 습속을 기준으로 재정의한다.

“참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나라의 국민들이 선진국의 일등국민으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 기존의 선진국들이 선진국형 산업구조를 형성하는 데는 선진국적인 의식의 발전이 수반되었다. 즉, 시민정신과 시민적 윤리가 확립되었던 것이다(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1984, 238).”

습속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올림픽을 추진하는 이들은 사회 구성원들의 대다수가 문화적으로 인정될만한 구성원이 아니라고 보았다. 다음 인용문들은 국가가 한국 사회 구성원들을 상대로 매우 박한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개인별로 따지면 신사의 나라 영국이나 준법의 나라 미국·스위스 등의 선진사회 사람들의 시민의식 수준을 능가하는 모범시민들도 많다. 그러나 평균적으로는 아직

떨었다는 평가를 주저할 수 없다(사회정화위원회 1986, 116).

오늘날 우리 사회와 국민생활을 볼 때, 우리는 아직도 이러한(선진국적인) 시민의식과는 거리가 먼 곳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의 의식이나 예의범절은 하루 아침에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7년 동안 선진적 시민정신을 함양하는 데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국민의식의 일대 개혁을 요청 받고 있는 것이다. (문화공보부 1981, 38-39)

습속을 기준으로 발전담론이 재구성되자 한국의 위치는 다시 ‘선진국’에서 떨어진 다. 물론 인종주의적으로 낙인을 찍는 수준에서 치는 것이 아니었다. 발전국가는 이를 개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제 후진적인 습속을 ‘선진적’인 그것으로 바뀌어야 할 과제가 도출된다. 개인들이 습속을 확실히 개조한다면 사회정치에 성공하는 것이 되고, 이는 한국사회가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

“국민의 의식구조 면에서도 국력의 신장과 더불어 올림픽 국민으로서의 자질 향상이 이루어져 합리적이고 질서있는 선진 산업사회 생활풍토가 조성될 것이며, 국민의식은 국제화의 수준에 이를 것이다(문화공보부 1981, 20).”

“이러한 선진의식으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지위가 급상승, 세계 어디를 가나 대접을 받는 귀빈이 될 것(『올림픽광장』 1988년 3월호, 22-23)”

요컨대, 올림픽의 사회정치가 민족적인 것을 국제사회에 과시해야 할 습속과 예술 등으로 정의하자, 문화적 인정의 범주는 질서와 청결, 예의 등 문명적 습속이 되었다. 그리고 한국사회 대다수 구성원들의 습속은 국제사회의 대리자를 자처한 정부의 눈에 인정할만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를 개조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아야 함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대리하는 국제사회는 추상적 시선이 되어 사회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단순히 개조를 위한 담론 차원에서 활용된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실제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을 평가하는 기준이자, 개조 과정에서 사회 구성원들을 분할하는 기준이 되었던 것이 이 시선이었다.

## 2. 방법: 타자를 기준으로 한 사회 구성원의 선별

### 1) 시선의 주체, 평가의 주체: ‘선진국’

발전국가의 사회개조 작업은 국내적 맥락에 국한되지 않고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서울올림픽이라는 무대를 통해 1988년에 각종 선수, 임원, 관광객, 미디어 청중들에게 보여주어야 했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는 발전국가만의 아이디어가 아니었다. 시민사회에서도 이러한 의견을 가진 이들이 적지 않았다. 다음 인용문이 이를 보여준다.

88년까지 앞으로 7년 동안, 이제는 좋아도 싫어도 한국은 세계에 노출되게 되어 있다. 세계가 한국을 보러 올 것이고 세계의 눈이 한국을 주시할 것이다. 언제 어느 구석에 그러한 주시의 눈길이 닿아도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한국을 보일 수 있어야 될 것이다. 올림픽을 유치했다는 것은 한국이 스스로 세계의 쇼윈도 속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의 시선 앞에 스스로를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투명한 유리 상자 속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한국의 문화도, 한국의 사회도, 그리고 물론 한국의 정치도. (『동아일보』 1981년 10월 2일, 9).

위 인용문에서 ‘세계’는 대타자로 상정된다. 주은우(2003)는 미국이 역사적으로 미국은 이상적이고 선진적인 ‘시민의식’을 소유한, 한국사회의 ‘이상적인 자아이미지’로 자리잡았으며, 동시에 시선의 주체가 되어 대상으로서의 한국사회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음을 언급한 바 있다. 이와 유사하게, 발전국가는 ‘세계’라는 개념 속에 ‘선진국’을 함축시킨 뒤 ‘선진국’을 시선의 주체로 만들었다. 한국사회 구성원들의 습속을 평가하고, 그들이 문화적으로 인정 가능한지를 평가하는 주체로 상정된 것이다. 그러면서, 발전국가의 사회정치 담론은 ‘세계’로 지칭되는 대타자 및 관찰자들에게 한국사회 및 그 습속을 ‘보여주기 위해서’ 개조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

특히 우리는 다가오는 88년 올림픽과 86년 아시아 경기대회를 통하여 문화국민으로서의 면모와 긍지를 내외에 과시해야 할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올림픽을 개최하는 나라의 국민답게, 그리고 「세계 속의 한국」으로 부상하는 나라의 국민답게 우리는 세계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생활 도처에 내재되어 있는 무질서심리를 추방하는 일을 의식개혁운동의 차원에서 적극 전개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본인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전두환, 1982년 1월 22일).

그런데, 이 ‘세계’의 시선은 발전국가가 자신들의 사고 회로 속에서 상정한 것이었다. 습속을 중심으로 발전-저발전을 재정의하면서 문명담론의 발전국가적 판본을 만들어낸 추진엘리트들이었기에, 이들은 문명화, 즉 ‘위생’, ‘청결’, 그리고 ‘질서’ 등을 시선의 주체인 ‘세계’에 보여주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그렇지 못한 상황을 수치스러운 상황으로 판단했다. 다음 인용문이 이를 보여준다.

“아시아경기대회와 88올림픽을 앞두고 정부는 생활올림픽 추진단을 만들어接客업소의 위생상태를 개선하겠다고 한다. 요즘 와서 청결한 업소가 눈에 띄게 늘어나기는 했지만 자세히 살펴볼수록 입맛가시는 음식점이 숫적으로 훨씬 많은 것은 어제의 가난 못지않게 창피한 일이다”(사회정화위원회 1986, 148).

인용문은 한국의接客업소(식당)의 위생상태와 청결상태에 문제가 많다고 본다. 그리고 그것이 수치를 불러일으키는 요소라고 정의한다. 여기에 ‘어제의 가난’이라는 말로 빈곤 역시 수치를 불러일으키는 장면으로 묘사한다. 실제로 보건사회부는 부랑걸식자를 ‘국가의 성장면모에 손상을 입히는 자’로 정의 하였고, 법무부는 올림픽 저해사범의 한 범주를 ‘국위 손상요인’으로 보았다 (“서울올림픽 및 아시아 경기대회 준비 세부 시행계획 제출”, 1982년 3월 10일). 이러한 논리에서라면 ‘비위생’, ‘불결’, ‘무질서’, ‘빈곤’ 등은 단순히 담론 차원에서 상징폭력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의한 격리 등 물리적 폭력의 대상이 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세계’를 내세우며 ‘선진국’의 시선을 의식해야 한다는 담론의 범람 속에서, 이 시선이 감시의 시선이 되어버렸음을 비판한 학자도 있다.

“왜 언제부터 우리들의 판단 기준은 사소한 일에서까지 외국인 쪽에 가 있는지 알 길이 없다. 우리는 이토록 우리들 스스로의 독자적 판단능력을 상실해 버렸단 말인가? ... 무서운 것은 외국인의 눈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 속에 신화적으로 날조해서 지니고 있는 ‘외국인의 눈’이다. ... 도대체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시시각각 감시하는 듯한 눈을 가진 ‘외국인’은 어느 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일까? 때때로 나는 그 외국인이 혹시나 상상력과 독자적 판단력을 상실한 한국인 자신의 망령이 아닐까 하고 부질없는 걱정을 하곤 한다(『경향신문』 1983년 6월 2일, 9).”

불문학자 김화영은 위 인용문에서 발전국가가 담론화 한 ‘외국인의 시선’이라는 것이 발전국가가 ‘날조해서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발전국가는 매우 추상적인 수준에서 외국인의 시선을 상정하지 않았다. 1988년의 서울올림픽이라는 거대한 미디어이벤트를 통해 한국에 직접 오는 외국인과 미디어를 통해 서울의 경관을 볼 외국인들이라는 구체적 관찰자가 상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들의 시선이 닿을 곳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게 된다. 어떤 공간은 미화(beautification)를 통해 ‘외국인’ 및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을만한 경관을 창출해야 했고, 어떤 공간은 ‘정화(cleansing)’를 통해 ‘그들’에게 보여선 안될 경관을 없애고 다른 무언가로 대체해야 했을 것이다.

즉, 1988년의 메가 이벤트를 통해 그간의 사회개조 작업의 결과를 보여 국제사회로부터 문화적 인정을 획득한다는 전략은, 반대로 원하는 결과에 부합하지 않는 사

회 내 집단들을 배제하고 격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별구체적인 관찰자가 전제되고 시선에 노출되는 계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민족담론을 내세우면서 습속을 개조한다고 말하지만 실제 개조 과정에서는 다를 수 있다. 발전국가가 보기에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나 비위생적이고 청결하지 못하다 여겨지는 도시공간 및 습속 등은, 평소 같았으면 용인될 만한 행위마저도 올림픽으로 인해 범죄화되고 발전국가에 의해 도시 및 사회로부터 배제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2) 사회구성원의 선별: 배제, 규율, 과시

실제로, 발전국가는 도시와 습속을 개조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시선’을 매우 중요한 준거이자 도구로 삼았다. 그리고 시선에 기초하여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사회개조를 수행했다.

첫번째, 어떤 지역과 습속은 배제되어야 했다. 즉, 외국인이 보면 안되는 지역/습속이 있는 것이다. 이들은 최소한 외국인들의 시선에 띄지 않아야 했다. 일례로, 서울시는 1982년 3월 보신탕, 개소주, 토룡탕, 뽕집의 영업을 대도로변에서는 금지시키고 뒷골목에서만 가능하게 조치한 바가 있었다(『동아일보』 1982년 3월 15일, 11). 그런데 1983년 9월 20일부터는 서울 4대문 안, 호텔 및 경기장 주변, 12m 이상의 간선도로변에 한하여 영업을 금지시켰다. 외국인에게 혐오감을 준다는 이유에서였다(『경향신문』 1983년 7월 12일, 7). 1987년 10월 21일과 7월 29일에 있었던 ‘손님맞이 모의점검’ 역시 전형적이다. 이 행사는 국내거주 외국인 14명과 내국인 2명(1차), 외국인 12명과 내국인 6명(2차)로 나뉘어 공항, 버스, 택시, 숙박업소, 음식점, 올림픽시설, 관광지 등을 ‘점검’하는 행사였다(범민족올림픽중앙추진협의회 1988, 150-2). 도시경관 및 습속의 검사역할을 실제 외국인에게 맡긴 것이다.

어떤 지역들은 건조환경 보다는 이 지역에서 활동하거나 거주하는 이들의 습속이 문제시 되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무질서’하고 ‘비위생적’이라 일컬어지는 습속이 그 대상이었다. 새마을운동이 도시미화작업을 하면서 썼던 수사들이 대표적이다. 간판 및 광고물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무질서하고 불량’한 간판 및 광고물’의 정비라고 표현했고, 농촌의 화장실을 개량하면서는 ‘전근대적이고 비위생적인’ 농촌변소로 표현했다(내무부 1982, 244). 간판과 광고물, 화장실의 개조는 ‘무질서’와 ‘비위생’적 공간의 개조였던 것이다. 앞서 언급했던 1983년 7월의 보신탕, 개소주, 토룡탕, 뽕집의 영업 금지 조치 및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철거 또한 ‘질서’와 ‘위생’을 명분으로 이뤄진 것이었다. 올림픽 직전 성남의 모란시장을 폐쇄할 당시에도 시당국은 “도로 무단점용 및 거리질서 문란, 즉석가축도살, 저질 상품판매” 등을 ‘질서’와 ‘위생’ 문제를 내세우며 올림픽을 위해 시장을 폐쇄하고자 했다(『월간 말』 1986년 5월호, 50).

둘째, 어떤 지역/습속은 감시와 규율을 통해 개선 내지 개조되어야 했다. 뒤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도심재개발과 불량주택재개발 과정에서 발전국가는 ‘가시권’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이 지역을 올림픽을 맞아 반드시 개조되어야 할 지역으로 여겼다. 가시권은 주로 한강변이나 간선도로변(그중에서도 특히 ‘귀빈로’), 지하철 지상구간 주변, 철로변 등이었는데, 이들 지역은 ‘외국인들이나 다수의 대중의 시선에 들어오는 곳’으로 정의될 수 있다. 발전국가는 올림픽에 맞춰 대대적으로 이들 지역의 건조 환경의 경관을 바꾸었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사회정화위원회, 범민족올림픽위원회 등 많은 관제시민사회를 동원하여 대중들의 습속을 단속했음을 볼 것이다. 습속개조를 위해 발전국가의 관료 기구만 아니라 시민사회 까지도 일종의 감시자로 만든 것이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례는 발전국가는 주방공개제를 통해 감시의 시선을 관제시민사회만 아니라 일반대중에게 까지 확산되도록 만들고자 했다. 1985년 1월 28일 대통령은 음식점 주방을 바깥에서 볼 수 있도록 식당들을 개조할 것을 지시했다(“86·88대회 올림픽관련 대통령각하 지시사항”, 1985년 1월 30일). 손님들이 주방을 바라보는 행위를 일종의 감시행위로 상정한 것이다. 이런 감시가 상시적으로 이뤄질 때 위생과 청결의 수준이 향상된다는 아이디어였다.

셋째, 어떤 부분은 올림픽을 통해 보여주기 위한 과시적 공간이자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획득하기 위한 공간으로 조성된다. 이는 특정 습속을 가진 사회 구성원을 인정의 대상으로 삼아 이들의 습속을 과시하는 형태보다는, 공간적인 차원에서 특정 지역이 과시 가능한 경관이 되도록 개조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 그래서 올림픽의 도시개조를 통해 바꾸리 서울의 경관을 한 필자는 다음과 같이 국제사회에서의 인정이라는 방식으로 의미지우고 있다.

“앞으로 곧 맞이할 대규모의 중요한 국제행사에서는 우리의 모든 것이 온 세계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우리의 거대한 스포츠 경기장을, 우리의 아름다운 강산을, 우리가 그 동안 성취한 경제성장을, 우리 국민의 근면성을, 고속도로와 높은 빌딩 숲들을, 고급호텔과 식당을, 그리고 자동차행렬을 이런 기회에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며 그들의 감탄사도 지상을 통하여 크게 알려질 것이고 이를 통해 우리는 자량과 자부심을 느낄 것이다(『동아일보』 1983년 9월 26일, 5).”

이후에 보겠지만 실제로 발전국가는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을만한 공간을 염두에 두고 올림픽 경기장, 그 주변지역, 한강, 강남일대, 서울 도심 등의 경관을 대대적으로 개조했다. 그리고 이를 자부심의 원천으로 삼으면서 국민들에게 선전하고자 했다.

결국 발전국가가 올림픽을 매개로 하여 수행한 사회개조 과정은 배제/개조/과시 혹은 전시라는 세 형태를 동시에 활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어질 다음 장에서 드러나겠지만, 배제와 개조는 주로 습속을 개조하는 과정에서 활용되고, 개조와 과시(전시)는 주로 도시의 경관을 개조하는 과정에서 활용되었다.

## 제 4 장 올림픽의 사회정치 실천

앞 장에서 본 것처럼 국가는 올림픽을 매개로 하여 사회를 개조하고자 하였고, 이때 선진국의 시선을 매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 정확히는 국가를 구성하는 정권 엘리트와 관료들, 그리고 추진엘리트들이 대리하는 ‘선진국의 시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1988년에 한국을 찾을,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 서울의 경관을 접할 타자의 시선을 기준점으로 삼았고, 이에 따라 사회 구성원들의 습속을 개조하고 이들이 도시 경관을 바꾸도록 하지 않았다. 사회 구성원들의 삶에 개입하여 이를 바꾸고자할 뿐 아니라, 어떤 구성원들과 경관은 사회와 도시로부터 비가시화시키고, 올림픽을 통해 과시할만한 경관은 인위적으로 조성했다. 그래서 올림픽을 매개로 한 1980년대의 사회개조 작업은 규율훈육이라는 방법만 아니라, 도시빈민들을 도시와 사회로부터 배제하고, 무질서한 습속을 범죄화시켜 처벌하며, 올림픽에 대한 반대 행동을 무질서화시켜 금지하고자 했다.

### 제 1절 빈곤의 배제와 무질서의 처벌

#### 1. 빈곤과 무질서의 범죄화와 배제

##### 1) 사회적 타자의 배제

식민지기부터도 그랬지만, 1961년과 1980년대에 정권을 잡은 군인들은 부랑과 구걸로 생활을 이어나가는 이들을 ‘사회악’이라 부르고 이들을 ‘일소’한다 하면서 도시와 사회부터 격리했음을 우리는 앞에서 보았다. 이렇게 한국의 근대 내내 사회의 타자가 된 이들은 1975년 내무부 훈령 제 410호 ‘부랑인의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업무지침’에 근거하여 지속적인 강제수용의 대상이 되었다. 이 때 정부는 걸인, 껌팔이 등 “건전한 도시 질서를 저해하는 부랑인을 신고, 단속, 수용, 보호”하여 “도시생활의 명랑화를 기하고 범법자 등 불순분자의 활동을 봉쇄”한다는 명분을 내세웠고, 이를 통해 “건전하고 명랑한 사회 질서를 확립하고 도시환경을 정화하는 것”이라는 해석을 덧붙였다(김명연 2013, 91).

사회적 타자의 강제수용을 통한 도시와 사회로부터의 배제는 1980년대 들어서 확대 및 강화된다. 1981년 4월 10일, 전두환은 국무총리에게 구걸인 단속 및 수용에 관한 지시를 내렸고,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과 내무부, 보사부의 협조체제 위에서 같

은 달 20~27일과 7월 27~8월 2일 두 번에 걸쳐 단속이 이뤄졌다(김재완 2015, 24). 공무원과 경찰, 심지어 사회정화위원들까지 가세한 ‘마구잡이식’ 단속이 이뤄진 결과(이소영 2016, 47), 총 7,747명이 단속된 가운데 4,921명이 귀가조치, 2,828명은 수용 조치가 취해졌다(“1982년도주요업무계획”, 1982년 2월).

정권 초에 부랑자 등의 사회적 타자들을 단속하고 도시로부터 격리하는 조치는 1961년도에도 있었다. 그리고 두 군사정권은 이들을 공히 ‘사회악’이라 칭하면서 ‘일소’ 대상으로 삼았다. 하지만, 두 정권은 이들을 다른 방식으로 활용했다. 1960년대 초 국가는 단속된 이들을 (강제) 결혼을 통해 가정의 구성하게 하였고, ‘재건대’나 ‘개척단’ 등의 이름 하에 간척지 개간에 종사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선전의 도구로 활용했다. 사회적 타자들을 도시로부터는 격리시켰지만, 노동과 가정의 구성을 통해 ‘정상적’ 사회 구성원이 되어가는 모습을 연출했던 것이다(김아람, 2015). 1980년대는 달랐다. 이 때의 국가는 사회의 타자들을 도시와 사회 모두에서 지속적으로 배제하고 비가시화시켰다.<sup>90</sup> 도시빈민을 위주로 한 삼정교육의 대상자들 중 상당 수는 1980년 말 제정된 ‘사회보호법’에 의거, 법무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보호감호라는 이름으로 지속적 격리상태에 놓이게 되었다(홍석률 2017, 70-72). 또 어떤 도시 빈민들은 부랑인이라는 이유로 대도시에 존재하는 ‘복지시설’에 격리되었다. 그렇다고 이들이 노동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복지시설’의 증축과 확장은 이들의 노동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서울대학교 사회학과 형제복지원 연구팀 2017, 108). 노동을 제공하면서도 도시 및 사회로부터 격리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기초 속에서 1981년 7,156명이던 ‘복지시설’ 수용 부랑인 1987년 15,4378명까지 증가했다(김동인 2008, 71).

그렇다면 왜 1980년대는 이전 시기와 달리 대대적인 단속 이후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배제 조치가 이뤄졌던 것일까? 기존 연구들은 그 이유를 서울올림픽에서 찾고 있다(김재완 2015, 25; 이소영 2016, 43). 논리적으로 가정을 해보자면 이렇다. 서울올림픽 이후 정권은 국내사회를 관찰하는 시선의 주체로 국제사회를 상정했다. 국내 사회정치만을 고려한다면 1960년대 재건대의 사례처럼 사회적 타자들이 정상화되는 모습을 가시화하는 것이 유용성을 지닐 수도 있다. 하지만 제2기 발전국가에게는 국제사회에 ‘발전’의 경관을 보여줄 과제라는 변수가 새로이 들어왔다. 그러기에 사회의 타자의 존재를 비가시화하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포섭적 정책을 통해 이들이 도시 및 사회 내에서 물리적으로든 상징적으로든 배제되지 않고 그 존재를 인정받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권은 이들을 도시와 사회에서 비가시화시키는 방법을 택했다.

<sup>90</sup> 도시로부터 격리된 부랑인이 표상되는 방식 또한 1960년대와 다르다. 부산의 부랑인 수용 시설로 현재는 인권유린의 대명사로 알려진 형제복지원의 원장 박인근을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 『탄생(1982년 11월 3일 MBC 방영)』이 대표적 사례다. 이 드라마는 부랑자들이 정상화되는 모습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원장이 주변의 회유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부랑인이라 판단한 자를 단호하게 시설에 수용하고 내보내지 않는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로 1981년 말 보건사회부는 “88올림픽 등에 대비,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인상을 주고 국민들의 불쾌감을 없애기 위해 이제까지 단속에 치우쳐왔던 불량인 문제를 복지차원에서 해결키로 하고 내년에 재활사업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을 발표했다(매일경제, 1981년 11월 21일, 11). 올림픽을 생각해 불량인들을 단속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계속 수용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는 정책으로 이어졌다. 1982년 초 보건사회부는 불량걸식자의 상존이 국가의 성장 면모에 손상을 입히고, 관광객과 국민들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를 들며 불량인 시설 확충계획을 만들었다(“1982년주요업무계획”, 1982년 2월). 1983년에는 올림픽 준비사업 6개 항목 중 하나로 ‘부랑인 대책’을 선정했다.<sup>91</sup> 구체적으로는 ‘수용시설의 확충’(82년 9개소, 83년 2개소), ‘자활갱생 지원’(시설운영비 지원 및 훈련 기자재 보급), 그리고 ‘구걸 행위자 단속 강화’가 1983년의 주요 사업이었다(“1983년주요업무계획”, 1983년 2월). 1984년 역시 불량인 대책은 6개 준비사업 항목 중 하나로 등장한다. 이 해도 자활갱생의 적극지원(시설을 8개에서 11개로 증설 및 시설운영비 지원)과 구걸지원이 중요한 불량인 대책이었다(“1984년주요업무계획”, 1984년 2월).

이 외에도 서울 도심의 부도덕한 습속이 집적된 공간 역시 제거되어야 할 경관이였다. 대표적인 장소가 종로3가와 서울역 맞은편의 양동지구였다. 종로3가는 식민지기 미군의 공습에 대비한 ‘소개공지’로 지정되면서 공터가 되었는데, 이후 슬럼화되어 사창가가 들어서있던 지역이다. 그런 한편, 종묘라고 하는 문화재가 자리해 있는 지역이기도 했다. 서울시는 종묘 앞의 사창가 지역을 통째로 공원으로 바꿨다(안창모 2006, 76).

1983년 서울역 앞 대우빌딩 뒤에 새로이 지은 힐튼호텔이 85년 IBRD, IMF총회 대회장이 되자, 이 주변지역이 문제가 되었다. 당시 이 지역은 “사창, 소매치기, 앵벌이, 비렁뱅이, 날치기, 녀마주이, 아편쟁이, 노름꾼, 전과자들이 우글거리는 곳”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손정목, 2003b: 200). 당연히 이 지역은 스케줄에 맞춰 재개발되었는데, 이 때 ‘사회개발계획’이 추가된다. 이 계획은 이 지역의 거주민을 ‘반사회적’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나눈다. 그리고 후자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 32조를 들어 기본권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 이들의 활동이 도시비공식활동이므로 ‘근대적, 국제적’ 수준의 영업활동으로의 전환이 어려울 것이라 말한다(한국토지개발공사 1984, 55). 그래서 나온 대책은 장소를 옮기는 것이었다. 적어도 가시권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이다. 대통령 또한 1983년 4월 15일에는 “주요 경기장 주변과 대로변 잡상인들은 특정 지역으로 유도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86아시아·88올림픽 추진상황보고서 대통령각하 지시(83.4.15)”, 1983년 4월 15일). 전자, 즉 ‘반사회적’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앞 절 언급했던 불량인 시설로의 이전하도록 했다.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 역시 마찬가지로(한국토지개발공사 1984, 56) 이에 따라 상당수의 사람들이 상계동 장애재활원, 강

<sup>91</sup> 6개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식품접객업소 위생시설 및 종사자 서비스 개선, ② 민박시설 개선, ③선수, 임원 등 보건 관리, ④ 전염병관리, ⑤성병특별대책, ⑥ 불량인 대책

서구 대린원, 동부여자기술원 등의 시설로 보내졌다(손정목 2003a, 204).

## 2) 불량주택재개발과 도시빈민의 배제

식민지배와 해방, 한국전쟁과 분단을 겪으면서 한국은 대규모의 인구이동을 경험했다. 그리고 그 인구이동은 서울의 인구증가를 부추겼다. 그리고 이는 주택문제로 이어졌다. 생활의 터전이 전무한 상태에서 ‘무작정’ 상경한 이들에게 주어질만한 터전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천부지나 국공유지에 집을 지어 사는 이른바 ‘무허가주택’이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다. 주택만 문제가 아니었다. 식민지배와 전쟁으로 집을 짓고 수리할 재료를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1940년무렵부터 약 20년 이상 건물의 신축 및 개보수가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다(손정목 2003a, 99).

1960년대부터는 한국의 경제성장이 도시화를 이끌었다. 그 중에서도 서울의 인구성장은 다른 도시들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빨랐다. 1960년 244만 명이던 서울인구는 1970년 550만 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해버렸다. 서울의 인구증가분이 전국인구의 47.8%를 차지할 정도였다(박길성, 1999: 39, 43). 도시인구의 증가는 도시문제로 이어졌다. 이들 중 상당수 역시 유흥국·공유지나 하천부지, 산기슭에 무허가 정착촌을 형성했다. 1966년 통계에 따르면 380만 서울인구 중 약 1/3인 127만여 명의 가구가 약 13만 6천동의 무허가 건물에 거주할 정도였다(한상진, 1992: 68).

이에 대한 대책은 60년대 후반부터 마련되었다. 1962년에 제정된 도시계획법이 65년 개정되면서 재개발조항이 삽입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불도저시장’으로 잘 알려진 김현옥은 청계천 복개, 무허가주택 양성화, 시민아파트 건설 같은 대책을 마련하였다(장세훈 1994, 161-2). 결과는 알다시피 실패였다. 광주대단지사건, 와우아파트 붕괴 등을 겪으면서 서울시의 대책은 좌절되었고, 서울에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며, 개발로 터전을 잃은 빈민들은 서울 외곽의 빈터를 찾아 다시 무허가 정착지를 만들었다(조희연, 2007: 118-125).

1970년대부터 제도가 만들어졌지만 실제 실행은 더뎠다. 1971년과 72년의 도시계획법 개정은 재개발사업에 절차를 법으로 규정하고 또 사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1973년 처음으로 서울시청 근처 12개 지구가 도시재개발지구로 지정되었다(손정목 2003a, 162-5).<sup>92</sup> 같은 해 만들어진 ‘주택개량에 관한 임시조치법’은 주민들의 재원으로 무허가주택의 재개발사업을 가능하게 만들었다(장세훈 1994, 162). 1976년에는 아예 도시재개발법을 제정했다(윤일성 2001, 6). 하지만 실행은 더뎠다. 불량주택재개발의 경우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아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다(장

<sup>92</sup> 이 중 하나인 소공동 구역(현재의 서울프라자 호텔)은 외국인의 시선이 도심재개발에 영향을 미친 선구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손정목에 따르면, 1966년 10월 미국 존슨대통령의 방한과 환영행사는 TV중계로 미국에도 방영되었는데, 이 때 서울시청 주변의 슬럼지대가 화면에 고스란히 방영되었다. 이에 재미교포들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진정서를 넣었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서울시청 근처의 슬럼을 재개발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손정목, 2003b: 124-128).

세훈 1994, 193). 도심재개발역시 수도권 인구 및 도시기능 분산정책이 우선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상태였다(윤일성 2001, 7).

그래서 1980년대 초에도 여전히 서울시 주택 중 15.5%는 불량주택이었다(Mobrand, 2008: 380). 당시 서울의 상황은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두 개의 국제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또 겸사겸사로 한국을 관광하기 위해 찾아 올 수많은 외국인에게 보이기에 서울은 아직도 너무나 보잘 것 없었다. 인구규모는 이미 900만에 육박하여 지구상 어느 곳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대도시였지만 그 시가지 모습은 낡고 초라했다. 중심시가지인 종로·을지로·퇴계로 변에는 낡고 나지막한 건물들이 즐비했고 뒷골목으로 한 발짝 들어가면 무질서와 불결과 악취가 뒤엉켜 있었다. 중심시가지의 벗어나 변두리로 나가면 온 산허리를 온통 메운 무허가 건물이 바다를 이루고 있었다(손정목, 2003b: 1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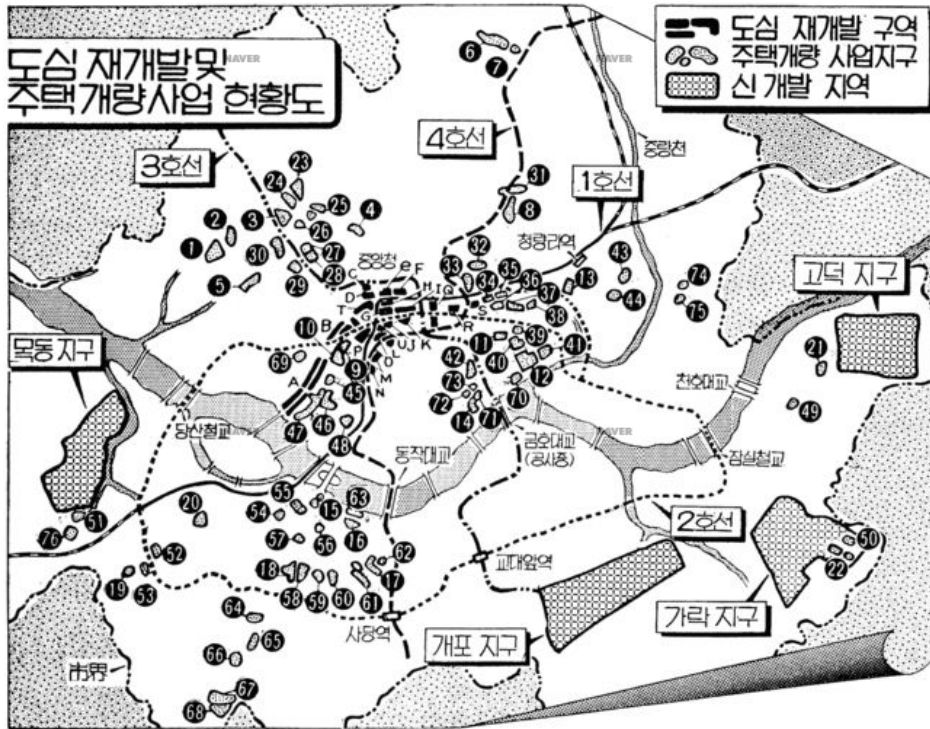
이러한 상황 판단 하에 발전국가는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개입을 시작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외국인의 시선이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바로 이 시선이었기 때문이다.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은 가난한 이들의 주거를 개선한다는 명목 하에 1970년대 초부터 진행되었지만, 가난한 이들의 삶을 터전을 빼앗는 것이기도 했다. 큰 반발은 뻔했고, 사업은 여러 차례 변동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73년 196개 구역 14,742,700㎡으로 시작된 이 재개발사업은, 70년대 말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올림픽 개최 결정 당시 207개 구역 15,723,986㎡로 소폭 증가한 상태였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 특히 세입자들의 반발이 뒤따르면서, 82년도에 대상 구역은 123개로 줄어들었다(서울특별시 1990, 642; 645).

한편, 서울시는 올림픽 개최 결정 이후 다음과 같은 재개발사업 방침을 세웠다. ① 간선도로 가시권 우선정비, ② 주민 자력에 의한 자율추진, ③ 가급적 현지역건 최대 활용, ④ 건물 양호한 지역은 양성화. ‘가시권’의 우선정비라는 원칙에 따라 서울시는 82년 38개 구역 6,901동의 우선지역을 설정한 바 있다. 하지만 1992년 208개 지구가 123개로 줄어드는 과정에서 우선지역도 9개 구역 1,433동으로 줄었다(서울특별시 1990, 645).

하지만 1983년 합동재개발 방식의 도입으로 건설자본과 가옥소유주들의 적극적 재개발사업참여가 이뤄졌고(장세훈 1998, 271), 이에 따라 서울시는 다시 우선 재개발지역을 32개로 늘렸다. 이 때 선정된 재개발 대상지는 [표 7]과 같이 대부분 ‘가시권’지역이었다. [그림 8]의 검은 점들은 불량주택재개발지역을 표시하고 있는데, 무정형의 점이라기 보다는 선형을 띄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주요 간선도로나 지하철 노선, 한강을 따라 많은 재개발 구역이 들어서 있기 때문이다. 이는 역시 외국인을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이 지역을 바라볼 수 있다는 논리에 기초한 것이었다. 한강 역시 유람선에서 눈에 뵈 수 있다는 이유에서 우선적 재개발

대상지로 선택되었다(안창모 2006, 76). 철로변 역시 가시권지역으로 설정되었고, 철로변의 불량주택, 불량 담장, 공장 등은 개보수 대상이 되었다(서울특별시 1990, 650).



[그림 8] 도심재개발 및 주택개량사업 현황도  
(출처 : 『경향신문』 1984년 12월 17일, 11)

[표 7] 서울시 불량주택재개발 우선사업 대상구역  
(출처 : 서울특별시 1990, 646)

구분	선정기준	구역수	대상구역
필수사업 구역	경기장 시설주변 가시권	3	가락1, 가락2, 오금
	행사관련노선 가시권	3	옥수4, 금호1, 흑석1
중점사업 구역	주요간선 가시권	18	하왕3, 아현1, 흑석2, 홍제11, 금호5, 신림3, 방배1, 효창2, 하왕1, 답십리6, 홍은5, 도화, 전농3, 돈암2, 본동1, 황학, 용산1, 상왕십리
	주요시설(지하철, 호텔)	4	옥수7, 신당1, 구로2, 대림

	가시권지역		
	주거환경 불량지역	4	천호2, 천호3, 사당2, 사당4

물론 이들 지역에서 반발이 없을 리 만무했다. 건설자본과 가옥소유주에게 개발이익의 향유권을 인정하다 보니, 이전 재개발사업은 집값을 대폭 올려 소수의 중산층 이상의 가옥주가 아닌 가난한 가옥주나 세입자의 대다수는 주거지를 잃고 서울의 바깥으로 밀려나는 결과를 낳게 되었기 때문이다(장세훈 1998, 260-266). 하지만 정부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1988년 9월 17일이라는 ‘데드라인’에 맞춰 진행된 사업이다 보니 엄청나게 폭력적인 철거 및 재개발 과정이 이뤄졌다. 1986년 한 해에만 5명, 1986년 4월부터 88년 2월까지 14명이 강제철거 과정에서 사망할 정도였다(강준만, 2003d: 72). 결국 서울시는 88년 1월, 24개로 사업지역을 축소했다(서울특별시 1990, 647).

### 3) 무질서의 범죠회와 처벌

법무부는 역시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이들은 1980년대 행정 목표를 “법과 질서의 선진화”로 정하고, ‘국법질서 수호’, ‘사회기강 확립’, ‘복지향상지원’의 수단을 통해 ‘민주·정의·복지사회’의 구현에 노력한다는 목표를 세웠다(“1982년도 주요업무계획”, 1982년 2월).

그런 법무부는 올림픽 개최 결정 후인 1982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 ‘올림픽 저해사범의 엄단’을 중요한 올림픽 지원대책의 하나로 설정하였다.<sup>93</sup> 구체적으로는 ‘국위손상요인 진단 및 제거’, ‘관광사범 단속 강화’, ‘질서침해사범의 지속적 단속’을 통해 ‘올림픽 저해사범’을 단속하겠다는 것이 법무부의 계획이었다(“1982년도 주요업무계획”, 1982년 2월).

추상적이기만 한 이 상기의 죄목은 다음과 같이 정책의 실천과정에서 구체화된다. 검찰은 1982년 3월 10일 서울올림픽 및 아시아경기대회 준비 세부시행계획을 입안하면서 다음과 같이 단속대상을 정의했다. ① 불순세력 및 국제범죄조직(선수나 관광객을 가장한 공산계열 및 불순세력, 국제테러단 또는 마약 조직, 기타 불법 목적을 가진 단체 및 조직원), ② 관광저해사범(관광객 대상 치기배 및 폭력배, 물품강매, 기타 올림픽 및 관광저해), ③ 물가 및 가짜부실사범(가짜 부실물품의 제조 및 판매, 가짜 문화재 및 모조품 판매, 부정식품 제조·판매, 부당요금 징수, 기타 유통질서 교란), ④ 퇴폐 및 사회정화 저해사범(관광업소 윤락행위, 유흥업소 공연음란, 외설문서·도화·음반 등의 제조·판매, 마약류 밀조·밀매, 고유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퇴폐 행위), ④ 무질서 조장사범(교통질서 문란, 공중도덕 문란, 행락질서 문란)이나 저해

<sup>93</sup> 법무부가 올림픽지원대책으로 내놓은 것은 다음 네가지다. ① 복귀 방해공작 경계태세 확립, ② 올림픽 저해사범 엄단, ③ 신속한 출입국관리 조사태세 확립, ④ 종합적 안전대책 완비

사범에 대해서는 특별단속반을 활용한 주기적 시험단속, 우범자 리스트 작성, 우범지역 일제단속, 대국민 홍보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대처하기로 했다(“서울올림픽 및 아시아 경기대회 준비 세부 시행계획 제출”, 1982년 3월 10일). 위 범주 중 특히 집중적인 단속의 대상이 된 것은 ‘질서침해 사범’이었다. 1982년도 한해 동안 56명의 관광사범과 110,494명의 질서침해사범이 단속되었기 때문이다(“1983년도 주요업무계획, 1983년 2월). 1985년에는 관광사범 266명과 질서침해 사범 13,077명이 단속되었다(“1986년도 주요업무계획”, 1986년 1월).

1986년부터 ‘올림픽 저해’라는 범죄는 정권에 반대하는 이들의 저항적 목소리와 움직임 차단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전두환과 노태우가 이 무렵부터 강조하기 시작한 ‘사회안정’을 침해하는 행위를 ‘올림픽 저해사범’으로 간주한 것이다. 1986년 초 법무부는 올림 주요업무계획에서 “대회기간을 전후한 사회안정 저해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발표했다. 같은 해 5월 검찰의 “86 아시안게임 저해사범 단속” 공문은 중점단속의 대상 중 사회안정과괴사범(불순세력의 사회교란 책동, 시위·농성 등 불법 집단행동, 국외 범죄조직의 국내잠입)을 맨 앞자리에 두었고, 이어서 관광 저해사범, 질서침해사범, 경기장질서 문란사범, 회장권 침해사범 등을 단속 대상으로 삼았다(“아시안게임저해사범단속”, 1986년 5월 19일). 아시안게임이 다가오면서 단속은 강화되었다. 법무부는 검찰로 하여금 1986년 3월부터 “올림픽 저해사범” 단속을 분기별로 보고케 했다가 6월부터는 단속 결과를 매월 보고하고 점검을 받도록 하였다(“올림픽저해사범 단속보고 및 외국인범죄사건처리”, 1986년 6월 9일). 그리고 12월까지의 점검기간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단속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올림픽저해사범 단속보고 및 외국인 범죄사건 처리”, 1986년 6월 12일).

1987년 6월 항쟁과 개헌, 대통령 선거 등을 거친 뒤에도 ‘사회안정’을 내세우고 정권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와 행동을 ‘올림픽 저해’로 보는 시각은 여전했다. 1988년 7월 1일 내무장관은 시도지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올림픽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국론분열, 그리고 자율화에 편승한 집단행동이 잇따르고 있다”고 상황을 정의하고 “올림픽 저해요인은 지방행정의 역량을 총동원, 이를 해소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한겨레, 1988년 7월 1일, 7). 1988년 4월 28일, 제주지방검찰청은 1988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서울올림픽대비 범죄단속기간으로 정했는데, 이때 가장 우선시된 “중점단속 대상범죄”는 “불순세력의 사회교란 행위”와 “시위, 농성 등 불법집단 행동”, 그리고 “공항, 항만, 안전위해 사범”이었다(“88서울올림픽대비 범죄단속계획”, 1988년 5월 9일).

그러한 가운데 대중들의 습속을 통제하고자 하는 노력도 지속되었다. 1986년에도 9,027명이 ‘관광사범’이라는 이름으로, 17,706명이 ‘질서침해사범’이라는 이름으로 단속대상이 되었다. 1988년 5월 4일부터 서울지검은 ‘서울올림픽범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9명의 전담검사와 검경직원들로 이뤄진 단속반을 만들었다(동아일보, 1988년 5월 4일, 15). 8월까지 약 4개월 간 3,345명을 단속하여 33명을 구속시키고, 775명을 형사입건 하였다(문철호, 1988년 8월 25일). 이와 별도로 치안본부는 6월 27일부터 이른바 “올림픽 대비 경찰 범죄소탕 70일 작전”을 시작했는데, 2주만에 전국에서

15,677명(강도 178명, 절도 2,695명, 폭력 12,804명)이 검거되고 3,720명이 구속될 정도로 고강도의 단속이 이뤄졌다(이선명, 1988년 7월 11일). 이것으로도 모자랐는지, 검찰총장은 9월 초 ‘전국올림픽범죄전담 부장검사회의’에서 전국 경찰에 다시 한번 올림픽대비 범죄단속을 지시한다(강성주, 1988년 9월 7일).

## 2. 저항적 시민사회의 비판 억압

여기서는 1981년 이후 발전국가가 습속개조를 위해 수행했던 활동들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서울올림픽의 준비와 개최과정에 참여한 두 권력자인 전두환과 노태우의 발언을 통해 이들이 한국사회 구성원들의 습속을 어떻게 파악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1981년부터 1988년 사이 발전국가가 사회개조에 대한 기초를 바꾸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여 보고자 한다.

### 1) 사회질서에서 사회안정으로의 문제 변화

앞서 말했듯이, 전두환은 자서전을 통해 자신이 집권하는 과정에서 보였던 반대의 움직임은 하층민들의 무질서로 정의했다. 그런 대중의 무질서를 없애는 것이 올림픽을 준비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과제라는 것이 전두환의 생각이었던 것 같다. 외국 저널리스트들에 의하면 전두환은 올림픽의 의미를 ‘질서의 회복’이라고 생각했다고 전해진다 (심슨&제닝스 1992, 193).

그런데 이러한 판단은 전두환의 임기가 끝날 무렵까지 지속되었다. 그는 정부 각 부처들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지속적으로 우리사회 구성원들의 습속이 무질서하므로 그 하부구조에 해당하는 ‘의식’을 개조하여 사회질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전두환은 임기 내내 사회 구성원들의 습속에 대한 입장 및 올림픽을 계기로 한 사회개조의 기초를 바꾸지 않은 것이다.

[표 8] 1986·1988 대회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  
(출처: 1986·1988대회관련 대통령각하 지시사항철<sup>94</sup>)

일시	발언장소	발언 내용
1981.10.8	제 71회 국무회의	“올림픽 대비 국민의식 구조 개혁을 위한 교육과 계도를 서둘러 강화”, “88 올림픽 계기로 전국민이 단합하

<sup>94</sup> 두 스포츠이벤트를 앞두고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들을 한 데 모아 국무총리행정조정실에서 정리한 문서다. 관련 지시사항을 모두 모은 것은 아니고, 1984년도 지시사항은 누락되어 있는 등의 문제가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올림픽 관련 발언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이기에 자료로 활용하였다.

		고 국력을 조직화하여 선진국으로 응비할 수 있는 역사적 전기가 되도록 전력 경주”
1981.10.10	제62회 전국체전 치사	“협동단결과 질서의식의 기풍 함양”
1981.11.12	교육문화수석에게 지시	“올림픽 국민의 자질을 갖추기 위한 도의정신을 개혁하기 위하여 국민생활의 행동지침 마련”
1981.12.4	5차경제사회개발계획 내무행정부문 보고	“88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친절하고 예의 바르며, 질서 잘 지키는 일등국민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의식구조 개선”
1981.12.16	서울올림픽 준비추진상황 중간 결과 보고	“국민의식 교육 - 조직위와 문공부가 협조하여 매스컴 등을 활용 꾸준히 추진”, “국민에 대한 민족주체성 확립 교육을 통하여 당당한 한국인상 정립”
1982.1.5	국무회의	“우리 국민은 공공질서 준수 의식, 정정당당한 국민의식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므로 88올림픽과 86 아시안게임을 앞둔 우리로서는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완전히 고쳐나가야 겠음”, “우리나라가 범죄 없고 교통질서가 확립되고 밝은 사회라는 것이 우리나라는 찾는 외국 관광객에게 인식되면 한번 와본 사람이면 다시 찾게 될 것이므로 전 국민에게 질서의식이 뿌리내릴 수 있는 한해가 되도록 할 것”
1982.2.8	청와대 회의	“86 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에 대비하여 국민적 열기 속에 국민의식을 개혁, 선진국민화하며 국가발전의 바탕으로 이를 승화시키는 것”, “특히 (1) 예의 바르고 외국인에 대하여 친절하며 모든 국민이 안내원이 된다는 의식, (2) 질서를 지키는 의식, (3) 청소와 위생시설의 이용, 아름다운 마음가꾸기 등 환경의식 등을 생활화하도록 하고, (4) 언론이 올림픽 준비를 위해 고쳐야 할 점을 파헤쳐 올림픽이 선진국민화, 선진국화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
1982.2.10	법무부 업무보고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을 앞두고 교육·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전국민이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일등국민이 되도록 적극 계도할 것
1982.2.16	문공부 업무보고	“86 아시아경기대회, 88 올림픽대회 개최의 역사성을 인식시키고, 이 국제적 축제를 계기로 80년대 국가발전이 이룩되도록 국민의 의식을 개혁하고”
1982. 2. 18	과기처 업무보고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은 우리 민족의 위대성을 과시하고 동시에 경제도약을 이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 경제도약을 위해서는 3대부정심리 <sup>95</sup> 를 추방하고”
1982. 2. 26	제주도 순시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 생활화되어야 일등국민으로

<sup>95</sup> 3대부정심리란 대통령 전두환이 1982년 초 국정연설에서 정한 중요 사회문제였다. 부정심리는 “사회 전체의 질서와 조화는 아랑곳 없이 오직 나만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마음의 상태”로 정의되며, 이로 인해 “부패, 무질서, 물가상승”이 초래되므로, 이 “3대 부정적 심리를 추방”하여 “정의로운 사회”를 앞당기자는 것이 골자였다(사회정화위원회 1988, 121). 정부의 재정 및 금융정책과 결부된 물가상승의 문제를 대중의 습속의 문제에 귀인시키는 것만 보더라도 당시 정권이 모든 문제를 ‘사회화’시키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행세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86, 88올림픽 등 국제적인 중요행사를 맞이하여 각별히 도민들에게 교육하고 우리 스스로가 솔선수범하여야 함”
1982. 3. 4	강원도 순시	“86, 88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고 이를 위하여 전국민의 질서의식을 조속히 확립하여야 하겠음”
1982.3. 29	경북도 순시	“법질서는 누구나 지켜야 하고 법질서 앞에 특권층이 있을 수 없으며, 질서를 잘 지키고 준법정신이 앙양되어야만 일등국민이 될 수 있으며, 특히 86, 88 올림픽을 앞두고 있으므로 질서의식을 정착시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기회로 삼도록 할 것”
1983.1.26	농수산부 보고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 행사를 각 부처가 유기적인 협조로 성공적으로 거행할뿐만 아니라 선진문화국으로 의식을 개혁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며,”
1983.2.3	법무부 보고	“86·88올림픽에 대비하여 이를 저해하는 모든 사범에 대하여는 계획을 세워 철저히 단속할 것”
1983.4.15	올림픽추진상황 보고	“우리가 아시안게임, 올림픽, IPU(국제의회연맹) 총회 등 세계적 규모의 국제대회를 연이어 주최하게 된 것은 역사적으로 큰 의의가 있는 바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하면 선진국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임. 따라서 우리는 이제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낙후되었다는 패배의식에서 탈피하여 세계사의 주역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국민 각자가 주인의식을 확고히 하여 우리 모두의 의식의 선진화와 경제도약의 전기가 되도록 하여야겠음”, “국민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과 계도는 범민족올림픽위원회뿐만 아니라 새마을 조직, 사회정화위, 그리고 직능단체 등 모든 조직을 총동원하고 각급 교육기관, 반사회 및 홍보매체를 통하여 선진국민이 될 수 있는 모처럼 좋은 기회임을 충분히 인식토록 지속적 반복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그 효과가 크게 날 수 있도록 할 것”
1983.8.11	86·88 2/4분기 추진상황 보고	“86·88대회를 통하여 우리나라를 전세계에 인식시키고 우리 국민의 뛰어난 자질과 무한한 저력을 보여줌과 동시에 모든 국민이 세련된 선진국민으로 손색이 없도록 그 수준을 향상시킬 것”, “올림픽 계몽영화는 영화 그 자체가 국민의식 개혁의 교재가 될 수 있도록 내용을 충실히 하여 수준높은 작품을 제작함으로써 양보다는 질에 치중토록 할 것”
1985.2.6	경상남도 순방	“질서, 친절, 청결은 이제는 상당한 수준에 와 있으나 더욱 노력하여 정착시켜 나가야 하겠음”, “불과 몇 년 만에 이러한 성과를 가져온 것은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 때문이라고 확신함”, “이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과소평가와 열등의식, 패배의식을 떨치고 ‘우리도 하면 된다’, ‘함께 하면 더욱 잘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임. 이를 계기로 우리는 세계사를 이끌어가는 주역으로서 전기를 마련해 나가야 겠음”
1985.12.17	86, 88 대회 추진	“국민들은 질서, 청결, 친절 등 문화시민으로서의 참모

	상황 종합보고	습을 발휘하도록 노력할 것”, “국내의 정치, 사회안정이 86 대회 성공에 가장 중요하니 전국민이 모두 합심, 협조해야 할 것임”
1986.7.4	86대회준비현황보고	“우리가 선진국에 돌입할 수 있는 계기로 아주대회를 삼아야 한다. 긍지와 자신을 가지고 아주대회에 임하기 바람. 이와 관련 3가지의 챔피언이 되어야 한다. 동방예의지국의 챔피언이 되어야 함(가지고 있는 타이틀), 질서 챔피언의 타이틀을 가져야 함, 보건위생분야의 챔피언 타이틀을 가져야 함”

그런데, 1980년대 중반부터 시민사회에서 저항의 움직임이 강력해지자, 정권은 이를 잠재울 필요가 있었다. 올림픽을 통한 사회정치에 있어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현상이 등장한 것이다. 그러자 이들은 ‘사회질서’ 대신 ‘사회안정’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이 문제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일례로, 대통령직선제 개헌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가 뜨거웠던 1987년 초, 전두환과 노태우는 다음과 같이 올림픽을 내세워 그 목소리를 잠재우려 하고 있다.

전대통령은 “내년의 평화적 정부이양과 올림픽은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기필코 달성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말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회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불법집단행동과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폭력행위에 강력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향신문, 1987년 2월 20일, 1)

노태우 대표위원도 인사말을 통해 “이제 우리는 평화적 정부이양과 88올림픽의 양대사를 성공적으로 이룩하기 위해 사회안정을 바탕으로 굳건히 나아가야 한다”면서 (동아일보, 1987년 4월 11일, 1)

1987년이라는 상황을 감안하고 해당 발언이 4.13 호헌조치를 즈음하여 언표된 것임을 고려한다면 이들이 말하는 불법집단행동이란 대통령직선제를 요구하는 시위를 가리킬 것이다. 실제로 추진엘리트에 속하는 이들은 민주화를 위한 투쟁이 올림픽 성공에 저해요인이 되었다고 보았다(범민족올림픽추진중앙협의회 1988, 204). 그렇다면 1980년 정권이 들어서면서 ‘무질서’라 불렀던 그 사태와 큰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다. 당시도 불법적으로 정권을 차지하려는 신군부에 대한 반대시위였기 때문이다. 물론, ‘무질서’나 ‘불안정’ 같은 개념들이 지시하는 것은 민주화와 관련된 시위만을 가리키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신군부가 권력을 부당하게 잡은 뒤 ‘사회질서’를 외치고, 그 부당한 권력을 연장하려 하면서 ‘사회안정’을 외쳤다는 것은 이들의 사회정치가 지향하는 바가 동일함을 보여준다.

2) 저항적 시민사회의 억압

이렇게 ‘사회안정’이라는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정부가 세운 대책은 여하한 형태의 집단행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법무부는 ‘올림픽 저해’라는 죄목을 활용하면서 집단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고자 했다. 앞서 본 것처럼 검찰은 “86 아시안게임 저해사범 단속”을 발표하면서서 중점 단속의 대상 중 사회안정과괴사범(불순세력의 사회교란 책동, 시위·농성 등 불법집단행동)을 맨 앞자리에 두었다(“아시안게임저해사범단속”, 1986년 5월 19일). 내무부 역시 마찬가지였다. 앞서 본 것처럼, 1988년 7월 1일 내무장관은 시도지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올림픽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국론분열, 그리고 자율화에 편승한 집단행동이 잇따르고 있다”고 상황을 정의하면서 이를 “올림픽 저해요인”으로 불렀다(한겨레, 1988년 7월 1일, 7).

하지만, 올림픽이 다가오자 관련부처의 단속이 아니라 특별법을 통해 집단행동을 원천봉쇄했다. 올림픽을 명분삼아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박탈하는 특별법을 만들었던 것이다. ‘올림픽 평화구역’에 관한 법이 그것이다.

이를 위해 잠시 서울올림픽 평화대회라는 이벤트를 우회하고자 한다. 5장에서 설명하겠지만 올림픽에 자본주의 국가만이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들이 대거 참가하기로 결정한 것은 1988년 초의 일이다. 이에 따라 추진엘리트들은 뒤늦게 서울올림픽의 정체성을 세계평화와 관련한 이벤트로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그 중 하나가 ‘서울올림픽 평화대회’였다.<sup>96</sup> 이 행사의 핵심은 다음과 같은 평화 호소문에 세계 유명 인사들의 서명을 받아 발표함으로써 올림픽 기간 중 테러와 시위 등의 행동을 예

<sup>96</sup> 이 이벤트를 고안하고 추진한 것은 김성진이라는 인물로, 유신정권하에서 문화공보부 장관을 지낸 후 80년대에는 올림픽 조직위원, 언론재단 이사장 등을 지냈던 인물이었다. 사실상 추진엘리트의 일원으로 있었고, 국가와 매우 가까운 문화엘리트 중 한 사람이었다. 그는 1988년 11월부터 방송협회 이사장 및 KBS사장이 되는 서영훈 홍사단 이사장, 그리고 범민족올림픽중앙추진협의회 문태갑 본부장과 함께 이 이벤트를 기획했다(김성진 1994, 37). 올림픽추진엘리트들 간의 협의를 통해 만들어진 올림픽 외곽 이벤트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벤트 조직일정은 매우 촉박하게 진행되었다. 1987년부터 구상되었다고는 하나 논의는 3월부터 시작되었고, 5월 말에 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진 뒤, 6월에 활동계획을 세우고, 7월 13일에 발기인대회를 가졌다(김성진 1989, 14-15). 그리고 이 발기인 대회에서 함석헌이라고 하는, 저항적 시민사회를 오랫동안 이끌어온 인물이 위원장을 맡고, 김성진과 서영훈이 부위원장을 맡게 된다. 이로 인해 함석헌은 저항적 시민사회로부터 숭한 비난을 받았지만(김창규, 2003년 10월 1일), 정작 이벤트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는 하기 어렵다.

이 단체의 활동은 세 가지였다. 평화호소문의 작성과 서명, 『올림픽평화대회』라는 이름의 학술대회 개최, 그리고 ‘평화의 성화’라는 조형물을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하단에 설치하는 것이었다. 그 중 평화호소문은 1988년 8월 5일 위원장 함석헌 명의로 작성되어 세계 각국의 정치인, 외교관, 체육계인사, 학계인사, 문화예술계 인사 등에게 서신으로 전달되어 서명을 받는 형태로 이뤄졌다. 여기에 84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테스몬드 투투주교, 85년 수상자 산체스 코스타리카 대통령, 레이건 미대통령, 헬무트 슈미트 전 독일총리 등을 포함하여 600여명의 국내외인사(외국인 307명, 국내 약 250명)가 서명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김성진 1989, 15; 『경향신문』 1988년 9월 16일, 1).

방하는 것이었다.

“1988년 9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는 무기와 증오심을 버리고 폭력과 테러의 위협이 없는 평화의 기간이 되어야 하며 이를 계기로 세계평화가 영원히 뿌리를 내리게 하여야 한다.(김성진 1989, vi)”

이러한 흐름을 타고 여당과 국회는 1988년 7월 22일 임시회를 통해 123명의 의원이 발의한 “올림픽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법률안”을 가결시킨다. 서울시는 그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올림픽평화구역 설정공고”, 1988년 8월 19일).

“제 24회 서울올림픽 대회는 세계 각국이 인종과 종교, 이념과 사상을 초월하여 한자리에 모이는 지구촌 50억 인구의 대제전으로서 화합과 전진을 기본정신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의 서울올림픽이 동서화합과 세계평화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온 국민의 뜻을 모아 대한민국 국회는 1988년 7월 23일 올림픽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정부에서는 이를 공포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른바 ‘정권안보’용으로 활용될 소지가 다분함이 느껴진다. 상기의 ‘평화호소문’이 국외안보용이라면, ‘평화구역’에 관한 국내안보용으로 볼 수 있다. 법안은 “올림픽의 평화를 해치는 집회 및 시위행위를 금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그리고 ‘평화구역’의 설정을 지방행정기관장(시도지사급)에게 맡기고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가 활발하게 개최하고 있던 집회와 시위를 금지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로 활용될 소지가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올림픽 평화구역으로 고시된 공간은 매우 광범위했고, 기간 또한 매우 광범위했다. 서울의 경우 1988년 8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37개 동을 제외한 전역이 ‘평화구역’으로 설정되었다(“올림픽평화구역 설정공고”, 1988년 8월 19일). 다른 경기장 및 연습장 소재 도시는 8월 17일부터 경기 종료 2일 후까지를 기간으로 설정하였는데 고시지역은 부산 203개동, 대구 104개동, 인천 2개동, 광주 60개동, 대전 57개동, 수원·성남·과천·안양은 시 전역, 경기 광주군 동부읍, 고양군 원당읍, 신도읍, 파주군 3개읍 2개면, 충남 대덕군 신탄진읍, 경북 경산군 경산읍이었다. 아울러, 충남 천안시, 온양시, 아산군 도고면 전역은 8월17일~9월 17일까지, 성화숙박 및 경유도시 20개 및 성화봉송로 양측 1km 이내는 8월 17일~성화봉송 종료일까지 올림픽 평화구역으로 설정되어 각종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었다(조복조 1988년 9월). 국내 주요도시 전역을 약 두 달 가량 집회 및 시위금지구역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이는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반발을 불렀다. 1987년 이후 활성화된 저항적 시민사

회의 활동을 억압하는 도구가 되었기 때문이다.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이 1988년 8월 20일에 작성한 팜플렛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12군데 노동자 파업 현장에서 경찰이 올림픽 평화구역을 이유로 파업을 해산하고 지도부를 구속하기까지 했다(“평화의 제전 올림픽을 빙자한 폭력적 민중 생존권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1988년 8월 20일). 저항적 시민사회는 올림픽 평화구역 선포 이후 정권이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탄압하는 데 더욱 광분하여 날뛰고” 있고, 자본가들은 “이에 편승하여 단체교섭을 고의로 미루거나 무성의한 협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이 노동자의 단체행동을 막는 데만 아니라 철거와 노점 단속에까지 활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독재안정화 기도, 88올림픽”, 1988년).

이에 따르면, 올림픽 평화구역은 정권안보의 문제를 넘어선 기본권의 제한이라는 문제를 지닌 것이었다. 노동조합의 파업이 민주화나 정권의 안보와 관련된 문제도 아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는 어디까지든 사인간의 갈등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단결권까지 침해하면서 국가는 모든 형태의 집단행동을 차단하고자 했던 것이다.

## 제 2절 습속의 규율과 개조

### 1. 감시와 캠페인을 통한 습속 규율

#### 1) 국가기구의 습속 개입

내무부와 지방 행정기구들은 새마을운동과 지방자치단체를 활용한 관제캠페인을 통해 올림픽의 사회정치에서 한 역할을 담당했다. 내무부는 서울올림픽 개최 결정 이후 올림픽을 매개로 한 사회정치에 관한 1981년 12월 내무부는 “올림픽새마을 7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한다. “친절·근검·정직의 예의민족, 청결·질서·품위의 선진사회, 전통·미풍양속의 문화국민”을 세계에 과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 이 운동은(『동아일보』 1981년 12월 16일, 7), 대중들의 습속 전반에 광범위하게 개입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는 1982년부터 실천에 옮겨지는데,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소절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지방행정기구 역시 사회정치에 활용되기는 마찬가지였다. 일례로, 경기도가 발표한 “86, 88 올림픽 준비지원계획”을 살펴보자. 경기도의 지원계획의 목표는 ① 선진 주민의식 함양을 위한 다각적 활동 전개, ② 국민체육진흥 및 국민화합계기 조성, ③

86·88 올림픽 준비의 국민적 지원분위기 조성, ④ 지방관련 준비 업무의 빈틈없는 추진이었다. 이 네 가지 목표를 다시 나뉘본다면 ①과 ②가 보다 추상적인 차원의 목표이고, ③과 ④는 업무상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앞의 두 가지 목표는 사회 질서 및 사회통합과 관련된다. 올림픽의 사회정치에 있어 지방행정기구가 수행할 역할은 이렇게 목표 단계에서부터 등장한다. 구체적인 활동에 있어서도 그러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지방행정기구가 수행해야 했던 활동은 범민족올림픽추진위원회를 육성하는 일과 올림픽새마을운동을 추진하는 일이었다(“86·88올림픽준비지원계획, 1982년 6월 24일”).<sup>97</sup> 중앙행정기구와 더불어 관계캠페인을 대규모로 전개하는 것이 지방행정기구의 역할이었던 것이다.

문화공보부 역시 대중의 습속을 문제화하고 이에 대한 담론을 대규모로 언표하는 방식으로 사회정치의 일익을 담당했다. 1982년 업무계획에서 “문화국민의 자질 확립”을 위한 올림픽의 국내 홍보를 중점 시책으로 설정했는데(“1982년도주요업무계획”, 1982년 2월), 이는 1983년에 가서 매우 자세한 업무계획으로 바뀐다. 문화공보부가 마련한 ‘문화올림픽 준비계획’의 네 항목 중 하나가 ‘선진 문화국민 의식의 함양’이었다.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회의 의의 및 성과에 대한 국민적 인식 확대(올림픽을 통한 ‘의식의 선진화 및 경제의 선진화 완성), ② 선진문화국민으로서의 의식개혁(‘주인의식의 함양’, ‘질서의식의 함양’, ‘친절·예의·봉사정신 함양’), ③ 대중매체를 통한 올림픽 홍보, ④ 민간 국민운동 지원, ⑤ 전통문화에 대한 지식 확충(“1983년도주요업무계획”, 1983년 2월). 의식의 선진화, 의식개혁 등의 익숙한 사회정치 담론과 대중매체를 통한 올림픽 홍보, 민간 국민운동 지원 등을 주요 활동 내용에서 결합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문화공보부가 올림픽의 사회정치를 위한 도구로 대중매체를 활용했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

5공 정부는 1980년도의 언론통폐합과 더불어 강하게 언론을 통제하고 장악했던 정부였다. 이 정권에는 대중매체에 대한 정권의 개입을 강력하게 추진했던 허문도, 이진희, 이원홍 등 ‘괴벨스’라는 별명이 붙은 인물들이 존재했다.<sup>98</sup> 바로 이들이 문화공보부 장차관을 번갈아가며 맡았기에, 문화공보부의 대중매체를 활용한 올림픽 홍보는 매우 구체성을 지닌 실천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여러 매체 중에서도 파급력이 큰 TV방송국은 모두 국가의 소유였다. 그렇기에 정권은 TV를 올림픽과 관련한 선전수단으로 매우 주요하게 활용하였다. 1986년 2월 5일부터 1988년 10월 31일 사

<sup>97</sup> 경기도가 중점추진사업으로 선정한 것은 ① 범민족올림픽추진위원회육성, ②올림픽새마을운동추진, ③식수운동 전개, ④올림픽관광지역개발, ⑤경기장 및 주변정비, ⑥국제자매결연추진 이었다. ①과 ②는 관계캠페인, ③-⑤는 도시개조 영역에 해당한다.

<sup>98</sup> 허문도는 국보위 문화공보위원으로 시작하여 1982년부터 84년까지 문화공보부 차관을 지내면서 정권의 언론정책과 문화정책을 지휘했다. 이진희 역시 국보위 위원을 지냈으며, 1980년부터 문화방송과 경향신문 사장을 겸임하다 1982년부터 문화공보부 장관을 했다. 1986년에는 서울신문 사장 및 신문협회 회장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별명이 ‘괴벨스’였던 이원홍은 1980년부터 85년부터 KBS사장을 지냈고, 이진희의 뒤를 이어 문화공보부장관에 올랐다(강준만 2003b, 34).

이 언론을 통한 아시안게임 및 올림픽 홍보 횟수는 TV가 2,978건(KBS 1,334, MBC 1,644), 신문이 1685건(중앙지 980, 지방지 705)으로 TV쪽이 더 많다(체육부 1987, 41; 범민족올림픽추진중앙협의회 1988, 203).

다음으로, 올림픽 개최도시인 서울시는 1988년도 초부터 이른바 ‘시민참여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관제캠페인을 벌였다. 다음과 같이 6개 영역 30개 실천 사항을 실천하여 올림픽 준비에 시민들을 참여시키겠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실천사항을 위해 서울시가 기획한 것은 직능단체, 기타 사회단체, 종교단체, 학교 등을 동원하여 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서울시가 실제로 동원할 수 있었던 다수의 단체는 직능단체였다. 총 104개 직능단체가 1988년 한 해 동안 각종 교육과 캠페인에 동원되었다. 이를 제외한 기타 단체가 동원된 교육과 캠페인에도 총 78회 연인원 327,640 명이 동원되었다(서울특별시 1990, 1002-1005).

[표 9] 서울시 시민참여운동 실천사항  
(출처 : 서울특별시 1990, 989)

국가관 확립	국기, 국가 존중하기 주인의식 함양 전통문화 선양	질서 지키기	준법정신 거리질서지키기 교통질서지키기 상거래 질서확립 경기장 질서확립 행락 질서확립
올림픽 이해	올림픽 정신의 올바른 이해 외국어회화 공부하기 서울올림픽 개최의의와 효과 이해 올림픽 개최지 한국의 장래 이해	건강 증진	스포츠와 친하기 환경위생 향상 조기운동 식생활개선 국가체조 생활화
공중 도덕	공중시설 아끼고 보호하기 휴지꽂초 안버리고 줍기 거리에 침 안뿌리기 친절하기, 인사하기 고문말, 바른행동 몸에 익히기 인사는 반갑게 받기	생활 환경	거주지 주변거리 바꾸기 직장주변 청소 및 가로수 보호하기 직장화단 정비, 녹지 조성 간판, 광고물 정비 직장 화장실 현대화와 외부 개방 옥상 정비 손질

## 2) 범민족올림픽추진위원회

범민족올림픽추진위원회의 활동은 굉장히 방대하나 한마디로 말해 직업단체들에

대한 교육과 대중을 대상으로 한 관계캠페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99</sup> 이들은 공중도덕, 교통질서, 상거래 질서, 관광질서, 수도미화, 시민체육, 국제친선, 문화홍보의 8개 분과로 나누어 활동했는데, 그 중 사회질서와 관련하여 1982년부터 1985년까지 서울시 추진위원회가 수행했던 활동은 아래 [표 10]과 같다.

[표 10] 범민족올림픽추진위 서울시회 주요사업(1982.3 ~1985.3)  
(출처 : 서울특별시 1990, 969)

사업명	실적	사업명	실적
공중도덕심 함양교육	216,542명	운수업체 종사자 교육	11회 3,020명
직능별 결의대회	17회	가격표시제 실천 교육	8회 451명
각종 경연대회	18회	관광사업 종사자 교육	4회 9,673명
운수종사자 교육	83,054명	위생환경업소 종업원 교육	107,924명
공중도덕 캠페인	12회 1,452명	상인교육용 슬라이드	3편 제작
교통질서 캠페인	32회 2,457명	상인 결의대회	1회 218명
단체질서 캠페인	12회 19,583명	상인 교육	1,945회 98,487명
행락질서캠페인	33회 5,383명	관광업체 종사자 교육	8회 3,488명

이상의 통계만으로도 이미 수십만명이 동원된 교육과 캠페인이 여러 차례 수행되었음이 확인된다. 하지만 위 표는 서울시 추진위원회의 자료로, 구단위 추진위원회의 활동을 누락하고 있다. 이를 더해본다면 그 동원 규모는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985년 이후 중앙협의회가 만들어지면 거대 이벤트와 대규모 캠페인이 늘어나게 된다. 아래 [표 11]는 1985년 3월부터 1986년 12월 말까지 추진협의회를 통해 얼마나 많은 이들이 동원되었는지를 보여준다.

[표 11] 1985~86 범민족올림픽추진중앙협의회 활동  
(출처 : 범민족올림픽추진중앙협의회 1988, 62~63)

기간	동원대상	동원 인원	내용
1985.3월~	새마을운동 지도자, 요식업	6만 명	질서·청결·친절 등 주최국민으

<sup>99</sup> 이 시기 다수의 관계캠페인 단체 및 직업단체를 ‘시민사회’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한국에서 시민사회란 정치적 주체로서 국가권력의 억압적 지배에 저항하고 공공성을 담보하는 사회세력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기 때문이다(박명규 2009, 240). 그렇게 본다면 새마을운동이나 사회정화위원회 등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국가에 대한 저항의 의미는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의 새마을연구가 밝히고 있듯이 관계운동에 참여한 이들이 단순히 ‘위로부터의’ 요구를 아래로 전달하는 역할만 수행한 것은 아니었고(황병주 외 2014), 마을공동체 단위에서 공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여기서 ‘관계 시민사회’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1986.2.5	종사자, 학교 교육자, 운전 기사, 문무대 등		로 갖추어야 할 예절 홍보
1986.2.5~1986.2.20	대회관련단체	79,152명	스티커·포스터·팜플렛 등 홍보물 제작 배포, 슬로건 사용
1986.2.21~1986.3.10	5대 도시 종교·사회·봉사단체	172,122명	표어, 전단활용계획 수립
1986.3.11~1986.3.31	167개 시·군 종교·사회·봉사단체	978,821명	광고물 종합 정비, 대표선수 성원운동
1986.4월~1986.6월	전국 봉사단체, 사회단체, 각급학교	5,184,862명	D-100일 홍보, 스티커 부착, 각종 캠페인
1986.7월~1986.12월	전국 각종 직능·사회단체	1,105,998명	손님맞이 운동

이 정도의 동원이라면 당시 4천만이라 불리던 당시 인구의 상당수가 올림픽과 관련한 각종 캠페인에 대한 직간접적 경험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정도로 대규모의 동원을 통해 사람들을 활용하고 또 대상으로 삼아 교육과 캠페인이라는 방식의 사회정치를 수행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표어나 슬로건 등이 적혀있는 스티커, 포스터, 전단, 팜플렛, 현수막 등을 나눠주는 것이 주였다. 이 당시에 배포된 표어, 슬로건, 전단 내용 등은 다음 [표 12]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스티커 도안은 다음 [그림 9]와 같다.

[표 12] 1985~86년 올림픽 표어·슬로건·전단 내용  
(범민족올림픽중앙추진협의회 1988, 39-46)

표어	“올림픽에 나라크고 나라 크면 나도 크다” “선진국 시민답게 올림픽 주인답게” “청결 으뜸 친절 으뜸 서울올림픽 세계 으뜸” “내가 버린 휴지 한장 나라 얼굴 더럽힌다” “내가 베푼 작은 친절 국익되어 돌아온다”	“집안 일을 내가 하듯 올림픽도 온 시민이” “선진 시민 따로 없다. 청결·질서·문화시민” “너도 나도 바른 질서 우리 모두 일등 시민” “친절은 내가 먼저 질서는 우리 모두” “좋은 상품 밝은 거래 다시 찾는 세계 손님”
슬로건	“86·88은 너와 나의 보람” - 참여의 보람, 성공의 기쁨 - 겨레가 뭉쳐, 빛나는 86·88 - 나의 보람, 민족의 영광 - One Asia, One Korea - 정성어린 86준비, 가슴마다 보람보람 - 화합으로 맞은 손님, 웃으면서 돌아간다 - 뜻모아 하나로, 힘모아 세계로 - 86은 디딤돌, 88은 도약대 - 아시아와 함께 전진하자	- 달리는 서울, 웃는 아시아 - 너도 참여, 나도 참여, 꽃피우는 86대회 - 다함께 밝히자, 동방의 등불을 - 아시아의 영광을 서울에서 꽃피우자 - 타오르는 동방의 빛, 올림픽 코리아 - 86은 88, 합심은 성공 - 86으로 다진 발판, 88에서 꽃피우자 - 86은 내가 할 일, 88도 내가 할 일 - 86으로 맺은 열매, 나도 좋고 나라 좋다 - 선수는 경기 메달, 시민은 질서 메달
전단	86·88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가짐 86대회는 나의 발전 계기 86대회는 1등 문화국민 과시의 기회 86성공 향한 바람직한 실천자세	왜 86대회를 잘 치루어야 하나 무엇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나 86대회를 통해 나라와 나의 발전을 이룩합시다 이러한 자세를 스스로 실천합시다



[그림 9] 서울올림픽 준비 스티커 도안  
(출처 : 범민족올림픽추진중앙협의회 1988, 88)

슬로건·표어 등을 담은 스티커, 포스터, 팸플릿 현수막, 전단 등은 그 양도 어마어마 했다. 스티커 8,948,809매, 표어 3,588,158매, 포스터 1,160,860매, 전단 8,372,143매, 팸플릿 2,882,673매, 현수막 3,280 매 등이 이 시기에 뿌려졌기 때문

이다(범민족올림픽중앙추진협의회 1988, 64).

1987년부터초부터 1988년 10월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도 마찬가지로 관제캠페인에 대대적인 동원이 이뤄졌다. 정직, 질서, 친절을 주제로 한 스티커만 해도 11,566,295 장이 제작되어 배포되었고, “서울올림픽 성공을 위한 우리 모두의 실천 운동 유형”, “밝은 사회를 위해 우리 모두가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 등의 제목을 가진 전단도 95만매 배포되었다. 『올림픽광장』이라는 월간지는 1987년 11월부터 12개월간 총 819만 5천부가 배포되었다. 그리고 질서(정류장 줄서기, 횡단보도 바로 건너기, 신호등 지키기, 교통법규 준수, 행락질서, 상거래 질서), 청결(공중화장실 깨끗이 사용, 쓰레기 수거 협조, 불법 스티커 제거, 내집 앞 청소), 친절(고운말 쓰기, 자부신과 긍지로 외국인 대하기, 승차거부 삼가기)” 등을 내용으로 한 캠페인만 총 5,066회나 진행되었다. 167개 단위에서 최소 매달 1회 이상씩은 진행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범민족올림픽중앙추진협의회 1988, 84-85; 125-127; 202). 이 외에도 각종 결의대회, 반상회, TV프로그램(만화 ‘달려라 호돌이’ 포함) 등 서울올림픽과 관련한 각종 담론은 온 사회 구석구석을 파고들었다.

이상과 같이 국가는 1982년부터 1988년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기천만에 달하는 인원을 동원하였다. 정직과 친절과 청결이 ‘민주시민’의 덕목이라고 하면서 올림픽을 매개로 한 습속의 변화를 기획한 것이다. 이를 위해 범민족올림픽추진위원회가 수행했던 역할은 팜플렛과 교육, 거리 캠페인, 결의대회, 전단, 스티커, 현수막 등을 통해서 담론으로 일상을 뒤덮는 것이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그 언표된 담론의 양은 어마어마한 규모였다.

### 3) 새마을운동과 사회정화운동

먼저, 올림픽새마을운동은 다음의 활동을 통해 발전국가의 사회정치에 시민사회를 동원하였다. 올림픽 개최 이후 내무부는 1981년 말부터 올림픽새마을운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1982년부터 중점 과제 중 하나가 되었다.<sup>100</sup> 이 운동은 “국민의식 수준과 국토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의식개조를 통한 습속개조가 올림픽새마을운동의 주요 사업목표 중 하나였던 것이다. 이를 위해 내무부는 8개 실천덕목과 23개 세부항목을 만들었다. 대략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sup>100</sup> 새마을운동은 1975년부터 매해 중점시책을 발표했는데, 농가소득 향상, 농촌 환경 개선, 공장새마을운동, 도시새마을운동, 새마을 정신교육이 5개가 중심을 이루었다. 여기에 1982년부터 올림픽새마을운동이 추가되었고, “손님맞이 새마을운동” 등으로 이름을 달리하면서도 1988년까지 지속된다. 그래서 1982년부터는 농촌새마을운동, 도시새마을운동, 올림픽새마을운동, 새마을정신교육, 민간주도 추진역량 제고 등이 주요 시책이 되었다. 올림픽이 다가온 1987년에는 “전국토의 공원화 운동”이 추가되었는데 이 역시 올림픽 대비 사업으로 볼 수 있다. 새마을운동의 중점시책 변화는 내무부(1987)의 속표지 참조.

**[표 13] 올림픽 새마을 운동 국민정신 개혁 실천사항**  
(출처 : 중앙일보, 1981년 12월 16일, 1)

구분	세부내용	세부 행동 내용
친절	친절한 태도 친절한 서비스	웃으면서 대화하기 등 7개 자상한 길안내 등 5개
근검	부지런한 자세 검소한 생활	책읽는 습성기르기 등 5개 사치, 낭비안하기 등 12개
정직	정직, 성실한 행위 비리, 퇴폐 추방	습득물 신고하기 등 4개 소매치기 없애기 등 5개
청결	단정한 용모 거리 청결 접객업소 환경정비 주거환경 정비	양치질 자주하기 등 6개 휴지, 궤초 안버리기 등 8개 식당, 메뉴정비 등 9개 내집, 내 점포 앞 쓸기 등 6개
질서	교통질서 거리질서 상거래질서 행락질서 참관질서	교통신호, 차선 지키기 등 8개 차레로 줄서기 등 8개 상품가격 표시하기 등 8개 음주난무행위 삼가기 등 6개 빈병 안던지기 등 6개
품위	단정한 복장 고운말쓰기 시간 지키기 정중한 태도	깨끗한 옷입기 등 5개 존칭어쓰기 등 4개 약속시간 지키기 등 2개 길거리에 방뇨안하기 등 6개
전통	민족정신 살리기 전통문화 보전	사대사상 버리기 등 8개 고적, 사적지 가꾸기 등 6개
미풍양속	인보협동 경로사상	불우이웃돕기 등 4개 웃어른에게 인사하기 등 4개

위 표는 올림픽을 매개로 한 사회정치가 얼마나 광범위한 영역을 다루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기타 세부행동 중에는 ‘웃으며 대화하기’, ‘과음 과식 안하기’, ‘면도하고 손톱 깎기’, ‘옷 다려 입기’ 같은 내용까지 존재하니 말이다(경향신문 1981년 12월 16일, 7). 발전국가가 올림픽을 매개로 하여 대중들의 습속 전반에 얼마나 광범위하게 개입하고 또 개조하고 싶어했는지를 보여준다.

1982년부터 이러한 내용을 교육하고 홍보하기 위한 관제캠페인과 교육사업에 거대한 인원이 동원되기 시작한다. 1982년~1984년까지 새마을지도자와 사회지도층 28만여명(연인원), 일반주민 1525만여명(연인원), 서비스업종사자 12만 8천여명 등에 대한 교육과 6,360회에 달하는 캠페인이 있었다(내무부 1982, 245; 1983, 256; 2984, 272). 1985년부터는 주로 도시환경의 정비에 거대한 인원이 투입되었는데, 이는 다음 절에서 확인하기로 한다.<sup>101</sup>

<sup>101</sup> 이는 새마을운동이 1970년대부터 농촌환경 정비 사업에 관여했다는 사실과도 관련이 있는 듯 하다. 올림픽새마을운동에서 도시환경정비의 비중은 점차로 높아졌고, 1987년부터는 사

마지막으로, 사회질서 확보를 위한 1980년대 핵심 사회정치 조직 중 하나였던 사회정화위원회 역시 올림픽을 매개로 한 사회정치에 동원되었다. 이들은 거리 및 교통질서, 행락질서, 상거래 질서 등을 핵심 사업으로 하고 있었고(『정화』 1982년 3월호, 12-18), ‘현장계도’와 교육이라는 방식으로 해당 영역의 사회질서를 확보하고자 했다. ‘현장계도’란 사회정화위원 등이 제복을 입고 무질서가 유발될 수 있는 현장에서 이를 감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사업에 투입된 인원은 실로 엄청났는데, 예를 들어 1982년부터 88년까지 교통질서와 거리질서(좌측통행, 정류장 줄 서기, 오물 안버리기, 차선 지키기, 횡단보도 앞 서행 등)를 위해 현장계도 활동에 투입된 연인원은 총 2,460만명이었다. 교육 역시 많은 인원이 동원되어 1981년부터 1988년까지 총 1,199만명의 연인원이 교통질서 관련 교육을 받았다. 행락질서 역시 비슷한 방식이었다. 쓰레기 스스로 치우기, 음주소란 안부리기, 공중시설 깨끗이 이용하기, 바가지 요금 없애기, 가격표 게시하기 등의 실천 상태를 감시하기 위해 총 1,943만명의 연인원이 동원되었고, 교육에는 총 2,228만명의 연인원이 동원되었다. 서울에서만 1만톤이 넘는 오물을 수거하고 7만명이 넘는 이들을 단속하기도 하였다. 상거래질서의 경우 가격 표시, 불량상품 추방, 청결 등의 실천을 교육하는데 총 612만명이 동원되고, 1만 9천회에 이르는 교육, 7,000회에 이르는 결의대회 등을 수행하였다(사회정화위원회 1988, 98-112).

양대 행사가 다가오자 사회정화위원회는 사회질서에 관한 총괄권을 갖게 된다. 1986년부터 정부는 경제기획원, 내무부, 재무부, 문교부, 체육부, 상공부, 건설부, 보사부, 교통부, 문공부, 서울특별시, 치안본부, 서울시경찰국, 서울 올림픽 조직위원회 등 15개기관이 참여하는 ‘중앙질서기획단’을 만들었고, 사회정화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주관하게 하였다(사회정화위원회 1988, 130). 이듬해에는 이를 더욱 확대시켜 농림수산부, 범민족올림픽추진중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본부가 추가되었다(사회정화위원회 1988, 141). 이에 따라 사회정화위원회는 관료기구와 시민사회동원단체를 아우르는 사회정치의 주도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1988년들어 사회정화위원회는 관계부처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공항, 호텔, 경기장, 관광지, 고속도로, 시장, 관광기념품 판매점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친절, 청결, 질서 등의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는 경우 관련부처와 연계하여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서울올림픽 개막 2일전인 1988년 9월 15일부터 폐막일은 10월 2일까지 승용차 2부제를 시행, 서울 시내 자가용 승용차 중 절반만 운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캠페인은 은 총 94%의 이행을 보일 정도였다(사회정화위원회 1988, 130-149).

한 저항적 언론은 “관제 마스크를 통해 끊임없이 반복선전되면서 대중 세뇌의 핵으로 등장하여 대중을 그야말로 ‘입만 병긋하면 86·88’을 읊조리는 백치와 같은 존재로 탈바꿈”시켰다고 말한 바 있다(『월간 말』 1986년 9월 30일, 21). 이상의 관제캠페인을 살펴본다면 이 표현은 그다지 과하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다. 범민족올림픽추진위원회에 이어 올림픽새마을운동, 그리고 서울시까지 투입되어 끊임없이 관제

---

회정화위원회가 질서분야를, 새마을운동이 환경미화 분야를 분담하기로 하였다(사회정화위원회 1988, 141)

캠페인에 시민사회를 대규모로 동원했으니 말이다.

그 뿐이 아니었다. 사회정화위원회는 대규모의 인원을 동원하여 ‘계도’라는 이름으로 일상적 감시체제를 만들어냈다. 비록 강력한 처벌에 이르지 않는 않지만, 대중들은 공공 공간에서는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동을 감시하는 시선이 넘쳐흐른 것이다. 정부와 지방행정기구, 그리고 여러 개의 관제캠페인 기구를 활용한 발전국가는 올림픽을 사회정치 담론과 시선을 몰고오는 태풍으로 만들었다. 1980년대 대중은 담론과 시선의 홍수 속에서 1980년대를 자신의 습속을 점검하면서 살아가게 된 것이다.

#### 4) 도시미화와 시선의 훈련

국가는 관제시민사회를 도시미화에도 대규모로 동원했다. 올림픽새마을운동, 범국민 올림픽추진위원회의 구성원들을 도시의 조경, 청소 등에 전방위적으로 활용했던 것이다.<sup>102</sup> 그리고 단순한 청소가 아니었다. 이는 청소에 참가한 이들로 하여금 ‘선진국민’의 시선으로 경관을 바라보게 만드는 훈련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것이었다.

1970년대 당시 새마을운동은 지방개량이나 농촌의 마을 인프라 정비 사업 등으로 유명하다. 그래서인지 올림픽을 앞두고도 도시미화사업에 어느 관제조직보다도 많이 동원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윤충로의 연구에 등장하는 한 구술자는 “1980년대는 88 서울올림픽이 너무 컸어요. ... 새마을지도자들이 말도 못하게 동원돼서 전국토공원화사업을 거의 하다시피 했죠.”라고 증언한 바 있다(윤충로 2016, 215). 그만큼 새마을운동에는 올림픽이 중요한 사업이었고, 올림픽을 대비한 도시미화 사업에는 새마을운동 조직이 광범위하게 동원되었다.

이들이 도시미화 분야에서 목표한 것은 “깨끗하고 질서 있는 거리,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국토환경, 고유전통과 문화복지가 조화된 주거환경 조성”이었다. 발전국가가 올림픽을 통해 추구했던 사회질서와 통합, 문화자본과 경제자본의 연출 등을 암시하고 있는 대목이다. 그리고 전국조직망을 활용, 서울만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미화’ 작업을 벌여나갔다.

구체적으로 이들의 도시 및 국토미화 작업이 수행한 활동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단, 이들의 보고서 상 수치가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다고 판단<sup>103</sup>, 숫자를 빼고 활동내용만을 소개하기로 한다. 먼저 1982년부터 1985년까지 이들의 활동은 이런 것들이었다. ① ‘무질서하고 불량’한 간판 및 광고물의 정비, ② ‘외국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뱀탕, 토룡탕, 보신탕집의 ‘도로가시지역’ 바깥으로의 이전, ③ 철도연변, 간선도로, 관광지, 고속도로 변 불량건물 및 시설물 정비, ④ ‘전근대적이고 비위생적인’

<sup>102</sup> 사회정화위원회 역시 도시미화 활동에 참여했지만, 그보다는 대중들의 습속에 대한 ‘계도’나 캠페인 활동이 많았다. 그래서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sup>103</sup> 일례로 매월 두차례 진행된 ‘새마을청소’의 경우 연인원 8천만명이 참여했다고 보고하고 있다(내무부 1983, 2560. 한국의 인구가 모두 참여했다는 걸 전제로 한 것처럼 보인다.

농촌변소 개량사업 및 농촌주택 개량, ⑤ 도시 뒷골목 포장 및 하수구 공사, ⑥ 도심 내 공한지, 관광지, 고속도로, 국도, 철도변 식수 ⑦ 관광지, 고속도로, 국도, 철도변 꽃길 조성 ⑧ 월 2회 새마을 청소(내무부 1982, 244-5; 1983, 255-7; 1984, 270-2; 1985, 130-5). 1986년에는 성화봉송로 주변 지역의 주택개량, 담장개량, 진입로포장, 소공원 조성, 가로화단, 공한지 식수, 꽃길 조성이 추가되었고(내무부 1986, 135), 87년에도 주택, 담장, 고물상, 하천, 제방 등에 대한 정비와 더불어, 소공원 꽃길, 가로수 식재 등을 통해 1988년의 성화가 지나갈 길을 미리 ‘미화’하는 사업을 수행했다(내무부 1987, 186).

추진엘리트들은 주로 서울의 건조환경을 바꿔 경제자본과 문화자본을 경관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올림픽을 매개로 한 도시개조 작업을 수행했다. 반면에 새마을운동은 서울보다는 지역에서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1970년대부터의 활동에 근거하여 서울만 아니라 전국토를 대상으로 그 경관을 바꾸는 작업을 맡았기 때문이다. 지역에서는 물론 서울과 같은 건조환경의 대대적 변화는 없었다. 시민사회가 동원되어 청소, 식수, 꽃길조성, 소공원조성 등 위에서 나열했던 수식어대로 서울 이외 지역 역시 ‘질서’와 ‘청결’, 그리고 ‘위생’이 확보되어 있는 풍경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사회정화위원회와 범민족올림픽추진위원회 역시 도시미화 작업에 동원되었다. 물론 이들의 주활동은 주로 습속개조에 있었다. 사회정화위원회는 캠페인과 감시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습속을 개조하고자 했고, 범민족올림픽추진위원회는 다양한 홍보활동과 교육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습속을 개조하고자 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이들은 청소활동을 통해 도시를 미화하는 활동도 병행했다. 주로 식수, 식재, 환경 정비 및 개량 등의 사업을 담당했던 새마을운동과도 차별화되는 대목이다. 사회정화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청소활동을 펼쳤다면, 범민족올림픽추진위원회는 이벤트화시켰다는 점도 둘 사이에서 드러나는 차이이다.

사회정화위원회는 이미 1980년대 초부터 각종 단속 및 계도활동과 더불어 청소활동을 했다. 제2기 발전국가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교통질서, 행락질서, 상거래질서 중 행락질서의 경우 버스터미널, 사찰, 유원지, 해수욕장 등에 ‘질서의 날’을 설정하고 사회정화위원들이 현장계도와 질서저해사범 신고뿐 아니라 오물을 수거하는 활동을 해온 바 있다. 1988년 6월 15일에는 ‘전국질서확립종합캠페인’이라는 이름으로 136만명이 주요 도로와 공원, 공공시설물을 청소한 바 있다(사회정화위원회 1988, 135; 144).

하지만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이 다가오면서 이들의 활동에서 눈에 띄는 것은 이른바 ‘점검’이라는 이름으로 감시자가 되어 도시경관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점이다.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감시의 시선을 갖도록 하는 일은 그 전부터 존재했다. 앞장 말미에서 언급했던 주방공개제가 그것이었다. 1985년 4월, 보건사회부 장관은 ‘생활올림픽’이라는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식당과 숙박업소 등의 위생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경향신문』 1985년 4월 4일, 11). 이 때 발표된 주방공개제란 주방을 바깥에서 볼 수 있게 한다면 손님들의 시선 하에서 식당들의 청결이 일상적으

로 감시됨으로써 위생 수준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서 나온 아이디어였다.

비슷한 원리가 도시미화에도 적용되었다. 1986년 6월 한달간 사회정화위원회는 주요관광지, 고궁, 전국체전경기장, 공항, 관광지, 성화봉송코스, 경기장소 등에 대한 이른바 ‘사전 질서실태 점검’을 실시한다(사회정화위원회 1988, 136-7). 1988년 3월 14일부터 27일까지 관광코스 질서 실태, 5월 17일부터 23일까지 전국 고속도로휴게소 실태, 6월 30일부터 7월 6일의 6대 도시 경기장, 경기장 주변, 관광지 실태점검, 8월 3일부터 5일까지의 서울지역 택시 실태점검 등 지속적으로 ‘실태점검’이라는 이름의 감시활동이 반복되었다(사회정화위원회 1988, 114-6). 모든 사회정화위원이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 활동을 통해 관제 시민사회의 구성원들을 관광객의 시선이나 발전국가 엘리트들의 시선을 내면화하는 연습을 시켰다고 볼 수 있다.

범민족올림픽추진위원회 역시 청소활동을 통해 환경을 미화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1985년 중앙위원회가 만들어진 이후 87년까지는 간헐적인 청소 활동을 통한 ‘도시미화’작업이 이어졌다 회원들은 화장실 청소, 가로 화단 조성, 잠수부 및 해녀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한 수영만 요트경기장 바다청소, 하천 청소 등의 활동을 비정기적으로 수행했었다(범민족올림픽추진위원회 1988, 51-53).

하지만 1987년부터는 달라진다. 위원회는 도시미화작업을 정기 이벤트화시키는 한편, 이를 통해 감시자의 시선을 시민들에게 내면화시키고자 했다. 1987년부터 ‘우리강산 푸르게푸르게’라는 이름으로 한강이 자리한 4개 시도지부에서 한강보호운동을 시작하면서 청소활동을 수행했고, 88년에는 봄에는 이른바 “깨끗한 집 콘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약 180개 응모 음식점의 청결도를 검사, 시상하는 이벤트를 가졌다. 1987년부터는 ‘사랑의 꽃길 가꾸기’라는 이름으로 약 5,000명이 성화봉송로에 꽃을 식재했다. 무엇보다도 상징적인 이벤트는 1988년 4월 15일부터 올림픽까지 매일 15일마다 있었던 ‘호돌이의 날’ 행사였다. 수천명의 회원이 공원과 거리, 하천과 화장실을 청소하고 벽보를 제거하는 활동 및 가두캠페인을 KBS와 MBC가 실황 중계하는 행사였다(범민족올림픽중앙추진협의회 1988, 143-163).

추진엘리트들은 이렇게 대규모의 관제시민사회조직으로 하여금 도시미화라는 이름으로 청소와 점검활동을 반복하게 만들었다. 때로는 외국인을 대동하기도 했다. 담론으로서만 아니라 실천을 통해서도 도시를 감시자의 시선이자 외국인의 시선으로 대하도록 만들고자 했던 것이다.

## 2. 중산층 습속의 장려

### 1) 스포츠의 일상화

스포츠공화국이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전두환 정부는 스포츠를 일상화시켰다.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때문만이 아니었다. 1982년부터 1984년까지 프로야구와 프로씨름, 그리고 프로축구 리그를 창단했고, 직장체육과 사회체육도 활성화시켰다.

보통 1980년대 스포츠의 활성화 정책은 ‘3S(Sport, Screen, Sex)’정책 중 하나로 꼽히면서 대중의 우민화 수단 혹은 탈정치화 수단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하지만 스포츠 정책 전반을 보자면 그 보다는 1970년대부터 국가가 계속 강조해오던 ‘여가선용’의 수단으로 해석하는 편이 더 설득력있다.

여가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본 것처럼 당시 국가는 ‘퇴폐가요’를 없애겠다면서 팝음악을 라디오방송에서 퇴출시키고 민요나 군가로 이를 대체하는 등의 통제적 방식으로 대중문화에 개입한 바 있다(『경향신문』 1975년 12월 9일, 8). 뿐만 아니라 건전한 여가를 보급하기 위해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공장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보급하는데도 관여했다(한국여가문화지도자협회, 미상).

앞 장에서도 봤듯이, 1980년대 정부는 자신들이 조우하고 있는 사회현상이 도시사회와 산업사회임을 인식했다. 이에 따라 대중의 여가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프로야구 설립을 주도했던 이용일의 증언에 의하면 프로야구의 설립이 처음 논의된 자리는 국민 정서 및 국민 여가선용에 관한 청와대 수석회의 자리였다(강지웅 2006, 85). 최근 연구는 프로야구를 ‘국가의 여가 기획’으로 정의했는데(심은정 2016), 1970년대부터 대중의 여가에 개입해온 발전국가임을 생각한다면, 이는 타당성을 지닌다 판단된다.

이러한 프로스포츠의 등장을 가능케한 조건은 1970년대 이후 재벌기업의 성장이었다. 조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는 프로스포츠를 급조했다. 그래서 관중 및 방송중계를 통한 수입에 주로 의존하는 서구의 프로스포츠에 비해 턱없이 적은 관중수로 인해 프로스포츠는 적자를 면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만에 리그가 만들어져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이들 프로구단들이 적자를 감당할만한 재벌기업의 소유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 위에서 1983년에는 프로축구와 프로씨름이 생겨났고, 83년 겨울부터 농구대잔치와 배구의 대체전이라는 이름으로 겨울철 스포츠의 경기수가 대폭 늘어났다.<sup>104</sup>

<sup>104</sup> 1970년대 최고 인기종목 중 하나였던 배구의 경우 1960년대만 하더라도 다른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군과 공기업(남자부)이나 은행(여자부)이 팀을 소유했다. 1970년대 초입부터는 호남정유, 태광산업, 선경합섬, 대농(미도파) 등, 한일합섬, 대우실업 등의 기업들이 여자배구팀을 창단했다. 그리고 82년 국제상사, 후지필름, 효성 등이 기존의 공기업 및 은행 팀들을 인수하면서 여자배구는 대부분 사기업 소유가 되었다. 남자배구는 이보다 느렸지만, 1976년 금성통신을 시작으로, 82년 고려증권과 현대자동차서비스 팀이 만들어지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실업배구’의 틀이 만들어졌다(대한배구협회 1994, 135; 223; 234; 259; 322).

농구 역시 이와 비슷하다. 1960년대에는 한국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의 국영은행들과 군(남자부), 상업은행, 조흥은행, 제일은행 등 민영은행(여자)이 팀을 이루었다. 1970년대 초반부터 중반에 걸쳐 대기업체들이 농구팀을 만들기 시작해 코오롱, 선경직물, 한국화장품, 태평

이 시기에는 직장체육과 사회체육도 동시에 강조되었다. 직장체육은 노사협조 및 생산성향상의 수단으로(『새마을스포츠』 1986년 1월호, 60-62), 사회체육은 ‘국민화합’의 수단으로 각광을 받았다(『새마을스포츠』 1982년 4월호, 24-29). 그래서 정부는 직장 단위에서의 스포츠 이벤트 개최를 강조했다. 직장체육을 위해 국가는 5백인 이상 사업장 운동부 설치를 의무화했고(『동아일보』 1983년 8월 11일, 9), 1백인 이상 사업장에는 분기별 사내체육대회 실시를 의무화 했다(『경향신문』 1983년 11월 14일, 7). 이런 노동자 체육활동을 통해 직장을 ‘총화’하겠다는 것이 노동부의 계획이었다(“1982년도 주요업무계획”, 1982년 8월). 또한, 1983년도부터 3년간 노동부는 올림픽 준비사업의 하나로 전국근로자체육대회를 개최한다(“1983년도 주요업무계획”, 1983년 2월; “1984년도 주요업무계획”, 1984년 2월; “1985년도 주요업무계획”, 1985년 2월). 이때 이들이 내세운 목표는 “스포츠정신으로 노사협조분위기 조성,” “근로의욕과 생산성 향상” 등의 목표를 내세웠다(『매일경제』 1983년 9월 22일, 11).

여가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라는 틀에서 볼 경우 범민족올림픽추진중앙협의회나 사회정화위원회 등의 사회정치 기구들의 건전가요 등도 시야에 들어온다. 사회정화위원회는 1982년부터 85년까지 매년 건전가요 공모와 시상식을 가졌다. 정수라의 『아! 대한민국(1983)』을 포함, 김수철의 『젊은 그대(1984)』, 김연자의 『아침의 나라에서(1985)』, 인순이의 『아름다운 우리나라(1985)』, 남궁옥분의 『서로 믿는 우리마음(1982)』, 방미 『나의 사랑 대한민국(1985)』 등이 1982년에서 1985년사이 선정된 건전가요들이었다(경향신문, 1984년 8월 8일, 12; 매일경제, 1985년 11월 26일, 12). 이들 중 몇몇 곡은 큰 인기를 얻었고, 건전가요를 타이틀곡으로 삼은 가수도 하였다(이영미 1995, 260). 하지만, 사회정화위원회가 이 노래들을 확산시키기 위해 학교, 공장, 행정기관, 방송국 등에 건전가요 앨범을 여러 차례 배포했고, 건전가요 합창경연대회를 여는 등의 노력을 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사회정화위원회 1988, 336; 360; 367; 392). 범민족올림픽추진위원회 역시 1987년 말 건전가요 14곡을 모은 테잎 5천개를 제작하여 산하기관에 배포하기도 하였다(범민족올림픽추진위원회 1988, 116). 대중가요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으로 발전국가는 여가에 개입하였다. 한강개발을 상찬한 가사를 담은 『아! 대한민국』 나 올림픽 주제가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아침의 나라에서』 같은 노래들은 그 자체로 올림픽을 준비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다<sup>105</sup>.

범민족올림픽추진중앙협의회 여가에 개입하기 위한 몇 개의 이벤트도 개최했다. 1987년 5월 30일 ‘여가선용 큰잔치’라는 행사를 열고 전통놀이와 춤을 레크레이션에 활용하고 서울올림픽 응원가를 보급하는 행사를 열었고(범민족올림픽추진중앙협

양화학 등의 여자농구단을 만들었다. 1977년과 78년 삼성과 현대가 남녀 농구팀을 만들면서 대기업 중심의 실업 농구의 틀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대한농구협회 2008, 166; 187-190).  
<sup>105</sup> 『아침의 나라에서』는 『아! 대한민국』의 작사가인 박건호가 만든 노래로, 문화방송과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공모한 “서울 올림픽 노래” 당선작이었다(『경향신문』 1985년 11월 22일, 12).

의회 1988, 89), 같은 해 7-8월 사이에는 총 32개 주요 도시를 돌면서 ‘올림픽 새놀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행사를 가졌다(범민족올림픽추진중앙협의회 1988, 96). 참가자는 각기 수천명이어서 그렇게 많다고는 볼 수 없지만, 올림픽을 명분으로 여가에 대한 발전국가의 개입이 지속적으로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의미지울 수는 있을 것이다.

올림픽을 준비하던 이 시기 국가에게 스포츠가 ‘여가선용’이라는 의미로만 받아들여졌던 것은 아니다. 스포츠 이벤트는 올림픽의 예행연습처럼 여겨졌고, 이에 따라 국가는 경기장에 대한 질서가 무던히도 강조했다.

사회정화위원회는 1982년부터 거리질서, 상거래질서, 공공질서에 더하여 ‘경기장 질서’ 항목을 주요 사업으로 추가하였다. 이 항목이 추가된 것은 86·88 양 행사 외에도 “주요 스포츠 경기들이 TV화면을 통해 중계방송 됨에 따라 부정선수 시비, 판정불복 시비, 선수·임원 폭력, 음주관중 난동 등 무질서한 작태가 공공연히 실황 중계되어 국민의 질서의식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였다. 대중의 습속에 부정적인 악영향을 미칠 존재이자 올림픽을 저해하는 존재로 경기장의 무질서 및 이를 일으키는 이를 상정한 것이었다. 이러한 판단 위에서 사회정화위원회는 경기장 난동의 구속수사 원칙 등을 포함, 경기장 질서확립 종합대책을 1982년 8월에 수립했다(사회정화위원회 1988, 109).

국내에서 열리는 가장 큰 스포츠이벤트인 전국체전이 중요한 ‘시범장’이었다. 1982년부터 전국체육대회에서는 질서가 무엇보다도 강조되었다. 1982년 전국체전 준비위원회에는 경기장질서확립위원회를 따로 설치하면서 경기력 향상보다 질서를 우선이라고 할 정도로 질서문제에 신경을 썼다(동아일보 1982년 9월 27일, 8). 전두환도 개회식에서 전국체전이 “질서의식을 생활화하는 뜻깊은 다짐의 광장”이 되어야 한다면서 스포츠 이벤트의 의미를 새로이 규정하였다(매일경제 1982년 10월 14일, 1).

이 때부터 전국체전은 ‘질서’라는 개념이 대량으로 유통되는 장이 되었다. 1983년 도 소년체전은 구호를 “선진질서, 선진체전, 선진조국”으로 바꾸었고(경향신문 1983년 5월 21일, 1), 인천에서 열린 전국체전의 구호는 “화합된 새 기상, 다져질 새 질서, 펼치는 새 조국”이었다(대한체육회 1983). 대회 중 선수간 난투극이 벌어지자 한쪽에서는 “질서체전에 먹칠”이라는 비난이 일고(매일경제 1983년 10월 11일, 1), 다른 한편에서는 “경기장 질서에 대한 과민반응”이라며 반발이 일었다(동아일보 1983년 10월 12일, 9). 그럴 정도로 전국체전을 둘러싼 질서담론은 지속적으로 연표되었던 것이다.

전국체전은 각종 무질서를 감시하는 시선이 존재하는 공간이기도 했다. 사회정화위원회는 1982년 마산에서 열린 전국체전을 시작으로 전국체전과 소년체전이 개최될 때마다 관계부처를 모아 질서기획단을 운영하면서 특별관리를 했다(사회정화위원회 1988, 110-111). 현장계도라는 이름으로 감시활동을 편 것이다. 사회정화위원만 아니라 도시새마을운동 측에서도 현장계도 활동에 참가했다(새마을스포츠 1982년

11월호, 24). 전국체전을 비롯해 크고 작은 스포츠이벤트를 통해 사회정화위원회와 관계 기관은 차례대로 입장, 쓰레기 치우기, 건전한 응원하기, 경기장 난입금지, 공병투척 금지, 주류 유리병 지참 금지 등의 사항을 두고 1982년부터 7년간 단속활동을 벌였는데, 이에 참가한 인원만 해도 158,058명이었다(사회정화위원회 1988, 110).

눈여겨볼만한 점은 매년 전국체전이 끝날 때마다 대부분 질서체전이었던 상찬이 따랐다는 것이다. 1982년과 1984년 전국체전이 끝나고 나서 도시새마을운동 측에서는 “경기장, 거리, 상가, 버스터미널, 기차역 등. 어느 곳에서도 시민들의 행동엔 흐트러짐이 없었다”거나(『새마을스포츠』 1982년 11월호, 24), “경기장과 거리 어디서도 무질서는 눈을 크게 뜨고도 찾아볼 수 없었다”면서 경기장과 개척도시의 질서를 상찬했다(『새마을스포츠』 1984년 11월, 29). 막상 스포츠이벤트를 치렀을 땐 질서문제가 없었음에도 계속해서 질서문제에 대해서, 즉 대중의 습속에 대해서 회의적인 견해를 거두지 않았던 것이 발전국가의 지속된 생각이었던 것이다.

프로야구를 포함한 프로스포츠의 경기장 역시 질서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으며, 그랬기에 계속해서 경기장과 그 주변에 대한 감시의 눈길이 존재했다. 1983년 4월 사회정화위원회는 프로야구의 질서 감시를 위해 잠실경기장에 질서기획단을 설치했고(사회정화위원회 1988, 327), 6월 2일 경기도중 심판을 폭행한 삼미슈퍼스타즈의 김진영 감독이 하루 만에 구속되는 강력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중앙일보 1983년 6월 3일, 7). 1984년 4월에는 프로야구 6개 구단 이사, 감독, 주장 등을 불러 경기장 질서 확립대책 회의를 열었고, 8월에는 프로야구, 축구 등 주요 경기마다 질서기획단을 편성하여 운영하였다. 1987년 2월에도 각 구단 관계자들과 사회정화위원회가 협의를 통해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통한 경기장 질서요원 운영, 경기장 주변 주류판매 제한 등을 논의했다(사회정화위원회 1988, 352; 358; 431).

## 2) 소비문화의 활성화

1980년대는 소비문화가 본격화된 시대로 일컬어진다. 이른바 ‘3저호황’으로 일컬어지는 저환율, 저금리, 저유가는 1980년대 초 한국 경제가 조우했던 위기를 넘어 빠른 성장을 하는 데 중요한 외적 변수가 되었다. 그리고 올림픽이라고 하는 행사가 그 자체로 심리적 효과를 가져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1980년대 소비의 증가는 경제의 성장과 자연발생적 심리적 효과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컬러TV를 비롯한 대중매체의 소비 자극, 서울의 다핵도시화가 만들어낸 소비공간의 확장 등, 소비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한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이 분명 존재했고, 올림픽은 이러한 정책이 만들어지게 한 직간접적 원인이었다. 1980년대 소비문화의 활성화 과정에도 국가의 영향력은 존재하는 것이다.

컬러TV 방송은 1970년대 후반부터 여러 차례 이야기된 사안이었다. 당시 국내 가전업체들은 수출용 컬러TV를 이미 제작 중에 있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컬러TV 방송이 이뤄질 것이란 이야기가 계속 회자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수 차례에

걸쳐 컬러TV 방송은 ‘시기상조’임을 밝혔다(동아일보 1975년 9월 12일, 1; 매일경제 1977년 9월 23일, 1; 경향신문 1979년 8월 3일, 1). 주무부처인 문화공보부의 장관과 여당 등이 반대의 이유로 든 것은 컬러TV방영이 저소득층에게 위화감을 불러일으키고, 소비를 조장한다는 것이었다(동아일보 1978년 2월 22일, 1; 1978년 3월 7일, 1). 이는 1980년 초까지 지속되던 기조였다.

그랬던 컬러TV의 방송과 판매는 1980년에 전격 결정된다. 국내 가전업체들의 TV 수출이 부진하자 부총리가 국내 판매를 위해 컬러TV 판매를 제안했고, 최규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보위는 이를 허가해 주었다(주태산 1998, 173-4). 그리고 1980년 12월 1일 KBS가 수출의 날 기념식을 컬러로 방영하면서 컬러TV방송은 시작된다. 이후 컬러TV는 매우 빠르게 확산된다. 불과 1년 만에 약 50만대의 컬러TV가 판매되었는데, 이 속도는 계속 유지되었다. 이미 1980년대 중반 당시 컬러TV가 흑백TV를 거의 교체한 것으로 파악될 정도였다(강준만 2003a, 277-278). 컬러TV가 소비문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하지만 컬러TV 방송이 소비를 자극했고, 1980년대 소비문화의 활성화에 기여했음은 이미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주장이다(강준만 2007, 553; 전완길 외 1995, 126).

1980년대의 다핵도시화와 서울시의 상업공간 분산 역시 1980년대 소비문화의 활성화에 기여했다. 서울시는 1960년대 이후 반복해서 ‘사대문 안’으로 일컬어지는 서울의 도심 공간에 모인 행정, 업무, 상업 등의 기능을 분산시키는 작업을 계획했다. 1965, 66, 70, 72년의 계획을 통해 서울을 1개의 도심과 6~7개 부도심으로 재편하고, 부도심을 상업중심지로 만들려고 했다(서울특별시 1965, 114-5; 1966, 59; 서울특별시 2001, 83),<sup>106</sup> 1978년부터는 영등포와 영동의 위상을 격상시켜 도심과 함께 3개의 지역중심으로 만들려고 하였다(김선웅 2015년 5월 8일). 그리고 서울의 다핵화라는 기조에 맞춰 서울시는 1972년부터 도심지에 백화점의 신·증설을 제한했다. 하지만 여의도(1976)와 영동(1979), 청량리(1978)에 백화점형 쇼핑센터가 1개씩 신설되었을 뿐이다(김병도·주영혁 2006, 151). 하지만 소비활동은 여전히 도심지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sup>107</sup> ‘영동’은 1980년대 초까진 주거기능만을 갖춘 ‘베드타운’이라 불리기 일쑤였다(『경향신문』 1977년 4월 4일, 1; 『동아일보』 1981년 10월 8일, 3; 『동아일보』 1983년 7월 14일, 9).

<sup>106</sup> 65년 계획의 6개 부도심 후보지는 영등포, 은평, 송인, 망원, 천호, 강남이며, 66년 계획의 6개 부도심 후보지는 창동, 천호, 강남, 영등포, 은평, 용산이었다. 70년과 72년의 7개 부도심은 미아, 청량리, 천호, 영동, 영등포, 화곡, 은평이었다.

<sup>107</sup> 그래서 롯데그룹은 1979년 ‘롯데쇼핑’이라는 이름으로 규정을 우회하여 백화점을 개점했다(서여림·김기호 2016, 15).



[그림 10] 서울시의 유통시설 설치계획  
(출처 : 『동아일보』 1983년 1월 21일, 11)

1980년대 들어 서울시는 올림픽을 대비하여 부도심에의 적극적인 유통시설 신설을 추진했다(서여림·김기호 2016, 15-6). 1982년도에 올림픽이 열리는 잠실지구에 대단위 쇼핑지구를 계획했고(『매일경제』 1982년 6월 23일, 11), 1983년에는 86년과 88년의 양대 행사를 위해 서울시는 도심 다핵화와 대형유통업체의 부도심 유치를 계획했다(『동아일보』 1983년 1월 21일, 11). 1984년도에는 88년을 목표로 총 11개의 대형 유통시설을 부도심권에 신설하기로 했다(『매일경제』 1984년 2월 15일, 11). 그 중 대다수는 [그림 10]과 같이 강남 지역에 위치했다.

이러한 정책에 기초하여 1980년대 들어 백화점의 수는 상당히 늘어나게 된다. 1960년대 후반 이후 도심에 위치한 3개 백화점이 전체 백화점 매출의 상당수를 차지했던 것과 달리, 뉴코아(반포, 1980), 여의도(1981), 영동(논현동, 1983), 신세계(영등포, 1984), 현대(압구정, 1985), 그랜드(대치동, 1986), 신세계(미아, 1988), 현대(무역센터, 1988), 롯데(잠실, 1988) 등 1980년대에 이르러 백화점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게 된다(김병도·주영혁 2006, 166).

호텔이라는 소비공간 역시 올림픽으로 인해 1980년대에 대거 확산되었다. 이미 1979년 단계에서 서울시는 올림픽 유치계획에 맞춰 호텔 신축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동아일보』 1979년 11월 23일, 7), 실제로 올림픽 이후 정부는 자금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으로 호텔 신축을 장려했다(『매일경제』 1981년 11월 5일, 11). 그리고 이들 중 상당 수는 백화점과 마찬가지로 강남에 자리를 잡았다. 그 중 하나인 라마다르네상스 호텔의 경우 “88 서울올림픽을 개최함에 있어 외빈숙박

시설 부족문제를 타개코저 한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한다는 취지 아래” 호텔을 신축했음을 명시하였다(김미영 2016, 8).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올림픽은 백화점과 호텔의 확산, 강남의 개발, 중산층의 성장, 소비문화의 활성화를 시간적 및 공간적으로 연결해주는 중요한 고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실행은 늦어졌지만, 1983년 상공부가 내놓았던 ‘국민차 계획’ 역시 1980년대 정부가 중산층 육성과 소비문화의 활성화에 개입하였음을 보여준다. 상공부는 1982년 1월, 독일이나 일본에서 그랬던 것처럼 낮은 배기량과 저렴한 가격의 소형차 생산을 국가가 주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때 상공부는 이 차량을 ‘도시 중산층’을 겨냥한 차량이라 정의했다(『매일경제』 1983년 2월 1일, 7). 1973년도에 국민차 도입이 논의될 당시 내걸었던 이유가 국산화와 자동차공업 육성이었던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다(『매일경제』 1973년 10월 30일, 5).

### 제 3절 인정경관의 조성

경관이란 시각적 관찰 및 소비의 대상 된 물리적 환경을 일컫는다. 물리적 환경이 시각적 소비의 대상이 되면서 의미 형성 및 상징화 등 다양한 문화적 차원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그 물리적 환경을 경관이라 부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관은 관련된 주체들의 수행(performance)속에서 창조되고 소비되고 재창조된다. 어떤 주체(관광객)들은 경관을 소비하고, 또 어떤 주체들(장소 생산자)은 경관을 창출한다. 따라서 경관의 조성이라 함은 물리적 환경의 조성이 특정 문화적 의미의 창출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재현(representation)’의 전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존 어리 2014, 189-195; 453-484).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정부와 서울시, 올림픽조직위원회는 다양한 경관의 조성과 개입에 관여했다. 이를 통해 한국의 경제발전을 가시화시키는 동시에 부르디외적 의미에서의 문화자본을 경관화하고자 하였다. 경관을 통해 국제사회로부터 문화적으로 인정을 획득하고자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올림픽을 매개로 수행된 도시개조의 한 축은 ‘인정경관(respectable landscape)’을 창출하는 것이라 칭할 수 있을 것이다.

#### 1. 발전주의 도시성과 올림픽 도시

##### 1) 발전주의 도시성의 지속과 변형

발전주의 정치는 도시 공간에 그 흔적을 남긴다. 국토공간을 둘러싼 계획과 자원의 배분 등과 관련하여 발전주의적 정치기조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도시사회학의 영역에서는 이를 발전주의 도시성이라 표현하는데, 크게 보아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① 산업화를 위한 가용자원을 건조환경에 선택적으로 투자, ② 권위주의 정부와 재벌 사이의 개발연합, ③ 서울과 같은 인구 집중 도시의 경우 불량주택지가 형성되고 존치, ④ 중산층 대상의 신규주택 건설, ⑤ 부동산 자산의 상품화 및 지대이익 추구. 지리학자 신현방은 김수현, 박배균, 장세훈, 김동완, 윤일성 등의 최근 논의를 보아 이상의 다섯가지로 발전주의 도시성을 정리하였다(신현방 2016, 6-7).

올림픽 도시 개조 과정 역시 발전주의 도시성에 기초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가의 계획에 의한 선택적 공간 투자라는 특징은 1980년대 올림픽을 거치면서 산업단지에서 주거지 및 문화시설 등으로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960년대~70년대 발전국가는 남동임해공업단지를 중심으로 산업활동을 특정공간에 집중시켰다. 그러면서도 ‘민족’ 담론을 앞세워 이데올로기적으로 국토공간을 균질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지역간 불균형이 대중의 시야에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했다(박배균 2012; 97-99). 특정 지역의 국가 전체의 경제적 부를 창출한다는 논리로 사람들을 설득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한 한편으로 발전국가의 공간선택성은 산업단지만 아니라 강남 같은 주거지역에서도 나타났다(지주형 2016, 324).

또한, 올림픽을 매개로 한 1980년대의 도시개발은 70년대에 존재했던 주거지에 대한 공간선택성과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활용했던 국토공간 이데올로기를 절합시켰다. 국가는 올림픽 시설이 한국의 경제자본과 문화자본을 상징하는 공간이 되도록 만들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경관은 지역적 차원에서 볼 때 선택적으로 연출되었고, 이 경관 창출을 위해 다른 지역의 자원을 끌어다 쓰기도 했다. 국가에 의한 불균등한 경관조성 과정이었던 것이다. 올림픽은 작게는 잠실, 넓게는 서울을 선택적으로 경관연출의 대상으로 삼았다. 우선, 올림픽을 통한 도시개조 과정에서 발전국가의 추진엘리트들은 다시 한번 잠실을 ‘올림픽타운’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1970년대 강남 개발처럼 대상 공간에 대하여 평면을 계획하여 제공하는데 머무르지 않았다. 도시설계를 통해 테헤란로부터 강남에 이르는 평면 위에 만들어질 경관을 구체적으로 계획했고, 잠실지구에 대해서는 평면 위에 만들어질 주거지에서 살아갈 이들의 계층까지 설계해버렸다. 한강개발과 도심재개발사업, 그리고 불량주택재개발사업 등을 통해서 서울의 경관을 대폭 바꿔버렸다. 이것만 해도 자원의 차등적 투자가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국가의 자원동원 및 차등적 투자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일화가 있다. 올림픽공원과 아시아공원이 바로 그런 경우다. 이 공간들은 그 상징성으로 인해 1986년까지 완성된 경관이 연출되어야 했다. 대통령은 1982년 4월 1일 “운동장과 선수촌에 대형식목을 이식하여 공원을 조성할 것”을 지시한다. 이에 따라 ‘참여의식 고취’를 명분으로 하여 서울을 중심으로 150km 이내에 존재하는 나무들을 기증받기 시작했고, 총 6,500주를 받아 3,900주를 올림픽공원에, 2,600주를 아시아공원과 종합운동장에 식재하게 된다(서울특별시 1987, 284-5). 올림픽을 위한 상징적 경관의 조성을 위해



국가는 타 지역의 나무들을 동원하여 이 공간에 이식한 것이다.

민족담론 아래 국토공간의 균질성을 내세워 불균등성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는 전략 역시 사용되었다. 발전국가는 올림픽을 계기로 한 대규모의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투자가 공공시설을 확충하고 국토 경관을 바꿀 것이라 말했다. 그리고 이것이 ‘복지향상’이라고 설명했다. 삶의 질에 대한 시민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줄 것이라는 논리였다(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1985, 60). 이런 설명에서 지역간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올림픽 시설들로 인한 ‘복지’ 효과는 시민과 국토 전공간에 균질하게 작용하는 것처럼 묘사된다. 발전국가에 의해서 올림픽시설들은 설게 당시부터 한국사회의 경제자본과 문화자본을 경관화하는 공간으로 설정되었고, 이를 둘러싼 담론 역시 이에 맞춰져 있다. 그래서 작게 보았을 때 올림픽시설과 잠실은 ‘서울’을 대표하는 장소이고, 넓게 보았을 때 한국을 대표하는 장소로 표현되었다. 이는 발전국가만 아니고 많은 언론들에 의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문화시설들 역시 마찬가지다. ‘문화민족’ 같은 수식어를 통해 내셔널한 차원에서의 동질성이 계속 환기되었던 것이다. 올림픽선수촌의 사례는 이 시설에 부여된 상징성이 갖는 이데올로기적 속성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선수촌을 지을 당시 추진엘리트들이 내세운 약속은 한국 주거에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것이었다. 올림픽선수촌을 통해서 실현된 새로운 형태의 공간배치나 스카이라인의 보편화를 약속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서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선수촌은 고유의 상징성을 얻게 되었고, 그로 인해 지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로 인근 지역과의 차별성을 띄는 공간이 되었다. 심지어는 올림픽 패밀리 아파트 마저도 인근 아파트와의 차별성이 형성되기까지 했다.

그 외에도, 올림픽의 도시개조가 이전 시기 발전주의적 공간개발 원리에 입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다른 사례들도 있다. 발전국가의 공간선택성은 지역적인 불균등성을 내셔널한 차원의 이데올로기로 치장하지만, 반대로 특정 업종의 산업시설을 특정 지역에 집적시킴으로써 그 공간이 국가의 발전을 재현하는 효과 또한 함의한다. 1962년의 울산을 시작으로, 포항, 구미, 안산, 여수, 창원에 차례로 마련된 공업단지가 대표적 사례다(이동배·감용하 1991, 208). 올림픽을 매개로 한 문화시설은 바로 이런 특징을 이어받았다. 올림픽을 통해 ‘문화민족’임을 보여줘야 한다는 동기는, 달리 말해 문화자본을 연출해야 한다는 동기는 내셔널한 규모의 시설들을 지역화시켰다. 뒤에서 살펴 볼 국립현대미술관, 예술의 전당은 모두 내셔널한 시설이 지역화된 사례다. 이것이 ‘지역화’되었다는 것은, 거대규모의 시설을 지을 공간 마련이 어려워짐에 따라 접근성이 현저히 약화되고 텅달아 일상성이 현저히 약화된 점에서 착안할 수 있다.

지식과 인적 차원에서도 1980년대 올림픽 도시개조는 이전 발전국가적 도시성에 맞닿아있다. 경관연출에 관한 지식은 1970년대로부터의 연속성을 지닌다. 1972년 당시 정부는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을 통해 10년에 걸쳐 경주를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청와대에 ‘경주종합개발단’을 설치한다. 이를 계기로 청와대에는 조경(landscape-architecture) 담당비서관 자리가 마련되었고, 시카고에서 활동하던 전

문가 오휘영을 초빙하여 1972년부터 79년까지 재직시킨다. ‘조경학회’ 역시 1972년에 만들어진다. 이 시기에 정부에 의해 선택된 전문가들이 도시경관 조성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을 세우는데, 그것은 평지 도시공원, 도보권 확보, 거리경관(가로수, 표시판, 간판)의 정비, 도시 휴식공간(소광장)의 확보 등을 골자로 하는 것이었다(김진희 2011, 61-62). 이것이 실제로 구현된 공간이 바로 1980년대 서울, 특히 잠실이였다. 올림픽공원으로부터 석촌호수와 아시아공원으로 이어지는 평지도시공원이 조성되었고, 테헤란로와 잠실로는 공원화된 가로의 조성으로 도보권이 확보되고 충분한 가로수를 확보하였으며, 서울시는 올림픽 준비사업으로 각종 표지판과 간판을 정비하였고, 도심재개발사업을 통해 대형건물에는 소공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만들었다. 제 1기 발전국가가 ‘중앙’에서 마련한 경관조성의 원칙은 제 2기 발전국가에 의해 선택된 공간에서 충실하게 구현되었던 것이다.

발전국가는 국가의 경제계획과 기업의 파트너십을 특징으로 한다. 국가의 산업고도화에 정책에 따라 대기업들은 주요산업을 할당 받았다. 건축가 역시 마찬가지였다. 국가의 계획에 따라 그 프로젝트를 할당받는 건축가 집단이 존재했던 것이다. 올림픽의 도시개조 과정은 ‘현상설계’를 통해 다양한 건축관련 전문가 집단을 참여시켰다. 외국인 건축가들은 여전히 참여하지 않았지만 말이다(안창모 2006, 79). 하지만 올림픽 관련시설에 있어서는 여전히 1970년대 국가와의 파트너십을 맺었던 전문가집단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김수근에 의해서 공간계획, 체육관, 주경기장이 설계된 잠실 종합운동장은 말할 것도 없고, 올림픽 공원 역시 행정수도 설계에 참여했던 강홍빈의 공간계획 하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독립기념관과 국립국악원은 김원의 기본계획과 설계로 만들어졌다. 한강을 설계한 것은 한국종합개발기술공사였다. 주요 건축물의 시공에 재벌 기업이 참여했던 사실은 말할 것도 없다. 발전국가의 국가-기업 파트너십처럼 국가-전문가 파트너십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

## 2) 올림픽 준비와 1980년대의 도시개조

올림픽은 제2기 발전국가가 1980년대 초 내세웠던 지역간 균형정책을 좌절시킬 정도로 광범위한 도시개조 프로젝트들을 불러일으켰다. 제 2기 발전국가는 사실 그 전의 발전국가가 총량적 경제성장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추구한 사실에 대하여 부정적이었고, 자신들은 방향을 수정할 것임을 공약한 바 있다. 1982년도에 시작하는 제 5차 5개년 경제계획의 이름을 ‘경제개발계획’에서 ‘경제사회발전계획’으로 바꾼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름을 바꾼 주요한 동기는 복지를 강조한다는 차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지주형 2011, 115). 제5차 경제사회발전계획이 발전국가가 만들어낸 사회문제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보여준다면, 제2차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은 발전국가가 만들어낸 도시문제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이 계획을 통해 발전국가는 산업의 지역적 균형개발, 인구의 지방정착, 복지수준 제고, 자연환경 보전 등을 목표로 내세웠다(국토교통부 2013, 31).

하지만 결과는 이러한 계획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서울시는 올림

픽을 계기로 대규모의 도시개조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의 산업화와 경제적 성공을 과시하는 공간으로 서울을 변모시켜 나갔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올림픽 경기장과 가까운 강남이 그랬다. 올림픽공원의 설계를 비롯하여 올림픽의 도시개조에 상당히 관여했던 강홍빈은 올림픽이 사회 내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이를 도시적으로 표현하게 될 것이라 보았다. “올림픽에 투입된 투자 때문에 서울과 타지역 사이에 불균형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고, “한강으로 나뉘어진 두 지역 사이에 불균형을 야기”했다고 평가한다(강홍빈 1988, 22-23). 이처럼 올림픽은 1980년대 서울의 도시개조를 추동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었고, 도시개조의 내용을 결정하는 데 있어 최우선의 고려사항이었다.

올림픽과 도시개조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긴밀했는지를 알려주는 한 대목이 있다. 1981년 9월 30일 바덴바덴 총회에서 올림픽 개최권을 따내고 돌아온 서울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오늘부터 나무를 심기 시작하면 7년 후엔 숲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라는 발언을 한다. 나무와 숲은 단순한 비유에 그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두가지를 핵심사업으로 꼽았다. ‘시민정신’을 익히는 일과 나무를 심는 일이었다(『경향신문』 1981년 10월 5일, 3). 6일 아침 건부회의 석상에서 서울시장이 지시한 것도 범시민적인 식수(植樹)운동을 전개하도록 하는 것이었다(『경향신문』 1981년 10월 7일, 11). 그가 김포공항에서 했다 ‘나무’와 ‘숲’ 발언은 대규모의 조경사업, 도시경관의 개조가 진행될 것임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던 것이다.

올림픽을 계기로 한 공간개조에는 서울시만 아니라 건설부와 보건사회부, 교통부, 문화공보부 같은 정부부처들도 깊숙이 관여하게 된다. 1982년 2월 초 정부 내에 설치된 ‘서울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가 만든 “88서울올림픽대회·86아시아경기대회 준비계획”과, 1983년 12월 확정된 올림픽 마스터플랜인 “1986아시아·1988올림픽대회 종합시행계획”을 통해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다.

1982년 초 정부의 ‘준비계획’에서 건설부는 올림픽을 위해 다음과 같은 준비업무를 과업으로 설정했다. ① 수도권정비계획 수립 및 추진(서울시와 협력), ② 관련 도시의 도시계획 재조정(내무부와 협력) ③ 수도권 인구 및 산업집중 억제(서울시와 협력) ④ 도로망 정비 및 확장(서울시와 협력), ⑤ 재개발지구 정비(내무부와 협력), ⑥ 상하수도 시설확충(내무부 및 시도와 협력). ⑦ 국립공원 편의시설 확충(시도와 협력), ⑧ 주정차장 확보, ⑨ 도로표지판 정비 및 국제화, 이상 9가지가 건설부가 과업으로 설정한 올림픽 준비계획이었다. 보건사회부의 경우에는 위생 및 청결 관련 시설들을 맡아, 여관의 고급화, 걸인 대책에 더하여 위생시설의 관리 및 개선을 맡았다. 주로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꾸는 것, 오물 처리방식을 바꾸는 것, 그리고接客업소(식당 등)의 위생을 관리하는 것 등이 과업으로 설정되었다. 교통부의 경우 공항 시설 보강, 올림픽 관광개발 계획 수립 등을, 문화공보부의 경우 ‘민족박물관’ 건립, 국립미술관, 국립국악원, 서울 및 지역박물관 증축 등 다양한 문화 공간 조성을 과업으로 삼았다. 이것만 보더라도 발전국가에게 올림픽은 수도권을 포함하여 전국 상당수의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계기임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다. 시민들로 하여금 주변환경을 정리(미화)하도록 하는 일까지 맡기면서, 단순한 건조환경만을 바꾸는 것

이 아닌 물리적 공간을 매개로 시민들의 습속을 바꾸는 것까지를 포괄하는 거대한 도시개조 프로젝트가 올림픽을 매개로 구상되었다(“88서울올림픽대회86아시아경기대회 준비계획”, 1982년 2월 2일).

1983년 마스터플랜이 과업으로 설정한 각종 도시개조 관련 정책은 보다 구체적이었다. 아래 표는 마스터플랜 중 서울 및 전국의 경관 개조와 관련된 부분들을 모아 정리한 것이다.

[표 14] 서울올림픽대비 정부 도시개조 사업 내역  
(출처 : “1986아시아·1988올림픽대회종합시행계획” 1983년 12월)

사업	담당부서	예산	내용
가로정비	서울시	640억원	가로등 교체 및 차도 및 보행로 정비
불량지구정비	서울시	161억원	도시재개발(124개 지구), 불량주택 개량(1433동)
미관저해물 정비	내무부, 서울시	비예산	광고물 정비(1점포 1간판), 옥상정비(무허가 건물 철거, 신규광고물금지), 노점상 금지(금지지역 및 허가지역 설정)
철도변정비	철도청, 서울시	427억원	철로변 건물 3,022동 정비, 89개 역사 개량, 주변환경정비 87km, 녹화 3,713a 등
녹화사업	내무, 문교, 총무, 서울시	628억원	주요간선도로 식수, 서울도심 조경, 경기장주변 대형목 식수, 학교 및 관공서 담장 나무올타리 조성 등
조형사업	서울시	10억원	감실 등 13개 지구 도시설계, 신축건물 조경 6천동
공원조성	서울시	10억원	아시아공원, 석촌호수공원, 올림픽공원, 도심지 휴게공간 조성
한강종합개발	서울시	1,243억	저수로조정, 고서부지 조성, 강변도로 확장사업,
식품접객업 소개선	보사부, 시·도	비예산	화장실 및 주변개선, 주문식단체, 혐오식품(뱀탕, 보신탕, 토룡탕 등 정비)
공중변소 시설개선	내무·건설·문공·서울시 등	318억원	서울시대 공·룡, 국립공원, 고속도로휴게소, 철도역, 주유소 등 3,810개 화장실 수세식화, 관리인 지정 의무화 등
국제공항 확충	교통부	2,110억	김포공항 국제선 확충
숙박시설	교통·보사, 서울시 등	비예산	관광호텔 9개(수도권 6개, 기타 3개), 고급여관 19개(수도권 6개, 기타 13개)
문화환경조성	문화공보부	602억원	국립중앙박물관 조성, 예술의 전당 건립, 국립현대미술관 신축, 국립국악당 신축, 고궁공원 조성

수십 개 사업에 수천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임을 알 수 있다. 1981년 당시 정부는 올림픽 직접경비 수천억이 들어가게 되자 올림픽 유치를 포기한 적도 있는데, 직접

경비만큼이나 다대한 예산이 다시 서울과 각 지역의 경관을 개조하는 데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 만큼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도 광범위했다. 올림픽은 1980년대 도시정책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거대한 도시개조 프로젝트의 대다수를 시행하는 주체였다. 이러한 사업 앞에서 서울시는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을 세웠다. ① 인구의 과도 집중 및 무질서한 시가지 확산 방지, ② 다핵적 도시구조 형성, ③ 지역균형개발 유도, ④ 한강의 레크레이션 및 문화공간화, ⑤ 역사문화유산의 보존과 도시미관 제고, ⑥ 시민을 위한 편익시설 안배, ⑦ 경기시설 신규투자 최소화, ⑧ 선수촌 및 기자촌의 주택 공급 활용, ⑧ 공개경쟁 설계 및 사용자(추진엘리트)의 심사과정 참여. 이상 8가지가 서울시의 기본적 방향이었다. 기본방향이라고는 하지만 올림픽 경기시설, 선수촌 및 기자촌, 한강개발, 역사문화유산, 도시미화 등이 올림픽 관련 도시프로젝트가 될 것임을 예고하는 글이다(류동주 1988, 7).

## 2. 경제발전의 경관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올림픽을 계기로 도시는 완전히 개조된다. 최대 72만명의 철거민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Davis(2007)의 연구와 잠실지역 개발과의 관련성을 상세히 보여주고 있는 김백영(2017)의 연구 모두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위 두 연구들을 통해 올림픽과 서울 도시개조의 관련성은 상당히 많이 밝혀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연구는 이들의 연구에 기초하면서도 이것이 발전국가의 경관 연출 전략 하에서 조성된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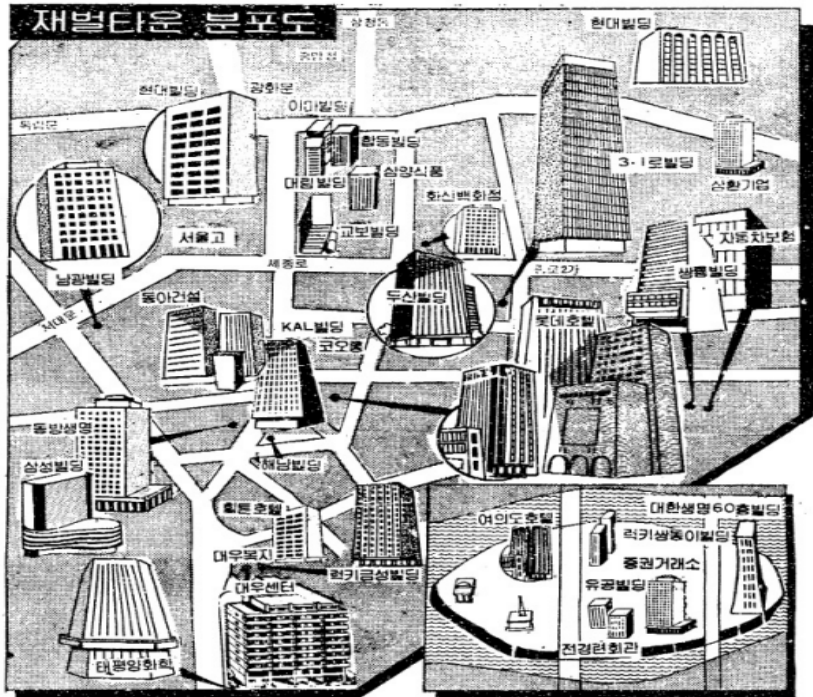
### 1) 도심재개발

먼저 도심재개발에 관하여, 발전국가는 다음과 같이 다섯가지 원칙을 세운다. ①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 대비, 주요 간선도로변과 도심의 중요지역 우선 정비, ② 시행자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 ③ 도시면모의 쇄신, ④ 신축건물의 미적 요소에 대한 심의, 건물주변 소공원 조성, ⑤ 올림픽 기간 중 공사장 울타리 교체 및 공사장 주변 화분 놓기(서울특별시 1990, 631). 많은 이들의 눈에 띄는 공간을 먼저 사업대상으로 삼고, 미적 요소를 중시하고 있다는 것, 올림픽 기간에는 공사장외벽을 화분으로 장식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발전국가가 도심재개발사업을 통해 경관을 창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도심재개발의 촉진을 위해 제도를 바꿨다. 1982년 2월 서울시는 76개의 도심재개발 구역을 발표했고, 사업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재개발공사의 설립을 검토하기도 했다. “88올림픽을 앞두고 서울의 모습을 쇄신”해야 한다는 명분에서였다(『동아일보』 1982년 2월 25일, 7). 공기업을 통한 재개발사업은 1982년 12월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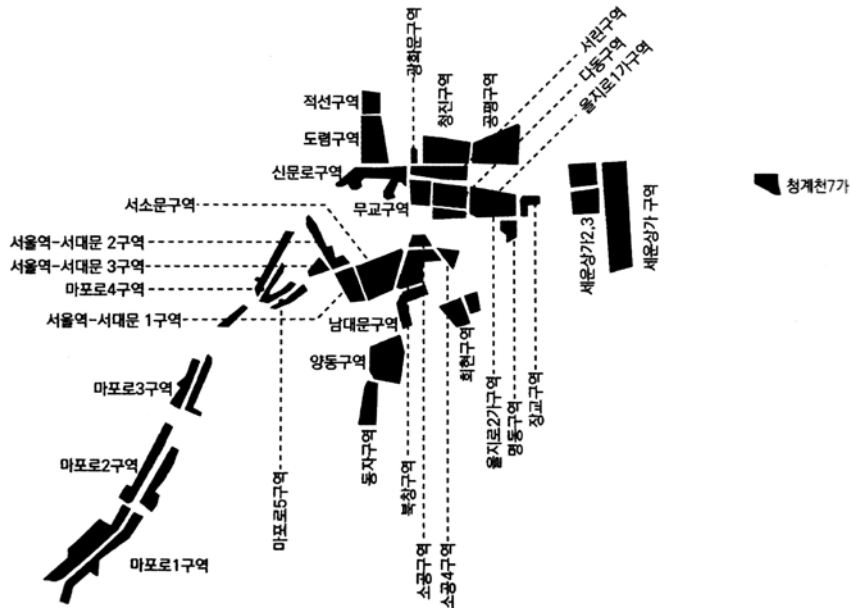
일자 도시개발법을 통해 토지개발공사와 주택공사의 시행자 자격 부여로 결론났다(손정목 2003a, 187). 그리고 1983년 2월, 서울시는 총 116개의 재개발지구를 중점지구로 선정할 뜻을 밝혀, 기존 8개지구를 더한 124개 지구의 재개발 계획을 세웠다. (“1983년도 주요업무계획”, 1983년 2월, 17). 이는 후일 도심지 53개, 간선도로변 42개, 86년 까지 71개지구, 88년까지 24개지구를 마무리할 방침으로 바뀌었고(손정목 2003a, 187), 실제로 88년까지 93개 지구에서의 재개발사업이 완료되었다(서울특별시 1990, 632).

1983년 서울시는 124지구의 도심재개발사업을 통해 2,480동의 노후·불량 건물이 124동의 현대적 건물로 바뀔 것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1983년도 주요업무계획”, 1983년 2월, 17). 지구마다 약 20개 건물을 한 개의 건물로 만드는 작업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건물의 고도제한을 해제하고, 건폐율(45%→50%)과 용적률(670%→1000%)을 상향시켰다(손정목 2003a, 187). 한 신문기사는 도심재개발이 88년까지 스카이라인을 높여 서울을 ‘빌딩 숲’으로 만들 것이라 평했다(『경향신문』 1985년 12월 4일, 10). 도심재개발사업은 한마디로 도심을 대형 고층건물 숲으로 만드는 것에 다름없었다.



[그림 11] ‘재벌타운분포도’  
(출처 : 『한국일보』 1983년 7월 22일, 5)

이는 결국 도심을 ‘재벌타운’으로 만들었다. 땅값 비싼 도심지에 고층빌딩을 만들 자금력을 가진 것은, 당연히 재벌이었기 때문이다. 한 신문은 도심지를 재벌이 과점했다고 평했고(『동아일보』 1983년 7월 20일, 1), 다른 신문은 [그림 11]처럼 ‘재벌타운’이라고 불렀다. 실제로 당시 시행주체 중 80% 이상이 재벌과 대기업이었다(손정목 2003a, 194).



[그림 12] 도심재개발사업 구역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2017, 188)

이러한 도심지재개발사업의 중요한 기준은 외국인의 시선이였다. 예를 들어, 간선 도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대상지는 마포로였다. [그림 12]를 보면 마포에서 도심으로 이어지는 지역이 재개발사업지로 선정된 것을 알 수 있다. 마포로는 을지로, 태평로(각 6개), 의주로(4개) 보다 훨씬 많은 13개 지구가 재개발 대상으로 선정되었다(『매일경제』 1982년 8월 21일, 10). 이 가로가 중요한 사업대상이 된 이유는 김포공항에 도착한 외국인들이 도심으로 향하는 길목이었기 때문이다. 마포로는 이미 1979년 지미 카터 미대통령 방문에 맞춰 일련의 개발 사업을 진행했고, ‘귀빈로’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다(손정목, 2003b: 180-185).

2) 도시설계와 강남의 변화

## ① 1970년대 잠실 도시계획

추진엘리트들은 올림픽 경기장이 밀집한 잠실지역에 대해서도 일련의 계획을 갖고 있었다. 일단 방침은 한강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경제발전을 경관화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잠실이라는 지역은 그 이전부터 도시계획 상 남다른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 장래 올림픽을 치를 시설이 위치한 장소로서 이곳은 1970년대 첫 개발 당시로서 ‘국제도시’ 등의 이름으로 발전국가의 경관관리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는 ‘강남’의 개발은 경부고속도도를 중심으로 한 영동1지구<sup>108</sup>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란 농촌이었던 이 지역에 도로 등의 기초 인프라를 만든 뒤 토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었다(임동근 2015, 116-119). 한 마디로, 국가는 ‘평면’을 조성하고, 그 후에 건물을 세우는 일은 민간에 맡기는 방식이었다. 잠실지구는 1970년의 ‘잠실지구종합개발계획’(김진희·김기호 2010, 46), 그리고 71년 서울 다핵도시화 계획에 기초하여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통해 개발이 시작되었다(김백영 2017, 77).<sup>109</sup> 이 때도 개발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기초하고 있었다.

그런데 1973년 10월 6일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국무총리 지시를 통해 중단된다. 이유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도로용지 확보나 대지 조성을 위주”로 하여 “미래지향적인 국제적 대도시 건설에 차질을 초래”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앞으로는 “평면적인 구획정리계획뿐 아니라 구획정리 후의 구체적인 종합개발 계획까지 심의 수립하고 동 계획을 정부 각 관계기관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손정목 2003c, 204-5). 즉, 잠실지역에 대해서는 평면을 조성할 뿐 아니라 건물까지도 관리할 방침을 세운 것이다.

이는 종합운동장에서 장래에 개최할 스포츠이벤트와 국제적 지위향상이라는 문제를 염두에 둔 조치였다. 73년 초 서울시는 『영동·잠실 신시가지 조성계획』을 발표한다. 이 계획은 영동지구 동쪽 미개발지인 영동2지구<sup>110</sup>와 잠실의 개발을 묶어 “선진 대도시 수준의 세계적인 이상도시”로 만든다는 목표 하에, ha 당 200인 이하의 이상적 인구밀도, 계획녹화 및 공원화된 시가지, 도시미관의 정책적 향상 등을 골자로 하는 것이었다(김백영 2017, 79-80). 갑자기 ‘국제적 대도시’, ‘세계적 이상도시’ 등을 말하게 된 것은 역시 잠실종합운동 계획 때문이었다. 국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sup>108</sup> 현재 행정구역상 서초구 서초동과 잠원동, 강남구 신사동에 해당한다.

<sup>109</sup> 공유수면매립공사란 하천·고수부지와 토지의 경계가 불명확한 전통적 하천공간에 현대적 제방을 쌓아 하천과 토지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이 과정에서 토지를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1960년대 말부터 한강변에 만들어진 신시가지인 여의도, 동부이촌동, 반포 지역은 모두 이런 방식으로 제방을 쌓아 확보한 토지 위에 아파트 단지를 조성한 지역이었다. 이에 관하여는 손정목(2003b, 175-196) 참조.

<sup>110</sup> 현재 행정구역상 강남구 압구정동, 청담동, 논현동, 역삼동, 도곡동, 삼성동, 대치동에 해당한다.



스포츠이벤트를 염두에 둔 발전국가 입장에서 이 지역은 발전국가의 경제자본을 경관화하는 장소가 되어야 했던 것이다(김진희·김기호 2010, 47-8).

이러한 방침에 따라 다시 만들어진 “잠실지구종합개발기본계획”은 잠실지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개발 기조를 밝힌다.

“잠실지구는 아직 오염되지 않은 한강상류를 끼고 있고, 제방의 구조상 설치된 부지와 예정된 국제규모의 종합운동장, 올림픽경기장 후보용지, 제방의 밑을 따라 지정된 폭 30미터의 강변녹지, 중심부의 포락(浦落)지를 이용한 호수 등 여러 녹지요소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활용한다면 대단히 수려한 도시미를 가지는 신시가지로 개발할 수가 있다. 따라서 서울시 어느 지구보다 질서있는 시가지가 될 것이며 충분한 녹지요소를 갖추고 있으므로 국내외적으로도 시범적인 신시가지로서 손색이 없을 것이며 국가발전의 상징적 도시로 형성시킬 수 있다고 보아진다(서울특별시 1974, 26).

이 계획은 이 지역과 올림픽의 연관성을 예언적으로 보여준다. 이 지역의 서쪽 끝에 종합운동장이 배치되어 있고, 동쪽 끝에는 ‘올림픽 경기장’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당시는 올림픽 개최 계획도, 이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도 정해진 바가 없던 상태였다. 그럼에도 서울시의 보고서는 잠실지구 동쪽 끝 국립경기장 부지를 ‘올림픽 경기장’으로 표시하고 있었다(서울특별시 1974, 56;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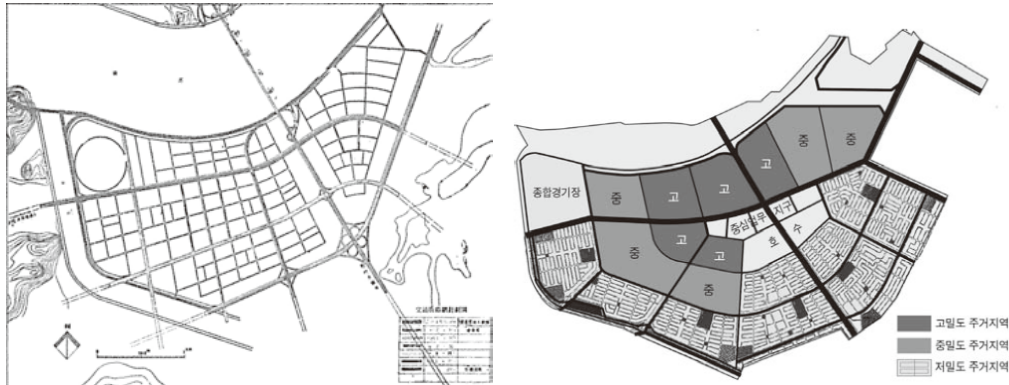
이 지역에 처음 적용된 도시설계는 발전국가의 경관 창출의 효시가 되었다. 근린주구론(Neighborhood Planning)<sup>111</sup>에 입각, 단지 내에 초등학교와 레크레이션 시설을 배치하고 연결도로를 보도화·녹지화하여 안전성과 녹지공간의 향유가 가능한 공간을 창출했다. 또한, 주거지역의 인구밀도를 ha당 800/600/200으로 나눠 아파트를 지음으로써 높낮이가 서로 다른 스카이라인을 조성하였다. 그리고 과거 하천이 지나가던 자리를 호수공원화했다(손정목 2003c, 207-211). 발전국가가 ‘국제적 도시’를 만드는 방법이란 당시 서구 도시들에 적용되고 있던 도시계획 요소들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국가가 직접 경관을 창출하는 방식이었던 것이다.

이 외에도 1979년 10월 26일 국립경기장 부지의 사방 200m 지역이 제5종 미관지구<sup>112</sup>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면적 75평 이상, 2층 이상 건물만 건립 가능하고, 도

<sup>111</sup> 미국의 도시계획가 클라렌스 페리(Clarence Perry)가 사회학자 찰스 콜리의 1차집단론과 사회화과정론에 영향을 받아 고안한 것이다. 단지 내 근린시설, 특히 초등학교를 중심부에 배치하여 단지라는 지역단위가 하나의 커뮤니티가 되고 이것이 1차집단이자 사회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했던 것이다. 이에 관하여는 페리(2014) 및 日端(2008, 230-248) 참조.

<sup>112</sup> 미관지구란 미관유지나 건축미 등을 보전하고 증진할 목적으로 일정구역을 획정한 지역이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건축행위의 제한을 두는데, 다음과 같이 총 5가지가 있다. ① 제1종 미관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극히 높은 상업지역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② 제2종 미관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비교적 높은 상업지역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③

매시장, 고물상, 전염병원, 정신병원, 자동차 관련업소, 연탄공장, 목재소, 창고, 식품 공장, 정육점, 철물점, 세탁소, 공장도 이 지역에 들어설 수 없다. 10월 8일 올림픽 유치선언에 따라 이 지역의 미관을 유지한다는 것이 그 이유에서였다(김백영 2017, 81).



[그림 13] 1970년과 1974년의 잠실지구 설계도  
(출처 : 김진희·김기호 2010, 46; 49)

② 잠실의 상징공간화

추진엘리트들은 종합운동장과 국립경기장뿐만 아니라 잠실 일대를 상징적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 기조는 경제자본의 전시였고, 이를 위해 해당 지역을 부유층지역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당시 주경기장 동편에 위치한 잠실 1~4단지 아파트는 소형아파트들이었다. 1974년 잠실개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7.5평 500세대, 10평 600세대, 13평형 7,610세대, 15평형 3,400세대, 17평형 2,410세대, 19평형 730세대로 이뤄진 중소형 아파트단지로 조성되었고, 15평 이하 아파트는 무허가 건물 철거민 수용이 원칙이었다(손정목 2003c, 2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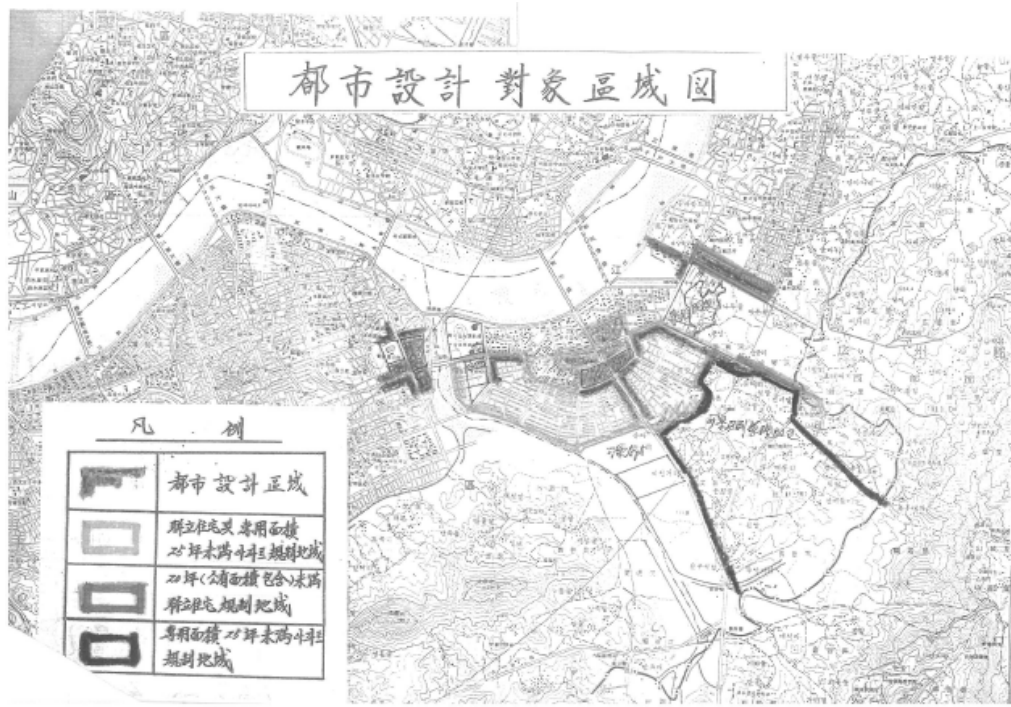
잠실을 부유층 주거지로 만들고자 하는 요구는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다. 1982년 6월 23일, 대통령은 체육부장관과 서울시장 등에게 잠실지역의 경관을 변화시킬 것을 요구한다. 소형 서민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준고급 아파트를 배합하라는 것이었다(“올림픽 아시안게임 주요시설 배치·조정 방안

---

제3종미관지구 : 관광지 또는 사적지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④ 제4종미관지구 : 한국 고유의 건축양식을 보존하거나 전통적 미관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 ⑤ 제5종미관지구 : 제1종 내지 제4종 미관지구 외에 그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이규환 1999, 386).

보고서 지시사항”, 1982년 6월 23일).

대통령의 명령은 이후 구체화된다. 실무자들은 6월 28일에 “잠실 일대를 올림픽 특별구역으로 지정,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개발하는 방안을 수립하되 서민집단 거주 지역화 하지 않도록 고급아파트를 적절히 배합, 좋은 환경이 되도록” 만들기로 결정하였고(“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주요시설 배치조정방안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 각서 시달”, 1982년 7월 3일), 1983년 12월의 종합계획 역시 마찬가지로, 아시아 공원부터 석촌호수공원, 올림픽공원으로 이어지는 올림픽 가로를 조성하고 이곳을 한국의 대표적 명소로 조성하겠다는 목표가 언표되어 있다(“1986아시아·1988올림픽 대회종합시행계획” 1983년 12월, 53).



[그림 14] 잠실지역 주거지 평형규제 설계안  
(출처: “국립경기장 등 추진계획” 1982년 7월)

이를 위해 구상된 정책은 잠실 일대 주거용지 내 신축건물의 면적을 제한하는 것이었다. [그림 14]와 같이 서울시는 1982년 7월 국립경기장에 대한 추진계획과 더불어 잠실 일대 주거지를 ① 연립주택 및 전용면적 25평미만 아파트 규제지역, ② 20평 미만 연립주택 규제지역, ③ 전용면적 25평미만 아파트 규제지역으로 나누었

다. 여기에 도시설계를 더하여 이 일대의 경관을 대대적으로 바꾸는 것이 서울시와 발전국가의 올림픽 경관전략이었던 것이다.

아래 가락지구에는 농수산물시장이 새로이 들어섰고, 그 남측에 다시 ‘올림픽 가족 아파트’가 기획되었다. 1985년 12월 26일 조직위원회가 발표한 아파트 건축안은 (『동아일보』 1985년 12월 26일, 대회 기간 중에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선수촌·기자촌, 호텔을 대신하도록 하고, 대회 이후에는 민간에 분양하기로 하였다. 선수촌과 비슷하게 중대형 아파트로 설계되어, 32평 1,500세대, 43평 900세대, 49평 1,416세대, 56평 558세대, 68평 120세대로 구성되었다. 분양도 선수촌과 마찬가지로 다액 기부자에게 우선권을 주었다(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1989, 520). 올림픽을 맞아 한국 사회의 경제적 풍요를 과시하려고 했던 의도는 결국 잠실지역의 거주 계층을 국가가 통제하는 방향으로 비화되었던 것이다.

### ③ 1980년대 도시설계와 강남의 경관 변화

1980년대는 도시설계라는 방식을 통한 발전국가의 경관관리가 보다 보편화되는 양상을 띄었다. 이에 따라 올림픽과 관련된 지역의 경관관리 역시 보다 폭넓게 전개되는 양상을 보인다. 제도적으로는 1980년 1월 4일 ‘도심부내 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건축법 8조 2항)’, 11월 2일 ‘도시설계 작성기준(동법 시행령 11조 2항)’, 등의 제도를 통해 도시설계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는 지방행정기구가 ‘도시미관의 장애요소’를 없애고, ‘도시 기능에 따른 가구 형성’을 유도하기 위한 건축제한을 내릴 수 있게 하는 제도였다. 지방행정기구가 경관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이건호 2012-72-75). 이 위에서 서울시는 82년부터 84년까지 17개 지역을 도시설계 대상구역으로 정했다.<sup>113</sup>

올림픽 경기장이 자리한 잠실과 올림픽 공원 인근지역은 상당히 촘촘하게 도시설계가 이뤄진 지역이었다. 먼저 서울시는 1983년 잠실지구 도시설계를 완료하였고, 84년에는 테헤란로, 85년에는 한국종합무역센터와 가락지구 도시설계가 이어졌다. 같은 해엔 롯데잠실개발계획도 수립되어, 잠실일대의 주요 경관계획이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완료된 “잠실지구도시설계”는 1970년대 이후 아직 개발되지 않은 잠실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서울시는 올림픽을 ‘수단’으로 삼아 수도권 구조 재편을 꿈꿨다. ‘올림픽개발’과 ‘도시개발’을 연관지은 것이다(서울특별시 1983B, 9). 특히 중요한 것은 서울의 3대 도심 중 하나로 잠실을 성장시키고자 했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1983년 주요업무계획에서 당시 도심을 중추관리지역으로, 영등포권은 산업과 상가의 중심지로, 잠실은 문화와 유통의 중심으로 만들 계획을 발표했다. 그리

<sup>113</sup> 대상구역은 81. 7~83년 9개(세종로, 태평로, 종로, 을지로, 잠실, 신촌, 테헤란, 김포, 목동), 84년 4개(영등포, 청량리, 한강로 왕십리), 85년 5개(가회동, 율곡로, 청량리, 영등포, 한강로)였다(김백영 2017, 93; 『매일경제』 1983년 7월 20일, 11).

고 신촌, 청량리, 영동을 부심으로 설정했다(“1983년 주요업무계획” 1983년 2월, 15).

서울시는 이 지역에 ‘올림픽 상징가로’를 조성하는 동시에 잠실지역 그 자체의 성장을 양대 목표로 세웠다(서울특별시 1983b, 67). 그리고 코엑스, 종합운동장, 석촌호수, 국립경기장, 풍납사거리라는 잠실로(84년부터 ‘올림픽로’로 개칭)의 결절지들을 핵심지역으로 삼아(김백영 2017 .93), 1983년부터 5년간 주요사업을 수행할 계획을 세웠다(서울특별시 1983b, 10). 설계는 올림픽공원의 설계자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강홍빈교수에게 맡겼다(손정목 2003e, 83)

각 지역에 대한 계획은 이랬다. 코엑스의 경우 ‘잠실 올림픽단지’의 진입로라는 의미가 부여되면서 상징시설물 설치와 주변 건물의 대형화, 영동대로의 ‘공원가로화’가 계획되었다. 종합운동장 앞에는 상징 조명이 설치되고, 진입부에 광장을 설치할 계획을 세웠으며, 주변 아파트단지의 외관을 개선하고, 아케이드를 설치해 주변 상과의 경관을 개조하고자 하였다(서울특별시 1983b, 186-7). 석촌호수 북단에는 대규모 시설을 계획했고, 국립경기장 진입부에는 광장과 상징조형물을 설치하고 주변도로를 ‘공원가로화’ 하기로 하였다(서울특별시 1983b, 188).

1984년에는 테헤란로 도시설계가 이뤄졌다. 그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테헤란로는 요소에 서울시 동남부의 주요 상업핵이나 ‘올림픽 관련 경기시설·지원 시설이 놓여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헤란로 및 그 연변구역은 개발이 미진하여 70% 이상이 나대지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중략) 더구나 86아시아경기대회와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테헤란로 일대는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태였다(서울특별시 1984b, 7-8)

이에 더하여 당시 강남지역이 “소비성 유흥·위락 기능이 집중되어 도시발전에 바람직스럽지 않은 국면”을 형성했고, “문화 및 집적된 상업활동은 전무하거나 국지적으로 산재”한 상태였다는 상황판단도 뒤따랐다(서울특별시 1984b, 8). 테헤란로 역시 올림픽을 대비하여 경제자본을 경관화할 필요성 및 문화자본을 경관화 할 필요성에서 서울시의 개입이 이뤄진 곳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잠실지구와 마찬가지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팀에 의해 작성된 계획에서 올림픽 상징가로는 선릉역 주변까지로 확장된다. 이에 따라 올림픽 상징가로와 일체화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설계 상 주요 과제가 되어, 가로 장치물과 가로 식재의 통일성을 부각시킬 것이 권고되었다(서울특별시 1984b, 104). 이에 더하여 건축물 1층에 보행활동을 저해하는 업종을 제한하도록 했고, 문화기능을 대폭 확충할 계획도 세웠다(서울특별시 1984b, 71).

1988년 8월 28일, 그리고 9월 7일, 한국의 경제자본을 경관화 해줄 상징적 건물 두 개가 이른바 ‘올림픽타운’에 자리를 잡고 문을 열었다(『경향신문』 1986년 1월

27일, 10). 테헤란로와 잠실지구의 결절점에 들어선 한국에서 두번째로 높은 빌딩 종합무역센터와, 석촌호수 복단에 자리잡은 한국에서 가장 면적이 큰 건물 롯데월드가 그것이었다. 이 두 상징적 건축물은 똑같이 1985년도에 착공되어, 3년간의 무리한 공사 끝에 올림픽 개최식에 맞춰 문을 열었다. 종합무역센터는 1985년 3월에 착공하였지만 건축허가는 이듬 해에 받았다. 올림픽에 맞춰 개장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동아일보』 1988년 7월 15일, 9). 롯데월드는 더했다. 개장일에 맞추기 위해 100일 작전과 50일 작전을 반복했고(손정목 2003e, 88), 20명에 가까운 산재 사망자를 냈다(『한겨레』 1989년 5월 17일, 5). 경제자본을 재현해주는 경관의 조성은 이토록 폭력적인 형태로 드러났던 것이다.

### 3) 한강종합개발

서울 시내 한강 및 그 연안에 대한 개발사업은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지만, 현재와 같은 경관이 만들어진 것은 1981년도에 시행된 한강종합개발사업을 통해서였다. 그리고 그 사업은 서울올림픽의 유치가 계기가 되어 시작되었다. 공식적으로는 1981년 11월 18일 대통령이 서울지역 내 한강 골재와 고수부지 활용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하면서부터였다(서울특별시 1983a, 6). 그렇다면 왜 올림픽 유치 이후 한강 개발을 생각해냈을까? 전두환은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설명한다.

내가 한강을 종합적으로 개발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올림픽대회의 서울 유치가 결정된 직후 부터였다. 우리 5천년 민족사상 최대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는 했는데, 과연 그 엄청난 과제를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하니까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 ... 그때 제일 먼저 결심해야 했던 것이 한강종합개발사업이었다. 각종 경기장을 비롯하여 많은 올림픽 관련 시설이 한강 주변에 배치되도록 계획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한강은 발전하는 한국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 의미도 있었다. 올림픽 개막행사의 시작이 한강에서 펼쳐지도록 계획되어 있었고 강변도로는 마라톤 코스로 지정되어 있었다. ‘한강의 기적’을 세계에 선보이기 위해서는 강물이 깨끗해야 하고 주변경관도 아름답게 정비해야 했다(전두환 2017b, 556-7).

그의 증언에 따르면 한강개발은 무엇보다도 경관을 통해 한국의 경제발전을 재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sup>114</sup> 즉, 한국의 경제자본을 경관으로 보여주고자 한강

<sup>114</sup> 이방원(1989, 78-79)에 따르면, 정주영 유치위원장이 바덴바덴의 오스강 운하(Oos Kanal)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 정부에 제안한 것이라고 한다. 중동붐이 끝나던 당시 건설업의 회생을 위해 대규모 공사를 제안하고 골재채취 등을 통해 막대한 소득을 거둘 수 있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을 개발한 것이다.

반대로 1981년 당시 한강은 발전국가의 급속한 도시화의 문제점을 가시화한 공간으로 여겨졌다. 당시 서울시 부시장이었던 이상연 역시 올림픽 개최가 결정되었을 당시 “도시의 품격, 호텔 등 숙박, 교통, 위생, 미관이라든지 친절한 서비스 등 하나도 자신있는 게 없고 걱정거리”였다고 말한다. 한강은 그 중에서도 도시공해와 수질 문제 등이 가장 가시화되어 나타난 공간이었다고 말한다(이상연 2013, 91-2). 그래서인지 올림픽 개최가 결정된 직후부터 대통령은 한강의 경관에 주목했다. 1981년 10월 4일, 서울운동장을 순시하는 자리에서 전두환은 뚝섬유원지에 포플러나 수영버들을 심을 것과, 성수대교 북측을 재개발할 것을 지시했다(“대통령각하 지시 및 훈시(올림픽 관련)”, 미상).

추진엘리트들에게 한강은 한국의 경제발전 및 도시화와 관련한 상징적 공간으로, 중요한 프로파간다의 수단이었다. 앞서 본 것처럼 압축적 도시화의 문제를 상징하는 공간이 한강이라고 생각했고, 이 장소를 경제발전을 상징하는 경관으로 바꾸고자 한 것이 한강종합개발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정권의 프로파간다에도 여러 번 이용된 것이 한강의 경관이었다. 대표적으로 사회정화위원회의 공모를 통해 만들어진 건전가요인 『아! 대한민국』은 1984년 당시에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한강의 경관을 도입부에서 일종의 ‘자랑거리’로 소개하고 있다. 서정주 역시 전두환에 바치는 시의 도입구를 “한강을 넓고 깊고 또 맑게 만드신 이여”로 시작하고 있다. 발전국가는 이처럼 발전국가가 쌓은 경제적 자분을 경관화 한 공간으로 한강을 선전했던 것이다.

발전국가는 또한 사회정치 장소로도 한강을 활용하고자 했다. 시민들의 경제적 부의 증가로 인해 휴식과 위락활동을 위한 공원이 필요해졌음을 전제로 하여 “시민의 보건휴양과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공원을 만들었다는 것이 추진엘리트들의 설명이었다(서울특별시 1990, 568). 이러한 목적에 따라 고수부지의 상당부분을 공원으로 만들어 여가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1970년대부터 발전국가는 ‘여가선용’와 ‘정서함양’ 같은 개념 하에서 대중의 여가와 취미에 개입하여 개조하기를 원했고(박해남 2016, 362), 앞 절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이러한 경향은 1980년대 스포츠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한 발전국가의 여가 통제 정책에 한강개발은 궤를 같이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의도 위에서 만들어진 한강개발의 ‘기본이념’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 ① 86 아시안게임 및 88 서울올림픽을 대비한 도시환경개선, ② 도시화 팽창으로 각박해진 인간성 형성에 유희감을 주고 하천애호의 정신 함양, 새로운 공간의 창출, ③ 공공성, 공간성, 광역성을 가진 건전한 시민 레크레이션공간 확보, ④ 본연의 한강 기능으로 회복하면서 한편으로는 잠재 가용 자원을 경제적으로 개발 이용, ⑤ 이수, 치수의 안전성과 주변지역의 환경정비, 그리고 강변도로 확장, 도시교통난 해소, 이상 다섯 가지가 ‘기본 이념’으로 설정되었다(서울특별시 1988, 8-9).

사업의 설계자는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로, 한때 김수근이 부사장으로 있었고 여의

도 개발에도 참여했던 기업이다. 발전국가의 토목사업에 파트너 역할을 해왔던 것이다. 이들의 설계 위에서 진행된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저수로 정비 - 수로를 고정하고 강바닥을 준설하여 골재를 채취하는 것. ② 분류하수관로 설치 - 생활하수와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매설형 하수관로를 따로 만들어 한강에의 생활하수 유입을 차단하는 것, ③ 시민공원 조성 - 총 13개소의 시민공원을 만들고, 그 중 9개(난지도, 양화, 여의도, 이촌, 반포, 잠실, 천호, 뚝섬, 광나루)는 시설이 설치된 체육공원으로 만드는 것, ④ 올림픽대로 - 김포공항에서 잠실경기장까지의 논스톱운행을 기조로, 신행주대교에서 암사동까지 한강남측의 36km를 고속도로화 하는 것. 이상 네 가지가 한강종합개발사업의 골자였다(서울특별시 1983a, 14-19; 서울특별시 1988, 11-13).

올림픽과 관련한 상징공간이었으므로 공사는 매우 급하게 진행되었다. 공사일정을 단축하기 위해서인지 서울시는 산업기지개발공사, 수자원공사, 현대건설, 한양라이프 주택 등의 관련 자료를 한국종합개발기술공사에 넘겨 설계를 시작하게 했다. 착공일은 82년 9월 28일이었지만 설계안은 1983년 5월에 나온다. 공기단축을 위해 설계 확정 이전에 공사를 시작했던 것이다(이상연 2013, 93-4). 일정을 서두른 이유는 스포츠 메가이벤트에 맞춰 완공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설계 당시 목표 준공일은 1985년 12월 말이었다. 아시안게임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기로 한 것이다. 실제 공사는 87년 말까지 계속되었지만(서울특별시 1990, 590), 준공식은 아시안게임을 일주일 앞둔 1986년 9월 10일 열렸다. 시간적으로 아시안게임과 한강을 묶어 상징성을 더한 한강개발의 상징성을 연출하고자 한 것이다.

#### 4) 올림픽 마라톤과 발전경관의 전시

서울올림픽의 여러 종목 중에서 경기장이 아닌 도로를 무대로 하는 마라톤은 발전경관을 전 세계로 보여줄 계기였다. 그래서 조직위원회는 당초 재개발을 통해 빌딩 숲으로 변한 도심지를 포함 “서울의 발전상을 전세계에 보여주려는 계획”으로 잠실체육관을 출발하여 동마장, 동대문, 을지로, 장충동, 건국대앞, 제3한강교 등을 마톤 코스로 계획했다. 하지만 환경청은 대기오염 문제로 이 코스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중앙일보』 1984년 7월 9일, 11). 하지만, 85년까지도 정부의 방침은 도심을 통과한다는 것이었다(『경향신문』 1986년 7월 3일, 8).

결국, 8월부터 육상연맹이 새로운 코스를 계획하여 국제육상연맹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는데, 이 역시 발전경관의 전시에 적합한 코스였다. 선수들은 잠실주경기장을 출발하여 테헤란로와 남부순환로, 강남대로와 고속터미널을 거쳐 강남을 관통한 뒤 국립묘지를 거쳐 올림픽대로를 통해 여의도에 입성하고, 마포대교를 통해 강변북로에 접어든 뒤 반포대교를 통해 남하하여 압구정과 올림픽대로를 통해 다시 잠실주경기장으로 향했다(『동아일보』 1985년 10월 9일, 5). 선수들의 모습은 한강 및 강남의 발전상을 주 무대로 했으며, 혹시라도 드러나게 될 지 모르는 빈곤의 풍경은 재개발을 통해 미리 달라져있었다. 마라톤 코스와 인접한 동작구 흑석동과 마포구 도화동,



그리고 중계카메라에 포착될 가능성이 있는 한강 건너편의 성동구 옥수동과 금호동은 모두 불량주택재개발 필수사업 및 중점사업구역이 되었기 때문이다(서울역사박물관 2017, 188-9).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실제 마라톤 경기 중계를 통해 발전의 경관은 전세계로 중계되었다.



[그림 15] 서울올림픽 마라톤 경기 중계화면  
(출처 : Olympic channel, 2015. 4. 22)

### 3. 올림픽 상징경관의 조성

#### 1) 올림픽 공원과 아시아공원

올림픽 개최 결정 이후 지어야 할 가장 거대한 규모의 시설은 국립경기장이었다. 3장에서 언급된 바 있듯, 이 지역은 1968년과 1979년 건설부 고시를 통해 국립경기장 부지로 선정된 바 있다. 서울시 역시 1981년 5월 7일 고시 제 164호를 통해 도시계획상 운동장 부지로 선정했다(“문화재지정에 따른 협의”, 1981년 12월 16일).

이 지역에는 백제유적인 몽촌토성이 존재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병도 등 소수의 역사학자들을 제외하고는 문화재가 아닌 구릉으로 보이는 농촌지역이었고(손정목 2003e, 49-52), 약 1650세대의 거주민이 이곳에 살고 있었다(“지장물철거현황”, 1984년 10월 2일).<sup>115</sup> 하지만, 1981년 역사학계로부터 문화재 지정 요청이 제기되었고(손정목 2003e, 52-53),<sup>116</sup> 81년 4월부터 현지조사가 시작되어 6월에는 사적으로 지정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했다. 그리고 1981년 12월 16일에 문화공보부는 조직위원회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했다(“문화재지정에 따른 협의”, 1981년 12월 16일). 1982년 6월 기본 배치계획이 만들어진 뒤 약 한달 후인 7월 27일, 문화공보부 고시 제 539호를 통해 몽촌토성은 사적 제 297호로 지정된다(관보 제 9199호, 7-11).

국립경기장 부지에 대한 대강의 사용계획은 1982년 6월 28일에 정해졌다. 그 전, 6월 14-15일과 23일의 회의를 통해 잠실의 종합운동장과 국립경기장의 공간적 역할분담의 대강이 계획되었다. 당초 잠실의 종합운동장 인근에 올림픽 선수촌을 비롯한 주요 시설을 배치할 계획이었으나, ① 대회종료 후 올림픽 기념비적 시설 확보 미흡(관광지화 불능), ② 주변이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삭막, 협소(공원 및 녹지부족), ③ 주경기장 단지내 경기시설 밀집, ④ 아시안게임선수촌 용지 미확보, ⑤ 태릉선수촌 및 체육대학 시설확장 필요, 이상의 5가지 이유로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시설이 잠실과 국립경기장 부지에 분산되는 쪽으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립 경기장 부지에 선수촌과 기자촌, 체육대학 및 고등학교, 벨로드롬과 체조경기장 등의 경기시설, 그리고 ‘민족공원(몽촌토성)’과 ‘만국공원’ 등을 만들기로 하였다(“국립경기장부지 활용방안 확정을 위한 실무회의”, 1982년 6월 14일).

국립경기장을 만드는 중요 목적 중 하나는 상징적 장소의 조성이었다. 잠실지역은 기념비적 시설을 만들기 어렵고, 주변이 아파트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올림픽이라는 행사를 위한 상징경관이 필요하다는 것이 추진엘리트들의 판단이었다. 실제로 6월 28일의 실무자급(국장급) 회의에서는 “대회 후에도 올림픽 기념비적 영구 관광지화”를 국립경기장 부지 활용의 원칙으로 삼았다(“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주요시설 배치조정방안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 각서 시달”, 1982년 7월 3일). 이러한 고려 위에서 추진엘리트들이 계획한 것은 “우리의 역사적 전통과 문화를 부각하고 민족 용비 기상”을 표현하는 ‘민족공원’을 만드는 것이었다.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주요시설배치 조정방안”, 1982년 6월 23일). 또 이러한 경관을 방해하지 않도록 공원·경기장과 선수·기자촌을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국립경기장 부지내 주요시설 배치계획”, 1982년 7월 12일).

우리는 앞서 올림픽의 사회정치 담론 가운데 ‘문화민족’이라는 개념이 전통문화 및 예술의 풍부함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활용되었음을 보았다. 멕시코시티 올림픽처럼

<sup>115</sup> 서울시 올림픽기획단의 관료는 이 지역을 약 1800가구의 영세민이 사는 슬럼으로 보았다(“국립경기장 부지내 주요시설 배치계획”, 1982년 7월 12일).

<sup>116</sup> 손정목은 1981년 10월에 이병도가 정부에 연락을 취하여 문화재위원회가 소집된 것으로 밝히고 있는데, 문화공보부 공문에는 1981년 4월부터 현지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문화재나 전통예술을 통해 문화자본의 풍부함을 보여주는 전략이었던 것이다. 국립 경기장 부지 계획도 이러한 전략 위에 있었다. 단순히 경기장을 짓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와 연계하여 문화자본이 풍부함을 연출하고자 했던 것이다. 한편, 잠실종합운동장 남측 부지에는 아시안게임 선수촌과 “아시아의 대표적인 국가임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아시아공원’을 만들기로 했다(“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주요시설 배치 조정 방안 시달”, 1982년 6월 28일). 추진엘리트들의 올림픽 1차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강조점은 올림픽에 대한 상징성을 경관화하는 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경관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눈에 띄는 것은 공모를 통한 설계였다. 1970년대 잠실 종합운동장 단지 설계 당시 서울에서 건축가 김수근에게 지명하여 설계를 맡긴 것과는 대조적이다. 올림픽공원과 선수촌, 아시아공원 및 선수촌이 모두 국제공모전을 거쳤다. 그렇다고 해서 추진엘리트들이 설계를 전문가집단에 일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올림픽 공원의 경우 심사진 중 8명이 추진엘리트(서울시 부시장, 서울시 시정연구장, 서울시 립픽기획단장, 총리실 제1행정조정관, 체육부 기획관리실장, 조직위원회 사무차장, 문화재관리국장, 대한체육회 부회장)로, 11명이 김수근을 비롯한 건축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었다(손정목 2003e, 55-56). 추진엘리트가 가진 의견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구조였다.

올림픽공원의 설계는 앞서 언급된 1982년 6월 23일 및 6월 28일, 7월 12일의 회의 결과, 그리고 1982년 7월 18일에 만들어진 마스터플랜에 기초한다(서울특별시 1990, 428-9).<sup>117</sup> 기본적인 원칙은 이랬다. 부지 가운데 몽촌토성을 복원하여 배치하고, 그 네 귀퉁이와 남측은 스포츠 및 기타 문화공간으로 연출하는 것이었다(서울특별시 1984a, 50). 그리고 잠실방향에는 광장(만국공원)이, 남한산성 방향에는 경기장과 주차시설이, 하남방향에는 체육고등학교와 한국체육대학이 자리잡기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남쪽편에 선수촌과 기자촌이 위치한다(서울특별시 1990, 429).

설계자 선정은 공모에서 지명으로 바뀌었다. 1983년 4월 27일부터 7월 15일까지의 국제 공모 기간 중 11건이 접수되었는데, 심사진은 이들 중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고, 총 6건을 가작과 입선으로 나누어 시상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했다. 대신 지명 설계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강홍빈 교수를 총괄로 하는 설계팀이 꾸려졌다. 강홍빈은 1978년 박정희 정부 당시의 행정수도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수도의 도시 계획을 작성했던 이였고, 잠실지구 도시설계를 담당하기도 한 이였다. 발전국가 관료들과의 파트너쉽이나 올림픽과 관련한 도시경관의 조성 경험이라는 차원에서 경험이 풍부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손정목 2003e, 56).<sup>118</sup>

<sup>117</sup> 마스터플랜작성자는 ㈜환경그룹의 광영훈이었는데, 그에 따르면 뮌헨올림픽공원을 모델로 언덕과 호수가 조화된 경관을 몽촌토성 구역에 구현하고자 했다 한다(광영훈 2002, 115). 필자는 2015년 8월 24일 뮌헨 올림픽공원 현지답사를 실시했는데, 실제로 서울의 올림픽공원과 상당히 유사한 경관을 가지고 있었다.

<sup>118</sup> 이에 더하여 손정목은 강홍빈이 하버드대학 석사과정과 MIT 박사과정을 마친 학력엘리트라는 점도 설계자로 지명된 이유 중 하나라고 증언한다(손정목 2003e, 57). 이 무렵 서울시

일정은 다음과 같다. 기본 설계는 1983년 9월 13일부터 84년 3월 15일까지 이뤄졌고, 그 사이 전문가 28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의 회의가 5회 개최되었다(서울특별시 1987, 275). 기본 설계도가 만들어지자 세부 설계가 뒤따랐다. 성내천, 공원, 기반시설, 5개 경기장 설계가 4월부터 11월까지 이뤄졌고, 기본설계 당시 입선 및 가작에 당선되었던 이들이 세부설계를 맡았다(체육부 1987, 98; 손정목 2003e, 58).<sup>119</sup> 공식적인 착공은 1984년 8월 27일부터 이뤄졌고, 완공은 1986년 6월 30일에 이뤄졌다.

공사는 매우 급피치로 전개된 것으로 보인다. 거주민에 대한 보상과 이주, 몽촌토성에 대한 발굴조사가 착공 이후에도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몽촌토성은 착공 이후인 1984년 5월부터 86년 12월까지 두차례 발굴작업을 시행했다(서울특별시 1990, 449). 거주민 대책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곳에는 총 385동 712세대가 존재했는데(서울특별시 1987, 281), 보상과 이주대책을 확실히 마련하지 않은 채 공사를 시작했던 것이다.<sup>120</sup> 건물들을 ‘지장물’이라 칭했던 서울시 공문의 개념선택부터가 거주민들을 대하는 태도를 말해준다. 결국 9월 19일부터 10월 2일에 걸쳐 8회에 걸친 시위를 통해 거주민들은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왜냐하면 84년 6월 15일에 마련된 대책은 집주인들에게 85년 6월(가락지구), 86년 3월(월계지구), 86년 7월(목동지구)에 입주가능한 시영아파트를 보상방안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최소 6개월 이상의 공백을 감안하면 거주자들이 ‘선입주 후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입장은 단호했다.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며, 협의에 불응할 경우 아파트 입주권이 박탈되고, 주모자는 범죄자로 보겠다는 것이었다. 비닐하우스 거주민의 경우에는 어떠한 보상도 해줄 수 없다는 기조도 고수했다(“국립경기장 민원관계철”, 1984년). 이후에도 이곳에는 34세대가 남아있었고, 수차례의 철거를 거듭한 끝에 1986년 3월 25일에 가서야 모든 ‘지장물’이 철거된 것으로 보고된다(서울특별시 1987, 281).

[그림 16]과 같이 설계된 올림픽공원은 체육과 역사를 2대 주제로 삼았다. 크게 보면 공원을 역사공원 지구와 체육공원 지구로 나눈 것이다. 그 위에서 이 둘의 조화를 통해 ‘올림픽 이념’을 구현한다는 것이 설계자들의 아이디어였다(서울특별시 1984a, 46). 그 중에서도 몽촌토성은 핵심적이었다. 이 몽촌토성의 복원은 “한국의 역사적 전통을” 보여주는 문화적 경관을 연출하는 작업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체육시설들과 함께하면서도 몽촌토성은 올림픽공원의 ‘지표’ 역할을 맡게 된다(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1989, 172). 몽촌토성 주위로는 인공호수를 만들었다. 토성에 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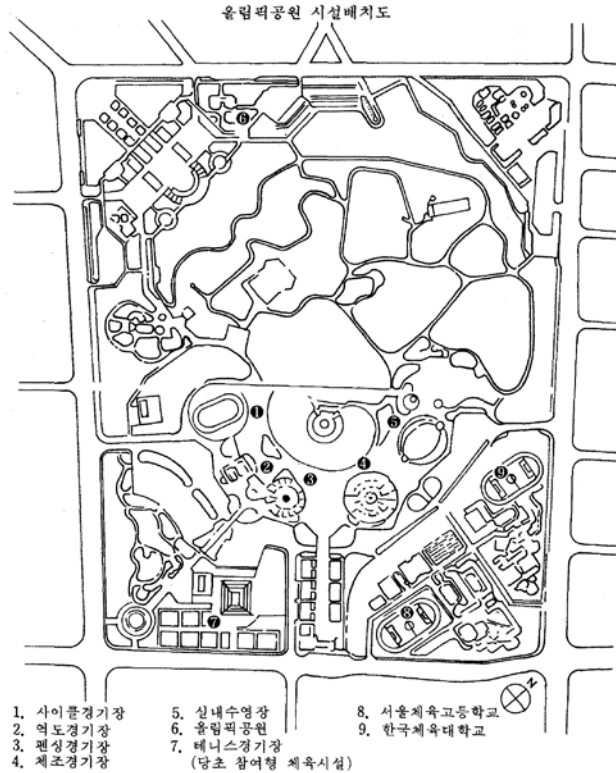
---

부시장으로 현상설계의 심사를 맡았던 이상연의 경우 아시아선수촌 설계자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서울대학 출신도 아니고, 유학파도 아니”어서 매우 불안했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이상연 2013, 87). 발전국가의 엘리트들이 전문가를 선정함에 있어 학벌은 그만큼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이다.

<sup>119</sup> 잠실 종합운동장 등 발전국가의 주요 도시개조 사업에 참여했던 김수근은 현상설계에 응모하지 않았음에도 체조경기장 설계를 맡았다(체육부 1987, 98).

<sup>120</sup> 1982년 7월 서울시 관료가 이곳 거주자를 1,800세대로 산정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작은 수치다.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의도적인 축소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 있다는 것이 발굴조사에서 확인되었으나 정확한 고증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조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설계한 것이었다(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1989, 174). 호수는 성내천과 연결하였다(서울특별시 1990, 438).



[그림 16] 올림픽공원 설계  
출처 : 체육부 1987, 97)

체육공간 및 기타공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토성 남측에는 3만 5천석의 야외광장을 조성하고, 이를 둘러싼 반원 모양으로 체조, 역도, 펜싱, 사이클, 수영 경기장을 배치하였으며, 추가로 남쪽 출입구 근처에 테니스 경기장을 건설하였다. 이때 설계자들이 정해놓은 원칙이 있다. 그것은 몽촌토성의 경관 중심성에 기초하여 경기장이 토성을 압도하는 경관을 형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또 건물의 형태와 지붕모양, 재료 및 색상 등을 미리 합의함으로써 건물의 형태와 색조가 몽촌토성과 조화를 이루도록 만들었다(서울특별시 1990, 438-439). 테니스 경기장은 설계 당시 포함되지 않으나, 원래 경기장을 짓기로 했던 경희대학교 측이 재정부족으로 난색을

표하자 시민체육시설 부지로 설정해두었던 곳에 테니스장을 짓게 되었다(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 1989, 180). 잠실을 향해있는 코너([그림 16]의 상단 왼쪽)에는 ‘선린기념공원’을 만들었다. 몽촌토성이 한국의 전통과 역사를 상징화하는 공간이라면 이곳은 올림픽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설계된 곳이다. 각종 문화행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광장의 무대를 88올림픽 상징문양으로 만들고, 광장 양측에는 올림픽 회관과 기념관을 지었다. 그리고 이 공간 한가운데는 이른바 ‘평화의 문’이 들어서게 되는데, 이에 대하여는 다음 장에서 알아보기로 한다.

아시아공원은 공간배치와 조형물을 통해 아시안게임의 상징성을 구현하는 전략 위에서 설계되었다. (공원의 공간 배치는 아래 [그림 17] 참조) 기본계획부터가 “아시아경기대회의 역사성과 기념성을 표현”하고 녹지를 확보하는 것에 주안이 두어졌다(서울특별시 1987, 309).<sup>121</sup> 그래서 공원은 전체적으로 녹지를 통해 ‘한국적 정원’을 표현하고, 가운데 기념 조형물과 야외무대, 그리고 전시공간을 각기 설치하는 형태로 구성되었다(체육부 1987b, 109).

## 2) 아시아선수촌 및 올림픽 선수촌

아시아선수촌은 올림픽 시설 중 가장 먼저 현상설계가 이뤄졌다. 1983년 3월 3일 공사의 시행을 맡은 서울시는 주요계획을 확정했고(서울특별시 1987, 289), 같은 달 25일 응모자격에 제한 없는 국제 공모를 공지했다. 총 33편 중 최종 당선작은 8월 27일에 결정되었다. [그림 17]과 같은 조성룡과 문정일의 안이 그것이다. 설계는 84년 6월 말에 최종완료 되었고, 공사는 그 해 8월 20일부터 86년 5월 30일까지 약 2년 가까이 진행되었다(서울특별시 1987, 314).

설계는 당시의 일반적 아파트와 달랐다. L자 모양의 클러스터로 단지를 배치하여 마을의 공동체성을 공간적으로 표현하였고, 보행을 위하여 1층을 전체를 비우고 통로화시켰다. 주차장도 외부와 지하로 만들었으며, 산의 경관과의 조화를 위해 건물의 층고를 달리하였다(조성룡 2015년 3월). 아시안게임이라는 상징성으로 인해 아파트라는 일반화된 건축물의 형태가 독특성을 띄게 된 것이다.

3장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선수촌은 아파트의 형태로 지어진 뒤 대회 이후 일반에 분양되기로 결정된 상태였다. 1981년 10월 4일 잠실운동장을 순시하던 전두환은 선수촌을 서민용 아파트로 건립할 것을 지시한 바 있는데(“대통령각하 지시 및 훈시(올림픽 관련)”, 미상), 이는 얼마 지나지 않아 바뀐다. 호화아파트로 지으라는 것이었다(“대통령각하에 대한 서울올림픽 준비추진상황 중간보고결과”, 1981년 12월 17일). 이에 따라 1983년 2월 당시 올림픽선수촌·기자촌, 그리고 아시안게임 선수촌 모두 56평형으로 만들려는 계획이 세워진 적도 있다(“아시아선수촌·국립경기장 추진

<sup>121</sup> 국가는 1972년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을 통해 IBRD 차관을 가지고 경주를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10년 계획에 착수한다.

방안 회의결과 보고”, 1983년 2월 5일). 이는 민간 분양시 분양대금만 아니라 기부금까지 받아야 한다는 이유와, 외국 선수들에게 ‘부유한’ 이미지를 주어야 한다는 이유가 결합된 것으로 보인다. 뒤에서 보겠지만, 추진엘리트들은 올림픽을 상징하는 지역의 서민적 도시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바 있다. 그래서 아시아선수촌은 38평 317세대, 47평 18세대, 52평 321세대, 57평 447세대, 66평 252세대로, 50평 이상의 세대가 다수를 차지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분양은 기부금 다액 입찰자에 우선순위를 주는 방식이었다(서울특별시 1987, 315-6).<sup>122</sup>



[그림 17] 아시아선수촌 및 아시아공원 당선작  
(출처 : 체육부 1987b, 110)

올림픽선수촌 및 기자촌 조성은 1984년 11월 17일 서울시의 국제 현상공모 공지와 더불어 시작된다. 이 때 발전국가는 올림픽이라는 행사에 어울리는 상징성과 더불어 한국의 주거문화에 획을 긋는 건축물을 지음으로써 ‘기념비적 장소성’을 형성하는 것을 선수촌 설계의 기본 목표로 삼았다(우규승 1988, 85). 국제 공모의 결과

<sup>122</sup> 당시 서울시 올림픽기획담당관 류동주의 증언에 의하면 모인 기부금이 약 135억원 정도로 전해진다(류동주 2013, 123).

85년 4월 20일까지 총 39점의 작품이 접수되었고, 올림픽 공원 당시와 마찬가지로 추진엘리트 6인과 건축전문가 11인, 기타 2명이 모인 심사자들에 의해 85년 6월 5일 최종 당선작이 결정된다. 당선작은 황일인과 우규승의 안이 선택된다. 이에 따라 격자형 아파트 배치(기자촌)와 하천경관을 보존하기 위한 부채꼴형 아파트 배치(선수촌)가 조합된, 한국에서는 보기드문 형태의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졌다. 부채꼴형 아파트의 경우 몽촌토성에서 남한산성으로 이어지는 스카이라인에 대한 고려, 한국 건축물 특유의 내향성, 그리고 올림픽을 상징하는 아케이드 및 광장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중심에서 주변으로 갈수록 고층화되도록 설계했다(『건축과환경』 1988년 12월호, 29). 아시아선수촌도 그렇지만 추진엘리트들의 상징성 요구는 당시 일반적인 아파트에서 볼 수 없는 조형성을 갖춘 아파트단지 디자인을 만들어냈던 것이다.



[그림 18] 선수촌·기자촌 아파트 조감도  
(출처 : 서울사진아카이브)

올림픽선수촌역시 역시 아시아선수촌과 마찬가지로 중대형으로 구성되었다. 단지는 25평 43세대, 29평 25세대, 33평 33세대, 34평 1,933세대, 39평 1,434세대, 43평 42세대, 47평 818세대, 49평 516세대, 50평 50세대, 52평 338세대, 53평 348세대, 57평 172세대, 64평 238세대. 이상 5,540세대로 구성되었다. 거대한 아파트 단지가 대부분 30평형대 중반 이상으로 구성된 것이다(서울특별시 1990, 517). 1986년 11월 1일부터 시작된 공사는 1988년 5월 30일에 완료되었다(『건축과환경』 1988년 12월호, 29).



#### 4. 문화자본의 경관화와 올림픽 이벤트

##### 1) 올림픽과 문화시설

서울올림픽은 스포츠 경기만 아니라 수많은 문화행사와 심지어는 학술행사까지를 포괄하는 거대한 문화이벤트다. 이를 위해서 많은 문화시설이 필요함은 당연하다. 하지만, 당시 한국의 상황은 문화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상태였다. 마치 제대로 된 스포츠 시설 인프라가 없어 올림픽을 계기로 다수의 경기장을 새로 만들었듯이, 문화시설 역시 올림픽에 즈음하여 새로이 만들게 된다.

올림픽에 즈음하여 문화시설이 필요했던 이유는 서울올림픽의 국제사회 내 정체성 재현전략과도 관계가 있다. 앞서 보았던 ‘문화민족’이라는 개념에 관한 설명에 언급된 바 있지만, 추진엘리트들은 올림픽을 통한 국제사회 내 지위향상을 위해 한국 사회의 문화자본을 경관화하고자 했다. 올림픽공원의 조성과정에서 몽촌토성을 중심 경관으로 삼은 것도 그러한 전략의 일환이었다. 1980년대 발전국가는 정책적으로 다수의 문화재를 복원하고 문화시설을 새로이 만들면서 이 전략을 수행하였다.<sup>123</sup>

올림픽을 계기로 한 문화시설 계획은 매우 일찍부터 계획되었다. 예를 들어, 전두환은 1981년 12월 16일 올림픽 준비사항 보고 자리에서 “국민에 대한 민족주체성 확립 교육”과 “당당한 한국인상 정립”을 위해 민족박물관 건립을 지시한다(“대통령 각하에 대한 서울올림픽 준비추진상황 중간보고결과”, 1981년 12월 17일). 문화공보부는 1982년 2월 연두보고에서 ‘문화올림픽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문화시설 및 역사유적에 관한 계획을 발표한다. 기념비적 문화공간으로 ‘민족기상을 표상’하는 독립기념관, ‘전통문화를 집성’하는 중앙박물관과 국악당, ‘현대예술을 상징’하는 예술의 전당과 현대미술관이 그것이었다. 그 외에도 몽촌토성이나 암사동 선사유적지 등 올림픽 경기장 주변의 사적은 공원으로 만들고, 경복궁과 덕수궁은 공원과 박물관으로 개발하며, 지역의 경우 경주와 부여, 공주의 유적지를 개발할 것을 계획했다(“1982년도 주요업무보고”, 1982년 2월). 이는 1983년 3월 30일 공개된 이른바 ‘문화올림픽 계획’에도 반영된다. 이 계획에서 예정된 문화시설은 독립기념관(1986년 8월 완공), 예술의 전당(1987년 9월), 국립현대미술관(1986년 6월), 국립국악당(1986년 4월), 중앙청박물관(1986년 6월) 등이었다. 역사유적지의 공원화도 함께 추진되어, 암사동 선사주거지, 석촌동 고분군, 몽촌토성, 풍납리토성, 미사리선사유적 등이 대상지로 선정되었다(강신표 2010, 260-1). 앞서 보았던 것처럼 올림픽 종합계획에도 마찬가지로 문화시설 및 역사유적이 포함되어 있다.

<sup>123</sup> 독립기념관의 기본계획 및 국립국악원의 설계자였던 김원은 이 프로젝트를 이진희 문공부장관의 아이디어로 설명한다. 프랑스 문화부 장관의 ‘그랑 프로젝트(le grand projet)’라는 대형 문화시설 프로젝트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라 본다(정진건 2015년 4월 3일).

이러한 계획은 거의 다 실행에 옮겨졌다. 그리고 올림픽공원이나 선수촌과 마찬가지로 지명설계 또는 현상설계를 통한 공간조성, 그리고 아시안게임 또는 올림픽을 즈음하여 완공·개장하기 위해 굉장히 빠르게 공사가 이뤄졌다는 특징을 지녔다.

독립기념관의 건립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1982년 8월 28일 만들어진 건립추진위원회는 11월 26일 천안 목천면을 건립장소로 정했고, 1983년 4월 김수근과 김정철, 김원 등 건축, 도시계획, 조경 전문가들 33인으로 이뤄진 자문위원회는 대지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구상을 발표한다(박정현 2016, 75-6). 이 때 설계의 기본사항으로 제시된 것은 “민족의 얼을 현대적으로 구현하여 민족적 입체감을 느낄 수 있는 창조물, 진실된 민족 역사를 입증하는 명소, 힘찬 민족의 앞날을 예시하는 미래 지향적인 명소” 등이었다(『건축문화』 1983년 12월, 45). 이 위에서 5월부터 11월까지의 2단계의 공모작업을 통해 최종적으로 거대한 기와지붕을 통해 ‘한국적 건축양식’을 잘 표현했다는 평가를 얻은 김기웅의 설계안이 당선되었다(박정현 2016, 76). 공사과정은 올림픽공원이나 한강종합개발사업과 유사했다. 설계자 김기웅은 ‘한쪽에서 설계하고 한쪽에서 시공’을 했으며, 건축허가도 착공 1년 뒤에 받았음을 언급하며 ‘달리기 하듯’ 공사를 서둘렀음을 말했다(『중앙일보』 1986년 8월 9일, 7). 1986년 8월 15일이라는 날짜에 맞추기 위해서였다. 결국 무리한 공사 과정에서 1986년 8월 4일 전기사고 발생하여 기와지붕에 불이 붙었고, 개장은 1987년 8월 15일로 연기되었다.<sup>124</sup>

국립현대미술관은 “국민의 정서순화와 새 문화창조에 기여함으로써 국내외에 우리 민족이 문화민족임을 선양”하기 위한 목적 하에 1981년 12월에 기본 계획을 정했고(국립현대미술관 1987, 29-30), 82년 9월 30일 건축대지 1만평과 야외조각 전시장 1만평으로 이뤄진 부지를 과천 서울대공원 옆자리에 선정했다(국립현대미술관 1987, 46). 11월 30일까지 이뤄진 설계 공모는 총 7명을 지명한 지명설계 방식이었는데, 최종적으로는 “한국 고유의 성곽과 봉수대를 건물에 투영한” 재미건축가 김태수의 안이 김수근을 제치고 당선작이 되었다(국립현대미술관 1987, 46). 1984년 착공한 이 국립현대미술관은 1986년 8월 25일 개관하였다. 양은희의 평가에 따르면 이는 아시안게임이라는 ‘스펙터클을 보조하는 스펙터클’이었고, 보여주기 또는 과시용 선전물이었다(양은희 2007, 178; 183).

예술의 전당은 결국 일정을 맞추지 못한 건축물이었다. 1983년 1월 “86서울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 겨냥해 예술 활동의 종합기능을 담당하게 될 예술의 전당”의 서울 건립이 확정되었고(남애리, 미상b), 7월에 부지가 선정되었으며(한중수 외 2016, 136), 12월 31일 5명을 초청설계자로 5명을 지명하고 84년 4월 30일에 심사 결과를 발표하였다(『건축문화』 1984년 12월, 10). 1차 심사위원 10명은 5명의 문화예술엘리트와 5명의 건축계 인사로, 2차 심사위원 7명은 4명의 문화예술엘리트와 3명의 건축계 인사로 구성되었다. 이들이 제시한 기본 목표 중 하나는 역시 “86

<sup>124</sup> 기본계획 작성자 김원에 따르면 정부는 독립기념관을 총 6개 전시실로 구성하고, 마지막 6전시실을 ‘정권 홍보관’으로 꾸밀 생각이었다고 한다(정진건 2015년 4월 3일).

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 대회시 한국문화예술활동을 소개할 수 있는 복합예술 센터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장소”를 조성하는 것이었다(『건축문화』 1984년 12위, 7-8). 하지만 공사는 1차목표인 86년 아시안게임을 놓쳤고, 87년 국립국악원과 88년 2월에 음악당과 서예박물관을 개장한 채 올림픽을 맞았다(한중수 외 2016, 137).

올림픽 경기장들이 밀집한 송파구와 강동구 일대의 백제 역사유적들이 올림픽을 앞두고 대거 복원된 뒤 공원으로 바뀌었다. “서울이 500년 도읍지만이 아닌 2000년 역사를 지닌 고도로서 뿌리를 찾고, 민족이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문화민족을 자랑”함과 더불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계획 하에서 석촌동 고분, 방이동 고분, 풍납토성, 암사동 선사주거지 터에 대한 정비작업이 1985년부터 시작되어 풍납토성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1988년까지 공원으로 탈바꿈했다(서울특별시 1990, 897-8).

서울 도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서울시는 1985년 “올곡로·대학로 도시설계”를 통해 우정국로, 올곡로, 삼일로, 둔화문로, 창경궁로, 대학로의 경관도 바꿨다. 마로니에 공원의 외관도 달라졌다. “역사적 유산을 보전하고 미비된 문화환경을 보완, 창출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의식을 함양시키고 급증하는 대규모 국제행사에 대비한 전통적·문화적 명소가 될 수 있는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한 목적에서였다(서울특별시 1985, 6). 서울시는 또한 식민지기부터 경성중학교 교정으로 쓰이면서 헐렸던 경희궁터를 1985년부터 복원하기 시작하였고, 정문인 흥화문을 1988년 6월 24일에 복원하였다. 경희궁 터 일부에는 서울시립미술관을 지어 1988년 8월에 1차로 개관했다(서울특별시 1990, 934-6). 판자집이 모여있던 정동 러시아대공사관 역시 1987년도 약 3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공원화하였다(서울특별시 1990, 681).

## 2) 올림픽 문화이벤트

올림픽 문화예술 이벤트에 대한 준비는 1983년부터 문화공보부의 주도 하에 이뤄졌다. 문화공보부는 1983년 3월 서울올림픽 문화예술행사를 ‘문화올림픽’으로 통칭하고, 3월부터 6개 분야(종합기획, 공연, 전시, 국제문화행사, 문화환경, 행사장) 기획위원회가 각기 기본계획을 작성한 뒤, 8월부터 검토와 의견조회를 거쳐 12월에 기본계획을 발표한다(문화공보부 1983, 23). 이 때 이를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기구로 21명으로 구성된 ‘문화올림픽 추진위원회’를 만들었다(서울특별시 1989, 1223).<sup>125</sup>

기본계획인 『문화올림픽계획』이 내세운 목표는 다음과 같다. 우선, “민족문화 중

<sup>125</sup> 21명은 다음과 같다(문화공보 1983, 23). 문화공보부장관(위원장), 문공부 차관, 체육부 차관, 문교부 차관, 교통부 차관, 서울시 부시장, 조직위 사무차장, KBS사장, 한국문화예술진흥위원장, 한국국제문화협회장, 최운수(문화재), 허규(공연), 이경성(미술), 예용해(문화), 최정호(문화), 이강숙(음악), 황병기(국악), 반영환(문화), 김성우(문화), 문공부 문화예술국장.

흥계기 마련”을 내걸고 문화예술계의 발전과 시민들로 하여금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첫번째 목표였고, 다음으로 “한국 민족문화의 독자성과 우수성 부각”을 내걸고 한국문화의 독자성과 우수성, 그리고 북한에 대한 문화적 우월성을 보여주는 것이 두번째 목표였다(문화공보부 1983, 5). 이렇게 본다면 1983년의 시점에서 올림픽 문화예술행사는 1981년 개최 확정 당시 설정했던 올림픽의 목표에 상당부분 부합하는 것이었다. 문화예술행사들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국문화예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지위를 높이며, 북한에 대한 우위를 입증한다는 것,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시민의 긍지와 문화예술영역을 발전시킨다는 목표설정은, 올림픽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지위를 높이고 북한에 대한 우위를 입증하며, 국내사회에 대해서는 질서와 통합을 만들고 사회를 발전시킨다는 올림픽 전반의 목표설정과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략 하에서 조직위원회와 서울시 등은 서울올림픽 문화예술축전을 매우 큰 규모로 만들었다. 올림픽 문화예술행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개최식부터 살펴보자.

개폐회식의 기획이 본격화된 것은 1986년부터였다. 86년 7월 조직위원회는 개폐회식의 기획조직으로 ‘개폐회식 기획단’을 구성했다. 현재까지도 잘 알려진 이어령을 비롯한 총 13명으로 구성된 기획단은 1987년 4월에 대본을 완성하여 발간하였다(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1989, 391).<sup>126</sup> 대본은 2월에 ‘장벽을 허물고’라는 제목으로 나왔다가 곧 ‘벽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바뀌어 발간되었다(김민희 2016년 7월 11일). 이는 서울올림픽의 슬로건인 ‘화합과 진진’을 보다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형상화하고자 만든 제목으로 설명된다.

기획자들은 서울올림픽의 개최를 ‘벽을 넘는’ 행위로 의미화하고 있다. 서양 중심 올림픽의 역사가 만들어낸 문화와 인종의 벽, 분단 상황이 만들어낸 이념의 벽, 선진국과의 경제적 격차라는 벽 등을 넘어서는 것이 서울올림픽이라는 것이다.

이 위에서 기획단은 주제의식, 전통예술의 고유성, 그리고 뉴미디어의 활용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공연을 계획했다. 우선, 하늘과 땅, 인간의 융합을 사고했던 한국의 전통사상을 평화사상으로 해석하는 가운데, 기획단은 벽을 부수는 행위나 벽을 넘는 존재로서의 물을 형상화한 공연,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공연 등을 내정하여 주제의식을 드러내고자 했다. 그리고, 올림픽 기획 초기단계부터 강조되어 온 전통예술의 고유성을 드러내는 일 또한 중요했다. 그래서 고유의 악기, 고유의 춤과 놀이에 기초한 공연과 여백을 중시하는 동양적 미학을 보여주는 공연이 내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성화대에 첨단기술을 사용하고 레이저광선을 이용하는 등 첨단기술을 통해 관람객에게 충격을 주고자 하는 공연도 내정되었다(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1987, 49-52).

<sup>126</sup> 기획단 명단은 다음과 같다. 박용구 (단장, 음악평론가), 이어령 (이화여대 교수), 최정호 (연세대 교수), 이강숙 (서울대 교수), 변종하 (서양화가), 표재순(MBC 제작이사), 이동규 (KBS 심의위원), 최열곤 (서울시 교육감), 한양순 (연세대 교수), 유덕형 (서울예술전문대학장), 오태석 (연출가), 장주호 (조직위 사무차장), 김치곤 (조직위 문화식전본부장).

86 아시안게임 당시 설치된 성화대는 경기장 외곽에 세워진 9미터짜리 구조물이었다. 그리고 전통문화의 재연이라는 주제의식에 맞춰 ‘솟대’를 형상화했다는 의미가 부여되었다. 성화 점화자는 단거리 육상종목 스타선수 장재근과 박미선이었고, 이 둘이 임시로 설치된 계단을 올라가 성화대에 불을 붙였었다.

하지만 ‘발전’과 ‘침단’의 이미지를 녹여내고자 했던 서울올림픽 성화 점화였기에 여러 가지가 바뀌었다. 우선 성화대를 아시안게임 당시의 9미터 높이에서 22미터 높이로 바꾸었다(김경훈 2000b, 223).<sup>127</sup> 이유는 경기장 규모에 비해 크기가 왜소하고, 관중의 시야를 가린다는 이유였다(『올림픽뉴스』 1987년 4월 7일). 올림픽 상징조형물 ‘평화의 문’을 건립할 당시와 마찬가지로 발전국가의 추진엘리트들은 조형물의 규모를 통해 발전을 상징화하려 했음이 드러나는 장면이다. 이에 더하여 성화대는 세계수(世界樹)의 형상화라는 의미가 첨가되었다. 기획자들은 성화대와 점화 행사에 다음과 같은 의미를 부여하였다(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1988, 51).

“성화대 자체를 연출도구로 응용하여 세계수가 되게 한다거나 또한 그것이 성화대의 제막식 같은 역할을 하여 그 거대한 위장물이 걷히면서 개회식 직전에 그 모습을 드러내도록 한 아이디어에 의해 (충격의 전달)이 실천된다. 이십미터가 넘는 조각위장물이 삽시간에 사라지고 성화대가 신비하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고도의 과학기술을 필요로 한다. 그것이 드라이 아이스처럼 고체에서 기체로 직접 승화되거나 또는 컴퓨터의 컨트롤로 아름답게 벗겨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학기술과 관객의 의표를 찌르는 연극성, 그리고 조각과 같은 미적인 조형성이 한데 어울려 새로운 충격인자를 만들어 내게 될 것이다.”

성화점화를 통해 과학기술을 자랑하여 관객에게 ‘충격’을 준다는 것, 그래서 한국의 ‘발전’ 정체성을 구현한다는 것이 기획자들의 의도였다고 보여진다. 그래서 성화대상단은 대형풍선을 달아 나무를 형상화하고, 성화 점화는 지상에서 대형원반을 상승시켜 점화하는 방식으로 만들었다. 원반은 피아노줄을 도르레로 감아서 올라가게 제작되었는데, 균형의 문제로 인해 점화 주자를 세명으로 만들었다. 그리고는 여기에 개폐회식의 주제 중 하나인 ‘천지인’의 조화, ‘지덕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김민희 2016년 7월 11일).<sup>128</sup>

<sup>127</sup> 높이를 두 배 이상 올린 이유는 9미터짜리 성화대가 너무 낮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으로 전해진다(박세직 1991, 27). 이 역시 발전주의적 미학의 산물이라 판단된다. 관중석 상단이라는 점이 있긴 하지만, 그 전 올림픽 성화들은 모두 모두 점화자가 점화대에 선 상태로 점화할 수 있도록 매우 낮게 설계되었다. 몬트리올 올림픽의 경우 평지에 성화대를 두었음에도 매우 낮은 성화대를 활용했다. LA올림픽을 제외하고는 성화대는 매우 낮은 위치에 존재했다.

<sup>128</sup> 이 외에도 서울시는 한국의 발전을 상징하는 건물이었던 여의도 6.3빌딩 꼭대기에 지름 8미터, 높이 8미터 크기의 성화대를 따로 만들고, 올림픽 개회식과 동시에 점화해 폐회식에 맞춰 소화했다(MBC, 1988년 9월 17일). 그렇다면, 추진엘리트들이 보기에 올림픽을 상징할 만한 조형물이 자리할 장소는 발전을 의미하는 장소성을 가진 공간이었다. 올림픽 성화도 발전

최종의 성화봉송주자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예를 들어, 1964년 도쿄올림픽 당시 점화자였던 사카이 요시노리는 1945년 8월 7일 원자폭탄이 투하된 히로시마에서 태어난 와세다대학 학생이었다. 일본인답지 않게 서구적이었던 그의 신체는 ‘일본의 부활’을 상징하는 신체였다. 서울올림픽의 경우 성화봉송 주자와 점화자를 나눴다. 성화를 경기장 안으로 가지고 오는 역할은 1936년 베를린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손기정이 맡았고, 최종주자는 1986년 아시안게임 3관왕 임춘애가 맡았으며<sup>129</sup>, 점화자는 교사인 장성만, 마라톤선수 김원탁, 서울예고 무용과 학생 손미정이 맡았다.<sup>130</sup>

10시 30분부터 이뤄진 개회식은 다음과 같이 이뤄졌다(서울특별시 1990, 82-123;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1988, 1-41).<sup>131</sup> ① 강상제(江上祭) - 경제발전과 화합의 상징으로 의미화된 한강에서 오대양, 동과 서 등을 상징하는 색으로 장식된 배들이 올림픽과 관련된 숫자(24, 160 등)로 무리 지어 주경기장으로 향하고, 그 중 한 척은 개막식에 쓰일 거대한 북(용고)을 주기장으로 운반한다. ② 새벽길과 용고행렬 - 우주의 탄생과 길맞이를 상징하는 무용에 이어 용고가 들어와 성화대 밑에 자리한다. ③ 세계수 춤과 천지인 - 한국 선녀와 희랍여신을 상징하는 이들의 무용에 이어 성화대

경관의 일부로 만들었던 것이다.

<sup>129</sup> 박세직(1991, 7-10)에 따르면 최종주자 여론조사 결과 1위는 손기정, 2위가 임춘애였다. 그래서 손기정이 최종주자를 맡기로 되어있었으나, 개회식 전에 일본언론에 알려지면서 급하게 최종주자가 임춘애로 변경되었다고 한다.

<sup>130</sup> 강신표(1991, 20-22)는 손기정, 임춘애, 3명의 점화자를 유교의 위계에 빗대어 하늘과 땅, 사람을 상징하는 것으로 풀이했고, 3명의 점화주자 역시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동시에 서울올림픽 행사를 구성하는 학술, 체육, 예술의 상징으로도 해석했다. 또 성화 점화행위를 사람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 불을 붙이는 행위로 해석하면서, 성화점화를 ‘천지인(天地人) 사상의 발현으로 해석했다.

<sup>131</sup> 개회식은 1988년 9월 1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치러졌다. 이는 방송 중계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1980년대 들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TV방송중계권료는, 1984년 LA올림픽부터 IOC와 개최도시 배당 비율을 10대 90에서 33대 66으로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수천억원이 예상되는 수입원이었다(Preuss 2000, 107-112). 서울올림픽 마스터플랜 역시 서울올림픽 총 예상수입 7,477억원의 절반인 3,838억을 중계권료 수익으로 충당할 계획을 세웠었다 세웠다. 그 중에서도 미국의 주관방송사(NBC, ABC, CBC중 하나)는 이른 바 ‘큰손’이었다. 1980년대 들어 중계권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한 1980~84년 사이 이들의 지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75%를 상회했다. 따라서 미국중계권료는 가장 핵심적 서울올림픽 소득원이었다고 할 수 있다.

올림픽 유치 당시 경제적 부담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었음은 2장에 서술된 바 있다. 그렇기에 미국을 상대로 한 올림픽 중계료를 최대한 받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했다. 그래서 9월 20일로 예정되었던 개막식은 9월 17일 오전으로 옮겨지게 된다. 서울입장에서는 토요일 아침시간이고, 미국 현지에서는 금요일 저녁 ‘프라임 타임’이라는 이유에서였다(『매일경제』 1985년 6월 6일, 12; “개폐회식 개최시간에 대한 의견 통보”, 1985년 11월 20일). 그 뿐 아니라 육상, 수영, 체조, 복싱, 농구 등 미국에서 인기 높은 5개 종목 결승전도 모두 오전이나 이른 오후에 열리도록 시간을 조정했다. 또 유럽 중계권을 의식해서 축구, 핸드볼, 사이클 등은 늦은 저녁에 결승전이 열리도록 했다(『중앙일보』 1985년 7월 27일, 5). 이 정도는 예외였다. 아예 미국 프라임타임 중계를 늘리고자 1987년부터 정부는 ‘일광시간절약제’, 즉, ‘서머타임’ 제도를 실시해 1988년까지 운영했다(김정미, 미상). 2년 동안 한국인 전체의 일상을 바꿀 만큼 미국은 중요한 구매자였던 것이다.

위 ‘세계수’ 조형물(풍선)이 하늘로 올라가고 무용수들도 풍선을 하늘로 날린다. 무용수들은 정사각형과 삼각형으로 천지인 사상을 표현한다 ④ 태초의 빛과 어서오세요 - 1500여명의 무용수들이 ‘welcome’과 ‘어서오세요’ 모양을 만든다. ⑤ 공식행사 - 선수단 입장, 개회선언, 올림픽기 게양, 성화 점화, 선서 ⑥ 좋은 날과 태평성대 - 강복을 비는 의미에서 76명의 패러글라이더들이 낙하하고, 태평성대를 상징하는 조 선시대 궁중무용이 이어진다. ⑦ 혼돈과 ‘벽을 넘어서’ - 60개국 160종류의 가면들이 어지럽게 돌아다니고, 스탠드 지붕 상단엔 20개의 한국 전통탈이 경기장을 쳐다 본다. 이들이 물러간 자리에서 오와 열을 맞춘 1008명의 태권도 격파시범으로 ‘벽을 넘는다’는 의미를 형상화한다. ⑧ 정적과 새싹 - 태권도 시범단이 사라지고 아무 것도 없는 운동장에 굴렁쇠 소년 한명이 입장하고, 이어서 초등학교 1200명이 나와 다양한 놀이를 선보인다. ⑨ 화합과 한마당 - 고놀이(고싸움)가 동서의 만남을 형상 화하고 나면, 중앙무대에서 코리아나가 ‘손에 손잡고’를 부르며 72~84년 올림픽 마 스코트 및 전 공연출연자들이 나와 함께 합장을 한다. 그 외곽에는 성화봉송축전에도 참여했던 12개국의 민속무용단이 각자의 민속무용을 선보인다.

개회식 중 공식행사 이전 순서들은 주로 한국의 전통사상 및 예술의 재연에 초점을 맞추고, 공식 행사 이후 순서들은 한국의 발전 및 평화 올림픽 정체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의 발전은 굴렁쇠소년으로 대표된다고 할 수 있는데, 기획자 이어령은 이 공연이 ‘전쟁고아’와 ‘해외입양’ 등으로 부정적이었던 한국 어린이의 이미지를 깨고 싶어서 기획한 것으로 증언한다(김민희, 2016년 6월 27일).

여기서 지적해야 할 것이 있다. ⑦ ‘혼돈’과 ‘벽을 넘어서’인데, 이는 현재까지 많이 회자되고 있지만 얹지만 따져보면 많은 문제가 있다. 일단은 혼돈을 상징하는 장치로 전통 탈을 활용한 것 자체가 근대를 ‘질서’로 표상하고 전통을 ‘무질서’로 표상한다는 점에서 식민주의적 발상이라고 볼 수 있다.

가장 문제적인 것은 혼돈에 이어 ‘벽을 넘어서’를 공연한 이들이었다. 1008명의 태권도 시범단원 중 808명은 전원 3공수여단 소속 군인들이었다(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1989, 394). 1980년 5월, 권력엘리트에 의해 ‘혼돈’의 주범으로 지목 당한 광주시민들을 학살하는 데 투입된 부대 중 하나였다. ‘혼돈’을 시각화하기 위해 집어넣은 자욱한 연기 또한 5월 광주의 그것을 연상시킨다. 안개가 남아있는 그 운동장에 공수부대원으로 이뤄진 태권도단이 ‘질서 정연’하게 들어와 ‘격파’ 시범을 보이는 것은,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문제적일 수밖에 없다. 이를 의식하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추진엘리트 및 문화엘리트들이 당시 광주에서의 학살을 어떻게 생각하지 보여주는 일면이고, 올림픽을 통한 ‘사회통합’이라는 것이 가지는 한계를 말해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80년대 국가가 사회정치를 위해 만들어낸 내러티브는 무엇이었는지 상기해보자. 예외와 친절을 갖춘 ‘문화민족’으로 구성된 우리 사회가 1980년에 이르러 산업화 속에서 그 미덕을 잃고 사회의 무질서와 혼란 가운데 곤란을 겪고 있지만, 올림픽을 계기로 ‘의식의 선진화’를 통해 ‘문화시민’을 양성하여 ‘국민통합’과 ‘선진사회’를 이

록해간다는 내러티브였다. 조선의 태평성대에서 혼돈으로, 혼돈의 격파와 1981년 9월 30일에 태어난 아이의 등장, 그리고 화합이라는,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1980년대의 사회정치 내러티브를 재연하는 듯한 인상을 상당히 짙게 함축하고 있다.

올림픽을 즈음하여 열린 문화예술축전은 전무후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한 행사였다. 핵심 기획진만 하더라도 100명이 넘는 이 행사는,<sup>132 133</sup> 국내에서는 28개 관계기관과 528개 예술단체, 그리고 3만 722명의 예술인이 여기에 참가하였고, 국외에서도 73개국 43개 단체, 2,399명이 참여하였다(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 1989, 429). 예산은 총 280억 4천만원 가량 소요되었고, 그 중 민간기업이 1/3 정도인 96억 5천만원 정도를 부담했고, 나머지는 국고, 문예진흥기금, 서울시, 조직위원회 기금, 공영방송 등의 재원으로 진행되었다. 관람인원은 우리나라 총인구의 1/4 수준인 연인원 9,551,488명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행사였다(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89, 9).

1987년 2월 16일부터 9월 17일까지의 작업한 기획안 속에서 기획진은 1983년도에 설정했던 목표를 약간 수정한다. 다음과 같이 말이다. ① 우리 문화예술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선양하고 국제적 공감대 확산, ② 우리의 문화역량을 총집결하여 다양하고 격조있는 문화예술축제로 조직, ③ ‘인류의 화합과 전진을 서울에서 구현하는 범세계적인 문화예술축제로 운영, ④ 문화예술계의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참여 확대로 한국 문화예술 도약의 전기 마련. 이상 네 가지 중 앞 두가지는 올림픽 준비 초기에도 등장한 것으로, 국제사회 내 지위향상을 위해 한국 사회의 문화자본을 전시하고, 이를 통해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에, 뒤 두가지는 올림픽이 다가오면서 새로이 추가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평화 및 탈냉전 올림픽 정체성에 맞는 문화예술축제를 만드는 것과, 국내적으로 문화예술 엘리트 및 전문가집단을 아우르는 행사를 만드는 것이 그것이다. 이 역시 시민사회의 성장에 따른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988년 8월 17일부터 10월 3일까지 총 50일간의 기간에 걸쳐 진행된 행사(성화

<sup>132</sup> 추진위원회 32명, 자문역할의 기획전문위원 22명(서울특별시 1990, 1224), 총 9개 분야(문화재전시, 미술전시, 문화전시, 전통예술, 음악공연, 무용공연, 연극공연, 대중예술, 선수촌 문화행사) 89명 등(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89, 13-15).

<sup>133</sup> 이와 별개로 서울시는 1987년 3월 13일 10명이 모여 구상모임을 갖고, 24일 10명의 자문단을 만들었으며, 4월 21일 57명으로 이뤄진 기획조직을 만들었다(서울특별시 1990, 1225). 서울시의 구상 및 자문단은 관료가 거의 없이 문화예술 및 언론계의 엘리트들로 구성되었다.<sup>133</sup> 하지만 이들의 기획안은 추진엘리트의 그것과 매우 닮았다. 아니 오히려 더욱 더 발전 국가의 국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목적을 위해 문화자본을 전시하는 방식으로 문화예술축전의 기본을 구상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들이 ‘추진방침’으로 정한 것은 서울이 문화도시로 도약하는 기회가 되도록 활용하고, 개최도시로서의 인상을 남길 수 있어야 하며, 한국문화의 독창성을 알리고, 도시환경을 함께 정비하고, 야외축제의 경우 한강과 같이 발전상을 보여줄 수 있는 곳에서 치르는 것 등이었다. 서울의 발전을 경관화하고 문화자본을 전시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오히려 국가기구의 관료엘리트보다 더욱 발전국가적 철학에 충실한 모습이라고도 해석된다. 서울시는 87년 11월 27일 계획을 완료하고 88년 2월 8일 제작진을 구성했다(서울특별시 1990, 1226-1227).



봉송 및 개폐회식 제외)는 크게 경축행사와 공연행사, 전시행사로 나뉘볼 수 있다.

[표 15] 서울올림픽문화예술축전 행사내역  
(출처 :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1989, 430-455)

행사명	내용	
문화예술축전개막제	국악 및 관악협주, 궁중무용 (관람인원 1300, 객석 점유율 61%)	
경축전야제	오페라 '시집가는 날' (관람인원 5080명, 객석 점유율 65%)	
한강축제	개막제, 청소년 축제, 세계음식축제, 레이저 쇼, 젊음과 민속의 광장 등 (거리축제와 합하여 317만 5천여명)	
거리축제	꽃차퍼레이드, 상감마마행차 재현, 대학로 축제, 가로예술제,	
서울국제무용제	국내 8개 무용단(24,651명 관람), 해외 6개 무용단 공연(36,873명 관람, 볼쇼이 발레단 공연이 18,904명)	
서울국제연극제	국내 13개 극단 공연(97,655명 관람), 외국 6개 극단 공연(21,276명 관람)	
서울국제음악제	15개 국내외 클래식음악 공연 (42,118명 관람, 모스크바 방송합창단 및 모스크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공연 관객 19,233명)	
기념음악회	오페라 및 클래식연주회 5개 (27,104명 관람, 라스칼라오페라단의 '투란도트'에 11,685명 관람)	
세계합창제	5개 국내합창단과 5개 국외합창단 공연 12,925명 관람, 객석점유율 94%)	
서울국제가요제	10개국 21명 가수 참가	
대한민국국악제	12개 공연	
종묘악의 밤	종묘제례악 공연	
국악큰장치	대취타, 판소리, 사물놀이, 민속마당놀이 등	
서울국제민속축제	12개국 민속무용단 서울 및 성화봉송지역 공연, 개회식 공연	
영화축제	해외영화 20개국 27편(동구권 영화 6편), 국내영화 12편 상영	
서울미술대전	한국 중진 미술가 130명 작품 전시 (48,157명 관람)	
한국문화재특별전	한국의 미 특별전, 황룡사지특별전, 백제와당특별전, 한국고인쇄유물특별전, 가야토기특별전, 한국호랑이민예특별전, 서울시민소장문화재전 (531,523명 관람)	
문화소개특별전	한국전승공예대전, 동서현대대예전, 국제현대서예전, 한국음식문화5천년전, 전통민속공예전, 한국풍물사진전, 서울영상전 (152,832명 관람)	
올림픽기념종합전	세계아동미술전, 스포츠미술공모전, 국제스포츠우표전, 한국복식2천년전, 한국전통자수·매듭전, 이탈리아스포츠유물특별전, 고대올림픽조각 사진전, 서울올림픽예술포스터·판화전	
세계현대미술	국제야외 조각심포지움	32개국 36명의 작가(한국작가 5명, 공산권 작가 8명)가 1987년 7월~8월과 88년 3~4월, 2번에 걸쳐 국내에 체류하면서 작품을 만들고 올림픽 공원에 설치.
	국제야외 조각초대전	66개국 155명의 작가(한국작가 10명)에게 조각작품 출품의뢰, 올림픽공원 설치

제	국제현대 회화전	‘화합과 전진’을 주제로 62개국 156명(동구권 8개국 19명, 한국 26명)에게 출품의뢰
	한국현대 미술전	국제야외조각심포지움 및 국제현대회화전에 대한 한국미술계의 반발을 배경으로 한국화, 서양화, 조각, 공예 부문 500점 전시.

이상의 행사를 내용별로 나누면 경축행사 5개, 공연행사 12개, 전시행사 25개다(서울특별시 1990, 1232). 1987년 초 계획했던 것처럼 행사는 전통예술을 보여주고, ‘화합과 전진’으로 대표되는 올림픽의 정체성을 연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올림픽뿐 아니라 공연과 전시부분에도 동구권 예술인들이 참여한 것은 후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였다. 실제로 동구권의 문화예술인들을 두고 “민간 데탕트” 같은 표현이나(경향신문 1988년 6월 21일, 4), “동서예술 ‘손에 손잡고’”(매일경제, 1988년 8월 17일, 20), 같은 표현이 활용되면서 시민사회의 높은 기대감이 표현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불쇼이발레단 공연에서는 노태우 대통령과 소련영사단이 만나 민간교류의 확대를 잠시 논의하기도 하였다(『동아일보』 1988년 9월 5일, 1).

뒤에서 보겠지만, 올림픽도 그렇고 문화예술행사에 있어서도 평화라는 주제의식을 앞세운 것은 급조된 감이 있다. 문화예술축전을 크게 나누면 52개지만 공연의 개수로 환산하면 수백개로 늘어난다. 그 중 ‘평화’, ‘화합’이 들어가거나 주제의식으로 활용된 것은 “세계현대미술제” 하나였다. 올림픽공원에 동구권을 포함한 5대륙 작가들이 조각작품을 전시하여 나름의 상징성을 갖추었다지만,<sup>134</sup> 이 행사는 올림픽공원 상징조형물의 크기가 축소됨으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었다(박세직 1991, 116). 즉, 일찍부터 올림픽의 정체성 형성을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게다가 평화라는 주제의식 또한 작가들에게 강조된 바가 없다. 결국 특별한 주제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문화예술 이벤트의 물량을 최대화시킴으로써 축제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동시에 한국인의 문화자본이 풍부함을 가장하는 역할이 올림픽 문화이벤트의 역할이라 볼 수 있다.<sup>135</sup>

<sup>134</sup> 국제야외조각 심포지움의 작가의 국적은 유고, 쿠바, 알제리, 루마니아, 페루, 스페인, 스웨덴, 한국, 네덜란드,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이스라엘, 그리스, 이탈리아, 소련, 미국, 캐나다, 호주, 스위스, 멕시코, 콜롬비아, 베네주엘라, 영국, 폴란드, 아르헨티나, 일본, 서독, 브라질,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였다. 그리고 세계야외조각 초대전은 서유럽 18개국 54점, 동유럽 8개국 18점, 미주 16개국 36점, 중동 8개국 10점, 아프리카 4개국 4점,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12개국 33점이었다(서울특별시 1990, 1372-1377).

<sup>135</sup> 이처럼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행사가 아니라 7년간 다양한 형태의 습속 개조 및 도시개조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비보다 간접비용이 훨씬 더 들어갔다.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세입 및 세출을 정리하였는데, 이는 직접비용만을 계산한 것이다. 조직위가 결산한 총 수입과 지출은 아래와 같은데(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1989, 826), 총 3,414억원의 흑자를 보고한 조직위는 흑자분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을 만들기도 했다(『중앙일보』, 2008년 9월 17일, 23).

수입		지출	
입장권 판매(330만매)	275억원	시설비	2378억원
방영권	2247억원	기획 및 안전	501억원
휘장 및 기념품 사업	745억원	문화식전	325억원
기념주화 및 메달	1352억원	선수 및 기자촌	309억원
기념우표	29억원	기술비	311억원
복권판매	1118억원	홍보비	228억원
광고	265억원	수익사업비	370억원
선수촌 입촌비	139억원	기관운영비	695억원
기타	442억원	인력 및 물자	107억원
분양대금, 성금, 기부금	2416억원		
계	9098억원	계	5684억원

하지만 서울시(1990, 378-380)에 따르면 서울시가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사용한 간접비는 조직위원회가 사용한 직접비용을 훨씬 상회하는 것이었다. 아래 표(단위: 백만원)와 같이 직접비용의 2배가 넘는 간접비가 소요되었으며, 그나마도 한강개발과 문화시설, 범국민올림픽추진위원회, 사회정화위원회 등 중앙정부가 지출한 간접비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주거 및 가로 환경	가로환경	76,182	문화 관광	숙박시설확충	3,557
	가로장식	3,483		관광안내체계확립	4,735
	불량지구정비	3,101		관광명소개선	53,451
	도시녹화조경	129,804		서울민족문화유적복원	34,860
	한강종합관리및시설개선	609		문화예술축전	8,595
	소계	213,179		문화환경조성	2,970
보건 환경	위생업소수준향상	12,570	시민 참여	문화재개보수	2,812
	공중화장실개선	5,474		소계	110,980
	청소대책	4,398		올림픽홍보	850
	환경보전종합대책	256,941		범시민참여운동	626
소계	279,383	자원봉사활동		8,012	
도로 교통	대중교통체계개선	19,052		질서운동전개	1,762
	경기장연결도로	117,300		시민교육	4,868
	교통처리대책	5		안전관리	23
	주차대책	552		소계	16,141
	교통홍보	139		소계	1,513,462
	소계	137,048	총계	2,373,544	

## 제 5 장 시민사회의 대응과 올림픽의 사회정치의 결과

### 제 1절 국내외적 상황변화

올림픽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외적 상황의 변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시기 국가가 올림픽을 매개로 하여 전개한 사회정치에 대하여 시민사회가 보인 반응을 검토하는 데 있어, 국내외적인 상황의 변화는 너무나도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이 시기를 특징지우는 국내외적인 상황 변화로는 국제적 차원에서의 탈냉전 국면의 형성과 국내적 차원에서의 저항적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민주화를 들 수 있다.

#### 1. 탈냉전 국면의 형성

1980년대 초에도 그랬지만, 한국의 국가는 1980년대 중반부터 사회주의 국가들의 올림픽 참가에 대하여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다. 1980년대의 신냉전 구도 하에서 1980년과 1984년 두번의 올림픽에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국가들의 집단 올림픽 보이콧이 있었다. 이에 따라 서울올림픽의 성공에 있어서 최대 다수 국가의 올림픽 참가가 무엇보다도 중요해졌다. 그래서 국가는 1984년 LA올림픽을 전후하여 사회주의 국가들이 올림픽에 참가하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교류와 교섭에 나섰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성공을 거두는 국면에 이르러서는 서울올림픽을 ‘평화 이벤트’로 다시금 규정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1988년의 올림픽을 즈음하여서는 탈냉전 국면이 형성된다.

##### 1) 1980년대 신냉전과 올림픽 보이콧

2차대전 이후 IOC는 세계 스포츠무대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게 된다. 1차대전부터 2차대전 사이 IOC는 사회민주주의자들의 ‘노동자올림픽(Workers Olympiad)’, 코민테른의 ‘스파르타키아드(Spartakiad)’ 등과 일종의 경쟁구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2차대전 이후 그러한 경쟁관계는 끝났다.<sup>136</sup>

---

<sup>136</sup> IOC의 가장 큰 경쟁상대는 중부 유럽 사회민주주의 세력이 주축이 된 사회민주주의스포츠 인터내셔널이 주최하는 노동자올림픽(Worker's Olympiad)였다. 이 단체는 1920~30년대 비정기적으로 세 차례 대회를 개최했는데, 그 중 두번째인 1931년 비엔나대회는 23개국 8만여명

하지만 이는 IOC가 주최하는 올림픽을 국제사회 내 다양한 갈등이 재연되는 장으로 만들어버렸다. 불참(보이콧), 선수단 철수, 참가자격 박탈 등은 가장 두드러지는 갈등 표현 방식이었다. 2차대전 이후 분단국가인 남한과 북한, 대만과 중국, 서독과 동독 중 사회주의 국가들의 IOC가입 및 참가문제가 1950년대 초부터 1970년대 초까지 지속되었고, 1960년대 중반 이후 아프리카 국가들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및 로디지아(짐바브웨) 올림픽에서 퇴출시켰으며(윤득현 2009, 130), 남아공과의 스포츠교류를 한 국가의 징계 문제로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는 아프리카 30개 국가가 집단으로 불참했다(윤득현 2009, 154-155).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은 1980년대 신냉전과 대규모 올림픽 보이콧의 서막이었다. 서독의 동방정책과 미-중 수교로 이어지던 1970년대의 데탕트 국면은 1979년 이란혁명, 그리고 결정적으로 1979년 12월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함께 종언을 고했다. 중동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약화를 틈탄 소련의 기습행동으로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규정한 카터 행정부는 매우 강하게 반발하였다. 더욱이 1980년의 미국 대선이라는 변수가 존재했기에 미국 정부는 가시적인 방식으로 소련에 대한 제재를 수행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 목적에서 선택된 것이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에 대한 국제사회의 집단적 보이콧이었다(조재기 1987, 3-5).

1980년 1월 20일 카터 대통령은 100여개 국가에 서신을 보낸다. 그 내용은 아프가니스탄 점령군이 2월 이내에 철수하지 않으면 모스크바 올림픽의 장소를 변경하거나, 취소 시 대체경기를 개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미국 올림픽위원회도 카터 대통령의 의견에 찬성했다(“모스크바올림픽 불참문제”, 1980년 1월 29일).

IOC와 ANOC는 2월 초 열린 ANOC총회에서 개최지 변경 거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등 반발했지만, 최종적으로는 62개 국가가 불참, 모스크바 올림픽은 1956년 이래로 가장 적은 81개국기 참가했다(윤득현 2009, 181). 한국 역시 4월에 올림픽 불참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5월 17일 대한올림픽위원회 총회를 통해 올림픽 선수단 불참을 결의하였다(“모스크바 올림픽 불참 결정”, 1980년 5월 17일).

1984년 LA올림픽은 다시 한번 집단 보이콧의 무대가 되었다. 1983년 소련군의 KAL기 폭파 사건이었다. 이 비행기엔 LA출신 사업가 4명이 타고 있었던 관계로, 연방의회와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1984 올림픽에서 소련 선수 배제를 결의하였고(윤득현 2009, 192), “소련금지연합(Ban the Soviets Coalition)”이라는 시민단체도 만들어졌다(D’Agati 2013, 125). 1984년 3월에는 올림픽 아타셰(attache)<sup>137</sup>로 소련

의 선수들이 참가, 이듬해의 LA올림픽 보다 훨씬 더 큰 규모를 기록했다(Riodan 1991, 41). 하지만 중부유럽에서의 파시즘의 위협으로 인해 1937년 이후 단체가 활동을 하지 못했고, 1946년 사민주의 스포츠인터내셔널이 재건되기는 했지만 그 규모는 이전보다 확연히 작았다. 결국, 년 IOC의 산하단체로 편입되었다. 그리고 스파르타키아드는 소련의 국내이벤트가 되었다(Riodan 1980, 173). 국제노동자스포츠위원회(Confédération Sportive Internationale du Travail) 홈페이지 중 “역사소개(history)” 참조.

<sup>137</sup> 아타셰(attaché)는 통역을 비롯한 다양한 업무로 선수단과 조직위원회 사이를 연결하는 수

이 지정한 인물이 KGB의 첩보원 혐의로 거부되었다(Guttman 2002, 159). 1980년 5월, 소련 올림픽위원회는 사회주의 국가 선수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며, 미국 무성이 반사회주의 분위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LA올림픽 불참을 선언했다(D'Agati 2013, 125). 이를 뒤 동독이 유사한 내용의 성명을 통해 불참의사를 밝혔고, 베트남과 몽골, 체코슬로바키아와 라오스, 아프가니스탄과 헝가리, 폴란드가 뒤를 이었다(윤득현 2009, 193-8).

## 2) 1988년 올림픽 개최지 변경론의 등장과 IOC의 대응

1976년 올림픽부터의 집단 보이콧, 그리고 1980년과 84년 미국과 소련이 주도한 집단적 올림픽 보이콧은 서울올림픽에도 영향을 주었다. 1984년 LA올림픽을 앞두고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올림픽 보이콧 움직임이 등장하자, 1988년 올림픽 개최국가 한국의 국제사회 내 정체성이 문제시 되었다. 냉전블록의 한 부분만을 담당해왔던 발전국가의 냉전적 정체성 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개최지를 변경하라는 의견으로 변화하여 발신되었다.

올림픽 개최지를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1984년 5월 29일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를 통해서였다.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연이어 올림픽 불참 결정을 통보하는 상황에서 뉴욕타임즈는 다음과 같이 개최지를 옮길 것을 권유하고 있다.

“개최국에 반대하며 이뤄지는 보이콧을 피하는 방법은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장소를 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이나 소련, 1988년 올림픽이 예정된 남한 같은 분단국은 제외될 것이다. (중략) 지난 세 대회 연속으로 보이콧이 일어났다. 1988년 서울에서는 무슨 일이 있겠는가? 소련은 남한을 국가로 인정조차 하지 않는다. 명백한 위협을 감수하기 보다는 1988년 올림픽을 도쿄나 몬트리올처럼 올림픽 시설이 이미 갖춰진 곳으로 바꾸도록 하자.”(New York Times, 1984. 5. 29.)

유럽 스포츠인들은 1988년 올림픽을 유럽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1984년 6월 1일, IOC가 설립된 장소인 파리 소르본대학에서 열린 IOC 90주년 기념식장에서 비슷한 발언이 또 등장했다. 프랑스올림픽위원회장 넬송 뵘이유(Nelson Paillou)는 “정치적 난맥이 올림픽의 평화적 개최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면, 이런 가능성을 논하는 게 슬프긴 하지만 한국인의 대축제인 올림픽은 연기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는가?”라고 질문하고, “필요한 모든 시설이 거의 갖춰진 도시에서 1988년 올림픽을 열 것”을 제안했다. 그는 바르셀로나를 지목했고, 서울은 2000년 올림픽을 개최하도록 하자고 덧붙였다(UPI, 1984. 6. 1.) 10월 8일 프랑코 카라로(Franco Cararo) 이탈리아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로마에서 열린 유럽NOC 총회장에서 서울 올림픽에는 많은

---

행위를 의미한다.

문제들이 있으므로 서울이 1992년에 올림픽을 개최하고 1988년에는 유럽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UPI, 1984. 10. 8.*).

북한도 서울올림픽 반대론을 주장했다. 1984년 12월 17일 북한의 IOC위원 김유순이 사마란치 위원장에게 보내고 각국 NOC 위원장에게 회람시킨 서신은 “서울은 우정과 조화, 그리고 상호이해의 심화를 목적으로 하는 올림픽 같은 국제적 스포츠 축제의 무대가 될 수 없음”을 주장했다. 서울은 “4만의 미군과 100개가 넘는 핵무기가 존재하는, 전쟁의 항구적 위협이 존재하는 매우 불안정한 곳”이고, 한국은 “정치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있으며,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사회주의 국가 선수들의 안전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대한올림픽위원회 1992, 141-2).

이에 대한 IOC의 대응은 비교적 일관된 편이었다. 큰 틀에서 올림픽 개최지의 변경은 불가하다는 것이었다. 비록 실패하기는 했지만, 1982년도 당시 IOC는 UN 총회로 하여금 올림픽을 정치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하게 하고자 시도한 바도 있다(외교부 홍보문화과, 1982-85). 당연히 올림픽 개최지 변경론이 거론되던 1984년 5월에도 IOC와 ANOC 임원들은 개인적으로 개최지 변경에 반대한다는 것을 밝혔다. 기본적으로 올림픽 개최지가 변경되지 않는 것이 올림픽이라는 행사의 위상을 높여주기 때문으로 그 이유를 예상할 수 있다. IOC입장에서는 서울올림픽의 성공이 IOC의 성공이었다(김경훈 2000b, 61).

한국 정부 역시 올림픽 현장을 준수하고 대회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것임을 선언함으로써 올림픽 개최지가 되기엔 위험하다는 의견을 불식시키고자 했다. 1984년 7월 21일 사마란치 IOC위원장의 서한에 대한 8월 22일 답장을 통해 전두환은 모든 국가에 문호를 개방하는 올림픽 현장을 준수하고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관계자의 안전을 보장할 것임을 천명한다. 국회 역시 7월 2일의 올림픽 대책 임시국회(외무위원회)완전한 문호개방과 참가자의 신변 안전 보장, 그리고 올림픽을 통한 전세계 우호증진과 한반도 긴장완화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외교부 홍보문화과 1984),

1984년 11월부터 대륙별 NOC협의체 및 ANOC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아시아의 OCA와 아메리카의 PASO가 모두 서울올림픽 지원을 결의했고, 유럽의 ENOC는 카라로 회장의 발언을 개인발언으로 돌렸다(이방원 1989 287-8). 11월 5일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ANOC총회에서는 잠시 뒤 설명할 공동개최론, 소련의 IOC비판도 있었지만 1981년 올림픽 개최 결정 당시부터 한국과 가까운 바스케스 라냐 회장의 주도로 ANOC는 155개 참가국 대표 다수의 찬성을 얻어 1988년 서울 올림픽 지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과운드 1995, 60-61). 그리고 1985년 10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기로 되어 있던 차기 ANOC총회를 1986년 초 서울에 여는 것으로 변경했다(최만립 2010, 270).<sup>138</sup>

<sup>138</sup> KOC 부위원장이었던 최만립(2010, 270)의 증언에 따르면 차기 ANOC총회 장소를 변경해 달라는 노태우의 건의를 라냐 회장이 받아들여서 이뤄진 것이라 한다.

올림픽 보이콧 문제 대응을 위해 소집된 12월 로잔 IOC 임시총회는 올림픽 보이콧 예방을 위한 몇 가지 중요한 결정을 했다. 첫째, IOC는 1988년 올림픽의 서울 개최 지지를 결의했다. 둘째, 보이콧에 대하여는 처벌하지 않는다. 대신 불참을 표명할 시에는 선수만 아니라 임원들도 함께 참가자격이 사라지며, 각종 스포츠기구의 임원 자격도 사라진다. 셋째, 올림픽대회 참가조정장은 개최국이 아니라 IOC가 대회 1년 전에 발송한다. 각국 NOC는 대회 8개월 전까지 참가여부만 통보하면 되고, 선수단은 확정 이후 통보해도 무방하다. 이러한 안건이 모두 대다수의 찬성 하에 통과되면서, 서울올림픽 개최지 변경론은 일단락 되었다(파운드 1995, 64-66).

### 3) 남북체육회담

하지만 1984년 11월과 12월 사회주의권 국가들로부터 남북한 올림픽 공동개최론이 제기되면서 새로운 국면이 형성된다. 동독의 만프레드 에발트(Manfred Ewald) 동독올림픽위원회회장은 11월 ANOC총회 자리에서 1988년 경기 중 일부를 북한에서 개최하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올림픽소식』 1984년 12월호, 17). 같은 달 19일 쿠바의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는 사마란치 IOC위원장에게 보낸 서신 후반부에서 공동개최를 제안했다. 서신 전반부에서 특유의 문장력으로 당시 올림픽이 처한 위기의 원인을 올림픽 정신의 훼손에서 찾았던 그는 올림픽을 위기에서 구하는 방편으로 남북한의 올림픽 공동개최를 제안했다.

“서울에서 열리는 올림픽은 한국인의 평화에 기여하지 못합니다. 전쟁의 상처를 치료하지도 못합니다. 인민들 사이에 진정한 평화와 조화, 협동과 우정을 촉진하지도 못합니다. 물론 최근에 반복되는 위기에 대하여 올림픽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명예와 힘, 그리고 통일성도 얻지 못할 것이라 봅니다. 오히려 위기를 더욱 양산하지는 않을까 의구심마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과 우정을 담아 제 생각을 말씀 드리자면, 저는 회복 불가능한 손상은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988년 한반도의 두 나라가 가능성 및 관심도에 따라 동일하게 또는 거의 비슷하게 올림픽 개최를 공유한다는 용감하고도 건설적이고도 현명한 결정을 통해서 말입니다. 물론 이는 완전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한반도 양쪽의 지도자들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저는 이것 외에 다음 번 올림픽의 명예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Castro, 1984. 11. 29).”

이를 받아들여, IOC는 1985년부터 공동개최론이라는 의제를 두고 남북한 올림픽 위원회 대표단이 테이블에 앉아 협상을 진행하도록 하는 역할을 맡았다. 비록 IOC의 입장은 확고했지만, 1988년 올림픽 개최지에 관한 여론이 안정적인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1985년 4월, UN에서는 한국 정부와 관계 없이 올림픽에의 다수 참가를 위한 결의안 채택이 추진된 바 있는데, 한국 정부는 의외로 이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반응했다. 결의안을 둘러싸고 대결 구도가 형성되면 오히려 서울이 분쟁지역임이 드러나는 꼴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결의안은 공동개최를 제안했던 쿠바의 지도자 카스트로의 반대로 인해 무산된다(외교부 홍보문화과, 1982-85). 그 정도로 한국과 서울의 입지는 불안정한 상황이었다.

회담이 가능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남한과 북한 모두가 올림픽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 1984년부터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올림픽이 서울에서 열리는 걸 원천 앓았고 1988년에도 사회주의 국가들의 보이콧을 기대했었다. 하지만 북한의 기대와 달리 사회주의 국가들이 올림픽 참가를 원하는 것이 1985년 사회주의권 스포츠 외교 무대에서 확인되었다. 사마란치 IOC위원장도 1985년 3월 29일, 주제네바 한국대사와의 면담을 통해 북한을 제외한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이 서울올림픽에 참가하고자 한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외교부 홍보문화과, 1985). 그러자 IOC의 제안을 받아들여 북한이 협상테이블에 앉은 것이다(이방원 1989, 291-6). 남한 역시 1984년 올림픽부터 북한과 단일팀을 만들어 출전할 생각이 있었지만, 협상이 결렬되고 무산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러한 교착상황에서 IOC는 양측의 필요 - 한국의 단일팀 논의와 북한의 공동개최 논의 - 를 충족시켜줄 것을 내세워 회담을 성사시켰다. 장소는 스위스 로잔의 IOC본부, 시기는 1985년 10월부터 1987년 7월까지 네 차례였다.<sup>139</sup>

회담은 제 1차(1985년 10월 8~9일), 제 2차(1986년 1월 8~9일), 제 3차(1986년 6월 10~11일), 4차(1987년 7월 14~15일), 총 4회에 걸쳐 열렸다. 의제는 대회 명칭과 공동개최 인정 문제, 개폐회식의 공동입장 문제, 문화행사에의 북한 참가 및 개최 문제, 군사분계선을 넘는 경기(마라톤 및 도로사이클) 개최 문제, 북한에서의 개최종목 결정 문제 등이었고, IOC와 남한, IOC와 북한이 따로 회담한 뒤 결론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파운드 1995, 135). 여기에 북한은 공동개최를 전제로 하여 방송중계권료 배분도 안전에 올리고자 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북한은 완전 공동개최(명칭에 평양 병기, 경기의 절반 평양 개최, TV중계권료 배분, 공동조직위원회)를 주장하면서 회담에 임했다(파운드 1995, 107-108; 113-116). 반면에 남한은 이 대회가 '서울올림픽임을 인정하고 북한이 '참가자'의 형태를 취한다면 두 개 종목의 개최권을 넘길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1989b, 160-175).<sup>140</sup> IOC는 북한이 주장하는 공동개최가 도시 개최를 원칙으로 하는 IOC현장에 위배되므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지만(파운드 1995,

<sup>139</sup> 당시 IOC위원이던 리차드 파운드의 증언에 의하면 IOC가 공동개최 협상을 주관하게 된 것은 서울 대회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감을 형성하고, 사회주의 국가들의 불참선언을 방지하며, 북한의 올림픽 방해행동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였다고 설명한다. 또 그는 북한 역시 공동개최가 목적이 아니었다고 본다. IOC가 공동개최를 거부하면 이를 토대로 사회주의 국가들에 보이콧을 요구할 예정이었다는 것이다(파운드 1995, 85-6).

<sup>140</sup> 4월 방문 당시 사마란치는 한국 대표단과 탁구와 양궁 두 종목의 전경기 평양개최 허용을 합의했으나, 이후 체육부 장관 명의로 양궁 대신 펜싱으로 바꾸었다. 한국의 금메달 유망종목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파운드 1995, 190-191).

107-108; 113-116), 남한에게는 개최 종목을 더 양보할 것을 요청했다.

3차 회담 막바지에는 탁구와 양궁 종목의 전경기 및 축구 1개 조 예선 경기 평양 개최, 도로사이클의 군사분계선 횡단 코스 개최, 문화행사의 서울과 평양 개최 등에 대한 잠정적 합의가 도출되기도 했다(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1989b, 194-5). 하지만 북한이 이를 뒤엎고 4차회담에서 공동개최, 8개 종목 평양 개최, 별도 명칭 사용, 별도 조직위원회 구성, TV방영권료 배분을 주장하고, IOC의 중재안인 개최도시로 '서울' 표기, 2개 종목 전경기 평양 개최(양궁, 탁구), 3개 종목 일부 평양 개최(여자 배구, 축구 예선 1개조, 도로 사이클 코스를 북한 내로 한정)에도 합의를 거부하면서 협상은 결렬되었다.

1987년 9월 17일 IOC는 회원국에 서울올림픽 초청장을 발송했고, 올림픽 공동개최 혹은 분산개최는 무산되었다. 북한 정부와 올림픽위원회는 1월 12일, 5월 27일, 6월 2일, 최종적으로 9월 2일까지 네 번에 걸쳐 불참 선언을 반복했고, 남한 정부와 국회, 조직위원회는 1월 14일 성명, 2월 25일 대통령 취임사, 3.1절 기념식사, 6월 3일, 7월 9일, 7월 28일, 9월 3의 참가 축구 성명, 회담 제의, 결의안 등으로 대응했다(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 1989b, 304-343).

부르디외의 개념을 통해 회담을 평가하자면, 남북회담은 올림픽 개최라고 하는 상징자본을 획득하기 위한 남북간의 투쟁이었다. 한국은 올림픽을 개최하는 도시가 서울이며, 개최하는 주체 역시 한국임을 국제 사회에 인식시켜야 했다. 올림픽 개최국으로 국제사회에서 문화적 인정을 획득하고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 특히 북한보다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는 것은 발전국가의 올림픽 목표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1988 서울올림픽개최에 관한 보고", 1981년 10월 16일; "1986아시아·1988올림픽대회 종합시행계획", 1983년 12월). 북한의 전략은 올림픽 개최지라는 상징자본을 서울이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본디 북한의 전략은 서울의 개최올림픽을 막아 국제 사회 내에서 한국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일단 공동개최로 방침이 정해지자, 북한은 '올림픽 개최지'로서의 상징자본 획득에 초점을 맞췄다. 평양올림픽이라는 명칭, 별도의 조직위원회, 총 23경기 중 1/3을 넘는 8경기를 고집한 것도 상징자본과 관련이 있다. 8개 종목 정도를 개최해야 "평양 경기가 서울에 '중속'되어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파운드 1995, 263). 결국, 남북회담에 임한 남북한 정부는 올림픽 개최를 둘러싸고 국제사회로부터 받을 인정을 둘러싼 상징투쟁을 펼쳤던 것이다.

#### 4) 사회주의 국가와의 스포츠외교와 탈냉전 국면 형성

70년대 말부터 한국은 소련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했다("북괴의 남북체육대표회담 제의에 대한 저의 평가 및 대책", 1979년 12월). 여기에 올림픽은 국제사회에서 탈냉전적 정체성을 만들어야 할 과제를 현실화 시켰다. 그래서 올림픽 개최 결정 이후인 1981년 말~1982년 초 외교부는 '남북한 스포츠회담'을 추진하여, 북한 동포의

올림픽 참관, 남북한간 스포츠 교류, 공산권 국가 선수 및 임원의 판문점 경유 입국 등을 논의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공산권 및 비동맹권 국가의 올림픽 참가를 유도하고 미수교 비동맹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겠다는 것이었다(“88서울올림픽대회·86아시아경기대회 준비계획”, 1982년 1월 26일). 그보다 앞서 대통령은 남북단일팀과 판문점 경유 입국보장, 그리고 남북스포츠회담 등을 지시한바 있다(“대공산권관계개선 및 서울올림픽 방해책동 분쇄를 위한 대책회의”, 1981년). 상당수 정권엘리트와 관료엘리트 전체가 공유하고 있던 계획이었던 것이다.

그래서인지 북한을 제외한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하여 냉전적 인식을 바꾸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 국토통일원은 올림픽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통일 교육의 방향을 기존과 달리 할 뜻을 내비쳤다. 내용은 크게 두가지였다. 우선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올림픽 참가를 고려하여 ‘김일성 공산집단’과 ‘중소 등 공산주의’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인식을 재정립’하겠다는 방침이었고, 다음으로는 남북 단일팀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북 적개심 보다는 민족 화합의 계기를 조성”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88서울올림픽 개최준비 지원계획”, 1988년 11월 30일). 1983년 6월 29일 이법석 외무부 장관은 국방대학원 강연 중에 한국 외교의 최대 과제로 “소련 및 중공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북방정책의 실현”이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경향신문』 1983년 6월 29일, 1).

1984년 이후 올림픽 추진엘리트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핵심고리 역할을 하는 소련의 참가에 매우 예민해졌다. 1983년 9월 1일 대한항공 007편 여객기가 캄차카반도 상공에서 소련공군에 의해 격추당하고, 승객과 승무원 269명이 전원 사망한 일이 있었다. 이 후 이태원에는 소련을 비방하는 티셔츠들이 판매되었는데, 1984년 들어 조직위원회는 두 번에 걸쳐 이를 금지하고 단속하라는 지시를 의뢰한다(“소련비방표시물품판매금지조치”, 1984년). 1986년에도 정부는 KAL기 사건이 정치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고, 정부차원에서는 성명서를 발표하지 않으며, 민간 차원의 추도식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로 인해 소련과 갈등을 빚을 경우 동구권 국가들의 참가에 문제가 생각하는 것이 그 이유였다(연합뉴스, 2017년 4월 11일).

사회주의 국가의 올림픽 참가 문제는 1984년 여름의 개최지 변경론을 계기로 추진엘리트 집단 전체가 관여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변하게 된다. 이에 따라 매우 적극적으로 사회주의권 국가들과의 공식-비공식 접촉을 시작했다.<sup>141</sup>

<sup>141</sup> 올림픽 추진 엘리트들의 스포츠 외교를 검토하기 전에 한가지 주지해 둘 점이 있다. 이 스포츠 외교 과정은 추진엘리트들의 노력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여러가지 변수가 존재했다는 점이다. 첫번째는 올림픽개최 당시 한국과 이면계약을 했던 아디다스 회장 호르스트 다슬러의 존재였다. 1984년 5월 개최지 변경론이 등장하자, 81년 올림픽 개최 결정 당시 다슬러와 접촉했던 박종규 당시IOC위원 후보가 유럽으로 가서 다슬러를 다시 한번 만나다(이방원 1989, 262). 세계 스포츠계에 미치는 다슬러의 영향력은 사회주의권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었다. 다슬러는 1984년 8월 3일 LA에서 시소예프 소련 체육부 차관과 노태우, 김운용이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이방원 1989, 282). 그리고 1984년 9월 잠실 주경기장 개장 행사에

스포츠국제기구를 통한 사회주의 국가 인사와의 교류는 그보다 앞서 시작되었다. 1984년 2월 2일부터 9일까지, 서울올림픽 조직위원장 노태우는 유고슬라비아 사라예보 동계올림픽과 IOC 집행위원회에 참가하고 유고슬라비아 NOC 회장과도 면담을 가졌다(『올림픽소식』 1984년 2월호, 6). 1985년 5월과 8월에는 국제배구연맹 부회장 유리 체스노프와 국제체조연맹 회장 유리 티토프가 내한했고, 9월에는 이재환 체육부 장관이 헝가리를 방문했다(김영인 2016, 8; 11).

1985년 6월 동베를린 IOC총회는 사회주의권 국가의 인사들과 접촉하는 중요한 계기였다. 이때 한국의 체육엘리트들이 대거 참석하였고, 조직위원장은 서울올림픽 준비상황을 공식 보고하였다(『올림픽소식』 1985년 6월호, 17-25). 이 때 조직위원장과 동독 스포츠장관 사이의 회담에서 동독 코치의 파견, 동독제 스포츠기구의 구매 등, 스포츠 교류를 위한 회담이 있었고, 소련, 동독, 불가리아가 직간접적으로 서울올림픽 참가의사를 밝혔다고 전해진다(『올림픽소식』 1985년 6월호, 5-12).

ANOC의 렌케(Marian Renke) 사무총장의 방한 역시 중요했다. 대통령, 조직위원장, 체육부장관, 외무부 장관이 차례로 그를 면담했고, 그에게 동구권 국가들과의 체육 교류를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사무총장은 폴란드와 한국이 단계적으로 체육 교류를 확대하고자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외교부 동구과, 1985).

1986년 4월 21일부터 서울에서 열린 ANOC총회는 결정적이었다. 총 152개 회원국이 참가했는데, 그 중 미수교국가가 30개였다(김경훈 2000b, 61). 소련의 체육장관을 비롯하여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NOC 임원들이 다수 참석하였던 것이다. 이때 6개국 대표와의 면담, 7개국 대표와의 오찬, 13개국 대표와의 만찬이 있었고, 이 자리에서 올림픽 참가 문제와 외교적 관계 개선 문제를 협의했다. 특히 공산권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것이 외교부의 평가였다(외교부 홍보문화과/동구과, 1986). 소련의 경우 1987년 7월 26일부터 8월 1일까지 소련 NOC 부위원장을 비롯한 8명의 스포츠 인사들이 다시 한번 서울을 방문하고, 선수단의 수송, 안전보장, 숙소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 바 있다. 이 시점에 소련의 참가는 거의 기정

---

는 팔 슈미트 헝가리 IOC위원의 참석을 주선했다(김영인 2017, 127). 슈미트 의원은 11월 ANOC 총회에서도 88년 올림픽은 서울에서 열려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올림픽 소식』 1984년 12월호, 17).

두번째는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전향적 자세였다. 1984년 보이콧 논란으로 인하여 대회기간 중인 7월 25~28일 개최되는 IOC총회의 주요 안건은 IOC가 검토 중인 올림픽 참가의 의무화와 불참국 제재 규정의 추가 문제였다.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안건이었는데, 중국 NOC 부위원장이 하루 전인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IOC의 올림픽 참가 의무화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었다(이방원 1989, 271-273). 이유는 1990년대 베이징 아시안게임 유치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로 그 해 9월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총회에 중국 대표단이 참가했고, 1990년 아시안게임 개최지로 당선되었다(경향신문 1984년 9월 29일, 9). 이 때 한국은 베이징의 아시안게임 개최를 지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경훈 2000b, 80-81). 그리고 앞서도 말했던 것처럼 사회주의권 국가들은 1984년 10월과 85년 5월 열린 사회주의 체육장관 회의에서 올림픽 집단 보이콧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드러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이방원 1989, 294-297).

사실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외교부 문화과/동구과, 1986-87).

사회주의권 국가들과의 스포츠 교류 역시 1984년부터 시작되었다. 김영인(2016)과 이방원(1989)의 정리에 따르면 1984년에는 중국과의 스포츠 교류가 시작되어, 3월 쿤밍 데이비스컵 테니스대회 한국선수단 참가, 4월 서울 아시아청소년농구선수권대회 중국 선수단 참가, 4월 광저우 아시아축구연맹 총회 한국 대표 참가, 10월 상하이 아시아여자농구선수권대회 한국 대표 참가 등의 교류가 있었다(김영인 2016, 12-3).

1985년부터는 동구권 국가들과의 스포츠 교류가 본격화되었다. 1985년 3월 도쿄 피겨스케이팅선수권대회에 입상한 선수들이 중국, 홍콩 등을 순회한 뒤 3월 29일과 31일 서울에서 시범경기를 가진 것이다. 이 선수단에는 동독의 피겨스타 카타리나 비트를 비롯하여 소련과 체코 선수단도 함께 있었다. 한국전쟁 이후 사회주의 국가 선수들이 한국땅을 처음 밟은 것으로 기록되는 이 이벤트는 대회 나흘 전에 신문을 통해 소식이 알려질 정도로 극비리에 개최되었는데, 그 동기는 물론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서울올림픽 참가를 위한 것이었다(서완석 2014년 5월 12일). 9월 26일부터 서울에서 열린 세계유도선수권대회에 동독, 폴란드, 소련이 참가했다(『경향신문』 1985년 9월 18일, 8; 『매일경제』 1985년 9월 23일, 9). 이후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세계주니어여자핸드볼, 월드컵 아마추어 복싱대회, 국제배구대회 등 우리나라에서 열린 다수의 스포츠 이벤트에 소련 선수단은 계속해서 참가했다. 중국과도 스포츠 교류가 확대되어 한국 측은 중국 개최 5개 이벤트에 27명의 선수단과 임원을 파견했고, 중국 역시 한국 개최 9회 스포츠 이벤트에 102명을 파견했다(김영인 2016, 10; 13).

1986년과 1987년 역시 교류가 계속되었다. 9월 중국은 86아시안게임에 선수와 임원 총 514명의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했다. 이는 한국과 일본 다음으로 많은 숫자였다(서울특별시 1987, 188). 11월 헝가리의 자바 헤기드 레슬링 대표 코치가 헝가리 정부의 허가를 얻어 한국에서 2개월간 방문코치 생활을 하기도 했다. 1987년 3월에는 이세기 체육부장관이 헝가리, 유고, 체코를 방문했고(『매일경제』 1987년 3월 6일, 12), 서울올림픽 참가 협의를 위해 소련, 동독, 불가리아, 헝가리, 폴란드 NOC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했다(김경훈 2000b, 61)).

1987년 9월 17일 IOC가 발송한 올림픽 초청에 대한 참가신청은 1988년 1월 17일까지 4개월 간 이뤄졌는데, 사회주의 국가 대부분을 포함 당시 167개이던 NOC중 대다수라 할 수 있는 161개 NOC가 참가신청을 하였다. 처음부터 참가신청을 하지 않은 NOC는 북한, 알바니아, 니카라과, 쿠바, 에티오피아, 세이셸이었다(“서울올림픽 참가 통보현황”, 1988년). 마다가스카르는 참가를 신청했지만 신청 당시 북한과의 공동개최를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다. 그래서 대회에는 참가하지 않았다(김경훈 2000b, 83).

마지막으로, 1988년 7월 7일 대통령 노태우는 이른바 ‘7.7 선언’을 발표한다. 총 6개항으로 구성된 이 선언은 주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

나,<sup>142</sup> 제 6항은 “북한과 미국·일본 등 우방과의 관계 개선에 협조, 우리는 소련·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들과 관계개선 추구”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올림픽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탈냉전적 정체성을 재현하는 것뿐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탈냉전적 지위를 만들어갈 갈 방침을 밝힌 것이다(“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하여, 1988년”).<sup>143</sup>

이 과정에는 정권엘리트나 체육엘리트만 참여한 것이 아니었다. 재벌기업의 회장들 역시 각종 스포츠 협회 회장의 자격으로 사회주의권 국가들과의 교류에 관여하게 되었다. 1986년 8월 대한항공 조중훈 회장은 아시안게임 수송 문제로 중국의 항공당국자들과 만났고, 서울올림픽을 앞두고는 올림픽 관련 항공기의 중국 영공 통과에 대한 특별 승인이 이루어지기도 했다(대한항공 1991, 419-20). 87년 8월 레슬링협회장인 삼성의 이진희는 헝가리 체육부장관과 프랑스에서 회동을 가졌다(이방원 1989, 230-236). 테니스협회장인 대한항공 조중건 사장은 선수단 수송 문제로 소련에 88년 7월 소련에 갔으며, 축구협회장인 대우 김우중 회장도 같은 달 소련을 방문했다(김운용 2010년 4월 18일).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국교 수립 이후 재벌기업들의 빠른 사회주의 국가 진출과 기업주들의 스포츠 외교 경험은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 5) 평화 이벤트를 통한 올림픽 재규정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 IOC위원장 사마란치가 서투른 발음으로 개회식 도중 언급 했던 이 캐치프레이즈는 사실 올림픽 공식 표어가 아니었다. 1985년 1월 공모에서 1위에 오른 국내용 표어였다(『올림픽소식』 1982년 2월호, 40). 서울올림픽의 공식 표어는 ‘화합과 전진’이었다. 화합은 구체적으로 “이념·체제·인종·빈부·문화·지역간 차이를 초월한 인류 평화의지 구현”이라는 의미를 함축하는 개념으로 정했고, 전진은 “선진화 추구, 국민적 활력, 인류의 발전과 번영, 개발도상국의 희망과 의욕 고취, 화합과 평화의 귀결로서의 전진”이라는 의미를 함축한다고 상정했다(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1989b, 92). 올림픽을 통해서 국제적 지위향상을 추구하고 또 이를 위해 국제 사회 내에서 탈냉전적 정체성을 형성하기 원했던 발전국가의 의지가 반영된 표어였던 것이다.

하지만, 국제적 지위향상이라는 목적을 위한 다양한 사회정치 프로그램들에 비하

<sup>142</sup> 나머지 5개 항은 다음과 같다. 1.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종교인, 문화예술인, 체육인, 학자 및 학생 등 상호교류와 해외 동포들의 남북 자유왕래 문호개방, 2. 이념가족들간에 생사·주소확인, 서신왕래, 상호방문 적극 주선·지원, 3. 남북간 교역의 문화 개방 및 남북한 교역을 민족내부교역으로 간주, 4. 비군사적 물자에 대한 우방과 북한과의 교역 불반대, 5. 남북간의 경쟁·대결외교 종결, 남북대표가 국제무대에서 자유롭게 만나 상호협력

<sup>143</sup> 7.7선언으로부터 불과 두 달 뒤인 9월 13일, 한국과 헝가리는 상주대표부를 설치하게 된다(『매일경제』 1988년 9월 13일, 1) 헝가리는 1987년 12월 21일 동독과 함께 가장 먼저 서울올림픽 참가를 밝힌 사회주의 국가였다(『경향신문』 1987년 12월 22일, 1). 노태우는 사회주의의 서울올림픽 참가 발표 순서대로 수교 협정이 맺어졌다고 발언했다(김영인 2017, 135)

여, ‘평화’ 개념을 중심으로 새로이 국제사회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은 매우 부족했다. 1988년 들어 167개 NOC 중 161개 NOC의 참가가 확정되면서 올림픽에 대하여 “화합과 전진의 제전”, “동서화합의 제전”, “평화의 제전” 같은 수식어들이 추진엘리트와 시민사회에서 언표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국가들이 대다수 참가한다는 것 외에 국제사회의 평화에 관하여 서울올림픽 추진엘리트들이 준비해온 것은 거의 없다. 예를 들어 제 4장의 [표 12]는 1985-86년 사이 범민족올림픽추진위원회가 배포한 수천만장의 표어, 슬로건, 전단을 정리한 것인데, 10개의 표어, 20개의 슬로건, 8종의 전단 중 ‘평화’라는 단어는 단 한군데에도 들어가지 않았다. 범민족올림픽추진위원회가 발간한 어린이용 학습만화 『호돌이의 세계여행』은 중국과 에티오피아를 제외한 모든 사회주의권 국가를 다루지 않고 있다. 중국에 대해서는 개혁개방의 분위기가 형성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에티오피아에 대해서는 사회주의로 인해 황폐해진 나라로 소개하며 냉전적 세계관을 답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표 13]의 올림픽새마을운동 국민정신 개혁 실천사항 역시 ‘평화’를 중심으로 국제사회를 새롭게 인식하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러다가 1986년 이후 서울올림픽의 평화 이벤트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여러 장치들이 마련된다. 첫번째가 올림픽공원 복단에 자리한 상징조형물 ‘평화의 문’이었다. 올림픽공원 설계 당시 이 상징조형물은 계획에 없었다. 올림픽공원 설계 당시 복측에 조성되는 광장의 이름은 ‘선린기념공원’이었다. “세계의 선린정신”을 표상하는 장소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었는데, 광장과 야외무대로 구성되었기에 구체적으로 그러한 의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징물은 계획되지 않은 상태였다(『올림픽소식』 1984년 4월, 16).

1984년 초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상징조형물 제작 프로세스는 추진엘리트들이 생각하는 올림픽의 상징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84년 4월 25명으로 구성된 건립추진위원회는 85년 초 공모를 통해 9월 건축가 김중업을 당선작가로 발표한다(손정목 2003c, 60-68).<sup>144</sup> 하지만 이내 추진 엘리트들은 작품의 ‘상징성’ 부족을 문제 삼았다. 당선 당시 조형물은 현재와 같은 모양에 높이와 너비 24미터, 폭이 73미터였는데, 이게 ‘너무 작다’고 보았다. 박세직은 “서울올림픽의 장대한 드라마와 역사성을 기념하는 건축물로는 약간 빈약한 존재”가 되었다면서 ‘에펠탑’을 이상적 사례로 들고 있다(박세직 1991, 116). 이런 압력에 의해 1984년 12월 말에 변경 발표된 조형물은 높이와 너비 90미터, 폭 130미터, 20층 건물 높이의 거대 조형물이었다(손정목 2003c, 70-71).

이 후 두 차례 수정을 거쳐 현재와 같은 모습이 되었지만,<sup>145</sup> 이 장면은 추진엘리

<sup>144</sup> 추진위원회는 청와대, 총리실, 체육부, 조직위원회, 서울시 등 ‘추진엘리트’ 블록에 속한 8명과, 미술, 조경, 건축, 조각, 도시설계, 문화정책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손정목 2003c, 62).

<sup>145</sup> 1985년 말의 변경 안에 대하여 시민사회는 50억에서 200억으로 비용이 증가했다는 점과 주변환경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동아일보』 1986년 1월

트들이 생각하는 올림픽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준다. 추진엘리트들은 작품의 크기를 문제 삼으며 기술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로 거대한 조형물이여야 올림픽의 ‘상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올림픽에 부여한 의미가 다름 아닌 한국의 부유함을 드러내는데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다시 말해, 한국의 경제발전을 물리적 경관으로 치환하여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것이 추진엘리트들이 생각하는 올림픽의 의미였던 것이다. 건립장소가 ‘선린기념공원’인데도 ‘평화’나 ‘탈냉전’ 같은 주제의식은 추진엘리트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다.

추진엘리트들이 이 조형물을 ‘부와 번영’의 상징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바꾼 것은 1988년에 가서였다. 별다른 이름 없이 ‘서울올림픽 상징조형물’이라 불리던 이 작품에 대해, 조직위원회는 1988년 1월 28일 “세계평화의 문”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리고 9월 12일 완공과 더불어 이 이름이 공식화된다.<sup>146</sup> 올림픽을 발전국가가 가진 경제자본의 경관화, 국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계기로 삼고자 하는 노력에 비해 국제사회에서 평화와 탈냉전을 키워드로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연출하려는 노력이 뒤늦음을 보여준다.

서울올림픽 부대행사 중 하나인 국제학술회의 역시 마찬가지였다. 1987년 초 조직위원회는 “세계 정상급의 석학과 학자들을 초청하여 인류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진지한 학술토론을 벌임으로써 온누리의 화합과 전진을 구형하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명분 하에 “후기 산업사회의 세계가족”이라는 이름의 국제학술회의 개최를 결정하였다(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1989, 458). 조직위원장은 이 사항을 5월 초 IOC총회에서 보고하였고(강신표 1992, 173),<sup>147</sup> 기획간담회와 자문회의 등을 거쳐 개최를 크리스찬아카데미에 위임하고 6월 25일 협약서에 서명하였다(크리스찬아카데미 1989, 86).

행사의 큰 틀은 조직위원회가 어느 정도 정해놓은 상태에서 크리스찬아카데미가 이를 조정하는 형태로 준비작업이 진행되었다. 1987년 6월 말 협약 이전에 조직위원회는 개최일자, 제목, 국내외 참가자 규모, 5개 분야 주제(가정의 붕괴와 재건, 커뮤니케이션의 단절과 회복, 윤리 가치관의 혼란과 새로운 윤리의 정립, 동서문화의 만남과 세계문화의 창조, 환경의 파괴와 회복)의 제목 등을 모두 기획해 놓은 상태였다(『올림픽뉴스』 1987년 6월 20일, 2; 강원룡 1994, 31). 이 위에서 크리스찬 아

23일, 3). 이에 조직위원회는 70억을 예산으로 설계변경을 의뢰, 높이와 너비 32미터에 폭 45미터로 변경된다(『경향신문』 1986년 4월 18일, 7). 서울시장과 대통령의 검토를 명분으로 공사 시작 3개월 후인 1987년 4월 공사가 다시 중지되었고, 1987년 9월에 가서는 박물관 시설 제외를 이유로 다시 규모를 축소하여 높이와 너비 24미터에 폭 37미터 크기로 최종 확정되었다(『동아일보』 1987년 9월 10일, 10).

<sup>146</sup> 서울올림픽 공식보고서(1989, 814)는 이 이름이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통해 지어졌다고 하지만, 여론조사는 올림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실시한 이벤트였고(『동아일보』 1988년 8월 18일), 이름은 그대로 사용되었다.

<sup>147</sup> 논문에는 6월 말로 표기되어 있으나, 이스탄불 IOC총회는 5월 10일부터 13일 사이에 열렸다(MBC, 1987년 5월 13일).



카데미는 일정과 5개 분야 주제 및 학술회의 명칭 등을 세부 조정하고 또 기조강연자를 섭외하는 역할을 맡았다(강원룡 2003, 333-336).

학술회의의 기본방침은 “서방세계는 물론 동구 공산권, 제3세계의 권위있는 학자 중 인선”하는 것이었다. 탈냉전 또는 평화의 이벤트로서의 상징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이었다. 이 같은 방침 위에서 1987년 12월과 1월에 분야별 준비위원장과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준비위원들은 모두 학계의 대표적 인사들로, 추진엘리트집단과는 거리가 있는 이들이었다.<sup>148</sup> 이들의 추천에 따라 외국학자 206명, 국내학자 229명을 선발하여 초청장을 발송하였고, 참가의사는 외국 111명, 국내 178명이 밝혔으며, 실제 참가자는 해외 87명(북미주 30명, 서유럽 12명, 동유럽 5명, 아시아 31명, 아프리카 5명, 남미 4명), 그리고 국내 155명이었다(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 1989, 456).

1988년 8월 21일부터 9월 6일까지의 분과별 학술회의와 9월 7일과 8일의 본 행사(축사, 축하공연, 분과별 내용발표 및 토론, 기조강연)로 이뤄진 이 학술대회는 참가자 구성비만 놓고 본다면 목적 달성에 성공했다. 모든 대륙에서 참가가 이뤄지고 사회주의권 국가에서도 참가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조강연자 섭외는 그렇지 못했다. 준비위원회는 미국의 경제학자인 존 갈브레이스, 프랑스의 사회학자 미셸 크로지에와 더불어 중국의 전 사회과학위원장 페이 샤오통과 소련공산당 서기장 철학보좌관 칭귀즈 아이트마토프의 참가를 타진했다. 하지만 후자 두 명은 결국 참가하지 않았다. 이에 인도출신 M. M. 토마스 WCC 명예회장을 기조강연자로 섭외했다(크리스찬아카데미 1989, 102). 또 개발도상국의 학자들로부터는 주제인 후기산업시대라는 표현이 이른바 ‘선진국’에 치중된 것으로, 제3세계 국가들에게는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을 들어야 했다(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 1989, 456).

## 2. 저항적 시민사회의 성장과 민주화

<sup>148</sup> 준비위원진은 다음과 같다(크리스찬아카데미 1989, 88). ① 가족 : 이광규 (서울대 인류학, 위원장), 김주희 (성신여대 가정학), 최흥기 (서울대 인류학), 전경수 (서울대 인류학), 조은 (동국대 사회학), 장필화 (이화여대 여성학) ② 커뮤니케이션 : 이강수 (한양대 신문방송, 위원장), 추광영 (서울대 신문학), 서정우 (연세대 신문방송학), 박영상 (한양대 신문방송학), 강명구 (서울대 신문학), 김학수 (서강대 신문방송학), 이경자 (경희대 신문방송학), ③ 윤리 : 김태길 (서울대 철학, 위원장), 변선환 (감리교신학대), 길희성 (서강대 종교학), 고범서 (한림대 철학), 금장태 (서울대 종교학), 황경식 (서울대 철학), 손봉호 (서울대 사회교육), 소흥렬 (이화여대 철학), 오경환 (가톨릭대 신학), 박순영 (연세대 철학), 김연진 (인하대 철학), 신인철 (고려대 철학), 고익진 (동국대 불교학), ④ 동서문화 : 김경동 (서울대 사회학, 위원장), 정재식 (연세대 사회학), 김여수 (서울대 철학), 안병주 (성균관대 동양철학), 이두현 (서울대 국어교육), ⑤ 자연 : 김용준 (고려대 화학공학, 위원장), 권태준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희익 (서울대 물리학), 심재룡 (서울대 철학), 이강수 (연세대 철학), 김윤신 (한양대 계량의학)

1988년의 올림픽을 앞두고 국내적으로는 민주화에 관한 중요한 진전이 중요했다. 이 민주화 과정은 올림픽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올림픽으로 인해 민주화가 촉진된 측면이 한편에 존재한다면, 반대로 민주화는 올림픽에 대한 저항적 시민사회의 비판적 논의를 대폭 활성화시켰다.

### 1) 1980년대 중반 이후의 민주화

1980년대의 민주화는 권위주의적 국가와 이에 도전하는 저항적 시민사회 사이의 갈등을 통해 이뤄진 것이었다. 본격적인 민주화의 과정은 1983년의 유화조치로부터 시작된다. 1980년 집권과 더불어 전두환과 신군부는 사회정화의 이름으로 기층 사회구성원들의 습속에만 개입한 것이 아니었다. 공무원, 정치인, 언론, 지식인, 학생운동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사회구성원들을 통제하려 했었다(박호성 2005, 124-126). 이와 관련한 연구들은 성경룡(1993), 윤상철(1997), 조희연(1998) 등의 연구가 있는데, 이들 연구들은 큰 틀에서 1983년의 유화국면과 저항적 시민사회의 활성화 시작, 1985-6년의 교착국면, 1987년의 정권에 대한 최대 도전연합의 형성 및 직선제 개헌 등의 순서로 민주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학계에서 상당히 알려진 내용이므로 간단히 그 내용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시민사회의 다양한 영역을 통제하던 전두환 정부의 억압적 정치 기조가 바뀐 것은 1983년의 이른바 ‘유화조치’로 이해된다. 1983년 말의 학원자율화 조치는 1984년부터 학생운동이 활성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지식인과 종교인 등이 중심이 된 재야운동 세력, 진보적 정치 세력, 노동운동 세력 등이 1984년 무렵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전국학생 총연맹』, 『민주화추진협의회』와 『민주화청년연합』,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등은 저항적 시민사회가 활동을 본격화하면서 시민 사회 내 영향력을 키워나가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징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있었던 1985년 초의 총선거는 전두환 정부가 만든 관제 야당인 민한당이 아닌 김영삼과 김대중이 몸담은 신민당을 제 1야당으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1985년 이후 야당과 저항적 시민사회 사이의 관계는 그렇게 협조적이거나 원활한 것만은 아니었다. 형식적 민주주의 이상을 요구하는 저항적 시민사회와 형식적 민주주의의 틀을 우선시한 야당 사이에는 의견차이가 존재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저항적 시민사회에 대하여 억압적 자세를 견지했다.

변화는 1987년도에 찾아왔다. 전두환 정부는 내각제 개헌을 제안했고, 야당 내에서 비교적 전두환 정부와 거리가 가까웠던 이민우 등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했는데,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으로 인하여 이 문제가 상대적으로 덜 주목 받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김영삼과 김대중을 포함한 75명의 국회의원들이 신민당을 탈당하면서 내각제 개헌은 불가능해졌다. 이에 정부는 4.13 호헌조치를 발표했다.

이 호헌조치는 저항적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관제사회를 제외한 다수의 시민사회의 반발을 불러왔고, 시민사회와 민주당 사이의 연대를 가능케 했다. 이로 인해 목표는 단순해지고, 이를 뒷받침하는 세력은 두터워졌다. 목표는 직선제 개헌이었고, 저항적 시민사회와 야당에 사회구성원들의 지지가 더해지는 형태가 되었다. 이러한 조건 위에서 대규모로 또 전국전으로 진행된 1887년 6월의 시위는 노태우의 직선제 개헌 수용 즉, '6.29'선언으로 일단락된다. 그리고 가을의 개헌을 통해 12월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된다.

## 2) 민주화 운동과 올림픽

이상의 과정에서 한가지 제기되는 의문은, 왜 1983년에 정부는 유화조치를 취했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윤상철(1997, 100-102)은 1980년의 경제적 위기로부터의 탈출 및 경제 성장, 그리고 정당성의 부재를 만회하고 중산층을 포섭하기 위해 서였다고 해석하며, 조희연(1993, 166)은 강경기조로 저항적 정서의 확산을 억제할 수 없었기에 나온 포섭적 전술이라고 본다. 성경룡(1993, 110-111)역시 경제성장파 정당성 만회를 주요한 이유로 꼽았다. 성경룡은 올림픽이라는 요소를 여기에 덧붙인다. 전두환 정부는 올림픽을 통해 세계에 한국의 정치적 안정 및 자유로운 사회상황을 보여주고 싶어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올림픽은 1980년대의 민주화 운동 과정과 깊숙이 결부되어 있다.

그래서 민주화를 추진하던 저항적 시민사회의 구성원들은 올림픽을 정당성 부족을 만회하기 위한 정책으로 판단하거나, 혹은 사회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정치에 대한 관심을 덜 갖게 하는 '탈정치화'의 수단으로 바라보았다.

1981년 10월, 올림픽 개최가 확정되자마자 대학생들은 산발적이지만 시위 가운데 올림픽 반대 구호를 첨가했다. 10월 23일 서울대 학생들은 “88올림픽 유치는 국민을 수탈하여 국제적 고립을 회피하려는 전술이다”라는 구호를 외쳤고, 같은 날 이화여대 학생들도 “올림픽 개최는 공산권 불참과 적자손실 밖에 얻지 못할 것이다”와 “올림픽 개최는 정치적이고 허무일 뿐이다”라며 비판의 구호를 외쳤다(“오늘의 한국 현실과 그리스도 교회의 입장” 1981년 12월). 1983년도 연세대에서 작성된 어느 팸플렛은 다음과 같이 올림픽을 설명하며 비판한다.

“군부에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에게 자신의 정당성을 부여 받지 못하고 있음을 느낀 전두환 정권은 철저한 대외 종속에 의해 경제인여를 선진 자본주주의 국에 빼앗기고 있는 이 상황에서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 및 IPU총회를 유치하여 자신의 국제적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엄청난 외화를 소비하여 회원국 대표들에게 매춘과 매수를 일삼았으며, 그로 인한 국민들의 강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환상적 구호와 엄청난 물량의 선전 공세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참다운 민주와 자유를 위한 투쟁의 길에서”, 1983년 6월 15일).”

즉, 올림픽은 부당하게 정권을 잡은 정권이 자신들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개최한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었다. 이는 1983년 무렵부터 등장한 3S론과도 궤를 같이한다.<sup>149</sup> 이 개념을 활용하는 이들은 스포츠(Sports), 영화(Screen), 성산업(Sex) 등이 1980년대 들어 발전하게 된 것이 프로스포츠와 성인영화 등을 전략적으로 육성한 정권의 정책의 산물이라고 본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이들은 3S정책이 “민중들의 정치적 각성을 희석시키고자 하는 정책의 산물”이고, “민중들을 생각도 사상도 없는 기계부속품으로 전략시키는” 도구이며, “대학살, 반민주성, 반민족성, 반민중성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고, “기반이 없는 현 정권의 정통성을 대외에서 인정받고자” 만든 정책이라고 본다(“86아시아경기대회에 대한 부산지역 대학인의 입장”, 1986년). 한 마디로, 국민들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정권이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 ‘우민화’ 혹은 ‘탈정치화’ 한 뒤, “정치, 경제는 자기들 맘대로” 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것이다(“'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은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1986년 9월).<sup>150</sup>

실제로도 이들은 저항적 시민사회의 의견을 잠재우는 수단으로 활용했다. 앞 장에서 본 1987년의 사회안정 담론, 올림픽저해사범 단속과 올림픽 평화구역범 등을 통한 집회 및 시위의 봉쇄가 그 사례다. 특히 1987년 4월 13일 호헌조치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전두환은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끝마치게 되면 우리는 전쟁의 공포와 후진의 굴레에서 벗어나 평화와 번영을 구가하는 희망찬 90년대를 맞이한다”는 장밋빛 전망을 내세웠고, 따라서 이 중대사를 앞두고 ‘국력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개헌이 불가하다는 주장을 전개했다(『매일경제』 1987년 4월 13일, 3).

하지만, 올림픽이 국가의 권위주의적 정치에만 활용된 것은 아니다. 김영삼은 1985년도에 워싱턴포스트와의 기자회견을 통해 정국이 불안하면 올림픽 개최도 위태로울 것이라 주장하면서 직선제로의 개헌을 받아들여야 함을 피력한 바 있다(“김영삼의장 워싱턴포스트지와 회견-정국 불안하면 올림픽 개최도 위태로워”, 1985년 9월 7일). 이런 발언은 김대중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1986년 3월 23일, ‘직선제 개헌 1천만 서명운동’에 맞춰 개최된 ‘개헌추진 부산지부 결성식’에 모인 4만명의 군중 앞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말로 연설을 시작한다.

“민주회복은 이 나라 최대의 국사입니다. 민주회복이 있어야 전국민의 참여와 협

<sup>149</sup> 이 개념은 패전 이후 미군정기 일본에서 미군정 및 보수정치인들을 비판하기 위해 좌익측에서 활용하기 시작한 개념으로 전해진다(Abel 2012, 284). 강지웅(2006)에 의하면 국내에서는 이 개념이 1970년대 중반부터 알려졌다고 한다.

<sup>150</sup> 해당 문건은 올림픽이 스포츠뿐만 아니라 성산업과도 연결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문건은 올림픽을 유치하면서 정부는 ‘외국인에게 보여준답시고 음란비디오 테이프까지 수입’하였고, 이후 ‘우리나라 여관 방마다 음란비디오가 판을 치고’ 있는 상황으로 규정하고 있다.

력 속에 안보도 되고, 국민을 위한 경제발전도 되고, 88올림픽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부산 시민에게 바치는 글”, 1986년 3월 23일).”

그는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민주화 과정을 중단한다던 전두환의 발언을 그대로 뒤집고 있다. 민주화가 되어야 올림픽이 성공한다는 것이다. 올림픽이 민주화에의 압력을 정당화하는 배경으로 활용되었던 것이다. 6.29선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동아일보』는 노태우의 선언 배경을 분석하면서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가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고 보았다(『동아일보』 1987년 7월 2일, 5).

올림픽을 역으로 활용한 것은 이들뿐이 아니었다. 저항적 시민사회의 구성원들도 올림픽 개최 기간 중에 올림픽을 활용하였다. 올림픽을 앞두고 이들은 각종 보안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면서 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만약 양심수의 석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올림픽을 전후하여 인권을 사랑하는 전 세계의 평화애호세력과 연대하여 미국, 노태우 정권의 폭력성을 폭로하고 사랑스런 우리의 조국땅에서 몰아내기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이다(“양심수와 그 가족까지 탄압하는 미국-노태우 독재를 몰아내자”, 1988년 8월 12일)

올림픽 평화구역에 반대하는 이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는 올림픽을 치르는 데 방해될 것이 없으며, 오히려 세계적으로 고문, 폭력, 양심수 구속 등 비민주적인 인권탄압국으로 알려진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성숙한 민주역량을 세계만방에 과시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국가의 사고전환을 요청하고 있다(“평화의 제전 올림픽을 빙자한 폭력적 민중 생존권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1988년 8월 20일).

올림픽은 양날의 검이었다. 올림픽이 가져온 개방화의 분위기는 저항적 시민사회가 국가의 권위주의적 정치행위를 비판할 수 있는 준거를 마련해주었기 때문이다. 앞서 우리는 올림픽이 1980년대의 사회정치로 하여금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을 ‘세계의 시선’에 노출되도록 만들었음을 보았다. 하지만 올림픽이 다가오면서 야당의 정치 지도자들은 물론 저항적 시민사회도 이러한 상황을 역이용했다. 이들은 국가의 행위가 전세계에 노출됨을 상기시키는 전략을 통해 국가가 고수해 온 권위주의적 정치행태를 개조하고자 했던 것이다.

### 3) 저항적 시민사회의 민족주의와 사회정치

우리는 3장에서 경제발전을 앞세운 국가가 강조하는 것과 다른 규범들로 저항적 시민사회가 ‘민족적인 것’에 관한 담론을 만들었음을 보았다. 저항적 시민사회가 사회정치와 관련하여 ‘민족적인 것’을 강조하는 경향은 1980년대 들어 확대 강화되었다. 이는 국가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 주변국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 그리고 저항적 시민사회의 구성에 있어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학생운동 조직의 변화 등에 기인한 것이었다.

1960년대부터 저항적 시민사회에 속한 지식인들은 국가의 수출주도의 산업화 전략을 비판했다. 제 3장에서도 본 바 있지만, 이러한 경제 정책은 한국 경제의 현실을 강대국 경제에 종속시키고 사회 내 불균형을 생산한다는 것이 주된 비판 논지였다. 이러한 인식은 1970년대 종속이론의 수입과 맞물려 더욱 심화되었다. 이 때 주된 비판의 대상은 사회구성원들을 제대로 포섭하지 않은 채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국가가 비판의 대상이었다. 반면에 주변 강대국, 특히 미국에 대한 비판은 거의 없었다(이수인 2008, 104).

1980년 5월 광주 민중항쟁은 미국에 대한 저항적 시민사회의 관점을 바꿨다. 1970년대 말부터 미국의 독점자본의 이익에 한국 경제를 종속시켰다는 생각에 광주에서의 학살을 미국이 방조 혹은 협조했다는 판단이 더해지자, 이들 사이에서 미국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 확연하게 표출되기 시작한 것이다. 1982년의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그리고 1985년 서울 미문화원 점거농성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였다. 대학생들은 미국을 “국제 자본주의 체제 하에 한국을 종속”시키고자 하며, “광주 대학살의 공범”이라고 정의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한국을 희생시키는 불평등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도 보았다(김동춘 2000, 352).

하지만 1980~1985년 사이에는 이 문제가 학생운동 세력들 사이에서 이론적으로 다뤄지는 문제는 아니었다. 학생운동세력 내의 조직형성 및 변천, 그리고 세력간 논쟁 과정에서 미국의 존재는 이론적 쟁점은 아니었다. 이 시기에는 전두환 정부가 ‘반민족, 반민중, 반민주’의 파쇼체제이며, 이것이 한국 사회 구성원들에 겪고 있는 문제의 근원이라고 보는 ‘삼민론’이 학생운동 세력들의 일반적인 인식이었다(이병철, 박양수 1990, 12). 이들 사이의 논쟁도 ‘파쇼’라 불리는 전두환 정부에 대한 반대운동을 학생운동 세력이 선도적으로 강력하게 전개(학림-MT)할 것인가 아니면 다소 온건하더라도 대중적으로 전개(무림-MC)할 것인가를 둘러싼 논쟁이었다(김윤철, 2012년 6월 18일)

하지만 1985년을 지나면서 미국이라는 존재와 그 반대 급부로 민족이라는 존재가 학생운동의 논쟁과 조직 노선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게 된다. 1985년 학생운동 내부에서는 ‘사회구성체론’이라 불리는 이론을 둘러싼 분기가 시작되었다. 한 세력은 한국사회를 국가독점자본주의 사회로, 서구에서 자본가가 노동자에게에 대해 그러했듯 군부독재자들이 다수의 사회 기층 사회구성원(민중)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사회로 정의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사회 기층의 구성원들이 군부독재자들을 청산한 뒤 민족적이고 민주적인 정권을 수립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

가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었다. 다른 한 세력은 한국을 ‘반봉건사회’로 정의했고, 미제국주의 세력과 그에 예속된 한국의 자본가 등 지배세력들이 한국의 기층 사회구성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들은 노동자들만 아니라 다양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먼저 미제국주의 세력을 청산해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았다. 전자의 세력은 민민투(민족민주투쟁위원회)에서 CA(Constituent Assembly, 제헌의회), PD(People's Democracy, 민중민주) 등의 약칭으로 불렸고, 후자의 세력은 자민투(반미자주화반파쇼민주화투쟁위원회)에서 NL(National Liberty, 속칭 주체사상파) 등의 약칭으로 불리면서 조직을 키워나갔다(이병철박양수 1990, 13).

이러한 논의는 발전국가에 의해 주도되어 온 사회정치에 대한 대응이었고, 한국의 사회문제에 대한 발견, 사회 구성원에 대한 범주화와 분류, 그리고 사회문제의 원인 파악하고 해결책의 제시에 있어 저항적 시민사회가 고유하게 답을 내린 것이었다. 이들은 당시 한국의 사회문제는 결국 노동계급과 민중층의 빈곤이 핵심을 이룬다고 보았다. 그리고 한국사회는 기본적으로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이뤄진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의 원인 진단과 해결책의 제시에 있어서 전자와 후자의 세력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했다. 전자의 경우, 독재정권과 독점재벌이라 불리는 소수 지배세력에 의해 다수 노동계급과 민중층의 구성원들이 착취와 억압을 당하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보았고, 이에 대한 해결은 노동계급이 중심이 되어 민중·민주적 정권을 수립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보았다.

후자도 소수의 지배세력에 의해 다수 한국 사회 구성원 다수가 착취와 억압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공유했다. 하지만 그 소수의 지배세력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국을 종속시키는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세력과 제휴한 이들이었고, 그러한 미제국주의가 만들어 놓은 분단구조 하에서 안보 논리를 내세워 지배력을 유지하는 이들이었다. 따라서 문제의 원인은 불의한 지배세력의 입지를 만들어 주고 있는 분단구조였고, 이를 후원·유지시키고 있는 미 제국주의였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 이들은 분단구조의 변화와 이른바 ‘외세’의 배제가 문제의 해결책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1986년부터 선명하게 드러난 후자의 세력, 즉 반제국주의와 반미주의를 표방하는 이들은 ‘민족적인 것’을 이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만들었다. 조직의 확대 및 노선의 분화 속에서 이들은 ‘미제 축출’, ‘양키고함’, ‘미군의 한반도 핵무기 설치 반대’ 등을 중요한 주장으로 내세우면서 ‘반미’와 ‘자주화’를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길로 상정했다(『중앙일보』 1986년 8월 30일, 6). 감정적으로 미국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 차원에서의 ‘반미’로 나아간 것이다.

반대로 북한은 이제 중요한 문제해결의 파트너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남북통일이 한국 사회 당면 문제의 중요한 해결 방편으로 상정되기 시작했다. 1987년 6월 민주화운동 이후 NL계열은 서울지역대학생대표자협의회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등 전국의 대학을 포괄하는 조직을 만들었고, 학생운동 세력 내에서 주류적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들의 가장 중점적 사업은 통일운동이 되었다. 남북 사회단체

간 교류, 공동체육대회 개최, 공동올림픽 개최 등이 이러한 통일운동의 방편으로 이들 학생운동 세력이 추진한 것이었다.

김동춘(2000)은 이와 같은 1980년대 민족주의의 변화를 민중민족주의에서 반제민족주의로, 그리고 다시 민족중심주의로의 변화로 정리하고 있다. 1980년대 초까지 저항적 시민사회가 활용한 ‘민족적인 것’에 관한 담론들은 민주화나 사회적 불균형의 시정 등과 관련되어 있었고, 1980년대 중반들이 ‘민족적인 것’이 반제국주의적 함의를 띠는 것이었다면, 1987년 이후 통일운동 국면에서는 혈연과 언어의 동질성이 강조되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김동춘 2000, 354). 이런 논리 속에서 민족의 구성원들은 미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소수의 독재세력과 자본가를 제외하면 매우 동질적인 집단으로 상정된다. 계급적 차이 같은 것은 사상된다. 이러한 동질성에 대한 상상은 사회정치적으로 민족을 구성하는 사람이라면 그 동질성에 기초하여 시민권을 공유해야 할 자격이 있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이렇게 저항적 시민사회의 구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대학생들의 통일운동과 ‘민족적인 것’의 강조는 다른 저항적 시민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물론, 올림픽에 대한 저항적 시민사회의 접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외국인과 민족 구성원 사이의 경계가 포섭 및 배제의 문제와 관련한 자격의 문제, 즉 인정가능성(respectability)의 문제와 결부된 주장이 등장하는 것일 것이다. 그렇다면 저항적 시민사회의 구성원들 사이에는 올림픽이라는 이벤트는 한국사회의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있는 민족 구성원 전체가 국제사회로부터 문화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모든 이들에 대한 포섭이 이뤄지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사고가 형성되게 된다. 그리고 외국인에 대해서는 몰라도 민족 구성원에 대하여서 수행되는 배제는 매우 문제적인 것이 되게 된다.

## 제 2절 시민사회의 인정과 포섭 요구

### 1. 저항적 시민사회의 전면적 민족 포섭 요구

#### 1) 민족구성원 배제에 대한 비판

4장에서 우리는 올림픽의 준비 과정에서 노점상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그리고 ‘가시권’을 위주로 한 재개발사업이 대대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보았다. 이는 당연히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현지 거주민은 물론, 이들과 연대한 저항적 시민사회는 이를 지속적으로 비판했다. 앞서 예측한 바와 같이 이들의 발언은 민족의 구성원에 대한 배제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것이었다.



시작은 1983년도부터 진행된 목동 신도시 재개발로 인해 발생한 철거민들에 의해서였다. 약 140만평의 너른 부지를 서울시가 공영개발의 형태로 아파트 단지를 포함한 신도시를 만드는 사업이었는데, 이 지역은 1960년대 도심부 철거민들이 정착한 곳이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평당 7~14만원에 토지를 수용하여 평당 105~134만원에 최소 20평 이상의 중대형 아파트로 신도시를 설계했다. 철거민 출신의 가난한 원주민들이 재정착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1984년 여름부터 1백여회에 걸쳐 시위가 계속되었고, 시위자들은 구속되기 일췌였다(정동의 1985, 152; 김정남 2005, 653-655).

이 과정에서 거주자와 시민사회는 물론 국회까지 나서서 서울시를 비난했다. 내용은 공영개발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고분양가와 채권입찰제를 통해 땅장사를 한다는 것이었다(『동아일보』 1984년 8월 24일, 11). 국회에서도 서울시가 과잉 이익을 취한다는 비판을 합과 더불어 철거민에 대한 대책을 따져 물었다(『경향신문』 1984년 11월 8일, 7). 서울시가 민간건설사와 다름 없이 고분양가의 중대형아파트를 짓자, 그로 인한 수익이 1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다(“시민에게 호소합니다”, 1985년 3월 8일).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었는데, 당시에 회자되었던 것은 올림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었다(강준만 2003c, 67).

이 사건으로 이후 올림픽 가시권을 위주로 한 철거가 본격화되면서 올림픽은 ‘외국인에게 보여주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 또는 빈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형성된다. 오금동은 올림픽공원 근처라는 이유로(“호소문[올림픽공원 및 재개발지역 오금동일대 철거에 대한 내용]”, 1986년 6월 21일), 신당동은 신라호텔 맞은 편이라는 이유로(김정남 2005, 658), 고강동은 성화가 지나간다는 이유로 강제철거가 이뤄졌다. 그런 이유가 없어도 상계동 사당동 등 재개발사업 자체가 매우 폭력적이었다. 1986년부터 1988년 2월까지 재개발과 강제철거로 인한 사망자가 14명이었을 정도다(김정남 2005, 658). 1983년 IPU총회를 시작으로 국제행사가 있을 때마다 반복된 노점상단속 역시 당사자들로 하여금 올림픽을 가난한 이들의 생존권을 빼앗은 것으로 인식하게끔 만들었다. 저항적 시민사회의 구성원들은 [그림 19]처럼 올림픽을 명분으로 한 도시개조가 가난한 이들을 내쫓고 있음을 비판했다.

이러한 인식 하에서 1987년 이후 저항적 시민사회가 활성화되자 이들은 올림픽에 대한 반대 의견을 매우 공공연하게 드러냈다. 1987년 7월 9일 연세대생 이한열의 장례식 당시 서울 시청 광장에 모인 군중들은 시청 건물에 게양된 태극기로 조기로 바뀌 달고, 올림픽기는 내려서 없애버렸다(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987, 9). 또 1988년 6월 초, 숭실대 인문대 학생회장이던 박래전은 분신을 앞두고 남긴 유서를 통해 “88올림픽이라는 화려한 전광판 밑에는 군화발에 짓눌려 신음하는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들이 있다”였다면서 “반민중적 올림픽을 결사 반대”해야 함을 주장했다. 그리고 아래 [그림 20]처럼 그의 장례식에서는 올림픽 마크가 담긴 깃발이 불태워졌다. 저항적 시민사회 진영에게 올림픽은 가장 중요한 화두 중 하나였던 것이다.



[그림 19] 한국교회사회선교협회 팸플렛 삽화  
(출처 : “겨울에 어디로 가야하나? 사람이나? 올림픽이나?”, 1985년 10월)



[그림 20] 1988년 여름 대학생 집회의 올림픽 마크 화형  
(출처 : “시청 앞 광장에 집결한 박래전 열사의 장례 행렬”, 1988년 6월 12일)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당사자들과 저항적 시민사회가 만들어 낸 올림픽으로 인한 강제 철거 및 노점상 단속에 대한 비판 담론은 민족이라는 구성원에 대한 다양한 권리 인정 및 포섭을 당위로 설정한 뒤 그에 기반하고 있다. 그리고 그 바깥에 외국인을

둔다. 그래서 이들은 먼저 민족을 기준으로 하여 문화적 인정 및 제도적 안전망 제공 자격의 테두리를 그리고, 그 위에서 올림픽을 매개로 한 도시개조 작업에 대하여, “86·88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86·88에 오는 외국인만 사람이고, 서민들은 사람들도 아닙니까?”같은 질문을 통해 국가가 인정과 권리의 주체를 전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김정남 2005, 659). 이는 당시 국가가 외국인을 위해 국민을 소외시키고 있다는 평가에 기초한 것이었다. 다음 인용문이 이를 보여준다.

“한낱 외국인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이유로 도시빈민들의 소중한 삶터를 짓밟고 임대주택 쟁취를 요구하는 철거민들을 감방으로 쳐넣고 있다. 이 땅의 빈민형제여! 88 올림픽은 우리에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노점상, 철거민은 이 땅의 국민이 아닌가? 어찌하여 코쟁이, 파란 눈의 눈요기를 위하여 이토록 짓밟혀야만 하는가 (“반민중적 올림픽으로 탄압받는 도시빈민공동투쟁위원회 결성식 및 노점단속.강제 철거 저지 결의대회”, 1988년 8월 28일)?”



[그림 21]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팸플릿 삽화  
(출처 : “단독올림픽은 우리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1988년 9월)

때로는 국내 사회 내 격차를 확대하는 것이 올림픽임을, 빈민들을 국민으로 포섭하

지 않고 있음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림 21]은 올림픽이 국내 사회 내의 격차를 확대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림 왼편에 있는 중산층과, 오른 편에 있는 빈민, 노동자, 농민과의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은 저항적 시민사회의 분화와 무관하지 않다. 위와 같이 올림픽을 매개로 한 민족구성원의 배제, 특히 빈민에 대한 배제를 특히 문제시 한 것은 앞서 소개한 PD계열이었다. 이들은 사회문제란 곧 독재정권과 독점재벌로 구성된 지배층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민중층을 착취하고 수탈함으로써 발생하는 빈곤에 다름없다고 주장했던 이들이다. 그런 이들에게 올림픽은 독점 재벌의 장사와 돈벌이를 독재 정권과 독점재벌이 결탁하여 민중층을 희생시키는 계기로 규정된다. 다음 인용문이 이를 잘 보여준다.

그 동안 서울올림픽을 위해 독재 정권과 독점 재벌이 수행한 활동상을 간단히 확인해보자. 군부독재와 독점 재벌은 3400억원을 투입하여 잠실의 주경기장, 올림픽 타운을 지었다. 저 웅대한 축구장이며 현대식 수영장, 선진국에 전혀 손색없는 시설을 지어놓고 노태우와 정주영, 김우중은 한국의 발전상을 만세기에 자랑하고 있다. 한국 노동자와 민중의 피땀을 짜낸 자신들의 빛나는 솜씨를! (중략)

이 ‘민중의 영광’, ‘선진국에로의 도약’이라는 화려한 구호 아래 저들은 우리 민중에게 어떠한 고통을 강요하였던가? 사상 유례없는 국제행사인 올림픽을 위한 ‘환경미화’를 한답시고, 정부는 5월 말부터 강력한 집중 단속을 펴 7월 1일까지 노점을 완전히 근절하겠다고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중략) 이처럼 전국에서 올림픽 때문에 기본 생계조차 위협받고 있는 노점상은 무려 50만명. (중략)

“성냥갑만한 집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라고 우리의 어린 소녀가 호소하고 있을 때, 독재 정권은 ‘외국인들의 눈에 나면 안된다’며 산동네의 성냥갑만한 집들을 대대적으로 부숴 왔다. 부숴줄 뿐 아니라, 그 땅을 건설 재벌에게 헐값에 팔아 먹었다. 이런 반민중적 범죄가 서울의 200군데에서 자행되어 왔다니! (중략)

한편 이번 스포츠 파티에서 한몫 톡톡히 재미를 보는 자들이 있다. (중략) 한국의 독점 재벌에게 서울올림픽은 절호의 장사판이 된다.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88 올림픽 공식 지정상품!’ 물건을 팔아먹는 장사라면 못할 것이 없는 자본가들에게 지구촌 167개국의 안방 구석구석까지 동시 증계되는 올림픽, 이 얼마나 위대한 ‘장사판’인가(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 1989, 314-317).

이처럼 저항적 시민사회는 올림픽을 계기로 한 민족구성원, 특히 빈민에 대한 대대적인 배제 조치들은 수탈적인 독재정권과 독점자본을 위한 부당한 처사로 보았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저항적 시민사회는 발전국가에 포섭을 요구한다. 도시 빈민들을 문화적으로 인정하고 주거 대책을 통해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망도 공급해줄

것을 요구했다. 일례로, 1985년도 10월 당시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는 올림픽으로 32개의 재개발 프로젝트가 예정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헌법 제9조 전문<sup>151</sup>을 게재하였다. 정부가 국민의 생존에 책임이 있음을 명기하면서 “정부는 우리에게 대책을 세워줄 의무가 있다”고 단언한다(“겨울에 어디로 가야하나? 사람이냐? 올림픽이냐?”, 1985년 10월). 1988년 4월 18일 도시노점상연합회가 주최하고 권태환 사회학과 교수, 제정구 한겨레민주당 대표 등이 참가한 “노점상의 생존권과 올림픽에 관한 공청회”는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에서 시작하여 문화적 인정, 제도적 안전망에 대한 요구를 포괄하는 결의문을 발표하였다(“노점상의 생존권과 올림픽에 관한 공청회”, 1988년 5월 4일).

- 국민의 생존권은 모든 법 위에 있으며, 국민이 생존권을 압살하는 법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 올림픽과 노점상과는 대립되는 점은 하나도 없음을 밝히며, 국제행사와 올림픽을 빙자한 노점단속과 강제 철거 등 사대주의적 작태를 즉각 중지하라.
- 정부는 노점상들 도시빈민에 대한 의료혜택 및 주거 대책을 수립하라.

이처럼 민족을 경계로 삼아 내부의 구성원에 대한 배제를 비판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포섭을 권리로 내세운 주장 뒤에는, 국가라면 민족 구성원들을 균질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다. 즉, 민족의 구성원들을 기본적으로 인정가능한 범주 내에 넣으라는 것이다.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똑같이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게 하는 것만이 우리가 경제건설을 이룩하여 올림픽을 개최하는 목적에 부합될 것”이라 본 이들은(“노점상의 생존권과 올림픽에 관한 공청회”, 1988년 5월 4일), 올림픽이 권리의 박탈과 배제가 아닌 권리의 보장과 문화적 인정에 기초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 2) 외국인의 문제화

올림픽이 외국인을 위해 한국인을 배제하는 행사가 되었다고 본 저항적 시민사회는 이제 질병을 일으켜 사회를 위협에 빠뜨릴 잠재적 위험요소로 외국인을 규정하는 모습도 보여준다. 국가의 개입 하에 1960년대 중반부터 지속되어 온 ‘기생관광’ 혹은 ‘성매매관광’이 올림픽을 계기로 활성화 될 조짐을 보이자(박정미 2014a), 여성단체들은 이를 반대했다. 그리고, 서구인, 특히 미국인들을 잠재적인 AIDS(후천성면역결핍증) 보균자로 상정하면서 잠재적 위험요소로 취급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다. 이들은 “올림픽의 화려한 간판아래 한국여성이 우롱당하고 민족의 순결이 짓밟”히고 있다고 비판하고(“반도의 딸 팔아먹은 매춘올림

<sup>151</sup>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

픽”, 1988년 10월 12일), “딸들의 아랫뺨 팔아 손님 치르는 나라가 선진국인가?”라고 국가에게 따져 물었다(『베틀』 1988년 9월호, 2). 민족을 ‘가족’으로 비유하고 성매매 여성을 ‘딸’로 정의하는 등 가족의 유비를 통해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동질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 하에서,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었으나 여성들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발전국가의 성매매정책으로 인하여 성매매 여성이 늘어났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었다(“매춘올림픽과 에이즈”, 1988년).

반면에 외국, 특히 미군과 미국 남성 관광객은 잠재적 위험요소로 그려지고 있다. 우선 이들은 에이즈 감염의 65.4%가 미국인이고, 미국 에이즈 환자의 94%는 남성이며, “미군이 주둔하거나 미국인 관광객이 많이 드나들고 매춘관광이 활개치는 나라일수록 여성감염자의 숫자가 많다”고 주장한다(“매춘올림픽과 에이즈”, 1988년). 한국의 여성 에이즈 양성반응자 7명 중 6명이 성매매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확실히 감염 결로는 미군들로부터인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유춘자 1988, 91).

그리고 이 에이즈라는 병은 어마어마한 감염력을 가진, 사회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질병으로 그려진다. 이들은 미군에 의한 성매매 여성 감염이 국내의 남성을 감염시킬 것이고, 이는 가정주부의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다시 태아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게다가 체액과 혈액의 접촉경로를 넘어 공중변소, 대중 목욕탕까지 전염이 확산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전염 가능성을 가진 질병의 보균자는 미군을 비롯한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미군의 주둔과 올림픽 개최는 에이즈 앞에 4천만 국민을 무방비상태로 노출시키고” 있다고 본 것이다(“매춘올림픽과 에이즈”,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국가가 서구 선진국을 친절과 위생의 공간으로 표상하고, 반대로 한국을 무질서의 공간으로 정의하면서 사회문제의 원인을 한국인 일반의 습속에 기인하는 것으로 규정했음을 우리는 앞에서 보았다, 여성계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는 민족주의적 사고에 기초하여 국가의 사회문제 원인 규정 논리를 거꾸로 뒤집은 것이다(박정미 2014b, 422-423).

이에 대한 대책 역시 비판의 대상이었다. 당시 외국인에 대해서는 AIDS검사가 실시되지 않고 내국인 성매매여성을 상대로만 검사가 시행되었는데, 이러한 제도는 발전국가의 ‘사대주의’적 성격을 보여준다는 것이 이들의 비판이었다(“88서울올림픽은 매춘올림픽인가?”, 1988년 9월 21일). 오히려 AIDS의 원천봉쇄를 위해 ‘출입 외국인에 검역필증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유춘자 1988, 91).

### 3) 민족 미술의 포섭 요구

1987년 여름부터 1988년 여름까지, 조직위원회는 올림픽을 맞아 개최하는 미술행사를 세계야외조각심포지움’은 한국 미술계의 반발을 일으킨다. 이 반발은 저항적 시민사회가 아닌 미술인 집단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지만, 그들의 주장은 저항적 시민사회와 마찬가지로 ‘민족적인 것’에 대한 포섭의 요구였다.

시작은 1987년 7월 3일부터 8월 20일까지 개최되었던 국제야외조각심포지움이였다. 이는 사실 1982~3년 무렵에 문화올림픽 행사의 일환으로 미리 계획된 것이 아니라, 에펠탑처럼 웅장한 규모의 올림픽 상징조형물 건립이 불가능해지자 추진엘리트들이 대체 이벤트로 고안한 것이었다(박세직 1991, 116). 운영진은 파리 거주 서양화가 문장철과 조각가 한창조, 이들이 추천한 평론가 제라르 슈리게라, 피에르 레스타니(Pierre Restany), 안테 글리보타(Ante Glibota) 등이었다(이민수 2014, 127). 이들의 추천으로 한국인 2명을 포함, 16개국 17명의 조각가가 해당 기간 동안 한국에서 작업을 하고 올림픽공원 현지에 작품을 설치하는 행사였다.

그런데, 7월 3일 행사가 시작된 지 4일만에 410명의 미술인들이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에 대한 미술인 공개질의서”라는 제목의 서한에서, ‘기획과정의 불합리와 불투명’, ‘출품작가 선정 및 작품수준’, ‘프랑스에서 활동중인 한국인 작가에 의존한 실무’, ‘90억이라는 전시성 예산’, ‘몽촌토성 훼손’ 등의 이유로 문제를 제기했다(『중앙일보』 1987년 7월 8일, 6).

이 410명은 “서울올림픽 현대미술제 변칙운영 저지를 위한 범미술인 대책위원회”를 조직했고(김서봉 1989, 18), 7월 14일과 8월 14일, 두 번에 걸쳐 조직위원회와 조각심포지움 운영진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한다. 1차 성명서에서 이들은 추진엘리트들의 ‘독단적이고 편의주의적’인 기획도 문제시 했지만, 무엇보다도 야외조각으로 인해 몽촌토성을 5~7미터 파내는 등의 훼손이 이뤄진다는 점을 크게 문제삼았다(김서봉 1989, 70). 2차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 네 가지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1. 문화사적 안목이 없이 형식적 참가에 그친 ‘비문화적이고 관료적인 발상’으로 이뤄진 행사이고, 2. 1986년초의 조각공원계획부터 87년 2월 ‘세계현대미술제’로 확대되는 과정이 여론수렴도 제대로 하지 않은 ‘졸속과 전횡’으로 진행되었다는 점, 3. 조직위원회와의 인적관계를 통해 거대 행사에 적합하지 않은 ‘실무진 및 국제 운영위원의 편의주의적 선정’이 이뤄지고, ‘그 결과로서의 무능’이 드러났다는 점. 4. 조직위원회에 대하여 국립현대미술관, 한국미술협회, 한국미술평론가협회 등이 ‘무기력하고 순응적으로 들러리 노릇’을 했다는 점. 이상이 문제제기의 내용이었다. 이 서명을 주도한 미술인들은 이 행사가 ‘비주체적’이고 ‘비문화적’이며, ‘관료적’이라고 보고 있다(김서봉 1989, 73-77; 142-143). 한국 미술인 집단을 배제한 채 이뤄진 비민주적인 진행방식 대한 비판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이다.

일종의 전문가집단의 집단적 항의라는 낯선 사태였기에, 다른 시민사회 구성원들의 항의에 대해서는 무시로 일관하던 추진엘리트들은 이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대처에 들어간다. 조직위원회는 대책위와 한국미술협회 관계자들을 만났고, 박세직 위원장은 TV 인터뷰와 기자회견을 통해 추진엘리트들의 입장을 해명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문화재 훼손 논란에 휩싸였던 몇 개 작품의 위치를 옮겼고(김서봉 1989, 20-25), 1988년 여름부터 개최될 ‘세계현대회화전’에 한국인 작가전(‘한국현대미술전’)을 별도로 만들어 회화 작가들의 반발을 무마하고자 했다(『매일경제』 1987년 8월 7일, 9).

그런데, 세계현대회화전과 한국현대미술전은 더 큰 논란과 반발을 불러왔다. 세계현대회화전 초대작가 158명중 한국작가는 21명이었는데, 그 중 한국화가는 3명, 18명의 서양화는 전부 비구상미술가(추상화가)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한국현대미술전도 마찬가지였다. 161명의 초대작가 중에 한국화가는 14명이었고, 이번에도 구상미술가는 전무했다(이민수 2014, 128). 게다가 한국화가들이 추진하던 “세계현대채목전”도 부결되었다(김서봉 1989, 91).

이에 미술가들은 “올림픽 미술제전 비주체성 시정을 위한 범한국화추진위원회”, “88세계현대미술제 및 한국현대미술전람회 작가선정 백지화추진위원회” 등의 조직을 만들어 각각 1,072명과 11,128명의 서명을 받고 집단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각기 4회와 2회의 성명을 발표했는데(김서봉 1989, 78-99). 이들의 비판 키워드에는 이제 ‘비민주’에 ‘비민족’, ‘비주체’가 더해졌다.

범한국화추진위는 2월 8일 1차 성명서를 통해 “찬란하고도 신성해야 할 우리 민족문화의 대체전을 앞두고 분명 엄숙한 정의로 자존의 의식을 세계에 널리 알려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통회화를 의식적으로 도외시 했다고 비판했고, 백지화 추진위원회는 다음 두 항목을 통해 해당 행사들이 ‘반민족적’이라고 정의한다(김서봉 1989, 90-95).

1. 민주화로 가는 길목에서 세계인의 이목과 초점이 서울로 집중되는 상황에서 세계 속에 한국미술을 심고 올바른 민족정신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모든 장르의 대표작가들이 선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시대의 산물인 권위주의적 편견과 편파성에 의한 선정을 규탄하고 주최측에 의한 작가선정의 무효화를 선언한다. (중략)
7. 이번 선발기준은 민족정신을 무시한 전통문화의 뿌리를 송두리째 짓밟은 무분별한 처사로 본다.

여기에 민족미술협의회, 미술대학생 대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 사태를 발전국가 권위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하며, 또한 그들의 ‘매판적 성격’과도 연결된다고 본다. 그러면서 훨씬 더 강력한 어조로 비판하고 있다. 민족미술협의회는 “현 미술제가 국민을 기만하는 문화정책”이며, “88서울올림픽이 민족의 대동을 위한 세계적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민족문화의 자주화 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미술대학생 대책위원회 역시 미술제가 최근 10년간의 서구 모더니즘 계열에 치우친 선정기준으로 한국 미술이 서양 미술의 아류임을 보여주는 “문화식민지적 발상에서 비롯된 사대주의적 행사”이자, “박제화된 형식적 민족문화와, 사이버 관제 고급문화, 상업주의적 대중문화를 통해민중들의 정서를 파괴시키는” “군부독재 정권의 반민족적, 반민중적 문화정책 중 하나”로 정의한다(김서봉 1989, 89; 103).

아래 [그림 22]는 당시의 상황을 풍자한 캐리커처다. 여기서 외국 미술가들은 조



각품을 들고 성문을 향해 돌진 하는 ‘오랑캐’로 정의되고 있다. 외세 미술의 한국 민족 침략으로 당시의 올림픽 조각 심포지움 사태를 정의한 것이다.



오랑캐의 잔치 ● 반쪽이

[그림 22] 여성신문 삽화 ‘오랑캐의 잔치’  
(출처 : 김서봉 1989, 12)

이와 유사한 사태가 1988년 봄에 대중음악계에서 재연된다.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와 MBC는 1985년 11월 공동으로 ‘서울올림픽 노래’의 가사를 우선 공모하여 박건호의 ‘아침의 나라에서’를 선정한 뒤 작곡가 길옥윤으로 하여금 곡을 붙이도록 했다(『경향신문』 1985년 11월 22일). 그리고 이듬해, 일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던 가수 김연자의 노래로 탄생하게 되었다.

하지만 1987년 3월부터 주제가가 새로이 만들어진다. 박세직과 이어령 등의 추진 엘리트들은 노래가 너무 ‘한국적’이고, ‘세계적이지 않다’는 이유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했다(김민희 2016년 7월 25일). 조직위원회 역시 올림픽은 전세계인이 주목하는 행사이므로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노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한겨레』

1988년 7월 12일, 5). 조직위원회는 폴리그램사와의 계약을 체결했고,<sup>152</sup> 폴리그램사는 『탑건(Top Gun)』 등의 영화음악 제작으로 아카데미 음악상을 3회 수상한 이탈리아의 작곡가 조르조 모로더(Giorgio Moroder)에게 작곡을 의뢰했으며, 모로더는 자신과 함께 『탑건』의 주제가 Take My Breath Away를 작업했던 톰 휘틀록(Tom Whitlock)에게 작사를 의뢰했다.<sup>153</sup> 노래를 부를 가수로는 유럽에서 활동중이던 코리아나(Koreana)가 선정되었고, 추천엘리트 중 한명이었던 김문환이 영어 가사를 번역하여 한글가사를 작사했다. 그리고 1988년 6월 21일 정식 공개되었다(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1989, 397).

이에 대중가요계는 크게 반발했다. 연예협회는 취소하지 않으면 서울올림픽에 일체 참가하지 않겠다는 으름장도 냈다. 6월 29일에는 한국연예협회 창작분과위원회의 성명이 있었다. 제목은 “우리의 노래로 88올림픽의 막을 올려라”였고, 주된 내용은 “올림픽을 주최한 나라들은 한번도 외국인이 만든 노래로 서막을 장식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한겨레』 1988년 7월 12일, 5). 저항적 시민사회 역시 “외국것, 미국 것이라면 간도 쓸개도 다 빼 줄 작자들!”이라며 힐난했다(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 1989, 315). 미술계와 마찬가지로 ‘민족적인 것’에 대한 포섭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올림픽공원의 조각심포지움, 세계현대회화전, 한국현대회화전, 올림픽 공식주제가 등, 이 모든 것들에서 발전국가는 서구 선진국으로부터 문화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우선적 요소로 고려했다 여겨진다. 이를 위해 추진 엘리트들이 선택한 것은 서구심사위원, 서구미술, 서구 작곡가, 서구에서 활동중인 가수였다. 국제적인 지위 향상이 가능한 무언가를 만들어 내는 것을 중요한 규범으로 여기고 ‘민족적인 것’이라 개념화한 발전국가의 입장에서는 예상되는 행위였다. 이에 대한 비판과 반발 역시 ‘민족적인 것’이라는 규범적 개념을 중심으로 담론화되었다. 추진 엘리트들의 미술제 운영과 공식주제가 선정에 반발한 미술인들과 대중음악인들은 전통적인 미술을 ‘민족적인 것’으로 정의했다. 국제사회로부터 문화적으로 인정가능한 무언가가 아니면 배제하려는 발전국가에 대항하여, 이들은 전통미술도, 한국인 음악가도 ‘민족적인 것’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저항적 시민사회와 마찬가지로 전면적인 문화적 인정과 포섭을 바랬던 것이다.

### 3) 남·북 공동올림픽 개최 주장

<sup>152</sup> 음반의 제작과 유통은 폴리그램사가 담당하고 수익도 폴리그램사에게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100만장을 넘는 초과판매분에 대해서는 1장당 5센트를 조직위원회에 지급하기로 하였다(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 1989, 397).

<sup>153</sup> 이어령의 증언에 의하면 모로더는 사물놀이 리듬을 적용해달라는 부탁과 작사가를 한국인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모두 거절했다고 한다. 그러자 조직위원회가 양보하여 요구했던 ‘벽을 넘어서(Breaking down the walls)’와 ‘아리랑(Arirang)’이라는 가사는 포함시켰다고 증언한다(김민희 2016년 7월 25일).

서울올림픽은 또한 한국 사회 통일운동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소재였다. 저항적 시민사회의 통일운동은 1988년 봄부터 공동올림픽 개최론과 접속하였기 때문이다. 이 역시 민족의 구성원 모두를 포섭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시작은 1988년 3월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선거였다. 후보자였던 김중기와 유제석은 3월 29일 유세에서 “민족대단결을 위한 남북한 청년학생 체육대회”를 제안했고(김중기 1988년 3월 29일), 해당 내용을 ‘김일성대학 청년에게 드리는 공개서한’이라는 형식으로도 발표했다.

“이번 88올림픽은 한민족이 하나로 어우러지고 인류의 평화에 봉사해야 하는 평화대제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도의 남단에서만 반쪽으로 진행되어 이 빵에 분단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려는 우리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 이제 저희 88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부학생회장 후보 기호 2번 김중기 유제석은 북한의 김일성대학 청년학도 여러분께 ‘민족화해를 위한 남북한 국토종단 순례대행진’과 ‘민족대단결을 위한 남북한 청년학생체육대회’를 제안합니다(고광현 1988a, 35).”

두 사람은 총학생회장에 당선되지 못했고, 즉시 국가보안법으로 위반혐의로 수배되었다. 하지만, 위의 제안은 곧바로 ‘공동올림픽 개최론’이 되어 학생운동 진영에 퍼진 듯하다. 4월 6일 서울대 총학생회장 당선자 전상훈은 발대식에서 남북 청년학생 체육대회만 아니라 남북한 올림픽의 공동개최를 주장했다(조동엽, 1988년 4월 6일). 4월 16일에는 “한반도 평화와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한 국민대토론회”가 열렸고, 이를 주최한 서울지역총합생회연합은 “서울올림픽에 참가하고자 하는 세계 각 나라와 평화 애호민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이라는 글을 발표했다. 내용은 서울올림픽에 무조건적으로 참가할 것이 아니라 올림픽이 평화 실현으로 이어지도록 공동올림픽 개최를 전제로 올림픽 참가의사를 표명해달라는 것이었다(고광현 1988a, 36).

5월부터는 공동올림픽이 저항적 시민사회 전반의 의제로 확산된다. 5월 11일, 함석헌과 문익환 등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명사들이 공동올림픽 개최론에 찬성하는 글을 발표했다(강준만 2003c, 273). 특히 5월 15일 명동성당에서 할복한 서울대생 조성만의 유서는 의제 확산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유서는 “올림픽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남한과 북한이 같이 참여하여 민족화해와 민족통일을 이루는 기반이 되어야”만 한다면, 공동 올림픽 개최를 미군의 축출, 군사정부 퇴진과 더불어 3가지 요구 사항 중 하나로 서술했다(한상봉 2011년 5월 15일).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8일 야당 총재 3명(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은 올림픽이 “민족의 저력을 과시하고 분단 민족의 통합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고광현 1988a, 44). 정작 셋 중에서 공동개최론 자체를 지지한 것은 김대중 혼자였지만 말이다(강준만 2003c, 274-5). 5월 19일의 ‘민족화합공동올림픽추진 불교본부’의 발족, 21일 개신교 목회자들의 공동올림픽 촉구 성명, 28일 종교 및 사회단체 68개의 ‘남북공동올림픽 및 6.10학생회담 촉구’ 성명 등, 공동올림픽은 시민사회와 정계에서 통일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가 되었다(고광현 1988a, 43-45).



[그림 23] 불교사회단체들의 올림픽 공동개최론 팸플렛  
(출처 : “88 서울올림픽 분단올림픽=독재올림픽≠평화올림픽”, 1988년 9월)

이들은 왜 공동올림픽 개최론을 주장한 것일까? 첫째, 이들은 [그림 23]과 같이 남한만의 단독올림픽을 치르면 분단구조가 계속된다고 주장한다. 이유는 이러하다. 단독올림픽이 강행될 경우 “한반도 내에 두 개의 국가가 있다는 것을 세계적으로 공인시키고, 이후 교차승인(미일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중소가 남한을 인정하는 것)과 UN동시가입을 추진, 영구분단”이라는 결과를 낳는 다는 것이다(“공동올림픽으로 조국통일의 새날을!”, 1988년). 또한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하더라도 “서로 경쟁의식을 가지고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응원하게 될 것”이고, “단독 올림픽을 계기로 국내외적으로 남과 북은 별개”라 여겨지며, “이질감과 적대의식은 팽배해지고, 긴장은 고조”된다는 것이다(“분단을 뛰어넘어 정토의 세계로-공동올림픽과 통일”, 1988년).



[그림 24] 공동올림픽을 주장하는 대학생들의 플래카드  
(출처 : 『샘이 깊은 물』 1988년 10월호, 128)



[그림 25] 한양대학생들의 올림픽 반대집회  
(출처 : 『샘이 깊은 물』 1988년 10월 호, 129)

둘째, 테러방지나 올림픽 안전 등을 이유로 여름부터 한·미·일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함으로써 한반도에 긴장 및 대결 분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도 결국은 단독올림픽을 고집하다 보니 생기게 된 일이라는 것이 이들의 분석이었다(“단독올림픽은 우리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1988년 9월). [그림 24]에서 어렵듯이 보이듯, 올림픽을 핑계로 한반도에 진출한 ‘외세’인 미국과 일본을 몰아내려면 공동올림픽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

셋째, [그림 25]에서 보이듯 저항적 시민사회는 올림픽이 분단구조와 유착되어 있는 독재체제의 안정화 수단이 된다고 보았다. 저항적 시민사회에게 1980년대의 군부독재 정권은 분단구조로 이익을 보고 있는 미국의 대리통치세력으로 여겨졌다. 그리고 올림픽은 이들의 군정체제를 안정화시키고 미국의 이익을 지키는 수단으로 해석되었다. 이러한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이들은 단독올림픽이 미국과 군정의 승리이지만, 국민에게는 분단과 탄압의 도구가 될 것이라 내다보았다(“독재안정화 기도, 88 올림픽”, 1988년).

이와 달리, 남북한의 올림픽 공동개최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았다. 1. 세계만방에 민족의 대단결을 과시하고 통일기운을 드높일 수 있고, 2. “자유 왕래와 전민족적 교류”로 남북간의 오해와 불신을 허물어 민족적 화해”를 조성할 수 있으며, 3.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진정한 평화”를 초래하고, 4. “분단을 빌미로 탄압받는 애국적·민주적 계층이 활성화”되며, 5. “단독올림픽에 소요되는 군사비, 치안유지비 등 불필요한 경비가 절감”된다는 것이다(“분단을 뛰어넘어 정토의 세계로-공동올림픽과 통일”, 1988년).

또한 “단독올림픽을 위해 벌이는 구걸 외교를 청산”하여 “외세에의 예속 심화를 막아낼 수 있”고, “부정비리 조사와 광주학살 진상규명 등 범국민적 요구를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라는 미명하에 호도하려는 현 정권의 기만적인 의도”를 막을 수 있으며, “올림픽에 드는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고조성만 열사의 유지를 받들어 남북 공동올림픽과 6·10 남북 학생체육회담의 성사를 촉구한다”, 1988년 5월 28일).

이들이 제안한 구체적인 공동올림픽 개최안은 다음과 같았다. 올림픽을 서울과 평양에서 개최하고, 개최회식은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가면서 하거나 각기 개최하며, 조직위원회는 따로 구성하되 공동위원회를 만들고, 선수와 임원, 취재진만 아니라 응원단과 관광객 등 모든 사람들의 자유로운 왕래를 보장하며, 이를 위하여 도로, 철도, 항공편을 연결하며, 개최비용은 공동으로 부담하고, 단일팀으로 출전하는 것이었다(“분단을 뛰어넘어 정토의 세계로-공동올림픽과 통일”, 1988년).

다만, 올림픽으로 인한 민족 구성원의 배제 문제를 비판한 민중민주(PD)계열은 민족해방(NL)계열이 주장하는 공동올림픽을 포함하여 일체의 올림픽을 반대했다는 사실은 주지해 둘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PD계열을 대표하는 단체였던 ‘사회주의노동자동맹’은 1988년 6월 12일 선언서를 통해 “공동올림픽이 되건, 단독으로 치러지건 간에, 부르주아 정부권력의 강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망각한다”고 주장했고, 공동올림픽

픽을 주장하는 민족해방 계열의 세력은 “올림픽을 가장 철저히 부르짖어 민족주의 입장에서 옹호하고 대변하는 것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고 비판했다(“공동올림픽 결사반대”, 1988년 6월 12일).

## 2. 중산층 시민사회의 문화적 인정 전유

### 1) 1987년 이후의 시민사회 분화

한 도시사회학자는 소자산집단과 중산층이 “반군부독재 민주화를 향한 물꼬를 트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과 동시에 “1987년 노동자대투쟁 당시 한국사회의 이념적 좌경화를 막는 결정적인 방과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한다(전상인 2009, 136). 구체적으로 증명되기는 어려운 다소 선언적인 서술이긴 하지만, 저자는 1980년대 후반 노동자 계급과 중산층 사이에 정치적 견해차가 존재했음을 주장했던 것이다.

실제로, 1987년 6월의 직선제 개헌 이후에는 사회 세력 내 여러 계급 사이에 민주화의 내용과 전략을 둘러싸고 의견의 균열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정영국 1993, 239). 앞서 본 것처럼 윤상철은 1987년 개헌을 이끌어 내는 과정이 성공적일 수 있었던 요인으로 이른바 ‘최대도전연합’의 형성을 들고 있다. 이는 1987년 6월 직선제 개헌을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저항적 시민사회와 야당 사이에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제휴가 이뤄져 다수성을 확보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여기에 다른 하나의 제휴가 존재한다. 그것은, 계급적인 차원에서 볼 때 노동계급의 구성원들과 도시 중간계급(중산층)의 구성원들이 이러한 컨센서스에 동의하고 제휴하였다는 것이다. 1987년 6월 민주화운동 당시 대거 등장한 ‘넥타이부대’는 87년 6월 항쟁을 지지하는 중산층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는 존재들이었다(윤상철 1997, 142-158).

그런데, 1987년 6월의 민주화 과정 이후 중산층과 저항적 시민사회, 중산층과 노동계급 사이에 정치적 견해를 포함하여 다양한 부분에서 차이들이 드러나게 된다. 이로 인해 노동계급은 87년 이후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송호근 1994, 119). 윤상철의 경우 1987년 민주화 이후 중간계급은 정치적 발언의 영역에서 철수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윤상철 1997, 211-215). 그리고, 이후에는 저항적 시민사회나 노동계급의 영향력의 확대를 경계한 것으로 평가된다. 상기의 전상인의 서술에서도 드러나지만, 안정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한 중산층의 성향은 1980년대 후반 노동계급의 정치적 의견이 관철되거나 그 영향력 확대되는 데 걸림돌 역할을 한다(임현진·김병국 1991, 151). 중간계급과 저항적 시민사회 사이의 관계 역시 중간계급과 노동계급의 그것과 유사했다 1980년대 후반 ‘전국농민운동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도시노점상연합’ 등 저항적 시민사회의 규모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산층은 저항적 시민사회의 확대를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정영국 1993, 235).

하지만 중산층이라 불리는 이들이 수동적으로만 반응한 것은 아니다. 1980년대 후반에는 중산층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사회운동을 표방하는 이들이 여럿 등장하였다. 일례로 1989년에 만들어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저항적 시민사회가 빈번하게 활용해오던 ‘민중’ 개념 대신 ‘시민’ 개념을 사용하면서 중산층 기반의 사회운동을 표방한 단체였다. 이들은 의식적으로 시민이라는 개념을 자주 활용하였는데, ‘민중’ 개념이 소외되고 억눌린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다면 시민 개념은 중산층을 포괄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었다(박명규 2009, 240-243).<sup>154</sup> 비슷한 시기 여성단체연합, 공해추방운동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민주화를위한변호사협회 등의 시민운동단체들이 대거 조직된다(김정남 2005, 642-651).

이들 시민운동과 노동운동을 비롯한 당시의 저항적 시민사회와는 정치적 이념의 차이와 더불어 관심 주제의 차이가 존재했다. 저항적 시민사회가 ‘민중’이라 불리는 이들을 중요한 참여 주체로 여기고 보다 근본적인 변혁을 지향하며 비합법적인 방식의 운동을 지향했다면, 시민운동단체들은 중산층을 중요한 참여 주체로 여기고 보다 구체적인 개혁을 지향하며 합법적인 방식의 운동을 지향한 것으로 평가된다(홍성태 2003, 27). 개입하고자 하는 문제 영역 역시 달랐다. 저항적 시민사회가 개입하고자 하는 영역이 주로 노동문제, 빈민문제, 통일문제 등이었다면, 이들 시민운동 단체들이 개입하고자 한 문제들은 환경문제, 군축, 부정부패 추방, 낙태, 경제정책 등이었다(백종국 1993, 148). 여러 모로 기존의 저항적 시민사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1987년 이후에는 정치영역을 비롯한 여러 영역에서 중산층과 저항적 시민사회 사이의 의견차이가 드러날 가능성이 생겼다. 정부에 대한 의견, 올림픽에 대한 의견, 올림픽을 매개로 한 정부의 사회개조에 대한 의견에 있어 중산층은 이전의 저항적 시민사회와 다른 반응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산층의 올림픽 반응은 저항적 시민사회와는 독자적인 양상을 띄게 된다.

## 2) 중산층의 문화적 인정 전유

올림픽 이후, 그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한가지 평가방식이 새로이 등장한다. 그것은 올림픽에 대해서는 성공으로 평가하되, 성공의 요인에서 발전국가를, 특히 권력자를 분리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면서 올림픽의 성공을 개인화한다. 예를 들어 『창작과 비평』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sup>154</sup> 1990년대 초반 사회학자 김성국은 시민이라는 범주가 한편으로는 국가를 관리하는 특권층과 대립하고, 자본주의를 부정하는(노동자) 계급 세력과도 대립적 관계에 있다고 정의한다(김성국, 1992, 162).



전 세계가 다 모이다시피 하면서 북한의 동족들은 배제된 놀이마당이었으며 남한 내에서도 주로 있는 사람들의 잔치였음을 부인할 길이 없다. 그리고 이에 대한 모든 당사자들의 응분의 역사적 책임을 우리는 두고두고 물어야 할 것이다. 반면에 이런 한계 안에서 올림픽이 거둔 엄연한 성공을 굳이 외면 하는 것은 그러한 역사적 책임추궁과 무관한 일이다. 입으로는 ‘민족의 저력’ 운운하면서 그 열매는 행사를 주관한 자들이 가로채려는 속셈이 나쁜 것이지, 온갖 한계 속에서도 민족의 저력이 또 한번 드러났다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다. 도대체 88년에 서울에서 올림픽이 열릴 수 있었던 것 자체가 87년 6월의 민중승리 덕분이었으며, 행사장의 화려함은 그대로 우리 국민의 피땀이었다. 그리고 일시적인 스포츠 열기가 국민들의 정치의식을 영영 마비시키리라는 생각은 그것이 위정자의 희망이든 지식인의 우려이든 결국 민중을 앞잡아보는 태도이다. 바로 얼마 전에도 86 아시안게임을 화려하게 치렀으므로 매사가 뜻대로 되리라고 기대한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착각이었던 것이다(『창작과 비평』 1988년 12월호, 2-3).

인용문은 올림픽이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고 이를 발전국가 및 권력자의 공로로 돌리는 의견은 물론, 올림픽에서 문제점을 찾아내어 비판을 지속한 저항적 시민사회와도 선을 긋고 있다. 이들이 보기에 올림픽은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이는 국민들이 노력한 결과라는 것이다.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성공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던 금메달에 대한 반응 역시 비슷했다. 금메달리스트들의 성공을 ‘사회화’시켰던 것이다. 대표적 사례가 86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 임춘애였다.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중에서도 임춘애는 가장 큰 주목을 받았다. 2년 뒤 올림픽 성화 최종주자가 될 정도였다. 담당 코치의 인터뷰가 와전되어 퍼진 “밥보다 라면을 더 많이 먹어야 했고”, “우유를 마시며 연습하는 친구가 부러웠다”는 발언은(『동아일보』 1986년 10월 3일, 8), 순식간에 임춘애의 신체를 사회의 신체이자 민족의 신체로 의미화시켰다. 10월 4일 동아일보 사설 “라면먹고 이긴 춘애야”가 대표적으로, 이는 아시안게임의 성공을 ‘사회화’하는 전략의 일환이었다.

“허약하기 짝이 없어 뵈는 체격에도 불구하고, 두 눈은 유난히 커 ‘왕눈이’ 별명을 가진 임춘애는 따라서 한국인의 원체형을 확인시키고, 스포츠와 사회구조의 함수관계랄지, 가난과 금메달 사이에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할 것인가를 점검하게 만들기도 한다. …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거둔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과는 서민의 승리라고 보아 좋을 것이다. … 임춘애로 대표되는 인간승리의 꿈나무들은, 하나같이 오늘을 위해 뛰고 들어올리고 치고 차면서, ‘숨진 아빠’와 ‘고생하는 어머니’를 떠올리는 식으로 이를 악물었을 터이다. 춘애가 바로 그랬다.”(『동아일보』 1986년 10월 4일, 3)

사설은 임춘애의 금메달을 ‘서민의 승리’로 정의하면서 아시안게임의 성공을 사회기층의 구성원들의 것으로 만들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의 승리가 가족의 승리였다. 이는 아시안게임만 아니라 올림픽 영웅 담론에서도 특징적인 것이었다.

선수들 스스로도 그랬다. KBS가 발간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53인과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16인의 수기를 보면, 국가를 직접 언급하거나 협회나 태릉선수촌의 시스템 등에 대하여 언급한 메달리스트는 매우 적다(한국방송사업단 1986, 1988). 올림픽의 경우 메달리스트들의 수기 뒤에 추진엘리트들과 전문가들이 국가의 사회정치적 성공 사례로 올림픽을 규정짓는 글을 게재했지만, 선수들의 글은 이것과 완전히 거리를 두고 있다. 아래 [표 16]이 보여주듯이, 선수들은 가족의 지원이, 자신과의 싸움이, 좋은 교사와 동료, 자신의 종교 등의 힘이 자신의 금메달을 만들었다고 말한다. 재벌후원자나 국가의 혜택을 언급한 이들은 각각 2명으로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할 뿐이다.

[표 16] 아시안게임 및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이 서술한 우승 기여 주체  
(출처 : 한국방송공사 1986, 1988)

가족	자신	지도자	동료	종교	후원자	국가	없음
29	13	8	3	3	2	2	9

이는 앞서 말한 『창작과 비평』 과도 다른 차이점이다. 이들 잡지들은 유독 선수에 초점을 맞추고, 그 중에서도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선수들에 초점을 맞춘다. 전남 함평 출신으로 결혼식도 치르지 못한 채 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픽을 준비한 레슬링 선수 김영남의 부인은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한 원인을 개인의 노력에서 찾았고, 가족의 조력을 여기에 덧붙인다.

“그는 남들이 평생 흘리지 못할 엄청난 땀을 2년동안 흘렸고, 그 땀의 결실은 아시안게임의 금메달 획득으로 맺어졌다. (중략) 88올림픽을 향한 그의 집념은 놀라울 정도였다. 선수촌에서도 운동, 집에서 예의 그 튜브 늘리기 운동을 계속했다. 나이가 점차 들어가는 것을 의식한 까닭인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운동을 하는 것 같았다. 나는 마음 졸이며 그를 지켜보는 수밖에 달리 도와줄 방도가 없었다. (중략) 그렇기에 이번 서울올림픽에서 나는 금메달을 바랐다. ‘제발, 이번에는 ...’ 하는 심정이었다. 금메달을 못땀을 경우 또다시 반복될 나의 고통과 외로움의 나날들이 두려워서 결코 아니다. 지난 10년 동안 쉴새 없이 ‘철마처럼’ 달려온 그에게 ‘휴식’을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는 금메달을 따냈다(『여성동아』 1988년 10월호, 124).”

물론 이렇게 스포츠선수가 자신의 성공의 요인을 개인이나 가족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이 시기가 처음은 아니다. 하지만, 이 시기 스포츠 선수들의 성공은 발전국가와 재벌로 구성된 추진엘리트가 전례 없는 지원을 했다는 점에서 이전과 일직선상에 존재하는 것으로 놓고 보기 어렵다.<sup>155</sup> 협회의 시설 투자, 병역특례자 확대, 선수촌 훈

<sup>155</sup> 발전국가는 우선 1982년 12월에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였다. 이 법의 제 15조를 개정하여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이에 대한 포상을 대폭 늘린 것이다. 2항에서는 ‘우수 선수에 대한 표창’ 규정을 ‘우수선수와 지도자에 대한 표창’ 규정으로 확장시켰고, 3항을 통해 국영기업체 및 정부관리기업체로 하여금 우수선수와 지도자에 대한 보호 및 육성조치를 하도록 했으며, 4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 정부관리기업으로 하여금 우수선수와 지도자를 고용하도록 하였다. 끝으로 제 5항은 은퇴한 우수 선수 및 지도자에 대한 국가의 생활 보조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대폭 확대하고 이를 대한체육회에 배당하여 경기력 향상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최흥화·김재우 2011, 157-8).

병역법 역시 개정되었다. 1973년도 도입 이후 76년 몬트리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양정모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었던 것이 병역특례제도였다. 하지만 1981년 10월에 개정된 병역법은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아시안게임, 아시아선수권대회, 아시아청소년대회에서 3위 내에 입상한 사람’ 모두에게 병역 특례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하남직 2012년 8월 12일). 그 범위가 상당히 넓어진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 경기력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역할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수 선수가 병역문제로 인해 선수생활에 공백기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체육부 역시 경기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우선 국가대표와 상비군까지 국가대표 선수촌에 입촌시켜 훈련을 받게 했다. 그 결과 1983년 20개 종목 329명이었던 훈련 선수가 84년 945명, 85년 994명, 87년 1,079명까지 늘었다. 해외 전지훈련 또한 증가시켜 82년 19명에 불과하던 전지훈련 선수 수가 85년 257명으로 늘었다. 외국인 코치 또한 82년 7명에서 87년 37명으로 늘었고, 지도자 해외연수도 84년 12명, 87년 20명, 88년 25명 등 대폭 확대되었다. 82년 2천만원 정도였던 격려수당도 87년에는 1억 7천여만원으로 증가했다(체육부 1992, 70-83).

다른 부처들도 스포츠 경기의 성적을 위해 협력했다. 문교부는 스포츠과학자의 양성과 대학 스포츠 연구소 9개와 대한체육회 스포츠과학연구소에 기자재 지원 등을 통해 스포츠과학을 발전시키고자 했다(“88올림픽대비 스포츠과학진흥방안”, 1982년 1월) 서울시는 1986년 말 86-88 양대회 메달리스트에게 목동아파트를 우선 공급했다(『매일경제』 1986년 11월 28일, 11).

제 3장에서 다뤘듯이 재벌의 역할 또한 적지 않았다. 종목별 스포츠협회 회장을 맡은 이들의 금전적 후원 가운데 1983년부터 여러 협회에서 전용훈련시설을 짓기 시작한다. 1982년까지 탁구 한 개였던 훈련시설이 1983년 초에 이미 레슬링, 수영, 축구, 역도, 요트, 사이클, 핸드볼, 테니스 등으로 확대되어 있었다(『매일경제』 1983년 1월 25일, 12). 역도와 복싱, 양궁도 뒤를 이었다(『동아일보』 1983년 3월 11일, 8; 『매일경제』 1983년 3월 22일, 12; 『동아일보』 1984년 1월 28일, 5).

1986년 아시안게임 이후, 재벌기업주들은 막대한 금액의 인센티브를 내놓았다. 제 3장에서는 대한체육회장 정주영이 선수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음을 서술하였는데, 이러한 제도는 계속 이어졌다. 1985년부터 육상과 수영종목은 아시아신기록과 한국신기록 경신 시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만든 바 있고(『경향신문』 1985년 4월 29일, 8; 『동아일보』 1985년 5월 23일, 9). 아시안게임이 끝나고는 체조, 육상 등의 종목에서 포상이 이뤄졌다. 아시안게임 3관왕에 오른 임춘에는 1억 5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1988년도에도 사이클연맹과 육상연맹은 금메달 1억원, 은메달 5천만원, 동메달 3천만원의 포상금을 책정했다(『한겨레』 1988년 9월 6일, 9).

런프로그램 개선, 스포츠과학 활성화, 해외전지훈련, 포상금 제도, 우수선수 고용제도, 연금제도 등 지원책도 다양했다.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선수와 가족, 그리고 중산층 잡지들은 한결같이 성공을 개인화하고 또 가족화했던 것이다. [표 17]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 17] 1986-1988년 여성 및 교양지 올림픽 보도 분류<sup>156</sup>

	여원	주부 생활	여성 백과	레이디 경향	멋	행복이 가득한집	가정 조선	여성 중앙	우먼 센스	여성 동아	샘터
선수	2	3	2	7		1	3	2		5	2
문화행사 참가자	4	4			3	1	6	1	1	1	2
실무, 자원봉사자	1	1		1			7	1			1
시민사회 의견	1	2									1
관람안내	1	6			1		1	2	2	4	
추진 엘리트	1				1			1			
사회정치 담론		1	2								1
총평		1	1					1			1

이에 따라 중산층 대상 미디어들은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에게 주어지는 연금 및 포상 역시 ‘영광의 가격’이라 평가하며 위화감 없이 소개하고 있다. 당시 연금액은 금메달 1개만 따도 매월 60만원을 사망 시까지 수령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여성백과』 1988년 11월호, 139). 당시 도시 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이 66만 6천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한국경제』 1989년 12월 15일), 금메달 한 개면 평균 가구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1982년 초 대통령은 정무장관 노태우에게 “우수선수에게 근본적 생활보장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다(“86.88올림픽 관련 각하지시사항”, 1981년 10월~1983년 2월) 미상). 당시 한국 사회의 일반적 구성원들은 기대할 수 없었던 발전 국가에 의한 생활 보장이 올림픽에서의 메달로

<sup>156</sup> 1986-88년 사이에 발행된 여성잡지를 전수 조사한 것이다. (당시 발행잡지 상황은 국립중앙도서관 2016년 4월 25일 참조) 이렇게 추진엘리트보다 선수들 개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단순히 잡지의 성격만으로 볼 수 없다. 이들 잡지들은 1988년 시점에 정치적 민주화와 거리를 두지 않았다. 그래서 중앙정보부에서 의문사한 최종길 교수 가족, 1987년 고문사한 박종철 가족 등 70-80년대 민주화운동에 가담했던 인사들의 가족을 인터뷰한 지면 역시 적지 않게 눈에 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추진엘리트에 대한 인터뷰를 피하고 주로 금메달리스트들의 개인 및 가족 스토리에 초점을 맞춘 것은 전략적인 선택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인해서는 가능했던 것이다. 매우 예외적인 혜택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항적 시민사회에 가까운 『한겨레』는 “선수들 사이의 비뚤어진 경쟁, 대국민 위화감”을 한다며 비판했지만, 『여성백과』는 “메달을 따기 위한 선수들의 땀과 노고를 생각한다면 그만한 대가는 당연한 것으로 인정”되어도 좋다는 입장이었다(『여성백과』 1988년 11월호, 139).

이는 제 3의 목소리였다. 발전국가와 더불어 올림픽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공유하지만 그 원인은 사회화시키고 나아가 개인의 노력의 결과로 만들고 있다. 저항적 시민사회처럼 올림픽을 앞세운 사회정치에 의해 사회로부터 배제된 이들에 초점을 맞추지도 않으면서, 올림픽을 실패로 규정짓지도 않는다. 달리 말해 이것은 제 3의 문화적 인정 방식의 등장이라고 볼 수 있다. 올림픽의 사회정치를 통해 발전국가는 국제사회로부터의 인정을 먼저 상정하고, 이에 필요한 습속을 가진 주체들을 문화적으로 인정했다. 올림픽 개최 이후 주어지는 국제사회로부터의 문화적 인정은 추상적으로 ‘민족’의 몫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발전국가의 몫으로도 여겼다. 그 반대편에 위치한 저항적 시민사회는, 발전국가가 문화적 인정의 테두리 바깥에 위치시킨 사회구성원들이 겪은 사회적 배제와 소외의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에, 이 제 3의 방식은 발전국가가 정한 문화적 인정의 테두리 내에 존재하는 이들의 습속에 대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오는 문화적 인정이 이들에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제3의 ‘민족적인 것’의 등장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 제 3절 ‘사회안정’을 위한 조절적 대응과 사회정치적 결과

### 1. 조절적 민족 교류

#### 1) 시민사회의 민족 교류

앞서 우리는 서울올림픽을 앞둔 1988년 봄부터 저항적 시민사회 내에서 올림픽공동개최론이 등장했음을 보았다. 이는 1987년의 민주화 이후 저항적 시민사회가 남북한 사이의 분단문제를 매우 중요한 문제로 상정하고 적극적으로 통일운동을 추진했다는 사정을 배경으로 등장한 것이었다. 북한의 불참으로 인해 평화의 진전이라는 올림픽 고유의 정신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없진 않았지만(이문우 1988, 67),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언론은 물론 진보적 언론에서도 올림픽은 동-서 냉전과 남북한 사이의 분단 문제에 있어 어느 정도는 진전을 이루었다는 평가가 존재했다. 『한겨레』의 경우 서울올림픽 이전에 올림픽이 ‘스포츠공화국의 대중조작’에 활용될 수 있음을 경계했던 바가 있는데(『한겨레』 1988년 8월 31일, 5), 올림픽 직

후에는 올림픽이 무엇보다도 ‘동서화합의 큰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한겨레, 1988년 10월 4일, 9). 1988년 8월에 당시로서는 드물게 스포츠 영역에서 서울올림픽을 비판한 저작 『스포츠와 정치』를 출간했던 고광현은 다음과 같이 그 의의를 평가하고 있다.

서울올림픽은 우리 국민에게 미국을 바로 보자는 대중적 각성의 계기가 됐고 장차 우리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담보해 주는 평화 메시지를 대중의 가슴에 심어 주었다고 볼 수 있다(고광현 1988b, 42)

실제로 서울올림픽의 개최는 월북 예술인이나 문인들의 작품에 대한 해금, 7·7선언 같은 정책적 변화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생각에도 변화를 일으켰다. 올림픽 개최 도중 한국 사회 구성원 전반의 반미감정이 드러난 일이 대표적 사례다. 올림픽이 열리기 전부터 칼 루이스를 포함한 미국 선수들이 한국 언론에 불손한 태도를 보이고, 수영선수가 보석 절도사건을 저지르며, 미국 내 올림픽 주관방송국인 NBC가 중계 중 한국을 비하한 사실이 차례로 알려졌다. 그러자 저항적 시민사회는 물론 사회 구성원 전반에서 반미감정이 대폭 상승하였다(“평화의 제전 올림픽에 보여진 미국의 모습”, 1988년 9월). 반면에 문화예술축전에의 대규모 공연단 파견 등과 더불어 소련의 이미지가 급상승, 9월 28일 미국과 소련이 대결한 남자 농구 준결승전 당시에는 관중들이 일방적으로 소련을 응원했다. 미국 정부가 나서서 항의를 할 정도였다(하윤해, 2016년 7월 6일). 냉전과 반공이라는 가치가 관통하던 한국 현대사에서 이는 전대미문의 사건이었고, 당황한 정부와 여당은 물론 야 3당까지 이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여 반미-친소감정 표현의 자제를 호소할 정도였다(『경향신문』 1989년 9월 29일, 1). 그리고 대학생만 아니라 저항적 시민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통일운동 단체를 만들기 위해 1988년 9월 2일에는 전국민족민주운동협의회 추진위원회를 결성, 이듬해 1월 21일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이라는 단체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저항적 시민사회의 통일운동은 올림픽을 전후하여 더욱 활성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는 앞서 언급된바 있는 서울대 총학생회 선거 당시 김중기 후보의 제안을 공식화 했고, 1988년 6월 10일의 남북학생회담과 8월 15일의 남북청년학생회담을 실제로 개최하고자 했다. 실제로 6월 10일에는 연세대에 학생 2만명이 모여 행사를 성사시키고자 했으나, 이를 저지하고자 한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되었다(이유나 2010, 282-3). 8월 15일 역시 이와 유사하여, 이를 성사시키고자 한 대학생들과 이를 막으려는 경찰 사이의 충돌로 행사는 개최되지 못하고 막을 내렸다(『한겨레』 1988년 8월 16일, 7).

1989년 들어 저항적 시민사회는 대표적 인사들의 방북이라는 형태로 남북한 사이의 교류를 추진하고자 했다. 1989년 3월 18일에는 작가 황석영이, 3월 25일에는 문익환 목사가 차례로 남북교류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을 방문했다(강준만

2003d, 62-68).

이러한 상황은 올림픽을 둘러싼 화해 무드에 편승한 것이기는 하다. 하지만 시민사회가 의제를 설정하고 이니셔티브를 쥐었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한 것이었다. 즉, 올림픽을 둘러싼 상황이 의제를 던져주었다면, 저항적 시민사회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주장은 공동올림픽의 개최 주장과 매우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는 논리에 기초한 것이었다. 미국을 비롯한 ‘외세’는 분단상황을 만들었고, 남한에 독재정권을 허용했으며, 이들은 안보와 반공의 목소리를 내세워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사회구성원들이 조우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6.10 남북학생 회담을 맞이하여 통일의 염원을 결의”, 1988년). 따라서 ‘자주적인 민족대단결’, 즉 ‘외세’를 배제한 뒤 민족구성원들을 전면적으로 포섭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었다. 황석영은 방북을 선언하면서 스스로를 “한반도에서 같은 땅에 살면서도 서로 만나지 못하는 대중의 편”이고, 앞으로 “우리 국토를 뒤덮는 외국군의 탱크와 미사일을 이겨”내야 한다고 말했다(황석영 1993, 395), 문익환 목사 역시 “인권 문제도 민주주의 문제도 결국은 남북의 통일이 그 토대가 되지 않는 한 궁극적인 해결은 있을 수 없다”는 인식에 기초하였다(“전민련 상임고문 문익환목사 방북자료”, 1989년).

## 2) 평양세계청년학생축전

이러한 가운데 북한은 1989년 7월 초 평양에서 제 13회 세계청년학생축전을 개최하게 된다. 이를 주관하는 조직은 세계민주청년연맹(World Federation of Democratic Youth)과 국제학생연맹(International Union of Students)이다. 세계민주청년연맹은 반파시즘을 기치로 내건 연합군 측의 청년 모임으로 1945년 런던에서 창립되었던 단체로(Kotek 2015, 62), 1940년대 말 냉전 국면이 전개되자 소비에트의 영향력 하에 들어가게 된다(Kotek 2003, 168). 국제학생연맹 역시 이와 유사하다. 이는 나치 지배 하 체코 학생들의 봉기를 기념하기 위해 1946년 만들어진 조직으로, 사회주의권만 아니라 자본주의국가들까지 합하여 43개국 62개 청년 단체들이 모인 조직이었다(Hlasny 2017, 8). 하지만, 냉전국면에서 서유럽 청년단체들이 International Student Conference를 조직하여 분리되고(Altbach 1970, 162), 재원이 체코와 소련 등의 국가에 의해 조달되면서 점차로 사회주의국가들에 친화적으로 변해갔다(Hlasny 2017, 8). 이러한 냉전의 영향 속에서 1950년대 이후 세계청년학생축전(World Festival of Youth and Students)은 사회주의 국가 혹은 자본주의 국가 내 사회주의 성향의 청년들이 참가하는 비정기 메가이벤트로,<sup>157</sup> ‘반제국주의, 평화, 우

<sup>157</sup> 이 행사는 두 번(헬싱키, 비엔나)을 제외한 모두 대회가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개최되었다. 1989년 이전 세계청년학생축전의 개최지와 참가자를 일괄하면 다음과 같다(국토통일원 통일연수원 1989, 5). 1947년 프라하(체코, 71개국 1만7천명 참가, 1949년 부다페스트(헝가

정' 등을 모토로 내세웠다(Pietrzyk 2003. 7. 17).

북한은 1985년 모스크바 대회 당시부터 차기 대회 유치를 계획했고, 1986년 7월에 추진위원회를 결성했으며, 1987년 2월 제 13차 대회의 유치를 최종 확정했고, 88년 5월 준비위원회에서 89년 7월 1-8일의 대회기간을 정했다(국토통일원 통일연수원 1989, 11-12).

당시, 왜 북한이 이 대회를 유치하고자 했는지에 대하여는 해석이 갈렸다. 정부와 보수적 시민사회에서는 이 대회를 유치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 대회가 서울올림픽의 개최로 인해 남한이 국제적 지위를 높이게 되자 이로 인한 국제사회에서의 고립과 남한에 대한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이벤트로 규정했다(편집실 1989, 97; 국토통일원 통일연수원 1989, 9).

이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왜냐하면 세계청년축제 행사에는 정치토론회, 문화예술행사와 더불어 대대적인 체육행사가 존재했고, 이러한 행사들이 명분이 되어 1980년대 후반 평양을 올림픽을 준비하는 서울만큼이나 급속한 변화를 겪었기 때문이다. 이 때 북한 정부가 내세운 목표는 평양을 국제적인 도시로 만드는 것이었다. 김일성이 “평양을 세계 1등급의 현대 도시로 가꾸겠다”고 발언했던 적이 있다는 증언 또한 존재한다(동용승 2017, 31).

실제로 개발의 규모는 엄청났다. ([그림 25] 참조) 수십층 규모의 호텔 3-4개가 동시에 지어졌고, 15만명을 수용하는 세계최대의 경기장을 포함한 3개의 대규모 경기장이 지어졌으며, 대규모 전시시설과 공연시설 3-4개도 함께 만들어지고, 대동강변은 공원으로 개발되었으며, 각종 광장과 공원을 대대적으로 확충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에게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고자 한 것으로 평가된다(임동우 2011, 152-3). 특히 1988년에는 이른바 200일 전투라는 이름으로 세계청년축전의 준비에 대대적인 인원과 물자를 투입하였으며, 이를 위한 홍보와 기층 조직의 동원 역시 매우 대대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알려진다(동용승 2017, 31).

---

리, 82개국 2만명 참가), 1951년 동베를린(동독, 104개국 2만 6천명 참가), 1953년 부쿠레슈티(루마니아, 111개국 3만명 참가), 1955년 바르샤바(폴란드, 114개국 3만 1천명 참가), 1957년 모스크바(소련, 131개국 3만 4천명 참가), 1959년 비엔나(오스트리아, 112개국 1만 8천명), 1962년 헬싱키(137개국 1만 8천명 참가), 1968년 소피아(불가리아, 138개국 2만명 참가), 1973년 동베를린(동독, 140개국 3만명 참가), 1978년 아바나(쿠바, 145개국 1만 8천명 참가). 1985년 모스크바(소련, 157개국 2만명 참가).

이 중에서 1973년 동베를린에서 개최된 제10회 대회는 특기할 만하다. 1972년 뮌헨올림픽 이듬해에 동베를린에서 세계청년학생축전이 개최되고, 1988년 서울올림픽 이듬해에 평양에서 세계청년학생축전이 개최되는 구도가 매우 비슷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대회들을 둘러싼 국제정치는 사뭇 달랐는데, 1973년 축전의 경우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과 데탕트 국면이 진행되어가는 도중에 개최되었기 때문이다. 이미 동독은 1972년 뮌헨 올림픽 당시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했고(종합 3위), 1972년에는 동서독 사이에 협정이 맺어진 상태였으며, 이에 따라 서독의 좌파 청년단체들이 73년의 이벤트에 대거 참가했다. 이에 관하여는 독일연방정치교육원 홈페이지 자료(Ernst, 2003. 7. 17) 참조.





[그림 26] 1989년 세계청년학생축전 기록영화 속 평양의 모습  
(출전 : stimmekoreas, 2010. 12. 13)

이렇게 본다면 행태 면에서 남한과 매우 유사한 점이 여럿 발견된다. 서울올림픽을 개최하며 국제사회에 서울을 과시하고자 했던 남한 정부와 매우 유사한 동기를 이들이 가졌으리라는 추측이 무리한 것만은 아니다. 결국 메가이벤트의 준비과정에서 북한이 보인 국제적 지위에 대한 관심은 역시 남한과의 경쟁이라는 요소와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는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저항적 시민사회는 이 행사의 성격을 다르게 파악했다. 이들은 이 대회가 기본적으로 “제국주의와 식민지를 반대하고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독립을 수호하며 사회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보다 훌륭한 미래를 위해 투쟁하는 청년들 간의 국제적 연대와 단결의 강화”라는 대회 공식 목표를 그대로 받아들였고(한겨레사회연구소 민족분과 1989, 16), 북한이 이를 개최한 이유에 대해서도 세계전쟁과 핵전쟁의 위험이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진보적 청년학생들의 친선과 단결의 강화가 요청되는 상황이므로 대회를 통해 세계 청년들의 상호 이해와 친선을 장려하고 연대를 강화하며, 세계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자 한다는 북한 측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였다(한겨레사회연구소 민족분과 1989, 57-58).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들은 참가를 결정했다. 오랜 기간 미국으로 인한 분단의 고통 속에 살던 청년들과 국민들이 최근 들어 미제국주의 세력의 철수와 핵 무기 철수에 대한 지지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 행사에 대한 참가는 당연하다(한겨레 사회경제연구소 민족분과 1989, 142). 특히, 이 행사에의 참가는 남북 간 신뢰와 단합을 높일 수 있고, 남한만의 단독올림픽으로 인해 고조된 분단 구조의 고착화를 방지할 수 있으며, 핵전쟁의 위협을 막고, 독재 정권에 의해 왜곡된 북한 이해가 아닌 올바른 북한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고, 여러 나라의 청년들과의 친선 및 단결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한겨레 사회경제연구소 민족분과 1989, 144-152).

이러한 판단에 기초하여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는 1988년 12월 26일에 수신한 북한의 조선학생위원회로부터의 초청을 이내 수락했고(한겨레사회경제연구소 1989, 157-9), 89년 2월에 새롭게 구성된 축전준비위원회를 만들었다. 정부 역시 기본적으로 축전 참가에 동의를 표하면서 ‘남북학생교류추진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었다. 하지만 문익환 목사의 방북 이후 정부는 입장을 바꿔 6월 6일 공식적으로 축전 참가를 불허하였다. 그럼에도 전대협은 축전에 대표를 파견하기로 했고, 그 결과 임수경이 대표가 되어 6월 21일 북한으로 떠나 축전에 참가한다(전문환 2017, 47-54)..

### 3) 조절적 민족 교류와 스포츠

저항적 시민사회가 분단구조의 철폐와 민족 통일이라는 장기적 목표를 염두에 두고 북한과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 대응방식은 조절적인 것이었다. 즉, 반대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찬성을 표하면서도 요구를 선별하여 허용하고 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이었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은 4장 초반부에 이미 언급된 것처럼 사회안정으로 대표되는 1980년대 후반의 사회정치의 핵심 대상에 대한 통제력의 유지와 관련이 있다.

1988년 봄 당시 대학생들의 남북청년학생회담 주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는 것이었다. 6·10남북청년학생회담을 하루 앞두고 노태우는 기자회견을 통해 “통일문제에 관한 논의를 개방하며, 특히 젊은 세대의 진취적인 통일 의지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창구 일원화’를 주장하면서, 저항적 시민사회의 이니셔티브는 인정하지 않았다(『월간 말』 1988년 7월호, 66).

8월 15일 행사에 대해서도 입장은 마찬가지였다. 6월 10일 행사에 참가한 이들을 강력하게 처벌했던 정부는 4일 뒤 8월 15일 이전에 학생교류를 개최할 생각이 있다고 발표했다(『동아일보』 1988년 6월 14일). 하지만 7월 말에 이르러서는 다시 한번 행사에 대한 불허방침을 내린다(『한겨레』 1988년 7월 24일, 7). 8월 12일 김영식 문교부 장관은 8·15남북청년학생축전의 준비행사로 진행되고 있던 국토순례대행

진에 대하여 회담만 연기한다면 이를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한겨레』 1988년 8월 13일, 1).

1989년 평양청년축전에 관한 국가의 반응 또한 동일했다. 1988년 말 전대협이 수신한 초청장에 대하여, 1월 6일 국토통일원 장관은 “특정 이념을 가졌다는 이유로 여행의 자유를 막아서는 안된다”는 견해를 보였고, 6일 뒤 문교부 장관은 민간협의 기구 발족을 제안했으며, 17일 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학생교류 성사의 기회로 활용할 방침”으로 밝혔다(국토통일원 통일연수원 1989, 44). 하지만 3월 문익환 목사 방북 이후 입장은 바뀌었다. 6월 6일에는 평양축전에의 참가를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동아일보』 1989년 6월 7일, 15), 6월 20일 최종적으로 참가와 취재 모두 불허하기로 결정했다(『한겨레』 1989년 6월 21일, 1). 교류를 위해 북한을 방문한 이들에 대한 태도도 달라졌다. 1989년 3월 말에는 문익환 목사에 대하여 조사 이후 불구속-구속여부를 결정한다던 정부였으나(『매일경제』 1989년 3월 27일, 1), 평양축전에 참가한 임수경에 대하여는 방북 소식이 알려진 이튿날인 7월 1일부터 귀국 즉시 구속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한겨레』 1989년 7월 1일, 1). 국가는 남북한 사이의 교류라는 취지 자체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반복하면서도 대학생들이 주최하는 행사를 불허하며 저항적 시민사회의 행동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탄압했다.

이유는 사회정치와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다. 학생들이 주장하는 사회문제의 원인으로서는 독재정부와 이를 가능케 한 분단 상황, 해결책으로서의 통일이라는 사회문제의 인식과 해결책에 정부가 동의할리는 만무하다. 이러한 류의 주장에 대하여 정부는 ‘좌경이적행위’라는 개념을 통해 주장 자체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월간 말』 1988년 7월호, 66).

정부는 그 말고도 또 다른 사회정치의 논리를 내세웠다. 다양한 주체와 의견의 난립이 사회불안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1988년 6월 10일 남북청년학생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치안본부장은 “이 행사가 정부의 통일정책에 혼란을 주고 사회불안을 조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를 들어 행사를 금지할 방침을 세웠다. 노태우 역시 “저마다 관문점에 가서 북한과 만나겠다는 풍조를 만들면 북측이 우리 사회의 혼란을 조성”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월간 말』 1988년 7월호, 66). 북한의 평양축전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는 이 축전을 통해 “올림픽 이후 활성화되고 있는 우리의 대동구권 관계개선을 저지, 약화시키고 우리 사회내부의 안정을 방해, 교란”시키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국토통일원 통일연수원 1989, 9).

우리는 앞에서 4장에서 본 것처럼 1980년대 중반 이후 시민사회의 활성화 국면에서 사회 정치의 핵심 주제에 대한 표현은 ‘사회질서’에서 ‘사회안정’으로 변환되었다. 이러한 개념의 변화는 국가의 주요한 개입 대상이 습속에서 의견으로 전환했음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과거 사회구성원들의 습속이 무질서하다고 보았던 국가는 이때에 이르러 사회 구성원의 의견이 무질서하게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라 판단했던 것이다. 따라서 1988-1989년 시점의 국가는 의견을 통제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적절히 통제하겠다는 의도와, 저항적 시민사회와 국가가 공유하고 있는 민족 구성원 간 교류의 필요성이라는 두 요소는 국가로 하여금 조절된 형태로 교류를 수행할 필요를 창출했다. 스포츠는 이러한 필요를 가진 국가에게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1989년 가을의 ‘세계한민족체육대회’가 대표적이다. 이 행사는 서울올림픽에의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참가가 결정되고 북한과의 적극적인 교류에 대한 국가의 의지가 표명된 1988년 7월부터 추진되었다(체육청소년부 1992, 507). 올림픽이 끝난 직후부터 체육부와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은 이 행사를 위해 재외동포의 섭외에 착수하였고, 소련과 중국 동포에 대하여는 해당국 체육장관 면담을 통해 섭외에 성공하였다. 그리하여 1989년 4월에는 이 행사를 서울올림픽 1주년 기념행사로 규정하고 제70회 전국체육대회와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김재우 2007, 24).

‘한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국내외 동포간 연대의식 제고’를 목표로 내건 이 행사는(체육청소년부 1992, 510), 50개국 1,326명의 선수가 참가했는데, 특히 소련과 중국은 각각 144명과 145명의 선수들이 참가, 미국(2096명)과 일본(144명)에 이어 3, 4번째로 큰 규모의 선수단을 파견했다. 이 대회에 참가하기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 정부는 중국과 소련에는 특별기의 형태로 왕복비행기편을 제공하고, 선수들에게 개인 1인당 200달러씩의 체류비를 지급하는 등 중국과 소련동포들을 특별히 배려하였다(김재우 2007, 25; 30). 이렇게 본다면 이 행사는 시민사회가 주장한 민족 교류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노태우 역시 연설을 통해 사회주의 국가 동포들의 참가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지금 이 마당에는 지난 반세기동안 이념과 체제의 장벽으로 오갈 수도 만날 수도 없었던 소련과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에서 오신 동포들이 세계각국의 우리 재외동포들과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서울올림픽과 우리의 북방외교가 가져온 소중한 결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노태우, 1989년 9월 26일).

이후에도 스포츠는 국가의 조절적 교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1989년, 정부는 시민사회가 추진한 교류를 불허하고 처벌하는 동시에 남북체육회담에 응하여 스포츠를 통한 교류를 추진하고 있었다. 1990년 9월에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 단일 팀을 구성하자는 북한 측의 제안에 따라, 1989년 3월부터 1990년 2월까지 9차례에 걸쳐 남북체육회담이 있었다(허문영 2015년 11월 25일). 결국 선수 선발을 비롯한 관련 결렬되었지만 아시안게임 직전에 남한과 북한은 공동 응원에 합의하였고(『경향신문』 1990년 9월 22일, 3), 교류를 재개하였다.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남북간의 체육 교류는 다시 한번 진전된다. 아시안게임 기간 중의 남북체육장관 간 회담의 결과, 1990년 10월 11일과 23일 평양과 서울에서 번갈아가며 남북통일축구대회가 개최되었다(『동아일보』 1990년 9월 29일, 1). 그리

고 이 대회 도중의 회의를 통해 단일팀에 관한 논의를 시작, 1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4차례에 걸친 체육회담이 있었다. 그 결과 1991년 4월에 일본에서 개최되는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6월에 포르투갈에서 개최되는 세계청소년축구대회에 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하게 되었다(『한겨레』 1991년 1월 16일, 1; 『동아일보』 1991년 2월 12일, 1). 팀에 관한 중요 사항인 단일팀 호칭(코리아), 단기(흰색 바탕에 하늘색 우리나라 지도, 이른바 ‘한반도기’), 단가(1920년대 부르던 아리랑) 등은 1989년 남북체육회담 당시 결정된 바를 따랐다(허문영 2015년 11월 25일).

국가는, 사회문제의 원인이 자신들의 독재정치와 이를 허용한 분단 구조에 있으며 통일을 해결책이라 본 저항적 시민사회의 민족 교류 시도를 금지하고 억압했다. 그 한편으로는 스포츠를 통해 조절된 형태의 민족 교류를 수행했다. 시민사회의 교류를 억압하는 한편으로 국가가 교류를 수행하여 시민사회의 요구를 일정부분 해소하는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해 간 것이다. 이는 1980년대 후반 시민들의 의견에 대한 통제를 사회정치적 중심 과제로 설정한 데서 발원하는 전략이었다.

## 2. 최소 부조와 인정 경관의 확산

### 1) 빈민운동의 활성화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공동올림픽 개최를 주장하던 저항적 시민사회 블록이 올림픽 이후 북한과의 교류에 적극 나섰듯, 올림픽이 독점재벌의 수탈을 위한 민족구성원에 대한 배제에 다름없다고 비판한 저항적 시민사회 블록 또한 올림픽 이후 빈민운동을 적극적으로 조직해간다.

앞서 보았던 목동 지역의 재개발의 사례도 그렇지만, 올림픽을 앞두고 이뤄진 다수의 재개발 사업의 대상이 된 철거민들은 해당 지역에서 대책위원회 등을 조직했다. 그리고 재개발 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국가와 지방정부에 이주 대책 및 생계 대책을 요구하였다. 노점상 역시 마찬가지로 조직을 만들고 올림픽을 앞세운 노점상 단속 정책에 항의하며, 생계에 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빈민 운동이 활성화되고 이들은 조직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주장하여 국가로 하여금 의견을 관철시키기도 했다.

올림픽을 앞두고 대규모로 수행된 재개발사업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조직적인 저항을 불렀고, 이는 다시 서울지역의 철거민 연합 조직을 만들어냈다. 1983년 4월 목동 지역 재개발이 발표된 후, 2개월 만에 세입자들을 중심으로 한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이후 85년 3월에 철거가 마무리되기까지 대책위는 이에 반대하는 다수의 시위를 조직해냈다. 이는 85년 봄부터 시작된 사당동 철거에 영향을 주어, 이 지역에서도 세입자대책위원회가 만들어져 1987년까 11월까지 조직적으로 정부의 철거 정책에 항의하였다. 그리고 이는 다시 1986년부터 시작된 상계동 철거에 대한 세입자

대책위의 활동으로 이어졌다(김수현 1999, 225-226). 1987년 7월 만들어진 서울시 철거민협의회는 이렇게 올림픽을 앞두고 벌어진 재개발 사업의 지역 대책위원회들이 모여서 만든 연합조직이었다(김영석 1989, 78).

올림픽을 앞두고 반복해서 수행된 노점상 단속 역시 노점상의 조직적인 저항을 불렀고, 이는 서울지역의 노점상 연합 조직으로 이어졌다. 1985년 IMF/IBRD 총회에 앞서 수행된 단속을 계기로 ‘노점상 생존권대책위’가 만들어졌고, 이는 86년 말의 ‘도시노점상 복지연합회’와, 1987년 10월의 ‘도시노점상연합회’, 그리고 1988년 10월의 ‘전국노점상연합회’로 발전해갔다(최인기 2012, 103-110). 이러한 연합조직의 형성에 기초하여 이들은 ‘생존권’이라는 개념을 앞세워 국가의 노점상 배제 정책에 항의한다. 이 장의 제 2절 “민족 구성원 배제에 대한 비판”에서 자세히 소개한 바 있듯이, 자신들을 사회문제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사회구조에 의해 발생한 희생자로 규정하면서 공권력에 의해 보호를 받아야 할 주체로 새롭게 규정하는 것이다. 이들은 1988년 들어 수차례의 집회와 공청회를 통해 자신들이 권리의 주체라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다. 그리고, 올림픽 기간 중에는 빈민의 단합과 연대를 위한 행사를 열며, 올림픽의 의미를 재전유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다.([그림 27] 참조)


여기에 더하여, 철거민과 노점상의 조직화 과정에는 1980년대 후반 들어 저항적 시민사회가 활성화되면서 이들의 주장에 호응하고 연대하는 이들이 상당수 존재했다는 사정도 영향을 미쳤다. 도시빈민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이른바 ‘사회선교’ 활동을 벌여오던 가톨릭계와 개신교계 단체들은 1985년과 6년에 ‘천주교도시빈민회’와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라는 연합조직을 만들었다. 그리고, 대학생과 진보적 지식인, 종교인, 사회학자 등의 조력은 1987년의 철거민들과 노점상의 조직화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최인기 2012, 111-3). 철거민과 노점상의 조직화에 지식인들의 연대가 더해지면서 올림픽을 앞세워 국가에 의해 배제의 대상이 된 이들이 조직화에 성공한 것이다.

올림픽 이후 이들은 조직을 더욱 확장해갔다. 노점상과 철거민 조직, 천주교도시빈민회,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는 1987년 6월 항쟁을 주도한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 산하의 ‘도시빈민 공동위원회’와, 1988년 8월의 ‘반민중적올림픽반대국민중생존권쟁취도시빈민공동투쟁위원회’를 통해 한시적으로 제휴한 바 있다. 여기에 ‘전국일용노동조합추진위원회’와 ‘지역탁아소연합’을 묶어 1989년 2월 ‘전국도시 빈민연합’ 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켰다(조흥식 1999, 200-201). 그리고 1989년 6월 14-20일에는 ‘아시아도시빈민 서울대회’라는 국제 행사를 개최, 아시아 10개국 95명의 인사를 불러 토론과 문화예술행사가 결합된 이벤트를 열고 제휴의 범위를 국제적으로 확장하기도 했다(‘아시아 도시빈민 서울대회’, 1989년 6월). 이러한 활동의 결과 1989년 11월 ‘전국빈민연합’을 결성하게 된다(최인기 2012, 118-119).<sup>158</sup>

<sup>158</sup> 이 때 일용건설노동조합추진위원회가 함께 참여한다. 반면에 천주교도시빈민회와 기독교

# 노점상 올림픽 문화제

일시: 1988. 9. 17(토) 오전 9시  
장소: 경희대학교 노천극장



**백만 노점 형제 여러분!**  
드디어 올림픽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이 올림픽이 우리 서민들에게는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올림픽 비가 12조 9천억(국가 1년예산: 19조억원)이며, 올림픽 개막식 입장권이 프래미엄이 붙어 400만원 이상을 호가하고 올림픽을 빙자하여 정부는 철거를 하고 6·16, 8·1일조차 노점상 전민 단속을 시도하였고,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백만 노점 형제는 강철같이 단결하여 6·13, 8·1의 대동단결, 영웅적 투쟁으로 스스로의 생존권을 쟁취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올림픽을 빙자하여 단속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다시금 9·1 또는 9·10일 부터 '성화봉송'로다, 도시미관이다, 평화구역이다, 마라톤 코스다, 화분을 놓아야겠다는 갖가지 명목으로 자율철시 각사를 받는 등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백년에 한번 일용가 담가하는 세계인의 축제라지만 올림픽을 빙자하여 노점을 단속하는 것은 유사시에 최초의 일이며, 세계의 어느 나라에서도 없던 일입니다.

백만 노점 형제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 수록 우스운 일입니다. 우리는 생존권도 쟁취해야 하겠지만 과일의 장수기에 과일을 노점에서 팔지 않는다면 농민형제들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전국 도시 노점상 연합회는 올림픽 기간동안 계속 장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9월 17일은 반민중적 올림픽에 맞서 우리 노점형제도 한자리에 모여 서로 아우러지는 '노점상 올림픽 문화제'를 열기로 하였습니다. 회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인 389/42  
83 280-77-4-25

## 도시빈민 한가위 올림픽



일시: 1988년 9월 21일(수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저녁 8시까지  
장소: 한성대학 운동장  
동참동행은 마당

주최: 서울시 참거민 회의회  
후원: 도시빈민 공동투쟁위원회, 한성대학 총학생회

[그림 27] 도시빈민의 올림픽 행사  
(출처: “도시빈민 한가위 올림픽”, 1988년 9월 21일; “노점상 올림픽 문화제”, 1988년 9월)

도시빈민선교협의회, 그리고 지역사회탁아소연합 등의 종교조직은 불참을 선언한다(최인기 2012, 120).



[그림 28] 1988년 8월 1일 노점상생존권을 위한 집회  
(출처 : “덕수궁 앞에서 생존권요구 시위하는 전국도시 노점상연합회 회원과 학생들”, 1988년 8월 2일)



[그림 29] 사당동 철거민들의 임대주택 요구 집회  
(출처 : “장기임대주택 쟁취라고 쓰여진 현수막을 들고 철거촌을 돌고 있는 철거민들”, 1988년 1월 8일)



뿐만 아니라 이들은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을 통한 문제해결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자신들을 도시와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배제함으로써 사회문제를 해결한다 생각했던 국가를 대상으로, 이들은 자신들은 오히려 사회문제의 희생자이며 국가로부터 포섭의 대상이 될 권리의 주체임을 주장하면서 발상의 전환을 요구했다.

1988년 4월과 10월에 노점상 양성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노점상보호법’의 도입을 주장했던 전국도시노점상연합회는([그림28] 참조), 1988년 10월에 스스로 노점상 양성화를 위한 몇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이들이 제시한 양성화 방안은 노점상의 합법화, 기존 노점의 영업권 인정, 노점 신고제, 노점상조직 합법화, 빈곤에 대한 지원, 1가구 1노점 원칙 등이었다(김영석 1989, 102-104).

철거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1987년부터 철거민들은 공공이 관리하는 장기 혹은 영구 임대주택에 대한 요구 쪽으로 결집하기 시작했다(김수현 1999, 65). 이를 요구한 이유는, 이들 조직이 “살아야 할 거주지가 인간 생활에 있어 가장 우선적이고 기본적인 권리”임을 전제로 하고, 도시빈민의 생활수준 및 그의 향상, 적정 주거수준, 생활 터전의 입지, 각종 시설물(백화점, 상가) 등을 고려할 때 한국에서 실현 가능한 주거 정책은 임대주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주거근본대책, 임대주택”, 1987년 11월). 1988년 이후, 재개발지역이나 서울시철거민협의회 집회에는 “도시빈민 생존권을 보장하라!”라는 구호와 더불어 “분양권은 필요 없다. 임대주택 보장하라!”라는 구호가 등장하게 된다(“재개발 반대 및 임대주택 쟁취를 위한 도시빈민대회”, 1988년 1월 31일). 1987년과 1988년 주택 부족 문제가 겹치면서 빈민들의 임대주택 요구는 상당히 현실성을 띤 정책으로 보수적 언론에서도 도입을 찬성했고(『매일경제』 1988년 3월 18일, 9), 국책연구원들 역시 문제의 해결책으로 도입을 주장한 것이 장기 혹은 영구임대주택제도였다(이영환 1994, 190-194). ([그림 29] 참조)

## 2) 최소부조의 공급

이러한 저항적 시민사회의 주장에 관한 국가의 대응은 어땠을까? 국가는 일단 제도적 차원에서 앞서 본 민족 교류를 주장하는 이들에 대한 태도와 유사한 측면이 많다. 저항적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용하면서도 그들의 주장 기저에 존재하는 사회문제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88년에 이미 노점상에 관한 정부의 정책은 바뀌었다. 금지와 단속 일변도에서 관리를 위주로 한 정책으로 바뀐 것이다. 1988년 5월에서 7월에 이르는 대대적인 단속 이후 서울시는 1988년 8월 초에 노점상에 대하여 밀집지역과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한 단속으로 정책을 바꿨다(『한겨레』 1988년 8월 5일, 6). 그리고 같은 해 11월 1일 내무부는 “노점상 종합대응대책”을 마련했다. 이는 노점상 거리를 설치하고, 입주카드를 통해 등록함으로써 영업권을 부여 받으며, 이를 기초로 새로운 노점상 조직에 가입하도록 한다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한겨레』 1988년 11

월 6일, 11). 노점상의 영업은 지속하되 전국노점상연합이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 하에 있는 다른 조직을 만들라는 것이었다.

1989년 6월, 정부는 7월 1일부터 대대적으로 노점을 단속하겠다고 예고했다. 노점상이 민주화 이후의 느슨해진 사회기강을 틈타 대폭 증가했으며, 올림픽을 계기로 조성한 서울의 환경을 더럽히고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였다(김준희 2011, 88-89). 이에 따라, 7월과 8월 사이, 전국적으로 2만 6754개의 노점이 단속되었는데, 이는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전국 노점 수의 45%에 달하는 규모였다(『한겨레』 1989년 7월 21일, 1). 저항적 시민사회에서는 이를 ‘대탄압’이라 칭하였고(김영석 1989, 105-106), 이에 맞서는 대대적인 시위를 조직하는 한편 공청회 등을 통해 다시 한번 해결책을 제시한다(김준희 2011, 90).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서울시는 다시 한번 노점상을 관리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했다. ‘노점상규제관리법’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법안은 노점상의 절대금지구역과 상대금지구역, 허용지역을 설정하고 노점상의 크기와 자격 등을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sup>159</sup> 또한 노점상의 전업을 유도하기 위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생활보호대상자 지정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노점의 수를 관리하고자 할 목적을 띠었다(『한겨레』 1989년 7월 21일, 1). 이러한 정책에 따라 절대금지구역 이외에서는 노점을 허용하고, 가로판매대와 점포 입주에의 지원이 이뤄지기도 했다(김영석 1989, 107-108).

그러나 ‘규제관리법’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노점상에 대한 국가의 관점은 전향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당사자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누가, 왜 노점상을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면(김수현 2000, 35), 이들을 사회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이자 결과의 피해자로 볼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국가는 1988년 이후에도 노점상을 일종의 ‘문제’로 보았다고 해석된다. 노점의 주장을 일정 부분 수용하고, 이들에 대한 부조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존재를 문화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다만, 노점상에 대한 금지로만 일관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조절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임대아파트 역시 유사했다. 1989년, 국가는 1988년도 당시 철거민들의 영구임대 혹은 장기임대 아파트 요구를 전격 수용했다.<sup>160</sup> 이는 철거민들의 강력한 요구와 더

<sup>159</sup> 이는 1989년 7월 11일 노점상 문제 해결을 위해 저항적 시민사회가 개최했던 공청회의 내용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이다(김준희 2011, 90).

<sup>160</sup> 한국 임대주택의 역사는 1971년도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이 제도는 임대기간이 1년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는 분양주택이었다. 1982년도에는 ‘임대주택육성방안’을 통해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의 기업과 정부투자기관은 무주택 사원에게 5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였다. 1984년에는 기업만 아니라 일반도 5년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하도록 ‘임대주택 건설촉진법’이 제정되었다(하성규 2007, 230). 이러한 형태는 도시빈민에 대한 부조 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했다. 그래서 영구임대 형태가 본격적인 공공임대주택의 시작점이라 여겨지는 것이다(보건복지부·한국도시연구소 2003, 15).

불어 주거문제가 정부와 여당의 사회정치 위기상황을 조성한 결과였다.

1988년에 나타난 부동산 가격폭등과 투기열기로 인한 상승이 전월세에까지 미치자 영세 세입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는 국회가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노태우 정부는 주도권을 잃은 상태였고, 1987년 대통령 선거당시 공약했던 ‘중간평가’ 역시 1989년 상반기에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상태였었다(김수현 1996, 117-124). 이러한 상황과 더불어 철거민들의 시위가 올림픽을 전후하여 고조되는 상황은 정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상황은 정권과 관료엘리트들에게 ‘체제의 위기’로 인식될 정도로 심각했다(이영환 1995, 90). 1989년 1월 대통령과 경제수석은 사회안정을 위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입장을 공유했다. 이후 청와대 내 실무작업팀의 작업을 거쳐 1989년 2월 24일, 대통령 취임 1주년을 기념한 행사에서 영구임대주택 정책을 발표한다. 4일 뒤 관계부처회의에서 “도시영세민 주거안정종합대책”을 확정했고, 3월 8일에는 ‘서민주택건설기획단’이 청와대 내에 만들어졌다. 같은 달 30일에는 강북구 번동에 첫 영구임대주택 기공식이 대통령의 참석 하에 열렸다(이영환 1994, 180-181).

영구임대주택 정책의 골자는 1988년 발표했던 주택 200만호 공급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장기임대주택 60만호 중 25만호를 영구임대로 바꾼다는 것이었다. 25만이라는 숫자는 6대 도시 생활보호대상자 23만 가구를 기초로 한 것이었다. 그래서 입주자격 역시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부조자, 보훈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했다(이영환 1996, 61-63). 특히 건설비의 85%를 국가 재정지원으로 충당함으로써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정책으로 설계되었다(보건복지부·한국도시연구소 2003, 14). 그래서 이는 한국 현대사에서 실질적인 임대주택의 시작으로 여겨진다(이영아 2015, 52). 또한, 돈암동과 동소문동 등의 재개발 과정에서는 철거민들에게 임대아파트 입주권과 임시거주 공간을 마련하는 등 철거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기도 하였다(“임대주택정책 취 보고 및 강제철거결사저지를 위한 1990년 서울시철거민협의회 대중총회”, 1990년 4월 20일).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정책 변화 역시 남북간 교류와 유사하게 조절적인 것이었다.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정책의 일부를 수용함으로써 시민사회의 요구를 찾아들게 만드는 수준에서 문제를 관리하고자 한 것이었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정책적 요구 뒤에 존재하는 인정에 관한 요구는 거부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는 문제의 당사자였던 철거민이 아닌 생활보호대상자로 입주자격을 선정한 사례에서부터 드러난다. 철거민과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이영환 1996, 41). 정부는 소득수준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 철거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그리고 ‘가장 못사는 사람’에 대한 주택 제공을 통한 시혜적 정책의 효과 극대화라는 목적에서 대상자를 그렇게 선정했다(이영환 1995, 79-80).

또한, 사회정치적 위기국면이 지나가자 임대주택 계획은 곧바로 축소되는 모습에서도 이들이 인정의 확장에 기초하여 도시빈민을 위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난다. 정책 발표 후 2년 뒤인 1991년,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을 25만 호에서 19만 호로 축소한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넘친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처음부터 입주대상자가 매우 제한적이고, 의료부조제도 폐지로 생활보호대상자수가 줄었으며, 입주자들의 경제적 부담 및 생활권과의 유리 문제로 인해 입주포기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간과한 것이었다(이영환 1995, 120-2). 정부 내에는 임대주택을 오히려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주거를 공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했다(이영환 1995, 115-117).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결정은 사회정치의 위기 상황에 대한 조절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면서 이뤄진 것이었다. 결정은 3당합당을 통한 여소야대 국면의 해소와, 주택가격 문제의 진정이라는 요소가 결부되면서 사회정치의 실패로 인한 정치적 부담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김수현 1998, 527). 그리고 영구임대주택의 공급이 철거반대운동의 동력을 약화시키고 주거문제가 상대적으로 안정화되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김수현 1999, 57; 1996, 139).

이것이 1980년대 후반에 시행되었던 ‘사회안정’의 사회정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성장한 저항적 시민사회가 주장하는 제도들을 일부 수용하여 저항적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잠재우되, 제도에 대한 주장 뒤에 존재하는 인정에 대한 요구를 거절하는 방식 말이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 한국의 사회정치는 제도적으로 복지의 외양을 갖추게 되었다. 하지만, 문화적 인정에 기초하여 이들의 권리를 확장시키려는 시도와는 거리가 멀었다.

### 3. 인정과 부조의 분리와 사회적 차별

#### 1) 인정 경관의 복제·확산

올림픽 이후에 찾아온 주택문제의 위기와 조우한 국가는 ‘사회안정’이라는 사회정치의 목표 실현을 위해 대규모로 주택을 건설하기로 한다. 이를 통해 중산층을 국가의 편으로 포섭하고자 했던 것이다. 앞서 보았듯이 1986년부터 시작된 3저호황으로 형성된 시중의 자금은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어 집값에 영향을 미쳤고, 1988년에 집값폭등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었다(조명래 1993, 34-36). 국가는 문제의 근원을 서울 강남 지역 중산층용 아파트의 공급 부족이라고 보았고, 그래서 신도시의 개발을 중요한 계획으로 추진했다(이영환 1996, 41). 1988년 9월 정부는 전국적으로 2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고, 그 중에서도 서울 주변지역에 중산층이상의 서울 주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신도시를 조성하여 50만 가구를 이주시킬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1989년 초 평촌, 산본, 중동, 일산, 분당이 차례로 수도권 신도시로 지정된다(한국토지공사 1997, 54).

신도시를 통해 중산층을 겨냥한 이유는 사회안정을 내세운 사회정치에 있어 중산

층을 국가 편으로 포섭해야 한다는 것이 국가의 판단이었기 때문이었다. ‘중산층’이라는 이름은 오랫동안 발전국가의 사회정치가 목표로 하는 사회구성원 집단이었다. 그런 점에서 이들이야말로 발전국가의 인정의 대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일찍이 1960년대부터 학계나 언론은 물론 정계에서도 중산층은 ‘사회 안정 세력’ 또는 ‘안정 회구 세력’이라 불렸으며(『경향신문』 1966년 1월 5일, 1; 『동아일보』 1987년 11월 27일, 1), 정부는 이들을 의도적으로 육성하고자 하였다(『경향신문』 1979년 1월 29일, 1; 『동아일보』 1985년 4월 16일, 1).

그런데, 이렇게 위로부터 ‘중산층’을 호명할 경우 이들을 정의하는 문제가 남는다. 서구처럼 역사 속에서 스스로 정체성을 형성해간 집단이 아니기 때문이다(오자은 2017, 13). 발전국가는 경제력을 기준으로 이 문제를 간단하게 처리했다. 예를 들어 전두환은 “안정된 직장과 자기 가족이 안락하게 설 수 있는 주택을 갖고 자녀들을 최소한 고등학교 수준까지 교육시키는 정도”라며 경제력을 기준으로 중산층의 기준을 단순화시켰다(『동아일보』 1987년 2월 24일, 3). 현실세계 내에서 가시화되어 있지 않은 가상의 집합을 발전국가의 인정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고유의 정체성과 습속이 정립되지 않은 중산층을 포섭하는 방식은 경제력을 갖게 된 이들이 구매할만하고 또 이들에게 매력적인 상품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것이었다. 수도권에 만들어진 신도시는 그래서 이들에게 매력적인 상품이어야 했다. 그래서 처음에 임대주택과 소형아파트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회계층이 주거하는 공간으로 구상된 신도시는, 건설과정에서 중산의 입주비중을 대폭 늘리게 된다. 분당의 경우 처음 설계 당시 1/10이었던 중산층 비율이 1/4로 늘게 된다(장세훈 2017, 19-20).

그렇다고 해서 저항적 시민사회와 구분되는 중산층이 존재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다. 앞 절에서 보았듯이, 저항적 시민사회 및 민중층과는 소득과 재산, 거주지역의 차이 및 ‘안정회구’로 표현되는 사회정치적 지향성의 차이를 지니는 사회구성원 집단이 1987년 이후 부각되었다. 비록 계층적 정체성을 형성되었다고까지는 말하기 어렵지만 말이다. 앞 절 말미에서 보았듯, 이들은 올림픽의 사회정치를 대하는 방식도 달랐다. 앞 절에서는 주로 올림픽의 성공에 기여한 금메달리스트나 전문가 집단에 주목하는 특징을 보인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이와 더불어 서구의 시선으로 한국인들의 습속을 평가하는 발전국가의 사회정치와 같은 시각을 갖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1980년대를 대표하는 작가 중 한명인 이시형의 두 책 『배짱으로 삽시다(1982)』와 『자신있게 사는 여성(1983)』은 “이제 우리도 춥고 배고픈 사람이 아니다. 다리를 뻗을 여유도 생겼고 배불리 먹을 수도 있게 됐다”는 선언과 더불어 글을 시작하는, 중산층 독자를 대상으로 삼은 책이다(이시형 1982, 14).<sup>161</sup> 책 속에서

161 두 책은 각기 120만부와 60만부가 판매된 것으로 알려지는데, 출판사의 광고에 따르면 이 책은 1980년대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비소설부문 2위와 10위에 올라있을 정도로 1980년대를 풍미했던 책이었다.

미국 유학생생활을 경험한 필자는 시종일관 “서양사람의 의식을 한번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이시형 1982, 16)”라거나, “(한국인의) 의식은 ... 서양식 민주교육과는 날카로운 대조를 이루고 있다(이시형 1983, 94)”라며 서양인의 시선에 비취 한국인들의 습속을 점검하고 고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런 책이 수년간 높은 인기를 얻었다는 것은, 서구를 대타자화하고 그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는 발전국가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중산층 사회구성원들에게도 자리잡고 있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들 중산층을 위한 신도시의 조성 방식은 올림픽을 위한 1980년대 도시개조와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국가의 경제계획과 도시계획, 그리고 토지개발봉사나 대한주택공사 등을 활용한 대규모 주거지 조성은 60년대 말 70년대 초의 여의도, 영동, 잠실에서 시작하여 과천과 목동, 상계 등으로 이어져왔다(이동배·김용하 1991, 208). 하지만, 올림픽의 도시개조를 거치기 이전 이들 신도시를 만드는 방식은 영동지구가 잘 보여주듯이 간선도로를 만들고 필지를 조성하여 공급하고, 나머지 각종 편의시설은 아파트단지들이 스스로 조성하는 것이었다(박인석 2013, 30). 그 결과 1980년대 초까지 영동지역은 베드타운이라 불리기 일쑤였다. 그런 영동지역을 탈바꿈시킨 것은 올림픽을 앞두고 한국의 경제적 발전을 과시하고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행된 도시개조였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시에 의해 만들어진 계획에 기초하여 도시설계를 통해 테헤란로, 한국종합무역센터, 잠실역 주변의 경관을 개조하고, 코엑스와 잠실에 대규모 소비공간을 만들어냈으며, 잠실주경기장 앞 아시아공원과 올림픽공원을 통해 레크레이션 시설을 만들고, 우면산자락에 문화시설이 만들어졌다. 이를 통해 강남은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라 문화와 소비의 중심지로 변하게 된다. 이렇게 아파트단지과 더불어 상업, 문화, 레크레이션 시설을 갖춘 도시를 만드는 것은 “88 서울올림픽뿐만 아니라 증가되는 외국과의 교역에서 생기는 많은 외국인 방문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연구소 1982, 14).

1989년부터 시작된 신도시의 조성은 인경경관의 창출을 목표로 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국가의 계획과 국영기업의 수행이라는 방식이 활용되었다. 초기 계획부터 대통령과 청와대(주택관계장관회의, 서민주택건설 실무기획단), 국무총리(신도시건설조정위원회), 건설부(추진대책위원회, 신도시건설기획관실), 지자체와 한국토지공사가 결합하였고, 이들이 토지의 용도를 자세히 정하고 경관을 계획적으로 조성함과 더불어 아파트 분양이 이뤄지는 방식이었다(한국토지공사 1997, 65-76). 애초에 아파트 단지 자체가 예를 들어 분당신도시의 경우 “공공시설과 복지시설을 적절히 수용하며, 대단위 상업·유통시설을 유치하여 서울의 상업·업무기능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도소매 유통센터, 금융·업무시설 부지 확보와 대규모 중앙공원의 배치로 충분한 녹지대와 레크리에이션 부지를 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이 처음부터 결정되었다(한국토지공사 1997, 61). 이러한 설계의 결과 분당신도시는 “동양에서 최고 가는 소비도시”라 불릴만한 쇼핑과 레저시설을 갖추고, 친환경 교통수단을 갖춘 ‘미래도시’로 불렸고, 병원, 관공서, 금융 등 각종 시설이 모두 갖춘 ‘선진국 수준의 도시’로 일컬

어졌다(정운태 1996, 144-147). 올림픽을 준비하던 1982년 6월, 서울시는 ‘1980년대 시정과제’라는 마스터플랜을 입안하면서 그 핵심을 ‘선진수도의 완성’으로 표현한 바 있다(『경향신문』 1982년 6월 22일). 빈민들은 자신들의 생의 터전을 허물고 새롭게 올라가는 아파트 단지를 ‘올림픽 공식주거’라 명명했다(『월간 말』 1988년 9월, 91-94). 요컨대, 신도시란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한 도시개조의 원리 및 결과로 만들어진 경관이 복제·확산된 것이고, 또한 올림픽 도시개조 과정에서의 수사(rethoric) 또한 반복하여 사용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사회안정을 노린 사회정치를 위해 국가가 중산층에게 대량으로 주택을 공급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거주할 집을 제공한 것이 아니었다. 1980년대 강남에서 만들어진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을만한 경관’을 만들어 판매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중산층은 이를 소비하면서 지역적 정체성을 상징했고, 이를 자신들의 습속 정체성과도 연결시켰다. 사회구성원 전반의 습속을 문화적으로 인정하지 않던 것이 발전국가였음을 우리는 보았다. 그런데 이 시기에 이르러 중산층은 문화적으로 인정가능한 집단으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국가가 직접 이들을 인정하는 담론을 생산하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올림픽 당시 국제사회로부터의 인정을 위해 만든 도시공간을 복제하여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방식으로 인정의 재료를 구매하도록 만들어 준 것이다.

## 2) 인정경관 올림픽 사회정치 담론의 접합과 중산층 정체성

이러한 인정경관은 올림픽의 사회정치 담론과 접합되어 중산층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정체성을 형성할 재료를 공급했다. 이는 동시에 중산층이 사회 속에서 인정받는 자로서의 자의식을 형성할 재료이기도 했다.

올림픽의 사회정치 담론은 3장에서 이미 확인한 바 있다. 국가는 사회구성원들에게 서구를 준거로 내세워 문명화된 습속 - 청결과 질서 - 을 지닐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올림픽을 통해 한국의 경제와 사회가 선진화될 것이라며 선전했다.<sup>162</sup>

한국의 ‘선진화’ 혹은 ‘선진국화’는 서사의 형태로 설명된다. 그리고 이 서사 상에서 식민의 역사와 한국전쟁이라는 과거는 한국 민족의 발전 서사에서 올림픽의 ‘부정적 타자’로 활용된다. 올림픽을 계기로 국가가 발신했던 담론을 풍자했던 김용택의 시 ‘팔유팔파’는 “민족사의원갓질곡과시련을극복하여그종지부를박쩍을까”라는 대목을 통해 국가가 발신했던 담론 중에 민족서사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김용택 1985, 153). 아시안게임에서 처음으로 일본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중국과 거의 대등한 메달 수를 기록하자 식민지배의 역사와 ‘5000년 역사’가

<sup>162</sup> 보수적 시민사회 역시 마찬가지였다. “서울올림픽 이후 한국은 1인당 GNP 5천달러 이상의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것이며,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선진화를 앞당길” 것이라는 류의 이야기는 매우 흔한 것이었다(『매일경제』 1988년 1월 1일, 21).

현재를 부각시키는 재료로 등장한다(강준만 2003c, 73-74). 올림픽에서도 마찬가지로였다. 노태우는 서울올림픽을 “전쟁의 참화와 분단의 고통을 당해 온 우리”가 치른 행사로 규정한다(노태우 1988년 10월 3일). 고려대 총장을 지내다 전두환 정부의 압력으로 사임했던 김준엽은 올림픽이 “6·25전쟁이 있는 뒤 최대의 체험”으로 규정했고(김준엽 1990, 376), 다음과 같이 식민의 역사를 참조한다.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재확인하고 선진국의 문턱에 서게 된 문화민족으로서의 자신감을 만끽하면서 온 겨레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더욱이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손기정 씨가 우승하여 억압된 우리 민족의 피를 끊게 한 기억, 그리고 그의 가슴에 단 일장기를 말소함으로써 일체에 항거한 『동아일보』가 무기 정간 당한 쓰라린 추억을 가지고 있는 나로서는 여간 감개무량한 것이 아니었다(김준엽 1990, 372).

그렇다면 올림픽은 한국의 민족이 ‘식민지와 전쟁’의 과거로 대표되는 부정적 타자로부터 탈피하여 선진국에 가까워진 상태가 되었다는 서사 구조의 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재료로 쓰였다고 볼 수 있다.<sup>163</sup>

이러한 민족발전의 서사는 특정 사회구성원들이 중산층이라는 정체성을 형성할 재료이기도 했다. 앞 절에서 본 것처럼, 1980년대 국가는 사회안정을 내세우며 중산층을 포섭하고자 했고, 이들을 안정된 직장과 주택, 자녀교육 가능성 등 경제력을 기준으로 정의했다. 다수의 사회구성원들도 이렇게 ‘간편한’ 중산층 규정을 받아들였다. 1988년 경제기획원은 ‘최저생계비의 2.5배 이상 소득, 자가 혹은 전세주택 소유자, 안정된 직업 소유자, 고졸이상학력’ 등으로 중산층을 정의했지만, 1990년 초의 어느 여론조사 응답자들은 중산층을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 ‘자택소유자’, ‘자가용 소유자’, ‘잘사는 사람’, ‘먹고 살만한 사람’, ‘평범한 사람’ 등으로 정의했다(강준만 2003c, 200). 경제력을 중심으로 막연하게 중산층을 정의한 것이다. 물론, 이렇게 막연한 중산층 정의를 가지고 정체성을 형성하기가 어려움은 당연하다. 중산층의 확대를 줄곧 외쳤던 국가가 작성한 통계 수치(36.4%)보다 사회구성원들의 중산층 귀속감(6.15%)이 훨씬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준다(『경향신문』 1991년 1월 9일, 7; 『매일경제』 1991년 11월 22일, 2),

이렇게 막연하기만 한 중산층에게 정체성의 재료가 되어주는 것이 경제적 발전의 서사였다.<sup>164</sup> 당시 중산층의 의식세계를 살펴볼 수 있는 문헌으로 1989년과 90년에 등장하여 TV 드라마로도 만들어진 소설 『말로만 중산층』과 『우리는 중산층』 등

<sup>163</sup> 그리고 이러한 민족 발전을 이끈 주체로 여겨지는 재벌기업주들이 사회적으로 상당한 주목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김우중의 책 『세계는 넓고 할일은 많다』는 1989년에 발간되어 출간 6개월만에 100만부라는 공전의 판매고를 올렸다.

<sup>164</sup> 1980년대 중산층 문학작품의 선택에 관하여는 오자은(2017)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은 이를 잘 보여준다.<sup>165</sup> 소설 속의 주인공들은 중산층을 정의함에 있어 ‘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말로만 중산층』의 주인공 부부 사이에 중산층 정의를 두고 논쟁이 있었을 때, 자신의 가족이 중산층임을 주장하는 아내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누가 감히 거꾸로 돌려요? 지엔피가 올라가고 생활 수준이 날로 향상되는 우리 앞날을 누가 가로막아요?”라는 말로 중산층 귀속감이 결코 오인이 아님을 피력한다(윤홍길 1989, 282-3). ‘중산층이면 자가용이 있어야 한다’는 가족들의 요구 앞에서 중산층 정체성을 의심하는 주인공 남편에게, 직장 상사는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현저하게 잘살고 있다는 사실을 자네는 부정하는 건가?”라는 말로 가족의 경제적 발전 서사가 중산층 정체성의 재료가 됨을 보여주고 있다(윤홍길 1989, 302-3).

가족의 경제발전 서사가 국가의 경제발전 서사와 결합했을 때 중산층 정체성은 더욱 뚜렷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우리는 중산층』의 한 등장인물은 한국 사회가 “팔팔올림픽도 얼마 안남았고, 이렇듯 지엔피 쑥쑥올라가고 물자 풍성해져 풍요를 구가하면서 선진국 대열에 올라설 날도 내일 모레”인 상황이며, “자가용 가졌겠다, 남부럽지 않게 집 한 채 장만”한 자신이야 말로 중산층이라고 주장한다(박영한 1990, 219). “잘살아 보자는 꿈이 한으로 맺혀”있던 우리가 이제는 “이만큼은 잘살게” 되었다는 서사(이시형 1983, 238), 국가의 경제의 발전 속도에 맞춰 가족의 경제적 수준 역시 향상되고 있다는 서사가 중산층 정체성의 근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서사적 정체성에는 두 개의 타자가 존재한다. 한편에는 준거점이자 동일시하고자 하는 타자로 미래를 표상하는 ‘선진국’이라는 타자가 존재한다. 오자은(2017, 69-70)에 따르면, ‘중진국 국민이므로 중산층 행세가 당연하다’고 말하면서 국가 경제발전의 서사와 가족의 경제발전 서사를 결합시켜 중산층 정체성을 구성하는 당대 소설 속 화자들은 동일화되어야 할 준거점으로 선진국이라는 타자를 상정하게 된다. 중산층을 ‘남들만큼’ 같은 개념을 통해 정체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남’이란 경제적으로 부유한 선진국이라는 것이다. 이는 한국인의 경관과 습속을 ‘선진국’을 준거로 하여 개조하고자 했던 올림픽의 사회정치 담론(3장 4절)과 매우 큰 유사성을 지니는 것이다. 다른 한편에는 부정적 타자가 존재한다. 올림픽의 사회정치 담론이 한국의 발전 내러티브에서 식민지와 전쟁의 역사를 부정적 타자로 설정했듯이 말이다. 한국 중산층은 기본적으로 “식민통치와 전쟁이 남긴 상실과 파괴, 그리고 가난의 사무친 경험” 속에서 부를 일군 이들로 정의된다(김광익 1992, 226). 또한 기본적으로 한국전쟁을 경험하고 극복했다는 자부심이 이들의 정체성에 일부를

<sup>165</sup> 윤홍길의 『말로만 중산층』은 1989년 소설로 출간된 뒤 1991년 8월부터 92년 4월까지 MBC아침드라마로 방영되었다. 박영한의 『우리는 중산층』은 1989년 조선일보에 연재된 뒤 1990년 발행된 소설로, 1991년 8~9월 사이에 KBS2TV 수목드라마로 제작되었다. 이 작품들은 비슷한 시기 중산층을 비판적으로 다룬 현기영의 “위기의 사내”, 최성각의 “축제의 밤”, 최인석의 “그림 없는 그림책” 등 중산층의 허위의식을 비판하기 보다는 중산층의 모습을 재현하고 공감대를 확산하는데 초점을 맞춘 작품이었다.

이룬다(오자은 2012, 237).

이렇게 중산층 정체성을 형성하는 발전의 내러티브는 인정경관과 결부되어 있다. 인정경관이 한국의 경제발전 및 준거적 타자로서의 선진국을 재현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중산층 아파트 경관은 현대적이고 서구적인 경관으로 규정된다는 것은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줄레조 2007, 185-191).

그리고 이것은 올림픽과도 연결된다. 강남, 분당, 부산 해운대, 대구 수성구 등의 중산층 신도시 거주자들은 계획에 따라 만들어진 질서정연한 경관과 녹지를 다른 곳과 신도시 경관을 ‘차별화’해주는 중요 요소로 보고 있다. 이들은 신도시를 발전계획에 따라 조성되어(박지혁·황진태 2017, 67), 경관이 정돈되어 있고(박배균·장진범 2016, 296), 깨끗하고 잘 정리되어 있는 공간으로 정의한다(황진태 2016, 340). 계획적으로 조성된 질서정연한 경관이자 청결한 경관이 신도시 경관의 핵심 요소로 꼽히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신도시의 경관과 거주자들의 습속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모습 역시 보여준다(박배균·장진범 2016, 296). 올림픽의 사회정치 담론에서 강조된 청결과 질서라는 요소는 경관을 매개로 신도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동시에 신도시 거주민들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국제사회로부터의 인정을 위한 도시개조는 한국사회 내에서의 인정받는 사회구성원임을 확신할 재료 중 하나로 변형되어 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올림픽의 사회정치 담론은 국가 발전의 서사를 제공했고, 이는 가족발전의 서사와 만나 중산층으로 하여금 정체성을 구성하도록 만들어주는 재료로 활용되었다. 그리고 이는 다시 인정경관과 만난다. 올림픽 이후 조성된 인정경관은 서구적이고 현대적인 공간으로 재현되면서 국가와 가족의 발전을 체화하는 공간으로 여겨졌고, 질서와 청결의 공간으로 재현되면서 올림픽의 사회정치 목표가 실현된 공간으로 여겨졌다. 이렇게 사회정치 담론과 인정경관이 접합되어 한국의 중산층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그 정체성을 형성할 재료를 만들어주었다. 올림픽을 통한 세계로부터의 인정과 인정경관이 만나 사회 속에서 ‘인정받는 자’들이라는 자의식을 중산층들에게 제공해준 것이다.

### 3) 인정 받는 자의 부조 받는 자 차별

1989부터 시작된 신도시 중심의 도시개발은 1990년대 들어 주거지역의 계층화를 더욱 명확하게 만들었다(권오혁·류남석 1991, 서중균·고은아·박세훈 1993, 342-348.). 이는 단순한 경제적 차이가 아니라 문화적 차이의 문제를 함의하는 것이었다(이소정 2006, 187-188).

중산층 거주지의 경관이 현대화와 서구화, 질서와 청결이라는, 서사화된 발전을 재현하는 경관으로 여겨진다면, 그 바깥의 거주지는 전통적이고, 무질서하며, 청결하지 못하다 여겨지면서 발전서사의 부정적 타자를 재현하는 경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일례로, 줄레조의 『아파트공화국』는 현대적이고 깨끗하고 청결한 아파트와 ‘넓고’, ‘지저분하고’, ‘어수선한’ 주변지역을 대비시키는 증언들을 보여주고 있다(줄레조 2007, 179-182). 올림픽의 사회정치담론이 부정적으로 타자화시킨 습속이 경관의 형태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중산층』의 주인공에게도 중산층 신도시와 대조를 이루는 경관은 ‘홍제동 산비탈 무허가촌’이다(박영환 1990, 134).

따라서, 중산층에게 자신이 살고 있는 신도시의 경관은 그 자체로 그 바깥의 경관과 ‘차별화’되며, 둘 사이에는 올림픽의 사회정치를 통해 일반화 된 발전담론과 문명담론에 기초한 위계관계가 존재하게 된다. 예를 들어, 신도시 거주자들은 다른 지역 거주자들에 비해 ‘덜 싸우고, 법도 더 잘 지키’는 사람들로 자신들을 정체화하며(이영민 2008, 7), 이를 통해 습속의 위계관계에서 상위를 차지함을 주장한다. 그리고 이는 올림픽의 사회정치 담론이 타자화시킨 경관과 습속들을 재료로 삼아 신도시의 중산층 사회구성원들은 그 바깥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역과 거주민들의 습속을 인정의 대상인 아닌 차별의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었다.<sup>166</sup>

가능성은 현실이 되었다. 1989년 당시 도시민민의 ‘부조’를 위해 만들어진 영구임대아파트들이 완공되고 입주가 시작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변 아파트 주민들, 즉 중산층 사회구성원로부터의 차별과 낙인, 배제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 보고되었고, 이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서종균 1997; 서수진·김주진·정경일 2004; 김위정 2004; 홍인옥 2005; 송혜자 2007; 박관민·송명규·이경진 2009; 김미희·노세희 2011; 박인권 2015, 125). 중산층 아파트 거주민들은 자신들의 아파트와 임대아파트 사이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울타리가 설치하는가 하면, 자신들의 자녀들과 임대아파트 거주민들이 서로 다른 학교를 다니도록 학교를 분리시키기도 하였다(보건복지부·한국도시연구소 2003, 15). 노골적인 학교분리가 아니더라도 위장전입 등의 방법을 통해 임대주택 학생들과의 접촉빈도를 최소화하려는 모습도 보여준다.

그리고 임대아파트 거주민들은 주변 아파트의 거주민들로부터 사회적 낙인의 대상이 된다.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들과 중산층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함께

<sup>166</sup> 1990년 무렵 중산층을 그리는 소설 속에서도 마찬가지다. 주인공들은 한국사회의 기층 구성원에 대하여 연대하는 이들이 아니라 무관심하고 거리를 두는 이들로 그려진다. 『말로만 중산층』의 주인공이 아직도 우리 사회엔 가난한 이들이 많으며 스스로 중산층 정체성을 가지기 어렵다고 말하자, 중산층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던 차장은 ‘그렇다고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눈치를 봐야 한단 말인가’며 그네들과 다른 정체성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설득한다(윤홍길 1989, 302). 서울올림픽의 사회정치를 해 배제의 대상이 되었던 노점상이나 철거민에 대하여서도 무관심하거나 혹은 자신들의 거주공간에서 배제하려는 모습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이창동의 단편 『녹천에는 똥이 많다』의 주인공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이 강제철거로 시끄러웠던 동네라는 지적에 대하여, “그렇다고 내가 이 동네 아파트를 싫다할 순 없다”는 말로 철거민과 자신 사이의 연대감정을 가질 수 없음을 항변한다. 최성각의 단편 “축제의 밤”에 등장하는 중산층 아파트 주민들은 시위를 조직하여 아파트 주변의 노점상을 없애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기까지 하며, 가난한 이들의 삶을 보호해야 한다는 말에는 비아냥으로 답하는 사람들로 그려진다(최성각 1990, 66-72).

다니는 학교에는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일컫는 모멸적 별칭이 존재한다(김성운 2003, 247). 영구임대 단지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친구를 집에 데려오지 않으며,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인근 아파트 단지 앞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기도 한다(서종균 1997, 17). 그 정도로 중산층 아파트 단지 거주민들로부터의 차별과 낙인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임대아파트의 빈민들만 차별에 시달리는 것은 아니었다. 분당지역의 경우 분당 이외의 성남지역에 대한 차별적 태도와 분당에서 노동을 영위하는 타지역 주민에 대한 차별적 태도는 매우 노골적이었다(장세훈 2017, 25).

이유는 바로 올림픽의 사회정치담론이 부정적으로 타자화시킨 습속을 이들이 체화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사회 기층의 구성원들이 게으르고 비생산적이며, 청결하지 못하다는 것이 중산층 주민들의 인식이었던 것이다(하성규 2007, 265).

임대아파트는 부조의 목적에서 지어졌고, 이전에 비해 물리적으로는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주택이었다(서종균 1997, 17). 하지만, 이 곳에는 무허가주택지 거주민들이 보여주었던 높은 연대감이나 커뮤니티 네트워크도 존재하지 않았다(하성규 2007, 259). 또한 주변지역으로부터의 낙인으로 인하여 오히려 일탈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모습 역시 관찰되는 공간이 되었다(김위정 2004, 87).

하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관찰되지 않고 있다. 임대아파트에 대한 사회적 배제에 대한 보고만 2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약 30년이 지난 지금 다양한 임대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었고, 임대아파트 거주자의 수 역시 확산되어 더 이상 빈민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낙인과 차별은 여전하다. 사회 내에 인정받는 자로부터 부조받는 자에 대하여 가해지는 차별과 낙인의 문제를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국가에 의하여 도시와 사회로부터의 배제를 경험한 이들은 저항적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더불어 자신을 인정의 대상으로 상정하면서 국가에 대하여 복지의 권리를 주장했다. 그리고 사회안정을 목표로 한 국가는 저항적 시민사회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부조를 공급했다. 하지만 이들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거나 포섭하진 않았다. 인정은 자신들이 구매했던 도시경관을 재료로 삼아 올림픽의 사회정치가 목표로 한 질서와 청결을 자신의 습속의 정체성으로 삼은 중산층 사회구성원들에게 돌아갔다. 그러면서 인정과 부조는 분리되었다. 인정받는 자들은 부조 받는 자들을 발전과 문명의 타자로 여기며 차별의 대상으로 여기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올림픽의 사회정치는 사회구성원 간 연대와 통합을 이루는 데는 실패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제 6 장 결 론

### 1. 연구 결과의 요약

이 연구는 1988년에 개최된 서울올림픽의 유치와 준비, 개최에 이르는 과정에서 국가가 사회구성원들의 습속을 개조하고 도시경관을 대대적으로 개조하려 했던 사실에 주목한다. 그리고 서울올림픽이 1980년대 국가의 사회정치 수단으로 활용되었음을 주장한다. 한국 사회가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맞닥뜨린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사회질서와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과정으로 서울올림픽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 및 조직위원회의 공문서와 백서, 공식보고서를 대상으로 정책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와 조직위원회, 관련단체의 홍보자료와 저항적 시민사회의 성명서 및 팸플릿을 통해 담론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이 연구는 올림픽의 유치 이유와 개최의 효과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왔던 기존연구가 분석하지 않은 올림픽의 준비과정을 상세히 밝히고자 한다. 나아가 경제발전을 우선시한 것으로 여겨져 온 국가가 1980년대 들어서는 올림픽을 매개로 사회질서와 통합의 문제에 본격적으로 개입하였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서울올림픽이 지니는 특징과 1980년대 한국 사회정치가 가지는 특징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이 글의 목표로 하는 바다. 분석의 결과 본문에 기술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문의 2장은 1988년 하계올림픽의 유치가 논의되고 개최가 결정되는 과정이 발전국가의 위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60-70년대의 국가는 급속한 경제발전과 국제적 지위향상을 중요시했으며, 이를 위해 사회를 동원하고자 하였던 발전국가였다. 발전국가가 사회를 동원하기 위해 주안점을 둔 것은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습속을 개조하는 것이었다. 경제발전 및 권위주의 정치에 적합한, 탈정치화되고 생산적인 습속을 갖춘 주체들을 다수화시키는 것이 이들의 전략이었던 것이다.

발전국가에게 스포츠 및 스포츠 메가이벤트의 개최는 국제사회 내에서 한국을 알리고 그 위상을 상승시킬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졌다. 이에 따라 국가는 1960년대부터 아시안게임 유치 논의를 시작했고, 1970년 아시안게임은 개최권을 얻었다가 반납한 바 있다. 그리고 1970년대부터는 잠실 개발과 함께 스포츠 메가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는 대규모 스포츠시설을 만들어나갔다.

1988년에 열리는 제24회 하계 올림픽의 유치는 1979-80년에 걸쳐 권위주의 정부 내 소수의 권력자들이 논의하고 결정한 것이었다. 올림픽 유치의 구상은 박종규가 1978년 말 시작하여 소수 관료들의 논의 끝에 1979년 9월 박정희가 수락하여 결정된 것이었다. 이후 박정희의 죽음과 함께 논의는 중단되었고, 1980년 여름 전두

환과 신군부의 등장 이후 논의가 재개되어 그해 11월 전두환의 지시로 국제올림픽 위원회에 유치를 신청하는 과정으로 이어졌다.

올림픽의 유치 논의는 1981년 봄까지도 막대한 개최비용으로 인해 공전하였으나, 아시안게임의 유치에 대한 일본과의 협의 불발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었다. 하지만, 미리 마련된 스포츠시설, 체육엘리트-관료-재벌로 이뤄진 추진 엘리트 집단의 적극적 유치 활동, 개발도상국 올림픽 개최론, 아디다스 회장과 의 이면계약 등으로 일본의 나고야를 제치고 개최권을 얻게 된다. 2개월 뒤에는 아시안게임도 개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발전국가의 위기가 존재했다. 발전국가는 미국과의 관계 악화로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될 위기에 처해있었고, 79년과 80년도에 있었던 도시봉기는 발전국가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불만을 드러냈다. 그래서, 유치 논의 과정에서 올림픽은 사회통합에 필요한 것으로 규정되었다. 올림픽의 유치 과정에서 국가는 쿠데타로 인한 사회적 불안정을 문제시하는 국제사회의 시선을 감지했고, 이를 해결할 것을 그들에게 약속하였다. 올림픽의 개최는 사회질서와 사회의 통합을 국제사회에 보여줄 과제를 국가에게 부여하게 된 것이다.

3장은 올림픽에 대한 기획이 사회정치의 기획과 맞물려 있음을 보여준다.

1980년에 권력을 잡은 군인들은 1979-80년의 봉기를 사회구성원들의 무질서한 습속과 1기 발전국가의 사회통합 실패에 기인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러한 상황 판단에 따라 국가는 사회 구성원들의 습속에 보다 깊숙이 개입하기 위해 관제캠페인의 규모와 활동을 더욱 키웠고, 자율화 및 복지정책을 확대해 나갔다. 전자를 통해 사회질서를, 후자를 통해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사회정치를 본격화한 것이다.

발전국가 일본이 개최한 1964년의 도쿄올림픽은 서울올림픽의 가장 중요한 참조 모델이었다.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이미지 개선과 사회통합을 목표로 개최된 이 올림픽은,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목표로 도시민들의 습속을 개조하기 위한 캠페인 및 대대적인 도시 경관의 개조 작업과 더불어 준비되었다. 이를 통해 과거 전쟁을 일으킨 국가에서 경제강국이자 기술강국으로 일본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가 가는데 성공했으며, 아시아 내에서도 다시 한번 입지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발전국가 한국 역시 도쿄올림픽처럼 국제사회 내 지위 향상과 사회질서 및 사회통합을 목표로 했고, 그 준비과정을 참조하여 올림픽 준비과정에서의 습속개조와 도시개조를 중요한 준비사항으로 보았다.

국가는 발전론 및 문명화론과 결합된 사회정치 담론을 유통시켰다. 먼저 국가는 서울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사회 구성원들의 습속이 바뀔 것이며, 사회구성원들이 습속을 성공적으로 개조할 경우 사회통합 역시 이뤄질 것이라 선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의 변화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얻고 지위가 상승할 것이라 장담했다. 이를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국가는 국제사회를 서구 선진국으로 번역했다. 그래서, 서구인들의 시선을 기준으로 하여 문명적·문화적 습속을 지닐 것을 사회구성원들에게 강조했다. 대대적인 도시개조의 목표 역시 서구인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경관을 창출하는데 있었다.

제 4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서울올림픽 준비과정에서 습속개조와 도시개조를 통해 사회정치가 수행되는 양상을 분석하였다

국가는 올림픽을 앞세워 도시와 사회로부터 빈곤의 경관을 배제하고 무질서한 습속을 처벌하였다. 식민지기부터 사회적 타자였던 부랑인들을 ‘복지시설’에 지속적으로 감금하였고, 무허가주택지에 대한 재개발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도시빈민들로 하여금 서울 내에서 터전을 잃게 만들었다. 공공장소에서의 무질서한 습속은 올림픽을 방해하는 범죄로 규정하면서 감시와 처벌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도시노점상 역시 여기에 포함되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저항적 시민사회가 성장하자 국가는 사회안정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이들의 시위와 집단행동을 차단하고자 하였다.

사회 구성원들의 습속 개조에는 내무부와 법무부, 서울시 등의 국가기구만이 아니라, 범민족올림픽추진위원회, 새마을운동, 사회정화운동에 이르는 관계캠페인 조직까지 동원되었다. 이들은 교육과 선전을 통하여 엄청난 양의 담론을 생산하였고, 서구인들의 시선을 대리하여 시민들의 습속을 감시하기까지 하였다. 한편으로 여가수단 및 사회통합 수단으로 스포츠 이벤트를 대폭 확대하였고, 소비공간을 늘려 풍요를 체화한 중산층 습속이 사회에 확산되도록 장려하였다.

도시경관의 개조는 국제사회에 한국의 경제자본과 문화자본을 과시하고 그들로부터 인정을 얻기 위한 목적이 상당 부분 고려되는 가운데 수행되었다. 1960~70년대 특정 지역을 선택하여 전략적으로 산업경관을 조성했던 발전국가는, 1980년대 들어 올림픽을 위해 서울 일부 지역을 선택하여 전략적으로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획득 할만한 경관을 조성하였다. 도심재개발을 통한 서울 도심의 고층화와 도시설계를 통한 강남지역 경관의 관리, 한강개발, 올림픽공원과 아시아공원 및 선수촌 등의 경기 관련시설, 국립현대미술관과 독립기념관 같은 대형문화시설이 이러한 목적에 활용되었다. 올림픽의 폐회식을 포함한 각종 문화이벤트 역시 한국이 가진 경제자본과 문화자본을 보여주는데 중점을 두었다.

요컨대, 올림픽의 사회정치를 통해 국가는 사회의 기층구성원들이 서구인의 눈에 띄지 않도록 도시와 사회부터 배제했고, 다수 구성원들에 대하여는 올림픽에 맞춰 습속을 개조하고자 하였으며, 서구인들로부터의 인정을 위하여 특정한 지역을 선정하여 경관을 개조하였다. 선별적 원리에 기초한 사회정치를 수행한 것이다.

제 5장에서는 올림픽의 사회정치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과 이에 대한 국가의 재 대응, 그리고 사회정치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1980년대 중반 이후 형성된 탈냉전 국면과 저항적 시민사회의 성장은 올림픽의 사회정치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1984년의 88올림픽 개최지 변경론 이후 국가는 사회주의 국가와의 스포츠외교에 적극 나섰고, 이를 통해 사회주의국가들의 올림픽 참가가 이뤄지자 올림픽을 ‘평화 이벤트’로 재정의하였다. 국내적으로는 저항적 시민사회가 활성화되어 개헌을 통한 민주화에 성공하였다. 이들은 또한 민족이 구성원이 사회적 권리의 주체임을 주장하면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포섭을 국가에 요구하였다.

저항적 시민사회의 민족구성원에 대한 사회적 권리의 요구와 사회적 포섭의 요구는 국가의 사회정치에 대한 대응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사회 기층구성원에 대한 배제를 강력히 비판하고 생존권을 국가가 보장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남북공동올림픽을 통해 민족구성원 전체를 대표하는 올림픽 행사를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중산층 사회구성원들은 올림픽에 대해 조금 다른 태도를 지녔었다. 이들은 올림픽의 성공과 이를 통한 국제적 지위의 향상을 환영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의 주역으로 국가가 아닌 메달리스트들과 전문가집단에 주목했다. 국제사회로부터 주어질 인정을 소비하면서도 그 인정을 향유할 주체를 국가가 아니라 특정 사회구성원들로 상정한 것이었다.

올림픽 이후 국가는 이러한 시민사회의 주장에 대하여 반응을 보였다. 저항적 시민사회의 활성화 이후 국가는 사회질서와 통합에서 사회안정으로 강조점을 바꿨다. 이를 위해 저항적 시민사회의 제안을 도시빈민을 대상으로 한 임대아파트의 공급 등 부조를 공급했다. 하지만 저항적 시민사회의 의견처럼 도시빈민들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여 만들어진 정책은 아니었다. 그러한 한편으로 중산층 사회구성원들을 포섭하기 위해 올림픽을 앞두고 조성했던 과시적 공간, 즉 인정경관을 복제·확산시켰다. 그러자 중산층 사회구성원들은 발전서사와 문명화라는 올림픽의 사회정치 담론과 구매한 인정경관을 조합하여 스스로를 한국사회의 발전과 문명화, 사회질서를 대표하는 이들로 정체화하였다. 그리고 사회 기층구성원들을 발전과 문명의 타자로 인식하며 차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올림픽의 사회정치는 사회구성원들의 습속 전반을 인정하지 않은 국가가 습속개조와 도시개조를 통해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질서와 통합을 창출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개조된 도시경관을 소비하는 방식으로 올림픽의 사회정치가 목표로 한 질서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은 중산층 사회구성원들을 창출했다. 하지만, 이 중산층 사회구성원들은 사회 기층의 구성원들을 발전과 문명의 타자로 여기며 인정하지 않고 차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올림픽의 사회정치는 사회질서의 창출에는 일정하게 성공하였는지는 몰라도, 사회구성원 간의 통합에는 실패한 것이다.

## 2. 연구의 함의

### 1) 올림픽 연구에의 함의

기존연구들과의 차별성을 고려하면서, 이 글이 제시할 수 있는 서울올림픽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올림픽은 사회질서와 사회통합을 창출하는 수단, 즉 사회정치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기존의 국내 연구들이 주장해온 탈정치화 혹은 우민화 수단으로서의 서울올림픽이라는 성격과는 차이를 드러내는 해석이다. 기존 연구들은 전두환과 신군부가 이끄는 독재정부가 올림픽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여 사



회 구성원들의 비판적 의식을 약화시키고 탈정치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서울올림픽을 해석해왔다(고광현 1988a; 강준만 2003b; 강지웅 2006; 정해구 2011). 하지만 이 연구가 발견한 바에 따르면, 서울올림픽의 유치는 박정희 정부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비용문제 앞에서 유치를 철회하는 등 전두환 정부가 올림픽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지닌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유치 및 준비 과정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특징 중 하나는 올림픽을 통해 사회통합과 사회질서를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으며, 이를 위해 사회구성원들의 습속을 개조하고, 도시경관을 대대적으로 개조하고자 하는 국가의 의도였다. 그 전 정권도 그렇지만, 1980년대의 국가는 정치적으로 무능한 주체를 원하는 권위주의 국가인 동시에 습속의 차원에서 유능한 주체를 원하는 발전주의 국가였다. 따라서, 기존연구가 주목하지 않았던 바, 서울올림픽을 사회정치적 수단으로 해석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다 판단된다.

둘째, 서울올림픽은 발전주의와 사회정치가 결합되어있다는 점에서 독특성을 띤다. 1960년대 발전국가에게 스포츠는 국제적 지위향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수단이었고, 올림픽 역시 이러한 목적과 긴밀한 관련성을 지닌다. 한국 정부는 1960년대부터 스포츠 메가이벤트를 개최하고자 노력했고, 1970년대부터 경기장 건설을 통해 준비에 들어갔다. 한편, 스포츠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한국의 ‘국위선양’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 역시 비교적 이른 시기에 만들어졌다. 한편, 서울올림픽을 유치하고 준비했던 1980년대의 발전국가에게는 사회질서와 사회통합을 추구할 필요성이 강력하게 존재했다. 이에 따라, 서울올림픽은 발전주의와 사회정치를 결합시켰다. 따라서 도시개조와 습속의 개조가 동시에 이뤄졌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동아시아 올림픽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올림픽을 통한 국제사회(=서구사회)로부터의 인정에 보다 주목하거나(Horne and Manzenriter, 2012), 올림픽을 계기로 한 사회질서 캠페인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었다(Broudehoux, 2012). 하지만 서울올림픽의 경우 이 두 양상을 동시에 포착해야 할 필요성을 지닌다. 1980년대의 발전국가 한국은 발전국가는 올림픽을 통한 발전을 약속하며 통합을 시도했고, 올림픽을 통한 발전을 명분으로 질서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셋째, 서울올림픽을 매개로 이뤄진 철거와 신자유주의적 동기에서 이뤄진 올림픽을 매개로 이뤄진 철거에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서울올림픽은 대규모 도시개조와 사회 기층 구성원의 배제라는 측면에서 1990년대의 올림픽들과 같은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그 현상 이면의 맥락은 다르다. 바르셀로나와 애틀랜타, 런던은 제조업의 쇠퇴를 배경으로 낙후한 공업지역의 재개발과 올림픽의 개최를 함께 수행했다. 그러므로써 공업지역에 거주하던 사회의 기층구성원들이 도시에서 배제되고 중산층 거주자들로 이 공간이 채워지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한다(Häussermann und Siebel 1993; Harvey 1996; 2001). 하지만, 경제성장이 배경이 되어있고 낙후한 지역의 재개발과 새로운 도시공간의 조성이 함께 이뤄진 서울올림픽의 경우, 기층구성원들의 거주공간에 중산층이 자리를 잡은 것은 아니었다. 전부터 존재했지만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중산층 거주 공간이 올림픽 개최공간이 되면서 국제사회로부터의 인정을 획득할 경관으로 개조된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의 국가 개입도 중요한 차이점을 이룬다. 이 과정은 시장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을 통해 수행되었다. 서울올림픽은 문화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도시공간을 창출한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넷째, 올림픽은 일반적으로 개최국 및 개최 도시의 국제적 지위 향상의 기회로 여겨진다(Horne and Whannel 2016; Roche 2000). 이를 가장 잘 이용한 것은 독일의 나치와 이탈리아의 파시스트들이었고, 서울올림픽 역시 이와 비슷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서울올림픽은 이들 올림픽과 사회정치 수행방식 및 효과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1934년 월드컵이나 나치스 정권이 개최한 1936년의 올림픽은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민족 구성원들에게 인정을 공급했었다(Byrne 1987; Krüger 2003; Gordon and London 2006). 이 점에서는 파시스트 올림픽과 서울올림픽 사이에 공통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권위주의와 결합된 발전주의 국가에 의해 주도된 서울올림픽은 파시스트 국가의 스포츠 메가이벤트와 달리 사회구성원 대다수를 ‘우수한 민족’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1980년대 발전국가 한국은 사회 구성원의 행위가 전반적으로 무질서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화적인 인정은 인정경관을 구매한 중산층에게 그 기회를 공급하는 방식이었다. 올림픽이 일반적으로 국제적 지위상승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인정을 배분하는 행위라 할 경우, 발전국가는 일반적 독재국가들처럼 사회구성원들을 무시하고 방치하는 것도, 파시스트 국가처럼 인종적 주류 사회 구성원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었다. 사회구성원에게 인정을 미래에 주어질 것으로 약속하지만 실제 인정의 제공은 소수에게만 공급되고, 그 소수는 인종이 아닌 계층적 성격을 띠는 것이 발전국가의 올림픽이 보여주는 인정 배분의 특징이었다.

다섯째, 서울올림픽은 냉전의 도구라기보다는 탈냉전을 향한 계기로서의 특성을 더 강하게 띄고 있었다. 기존연구들은 올림픽이 냉전의 도구로 활용되는 측면에 주로 초점을 맞춰왔다(Rider 2016; Redihan 2017; Sarantakes 2010; D’Agati 2013). 서울올림픽도 유치 당시에는 북한보다 나은 국제적 지위를 획득하는 수단으로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생각이 컸다. 그리고 올림픽 이듬해에 북한에서는 평양세계청년학생축전을 개최함으로써 메가이벤트 경쟁구도를 만들기도 하였다. 하지만,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탈피하고 자유주의 진영만 아니라 사회주의 진영과도 교류하는 계기로 올림픽을 활용하려는 의도를 지닌 것이 한국 정부였다. 이후 서울올림픽의 탈냉전의 계기로서의 성격은 명확해진다. 1984년의 올림픽 개최지 변경론 등장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스포츠 교류를 추진하였고, 동구권 국가들의 참가 결정 이후 서울올림픽을 동서 냉전의 종결을 알리는 이벤트로 재정의하 하였으며, 올림픽 이후에는 사회주의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맺기 시작했고, 비록 시민사회가 주장하는 전면적인 교류는 반대했지만 제한적인 남북 교류를 스포츠 영역에서부터 시작해 나갔었다. 시민사회에서도 올림픽 남북공동개최론이 강력히 제기되었던 바, 올림픽은 남북간의 교류 및 사회주의 국가와의 교류를 크게 촉진시키면서 탈냉전의 도구로 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서울올림픽은 민주화 과정 및 올림픽의 사회정치에 대한 저항적 시민사회의 비판과 깊은 관련성을 지녔다는 특징을 지닌다. 올림픽의 개최는 민주화를 주장하는 저항적 시민사회에 대하여 국가가 무력적 수단을 쓸 수 없게 함으로써 민주화의 촉진에 간접적 역할을 했다. 한편, 민주화 국면에서 성장한 저항적 시민사회는 올림픽의 사회정치로 인한 사회 구성원들의 배제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제시하였다. 도시빈민들을 인정받을 권리의 주체로 상정하고 제도적 보호책 마련을 주장한 것이다. 올림픽 공동개최론을 통해 국가가 남북한 사이의 교류에 임

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Lenskyj (2000, 109-123)나 박경호·옥광(2016) 등의 연구들이 보여주는 것과 다르게, 서울올림픽을 둘러싼 시민사회의 태도는 철거 피해 당사자들의 수동적 반응이나, 올림픽을 더 잘 치르도록 하기 위한 비판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었다. 사회정치 질서를 재구성하고자 하는 의지에 기초하여, 민족구성원 모두를 인정하고 이들에게 권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을 체계적으로 펼친 것이었다.

## 2) 사회정치 연구에의 함의

첫째,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발전국가는 사회를 중요한 통치의 대상으로 삼았다. 1960년대 국가는 경제적 빈곤의 문제를, 1980년대의 국가는 질서와 통합의 문제를 중요시했고, 그 원인을 사회구성원들의 습속에서 찾았다. 이에 따라 해결책 역시 사회구성원 일반의 습속을 바꿈으로써 가능하다고 보았다. 사회 내부의 격차, 구성원들 사이의 차이, 발전국가의 시민사회 내 위치 등은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이러한 발전국가의 사고 속에서 사회는 대중의 습속이 존재하는 공간이자, 공권력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개입해야 할 객체이자 대상으로 여겨졌다. 그랬기에 사회는 계속해서 정화의 대상으로 여겨졌고, 사회문제라는 개념에는 ‘과제(question)’라는 의미가 탈각되었고 ‘문제(problem)’라는 의미만 오롯했던 것이다. 그러한 발전국가가 통치대상에 대하여 일정한 습속을 장려할 때 활용되는 형용사를 통해 볼 때, 사회정치 과정에서 발전국가가 활용한 규범적 개념은 ‘국민적인 것’이었다.

둘째, 국가는 사회 구성원 중 문제와 직접 결부된 이들을 관찰하고 이들의 행동을 파악하여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 아니다. 사회 구성원 전체가 문제적이라 정의했고, 그 습속 전반을 개조의 대상으로 보았다. 해결책은 개별 사회구성원들의 습속의 하부구조인 의식의 개조였다. 이를 통해 경제적인 빈곤을 탈출하고 무질서한 습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해결의 기본단위는 개인이 되어 ‘자조(self-help)’가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었다. 국가가 제시한 문화적 인정의 범주인 ‘국민적인 것’도 역시 연대나 재분배와 거리가 멀었다. 이들이 상정한 사회통합이란 구성원간의 차이가 격차로 비화하지 않도록 재분배나 연대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개조를 통해 동질화된 의식을 소유한 이들을 다수화시켜 습속 역시 동질화 될 때 가능해지는 것이었다. 요컨대, 발전국가의 사회정치는 동질적인 습속을 지닌 국민을 창출하여 시민사회(die bürgerliche Gesellschaft)에 내재한 격차와 갈등의 문제를 넘어서고자 하였다. 그런 점에서 국민사회의 창출을 목표로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국가는 인식과정에서 사회구성원을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의 과정에서 사회 구성원 전반을 분할했다. 국가는 사회 기층의 구성원들을 일종의 오염원으로 여겨 도시로부터 격리하고 사회적으로 배제하고자 하였다. 나머지 다수의 구성원의 경우 관제캠페인을 통해 규율하고 감시함으로써 습속을 개조할 대상이었다. 제도적 안전망은 소수의 고학력 및 고숙련 노동력에게 제공하여, 사회보험이 역진적 재분배 효과를 갖도록 만들었다. 이는 올림픽의 사회정치에서 도시빈민에 대한 격리와 배제, 구성원 전반에 대한 습속개조, 인정 가능한 경관의 조선이라는 방

식으로 이어졌다. 서구의 사회정치를 거칠게 정리하자면 중산층에 대해서는 인정을 제공하고, 빈민의 습속은 분류하여 부조를 제공할 사람과 교화할 사람으로 나누어 포섭하고 배제한다 할 수 있다. 이와는 차이가 분명 존재하는 것이다.

넷째, 1960~70년대와 1980년대, 1987년 이후의 사회정치에는 일련의 차이가 존재한다. ① 1960~70년대는 발전을 위한 사회의 동원이 사회정치의 목표였다. 국가는 사회전반의 빈곤을 최대의 문제로 정의하면서 이를 극복하고 급속한 경제성장을 최대의 과제로 설정했으며, 경제발전에 동원 가능한 습속을 사회구성원들에게 강조했다. ② 두번의 도시하층민 봉기 이후의 1980년대 국가는 사회질서와 통합을 사회정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았다. 산업화와 도시화를 과제가 아닌 배경으로 보았고, 빈곤이 아닌 무질서를 당면의 문제로 보았다. 문화적 인정의 범주 역시 질서 있는 습속이 강조되었다. 특히 올림픽의 개최는 문화적 인정의 범주를 질서와 청결 등 문명화된 습속으로 재편시켰다. ③ 1987년 이후 저항적 시민사회의 활성화 국면에서 국가는 사회안정을 사회정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았다. 이는 의견의 난립을 문제적 상황으로 보았으나, 습속에 있어서는 전처럼 개조나 처벌의 대상으로 접근하기 보단 관리의 대상으로 접근했다.

다섯째, 이러한 국가의 사회정치와 길항하는 저항적 시민사회는 1980년대 후반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며 올림픽의 사회정치에 대한 비판의 형태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이들은 노동계급과 민중계급의 빈곤이 사회문제의 핵심이라고 보았고, 문제인식을 위해 한국사회를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범주화 했다. 한 세력은 독재 국가와 독점재벌이 이익을 위해 노동자와 민중을 착취하고 억압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았고, 다른 한 세력은 제국주의 국가가 만든 분단구조와 그 구조에 기생하는 국내 지배세력에 의해 노동자가 억압과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들이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는 규범적 개념은 '민족적인 것'이었다. 이들의 민족적인 것은 발전이나 문명화의 개념보다는 인종적 구성으로서의 민족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이들은 민족의 구성원 전체를 문화적 인정의 대상으로 삼은 동시에 권리의 주체로 상정하였다. 올림픽을 전후한 노점상과 철거민들의 노점상보호법과 임대주택 요구는 그러한 사고에 기초한 것이었다.

여섯째, 올림픽 이후의 사회정치는 제도적 복지의 차원에서 진전이 있었지만, 사회구성원 전반에 대한 문화적 인정과 구성원 간 연대에 있어서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음이 드러난다. 사회구성원들에 대하여 규율과 배제를 위주로 한 사회정치는 1988년 이후 사회구성원에 대한 관리를 위주로 한 사회정치로 바뀌게 된다. 한국의 사회정치 과정에서 문화적 인정은 올림픽 준비과정에서 형성된 경관에 기초한다. 서구사회에서 습속의 인정가능성을 중심으로 중산층 정체성이 형성된 것과 다르다. 그 때문에, 한국의 중산층 정체성은 도시공간과 경관에 의존하며, 이를 구매함으로써 형성되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1987년 이후의 사회안정을 위한 사회정치는 의견의 난립을 통제하기 위해 제도적인 부조 수단을 마련하지만, 조절적 접근을 통한 관리차원이었다. 국가는 여전히 부조 대상자들을 문화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사회구성원 전반을 인정할 관점의 발달은 막았다. 이러한 가운데 부조의 공간은 중산층의 공간이 함께 존재하게 되자, 성공을 개인화하는 경향을 보여온 중산층 사회구성원들은 이들을 차별과 배제의 대상으로 삼는 모습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서울올림픽을 둘러싼 사회정치는 1988년 올림픽 이후 새로운 사회정치 질서를 만들어냈다. 이를 '88년체제'라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88년 체제는 그 이전처럼 국가가 사회구성원들의 습속을 문제시 하고 이를 개조하고자 하는 노력을 중단한 상태에서,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형성된 새로운 질서라 볼 수 있다. 사회구성원들은 중산층과 그 아래의 빈민과 서민으로 대별되며, 이 둘 사이에는 중심-주변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중산층은 한국사회 내에서 '선진국'에 가까운 생활을 하는 이들로 여겨진다. 한국사회의 경제발전과 사회발전 즉, '풍요와 질서'를 체화한 이들로 표상되는 것이다. 반대로 서민층은 그와 반대편에서 발전의 부정적 타자에 가까운 이들로 표상된다. 이는 올림픽의 사회정치가 발전서사와 도시경관, 습속, 그리고 계층정체성을 조합시킨 결과였다. 88년 체제의 시작과 더불어 도시빈민에 대한 부조는 확대되었다. 하지만 저항적 시민사회가 주장했던 것처럼 부조받는 이들의 권리를 인정하면서 제공한 부조는 아니었다. 그러다 보니 부조는 연대가 아닌 동정에 기반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고, 사회구성원들도 부조를 인정으로부터의 탈락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다 보니 인정받는 자와 부조받는 자, 중산층과 빈민 혹은 서민 사이의 관계는 동정에 기초할 수는 있을 지는 몰라도, 동등성에 대한 인정에 기초하기란 어렵다. 1998년 이후 사회복지 정책이 확대되었고, 도시공간에는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부조받는 자들을 위한 다양한 시설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것들이 들어설 때마다 등장하는 것은 주변 주민들로부터의 반대의 목소리다. 인정받는 자들을 자처하는 이들로부터 부조받는 이들이 차별과 무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인정과 부조의 분리, 연대 없는 복지, 그로 인한 차별과 무시. 이것이 88년 체제가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는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1차 문헌

#### 1. 신문 및 잡지, 정기간행물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 『새마을스포츠』, 『서울신문』, 『올림픽광장』, 『올림픽 뉴스』, 『올림픽서울』, 『월간 말』, 『정화』, 『중앙일보』, 『한국일보』

#### 2. 보고서, 백서, 정부 및 기관 간행물

고두현, 1988, 『서울올림픽 이것만은 알아둡시다』,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고연규, 1984, “국민정신 고취를 위한 새마을운동과 사회정화운동의 연계성에 관한 연구”, 『국민윤리연구(특집호)』  
공보부 1962, 『혁명정부 7개월간의 업적』  
국립민속박물관, 2010, 『세계와 함께 나눈 한국문화 - 산공 강신표 올림픽 문화학술운동』.  
국립현대미술관, 1987, 『국립현대미술관 건립지』  
국토교통부, 2013, 『국토 및 지역개발정책: 국토종합계획을 중심으로』.  
국토통일원 남북대화사무국, 1982, 『남북대화백서』..  
국토통일원 통일연수원, 1989, 『평양세계청년학생축전, 그 성격과 내용』.  
김성진, 1989, 『평화의 성화』, 서울올림픽평화대회 추진위원회  
내무부, 1980, 『새마을운동 10년사』  
\_\_\_\_\_, 1981, 『새마을운동』  
\_\_\_\_\_. 1982, 『새마을운동』  
\_\_\_\_\_, 1983, 『새마을운동』  
\_\_\_\_\_, 1984, 『새마을운동』  
\_\_\_\_\_, 1985, 『새마을운동』  
\_\_\_\_\_, 1986, 『새마을운동』  
\_\_\_\_\_, 1987, 『새마을운동』  
대한농구협회, 2008, 『한국농구100년』  
대한민국정부, 1981, 『관보』, 제 9009호.  
\_\_\_\_\_, 1981, 『관보』, 제 9028호.  
\_\_\_\_\_, 1982, 『관보』, 제 9199호.  
\_\_\_\_\_, 1982, 『관보』, 제 9330호.  
대한배구협회, 1994, 『한국배구70년사』  
대한올림픽위원회, 1992, 『남북체육교류자료집』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연구소, 1982, 『과천신도시 중심상업지구 계획·설계』

- 개발』
- 대한체육회, 1973, 『제54회 전국체육대회 보고서』
- \_\_\_\_\_, 1983, 『동경올림픽선수강화대책본부 보고서』
- \_\_\_\_\_, 2010, 『대한체육회 90년사』, 대한체육회.
- 문화공보부, 1981, 『88서울올림픽』
- 민주한국 혁명청사편찬위원회, 1962, 『민주한국혁명청사』
- 범민족올림픽추진중앙협의회, 1988,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국민참여운동 백서』
- 사회정화위원회, 1986, 『86, 88대비 의식개혁 교육 교재 - 호돌이의 손님맞이』
- \_\_\_\_\_, 1988, 『사회정화운동사 1980~1988』
- 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1987, 『제10회아시아경기대회 공식보고서』
- 서울역사박물관, 2017, 『88서울올림픽, 서울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1983, 『화합과 전진의 제전』
- \_\_\_\_\_, 1985, 『인류에 평화를 민족에 영광을』
- \_\_\_\_\_, 1987, 『벽을 넘어서: 제 24회 서울올림픽대회 개폐회식 대본』
- \_\_\_\_\_, 1988, 『서울올림픽 개폐회식 종합 해설집』
- \_\_\_\_\_, 1989a, 『제 24회 서울올림픽대회 공식보고서』
- \_\_\_\_\_, 1989b, 『제 24회 서울올림픽대회 공식보고서 부록』
- \_\_\_\_\_, 1989c, 『로잔느남북체육회담 백서』
- 서울특별시, 1965, 『서울도시계획』.
- \_\_\_\_\_, 1966, 『서울도시기본계획』.
- \_\_\_\_\_, 1967, 『불량건물정리계획』.
- \_\_\_\_\_, 1974, 『잠실지구종합개발기본계획』
- \_\_\_\_\_, 1976년 10월 5일, “잠실종합대운동장건설계획”, <http://theme.archives.go.kr/next/koreaOfRecord/seoulStadium.do>
- \_\_\_\_\_, 1981, 『동경올림픽대회 동경도보고서 발췌』
- \_\_\_\_\_, 1983a, 『한강종합개발 기본계획 보고서 요약』
- \_\_\_\_\_, 1983b 『잠실지구 도시설계』
- \_\_\_\_\_, 1984a, 『국립경기장 기본계획 및 설계』
- \_\_\_\_\_, 1984b, 『테헤란로 도시설계』
- \_\_\_\_\_, 1985, 『울곡로·대학로 도시설계』.
- \_\_\_\_\_, 1987, 『제10회 서울아시아경기대회 백서』.
- \_\_\_\_\_, 1988, 『한강종합개발사업 건설지』
- \_\_\_\_\_, 1990, 『서울올림픽 백서』.
- \_\_\_\_\_, 2001, 『서울도시계획연혁』.
- \_\_\_\_\_, 2010, 『지표로 본 서울 변천(2010년 개정판)』
-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1984, 『올림픽교육자료』.
- 성화숙박지시·도, 1988, 『서울올림픽 성화맞이 지방문화축제』
- 외무부, 1990, 『외무백서』.
- 정무장관실, 1981, 『올림픽 동경대회와 정부기관등의 협력』..
- 체육부, 1987a, 『서울아시아경기대회 백서 1. 총괄편』.
- \_\_\_\_\_, 1987b, 『서울아시아경기대회 백서 2. 대회운영편』.
- \_\_\_\_\_, 1987c, 『서울아시아경기대회 백서 3. 여건조성편』

체육청소년부, 1992, 『체육청소년 행정10년사』  
 크리스찬아카데미, 1989, 『후기산업사회의 세계 공동체: 서울 올림픽 국제학술회의  
 6권 자료편』, 우석.  
 한국군사혁명사편찬위원회, 1963, 『한국군사혁명사 1(상)』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88, 『서울올림픽 문화예술축전자료집』.  
 한국토지개발공사, 1984, 『양동 제4.5지구재개발사업기본계획』.  
 현대사회연구소, 1981. 『사회정화운동의 이념과 방향』.  
 \_\_\_\_\_, 1982, 『2000년대를 향한 한국인상』

### 3. 국가기록원 소장 정부기록물

(자료의 특성상 기록물명, 발행시기, 발행처, 관리번호 순으로 기재)

“1982년 주요업무계획”, 1982년 1월, 동력자원부, BA0852155  
 “1982년 주요업무계획”, 1982년 2월, 내무부, BA0852144  
 “1982년 주요업무계획”, 1982년 2월, 노동부, BA0852133  
 “1982년 주요업무계획”, 1982년 2월, 문화공보부, BA0852153  
 “1982년 주요업무계획”, 1982년 2월, 법무부, BA0852135  
 “1982년 주요업무계획”, 1982년 2월, 보건사회부, BA0852150  
 “1982년 주요업무계획”, 1982년 2월, 정무제2장관실, BA0852141  
 “1982년 주요업무계획”, 1982년 2월, 체신부, BA0852152  
 “1983년 주요업무계획”, 1983년 2월, 노동부, BA0852187  
 “1983년 주요업무계획”, 1983년 2월, 문화공보부, BA0852186  
 “1983년 주요업무계획”, 1983년 2월, 법무부, BA0852178  
 “1983년 주요업무계획”, 1982년 2월, 보건사회부, BA0852183  
 “1983년 주요업무계획”, 1983년 2월, 서울특별시, BA0852191  
 “1984년 주요업무계획”, 1984년 2월, 노동부, BA0852228  
 “1984년 주요업무계획”, 1984년 2월, 보건사회부, BA0852221  
 “1985년 주요업무계획”, 1985년 2월, 노동부, BA0852261  
 『1986·1988대회관련 대통령각하 지시사항철』. 1981년 9월 4일~1987년 5월 25  
 일, 국무총리행정조정실, BA0883743  
 “1986년 제10회 아시안게임유치보고서”, 1981년 12월, 대한올림픽위원회, BA08837  
 66  
 “1986년 주요업무계획”, 1986년 1월, 법무부, CA0043487  
 “1986아시아·1988올림픽대회종합시행계획”, 1983년 12월, 서울올림픽대회지원위원  
 회, BA0883849,  
 “1986아시아·1988올림픽대회 총합계획”, 1982년 8월, 체육부, BA0883771  
 “1988년 장애인올림픽”, 1983년 1월 10일, 외무부, BA0883910  
 “1988서울올림픽개최에 관한 보고”, 1981년 10월 16일, 문교부, BA0883701  
 “86·88대회 올림픽관련 대통령각하 지시사항”, 1985년 1월 30일, 국무총리행정조정  
 실, BA0883743.  
 “86.88올림픽관련 각하지시사항(올림픽관련), 1981년 10월~83년 2월”, 국무총리행



- 정조정실, BA0883743
- “86·88올림픽준비지원계획”, 1982년 6월 24일, 경기도, BA0080169
- “86아시아경기·88올림픽대회 지원기구 정비강화방안”, 1982년 12월 22일,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BA0883816
- “86아시아·88올림픽대회 총합계획”, 1982년 8월, 체육부, BA0883771
- “86아시아88올림픽대회 총합계획의 수정 보완제출”, 1983년 3월 12일,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BA0883846
- “86아시아·88올림픽대회 총합시행계획”, 1983년 12월, 86·88지원위원회, BA0883849
- “86아시아·88올림픽 추진상황보고서 대통령각하 지시(83.4.15)”, 1983년 4월 15일, 국무총리행정조정실, BA0883743
- “86아시아·88올림픽 추진상황종합고보시의 대통령각하지시사항”, 1984년 10월 16일, 국무총리행정조정실, BA0883743
- “86아시아게임아국개최관련특이동향보고”, 1981년 11월 27일, 국무총리행정조정실, BA0883766
- “86아시아게임유치결과보고”, 1981년 12월 4일, 국무총리행정조정실, BA0883712
- “86아시아게임 저해사범 단속”, 1986년 5월 19일, 대검찰청, CA0030232
- “88국제신체장애자올림픽 서울개최문제”, 1983년 4월 21일, 국무총리행정조정실, BA0883910
- “88년 서울올림픽 부문별 사업추진방향”, 1981년 10월 2일, 국가안전기획부, BA0883708
- “88년 올림픽 서울 유치교섭”, 1981년 5월 25일, 외무부, CA0332234
- “88년 올림픽서울유치교섭”, 1981년 7월 7일, 외무부, CA0332234
- “88년 올림픽 유치교섭 세부계획”, 1981년 8월 26일, 대책실무반, BA0883696
- “88년 올림픽유치 특별대책반 제1차 회의자료” 1981년 8월 22일, 외무부, BA0883709
- “88서울올림픽·86 아시아경기대회 준비상황”, 1982년 4월, 체육부, BA0883825
- “88서울올림픽대회·86아시아경기대회 준비계획”, 1982년 1월 26일, 국무총리행정조정실, BA0883772
- “88서울올림픽대회86아시아경기대회 준비계획”, 1982년 2월 2일,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BA0883825
- “88서울올림픽대회·86아시아경기대회 준비계획”, 1982년 2월 2일, 서울올림픽대회지원위원회, BA0883885
- “88서울올림픽대회·86아시아경기대회 준비계획”, 1982년 2월 2일, 서울올림픽대회지원위원회, BA08838245
- “88서울올림픽대회·86아시아경기대회 총합계획수립방안”, 1982년 4월, 체육부, BA0883826
- “88서울올림픽 개최에 관한 보고”, 1981년 10월 16일, 문교부, BA0883701
- “88서울올림픽 개최준비 지원계획”, 1988년 11월 30일, 국토통일원, BA0883714
- “88서울올림픽대비 범죄단속계획”, 1988년 5월 9일, 미상, BA0410668
- “88서울올림픽유치결과보고, 1981년 10월 6일, 서울올림픽유치교섭단, BA0883705
- “88서울올림픽 유치경과보고”, 1981년 10월 14일, 서울올림픽유치대표단, BA08837

64

- “88서울올림픽 준비 지원계획안제출”, 1981년 11월 12일, 국립영화제작소, BA0793139
- “88서울장애자올림픽대회 추진현황”, 1986년 12월, 서울장애자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BA0883910
- “88올림픽대비 스포츠과학진흥방안”, 1982년 1월, 문교부, BA0883772
- “88올림픽 서울 유치 교섭단 활동 결과 보고”, 1981년 10월 1일, 외무부, BA0883709
- “88올림픽 서울유치교섭단 귀국보고”, 일자 미상,, 미상, BA0883696
- “88올림픽 유치”, 1981년 9월 2일, 외무부, BA0883709
- “88올림픽 유치 종합대책”, 1981년 9월 11일, 국무총리행정조정실, BA0883719
- “88올림픽 준비지원계획제출”, 1981년 11월 27일, 법제처, BA0883714
- “88올림픽 지원사업 계획(안)제출”, 1981년 12월 17일, 문화공보부, BA0883714
- “88장애자올림픽개최검토보고(보사부)”, 1983년 8월 31일, 국무총리행정조정실, BA0883910
- “88장애자올림픽개최검토보고”, 1984년 1월 14일, 보건사회부, BA0883910
- “88장애자올림픽개최계획 각하보고에 관한 건”, 1984년 4월 24일, 보건사회부, BA0883910
- “88장애자올림픽 아국개최 결정 보고”, 1984년 1월 25일, 보건사회부, BA0883910
- “개폐회식 개최시간에 대한 의견 통보”, 1985년 11월 20일, 미상, BA0113835
- “고교생 교복자율화에 따른 청소년 건전의식 계도대책”, 1983년 2월 4일, 문화공보부, BA0793308.
- “교복자율화 - 자율과 책임”, 1983년, 문교부, CEN0006619.
- “국립경기장 등 추진계획” 1982년 7월, 서울특별시, BA0883817
- “국립경기장민원관계철”, 1984년, 국무총리행정조정실, BA0113489
- “국립경기장부지내주요시설배치계획”, 1982년 7월 12일, 서울특별시, BA0113497
- “국립경기장부지활용방안 확정을 위한 실무회의”, 1982년 6월 14일, 국무총리행정조정실, BA0883773
- “국무회의의사일정및의안배부(제70회)”, 1979년 9월 25일, 총무처, BA0084905
- “국제경기대회 한국유치 추진현황 보고”, 1981년 2월 16일, 문교부, BA0883696
- “국제경기 유치 대책회의 결과 시달(통보)”, 1981년 8월 10일, 국무총리행정조정실, BA0883759
- “국제스토크맨드빌 경기연맹 규칙”, 미상, 미상, BA0883910
- “남북체육회담 관련 국민홍보자료”, 1988년 6월 2일, 제주도지사, BA0410668.
- “대공산권관계개선 및 서울올림픽 방해책동 분쇄를 위한 대책회의”, 1981년, 미상, BA0883743
- “대통령각하에 대한 서울올림픽 준비추진상황 중간보고결과”, 1981년 12월 17일, 국무총리행정조정실, BA0883743.
- “대통령각하 지시 및 훈시(올림픽 관련)”, 미상, 국무총리행정조정실, BA0883743.
-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겸 대한체육회 회장 박종규 귀하”, 1981년 1월 21일, 김유순, CA0330978
- “대한올림픽위원회위원장 겸 대한체육회 회장에게 보내는 편지”, 1979년 12월 20일,

- 김유순, CA0330978
- “면담요록” 1980년 7월 18일, 외무부, CA0330903
- “모스크바올림픽 불참문제”, 1980년 1월 29일, 외무부, CA0330903
- “모스크바 올림픽대책(안)”, 1980년 4월 17일, 중앙정보부, CA0330903
- “모스크바 올림픽 불참 결정”, 1980년 5월 17일, 외무부, CA0330903
- “모스크바올림픽, 회견대표단 파견문제” 1980년 7월, 외무부, CA0330903
- “문화재지정에 따른 협의”, 1981년 12월 16일, 문화공보부, BA0113497
-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하여”, 1988년, 총무처, BA0085300
- “박종규 대한체육회 회장 겸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북한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겸 올림픽위원회 위원장 김유순에게 보내는 서한”, 198년 1월 29일, 박종규, CA0330978
- “범민족올림픽 추진 양산군 위원회 규정 제정 공포 건의”, 1982년 3월 3일, 경상남도 양산군, BA0052759
- “범민족올림픽 추진 완도군 위원회 규정 공포”, 1981년 3월 23일, 전라남도 완도군, BA0053252
- “범민족올림픽추진위원회 세부실천계획수립지침”, 1982년 6월, 경기도, BA0080169
- “범민족올림픽추진 천안시위원회 규정 제정 발령”, 1982년 3월, 충청남도 천안시, BA 0157864
- “북괴의 남북체육대표회담 제의에 대한 저의 평가 및 대책”, 1979년 12월, 중앙정보부, CA0330978
- “북한의 올림픽 준비와 대한민국 참가(A KNNDK előkészületei a moszkvai Olimpiára és politikai állásfoglalása Dél-Korea részvételével kapcsolatban.)” 1978년 4월 6일, 헝가리 외무부, CTA0007176
- “북한체육지도위원회 및 올림픽위원회 위원장 김유순에게 보내는 박종규 대한체육회 회장 겸 한국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의 서한문”, 1980년 1월 11일, 박종규, CA0330978
- “서울올림픽 개최준비 지원계획 제출”, 1981년 12월 4일, 보건사회부, BA0883714
- “서울올림픽대회범민족추진이천군위원회규정”, 1982년 4월 12일, 경기도 이천군, BA 0567446
- “서울올림픽대회범민족추진평택군위원회규정”, 1982년 3월 6일, 경기도 평택군, BA0392603
- “서울올림픽대회 범민족올림픽추진 해남군 위원회 규정”, 1982년 2월 24일, 전라남도 해남군, BA0598676
- “서울올림픽대회 부문별지원계획지침(안)”, 1981년 1월, 서울올림픽대회지원실무위원회, BA0883754
- “서울올림픽대회 제2차지원실무위원회 개최결과”, 1982년 2월 25일, 국무총리행정조정실, BA0883754
- “서울올림픽대회준비추진상황”, 1982년 1월 11일, 서울올림픽대회지원위원회, BA 0883754
- “서울올림픽 대회 준비추진상황중간보고”, 1981년 12월 16일,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BA0883708
- “서울올림픽대회지원실무위원회담개최계획”, 1981년 12월 26일, 국무총리행정조정실,

BA0883754

- “서울올림픽대회지원위원회 규정안”, 1981년 11월 19일, 총무처, BA0084981
- “서울올림픽대회지원위원회 사업예산이체(안)송부”, 1983년 4월 22일, 국무총리행정조정실, BA0883775
- “서울올림픽대회 후원회 결성방안”, 1982년 1월, 서울올림픽대회지원위원회, BA0883 772
- “서울올림픽 및 아시아 경기대회 준비 세부 시행계획 제출”, 1982년 3월 10일, 대검찰청, CA0030176
-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 및 지원위원회 설치안”, 1981년 10월 31일, 국무총리행정조정실, BA0993699
- “서울올림픽 준비계획 정당협조 조찬회 결과보고”, 1982년 1월 29일, 서울올림픽대회지원위원회, BA0883708
- “서울올림픽 준비대책회의 결과보고”, 1981년 11월 20일, 국무총리행정조정실, BA0883754
- “서울올림픽참가 통보현황”, 1988년, 총무처, BA0085299
-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설립총회 결과보고”, 1984년 6월 5일, 국무총리행정조정실, BA0883910
-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설립계획”, 1984년 6월,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BA0883910
-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현판식”, 1984년 8월 24일, 국무총리행정조정실, BA0883910
- “설명기본자료”, 미상, 미상, BA0883695
- “소련비방표시물품판매금지조치” 미상,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BA0113447; BA01136 47
- “아시아선수촌·국립경기장 추진방안 회의결과 보고”, 1983년 2월 5일, 국무총리행정조정실, BA0883816
- “아시안게임 관계회의”, 1981년 10월 28일, 국무총리행정조정실, BA0883695
- “야간통행금지해제후 국민들의 달라진 의식과 생활 및 사회변화”, 1983년, 국립영화제작소, CEN0006797
- “영화제작지시서”, 1981년 8월 10일, 국립영화제작소, BA07936103
- “업무인계인수서”, 1982년 3월 25일, 미상, BA0883775
- “올림픽'88계기국민의식개혁캠페인계획”, 1981년 10월, 대통령비서실, HA0000653
- “올림픽 마스터플랜 발표계획”, 1981년 8월 10일, 체육부, BA0883826
- “올림픽 및 아시아경기대회 준비계획 보고”, 1982년 2월 2일, 서울올림픽대회지원위원회, BA0883743
-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유치대책회의결과”, 1981년 8월 10일, 국무총리행정조정실, BA0883696
-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주요시설배치 조정방안”, 1982년 6월 23일, 국무총리행정조정실, BA0883773
- “올림픽 아시안게임 주요시설 배치,조정 방안 보고시 지시사항”, 1982년 6월 23일, 국무총리행정조정실, BA0883743.
-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주요시설배치 조정방안 시달”, 1982년 6월 28일, 국무총리행

- 정조정실, BA0883817
-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주요시설 배치조정방안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 각서 시달”, 1982년 7월 3일, 국무총리행정조정실, BA0883817
- “올림픽 유치교섭 현황”, 1981년 7월 1일, 국무총리행정조정실, BA0883709
- “올림픽 유치교섭”, 1981년 7월 4일, 국무총리행정조정실, BA0883756
- “올림픽 유치교섭”, 1981년 8월 22일, 외무부, CA0332234
- “올림픽 및 아시아 경기대회 준비계획 보고”, 1982년 2월 2일, 국무총리행정조정실, BA0883743.
- “올림픽유치대책실무위원회안건”, 1981년 5월 19일, 국무총리행정조정실, BA0883709
- “올림픽 유치대표단 보고 제 3보”, 1981년 9월 24일, 국무총리행정조정실, BA0883764
- “올림픽 유치활동 추진상황 보고”, 1981년 9월 18일, 국무총리행정조정실, BA0883698
- “올림픽 유치 활동 상황 제 6보”, 1981년 9월 28일, 국무총리행정조정실, BA0883764
- “올림픽 유치활동 상황보고 제 10보”, 1981년 9월 30일, 국무총리행정조정실, BA0883764
- “올림픽저해사범 단속보고 및 외국인범죄사건처리”, 1986년 6월 9일, 법무부, DA0341204
- “올림픽저해사범 단속보고 및 외국인범죄사건처리”, 1986년 6월 12일, 대검찰청, DA0341204
- “올림픽 전시관 뉴델리 전시”, 1981년 11월 28일, 국무총리행정조정실, BA0883744
- “올림픽지원 실무분과(기획) 위원회 회담개최 계획”, 1982년 1월 20일, 국무총리행정조정실, BA0883754
- “올림픽평화구역설정공고”, 1988년 8월 19일, 총무처, BA0196979
- “올림픽한국전시관개설계획 보고”, 1981년 6월 27일, 문화공보부, BA0883758
- “울주군 범민족 올림픽 추진위원회 규정 제정”, 1982년 7월 20일, 경상북도 울주군, BA0705605
- “장애자올림픽대책회의결과보고”, 1983년 6월 13일, 국무총리행정조정실, BA0883910
- “재단법인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발기인총회 및 위원회 회의록”, 1981년 11월 2일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BA0883818
- “재단법인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정관”, 1981년 11월 2일,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BA0883818
- “제5차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 작성지침(안)요약”, 1980년, 경제기획원, C11M23477
- “제10회 아세아경기대회 추진계획(안)”, 1981년 8월 10일, 문교부, BA0883695
- “제10회 아시아경기대회 한국유치계획”, 1980년 4월 10일, 문교부, BA0084925
- “제10회 Asian Game 유치종합대책”, 1981년 11월 16일, 국무총리행정조정실, BA0883712
- “제24회 올림픽대회 유치대책” 1981년 3월 18일, 문교부, BA0883696
- “제24회 올림픽 및 제10회 아세아경기대회 유치활동 계획”, 1981년 6월 29일, 문교

- 부, BA0883696
- “제24회 올림픽 유치대책” 1981년 6월, 국무총리행정조정실, BA0883697
- “제24회 올림픽유치대책회담결과 제1차”, 1980년 4월 16일, 국무총리행정조정실, BA 0883718
- “제24회 올림픽 유치대책회의 결과 2차”, 1981년 4월 27일, 국무총리행정조정실, BA 0883709
- “제24회 올림픽유치 대책회의 결과 3차”, 1981년 5월 16일, 국무총리행정조정실, BA0883709
- “제24회 올림픽유치활동 추진계획보고”, 1980년 4월, 문교부, BA0883696
- “제71회 차관회의 의사일정 및 의안배부”, 1979년 9월 24일, 총무처, BA0085360
- “조선체육지도위원회 성명”, 1980년 2월 5일, 조선체육지도위원회, CA0330978
- “조직위원회 주최 올림픽 관계관 오찬록 보고”, 1981년 1월 13일, 서울올림픽대회지원위원회, BA0883708
- “중·고교학생 교복 및 두발제도 개선(안)”, 1981년 12월, 문교부, HA0003628
- “지장물철거현황”, 1984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BA0113489
- “진양군 범국민 올림픽추진위원회 규정”, 1981년 2월 26일, 경상남도 진양군, BA017 7745
- “총합계획검토보고”, 1983년 3월 11일, 국무총리행정조정실, BA0883902
- “AGF대표단 보고 2~4보”, 1981년 11월 25일, 국무총리행정조정실, BA0883766
- “AGF대표단 보고”, 1981년 11월 27일, 외무부, BA0883766
- “ANOC 총회 보고서”, 1981년 8월, 대한올림픽위원회, CA0332234
- “Asian Games 유치교섭방향협의자료”, 1981년 11월, 국무총리행정조정실, BA08837 12
- “IOC총회대책” 1981년 9월 2일, 외무부, CA0332235
- “IOC총회 파견대표 인선”, 1981년 5월 27일, 문교부, BA0883756

#### 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아카이브 자료

- “1985.10.26일자 올림픽 관계 기사에 대한 공개 질의서”, 1985년 11월 1일, 여성평우회, 00202528
- “6.10 남북학생 회담을 맞이하여 통일의 염원을 결의하며”, 1988년, 덕성여자대학교 학우들. 00117851
- “85년 10월 26일자 일간지 올림픽 관계기사에 대한 진상해명을 위한 건의문”, 1985년 11월, 한국교회여성연합회, 00013512
- “86아시아경기대회에 대한 부산지역 대학인의 입장”, 1986년, 재부대학총학생회, 00884287
-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은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1986년 9월, 한국가톨릭농민회, 00217423
- “'88서울올림픽 분단올림픽=독재올림픽≠평화올림픽”, 1988년 9월, 불교정토구현전국승가회, 중앙승가대학학생회, 동국대학교석립회, 동국대학교불교도연합, 정토구현광주불교협의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민중불교운동연합, 00869841

- “88서울올림픽은 매춘올림픽인가?”, 1988년 9월 21일, 서울대학교총학생회, 00869993
- “겨울에 어디로 가야하나? 사람이냐? 올림픽이냐?”, 1985년 10월,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 00839465
- “고 조성만 열사의 유지를 받들어 남북 공동올림픽과 6·10 남북 학생체육회담의 성사를 촉구한다”, 1988년 5월 28일, 서명인사·사회단체일동, 00094207
- “공동 올림픽 결사반대”, 1988년 6월 12일, 사회주의노동자동맹, 00528789
- “공동올림픽으로 조국통일의 새날을!”, 1988년, 민족해방열사김세진·이재호열사추모사업회,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 서울민중연합,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00158463
- “김영삼의장 워싱턴포스트지와 회견-정국 불안하면 올림픽 개최도 위태로워”, 1985년 9월 7일, 한국신보, 00860741
- “노점상의 생존권과 올림픽에 관한 공청회”, 1988년 5월 4일, 도시노점상연합회, 00120928
- “노점상 올림픽 문화제”, 1988년 9월, 전국도시노점상연합회, 00039942
- “단독 올림픽은 우리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1988년 9월, 조국의자주적평화통일을위한민주단체협의회,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00184177
- “덕수궁 앞에서 생존권요구 시위하는 전국도시 노점상연합회 회원과 학생들”, 1988년 8월 2일, 경향신문사, 00733838
- “도시빈민 한가위 올림픽”, 1988년 9월 21일, 서울시철거민협의회, 00045378
- “독재안정화 기도, 88올림픽”, 1988년,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북부지구, 00098076
- “매춘올림픽과 에이즈”, 1988년, 노영희(여성의 전화 공동대표), 00011132
- “민주시민 여러분![올림픽으로 인한 강제 철거 반대]”, 1988년 6월 26일, 고강동상계철거민일동, 00048160
- “반도의 딸 팔아먹은 매춘올림픽”, 1988년 10월 12일, 민주쟁취국민운동제주본부, 00211843
- “반민중적 올림픽으로 탄압받는 도시빈민공동투쟁위원회 결성식 및 노점단속.강제철거 저지 결의대회”, 1988년 8월 28일, 도시빈민공동투쟁위원회, 서울시철거민협의회, 전국도시노점상연합회,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천주교도시빈민회, 00044502
- 『베를 1988년 9월호』. 1988년 9월 5일, 여성의 전화, 00209885
- “부산 시민에게 바치는 글”, 1986년 3월 23일, 김대중, 00858813
- “분단을 뛰어넘어 정토의 세계로-공동올림픽과 통일”, 1988년, 민족화합공동올림픽추진불교본부, 00097708
- “시민에게 호소합니다”, 1985년 3월 8일, 목1동철거대책위원회, 00089563
- “시청 앞 광장에 집결한 박래전 열사의 장례 행렬”, 1988년 6월 12일, 박용수, 00748600
- “아시아 도시빈민 서울대회”, 1989년 6월, 전국도시빈민연합(준비위), 00021637
- “양심수와 그 가족까지 탄압하는 미국-노태우 독재를 몰아내자”, 1988년 8월 12일,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00159373
- “오늘의 한국 현실과 그리스도 교회의 입장”, 1981년 12월, 한국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00869335

- “임대주택쟁취 보고 및 강제철거결사저지를 위한 1990년 서울시철거민협의회 대중 총회”, 1990년 4월 20일, 서울시철거민협의회, 00875778
- “장기유자 임대주택 쟁취라고 쓰여진 현수막을 들고 철거촌을 들고 있는 철거민들”, 1988년 1월 8일, 박용수, 00702747
- “재개발 반대 및 임대주택 쟁취를 위한 도시빈민대회”, 1988년 1월 31일, 사당동세입자대책위원회, 00048077
- “전민련 상임고문 문익환목사 방북자료”, 1989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00207605
- “주거근본대책, 임대주택”, 1987년 11월, 도시빈민연구소, 00041986
- “참다운 민주와 자유를 위한 투쟁의 길에서”, 1983년 6월 15일, 연세대민주학우일동, 00840221
- “평화의 제전 올림픽에 보여진 미국의 모습”, 1988년 9월, 인권위원회, 00095140
- “평화의 제전 올림픽을 빙자한 폭력적 민중 생존권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1988년 8월 20일,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서울민족민주운동협의회준비위원회, 00837054
- “호소문[올림픽공원 및 재개발지역 오금동일대 철거에 대한 내용]”, 1986년 6월 21일, 오금동세입자일동, 00104315

## 5. 외교사료관 홈페이지 외교문서 원문 해제

(<http://diplomaticarchives.mofa.go.kr>, 검색일 2017. 12. 10)

- 외교부 동구과, 1985, “Ranke, Marian 세계올림픽 연합회(ANOC) 사무총장 방한, 1985.8.18-23”
- 외교부 문화과/동구과, 1986-87, “소련 올림픽위원회(NOC) 대표단 방한, 1986-87”
- 외교부 홍보문화과, 1982-85, “1988년도 서울올림픽대회 : UN 올림픽 보호결의안 추진, 1982-85”
- 외교부 홍보문화과, 1984, “1988년도 서울 올림픽대회 : 서한 및 기타, 1984”
- 외교부 홍보문화과, 1985, “1988 서울올림픽 미수교국 참가추진 - 소련, 1985”
- 외교부 홍보문화과/동구과, 1986, ANOC(세계올림픽연합회) 총회, 제5차. 서울, 1986.4.21-26., v.2 외교적 활용방안”

## 6. 일본어 문헌

- 『朝日新聞』, 『婦人公論』
- オリンピック東京大会組織委員会, 1966, 『第18回オリンピック競技大会: 公式報告書』
- 警視庁, 1964, 『オリンピック東京大会の警察記録』
- 東京都オリンピック準備局, 1961a, 『東京都オリンピック時報』, 4.
- 東京都オリンピック準備局, 1961b, 『東京都オリンピック時報』, 7.
- 東京都オリンピック準備局, 1962, 『オリンピック準備局事業概要』
- 東京都オリンピック準備局, 1963, 『オリンピック準備局事業概要』
- 東京都オリンピック準備局, 1964a, 『オリンピック準備局事業概要』



- 東京都 オリンピック準備局, 1964b, 『東京都オリンピック時報』, 21.  
 東京都, 1965, 『第18回オリンピック競技大会東京都報告書』  
 東京都, 1974, 『東京百年史 第6巻』  
 東京都, 1989, 『下水道東京百年史』  
 東京都新生活運動協会, 1962, 『東京の新生活運動』  
 東京都新生活運動協会, 1973, 『東京都新生活運動十五年のあゆみ』  
 □ 務省. 1925. 『第一回明治神宮競技大會報告書』

## 2 차 문헌

### 1. 한국어 문헌

- 강성주, 1988 년 9 월 7 일, “이종남 검찰청장, 전국 경찰에 올림픽대비 범죄단속 지시”, 『MBC 뉴스』,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88/1813553\\_19338.html](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88/1813553_19338.html) (검색일 2017. 10. 5)
- 강신표 외, 1988, 『올림픽과 동서남북 문화교류』, 한양대 민족학연구소.
- 강신표, 1991, “서울올림픽 개막식과 세계의 TV”, 『인간과 경험』, 3.
- \_\_\_\_\_, 1992, “세계올림픽 학술문화연구협의회 국제학술회의: 서울올림픽 학술 행사와 세계올림픽 학술문화연구협의회”, 『인간과 경험』, 4.
- \_\_\_\_\_, 1997, “서울올림픽과 바르셀로나올림픽 비교연구: 성화봉송과 TV 중계”, 『인제대학교 인문사회과학논총』, 4(1).
- 강원룡, 1994, “민족의 위대한 잠재능력”, 『서울올림픽의 묻혀진 이야기』, 고려서적.
- \_\_\_\_\_, 2003, 『역사의 언덕에서 - 4 미완성의 민주화』, 한길사.
- 강지용, 2006, “5공의 3S 정책, 스포츠로 지배하라”, 『우리들의 현대침묵사: 한국현대사 미스터리 추적』, 해냄.
- 강정인, 2009, 『한국 정치의 이념과 사상 - 보수주의·자유주의·민족주의·급진주의』, 후마니타스.
- \_\_\_\_\_, 2012, “박정희 대통령의 민족주의 담론: 민족과 국가의 강고한 결합에 기초한 반공·근대화 민족주의 담론”, 『사회과학연구』, 20(2).
- 강준만, 2003a, 『한국현대사산책 1980년대편 제 1권』, 인물과 사상사.
- \_\_\_\_\_, 2003b, 『한국현대사산책 1980년대편 제 2권』, 인물과 사상사.
- \_\_\_\_\_, 2003c, 『한국현대사산책 1980년대편 제 3권』, 인물과 사상사.
- \_\_\_\_\_, 2003d, 『한국현대사산책 1980년대편 제 4권』, 인물과 사상사.
- \_\_\_\_\_, 2007, 『한국대중매체사』, 인물과사상사.
- 강홍빈, 1988, “앞당겨지는 미래: 1988 서울올림픽 개최의 도시적 영향”, 『올림픽이 도시발전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미국 MIT건축도시학부 주최 학술회의.

- 고광현, 1988, 『스포츠와 정치』, 푸른나무.
- 고모리 요이치, 송태욱 역, 2002, 『포스트콜로니얼 : 식민지적 무의식과 식민주의적 의식』, 삼인.
- 곽영훈, 2002, “환경도시 서울을 꿈꾸며”, 『철학과 현실』, 54.
- 구광모, 1998,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목표와 특성 -80년대와 90년대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12.
- 구현우·우양호, 2012, “1950년대, 약탈국가론, 그리고 연속과 단절: 경제적 자원에 대한 국가의 통제권을 중심으로”, 『行政論叢』, 50(1).
- 국가기록원, 미상, “제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82-1986)”, 『기록으로 보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http://theme.archives.go.kr/next/economicDevelopment/fifth.do> (검색일 2017. 11. 30)
- 국립중앙도서관, 2016년 4월 25일, “시대별 여성의 변화, 잡지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웹진』, [http://wl.nl.go.kr/user/0041/nd87278.do?View&Q2=&Q=&pageST=SUBJECT&pageSV=&page=1&pageSC=SORT\\_ORDER&pageSO=DESC&dmlType=SELECT&boardNo=00004870&siteLink=&menuCode=www&zineInfoNo=0041](http://wl.nl.go.kr/user/0041/nd87278.do?View&Q2=&Q=&pageST=SUBJECT&pageSV=&page=1&pageSC=SORT_ORDER&pageSO=DESC&dmlType=SELECT&boardNo=00004870&siteLink=&menuCode=www&zineInfoNo=0041) (검색일 2017. 10. 10)
- 권보드레·천정환, 2012, 『1960년을 묻다 - 박정희 시대의 문화정치와 지성』, 천년의 상상.
- 권순영, 1964, “청소년문제와 사회정화 - 그들의 생활환경인 사회 전체가 먼저 정화되어야 한다”, 『청맥』, 1·2.
- 권오륜, 2004, “제3공화국과 김택수의 스포츠내셔널리즘”, 『움직임의 철학: 한국 체육철학회지』 12(2).
- 권태준, 1988, “주택정책의 불공평성 비판”, 『환경논총』, 23.
- 권태환·윤일성·장세훈 2006, 『한국의 도시화와 도시문제』, 도서출판 다해.
- 권혁주, 2007, “한국행정에서 사회적 평등과 발전: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1(3).
- 김경훈, 2000a, 『서울올림픽사 제 1권 - 서울올림픽 유치』, 국민체육진흥공단.
- \_\_\_\_\_, 2000b, 『서울올림픽사 제 2권 - 올림픽의 성과 (1)』, 국민체육진흥공단
- 김광익, 1992, “도시중산층의 종교생활”, 『도시중산층의 생활문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김광희, 2001, 『黎明: 조선체육회, 그 세월과의 싸움』, 국민체육진흥공단.
- 김근배, 2010, “생태적 약자에 드리운 인간권력의 자취 - 박정희 시대의 쥐잡기 운동”, 『사회와역사』, 87.
- 김도균, 2013a, 『한국의 자산기반 생활보장체계의 형성과 변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 \_\_\_\_\_, 2013b, “한국의 재분배 정치의 역사적 기원 - 박정희 시대의 조세정책과 저축장려 정책”, 『사회와역사』, 98.
- 김동노, 2010, “박정희 시대 전통의 재창조와 통치체제의 확립”, 『동방학지』, 150.
- 김동성, 1989, “한국 지식인과 대학생의 민족주의 의식구조”, 『한국정치학회보』, 23(1).
- 김동인, 2008, 『부랑인복지정책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동춘, 2000, 『근대의 그늘 - 한국의 근대성과 민족주의』, 당대.
- 김명권, 2013, “한국 엘리트스포츠의 요람: 태릉 선수촌(1966-8000)”, 『한국체육사학회지』, 18(2).
- 김명섭·양준석, 2014, “서울올림픽 유치의 정치외교사”, 『국제정치논총』, 54(4).
- 김명연, 2013, “형제복지원 사건과 국가책임”, 『형제복지원 사건 진실규명 및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 김미영, 2016, “호텔과 강남의 탄생”, 『서울학연구』 62.
- 김미희·노세희, 2011, “다가구매입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사회적배제 실태조사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2(5).
- 김민희, 2016년 6월 27일, “88올림픽 굴렁쇠 소년 탄생 비화”, 『주간 조선』,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02&nNewsNumb=002413100007> (검색일 2017. 10. 10)
- \_\_\_\_\_, 2016년 7월 11일, “88서울올림픽 (2) - 하늘과 땅을 이은 성화대 세계의 젊음을 이어준 오작교”, 『주간조선』,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01&nNewsNumb=002415100007> (검색일 2017. 10. 10).
- \_\_\_\_\_, 2016년 7월 25일, “88서울올림픽 3-‘손에 손잡고’ 탄생 비화”, 『주간조선』,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417100008&ctcd=C02> (검색일 2017. 10. 10)
- 김백영, 2009, “일제하 서울의 도시위생 문제와 공간정치 - 상하수도과 우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총』, 68.
- \_\_\_\_\_, 2017, “강남개발과 올림픽효과 - 1970~80년대 잠실 올림픽타운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도시연구』 17.
- 김병도·주영혁, 2006, 『한국 백화점 역사』,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병로, 2014, “통일환경과 통일담론의 지형 변화: 정부통일방안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26(1).
- 김보현, 2014, “민족주의 권력과 ‘협동하는 국민 - 박정희 정부 시기 농촌새마을운동의 사례’”, 『사학연구』, 116.
- \_\_\_\_\_, 2015, “박정희정권 시기 저항의 지식-담론, ‘민족경제론’: 그 위상과 의의, 한계”, 『상허학보』, 43.
- 김상운, 2016년 7월 20일, “올림픽 열 자리 만들자... 20년 앞 내다본 서울시장”,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sub/3/all/20160720/79285541/1> (검색일 2017. 7. 30)
- 김서령, 2006년 4월, “‘서울의 열개’ 디자인한 최초의 도시설계사 차일석박사”, 『신동아』, 2006년 4월호, <http://shindonga.donga.com/3/all/13/105311/2> (검색일 2017. 7. 30)
- 김선웅, 2015년 5월 8일, “도시의 계획 및 관리제도”, 『서울정책 아카이브』, <https://seoulsolution.kr/ko/content/%EB%8F%84%EC%8B%9C%EC%9D%98-%EA%B3%84%ED%9A%8D-%EB%B0%8F-%EA%B4%80%EB%A6%AC%EC%A0%9C%EB%8F%84> (검색일 2017. 11. 30)
- 김성국, 1992, “한국 자본주의 발전과 시민사회의 성격”,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한울.

- 김성윤, 2003, “대도시 속의 영구임대아파트 - 서울 가양동과 등촌동”, 『문화과학』 33.
- 김성진, 1994, “평화와 화해의 실천”, 『서울올림픽 문혀진 이야기』, 고려서적.
- 김소연, 2016, “응답하라 1988 - 투항하라, 쌍문-유토피아, 너희는 포위됐다!”, 『문학동네』, 23(1).
- 김수진, 2008, “전통의 창안과 여성의 국민화 - 신사임당을 중심으로”, 『사회와역사』, 80.
- \_\_\_\_\_, 2009, 『신여성, 근대의 과잉』, 소명출판.
- 김수현, 1996, 『한국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전개과정과 성격』,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 1998, “공공임대주택 정책과 재개발사업”, 『불량주택재개발론』, 나남.
- \_\_\_\_\_, 1999, “서울시 철거민운동사 연구 - 철거민의 입장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13.
- \_\_\_\_\_, 2000, “노점상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도시와빈곤』, 47.
- \_\_\_\_\_, 2010년 8월 27일, “'편등편등 노는' 부랑인? 그 오래된 부끄러운 역사”,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6644> (검색일 2017. 11. 22)
- 김순양, 2014, “고도경제성장기의 사회정책 형성체계 및 형성과정 분석 -1970년대 연금보험과 의료보험의 제도화과정 비교-”, 『한국정책학회보』, 23(3).
- \_\_\_\_\_, 2015, “발전국가의 이원적 노동통제정책 분석: 1961-1987년”, 『지방정부연구』, 18(4).
- 김아람, 2011, “5.16 군정기 사회정책 - 아동복지와 ‘부랑아’ 대책의 성격”, 『역사와현실』 82.
- \_\_\_\_\_, 2013, “1970년대 주택정책의 성격과 개발의 유산”, 『역사문제연구』, 29.
- \_\_\_\_\_, 2015, “가족이 짊어진 구호와 자활: 1950~60년대 합동결혼과 그 주인공”, 『역사문제연구』 33.
- 김영미, 2015, “전시하 오락문제와 후생운동의 전개”, 『한림일본학』, 26.
- 김영석, 1989, 『한국 사회성격과 도시빈민 운동』, 아침.
- 김영선, 2010, “발전국가 시기 작업장의 시간정치: 노동시간 및 자유시간에 대한 분석”, 『여가학연구』, 8(1).
- 김영인, 2016, “한국의 대공산권 수교에 있어 스포츠외교의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정치학회 60주년기념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 \_\_\_\_\_, 2017, “북방정책 실천전략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노태우 대통령의 서울올림픽조직위원장 경험을 중심으로”, 『통일연구』, 21(1).
- 김영찬, 2016, “응답하라 1988” 놀자, 놀자꾸나! ‘응답하라 1988’을 위한 뒤늦은 변명”, 『문학동네』, 23(1).
- 김예식, 2011년 6월 25일, “88서울올림픽유치의 단상(斷想)2-1”, 『김예식 블로그』, [http://blog.joins.com/media/folderListSlide.asp?uid=ysl37574&folder=22&list\\_id=12269862&page=1](http://blog.joins.com/media/folderListSlide.asp?uid=ysl37574&folder=22&list_id=12269862&page=1) (검색일 2017. 7. 14)
- 김용택, 1985, “팔유팔파”, 『창작과비평』, 15(3).
- 김운용, 1990, 『위대한 올림픽』, 동아출판사.
- \_\_\_\_\_, 2008년 10월 27일, “서울올림픽 유치(상)”,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

- com/article/3353425 (검색일 2017. 7. 20).
- \_\_\_\_\_, 2010년 4월 18일, “김운용이 만난 거인들 『15』 -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일요신문』, [http://ilyo.co.kr/?ac=print&entry\\_id=10507](http://ilyo.co.kr/?ac=print&entry_id=10507) (검색일 2017. 10. 4)
- 김 원, 2006, “부마항쟁과 도시하층민”, 『정신문화연구』, 29(2).
- \_\_\_\_\_, 2008, “1971년 광주대단지 사건 연구 - 도시봉기와 도시하층민”, 『기억과 전망』, 18.
- \_\_\_\_\_, 2012년 6월 15일, “운동으로서의 사회과학은 어떻게 되었나”,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6152027185&code=910000](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6152027185&code=910000) (검색일 2017. 12. 1)
- 김 원 외, 2017, 『민주노조, 노학연대 그리고 변혁 - 1980년대 노동운동의 역사』, 한국학중앙연구원.
- 김위정, 2004,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배제 연구” 『도시연구』, 9.
- 김윤철, 2012년 6월 18일, “NL-PD 해묵은 갈등이 결국 진보당 발목 잡았다”,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538271.html> (검색일 2017. 11월 10일)
- 김윤태, 2012, 『한국의 재벌과 발전국가: 고도성장과 독재, 지배계급의 형성』, 한울아카데미.
- 김은정·임태성, 1999, “스포츠이벤트가 무용문화변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올림픽을 중심으로”, 『한국체육학회지』, 38(3).
- 김은영, 2013, “이상백의 체육활동(2)”, 『움직임의 철학』, 21(4).
- 김은혜, 2010, “도쿄 도시레짐과 에다가와조선학교의 역사”, 『사회와역사』, 85.
- \_\_\_\_\_, 2016, “1964년 도쿄올림픽과 도시개조”, 『사회와역사』, 109.
- 김재완, 2015, “형제복지원 인권침해불법행위 사건의 책임, 기억 그리고 미래”, 『민주법학』, 57.
- 김재우, 2007, “세계한민족체육대회에 관한 역삿거 연구”, 『한국체육과학회지』, 16(2).
- \_\_\_\_\_, 2013a, “동경올림픽대회(1964) 남북단일팀 구성을 위한 제1차 홍콩 체육회담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과학회지』, 22(4).
- \_\_\_\_\_, 2013b, “1963년 로잔 남북체육 회담에 관한 역사적 연구”, 『한국체육과학회지』, 52(4).
- \_\_\_\_\_, 2013c, “1964년 동경올림픽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을 위한 제2차 홍콩 체육회담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과학회지』, 52(6).
- \_\_\_\_\_, 2014, “제35회 평양 세계탁수선수권대회(1979) 남북단일팀 구성을 위한 체육회담”, 『한국체육과학회지』, 53(6).
- 김재원, 2015, “1960년대 후반 서울시 주택정책과 ‘중산층’ 문제 인식”, 『한국사연구』, 175.
- 김정남, 2005, 『진실, 광장에 서다』, 창비.
- 김정미, 2009, “조선총독부 내무국 사회과의 교화 영화 정책 출현 배경에 관한 고찰”, 『한국문학연구』 37.
- \_\_\_\_\_, 미상, “우리에게 시간은 어떤 의미? 서머타임제”, 『국가기록원 - 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http://theme.archives.go.kr/next/koreaOfRecord/>

- summerTime.do (검색일 2017. 10. 11)
- 김중엽, 2005, “분단체제와 87년 체제”, 『창작과 비평』, 33(4).
- 김중태, 2013, “박정희 정부 시기 선진국 담론의 부상과 발전주의적 국가정체성의 형성”, 『한국사회학』, 47(1).
- \_\_\_\_\_, 2014, “한국 발전주의의 담론구조 - 근대화, 세계화, 선진화 담론의 비교”, 『경제와사회』, 103.
- \_\_\_\_\_, 2015, “발전시대 이전 발전담론의 위상 - 1950년대 대중매체의 발전, 문명 인식”, 『한국사회학』, 49(4).
- 김준엽, 1990, 『長征 : 金俊燁 現代史』, 나남.
- 김준희, 2011, “도시공간과 노점상의 권리에 관한 연구”, 『공간과 사회』, 21(2).
- 김중기, 1988년 3월 29일, “88년 서울대총학생회 후보 김중기 유세문”,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남측본부』, [http://www.tongil-i.net/bbs/bbs/board.php?bo\\_table=data1&wr\\_id=16](http://www.tongil-i.net/bbs/bbs/board.php?bo_table=data1&wr_id=16) (검색일 2017. 12. 10)
- 김지연, 2014, 『전두환 정부의 국풍81: 권위주의 정부의 문화적 자원동원 과정』, 이화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지영, 2011, 『피동형기자들』, 효형출판.
- 김지영·하용용, 2014, “프로야구의 프로메타우스, 롯데 자이언트 실업야구 팀”, 『한국체육사학회지』, 19(2).
- 김진욱, 2004, “한국 소득이전 제도의 소득불평등 및 빈곤감소 효과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20.
- 김진희·김기호, 2010, “1974년 잠실지구종합개발기본계획의 성격과 도시계획적 의미 연구”, 『도시설계』, 11(4).
- 김진희, 2011, 『서울 1960~70년대 도시계획에서 ‘잠실지구종합개발기본계획’의 의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창규, 2003년 10월 1일, “타오르는 활화산, 함석헌 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http://www.kdemo.or.kr/blog/people/post/608> (검색일 2017. 10. 5)
- 김철수, 2017년 2월 1일, “채외동포가 봉인가”, 『미주한국일보』 <http://dc.koreatimes.com/article/20170201/1037837> (검색일 2017. 9. 10)
- 김필동, 1994, “이상백(李相佰)의 생애와 사회학 사상”, 『韓國社會學』, 28(2).
- 김하기, 2004, 『부마민주항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김호기, 1999, “1970년대 후반기의 사회구조와 사회정책의 변화 ; 노동정책과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현대사의 재인식』, 백산서당.
- 김홍중, 2009, “마음의 사회학, 진정성의 기원과 구조”, 『한국사회학』, 43(5).
- \_\_\_\_\_, 2013, “사회로 변신한 신과 행위자의 가면을 쓴 메시아의 전투”, 『한국사회학』, 47(5).
- \_\_\_\_\_, 2016, 『사회학적 과상력』, 문학동네.
- 나인호, 2000, “산업화와 사회문제, 그리고 독일제국시대 시민적 사회개혁의 정치화”, 『역사와 실학』, 15·16.
- 남애리, 미상a, “야간통행금지와 해제”, 『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70년』, <http://theme.archives.go.kr/next/koreaOfRecord/curfew.do> (검색일 2017. 11. 20)
- \_\_\_\_\_, 미상b, “8만평 최대의 복합시설 -예술의전당”, 『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http://theme.archives.go.kr/next/koreaOfRecord/artsCenter.do> (검색

- 일 2017. 10. 23).
- 노태우, 1988년 10월 3일, “서울올림픽 개막에 즈음하여 국민께 드리는 감사말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연구원』, [http://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spMode=view&catid=c\\_pa02062&artid=1307336](http://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spMode=view&catid=c_pa02062&artid=1307336) (검색일 2017. 10. 14)
- \_\_\_\_\_, 1989년 9월 26일, “제70회 전국체육대회 및 세계한민족체육대회 연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연구원』, <http://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 (검색일 2017. 10. 15)
- \_\_\_\_\_, 2011, 『노태우 회고록 上卷 - 국가, 민주화, 나의 운명』, 조선뉴스프레스.
- 다나카 타쿠지, 박해남 역, 2014, 『빈곤과 공화국 - 사회적 연대의 탄생』, 문학동네.
- 대한뉴스, 1980년 5월 29일, “제 1284호 안정만이 살길”, <https://youtu.be/E-itJ1U-wLE> (검색일 2017. 9.2)
- \_\_\_\_\_, 1980년 6월 3일, “제 1285호 활기 되찾은 광주”, <https://youtu.be/hOw99hDtG6A> (검색일 2017. 9.2)
- 대한항공, 1991, 『대한항공20년사』, 대한항공.
- 도상윤, 2015, “1930년대 폭스바겐 공장의 건설과 민족공동체”, 『경주사학』, 39-40.
- 동용승, 2017, “서울올림픽 대응전략으로써의 13 차 세계청년학생축전”, 『13 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연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심포지움 자료집.
- 동즐로, 자끄, 주형일 역, 2005, 『사회보장의 발명 - 정치적 열정의 쇠퇴에 대한 시론』, 동문선
- 래가나, 로리타, 임영상·기종간 역, 1994, 『대학지성과 사회개혁운동 - 토인비홀의 이념적 기원과 발달』, 전예원.
- 류동주, 1988, :올림픽 시설의 의의와 개관”, 『서울올림픽 건축』. 한구건축가협회.
- \_\_\_\_\_, 2013, “경기장 건설과 해외벤치마킹”, 『임자, 올림픽 한번 해보지!』,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 마상윤·박원곤, 2009, “태탕트기의 한미갈등 - 닉슨, 카터와 박정희”, 『역사비평』, 2009년 봄호.
- 문철호, 1988년 8월 25일, “검찰의 올림픽 저해 사범 집중 단속 결과 저해 사범 감소”, 『MBC 뉴스』,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88/1813151\\_19338.html](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88/1813151_19338.html) (검색일 2017. 9. 14)
- 민범식, 2012, “60·70년대 주요조직 및 활동”, 『한국도시설계사 1960-2010년』, 보성각.
- 민유기, 2004, “프랑스 사회개혁 두뇌집단 뮤제 소시알 활동과 보수적 개혁 (1894-1914)”, 『역사학연구』, 23.
- 박경호·옥광·박정규, 2011, “한국 스포츠외교의 태동- 서울올림픽 유치의 유산”, 『체육사학회지』, 16(2).
- 박경호·옥광, 2016, “서울올림픽 개최 반대여론에 대한 사회문화적고찰”, 『체육사학회지』, 21(2).
- 박관민·송명규·이경진, 2009, “임대아파트 단지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실증연구: 용인시 동백지구를 사례로”, 『도시행정학보』, 22(3).

- 박근갑, 2008, “시민사회와 갈등의 정치 -독일제국 후반기 『사회개혁협회』와 사회민주주의 노동운동, 1901-1914”, 『서양사론』, 96.
- 박길성, 1999, “1960년대 인구사회학적 변화와 도시화”, 『1960년대 사회변화 연구: 1963-70』, 백산서당.
- 박명규, 2008, “한국 내셔널 담론의 의미구조와 정치 지향”, 『한국문화』, 41.
- \_\_\_\_\_, 2009a, 『국민, 인민, 시민: 개념사로 본 한국의 정치 주체』, 소화.
- \_\_\_\_\_, 2009b, “네이션과 민족: 개념사로 본 의미의 간격”, 『동방학지』, 147.
- 박명규·김백영, 2009, “식민 지배와 헤게모니 경쟁”, 『사회와역사』, 82.
- 박배균, 2012, “한국 지역균형정책에 대한 국가공간론적 해석”, 『기억과 전망』, 27.
- 박배균·장진범, 2016, “‘강남 만들기’, ‘강남 따라하기’와 한국의 도시 이데올로기”,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2(2).
- 박상훈, 2006, “한국의 87년 체제”, 『아세아연구』 49(2).
- 박선원, 2002, “냉전기 한일협력의 국제정치”, 『국제정치논총』 42(3).
- 박세직, 1990, 『하늘과 땅 동서가 하나로 - 서울올림픽, 우리들의 이야기』, 고려원.
- \_\_\_\_\_, 1991, 『서울올림픽 우리들의 이야기』 고려서적
- 박세훈, 2002, “구제(救濟)와 교화(教化) - 일제 시기 경성부의 방면 위원 제도 연구”, 『사회와역사』 61.
- 박영대, 2013, 『한국의 1980년대 초반 외채위기 극복요인에 관한 연구: '신냉전'의 영향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 논문.
- 박영한, 1990, 『우리는 중산층 1 - 장미 눈뜰 때』, 세계사.
- 박원곤, 2007, “카터 행정부의 도덕주의 외교와 한국정책: 1979년 카터 대통령 방한의 재해석”, 『미국학』, 30.
- 박원곤, 2009, “카터 행정부의 대한정책 - 10.26을 전후한 도덕외교의 적용”, 『한국정치학회보』, 43(2).
- 박인권, 2015, “포용도시”, 『공간과사회』, 25(1).
- 박인석, 2013, 『아파트 한국사회 - 단지 공화국에 갇힌 도시와 일상』, 현암사.
- 박정미, 2014a, “발전과 섹스 - 한국정부의 성매매관광정책, 1955-1988년”, 『한국사회학』, 48(1).
- \_\_\_\_\_, 2014b, “성 제국주의, 민족 전통, 그리고 ‘기생’의 침묵”, 『사회와역사』 101.
- 박정현, 2016, “독립기념관의 건립과정과 담론변화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25(6).
- 박정희, 1961(2005), “혁명과업 완수를 위한 지도자의 길”, 『나라가 위급할 때 어찌 목숨을 아끼리』, 동서문화사.
- \_\_\_\_\_, 1962(2005), “우리 민족의 나갈 길: 사회재건의 이념”, 『하면 된다! 떨쳐 일어나자』, 동서문화사.
- \_\_\_\_\_, 1966년 10월 10일, “제47회 전국체육대회 치사”, 『대통령기록연구실』, <http://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 (검색일 2017. 9. 1)
- \_\_\_\_\_, 1967년 5월 7일, “한국여자농구선수단 귀국환영대회 치사”, 『대통령기록연구실』, <http://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 (검색일 2017. 9. 1)
- \_\_\_\_\_, 1972년 5월 18일, “새마을 소득증대 촉진대회 치사”, 『대통령기록연구실』,



- <http://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 (검색일 2017. 8. 30)
- \_\_\_\_\_, 1972년 10월 6일, “제53회 전국체육대회 치사”, 『대통령기록연구실』, <http://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 (검색일 2017. 9. 1)
- \_\_\_\_\_, 1976년 10월 12일, “제57회 전국체육대회 대통령 치사”, 『대통령기록연구실』, <http://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 (검색일 2017. 9. 1)
- \_\_\_\_\_, 1978, 『민족 중흥의 길』, 광명출판사.
- 박지혁·황진태, 2016, “수성구는 어떻게 ‘대구의 강남’이 되었나?”, 『지역사회학』, 18(1).
- 박진민, 2006, 『백색국가 건설사』, 엘피.
- 박해광, 2010, “한국 시민사회의 참여정치 구조: 87체제의 시민사회”, 『민주주의와 인권』, 10(2).
- 박해남, 2015, “제국과 식민지 간 재현 경쟁의 장, 스포츠: 조선신궁체육대회와 메이지신궁체육대회를 중심으로”, 『한림일본학』, 26.
- \_\_\_\_\_, 2016, “1988 서울올림픽과 시선의 사회정치”, 『사회와역사』, 110.
- 박호근, 2005, “5·16 군사정부의 교육정책과 결정유형”, 『교육정치학연구』, 12(2).
- 박호성, 2005, “1980년대 한국 민주주의의 전개”, 『1980년대 한국사회연구』, 백산서당.
- 박흥근, 2015, “사회적 배제의 형성과 변화 - 념마주이 국가동원의 역사를 중심으로”, 『사회와역사』, 108.
- 박희범, 1966, “중산층육성론에 관한 재론: 임종철교수 소론에 부친다”, 『청맥』, 3·4.
- 발리바르, 에티엔, 진태원 역, 2011, 『정치체에 대한 권리』, 후마니타스.
- 백승욱·이지원, 2015, “1960년대 발전담론과 사회개발 정책의 형성”, 『사회와역사』, 107.
- 백종국, 1993, “한국의 국가, 시민사회, 그리고 지배연합의 변동”, 『한국 정치·사회의 새흐름』,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변성호, 2013, “구한말 운동회의 정치적 성격에 대한 고찰”, 『정신문화연구』, 36(1).
- 서수진·김주진·정경일, “임대주택단지의 사회통합적 계획을 위한 사회적 배제 실태 조사연구”, 『공간과사회』, 2004.
- 서여림·김기호, 2016, “1960년대 이후 도시기본계획이 서울 도시공간구조 변화에 미친 영향 - ‘다핵도심구상’의 실천을 중심으로”, 『도시설계』, 17(3).
- 서완석, 2014년 5월 15일, “카타리나 비트의 한국 방문”,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8322573&code=11171383> (검색일 2017. 10. 3)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형제복지원 연구팀, 2017, “자료와 증언의 교차로 본 형제복지원”,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형제복지원 사건’ 토론회 자료집』.
- 서종균·고은아·박세훈 외, 1993, “주택문제와 주택의 정치학”, 『서울연구: 유연적 산업화와 새로운 도시·사회·정치』, 한울아카데미.
- 서종균, 1997, “영구임대주택, 분리와 배제의 공간”, 『도시와빈곤』, 29.
- 서중석, 1994, “민주당·민주당정부의 정치이념”, 『한국정치의 지배이데올로기와 대항이데올로기』, 역사비평사.

- 설정덕·김재우, 2011, “박정희 정권의 국민체육심의위원회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체육학회지』, 16(3).
- 성경룡, 1991, “한국의 정치체제변동과 사회정책의 변화 : 정치사회학적 분석”, 『사회복지연구』, 3.
- \_\_\_\_\_, 1993, “한국 정치민주화의 사회적 기원: 사회운동론적 접근”, 『한국 정치·사회의 새흐름』,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소현숙, 2007, “경계에 선 고아들 - 고아문제를 통해 본 일제시기 사회사업”, 『사회와역사』, 73.
- 손정목, 2003a, 『서울도시계획이야기 2』, 한울.
- \_\_\_\_\_, 2003b, 『서울도시계획이야기 3』, 한울.
- \_\_\_\_\_, 2003c, 『서울도시계획이야기 5』, 한울.
- 손호철, 2009, “한국체제논쟁을 다시 생각한다: 87년체제, 97년체제, 08년 체제론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25(2).
- 손환·정승삼, 2001, “상백 이상백이 한국 근대 스포츠 형성에 미친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40(1)
- 송혜자, 2007, “영구임대주택정책의 불평등과 임대주택주민에 대한 사회적배제 문제”, 『우암논총』, 29.
- 송호근, 1994, 『열린 시장, 닫힌 정치 - 한국의 민주화와 노동체제』, 나남
- 송호정, 2016, “최근 한국상고사 논쟁의 본질과 그 대응”, 『역사와 현실』, 100.
- 쇼르스케, 칼, 김병화 역, 2014, 『세기말 빈』, 글항아리.
- 스미트, 바바라, 김하락 역, 2008, 『운동화 전쟁』, 랜덤하우스.
- 시라하타 요자부로, 이태문 역, 2007, “후쿠자와 유키치의 운동회 - 근대 스포츠와 일본인의 신체관”, 『운동회 - 근대의 신체』, 논형.
- 신명훈, 2015, “독일 복지국가 담론의 역사: 나치의 민족공동체 이데올로기와 사회정책”, 『독일연구』, 29.
- 신용하, 1966, “독점의 형성과 중소기업의 위치”, 『정경연구』, 2(6).
- 신종대, 2013, “서울의 환호, 평양의 좌절과 대처: 서울올림픽과 남북관계”, 『동서연구』, 25(3).
- 신현방, 2016, “발전주의 도시화와 젠트리피케이션, 그리고 저항의 연대”, 『공간과 사회』, 26(3)
- 심상용, 2010, “한국 발전주의 복지체제 형성 연구: 억압적 발전주의 생산레짐과 비공식 보장의 복지체계”, 『사회복지정책』, 37(4).
- 심슨, 바이브 & 앤드류 제닝스, 오근영 외 역, 1992, 『올림픽의 귀족들』, 나라출판사.
- 심은정, 2014, “제5공화국 시기 프로야구 정책과 국민여가”, 『역사연구』, 26.
- 안정옥, 2013, “폴라니의 《대전환》에서 사회적인 것의 개념적 제약”, 『사회와역사』, 100.
- 안창모, 2006, “세계로 열린 창 - 올림픽과 도시·건축의 변화”, 『建築士』, 449.
- 양은희, 2007, “기억, 욕망 그리고 스펙터클: 국립현대미술관 만들기”, 『현대미술사연구』, 22.
- 양재진, 2004, “한국의 산업화시기 숙련형성과 복지제도의 기원”, 『한국정치학회보』, 38(5).

- \_\_\_\_\_, 2008, “한국 복지정책 60년: 발전주의 복지체제의 형성과 전환의 필요성”, 『한국행정학보』, 42(2).
- \_\_\_\_\_, 2012, “산업화 시기 박정희 정부의 수출 진흥 전략: 수출 진흥과 규율의 정치경제학”, 『동서연구』, 24(3).
- 엘리아스, 노르베르트, 1996, 『문명화과정』, 한길사.
- 앵겔스, 프리드리히, 박준식·전병유·조효래 역, 1988, 『영국 노동자계급의 상태』, 세계.
- 여현덕, 1998, “1960년대의 사회환경과 사회운동”, 『1960년대의 전환적 상황과 장면정권』, 오름.
-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2013, 『한국대통령 통치구술사료집. 2: 전두환 대통령』, 선인.
- 연합뉴스, 2017년 4월 11일, “5공 정부, 88올림픽 앞두고 'KAL기 피격사건' 수위조절”,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07/0200000000AKR20170407159000014.HTML> (검색일 2017. 10. 3)
- 오구라 카즈오, 조진구·김영근 역, 2015, 『한일경제협력자금 100억달러의 비밀』, 디오네.
- 오자은, 2012, “1980년대 박완서 단편 소설에 나타난 중산층의 존재방식과 윤리”, 『민족문학사연구』, 50.
- \_\_\_\_\_, 2017,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중산층의 정체성 형상화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 오제연, 2007, “1960년대 초 박정희 정권과 학생들의 민족주의 분화 - 민족적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 16.
- 요시미 순야, 이태문 역, 2004, 『박람회: 근대의 시선』, 논형.
- 우규승, 1988, “1988올림픽선수기자촌 설계”, 『플러스』, 17.
- 우명숙, 2007, “한국의 복지제도 발전에서 산재보험 도입의 의의 - 복지제도 형성과 발전주의적 국가개입”, 『한국사회학』, 41(3).
- 유선영, 2011, “식민지의 스티그마 정치 - 식민화 초기 부랑자표상의 현실효과”, 『사회와역사』, 89.
- 유춘자, 1988, “88 서울올림픽에 바란다”, 『기독교사상』, 32(6).
- 유혜진, 천혜정, 2014, “서울올림픽기념관이 재현하는 서울올림픽 공식기억”, 『이화여대 사회과학연구논총』, 30(1).
- 윤득현, 2009, 『올림픽의 정치』, 레인보우북스.
- 윤상길, 2013, 「상상된 아시아의 화합축제, 극동올림픽: 극동올림픽 관련 스포츠이벤트에 대한 조선인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47, p. 493.
- 윤상우, 2005, 『동아시아 발전의 사회학』, 나남.
- \_\_\_\_\_, 2008, “민주화 이후의 사회정책과 복지국가 평가: 사회적 시민권의 관점에서”,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 16(1).
- 윤상철, 1997, 『1980년대 한국의 민주화 이행과정』, 서울대학교 출판부.
- \_\_\_\_\_, 2005, “87년 체제의 정치지형과 과제”, 『창작과 비평』, 33(4).
- 윤일성, 2001, “서울시 도심재개발 30년: 특성과 전개과정”, 『사회조사연구』, 16(1).
- 윤충로, 2011, “구술을 통해본 1970년대 새마을운동 - 새마을지도자 ‘만들기’와 ‘되기’ 사이에서”, 『사회와역사』, 90.

- \_\_\_\_\_, 2016, “새마을 운동 이후의 새마을운동 - 1980년대를 중심으로”, 『사회와역사』, 109.
- \_\_\_\_\_, 2017, “박정희 이후 새마을운동의 정치적 재구성과 사회적 재생산”, 『경제와사회』, 113.
- 윤홍길, 1989, 『말로만 중산층』, 청한.
- 이강우, 1994, 『한국 스포츠의 지배이데올로기적 기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_\_\_\_\_, 1997, “한국사회의 스포츠이데올로기에 관한 연구 (1) - 군사정권기의 스포츠 이념을 중심으로”, 『한국체육학회지』, 36(1).
- 이건호, 2012, “도시설계 제도의 도입”, 『한국도시설계사 1960-2010년』, 보성각.
- 이규환, 1999, 『한국도시행정론』, 법문사.
- 이기봉, 2002, “서울올림픽이 한국 미용계에 미친 영향”,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지』, 3(1).
- 이리에 가쓰미, 이태문 역, 2007, 「근대천황제와 메이지신궁경기대회」, 『운동회-근대의 신체』, p. 25.
- 이문우, 1988, “올림픽 이후”, 『새가정』, 1988년 10월호.
- 이민수, 2014, “1980년대 한국화의 상황과 갈등: 미술의 세계화 맥락에서 한국화의 현대성 논의를 중심으로”, 『미술사논단』, 39.
- 이대환, 2014년 10월 22일, “박정희가 박태준에게 내린 특명: 김기수의 주먹으로 세계를 제패하라”, 『프리미엄 조선』,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0/21/2014102101505.html?Dep0=twitter](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0/21/2014102101505.html?Dep0=twitter) (검색일 2017. 6. 22)
- 이동배·김용하, 1991, “신도시 개발의 전개과정과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7(3).
- 이방원, 1989, 『서울 꼬레아』, 행림출판.
- 이병철·박양수, 1990, “한국 대학생의 학생운동 이념 변천에 관한 정책 연구”, 『울산대학교 연구논문집』, 2.
- 이상록, 2006, “박정희 체제의 ‘사회정화’ 담론과 청년문화”, 장문석·이상록 엮음, 『근대의 경계에서 독재를 읽다 - 대중독재와 박정희 체제』, 그린비.
- 이선명, 1988년 7월 11일, “올림픽 대비 경찰 범죄소탕 70일 작전 중간 점검”, 『MBC뉴스』,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88/1811582\\_19338.html](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88/1811582_19338.html) (검색일 2017. 10. 10)
- 이소영, 2016, “건전사회와 그 적들: 1960~80년대 부랑인 단속의 생명정치”, 『법과사회』, 51.
- 이소정, 2006, “판자촌에서 쪽방까지 - 우리나라 빈곤층 주거지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29.
- 이수인, 2008, “1970~80년대 민주화운동의 사상과 이념: 1980년대 학생운동의 민족주의 담론”, 『기억과 전망』, 18.
- 이시다 다케시, 한영혜 역, 2003, 『일본의 사회과학』, 소하.
- 이시형, 1982, 『배짱으로 삼시다』, 집현전.
- \_\_\_\_\_, 1983, 『자신있게 사는 여성』, 집현전.
- 이완범, 2005, “박정희정부의 교체와 미국, 1979-1980”, 『1980년대 한국사회연구』,

백산서당.

- 이영미, 1995, “가요로 본 해방 50년”, 『역사비평』, 31.
- 이영민, 2008, “서울 강남 정체성의 관계적 재구성 과정 연구: 지역 구성원들의 내부적 범주화를 중심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1(3).
- 이영아, 2015, “한국의 빈곤층 밀집 지역 분포 및 형성 과정 고찰”,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8(1).
- 이영환, 1994, “영구임대주택정책 형성과정 연구”, 『사회복지연구』, 5(1).
- \_\_\_\_\_, 1995, 『영구임대주택의 정책결정과정』,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 논문.
- \_\_\_\_\_, 1996, “영구임대주택의 정책결정과정”, 『주택연구』, 4(1).
- 이용기, 2012, “유신이념의 실천도장, 1970년대 새마을운동”, 『내일을 여는 역사』, 48.
- 이유나, 2010, “88선언 전후시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통일운동과 제 세력의 통일운동 전개”, 『한국기독교와 역사』, 32.
- 이윤근·김명수, 1990, “서울올림픽이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에 미친 영향”, 『한국교육문제연구』, 6.
- 이정은, 2013, “근대도시의 소외된 사람들 - 소수자 인권의 사회사”, 『도시연구』, 10.
- 이종원, 2005, “1960-70년대 엘리트스포츠 정책의 가치 지향에 관한 사회사적 고찰”, 『한국체육학회지』, 44(5).
- 이창동, 1992, 『녹천에는 똥이 많다』, 문학과 지성사.
- 이창언, 2009, 『한국학생운동의 급진화에 관한 연구: 1980년대 급진이념의 형성과 분화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 이학래, 2003, 『한국체육사연구』, 국학자료원
- 이학래·김종희, 1999, “박정희 정권의 정치이념과 스포츠 내셔널리즘”, 『한국체육학회지』, 38(1).
- 이혁재, 2011년 3월 18일, “평창 올림픽 지지율 93%로 압도적”,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3/17/2011031702641.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3/17/2011031702641.html) (검색일 2016. 11. 9)
- 이현우·김재우, 2014, “1964년 동경올림픽대회 남북한 참가 결정과정에 관한 역사적 연구”, 『한국체육과학회지』, 23(1)
- 이희영·정철희·신진욱 외, 2007, 『상징에서 동원으로 -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문화적 동학』, 이학사.
-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 1989, 『87·88년 정치위기와 노동운동』, 거름.
- 임동근, 2015, 『메트로폴리스 서울의 탄생』, 반비
- 임동우, 2011, 『평양, 그리고 평양 이후 : 평양 도시공간에 대한 또다른 시각 1953-2011』, 효형출판.
- 임태성, 1993, 『서울올림픽이 한국의 사회변동에 미친 영향: 실증적 분석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체육학과 박사학위 논문.
- 임현진·김병국, 1991, “노동의 좌절, 배반된 민주화 - 국가, 자본, 노동관계의 한국적 현실”, 『계간 사상』, 11.
- 장경근, 2006, 『정부와 국민운동과의 관계 분석을 통한 한국 시민사회의 발전 방안

- 모색: 새마을운동에서 제2의 건국운동까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세훈, 1988, “도시화, 국가 그리고 도시 빈민: 서울시의 무허가 정착지 철거 정비정책을 중심으로”, 『사회와역사』, 14.
- \_\_\_\_\_, 1994, “불량 주택 재개발정책의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사회와역사』, 43.
- \_\_\_\_\_, 1998, “도시화, 국가, 그리고 도시빈민: 서울시의 무허가정착지 철거·정비정책을 중심으로”, 『불량주택 재개발론』, 나남.
- \_\_\_\_\_, 2017, “중산층 프로젝트로서 ‘분당 만들기’ - 분당 신도시 조성의 사회학적 해석”, 『지역사회학』, 18(1).
- 재일동포모국공적조사위원회, 2008, 『모국을 향한 재일동포의 100년 족적』, 재외동포재단.
- 전광희, 1999, “1970년대 전반기의 사회구조와 사회정책의 변화”, 『1970년대 전반기의 정치사회변동』, 백산서당.
- 전두환, 1980년 6월 5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분과위원장 및 위원에 대한 훈시”, 『대통령기록연구실』, [http:// 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http://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 (검색일 2017. 9. 2)
- \_\_\_\_\_, 1980년 8월 11일, “문화방송·경향신문 사장과의 특별회견”, 『대통령기록연구실』, [http:// 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http://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 (검색일 2017. 9. 2)
- \_\_\_\_\_, 1981년 10월 3일, “제4313주년 개천절 경축사”, 『대통령기록연구실』, [http://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spMode=view&catid=c\\_pa02062&artid=1306850](http://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spMode=view&catid=c_pa02062&artid=1306850) (검색일 2017. 10. 18)
- \_\_\_\_\_, 1981년 11월 30일, “사회정화 국민운동 전국대회 유시”, 『대통령기록연구실』, [http:// 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http://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 (검색일 2017. 9. 2)
- \_\_\_\_\_, 1982년 1월 22일, “1982년도 국정연설”, 『대통령기록연구실』, <http://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 (검색일 2017. 9. 2)
- \_\_\_\_\_, 1982년 8월 27일, “라스팔마스 거주 교민을 위한 리셉션 격려사”, 『대통령기록연구실』, [http://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spMode=view&catid=c\\_pa02062&artid=1306931](http://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spMode=view&catid=c_pa02062&artid=1306931) (검색일 2017. 10. 18)
- \_\_\_\_\_, 1983년 3월 1일, “제64주년 3·1절 기념사”, 『대통령기록연구실』, [http://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spMode=view&catid=c\\_pa02062&artid=1306985](http://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spMode=view&catid=c_pa02062&artid=1306985) (검색일 2017. 10. 18)
- \_\_\_\_\_, 2017a, 『전두환회고록 1 - 혼돈의 시대』, 자작나무숲.
- \_\_\_\_\_, 2017b, 『전두환 회고록 2 - 청와대 시절』, 자작나무숲.
- 전문환, 2017, “민주화운동 맥락에서의 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학생과 시민사회의 대응”, 『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연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심포지움 자료집.
- 전상인, 2009, 『아파트에 미치다- 현대한구의 주거사회학』, 이숲.
- 전완길 외, 1995, 『한국인의 생활양식 100년』, 장원.
- 전윤수·주동진, 2005, “박정희 정권의 민족주의 체육정책 담론”, 『한국체육과학회지』, 14(1).

- 전재호, 2000, 『반동적 근대주의자 박정희』, 책세상.
- 전재호, 2010, “5.16 군사정부의 사회개혁정책: 농어촌고리채정리사업과 재건국민운동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4(2).
- 정근식, 2007, “광주민중항쟁에서의 저항의 상징 다시 읽기 -시민적 공화주의를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 16.
- \_\_\_\_\_, 2011, “식민지 위생경찰의 형성과 변화, 그리고 유산 - 식민지 통치성의 시각에서”, 『사회와역사』, 90.
- 정동구·최석주, 2005, “이상백의 스포츠외교 및 체육사상”, 『체육사학회지』, 10(2).
- 정동익, 1985, 『도시빈민연구』, 아침.
- 정무권, 2007, “한국 발전주의 생산레짐과 복지체제의 형성”, 『한국사회정책』, 14.
- 정무용, 2017, “1960~70년대 증대하는 유동성과 불안, 그리고 위험 관리로서의 사회개발”, 『역사문제연구』, 37.
- 정상천, 2013, “임자! 올림픽 한 번 해보지!”, 『서울역사 구술자료집 5 - 임자! 올림픽 한 번 해보지!』,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 정선기, 2011, 『문화사회학 - 가치의 제도화와 생활양식』,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 정수남, 2015, “1960년대 부랑인 통치방식과 사회적 신체 만들기”, 『민주주의와 인권』, 15(3).
- 정수복, 2016, “이상백과 한국사회학의 성립”, 『韓國社會學』, 50(2)
- 정승국, 2005, “여가없는 노동? 1970년대 자동차 기업의 노동자 생활”, 『경제와 사회』, 68.
- 정영국, 1993, “한국의 국가-사회 관계변화와 정치체제 변동”, 『한국 정치·사회의 새흐름』,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정영환·이호근·신현규, 2009, “박정희 정권의 스포츠정책 다시보기”,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5.
- 정우열·손능수, 2008,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적 변천과정에 대한 연구: 조선구호령 제정 이후의 구빈행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사학지』, 22.
- 정윤태, 1996, “분당, 최고의 소비도시 건설 계획의 전모”, 『사회평론』, 92(4).
- 정일준, 2009, “한미관계의 역사사회학: 국제관계, 국가정체성, 국가프로젝트”, 『사회와역사』, 84.
- 정일준, 2010, “통치성을 통해 본 한국 현대사: 87년체제론 비판과 한국의 사회구성성찰”,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17.
- 정재신, 1992, 『서울올림픽 성화봉송단 연구』,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 정주영, 1998, 『이 땅에 태어나서 - 나의 살아 온 이야기』, 솔출판사.
- 정준영, 2002, “거대 스포츠행사가 남기는 것”, 『창작과비평』 30(4).
- \_\_\_\_\_, 2003, 『열광하는 스포츠 은폐된 이데올로기』, 책세상.
- \_\_\_\_\_, 2007, “스포츠공화국의 귀환 - 1987년 6월항쟁과 스포츠”, 『역사비평』, 78.
- \_\_\_\_\_, 2009, “근대 민족국가 형성과 스포츠”, 『사회와역사』, 84.
- \_\_\_\_\_, 2011,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스포츠열풍과 한국사회”, 『정신문화연구』 34(3).
- 정진건, 2015년 4월 3일, “건축인생 50년 맞은 김원 건축환경연구소 광장 대표”, 『MK News』, <http://news.mk.co.kr/newsRead.php?no=318272&year=201>

- 5 (검색일 2017. 10. 30)
- 정해구, 2011, 『전두환과 80년대 민주화운동: `서울의 봄`에서 군사정권의 종말까지』, 역사비평사.
- 정혜정, 2007, “일제의 감화교육에 나타난 근대교육의 성격 - 일본과 식민지 조선의 감화원 설립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 29(1).
- 정희준, 2009, 『스포츠코리아 판타지 - 스포츠로 읽는 한국 사회문화사』, 개마고원.
- 조동엽, 1988년 4월 6일, “서울대 총학생회 발대식 및 북한의 지지 대자보”, 『MBC News』,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88/1808297\\_19338.html](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88/1808297_19338.html) (검색일 2017. 12. 11)
- 조명래, 1993, “분당신도시의 사회경제적 배경”, 『18C신도시&20C신도시』, 발언.
- 조복조, 1988년 9월, “올림픽평화구역내집회·시위금지”, 『법제』, <http://www.moleg.go.kr/knowledge/publication/monthlyPublicationSrch?mpbLegPstSeq=127814> (검색일 2017. 10. 11)
- 조선일보, 1998년 7월 22일, “한국50년 걸작건축물 20선”, 『조선일보』, <http://m.chosun.com/svc/article.test.html?sname=news&contid=1998072270413> (검색일 2017. 10. 20)
- 조선일보사, 1990, 『조선일보 칠십년사 3』, 조선일보사.
- 조성룡, 2015년 3월, “잠실의 탄생과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웹진 民研』 47, [http://rikszine.korea.ac.kr/front/article/humanList.minyeon?selectArticle\\_id=568](http://rikszine.korea.ac.kr/front/article/humanList.minyeon?selectArticle_id=568) (검색일. 2017. 10. 20)
- 조영재, 2008, “한국복지정책과정의 특성에 관한 연구 - 의료보험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2(1).
- 조은·조옥라, 1992, 『도시빈민의 삶과 공간 - 사당동 재개발지역 현장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조재기, 1987, “모스크바와 L.A.올림픽 보이코트를 통해본 올림픽과 政治”, 『스포츠科學研究論文集』 5.
- 조현철, 2006, 『남북스포츠교류의 전개에 관한 사적 연구』, 중앙대학교 체육학과 박사학위 논문.
- 조형근, 2009, “일제의 공식의료와 개신교 선교의료간 헤게모니 경쟁과 그 사회적 효과”, 『사회와역사』 82.
- 조흥식, 1999, “70, 80년대 산업화와 빈민”, 『역사비평』, 46.
- 조희연, 1998, 『한국의 국가·민주주의·정치변동』, 당대.
- \_\_\_\_\_, 2001, “동아시아의 자본주의 발전과 국가변화: 남한과 대만을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15.
- \_\_\_\_\_, 2002, “발전국가의 변화와 국가-시민사회, 사회운동의 변화”, 『사회와 철학』, 4.
- \_\_\_\_\_, 2003, “정치사회적 담론의 구조변화와 민주주의의 동학”,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의 동학』, 함께읽는책.
- \_\_\_\_\_, 2007, 『박정희와 개발독재시대: 5.16에서 10.26까지』, 역사비평사.
- \_\_\_\_\_, 2010, 『동원된 근대화: 박정희 개발동원체제의 정치사회적 이중성』, 후마니타스.
- 존 어리, 강현수·이희상 역, 2014, 『모빌리티』, 아카넷.



- 주은우, 2003, “미국, 그 (큰)타자의 응시”, 『문학동네』, 36.
- \_\_\_\_\_, 2014, “금지의 명령에서 향유의 명령으로: 자본주의와 한국사회 문화변동에 대한 해석적 시론”, 『한국사회학』 48(5).
- 주태산, 1998, 『경제 못살리면 감방간데이: 한국의 경제부총리 그 인물과 정책』, 중앙M&B.
- 줄레조, 발레리, 길혜연 역, 2007, 『아파트 공화국』, 후마니타스.
- 지주형, 2011,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 책세상.
- \_\_\_\_\_, 2016, “강남개발과 강남적 도시성의 형성”,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2(2).
- 진중현, 2013, “재현 혹은 실천으로서의 경관 - ‘보는 방식’으로서의 경관 이론과 그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48(4).
- 진희선·송재룡, 2013, “칼 폴라니의 ‘전환적’ 사회경제 사상에 대한 고찰”, 『사회사상과 문화』, 28.
- 천정환, 2010, 『조선의 사나이거든 풋뿔을 차라 - 스포츠민족주의와 식민지근대』, 푸른역사.
- \_\_\_\_\_, 2016, ““응답하라 1988’에 나타난 ‘역사’와 유토피스틱스”, 『역사비평』, 제 114권.
- 최광승, 2014, “유신체제기 박정희 정권의 애국적 국민 생산 프로젝트”, 『한국학연구』, 33.
- 최근배, 2010, “생태적 약자에 드리운 인간권력의 자취 - 박정희시대의 쥐잡기 운동”, 『사회와역사』, 87.
- 최만립, 2010, 『도전은 끝나지 않았다 - 한국 스포츠외교의 산증인 최만립이 전하는 30년 스포츠외교실록』, 생각의나무.
- 최상오, 2008, “대기업 성장과 정부-기업관계”, 『역사비평』, 84.
- 최성각, 1990, “축제의 밤”, 『그림 없는 그림책』, 웅진출판.
- 최연식, 2007, “박정희의 ‘민족’ 창조와 동원된 국민통합”,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8(2).
- 최인기, 2012, 『가난의 시대 - 대한민국의 도시빈민은 어떻게 살았는가?』, 동녘.
- 최인이, 2011, “근대적 시간관념과 이윤개념의 내면화 - 새마을부녀지도자의 노동활동 경험을 중심으로”, 『사회와역사』, 90.
- 최재인, 2007, “19세기 후반 중산층의 위신의 정치 - 워싱턴 시의 노예해방 기념행사를 중심으로”, 『미국학논집』, 39(2).
- 최흥희·김재우, 2011, “1980년대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과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체육학회지』 46(1).
- 파운드, 리차드 W., 최보은 『FIVE RINGS OVER KOREA - 88 서울올림픽 그 성공 비화』, 예음.
- 페리, 클라렌스, 이용근 역, 2014, 『근린주구론, 도시는 어떻게 오늘의 도시가 되었나?』, 커뮤니케이션 북스.
- 편집실, 1989, “이것이 평양축전이다”, 『통일한국』, 1989년 7월호.
- 푸코, 미셸, 이규현 역, 2012a, 『말과 사물』, 민음사.
- \_\_\_\_\_, 오토르망 역, 2012b, 『안전.영토.인구』, 난장.
- \_\_\_\_\_, 오토르망 역, 2012c,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난장.
- \_\_\_\_\_, 오생근 역, 2016, 『감시와 처벌: 감옥의 탄생』, 나남.

- 하그로브, 준, 양희영 역, 2010, “파리의 기념상들”, 피에르 노라 편, 『기억의 장소 2 - 민족』, 나남.
- 하남직, 2012년 8월 12일, “메달리스트 병역면제 과거와 현재는...”, JTBC 뉴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Print.aspx?news\\_id=NB10151977](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Print.aspx?news_id=NB10151977) (검색일 2017. 10. 8)
- 하비, 데이비드, 초의수 역, 1996, 『도시의 정치경제학』, 한울.
- 하성규, 1995, 『주택정책론』, 박영사.
- \_\_\_\_\_, 2007, 『한국인의 주거빈곤과 공공주택』, 집문당.
- 하영준, 2011, “크레올 민족주의와 서인도 문화정치”, 『역사와문화』, 21.
- 하운해, 2016년 7월 6일, “미국·소련 맞붙은 농구 준결승전… 韓 국민들 소련 열렬히 응원”,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79177&code=11141100&cp=du> (검색일 2017. 12. 23)
- 한국개발연구원, 1989, 『서울올림픽의 의의와 성과』, 한국개발연구원
- 한국경제, 1989년 12월 15일,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추이”, 『한국경제』, <http://news.hankyung.com/article/1989121501111>, (검색일 2017. 10. 21)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987, 『당신들의 축제 - 88올림픽과 독재정권』, 민중사.
- 한국방송사업단, 1986, 『동해물과 백두산이: 86 아시아경기대회 금메달리스트들의 수기』, KBS.
- \_\_\_\_\_, 1988,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KBS.
- 한국여가문화지도자협회, 미상, “설립동기”, 『한국여가문화지도자협회 홈페이지』, [http://rec1966.or.kr/bbs/content.php?co\\_id=rec1\\_2](http://rec1966.or.kr/bbs/content.php?co_id=rec1_2) (검색일 2017. 9. 21)
- 한귀영, 1997, “근대적 사회사업과 권력의 시선”, 김진균·정근식 편저,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 문화과학사.
- 한상봉, 2011년 5월 15일, “그리운 조성만, 이 오월에 부활하는가”, 『가톨릭 뉴스 지금 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87> (검색일 2017. 12. 11)
- 한상진, 1987, «한국 중산층의 개념화를 위한 시도: 중산층의 규모와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학』 21(2).
- \_\_\_\_\_, 1989, «도시빈민의 주택 문제», 『사회와역사』, 16.
- \_\_\_\_\_, 1992, « 서울 대도시권 신도시 개발의 성격 », 『한국의 지역문제와 노동계급』, 문학과지성사.
- 한영혜, 1996, “이상백(李相佰)과 근대체육(近代體育): 식민지 시대 지식인의 자아실현과 민족아이덴티티: 일본에서의 체육활동을 중심으로”, 『翰林日本學』, 1.
- \_\_\_\_\_, 1998, “일본의 내셔널 아이덴티티와 전후 민주주의의 이중성 - 강상중·윤건차에 대한 비판적 고찰”, 『역사비평』 44.
- 한완상·권태환·홍두승, 1987, 『한국의 중산층』, 한국일보사.
- 한중수 외, 2016, 『강남의 탄생 - 대한민국의 심장도시는 어떻게 태어났는가?』, 미지북스.
- 한홍구, 2010, 『지금 이 순간의 역사』, 한겨레.
- 허문영, 2015년 11월 25일, “남북체육실무자회담”, 『국가기록원 기록정보 콘텐츠』,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10085> (검색일 2017. 10. 10)

- 허 은, 2003, “5.16 군정기 재건국민운동의 성격”, 『역사문제연구』 111.
- \_\_\_\_\_, 2010, “박정희 정권 하 사회개발 전략과 쟁점”, 『한국사학보』, 38.
- 허진석, 2010, 『스포츠공화국의 탄생 - 제3공화국 스포츠-체육정책과 대한체육회장 민관식』, 동국대학교출판부.
- 홀, 피터, 임창호·안건혁 역, 『내일의 도시 - 20세기 도시계획의 지성사』, 한울아카데미.
- 홉스봄, 에릭, 박지향·장문석 역, 2004, 『만들어진 전통』, 휴머니스트.
- 홍기용, 1993, 『도시빈곤의 실태와 정책』, 단국대학교 출판부.
- 홍석률, 1999, “1960년대 지성계의 동향 - 산업화와 근대화론의 대두와 지식인사회의 변동”, 『1960년대 사회변화연구: 1963~1970』. 백산서당.
- \_\_\_\_\_, 2002, “1960년대 한국 민족주의의 두 흐름”, 『사회와역사』, 62.
- \_\_\_\_\_, 2016, “카터 행정부기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3자회담”, 『한국과 국제정치』, 32(2).
- \_\_\_\_\_, 2017, 『민주주의 잔혹사: 한국현대사의 가려진 이름들』, 창비.
- 홍성태, 2003, “1990년 대 한국 사회와 김진균”, 『사회이론과 사회변혁』, 한울.
- 홍윤표, 2008, “미시마 유키오(三島由紀夫)와 1964년 도쿄올림픽”, 『일본학보』, 77.
- 홍인옥, 2005, “영구임대주택 주민들의 사회적 배제 해결 및 사회통합 방안”, 『도시와빈곤』, 76.
- 황병주, 2002, “박정희 시대 추구와 민족주의: 국가주의적 동원과 국민형성”, 『당대비평』, 2002년 6월호.
- \_\_\_\_\_, 2005, “국민교육헌장과 박정희 체제의 지배담론”, 『역사문제연구』, 15.
- \_\_\_\_\_, 2008, 『박정희체제의 지배담론 - 근대화 담론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_\_\_\_\_, 2011, “유신체제의 대중인식과 동원 담론”, 『상허학보』, 32.
- \_\_\_\_\_, 2016, “박정희 체제의 근대적 시공간 인식과 시골/도시 담론”, 『역사연구』, 31.
- 황석영, 1993, 『사람이 살고 있었네 - 황석영 북한 방문기』, 시와사회사.
- 황의룡·김필승, 2011, 「일본과 한국의 근대화와 운동회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체육과학회지』, 20(2).
- 황진태, 2016, “발전주의 도시 매트릭스의 구축-부산의 강남 따라하기를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2(2).
- 히라타 무네후미, 이태문 역, 2007, “일본의 운동회 역사”, 『운동회 - 근대의 신체』, 논형.
- JTBC, 2016년 11월 13일, “100만 촛불집회 평화·질서·시민의식도 밝혔다”, 『JTBC 뉴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354878](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354878) (검색일 2017. 10. 11)
- MBC, 1987년 5월 13일, “이스탄불 22차 국제올림픽위원회 대표 평양 파견키로”, 『MBC News』,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87/1804111\\_19322.html](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87/1804111_19322.html) (검색일 2017. 10. 5)
- \_\_\_\_\_, 1988년 9월 17일, “육삼빌딩에 성화 점화”, 『MBC News』,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88/1813956\\_19338.html](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88/1813956_19338.html) (검색일 2017. 10. 10)

## 2. 영어 문헌

- Abel, Jonathan, 2012, *Redacted: The archives of censorship in transwar Japan*. Univ of California Press.
- Altbach, Philip, 1970, "The International Student Movement", *Journal of Contemporary History*, 5(1).
- Amsden, Alice H., 1992,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Andranovich, Greg, Matthew J. Burbank, and Charles H. Heying, 2001, Olympic cities: lessons learned from mega- event politics, *Journal of urban affairs*, 23(2).
- Ayers, Andrew, 2004, *The architecture of Paris: an architectural guide*. Edition Axel Menges.
- Bailey, Peter, 1978, *Leisure and Class in Victorian England: Rational recreation and the contest for control, 1830-1885*. Routledge.
- Bairner, Alan, 2001, *Sport, Nationalism, and Globalization - European and North Armerican Perspectiv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Baker, William J., 2007, *Playing with God: Religion and modern sport*. Harvard University Press.
- Baranowski, Shelley, 2001, "Strength through joy: Tourism and national integration in the Third Reich." *Being Elsewhere - Tourism, Consumer Culture, and Identity in Modern Europe and North America*,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Baranowski, Shelley, 2004, *Strength through Joy: consumerism and mass tourism in the Third Reich*.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ennett, Tony, 1995, *The Birth of the Museum: History, Theory, Politics*, Routeledge.
- Black, David and Shona Bezanson, 2004, The Olympic Games, Human Rights and Democratisation: Lessons from Seoul and Implications for Beijing, *Third World Quarterly*, 25(7).
- Black, David, 2007, "The symbolic politics of sport megaevents: 2010 in comparative perspective", *Politikon* Vol 34, No 3.
- Black, David, and Byron Peacock, 2011, "Catching up: understanding the pursuit of major games by rising developmental state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History of Sport*, 28(16).
- Brittain, Ian, 2016, *The paralympic games explained*. Routledge.
- Broudehoux, Anne-Marie, 2007, "Spectacular Beijing: the conspicuous construction of an Olympic metropolis", *Journal of urban affairs*, 29(4), 383-399.
- \_\_\_\_\_, 2012, "Civilizing Beijing: social beautification, civility and citizenship

- at the 2008 Olympics." in Hayes, Graeme, and John Karamichas, eds., *Olympic Games, mega-events and civil societies*. Palgrave Macmillan.
- Brownell, Susan, 1995, *Training the body for China: Sports in the moral order of the People's Republic*.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urg, David F., 1976, *Chicago's white city of 1893*.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 Castro, Fidel, 1984. 11. 29, "Letter from Fidel Castro to the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Juan Antonio Samaranch," *History and Public Policy Program Digital Archiv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Archives (Switzerland), SEOUL '88 / POLITICAL MATTERS DE 1982 A MAI 1986*.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3916> (검색일 2017. 10. 1)
- Cha, Victor D., 2009, *Beyond the final score: The politics of sport in Asia*. Columbia University Press.
- Chalkley, Brian and Essex, Stephan, 1999, Urban development through hosting international events: a history of the Olympic Games, *Planning Perspectives*, 14.
- Chatziefstathiou, Dikaia & Ian Henry, 2012, *Discourses of Olympism: from the Sorbonne 1894 to London 2012*. Springer.
- Choi, CheonRak and Cul Moo Heo, 2013, "Economic Changes Resulting from Seoul 1988: Implications for London 2012 and Future Game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History of Sport*, 30(15).
- Choi, Yoon Sung, 2004, "9 Football and the South Korean imagination." In Wolfram Manzenreiter and John Horne eds., *Football Goes East: Business, Culture and the People's Game in East Asia*, Routledge.
- Coaffee, Jon, 2011, Urban regeneration and renewal, in Gold, John R., and Margaret M. Gold, eds., *Olympic cities: city agendas, planning, and the world's Games, 1896-2016*. Routledge.
- COHRE(The Centre on Housing Rights and Evictions), 2007, *Fair Play for Housing Rights: Mega-Events, Olympic Games and Housing Rights*. (검색일 2016, 11, 10) [http://tenant.net/alerts/mega-events/Report\\_Fair\\_Play\\_FINAL.pdf](http://tenant.net/alerts/mega-events/Report_Fair_Play_FINAL.pdf)
- Collins, Sandra, 2011, "East Asian Olympic desires: identity on the global stage in the 1964 Tokyo, 1988 Seoul and 2008 Beijing game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History of Sport*, 28(16).
- Confédération Sportive Internationale du Travail, n.d., "history", <http://www.csit.tv/en/about-us/history> (검색일 2017. 6. 23)
- D'Agati, Philip, 2013, *The Cold War and the 1984 Olympic Games: A Soviet-American Surrogate War*. Springer.
- Davis, Lisa Kim, 2007, *Housing Evictions and the Seoul 1988 Summer Olympic Games*, Centre on Housing Rights and Evictions.
- \_\_\_\_\_, 2010, "International Events and Mass Evictions: A Longer 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35(3).
- \_\_\_\_\_, 2011, "Cultural Policy and the 1988 Seoul Olympics: '3S' as Urban

- body politics”, in William M. Tsutsui and Michael Baskett eds., *The East Asian Olympiads 1934-2008: Building Bodies and Nations in Japan, Korea, and China*, brill.
- Department of Culture Media and Sport, 2007, *Our Promise for 2012*.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77720/D\\_CMSLeafletAdobev5andlaterTPL.pdf](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77720/D_CMSLeafletAdobev5andlaterTPL.pdf) (검색일 2016. 11. 2)
- Doll-Tepper, Gudrun, 1999 "Disability sport." in Arund Krüger and Jim Riodan eds., *The international politics of sport in the twentieth century*. Taylor & Francis.
- Droubie, Paul, 2009, *Playing the Nation: 1964 Tokyo Summer Olympics and Japanese Identity*,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 \_\_\_\_\_, 2011, "Phoenix arisen: Japan as peaceful internationalist at the 1964 Tokyo Summer Olympic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History of Sport*, 28(16).
- Elwitt, Sanford, 1986, *The third republic defended: Bourgeois reform in France, 1880-1914*, 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s. .
- Essex, Stephen, and Brian Chalkley, 1998, "Olympic Games: catalyst of urban change." *Leisure studies* 17(3).
- Flanagan, Maureen A., 2007, *America Reformed: Progressives and Progressivisms*, Oxford University Press.
- Garon, Sheldon, 1997, *Molding Japanese Mind: The State in Everyday Life*, Princeton University Press.
- Gibson-Brydon, Thomas RC, 2016, *The Moral Mapping of Victorian and Edwardian London: Charles Booth, Christian Charity, the Poor-but-respectable*. McGill-Queen's Press-MQUP.
- Gold, John R., and Margaret M. Gold, eds., 2010, *Olympic cities: city agendas, planning, and the world's Games, 1896-2016*. Routledge.
- Gordon, Robert and John London, 2006, "Italy 1934: Football and Fascism", in Alan Tomlinson and Christopher Young eds., *National Identity and Global Sport Event*,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Gounot, André, 2001, "Sport or political organization? Structur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Red Sport International, 1921-1937." *Journal of sport history*, 28(1).
- Gratton, Chris, et al., 2012, *The global economics of sport*. Routledge.
- Grazia, Victoria de, 1981, *The Culture of Consent. Mass Organization of Leisure in Fascist Italy*, Cambridge Univ. Press.
- Greene, Solomon J., 2003, "Staged cities: mega-events, slum clearance, and global capital", *Yale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Law Journal*, 6.
- Greenleaf, William Howard, 1983, *The British political tradition. 2*. Methuen, 1983.
- Guttman, Allen, 2001, *Japanese sports: a history*. University of Hawaii Press.

- \_\_\_\_\_, 2002, *The Olympics: A history of the modern games*.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Harvey, David, 2001, *Spaces of capital: Towards a critical geography*. Routledge..
- Hayes, Calton, 1913, *British Social Politics – Materials illustrating contemporary state action for the solution of social problems*, Ginn and Company.
- Hiller, Harry, 2000, "Mega-Events, Urban Boosterism and Growth Strategies: An Analysis of the Objectives and Legitimations of the Cape Town 2004 Olympic Bid,"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24(2).
- Heclo, Hugh, 1974, *Modern Social Politics in Britain and Sweden*, Yale University Press.
- Hennock, Ernest Peter, 1987, *British social reform and German precedents: the case of social insurance, 1880-1914*, OUP Oxford.
- Hlasny, Vladimir, 2017, "International Union of Students and the Pyonyang Youth Festival : Their Common Legacy", 『13 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연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심포지움 자료집.
- Horne, Janet Regina, 2002, *A Social laboratory for modern France: The Musée Social and the rise of the welfare state*. Duke University Press.
- Horne, John, 2012a, "The Four 'Cs' of Sports Mega-Events: Capitalism, Connections, Citizenship and Contradictions", in Graham Hayes and John Karamichas eds., *Olympic Games, Mega-Events and Civil Societies: Globalization, Environment, Resistance*, Palgrave.
- \_\_\_\_\_, 2012b, *Understanding the Olympics*. Routledge.
- Horne, John, and Wolfram Manzenreiter, 2012, "Olympic Tales from the East: Tokyo 1964, Seoul 1988, and Beijing 2008", in Helen J. Lenskyj and Stephen Wagg eds., *The Palgrave Handbook of Olympic Studies*, Palgrave Macmillan.
- Horne, John, and Garry Whannel, 2016, *Understanding the Olympics, 2<sup>nd</sup> edition*. Routledge.
- Igarashi, Yoshikuni, 2012, *Bodies of memory: narratives of war in postwar Japanese culture, 1945-1970*. Princeton University Press.
- IOC, 2015, *Olympic Charter*, [https://stillmed.olympic.org/Documents/olympic\\_charter\\_en.pdf](https://stillmed.olympic.org/Documents/olympic_charter_en.pdf) (검색일 2017. 7. 28)
- Olympic channel, 2015. 4. 22., "Seoul 1988 Olympic Marathon | Marathon Week", [https://youtu.be/fvLH9ut\\_k0Y](https://youtu.be/fvLH9ut_k0Y), (검색일 2017. 12. 21)
- Kaufmann, Franz-Xaver, 2012, *European foundations of the welfare state*. Berghahn books.
- Kennelly, Jacqueline, and Paul Watt, 2011, "Sanitizing public space in Olympic host cities: The spatial experiences of marginalized youth in 2010 Vancouver and 2012 London." *Sociology*, 45(5), 765-781.
- Kloosterman, Jaap, Marcel van der Linden, and Leo Lucassen, 2012, "Unwritten Autobiography: labor history libraries before World War I." *Working on Labor: essays in honor of Jan Lucassen*. Brill.

- Kotek, Joël, 2003, "Youth Organization as a Battle Field in the Cold War", in KotekScott-Smith, Giles, and Hans Krabbendam, eds. *The Cultural Cold War in Western Europe, 1945-1960*. Psychology Press.
- \_\_\_\_\_, 2015, *Students and the Cold War*. Springer.
- Krieger, Jörg, 2014, "The Infulence of Toynbeehall on Pierre de Coubertin", in Chatziefstathiou, D., and N. Müller. *Olympism, olympic education and learning legacies*,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 Krüger, Arnd, 1987, "Sieg Heil to the most glorious era of German sport: continuity and change in the modern German sports movement."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history of sport* , 4(1)..
- Krüger, Arnd, 2003, "Germany: The Propaganda Machine", in Arund Krüger and William Murray eds., *The Nazi Olympics: Sport, politics, and appeasement in the 1930s*.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Krüger, Arnd & James Riordan, 1996, *The story of worker sport*, Human Kinetics
- Larson, James F. and Heung-Soo Park, 1993, *Global Television and the Politics of Seoul Olympics*, Westview Press,
- Lees, Andrew, 2002, *Cities, sin, and social reform in imperial Germany*.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Leisering, Lutz, 2013, "The Social: The Global Career of an Idea",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Quality*, 3(2).
- Lenskyj, Helen, 2000, *Inside the Olympic industry: Power, politics, and activism*. SUNY Press.
- \_\_\_\_\_, 2002, *Best Olympics Ever?, The: Social Impacts of Sydney 2000*, SUNY Press.
- \_\_\_\_\_, 2013, *Gender politics and the Olympic industry*. Palgrave Macmillan.
- Lessenich, Stephan, 2014, "Germany: constructing the 'win-win' society", *Analyzing Social Policy Concepts and Languages*, Policy Press.
- Liao, Hanwen, and Adrian Pitts, 2006, "A brief historical review of Olympic urbanization."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History of Sport*, 23(7).
- Lindsay, Iain, 2014, *Living with London's Olympics: an ethnography*, Palgavre.
- Low, Morris, 1999, "Japan, modernity and the Tokyo Olympics." *Humanities Research* (2), 33-52.
- Lu, Zhouxiang & Fan Hong, 2010, "From Celestial Empire to Nation State: Sport and the Origins of Chinese Nationalism (1840-1927)".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History of Sport*, 27(3).
- Lucas, John, 1993, Coubertin One Hundred Years Ago: His Second American Visit in 1893,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Olympic Studies*, 11.
- MacAloon, 2008, *This Great Symbol: Pierre de Coubertin and the Origins of the Modern Olympic Games*, Routledge.
- Mangan, J. A., Gwang Ok and Kyoung Park, 2011, "From the destruction of image to the reconstruction of image: a sports mega-event and the resurgence of a nation - the politics of sport exemplified,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 History of Sport*, 28(16).
- Mannheim, Jarol B., 1990, "The 1988 Seoul Olympics as Public Diplomacy", *The Western Political Quarterly*, 43(2).
- Marshall, Thomas, H., 1950,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rshall, Tim, 2000, "Urban planning and governance: is there a Barcelona model?." *International planning studies*, 5(3). MacAloon, John J., 2008, *This Great Symbol: Pierre de Coubertin and the Origins of the Modern Olympic Games*, Routledge.
- Martin, Simon, 2004, *Football and Fascism: The national game under Mussolini*. Berg.
- Metzger, Janice, 2009, *What Would Jane Say?: City-building Women and a Tale of Two Chicagos*, Lake Claremont Press.
- Mosse, George L. 1982, "Nationalism and Respectability: Normal and Abnormal Sexuality in the Nineteenth Century," *Journal of Contemporary History*, 17(2).
- Muroi Hidetaro, 2008, "Olympic Parallels with Japan and South Korea", in *China after the Beijing Olympics*, Japan Center for Economic Research.
- Murray, William, 2003, "Introduction", in Arund Krüger and William Murray eds., *The Nazi Olympics: Sport, politics, and appeasement in the 1930s*.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New York Times, 1984. 5. 29, "How to Rescue the Olympics", *New York Times*, <http://www.nytimes.com/1984/05/29/opinion/how-to-rescue-the-olympics.html?mcubz=1> (검색일 2017. 9. 29)
- Newman, Harvey K., 2002, *The Atlanta Housing Authority's Olympic Legacy Program: Public Housing Projects to Mixed Income Communities*. Research Atlanta, Incorporated, Georgia State University, Andrew Young School of Policy Studies.
- Niehaus, Andreas, and Christian Tagsold, eds., 2013, *Sport, Memory and Nationalhood in Japan: Remembering the Glory Days*. Routledge.
- Nitsch, Frnaz, 1996, "The Two International Worker Sport Organizations: Socialist Worker Sports International and Red Sport International." *The story of worker sport*. Human Kinetics
- Offe, Klaus and John Keane, 1984, *Contradictions of the Welfare State*, Hutchinson.
- Panagiotopoulou, Roy, 2013, "Hosting the Olympic Games: from promoting the nation to nation-branding", in Tomlinson, Alan, Christopher Young, and Richard Holt. *Sport and the transformation of modern Europe: states, media and markets 1950-2010*. Routledge.
- Parks, Jenifer, 2016, *The Olympic Games, the Soviet Sports Bureaucracy, and the Cold War: Red Sport, Red Tape*. Lexington Books.
- Preuss, Holger, 2004, *The Economics of Staging the Olympics: A Comparison of the Games 1972-2008*, Edward Elgar.

- Quintillan, Ghislaine, 2000, "Alice Milliat and the women's games." *Olympic Review*, 26(2-3).
- Rae, John, 1890, "State Socialism and Social Reform", *Contemporary Review*, lviii.
- Raphael, Lutz eds., 2009. *Strangers and Poor People: Changing Patterns of Inclusion and Exclusion in Europe and the Mediterranean World from Classical Antiquity to the Present Day*, Peter Lang.
- Redihan, Erin E., 2017, *The Olympics and the Cold War, 1948-1968: Sport as a Battleground in the US-Soviet Rivalry*. McFarland.
- Reinders, Robert C., 1982, "Toynbee Hall and the American settlement movement." *The Social Service Review*, 56(1).
- Rennen, Ward, 2007, *City Events: Place selling in a media age*. Amsterdam University Press.
- Rider, Toby C., 2016, *Cold War Games: Propaganda, the Olympics, and US Foreign Policy*.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Riordan, James, 1980, *Sport in Soviet society: development of sport and physical education in Russia and the USSR*. CUP Archive.
- \_\_\_\_\_, 1991, *Sport, politics, and communism*.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Riordan, Jim, 1999, "The worker sports movement", in Arund Krüger and Jim Riordan eds., *The international politics of sport in the twentieth century*. Taylor & Francis.
- Roche, Maurice, 2000, *Mega-event and modernity*. Routledge.
- Rodgers, Daniel T., 1998, *Atlantic crossings: Social Politics in a Progressive Age*, Harvard University Press.
- Rubinstein, William D., 2003, *Twentieth-century Britain: a political history*. Palgrave Macmillan.
- Ruswick, Brent, 2013, *Almost worthy: The poor, paupers, and the science of charity in America, 1877-1917*. Indiana University Press.
- Rydell, Robert W, 1993, *World of fairs: the century-of-progress exposition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arantakes, Nicholas E., 2010, *Dropping the torch: Jimmy Carter, the Olympic boycott, and the Cold War*.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häfer, Axel R., 2000, *American progressives and German social reform, 1875-1920: social ethics, moral control, and the regulatory state in a transatlantic context*, Franz Steiner Verlag.
- Schimmel, Kimberly S., 2002, "Sport matters: Urban regime theory and urban regeneration in the late capitalist era", in Gratton C., and Henry, I., eds., *Sport in the city: the role of sport in economic and social regeneration*, Routledge.
- Schiller, Kay, and Christopher Young, 2010, *The 1972 Munich Olympics and the making of modern Germany*, Univ of California Press.
- Seh-Jik, Park, 1991, *The Seoul Olympics: the inside story*. Bellew.

- Senn, Alfred E., 1999, *Power, politics, and the Olympic Games*. Human Kinetics Publishers.
- Shin, Hyun Bang, 2012, "Unequal cities of spectacle and megaevents in China", *City: Analysis of Urban Trends, Culture, Theory, Policy, Action*, Vol 16, No 6.
- Shin, Hyun Bang and Li, Bingqin, 2013, "Whose games? The costs of being 'Olympic citizens' in Beijing", *Environment and Urbanization*, 25 (2).
- Short, John Rennie, 2013, *Globalization, modernity and the city*. Routledge.
- Smith, Karl, 2006, *The Plan of Chicago: Daniel Burnham and the Remaking of the American Cit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mith, Martyn Davis, 2014, *Representing Nation in Postwar Japan: Cold War, Consumption and the Mass Media: 1952-72*, PhD dissertation, SOAS University of London.
- Smith, Tori, 1999, "A grand work of noble conception: the Victoria Memorial and imperial London", in Felix Driver and David Gilbert eds., *Imperial Cities: Landscape, Performance and Space*,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Sonne, Wolfgang, 2003, *Representing the state: Capital city planning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Prestel Publishing.
- Stanton, Richard, 2000, *The forgotten Olympic art competitions: the story of the Olympic art competitions of the 20th century*. Trafford Publishing.
- Stebner, Eleanor J., 1997, *The women of Hull House: A study in spirituality, vocation, and friendship*. SUNY Press.
- Steinmetz, George, 1993, *Regulating the social: the welfare state and local politics in imperial German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timmekoreas, 2010. 12. 13, "World Festival of Youth and Students in North Korea 1989 (French)", <https://youtu.be/z972J4IVttU> (검색일 2017. 10. 30)
- Tagsold, Christian, 2009, "The 1964 Tokyo Olympics as Political Games", *The Asia Pacific Journal*, 7(3).
- \_\_\_\_\_, 2010, "Modernity, space and national representation at the Tokyo Olympics 1964." *Urban History*, 37(2),
- Taylor, Trevor, 1988, "Politics and the Seoul Olympics", *The Pacific Review*, 1(2).
- Thomas, John P., 2011, "Nationalist Desires, state Spectacles, and Hegemonic Legacies: Retrospective Tales of Seoul's Olympic Regime", in William M. Tsutsui and Michael Baskett eds., *The East Asian Olympiads 1934-2008: Building Bodies and Nations in Japan, Korea, and China*, brill.
- Thomas, Nigel, and Andy Smith, 2008, *Disability, sport and society: An introduction*, Routledge.
- Therborn, Göran, 2002, "Monumental Europe: the national years. On the iconography of European people's palace capital cities", *Housing, Theory and Society*, 19m No. 1.
- Toohy, K., and A. J. Veals, 2004., "The (Sporting) Legacy of the Sydney 2000 Olympic Games: Some Observations." paper presented at the *Beyond the*

- Torch – Olympics and the Australian Culture Conference.*
- Traganou, Jilly, 2016, *Designing the Olympics: Representation, Participation, Contestation*, Routledge.
- UPI, 1984. 6. 1. “Olympic president Juan Antonio Samaranch, back from a fruitless...”, *UPI*. <https://www.upi.com/Archives/1984/06/01/Olympic-president-Juan-Antonio-Samaranch-back-from-a-fruitless/9193454910400/> (검색일 2017. 9. 29)
- \_\_\_\_\_, 1984. 10. 8.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member Franco Carraro said Monday the...”, *UPI*, <https://www.upi.com/Archives/1984/10/08/International-Olympic-Committee-member-Franco-Carraro-said-Monday-the/1190466056000/> (검색일 2017. 9. 29)
- van der Linden, Marcel and Lex H. van Voss, 2002, *Class and Other Identities: Gender, Religion, and Ethnicity in the Writing of European Labour History*. Berghahn Books.
- Wagner, Juergen. "Olympic Art Competitions / Contests 1912-1948". *Olympic Games Museum*. <http://olympic-museum.de/art/artcompetition.htm> (검색일 2017. 10. 8)
- Washington Post, n. d., “1936-1992: History Of Olympic Torch Relays”, *Washington Post*, <http://www.washingtonpost.com/wp-srv/sports/olympics/longterm/torches/history.htm> (검색일 2017. 10. 9)
- Weiner, Deborah E. B., 1994, *Architecture and social reform in late-Victorian London*.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Whitson, David, and John Horne, 2006, "Part 2 The Glocal Politics of Sports Mega-Events: Underestimated costs and overestimated benefits? Comparing the outcomes of sports mega- events in Canada and Japan." *The Sociological Review* 54(s2), 71-89.
- Williams, Melvin J., 1950, *Catholic Social Thought – Its Approach to Contemporary Problems*, The Ronald Press Company.
- Winter, Thomas, 2002, *Making Men, Making Class: The YMCA and Workingmen, 1877-1920*.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Woo-Cummings, Meredith, 1999, “Introduction: Chalmers Jonson and the Politics of Nationalism and Development”, in *The developmental state*. Cornell University Press.
- Xu, Guoqi, 2009, *Olympic dreams: China and sports, 1895-2008*. Harvard University Press.
- Young, Christopher, 2006, “Munich 1972: Re-presenting the Nation”, in Alan Tomlinson and Christopher Young eds., *National Identity and Global Sport Event*,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Yu, Ying, and Jiangyong Liu, 2011,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Olympic impact in East Asia: from Japan, South Korea to China."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History of Sport*, 28(16).
- Zimbalist, Andrew, 2015, *Circus maximus: the economic gamble behind hosting*

*the Olympics and the World Cup*,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3. 일본어 문헌

- 浅井良夫, 2012, 「二〇世紀のなかの日本—『高度成長』の歴史像」, 『変わる社会、変わるひとびと——二〇世紀のなかの戦後日本』, 岩波書店。
- 新雅 史, 2013, 『「東洋の魔女」論』 イースト・プレス。
- 市野川容孝·酒井隆史, 2007, 「討議: 社会的なものの潜勢力」, 『現代思想』, 第35巻, 第11号, 青土社。
- 石坂友司, 2009, 「東京オリンピックと高度成長の時代」 『年報・日本現代史』, 第14巻。
- 石渡雄介, 2004, 「未来の都市/未来の都市的生活様式——オリンピックの60年代東京」, 清水論(編), 『オリンピック・スタディーズ——複数の経験・複数の政治』, せりか書房。
- 伊藤 滋, 2014, 「オリンピック前夜の東京改造」, 丹羽美之·吉見俊哉(編), 『戦後復興から高度成長へ』, 東京大学出版会。
- 上山和雄, 2009, 「東京オリンピックと渋谷、東京」, 老川慶喜(編), 『東京オリンピックの社会経済史』 日本経済評論社。
- 尾崎正峰, 2002, 「スポーツ政策の形成過程に関する一研究: オリンピック東京大会選手村の選定過程を対象に」, 『一橋大学研究年報 人文科学研究』, 39号。
- 小野 浩, 2009, 「住まいの理想と現実—高度成長期の東京」, 老川慶喜(編), 『東京オリンピックの社会経済史』, 日本経済評論社。
- 片木 篤, 2010, 『オリンピック・シティ東京1940・1994』, 河出書房新社。
- 片桐新自, 2007, 「『昭和ブーム』を解剖する」, 『関西大学社会学部紀要』, 第38巻, 第3号。
- 観行智信, 2002, “戦後復興・国民国家の再建と国民体育大会——1950年の愛知国体に関して” , 『立命館産業社会論集』, 第37巻第4号。
- 權 學俊, 2005, 「東京オリンピックの国民統合と政治性に関する一考察」, 『일본어문학』, 30.
- \_\_\_\_\_, 2009, 「戦時期日本における「幻の東京オリンピック」の祝祭性と政治性に関する考察」, 『일본학연구』, 28,
- \_\_\_\_\_, 2011, 「戦後自衛隊の国民宣傳活動に関する一考察」, 『일본어문학』, 53.
- 越沢 明, 2014, 『東京都市計画の遺産—防災・復興・オリンピック』, 筑摩書房。
- 高津 勝, 1994, 『日本近代スポーツ史の低流』, 創文企画。
- 小林正泰, 2016, 「1964年東京オリンピックをめぐる道徳教育の課題とその論理——国民的教育運動における公衆道徳と『日本人の美徳』」, 『東京大学大学院教育学研究科基礎教育学研究室紀要』, 第42巻。
- 坂上康博, 1998, 『権力装置としてのスポーツ——帝国日本の国家戦略』, 講談社。
- \_\_\_\_\_, 2000, 「スポーツと天皇制の脈絡——皇太子裕仁の摂政時代を中心に」, 『歴史評論』, 602号。

- 坂上康博・高岡裕之, 2009, 『幻の東京オリンピックとその時代——戦時期のスポーツ・都市・身体』, 青弓社。
- 塩田 潮, 1988, 『東京は燃えたか——黄金の60年代』, 講談社。
- 指南 役, 2009, 『幻の1940年計画——太平洋戦争の前夜、「奇跡の都市」が誕生した』, アスペクト。
- 篠崎尚夫, 2009, 「『消費は美德』の経済思想——新たなオリンピック行進曲をめざして」, 老川慶喜(編), 『東京オリンピックの社会経済史』, 日本経済評論社。
- 柴田徳衛, 1973, 「都市と廃棄物」, 『岩波講座現代都市政策Ⅷ——都市の装置』, 岩波書店。
- 杉野 勇・米村千代, 2000, 「専業主婦層の形成と変容」, 『日本の階層システム 1——近代化と社会階層』, 東京大学出版会。
- 関口英里, 2011, 「戦後日本のメディアイベントにおける消費文化の「語り」——東京オリンピックと日本万博を通して」, 『立命館言語文化研究』, 第23巻第1号。
- 瀬島龍三, 1995, 『幾山河——瀬島龍三回想録』, 産経新聞ニュースサービス。
- 橋本一夫, 2014, 『幻の東京オリンピック——1940年大会、招致から返上まで』, 講談社。
- 高岡 裕之, 2011, 『総力戦体制と「福祉国家」——戦時期日本の「社会改革」構想』, 岩波書店。
- 高嶋 航, 2012, 『帝国日本とスポーツ』, 塙書房。
- 田口 晃, 2008, 『ウィーン-近代の都市』, 岩波書店。
- 田中拓道, 2011, 「社会的なものの歴史」, 『社会保障と福祉国家のゆくえ——新たなる理念と制度の展望』, ナカニシヤ出版。
- 田野大輔, 2011, “日本の歓喜力行団: 厚生運動と日独相互認識”, 『甲南大学紀要. 文学編』, 161。
- 東京2020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招致委員会, 2013년 3월 26일, “支持率調査結果、77%に!” 『東京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競技大会組織委員会』, <https://tokyo2020.jp/jp/news/bid/20130326-01.html> (검색일 2016. 11. 10)
- 友常 勉, 1995, 「一九四〇年東京万国博・オリンピックと被差別部落へのまなざし」, <http://www.asahi-net.or.jp/~ls9r-situ/tomoar1.html> (검색일 2016. 12. 10)
- 中野耕太郎, 2015, 『20世紀アメリカ国民秩序の形成』, 名古屋大学出版会。
- 日高勝之, 2014, 『昭和ノスタルジアとは何か——記憶とラディカル・デモクラシーのメディア学』, 世界思想社。
- 古川隆久, 1998, 『皇紀・万博・オリンピック——皇室ブランドと経済発展』中央公論社。
- 町村敬志, 1994, 『「世界都市」東京の構造転換——都市リストラクチュアリングの社会学』, 東京大学出版会。
- \_\_\_\_\_, 2007, 「メガ・イベントと都市空間——第二ラウンドの「東京オリンピック」の歴史的意味を考える」, 『スポーツ社会学研究』, 第15巻。

- 松田 忍, 2012, 「新生活運動協會——一九四〇年代後半 ~ 一九六〇年代半ば」, 『新生活運動と日本の戦後—敗戦から1970年代』, 日本経済新聞社.
- 矢吹まい, 2008, 「なぜ今昭和に心惹かれるのか——映画『ALWAYS 三丁目の夕日』に見る昭和ブーム」, 『表現文化』, 第3巻.
- 吉見俊哉, 2015, 「ポスト戦争としてのオリンピック——1964年東京大会を再考する」, 『マ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研究』, 第86巻.

#### 4. 독일어 문헌

- Butterwegge, Christoph, 2006, *Krise und Zukunft des Sozialstaates 3., Erweiterte Auflage*, VS Verlag.
- Ernst, Sonja, 2003. 7. 17. “Das Jahr 1973 : Zwei Deutschlands – Zwei Machtblöcke”,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http://www.bpb.de/geschichte/deutsche-geschichte/weltfestspiele-73/65341/einfuehrung> (검색일 2017. 12. 10)
- Grolle, Inge, 2012, “Brückenbauer? Das Hamburger Volksheim – Ein Beispiel bürgerlicher Sozialreform um 1900”, *Zeitschrift des Vereins für Hamburgische Geschichte*, 98.
- Häußermann, Hartmut, and Walter Siebel, 1993, "Die Politik der Festivalisierung und die Festivalisierung der Politik." *Festivalisierung der Stadtpolitik*. VS Verlag.
- Kaufmann, Franz-Xaver, 2003, *Varitenten des Wohlfartsstaats – Der deutsche Sozialstaat im internationalen Vergleich*, Suhrkamp.
- \_\_\_\_\_, 2015, *Sozialstaat als Kultur*, Springer.
- Kronauer, Martin, 2010, *Exklusion: die Gefährdung des Sozialen im hoch entwickelten Kapitalismus*. Campus Verlag.
- Kunster, Marie, 2009, *Sport und Politik – Die Geschichte des FC Schalke 04 im „Dritten Reich“*, GRIN Verlag.
- Lessenich, Stephan, 2008, *Die Neuerfindung des Sozialen: Der Sozialstaat im flexiblen Kapitalismus*. transcript Verlag.
- Liebscher, Daniela, 1998, “Freizeit im Faschismus: Die" Opera Nazionale Dopolavoro" und ihre internationale Bedeutung”. *Moving the Social*, 21.
- Nipperdey, 1976, *Gesellschaft, Kultur, Theorie*, Vandenhoeck & Ruprecht.
- Pietrzyk, Janosch, 2003. 7. 17, “Chronik : Die Weltfestspiele der Jugend und Studenten von 1947 bis 2001 im Überblick”,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http://www.bpb.de/geschichte/deutsche-geschichte/weltfestspiele-73/65343/chronik> (검색일 2017. 12. 10)
- Raphael, Lutz, 1996, “Die Verwissenschaftlichung des Sozialen als methodische und konzeptionelle Herausforderung für eine Sozialgeschichte des 20. Jahrhunderts”, *Geschichte und Gesellschaft*, 22(2).
- Sachße, Christoph, 1986, *Mütterlichkeit als Beruf: Sozialarbeit, Sozialreform und*

*Frauenbewegung 1871-1929*. Springer.

Schmidt, Manfred G., 2012, *Der deutschen Sozialstaat: Geschichte und Gegenwart*, C.H.Beck.

von Bruch, Rüdiger, 1985, "Bürgerliche Sozialreform im deutschen Kaiserreich", in *Weder Kommunismus noch Kapitalismus - Bürgerliche Sozialreform in Deutschland vom Vormärz bis zur Ära Adenauer*, C. H. Beck.

## 5. 프랑스어 문헌

Castel, Robert, 1995, *Les métamorphoses de la question sociale: une chronique du salariat*. Fayard.

Ewald, François, 1985, *L'Etat providence*, Bernard Grasset.

Hatzfeld, Henri, 1975, *Du paupérisme à la Sécurité sociale, 1850-1940*, Armand Colin.

Procacci, Giovanna, 1993, *Gouverner la misère*. Seuil.

Rosanvallon, Pierre, 1985, *Le moment Guizot*, Gallimard.

\_\_\_\_\_, 1995, *La nouvelle question sociale. Repenser l'État-providence*. Le seuil.

Topalov, Christian, 1999, *Laboratoires du nouveau siècle - la nébuleuse réformatrice et ses réseaux en France, 1880-1914*, Ecole des hautes études en sciences sociales.

## 6. 이탈리아어 문헌

Cavallaro, Tommaso, 2014, *1934: Il mondiale del duce*, Il Filo.

Procacci, Giovanna, 2013, *Warfare-Welfare. Intervento dello Stato and diritti dei cittadini (1914-18)*, Carocci editore



[Abstract]

## **1988 Seoul Olympic Games and Social Politics in 1980's Korea**

PARK, Haenam  
Dept. of Soci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1980's Korea there were numerous urban and social reform projects carried out by the state in preparation for the 1988 Seoul Olympic Games. This study sheds light on these attempts to reform citizens' behavior and the urban landscape, and hypothesizes that the Seoul Olympiads was a means of social politics for the state. In other words, this study argues that the reform projects can be regarded as an attempt to answer social questions like crime, disease, antagonism between classes, and the rapid change of social customs, as well as the state's maneuver for social order and social integration.

The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cess of hosting the Seoul Olympics - the bid, the preparation and the staging - and the process of social politics - including reform projects the response from civil society - that followed in its wake. In order to achieve that, this study primarily analyses official documents, official reports, white papers, publicity materials produced by the state, and statements and pamphlets produced by civic groups through both policy and discourse analysis.

Chapter 2 shows that the bidding process for the Seoul Olympics unfolded at a time of crisis for the developmental state in Korea and that social order and social integration were among the most important motivations for the bid. As a developmental state, during the 1960-70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endeavored to rapidly develop their economy and elevate the status of the nation in international society. To do this, the state made an effort to mobilize society. That is to say, they made an effort to produce hardworking but de-politicized citizens who could be useful for the developmental and authoritarian regime. Meanwhile, the developmental state viewed sports and sport mega events as a means to advance the status of the nation. As such they sought to host Asian Games from the early 1960s, achieved this for the 1970 Asian Games, and prepared facilities for hosting sports mega events in 1970s.

The decision to make a bid for the 24th Summer Olympic Games was made between a small numbers of high officials. The second-in-command in the authoritarian regime

suggested the bid in the late 1978. President Park accepted the idea and made the bid official in September 1979. However, the bid process soon ceased, as the failure of developmental and authoritarian politics eventually brought down Park's regime. A new dictator, President Chun, resumed the bid process with a view to develop social integration in the late 1980.

After the final decision to make the bid, the new authoritarian regime organized an alliance among power elites, bureaucrats, and Chaebol for the promotion. They caught up with Nagoya's bid and won the right to host the 1988 Summer Olympic Games and 1986 Asian Games in the autumn of 1981. In order to succeed with the bid, the state promised to solve the social antagonism caused by their authoritarian politics. With the successful bid, the state was left with the task of showing social order and social integration to international society.

Chapter 3 explains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plan to host the Olympic Games and the plan for social politics in the early 1980s. The power elites of the new authoritarian regime believed that social order and social integration were crucial in Korean society when they seized power. They determined that the failure to respond to social questions by the former dictatorial regime along with disorderly customs among citizens caused the two urban riots in 1979-80. Thus, the regime expanded and strengthened state-inspired organizations to control the citizens' behavior, and utilized some appeasement and welfare policies to improve social integration.

For the state, the 1964 Tokyo Olympic Games was the most important reference model. The Japanese developmental state aimed to improve of the image and social integration of Japan through the Olympiads., and to do so organizers tried to change people's behavior and Tokyo's urban landscape. The Olympics was an opportunity to change the perception of Japan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from an Axis power to a modernized and peaceful nation. Korea's developmental state's goals were very similar. The state regarded the Seoul Olympics as an opportunity to advance the status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to improve social order and social integration of Korean society.

The combination of Olympics and social politics was overt. In the promotional materials, the state repeatedly argued that the Olympiads would give Korean a new advanced and civilized identity if the citizens showed the unity of Korean society and orderly behavior to the world. The gaze of Westerners was the most important consideration in the behavioral reform and urban renewal projects. The state stressed the importance of recognition as a civilized nation in international society.

Chapter 4 is on the implementation of social politics, focusing on the behavioral reform

and urban renewal projects. Many of the urban poor in Seoul suffered from social exclusion and were punished by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During the preparation, the state forced homeless people to live in so called 'welfare facilities' - de facto concentration camps. Hundreds of thousands of poor people in Seoul became victims of eviction thanks to the large-scale renewal projects of urban squatter settlements. Police authorities surveilled and punished behavior considered disorderly like street vending in public space, defining them as 'crime disturbing Olympics'. For the state, collective action of civic groups also had to be blocked. The authorities thought that demonstrations or strikes disturbed the scene of social peace.

In order to implement behavioral reform, the organizers mobilized, not only the central and local policing authorities, but also several government initiated civic movements, such as the New Community Movement, Social Cleansing Movement, and Pan-national Olympic Promotion Movement. All of them produced an ocean of discourse on behavioral reform, and monitored the citizen's behavior in daily life. Meanwhile, the habitus of the middle class was encouraged so as to show off the economic prosperity of Korea with leisure facilities, sports events, and consuming spaces.

The goal of many urban renewal projects was to show off the economic and cultural capital of Korean society and to gain recognition from western societies. As it had strategically built industrial landscape in a couple of cities in 1960-70s, the state strategically built respectable landscapes around the Olympic facilities. The modernized and civilized Seoul was constituted with skyscrapers in the downtown, implementation of urban design in Gangnam area, leisure facilities in Han River Park, newly built national museums, theaters, an Asiad Village, and Olympic facilities. The cultural events, including the opening and closing ceremonies, aimed at providing a stage for the cultural capital of the Korean nation.

In sum, behavioral reform and urban renewal projects had a threefold aspect: social exclusion of the urban poor, disciplining the behavior of the citizen's daily life, and making the landscape around Olympic facilities respectable. The state implemented their social politics based on discriminative selection despite social integration being one of the most important goals.

Chapter 5 sheds light on civil society's response and the result of the social politics of the Olympics. Two important elements are very influential on the social politics in the late 1980s Korea: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with communist countries and the democratization. In 1984, as communist countries boycotted the 1984 Summer Olympic Games, some international sports figures claimed that a neutral country should host the 1988 Summer Olympics. In response, the Korean government began sport exchanges with

communist countries in order to prevent the boycott. As a result, most of the eastern countries participated, hinting at the end of the cold war. Domestically, the democratization in 1987 enabled political dissidents to openly criticize the state's social politics of Olympics.

The civic groups argued that all members of the Korean nation had a right to inclusion in social politics. Part of civil society focused on the mega-eviction and social exclusion and insisted that the state had to guarantee the basic right to live to of all the citizens. Another part asserted that all Koreans should be represented at the Olympics and the joint hosting of the Olympics was needed. Meanwhile, middle classes members viewed the Olympics as a symbol of prosperity but they did not attribute the success of the mega events to the leadership of the developmental state, instead they primarily payed attention to the hard work of Korean gold medalists, regarding the medalists as the representation of a 'self-made' middle classes.

On the one hand, the state embraced some ideas of the civic groups and accepted a policy of 'affordable permanent rental housing' in 1989. However, they never agreed with the dissidents' claim that the all citizens had a basic right to social inclusion. On the other hand, they copied and spread respectable modifications to the landscape throughout the new towns planned in 1989 - buildings, public parks, leisure and cultural facilities, and consuming spaces. With the orderly organized landscape, the new town residents considered themselves civilized and respectable members of Korean society, and as representative of the advancement of Korea in international society. The middle classes failed to respect the urban poor, seeing them as ill fitted to society and the advanced and civilized landscape.

When the social politics of the Olympics began, the state aimed to create social order and social integration through behavioral and urban reform. After the Olympics, some middle classes identified with the orderly organized landscape. The state's social politics was effective at adjusting behavior. However, it failed at social integration. Once discrimination and disrespect was a matter between the state and the citizens. After the 1988, both of them were a matter between the middle classes and the urban poor.